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기관별

# 2-1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기관별

# 2-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Contents

1

2

006	<b>편집의 방향과 원칙</b>
007	<b>일러두기</b>
010	<b>1·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국가정보원의 관여 내용</b>
010	1. 의결주문
01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011	<b>제1절 조사 개요</b>
011	1. 직권조사의 취지
012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012	<b>제2절 조사 경과</b>
012	1. 문건 등 자료조사
013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014	<b>제3절 조사 내용</b>
014	1. 기초사실
016	2. 국정원에 의한 이명박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단체 지원배제
030	3. 국정원에 의한 박근혜 정부의 특정문화예술계 인사·단체 지원배제
062	<b>제4절 결론</b>
062	1. 진상규명 사실
067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070	<b>2·이명박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 사건</b>
070	1. 의결주문
07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073	<b>제1절 조사 개요</b>
073	1. 직권조사 및 신청의 취지
074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075	<b>제2절 조사 방법</b>
075	1. 자료조사
078	2. 신청인 임의 제출 자료
079	3. 신청인 등 대인 조사
079	<b>제3절 조사 내용</b>
079	1.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예술계 우편향을 위한 전략
102	2.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예술인들의 탄압 사례
134	<b>제4절 조사 결과</b>
134	1. 진상규명 사실
137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138	3.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3

154 **3·한국예술종합학교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154 1. 의결주문

154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156 **제1절 사건 개요**

156 1. 신청의 취지

157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158 **제2절 조사 경과**

158 1. 문건 등 자료조사

16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162 **제3절 조사 사항·내용**

162 1. 한예중 개요

164 2. 한예중에 대한 이명박 정권(2008. 2. 25. ~ 2013. 2. 24.)의 인식

167 3. 한예중 U-AT 사업 중단

173 4. 2009년 한예중 종합감사

204 5. 2009년 한예중 총장 선임 과정에 문체부가 개입한 정황

206 6. 신청인에 대한 2011년 한예중 영상원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심사위원 배제 의혹

225 7. 2012학년도 학습연구단체 특별연수(이하 ‘특별연수’) 지도교수 불승인 의혹

229 8. 2014년 서울자유시민대학 교육과정에서 한예중이 사업을 철위한 경위

236 9. 한예중 일부 교수들에 대한 퇴출·보직에서 배제 시도

242 10. 한예중 영상원 각 과 폐지 및 통합 시도

243 11. 한예중 교원업적평가 개정 시도

246 12. 한예중 동향파악에 관한 점

247 **제4절 조사 결과**

248 1. 진상규명 사실

255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4

262 **4·박근혜 정권의 좌파문화예술계 배제 문화융성 정책 입안 및 실행방안에 관한 직권조사**

262 1. 의결주문

262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265 **제1절 조사 개요**

265 1. 직권조사의 취지

265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조사사항

266 3. 기초사실

268 **제2절 조사 경과**

268 1. 자료 입수

270 2. 참고인 등 면담조사

277 **제3절 조사 내용**

277 1.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의 작성 경위 및 주체

284 2.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한 사항

315 **제4절 조사 결과**

315 1. 진상규명 사실

# Contents

## 5

356	<b>5·문체부 내 건전콘텐츠활성화TF 등의 구성 및 운영 사건</b>
356	1. 의결주문
356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358	<b>제1절 조사 개요</b>
358	1. 조사 취지
359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360	<b>제2절 조사 경과</b>
360	1. 문건 등 자료조사
361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362	<b>제3절 조사 내용</b>
362	1. 기초사실
363	2.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사건
372	3. 문화예술정책점검TF
386	4. 2014. 5. 건전콘텐츠활성화TF
392	5. 2014. 10. 건전콘텐츠활성화TF
411	6. 건전콘텐츠활성화TF 이후
413	<b>제4절 조사 결과</b>
413	1. 진상규명 사실
415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 6

418	<b>6·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b>
418	1. 의결주문
418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419	<b>제1절 조사 개요</b>
419	1. 직권조사의 취지
420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420	<b>제2절 조사 경과</b>
420	1. 문건 등 자료조사
425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427	<b>제3절 조사 내용</b>
427	1. 기초사실
427	2. 예술위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배경
456	3.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470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지원 개선 방안' 작성 경위
485	5.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504	6.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
508	7. 2015~2016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구체적 사례
539	8. 아르코 미술관
549	9. 2016년 문예진흥기금사업 개편 추진 경위
592	10. 2016년 문예진흥기금 추진 과정에서 일부 양해 조치가 있었던 경위
594	11.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폐지·축소·변경·신설된 사업



6

7

600	12. 국회의원실 또는 문체부 예술국을 통하여 들어온 '민원'에 대한 처리
606	13. 기초공연예술활성화추진사업단
612	<b>제4절 조사 결과</b>
612	1. 진상규명 사실
620	<b>7·재외 한국문화원 블랙리스트 사건</b>
620	1. 의결주문
620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622	<b>제1절 조사 개요</b>
622	1. 작권 조사 취지
623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624	<b>제2절 조사 경과</b>
624	1. 문건 등 자료조사
626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628	<b>제3절 조사 내용</b>
628	1. 기초 사실
641	2. 조사내용
745	<b>제4절 결론</b>
745	1. 진상규명 사실
755	2. 뉴욕·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채용 의혹에 대하여
758	3. 진상규명되지 않은 사실

## Ⅰ 편집의 방향과 원칙 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는 총 10권으로 구성되었다. 1권은 『위원회 활동 보고서』, 2권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3권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4권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으로 구성되었다. 1권에서 3권까지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집필을 담당하였다. 3권 말미의 별첨 부분에는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수많은 토론회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들의 옥고들이 참고 자료로 수록되었다. 4권에는 주로 외부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다각적으로 조망하였다. 외부 필진이 집필한 부분은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

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의 부록으로 기관별, 분야별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전문이 총 6권으로 편집되었다. 부록 1권은 기관별, 부록 2권과 3권은 공연 분야, 부록 4권은 문학·출판 분야, 부록 5권은 영화 분야, 부록 6권은 시각예술 및 기타 분야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이다. 직접 조사를 담당했던 전문위원(조사관)들이 방대한 양의 관련 문서들과 수많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했고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신청 사건들은 주로 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자들의 조사 신청에 의해 다루어졌고, 직권 사건들은 조사 과정에서 개별 사건들의 범주화 또는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가 직권으로 사건명을 설정하였다.

이 백서에서 피해자들의 이름은 대부분 실명으로 표기되었으나 블랙리스트 실행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 때문에 비실명 처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실행 범칙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되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장관, 차관 및 각 기관장들은 실명을 공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5급 사무관 이상은 직급과 성까지만 표기하였고, 6급 이하의 직급만 밝히고 완전히 비실명 처리하였다. 산하기관의 경우 본부장과 부장 또는 팀장까지는 직급과 성까지 표기하였고, 그 이하의 직급만 밝히고 완전히 비실명 처리하였다. 직급은 사건 발생 당시의 직위를 명시하였다.

문체부는 백서 1차 편집이 완료된 후 관련 당사자들에게 가편집본을 열람하도록 하여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 당사자로부터 문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전문위원 확인, 당사자 소명, 사실 재확인 과정을 거쳐 백서의 최종 수정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문체부는 2018년 9월 13일에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나 문화예술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재검토 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 31일에 최종 이행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역사적인 백서가 나오기까지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발간 소위원회 위원장 **김 미 도**

# 일러두기

분류	원 명칭	약칭
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조특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특별검사, 특검, 박영수특검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법, 특검법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의 기소 사건 중 피고인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기소 사건 재판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재판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공운법
법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증언·감정법
법령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 보호법
법령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문예진흥기금 운영규정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문예진흥법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법령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영화진흥심사규정
청와대	청와대	BH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실장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소통비서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교문수석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산하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비서관
청와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대수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실수비
국회	국회 국정감사	국감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문위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기재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국정원
정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문화부, 문화관광부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복지부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행안부
정부부처	행정자치부	행자부
정부부처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실
유관기관	대한승마협회	승마협회
유관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등위
유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
유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예경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 문예위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공연예술센터, 한팩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문연
유관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복
유관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총
유관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진흥원
유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진원
사업·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예기금
사업·기금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	세종도서
사업·기금	영화발전기금	영화기금
기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
기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기타	심의위원 후보단	심의위원 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

# 1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국가정보원의 관여 내용



## 1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국가정보원의 관여 내용



###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8직특1[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국가정보원의 관여 내용]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 가. 직권조사의 취지

국가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정부 비판 인사·단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보고서 및 정부 비판 인사·단체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함으로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국정기조 수립에 일조하였다. 또한 국정원은 지원 사업 신청자들의 이념적인 성향을 검토하여 문체부 및 그 산하기관에 지원배제를 지시하였고, 문체부 및 그 산하기관의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 선정자에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담보하는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에서 행해진 위법행위를 규명하여 재발방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국정원장 원세훈은 2009. 2. ~ 2013. 3. 국정원 내부에서 정권비판적 인사·단체를 ‘중복세력’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퇴출활동을 전개할 것을 반복 지시하였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국정기조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언하였으며, 문체부 및 그 산하기관 등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통보하고 지원배제 지시를 하였다. 또한 국정원은 문체부 및 그 산하기관을 담당하는 I/O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철저히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청와대에 보고함으로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담보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국정원이 문체부 산하기관에 개입한 정황 및 세분화된 문화예술 분야에 따른 개입 방식 등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진상규명 및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붙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국가정보원의 관여 내용] 진상조사결과보고서**

## 제1절 | 조사 개요

### 1. 직권조사의 취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정권비판인사·단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보고서 및 정권비판인사·단체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함으로써 前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단체 지원배제에 관한 국정기조 수립에 일조하였다. 또한 국정원은 지원 사업 신청자들의 이념적인 성향을 검토하여 문체부 및 그 산하기관에 지원배제를 지시하였고, 문체부 및 그 산하기관의 문화예술계 지원사업 선정자에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담보하는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에서 행해진 위법 행위를 규명하여 재발방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제3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2018. 2. 9. 제25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되었다.

### 나. 조사 목적

이명박 및 박근혜 정권에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단체 지원배제 과정에 국정원이 관여한 내용, 각 문체부 산하기관별 국정원의 관여 방식 등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 조사 경과

### 1. 문건 등 자료조사

연번	서명	생산기관	입수일
1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결과 발표(2017. 9. 11.)	국정원 개혁위	2017. 11. 1.
2	국정원 개혁위, '정치인·교수 등 MB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 조사결과 발표(2017. 9. 25.)	국정원 개혁위	2017. 11. 21.
3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2017. 10. 30.)	국정원 개혁위	2017. 11. 21.
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2424(병합) 사건기록 중 김소영에	특검	2017. 11. 24.

연번	서명	생산기관	입수일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6. 12. 26.)		
5	市·道 문화재단의 left 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	국정원	2017. 11. 24.
6	“예술총(위원장: 권영빈)는 금년”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	국정원	2017. 11. 24.
7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희범에 대한 2016. 12. 31.자 진술조서	특검	2017. 11. 24.
8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희범에 대한 2017. 5. 22.자 녹취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의 증거 중 김OO이 작성한 2017. 1. 5.자 진술서	김OO	2017. 11. 2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의 증거 중 이OO에 대한 2017. 1. 5.자 진술조서	특검	2017. 11. 24.
11	영화진흥위, 비판 영화단체 예산지원 배제계획 (2015. 7. 13.)	국정원(재정리 : 본 위원회)	2018. 1. 19.
12	대통령님 비하 독립영화 <철의 여인> 개봉차단 추진	국정원(재정리 : 본 위원회)	2018. 1. 19.
13	문체부, 독립영화협회 ‘청와대 비판’ 영화 상영계획 취소(2015. 1. 21.)	국정원(재정리 : 본 위원회)	2018. 1. 19.
14	문체부, 위안부 영화 ‘귀향’ 개봉관 최소화 조치 (2016. 2. 16.)	국정원(재정리 : 본 위원회)	2018. 1. 19.
15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1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신OO 공소장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8. 2. 1.
1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최OO 공소장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8. 2. 1.
1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T 공소장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8. 2. 1.
19	오OO에 대한 진술조서(2017. 10. 15.,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8. 2. 2.
20	참고인 이OO이 2018. 2. 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5(하) 접수표」		2018. 2. 7.
21	문성근, 국정원 합성사진 유포 피해 이어 PC해킹도 당했다	SBS	2018. 5. 18.

##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OO	2015. 영진위 다양성진흥팀	진술청취보고(2017. 11. 23.)
2	이OO	2015. 영진위 창작지원팀	진술조서(2017. 12. 8.)
3	주OO	2015. 영진위 다양성진흥팀	진술조서(2회, 2018. 2. 2.)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4	김OO	2015.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진술조서(2017. 12. 18.)
5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 교수	진술조서 (2018. 1. 11.)
6	이OO	2015. 영진위 다양성진흥팀	진술조서(2018. 1. 17.)
7	이OO	2015. 영진위 창작지원팀	진술조서(2018. 1. 22.)
8	황OO	2013. 영진위 한국영화정보시스템 담당	진술조서(2018. 1. 22.)
9	문OO	2011~2015. 영진위 국내진흥부장	진술조서(2018. 1. 29.)
10	나OO	2015. 영진위 국내진흥부	진술조서(2회, 2018. 2. 2.)
11	나OO	2015. 영진위 국내진흥부	진술조서(2018. 2. 13.)
12	김OO	2015.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진술조서(2018. 2. 27.)
13	김OO	2015.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진술조서(2018. 3. 6.)
14	김OO	2015. 영진위 다양성진흥팀장	진술조서(2018. 3. 8.)
15	이OO	前 한예중 대외협력과장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12.)
16	김봉렬	한예중 총장	녹취록 (2018. 3. 19.)
17	김OO	前 한예중 사무국장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20.)
18	문OO	2011~2015. 영진위 국내진흥부장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4. 6.)
19	구OO	2015. 영진위 창작지원팀장	진술조서(2회, 2018. 4. 12.)
20	이OO	부산 <영화의전당> 시네마떼꼬 팀장	진술청취보고(2018. 4. 26.)

### 제3절 | 조사 내용

## 1. 기초사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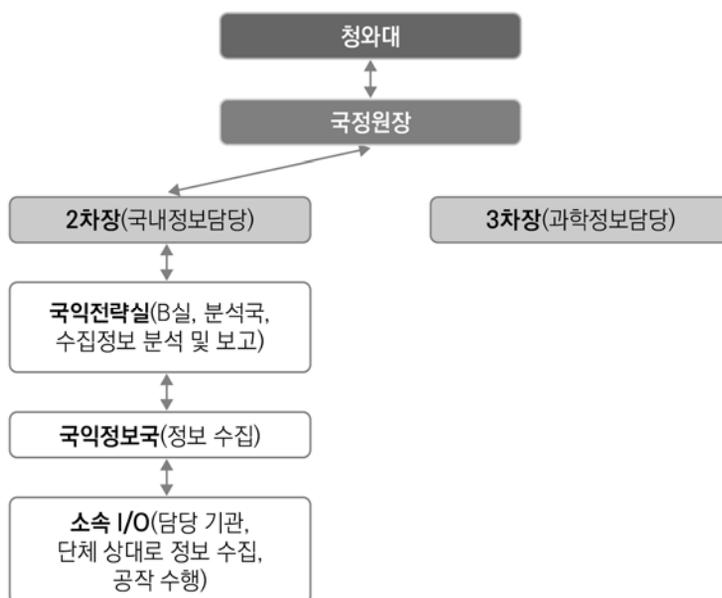
### 가. 국정원의 직무범위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과거 국정원(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포함)에 대하여 국내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직무범위, 특히 국내 정보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율하는 한편, 그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직무 집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외 정보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최OO 공소장

및 국내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箭箠),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 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정원의 직무를 한정적·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국정원은 위 보안정보와 무관한 국내 정보에 대하여는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나. 국정원의 국내정보 업무의 역할 분담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8국, 수집국)은 부서 내 I/O(Intelligence Officer, 국내 정보 담당관)들을 활용하여 I/O들이 담당하는 기관·단체들과 접촉한 뒤 국정원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I/O를 통하여 기관, 단체들을 상대로 공작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이다.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B실, 7국, 분석국)은 국익정보국 I/O를 통해 수집된 정보 및 자체 생산 정보들을 분석하여 국정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이다.

국익정보국의 정보수집활동은 ① 국익정보국의 I/O들이 담당하는 기관단체들을 접촉한 뒤 국정원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스스로 수집하는 경우와 ② 국익전략실에서 청

2)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외정보”라 함은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 및 지지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와대의 요청 또는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 현안에 대해 ‘SRI(Special Requirement Intelligence, 특별정보 요구)’라는 형식으로 국익정보국의 I/O에게 정보 수집을 요청하는 경우로 나뉜다.

국익전략실의 정보생산·배포활동은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 I/O들이 스스로 또는 SRI에 따라 수집하여 내부 전산망에 등재한 첩보를 국익전략실의 담당 분석관이 선별하여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익전략실의 처장은 분석보고서를 추출하여 중요도에 따라 단장, 국장, 2차장, 원장, 청와대까지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국정원의 정보처리과정은 정보수집단계에서부터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정보의 편향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익정보국에서는 정보의 수집만 담당하고, 국익전략실에서는 수집된 정보의 분석·보고만 담당하도록 하여 정보의 수집 업무와 분석·배포 업무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의 국정원에 대한 국내 보안정보 보고 지시는 청와대의 각 수석비서관실에서 국정원장 정보비서관실로 전달된 다음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2차장, 국익전략실장, 담당 처장·과장의 순으로 전달되고, 보고체계는 위 지휘체계의 역순이다.

## 2. 국정원에 의한 이명박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단체 지원배제<sup>3)</sup>

### 가. 서론

이장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최OO, 신OO, T 공소장 내용에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결과 발표, 관련 기사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재정리하였다.

### 나.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단체 지원배제 국정기조 수립

원세훈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기간(2009. 2. ~ 2013. 3.) 동안 2차장 민OO, 3차장이OO, 국익전략실장 신OO, 국익정보국장 박OO, 심리전단장 민OO 등이 참석한 월례전(全) 부서장 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 및 정무직 회의 등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중복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중복세력과 동

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최OO, 신OO, T 공소장

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야당과 야권 후보자 등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라'고 주문함으로써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또한 국정원장 원세훈은 일부 연예인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대정부 불만을 부추긴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세력이 증가하였고, 방송국에 포진한 좌편향 인물 및 PD들이 좌파세력에 영합한 편파보도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여겼다. 특히 국정원장 원세훈은 문화예술계 내 정부 비판세력을 ①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② 좌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을 주입하며, ③ 촛불시위 참여를 통해 젊은 층을 선동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문화계, 배우, 영화감독, 방송인, 가수 등 각 분야별로 문화예술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활동을 전개하였다.<sup>4)</sup>

**[표-1] 퇴출 대상 문화연예인**

구분	대상
문화계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6명
배우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8명
영화감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52명
방송인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등 8명
가수	윤도현, 신해철, 김장훈 등 8명

국정원 국익전략실에서는 원장 원세훈 재직시점인 2009. 초순경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 가운데 정부 비판 발언을 하거나 야당 지지를 선언한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문제제기하는 보고서나 그와 같은 취지로 속칭 '문제 작품'이나 '문제 예술가'에 대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T가 국익전략실 2단 산하 사회팀장으로 재직하던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의 기간 동안 더욱 강화되었다.

사회팀장 T는 ① 2010. 11. 2.자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문화예술계 단체·인물의 성향을 '온건 좌파'와 '골수 좌파'로 구분하고 골수 좌파의 경우 비리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나 형사처벌을 통해 세 위축을 유도하

4) 국정원 개혁위,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작' 관련 조사결과 발표(2017. 9. 11.)

는 등 제도권 진입을 저지하고, 온건 좌파의 경우 포용한다는 원칙을 세운 후 위 보고서를 국정원장 원세훈, 청와대에 보고하고, ② 2010. 11. 12.자 「문화예술계 內 좌파 인물 단체 현황 및 활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주요 좌파 단체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 회장 신학철), 작가회의(이사장 구중서, 상임고문 고은, 신경림 등), 문화연대(대표 강내희), 영화단체연대회의(이사장 이춘연), 우리만화연대(회장 김형배)로 구분한 다음 각 단체별로 주요 인물, 회원 및 회원수, 주요 동향 등을 파악한 후 위 보고서를 국정원장 원세훈에게 보고하고, 국정원 내부 신원검증 시스템 등에 등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③ 2011. 2. 18.자 「從北 문화예술단체의 勢 복원 움직임 및 대응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중복활동 단체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차단하고, 중도좌파 단체는 적극 포용하며, 건전단체는 적극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취지의 보고서 및 2010년경 이미 좌파단체로 분류된 바 있는 민예총의 문화연대와의 통합 추진 등 복원기도를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첨부 자료를 작성하여 국정원장 원세훈에게 보고하였다.

#### 다. 좌파 연예인 대응 T/F

국정원장 원세훈은 2009. 7.경 기획조정실장 김OO으로 하여금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국익정보국은 좌파 연예인들의 동향 및 성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익전략실이 마련한 대응방안을 실행부서인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에 전달하여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퇴출·견제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2017. 10. 30. 발표한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좌파 연예인 대응 T/F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좌파 연예인 대응 T/F」 활동 (T/F 회의 및 활동 보고자료 등)

- 2009년 10월, 2011년 6월 : 특정 연예인 소속 특정 기획사 세무조사 유도
- 2009년 11월 : 복지부의 '2009 푸른성장 대상'의 수상 후보자에서 제외 유도
- 2010년 1월 : '2010년 문화·예술 분야 등 건전화 사업 계획' 보고  
김OO 기초실장 주도 「좌파 연예인 대응 T/F」는 문화·연예 및 방송계 좌파 성향 인물 활동 실태를 수시 점검
- 2010년 1월 : 국제영화제 차기 위원장 후보 배제 유도

- 2010년 2월 : 특정 연예인 진행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유도
- 2010년 3월 : MBC 대상 정부비판 연예인의 출연 가능성 원천 차단 및 정부 비판 연예인 출연 프로그램 폐지 유도
- 2010년 3월 : 특정 PD 제작 주도 다큐멘터리를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에서 탈락 요청
- 2010년 4월 : 특정 라디오 제작자 지방 전보발령 유도
- 2010년 4월 : OOO 출연 MBC '환상의 짝궁' 폐지 유도

## 2.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 담당 수집관 활동

- 2010년 3월 :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원장 지시)
  - 신입사장 취임(3.2) 예정을 계기로 공영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쇄신, 편파 프로 퇴출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체질개선 추진
- 2010년 8월 :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민정수석 요청)
- 2010년 9월 :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청와대 일일보고)
  - 검경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언론노조위원장 등 사법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일탈행태 재연 우려
- 2010년 10월 : '문화예술단체내 좌파인사 현황, 제어 관리방안 보고'(기획관리비서관 요청)
  - 촛불 집회 적극 가담 연예인 A급 15명, 단순 동조자 B급 18명으로 구분, A급 연예인은 연예활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B급은 계도 조치
- 2010년 10월 : SBS '물은 생명이다' 특집행사 관련 4대강 사업 비판 자체 협조(원장 지시)
- 2010년 11월 : '문화·연예계 좌파 실태 및 순화 방안 보고'(원장 지시)
- 2010년 11월 : '좌파성향 방송·연예인 순화·견제활동 방향 보고' (원장 지시) → △ KBS 등 공영방송에서 정차성향 문화·예술단체 출신 방송인 퇴출 유도 △ 케이블방송 엠넷 특정 프로그램 방영 연기
- 2011년 4월 : MBC 특정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원장 지시)
- 2011년 8월 : MBC 특정 문화·연예계 출연인물 퇴출 유도(청와대 보고)
  - 특정 출연 인물을 전보 및 하차 시키고, 社規에 출연제한 근거규정 마련

## 3. 「심리전단」 활동

- 사이버상 △ 특정 연예인의 중복성향 폭로 △ '문화·연예계 중복세력이 암적 존재' 부각 △ 댓글·사설 정보지 형태 문건 유포, 비리·부도덕 행적 확산 △ 광고주에 항의 이메일 발송으로 '모델교체' 압박 등의 방식으로 견제활동 수행
- 2009년 10월 : 다음 「아고라」에 특정 연예인 교체는 인기 하락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요지의 토론글·댓글 게재(500여 건)
- 2010년 10월 : 정부 비판 연예인 광고주에 반대 이메일 발송, 광고모델 교체 유도

- 2011년 1월 : 특정 연예인 주도 정부 비판 사이트 반대 심리전
- 2011년 4월 : 김정일을 비호하는 특정 연예인의 利敵 행적 폭로 심리전 활동
- 2011년 5월 : 특정 연예인 이미지 실추 유도 심리전

## 라. 좌파 문화·연예인 퇴출 계획 마련

### (1) ‘여성부의 좌파 연예인 활용 홍보 활동 시정 필요’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정OO은 2010. 2. 22.경 ‘여성부의 좌파 연예인 활용 홍보 활동 시정 필요’라는 제목으로, ‘여성부 광고 내레이션에 윤도현, 김제동 등 좌파 연예인들과 친분이 돈독한 가수 김C(김대원)가 기용되었는데, 김C가 소속된 기획사인 다음기획(대표 : 김영준)은 윤도현, 김제동, 정태춘 등 대표적 좌파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있고 2009년 노무현 前 대통령의 노제를 기획·지원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다음기획’을 좌파 연예인들의 기획사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회팀 과장 송OO, 팀장 오OO, 당시 국익전략실장 양OO, 2차장 박OO, 국정원장 원세훈에게 보고하였다.

### (2)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은 국정원에 2009. 9. ‘좌파성향 감독들의 이념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PD 주요 제작활동 실태’, 2010. 4. ‘좌파 연예인 비판활동 견제방안’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0. 8.경 국정원에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정부비판 발언 내역, 활동 동향, 견제방안 등을 파악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는 국정원장 원세훈에게 보고된 다음 2차장인 박OO, 국익전략실장인 신OO, 국익전략실 2단장인 최OO, 국익전략실 사회팀장인 T, 사회팀 과장인 안OO, 사회팀 팀원인 정OO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사회팀장 T는 사회팀 팀원 정OO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사회팀 팀원 정OO은 2010. 8. 24.경 국익정보국 소속 사회팀 소속 I/O인 오OO 등으로부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한 김미화 등 좌성향 연예인들의 동향 첩보를 제공받아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비판 연예인의 발언이나 행정을 분석하여 포용 불가(속칭 ‘강성 좌파’) 연예인과 포용 가능 연예인으로 분류하고, 성향별 대응책을 마련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사회팀

과장 안OO에게 보고하였고, 사회팀 과장 안OO는 위 보고서를 1차 검토한 후 사회팀장 T에게 보고하였다. 위 보고를 받은 사회팀장 T는 포용불가, 포용 가능 연예인을 다시 분류하고, 강성 좌파 연예인(김미화, 김제동, 윤도현, 문성근 등)에 대해서는 출연분량 축소, 경제단체를 통해 대기업 광고 섭외 배제, 보수 언론을 통해 강성 좌파 연예인들의 비리나 부도덕한 행태를 부각시키는 등으로 견제·압박한다는 취지로 견제방안 부분을 집중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국익전략실 2단장 최OO, 국익전략실장 신OO, 2차장 박OO와 국정원장 원세훈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도 보고하였다.

### (3)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

국익전략실장 신OO을 통하여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단체 지원배제에 관한 국정원장 원세훈의 지시를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정OO은 2010. 9. 16.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에서 진행 중인 김미화의 블랙리스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검·경 수뇌부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당부하고,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하여 허위사실까지 퍼뜨려 반정부 여론몰이를 주도해 온 김미화는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퇴출토록 촉구(MBC)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여론팀장 최OO, 국익전략실 2판단관 최OO을 거쳐 국익전략실장 신OO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2차장 민OO과 국정원장 원세훈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 홍보수석비서관, 미래전략기획관에게도 보고하였다.

### (4)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 및 '주요 좌파연예인 명단(32명)'

한편, 2010. 10.경 청와대 기획관리실에서는 문화예술 단체 내 좌파 인사 현황,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방안, 김미화·윤도현 등 좌파 연예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는 국정원장 원세훈에게 보고된 다음 2차장인 민OO, 국익전략실장인 신OO, 국익전략실 2단장인 최OO, 국익전략실 사회팀장인 T, 사회팀 과장인 안OO, 사회팀 팀원인 정OO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이에 국익전략실 사회팀장 T는 사회팀 팀원 정OO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정OO은 2010. 10. 20.경 국익정보국 소속 사회팀 I/O인 오OO 등으로부터 첩보를 제공받아 좌파 연예인에 대한 제압 활동의 실행부서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과 공유하기 위한 '지원 자료'

로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좌파 연예인의 성향별로 대응책을 마련한 보고서 초안을 사회팀 과장 안OO에게 보고하였다. 사회팀 과장 안OO는 위 보고서를 1차 검토한 후 이를 사회팀장 T에게 보고하였다. 사회팀장 T는 좌파 연예인의 성향을 ‘강성 좌파’와 ‘온건 좌파’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온건 성향은 최대한 포용하고, ‘김미화, 윤도현, 문성근 등 강성 좌파 연예인은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하고, 김미화의 SBS 공문조작 정황 등을 예시로 들면서 강성 좌파 연예인들의 비리·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강성 좌파(김미화, 윤도현, 문성근 등)와 온건 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연예인 명단(32명)’을 작성하여 국익전략실장인 신OO에게 보고·검토받은 후 2차장 민OO과 국정원장 원세훈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청와대 기획관리실에 보고하였다. 이후 위 보고서는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전달되었다.

#### (5) ‘문화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 방안(복명)’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 및 ‘주요 좌파연예인 명단(32명)’을 토대로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김OO은 2010. 10. 26.경 ‘문화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 방안(복명)’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연예계 핵심 좌파 100여명이 2012년 대선을 겨냥해 세력 결집 가능성이 있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비판여론을 조성하고, 좌파 연예인의 비리·부도덕 행적을 인터넷상에 폭로하여 불신·지탄 여론 조성으로 퇴출 유도하고, B실(국익전략실)과 협조하여 출연축소 등 간접 제대로 활동최소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리전단 안보사업팀장 성OO, 심리전단장 유OO, 3차장 김OO를 거쳐 국정원장 원세훈에게 보고하였다.

#### (6)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 및 ‘주요 좌파 연예인 발언 및 활동 현황’

청와대 기획관리실로부터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 요청을 국정원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전달받은 사회팀장 T는 사회팀 팀원 정OO에게 좌파 연예인에 대한 향후 견제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사회팀 팀원 정OO은 2010. 11. 1.경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연예인의 성향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한 보고서와 ‘주요 좌파 연예인 발언 및 활동 현황’ 초안을 작성하여 사회팀 과장 안OO에게 보고하고 사회팀 과장 안OO는 위 보고서를 1차 검토한 후 이를 사회팀장 T에게 보고

하였다. 사회팀장 T는 “온건 좌파 연예인은 현재부터 2011년까지 1단계로 계도를 통해 우군화 및 2012년까지 2단계로 좌파에 선동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김미화·문성근 등 친노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예인들이 美 쇠고기 반대 시위·4대강 비판 등 정부비판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DJ로 활동하는 김미화 등은 강성 좌파로서 출연분량 축소 또는 해당 프로그램 청취율 하락 유도 등 간접 제재 방식을 구사하고, 김미화의 SBS 공문조작 등 이중적 처신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 “김제동, 윤도현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제재는 이들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역이용된 점을 감안하여 직접 제재방식은 최소화하고, 대중적 인기 하락 유도 등 간접 제재 방식을 구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한 보고서와 함께 김제동, 윤도현, 문성근 등을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 발언 및 활동 현황’을 작성하여 국익전략실 2단장 최OO, 국익전략실장인 신OO에게 보고·검토받은 후 2차장 민OO과 원세훈에게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의 기획관리실장에게도 보고하였다.

#### (7)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정OO은 2010. 11. 4.경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이라는 제목으로 “방송3사 경영진에게 김미화 등 좌편향 출연자 교체를 촉구하고 특히 공정성이 생명인 시사프로 진행자로서 반정부 언동을 일삼아온 김미화는 즉각 퇴출(MBC)이 필요하다”, “다음기획 소속 김제동, 윤도현 등 좌편향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여 편파방송 재연이 우려되므로 방송 퇴출 등으로 면밀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여론팀장 최OO, 국익전략실 2판단관 최OO을 거쳐 국익전략실장인 신OO에게 보고·검토받은 후 2차장 민OO과 국정원장 원세훈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 (8) ‘문화연예계 중복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

국익전략실의 좌파 연예인 제압 방안에 대한 보고서 및 좌파 연예인 분류 명단 등을 전달받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김OO은 2010. 11. 5.경 ‘문화연예계 중복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라는 제목으로, ‘김미화에 대해서는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하여 방송 출연은 축소·차단시키고, 문성근은 문익환 신부의 아들로서 중복 DNA를 보유하고 있고, 윤도현 및 김제동은 폴리테이너 본색을 드러냈다는 취지로 사이버 공작활동을 전

개한다’는 취지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다음 안보심리전팀장 성OO, 심리전단 기획관 김OO, 심리전단장 민OO, 3차장 이OO을 거쳐 국정원장 원세훈에게 보고하였다.

### (9)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함OO은 2011. 6. 8.경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한대련 주도 등록금 불법시위에 ‘다음기획’ 소속 김제동 등 좌파 연예인들이 참여하여 선동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김제동의 경우 위선·비리 행태를 수집·유포하여 도덕성에 타격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익전략실 사회팀 과장 전OO, 사회팀장 T를 거쳐 국익전략실장 신OO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2차장 민OO, 국정원장 원세훈에게 보고하였다.

### (10) 기타

그 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 및 홍보수석은 2011. 12.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 확인’, 청와대 홍보수석은 2010. 5. ‘KBS 조직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 2011. 6. ‘좌편향 성향 언론인·학자·연예인이 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 파악 등을 수시 지시하였다. 이에 국정원은 위 지시에 대하여 ‘일일 청와대 주요요청 현황’에 따라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하였다.

### 마. 방송인 김미화 퇴출 실행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장 김OO 등은 “김미화를 방송에 출연시키지 말라”, “방송사에 김미화 등 좌파 연예인 퇴출을 압박하라”는 취지의 원세훈 등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MBC방송국 담당 I/O 권OO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위 권OO은 2010. 하반기부터 2011. 3.경까지 MBC방송국 기획조정실장인 전OO 등 MBC방송국 관계자들에게 “(원세훈) 원장님, (김OO) 기조실장님이 김미화 김제동 프로그램 때문에 난리입니다. 김미화 퇴출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국정원장 등의 지시사항임을 드러내며 김미화의 방송 퇴출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국정원의 요구를 MBC방송국 경영진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김OO 편성부장

은 2011. 4.경 김미화에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낮 시간대 다른 프로그램인 ‘싱글벙글 쇼’로 옮겨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김미화로 하여금 진행 중이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라디오 프로그램 MC직을 그만둘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김미화는 2011. 4. 25.경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라디오 프로그램 MC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 **바. 김제동, 윤도현 소속 기획사 ‘다음기획’ 세무조사 시도**

원세훈의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제압 지시를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직원들은 ‘다음기획’ 소속 김제동, 윤도현 등을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이후, 라.항과 같이 김제동, 윤도현에 대한 제압 방안을 정리한 보고서들을 원세훈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익정보국 등에 전달하였다.

이후 국익정보국장 박OO은 2011. 6. 초순경 국익정보국 경제1팀장 윤OO 등을 통하여 경제1팀 소속 I/O로서 국세청을 담당하던 손OO에게 ‘다음기획, 세무조사 김제동, 윤도현’이라고 적힌 메모지와 함께 ‘지휘부 지시사항이다. 김제동, 윤도현 소속사인 다음기획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손OO은 2011. 6. 8.경 저녁 무렵 서울시 소재 조선히텔 일식당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인 김OO을 만나 “국정원 지휘부에서 김제동, 윤도현 소속사 다음기획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로 말하여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사항임을 전달하며 다음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다음기획에 대하여는 이미 2009년경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고,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손OO의 위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음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사. 연기자 겸 정치인 문성근의 정치활동 방해**

##### **(1) 방해계획 수립**

연기자 겸 정치인 문성근은 2010. 8.경부터 ‘2012년 대선 및 총선 전에 당시 5개 야권 정당(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통합되어야 차기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유쾌한 100만 민란’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한 후 ‘야권 정당 통합 및 이를 통한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운동을 전개하

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명령’이라는 정치 시민단체를 결성하였는데 그 단체의 가입자를 6만 여명까지 늘어나게 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11.경부터 민주당 등 야당들도 문성근의 위 주장에 동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장 원세훈은 위와 같이 문성근을 포함한 좌편향 문화예술인에 대한 제압 활동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신OO이 총괄 지휘하는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은 라.항과 같은 보고서들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국익전략실의 문성근의 정치활동 등을 제압하기 위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전달받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안보팀 소속 김OO은 2010. 10. 26.자 ‘문화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 방안(復命)’, 2010. 11. 5.경 ‘문화연예계 중복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문성근은 12만명의 「노사모」 지지하에 ‘2012년 좌파정권 수립’을 목표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데, 문익환의 아들로서 ‘從北 DNA’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문성근에 대한 불신·지탄 여론을 조성하여 퇴출을 유도하는 사이버 폭로전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하여 비판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리전단 안보팀장 성OO, 기획관 김OO, 심리전단장 유OO, 3차장 김OO, 원세훈에게 각 보고하고 이를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에 배포하였다.

## (2) 소위 ‘증권가 찌라시’ 제작

심리전단 안보팀 소속 김OO은 2011. 1. 28.경 ‘문성근 주도 「100萬 민란 사이트」 공략계획’이라는 제목으로, “從北 가족력·비리 사례 등을 종합 증권가 찌라시로 제작하여 사이버 공작을 수행하고, 100萬 민란 사이트 회원수 Zero化 및 「문」 개인 트위터에 ‘내란선동 사과문’ 게재 등 공작적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보팀장 성OO, 기획관 김OO, 심리전단장 민OO, 3차장 김OO, 원세훈에게 보고하였다.

## (3) 자금출 차단, 국보법위반 여부 등 주시

이후 문성근이 주장하는 야권 정당 단일화를 지지하는 세력이 증가하였고 ‘국민의 명령’ 단체 가입자 수도 증가하자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함OO은 2011. 2. 18.경 ‘중복 문화예술단체의 세 복원 움직임 및 대응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문성근의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 등이 야권 단일화를 빙자하여 길거리 선동을 하고 있다. 문성근의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을 통한 국민 선동 차단을 위해 ‘경미한 사안이라도 국보법위반 소환통

보·조사와 병행 심리전을 전개하고, 대국민 선동집회·홈페이지 운영 등 소요예산 조달 루트를 추적하여 자금줄을 차단하며, 경찰·검찰과 협조하여 문성근의 반정부 활동 동향 및 탈·불법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응방안을 정리하고, 이를 위하여 'B실 주관, 2국·6국·심리전단 및 쏜 지부가 참여하는 실무담당관 업무협의체(비상설)를 구성·운영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국익전략실 사회팀 과장 전OO, 팀장 T를 거쳐 신OO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2차장 민OO, 원세훈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익정보국과 심리전단에 전달하였다.

#### (4) 트위터 활용

심리 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불상의 직원들은 직접 또는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 팀장 등으로 하여금, 2010. 10. 26. 13:57경 트위터 'KoreaDisco' 계정으로 "100만 불쾌한 반란, 노봉 문성근은 이것부터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6. 13:57경부터 2012. 12. 4. 13:48경까지 총 7,388회에 걸쳐 문성근 및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당을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윗·리트윗하였다.

#### (5) 보수단체 어버이연합 활용

심리전단 방어사업팀 박OO는 2011. 4. 19.경 '문성근의 「국민의 명령」 선동 대응 심리전 전개'라는 제목으로 "어버이연합과 협조하여 2011. 4. 19. 「국민의 명령」 사무실 앞에서 문성근 등 「文」 일가의 종북·이적 행적을 규탄하는 가두시위를 4회 전개하고, 문성근 구속 촉구 취지의 전단지 1천부를 배포하며, 문성근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시위를 20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어사업팀장 윤OO, 기획관 김OO, 심리전단장 민OO, 3차장 이OO, 원세훈에게 보고하였다.

위 박OO는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정원 사무실에서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T에게 전화를 걸어 야권 단일화를 통한 2012년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주장하는 문성근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집회 및 1인 릴레이시위를 개최하여 달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응한 T는 2011. 4. 19. 11: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국민의 명령' 사무실 앞에서 어버이연합 회원들을 동원하여 "죽창과 횃불로 유혈폭동 선동하는 문성근! 내란선동죄로 즉각 구속하라!"라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유혈폭동 선동 문성근 즉각 구속"

이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죽창과 횃불로 민란을 선동하는 문성근을 즉시 구속하라”라는 취지로 기재된 전단지 배포하며 문성근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8.경, 2011. 5. 3.경 2011. 5. 13.경 위 ‘국민의 명령’ 사무실 앞에서 어버이연합 회원들을 동원하여 문성근을 반대·비방하는 집회를 각 개최함으로써 4회에 걸쳐 문성근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계속하여 T는 2011. 4. 14.경 위 ‘국민의 명령’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문성근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보람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어버이연합 회원들을 동원하여 ‘문성근의 부친 문익환이 김일성을 만나 웃고 있는 장면’, ‘문성근이 김정일을 만나 웃고 있는 장면’, ‘문성근의 모친 박용길이 김일성 사망 1주기에 방북하여 소복을 입고 있는 장면’을 인쇄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문성근을 반대·비방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4.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위 ‘국민의 명령’ 사무실과 ‘보람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20회에 걸쳐 문성근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1인 릴레이 시위’를 개최하였다.

이후 박OO는 2011.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한강지구 부근에서 T에게 위 시위 등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1,6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 (6) 부적절한 합성사진 제작·유포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 소속 OO는 2011. 5. 25.경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백만민란 와해 가속화를 위해 문성근과 김여진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시한 합성 사진을 제작, 국내 최대 사진 사이트인 「DC인사이드」 등에 유포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보사업1팀장 유OO, 기획관 김OO, 심리전단장 민OO, 3차장 이OO, 원세훈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위 OO는 2011. 5. 25.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정원 사무실에서, 국정원 소속 시각디자인 담당 직원인 OOO이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장 유OO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문성근과 김여진이 나체로 부적절한 육체관계를 하는 듯한 사진 위에 ‘공화국인 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 등 문구가 기재된 허위의 합성사진을 OOO로부터 제공받고, 그 무렵 사진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디씨(DC) 인사이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합성사진을 게재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합성사진을 볼 수 있게 하였다.

### (7) 개인 PC 해킹 및 사찰<sup>5)</sup>

국정원 특별팀은 2010년부터 문성근에게 이메일 악성코드를 보내는 방식으로 개인 PC를 해킹해 사찰하였다. 관련 국정원 내부보고서에는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중북·좌파세력 척결’을 지시하자 특별팀이 문성근의 개인 PC를 이메일을 통해 ‘침투’해 악성코드를 담아 보내 컴퓨터를 오염시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아. 보수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활용 ‘보도협조’<sup>6)</sup>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개혁위, ‘정치인·교수 등 MB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 조사결과 발표」에서 국정원이 보수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를 활용하여 ‘보도협조’를 하였다고 하며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1) 보수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활용 ‘보도협조’

가) 국정원은 2009년 2월 「미디어워치」(대표 변희재) 창간시부터 국정 지지여론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간지원 마련 관련 조연을 해주거나, 여권 측면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휘부와 청와대에 보고하였음

##### 《「미디어워치」 운영실태 및 지원 관련 보고서 내용》

- 2009.5.20 ‘미디어워치, 운영실태 및 활성화 지원방안’
- 2009.8.12 ‘미디어워치 활성화 중간 보고’
- 2012.3.30 (BH보고) ‘건전 인터넷 매체 경영난으로 중북매체 대응 위축 우려’

나) 국정원 지휘부는 국내부서 기업체 및 정부부처 담당 수집관들에게 「미디어워치」 정기구독 및 광고지원 요청을 지시하였음

다) 또한 변희재 대표를 통해 당시 국정 현안 및 특정 정치인 대상 비평기사 등을 「미디어워치」에 수차례 보도토록 하는 한편

라) 경제 및 기관 담당 수집관에게 전경련, 삼성 등 26개 민간기업 및 한전 등 10개 공공기관에 「미디어워치」 ‘광고지원’을 요청토록 지시하여 미디어워치는 2009.4월~2013.2월간 4억여 원 가량의 기업 광고비를 수주하였음

바) 「미디어워치」를 통한 ‘국정홍보’ 관련 우호 기사 및 좌성향 인물 비판기사 ‘보도 협조’ 사례는 다음과 같음

5) 문성근, 국정원 합성사진 유포 피해 이어 PC해킹도 당했다, <SBS>, 2018. 4. 25.

6)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2017. 9. 25. 작성한 「국정원 개혁위, ‘정치인·교수 등 MB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 조사결과 발표」

- 2009.3.20 변희재 대표, '뉴데일리'에 좌파교수 비리 의혹 기사 협조 보도  
→ 2009.3.20.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사업 좌파 나눠먹기 의혹' 제하 보도
- 2009.6.16 「미디어워치」 대상 진중권 퇴출유도 등 현안관련 보도협조 결과  
→ 2009.6.17 '미디어워치, 진중권·전유경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로 검찰 고소'
- 2010.5.11 「미디어워치」, 호외판 발행으로 지방선거 지원 예정  
→ 2010.5.13 '한명숙 후보' 비난 논조 호외판 10만부 발행, 배포

즉,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디어워치가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고, 국정원은 미디어워치를 통해 '국정홍보' 관련 우호 기사 및 좌성향 인물 비판기사를 '보도 협조'하였다.

### 3. 국정원에 의한 박근혜 정부의 특정문화예술계 인사·단체 지원배제<sup>7)</sup>

#### 가. 서론

이장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최OO, 신OO, T 공소장 내용 외에 우리 위원회에서 확보한 추가 자료 및 진술 등을 중심으로 하여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내용을 재정리하였다.

#### 나. 국정원 개입구조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국정기조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문체부 및 그 산하기관 등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통보하고 지원배제 지시를 하였다. 또한 국정원은 문체부 및 그 산하기관을 담당하는 I/O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철저히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청와대에 보고함으로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담보하였다.

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최OO, 신OO, T 공소장

#### 다. 국정기조 수립<sup>8)</sup>

국정원은 2013. 2. 25.경 前 대통령 박근혜가 취임한 이후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의 제도권 진입 차단을 목적으로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또한 국정원 국익전략실에서는 2013. 8.경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좌성향 문예인들이 문화융성 국정기조에 따라 2013. 6. 4. 실시될 지방선거를 위축된 조직재건의 호기로 보고 세력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이에 면밀하게 대처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공공분야에서는 철저한 신원검증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선정 기관에 좌성향 인물을 배제하고, 민간분야에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을 통하여 좌성향 단체 자금을 차단하는 등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대통령 박근혜는 2013. 9. 30.경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문화예술계에 좌편향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한편, 그 무렵 연극 ‘개구리’ 등과 같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개봉된 상황에서, 국정원에서 작성한 「좌성향 세력의 세 확산 기도 등 문화관련 이념문제」문건 등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보고되면서,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정부비판 여론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부적절하다는 기초가 청와대 내부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2013. 12. 10. ‘문화예술, 미디어 부분에 좌파가 많다. 공직 내부에도 문제가 있는 인물이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문화예술계 좌편향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2013. 12. 20.경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이 되어서 중복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8)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문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좌파 성향의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 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방안 제언 및 실행상황 검토

### (1) 서론

국정원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는 ‘고급정보’가 포함된 국정원 보고서를 전달하였고, 위 보고서를 전달받은 비서실장은 각 수석에게 위 보고서 중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국정원은 청와대 각 수석에게는 ‘고급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국정원 보고서를 전달하였으며, 정무수석은 필요한 경우 소통비서관실에 국정원 보고서를 전달하였고, 소통비서관실은 필요한 경우 이를 문화체육비서관(이하 ‘문체비서관’)실에 전달하였다. 교육문화수석(이하 ‘교문수석’)은 필요한 경우 문체비서관실에 국정원 보고서를 전달하였다. 문체비서관실은 이와 같은 경위로 전달받은 국정원 보고서 중 필요한 내용을 문체부에 전달하며 문체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철저히 실행되도록 지시하였다.

국정원 보고서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방안 제언, 청와대의 지시내용 뿐만 아니라 문체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내용 역시 포함되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철저한 실행을 담보하였다. 문체비서관 김소영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2424(병합) 사건에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 전, 지원 후에 자꾸 이런 문서가 내려오다보니 큰 숙제 같은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sup>9)</sup>

국정원이 작성하여 보고한 청와대 보고서 가운데 주요한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2424(병합) 사건기록 중 김소영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6. 12. 26.)

## (2)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와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再확산 시도 차단 건의’

국정원은 2013. 8. 16.자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와 2013. 10. 2.자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再확산 시도 차단 건의’ 청와대 보고를 통해 ‘MB 정부에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건전 인사 보임·좌편향 단체 보조금 지원 중단 등 건전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척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념 오염 온상이 되어온 ‘문예계 정상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좌성향’ 단체·인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뿌리 뽑아 나갈 것을 제언하였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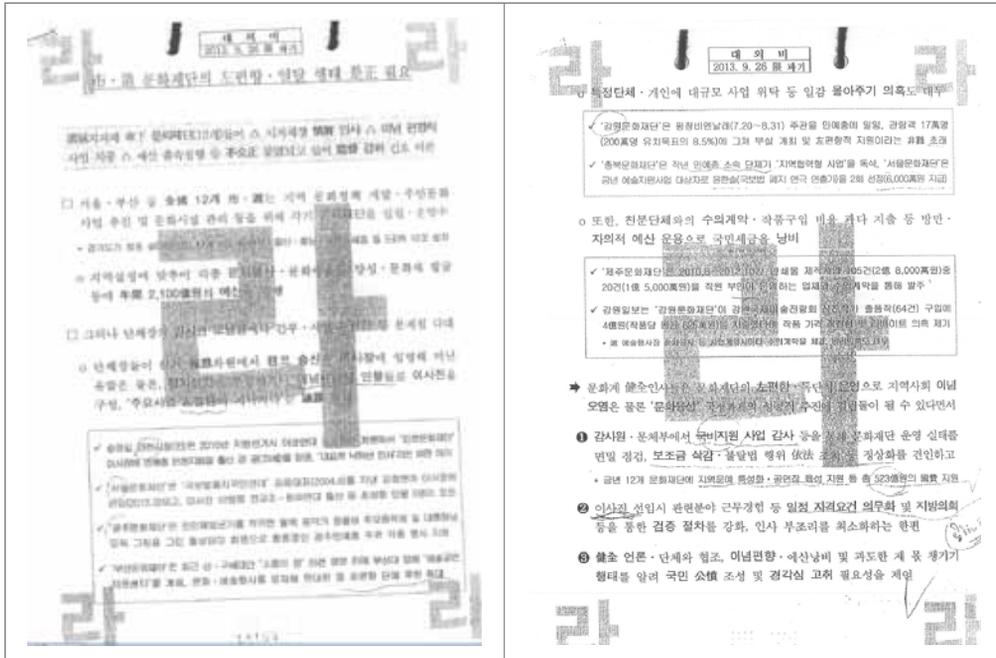
### 〈제언 내용〉

- 公共분야 : 철저한 신원검증으로 좌성향 인물의 침투 차단
  - 문체부 산하 예술위 등 공공기관장 성향 및 좌성향 문예인 지원여부 등을 점검, 임기만료 등 계기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인물 배제
  - 국립극단·발레단 등 국립단체가 먼저 이념·정치편향 작품 필터링을 위한 사전 공모제 확대 및 심사 기준 강화
- 民間분야 : 좌성향 단체 자금줄 차단 등 ‘철저한 고립·枯死’ 유도
  - 좌성향 단체·인물에 대해서는 정부 공동사업·공모작 선정 배제 등 보조금·운영자금 중단 원칙 기조를 확대, 자금줄 차단
    - \*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회계감사 등을 통해 횡령·유용 여부 등을 면밀 조사, 퇴출
  - 좌성향 문예인들의 이념·정치적 활동실체 및 폐해를 집중 부각, 문예계의 좌편향성에 무감각해진 국민의식 바로잡기 노력 배가
  - 건전단체를 활용, 젊고 활동력 있는 건전 문예인 양성을 위한 ‘문예 아카데미’ 운영 등 좌성향 세력 대응력 강화도 병행

## (3) ‘市·道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

국정원은 2013. 9.경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에게 ‘市·道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민예총, 국보법폐지연대, 전교조, 참여연대 등을 좌편향, 좌성향 단체로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문화재단에 좌편향 인사들을 이사진 등으로 임명하여 이들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이후 김기춘은 2013. 9.경 교문수석 모철민에게 위 보고서를 건네주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10) 국정원 개혁위원회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2017. 10. 30.)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오OO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2424(병합) 사건에서 “문체부와 예술위 공동으로 해당 시도에 직접 내려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시정할 방법이 없었고, 사실관계 확인 후 앞으로 문예위 소관사항에 대해 좀 더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BH 교문수석실에 보냈습니다”고 진술하였다.<sup>11)</sup>

2013. 9. 30.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이하 ‘대수비’라고 한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모철민 교문수석으로부터 ‘국립극단의 정치편향적 작품<sup>12)</sup> 제작,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이념성 사업 지원과 부실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간접지원 및 책임심의제도를 강화해 좌편향 작품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등 취지의 ‘좌편향 문화예술계 대응’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데, 이는 위와 같이 연극 개구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연 및 상영과 관련하여 김기춘이 모철민 교문수석을 질책하며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고, 위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을 주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하여 오OO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문수석실에 보낸 데 따른 것이었다.<sup>13)</sup>

1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2424(병합) 사건기록 중 오OO에 대한 진술조서(2016. 12. 27.)

12) 이는 2013. 9. 초경 상영된 연극 ‘개구리’를 말한 것이다.

#### (4) ‘문예기금 운용기관의 보조금 지원기준 보완 필요 의견’

국정원은 청와대에 2014. 1. 27. ‘문예기금 운용기관의 보조금 지원기준 보완 필요 의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문예기금 지원 기준 변경 방안을 보고하고, 2014. 2. 20.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보완필요 여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문예기금 지원 사업에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대응책이 필요함을 종합보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sup>14)</sup>

#####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보완 필요 여론’ 보고서(2014. 2. 20.) 주요내용〉

- 좌파단체·인물이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문제
  - 「민족미학」 대표(조성래)는 노무현재단 고문 및 민변 소속 변호사로 각종 시국선언에 참여하였으나 학술지 ‘민족미학’ 발간사업이 계속사업에 포함
  - 이념편향성 연극으로 물의를 빚은 극단 「해화동1번지」,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등도 재선정
  - 「작가회의」 소속으로 밀양송전탑·해군기지반대 등 정부를 비판해 온 고명철·박몽구·신용목 등도 집필활동 지원금을 받을 예정
- 이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모선정 심의위원회에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
- 하반기 심사부터는 이러한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건의
  - 예술위 공모심사 체계를 심의위 추천(1.2배수) → 이사회 승인(2차)으로 전환, 이사회에서 작품을 최종 선정토록 개선
  - 심의위원 임명(3월)시 과거 활동경력에는 물론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건전예술인사 참여 확대 필요

#### (5) “예술술포(위원장: 권영빈)는 금년”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sup>15)</sup>

국정원은 2014. 2.경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에게 2014년 상반기 예술위의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4년 하반기부터는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건전 예술인사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등 제안을 담은 “예술술포(위원장: 권영빈)는 금년”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을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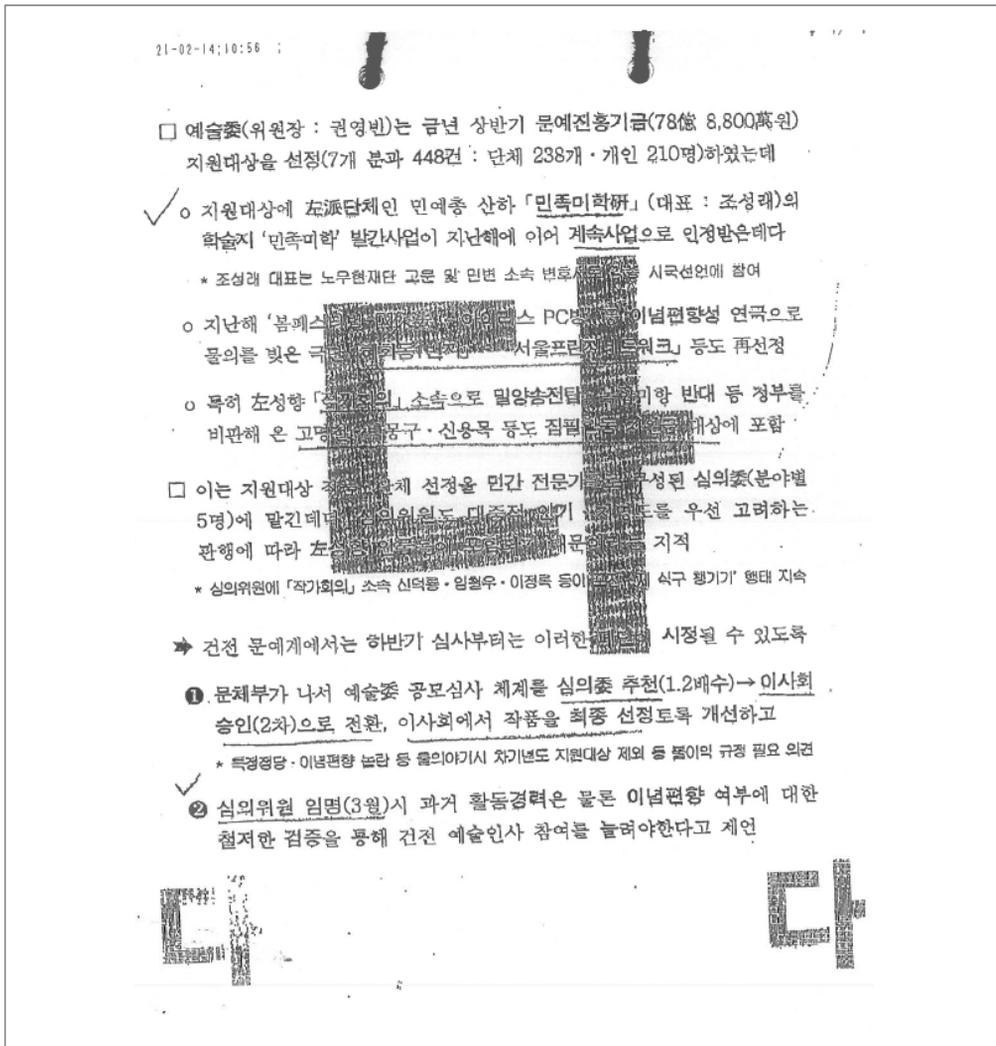
김기춘은 그 무렵 위 문건을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전달하며 “진보단체 좌파 쪽에 보조

13)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문

14) 국정원 개혁위원회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2017. 10. 30.)

15)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4) ‘문예기금 운용기관의 보조금 지원기준 보완 필요 의견’과 같은 문건으로 판단됨.

금이 편향되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모철민은 이러한 지시를 문체부에 전달하였다. 이에 문체부 장관 유진룡은 2014. 2. 21.경 우수 도서 심사·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구성시 이념 편향적 인사 배제’, ‘도서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 강화(이념편향 도서 제외 명시 등)’를 향후 조치 계획으로 세우고, 예술위 문예진흥기금과 관련하여 ‘이념편향, 반정부행위 관여자’를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토록 관리’한다는 향후 조치계획을 세우는 내용의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이라는 문건을 김기춘에게 건네며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고, 이에 김기춘은 유진룡 장관에게 ‘잘 하라’고 지시하였다.



## (6)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국정원은 2014. 3. 19.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 하의 청와대 보고서에서 문예기금 선정기관에서 좌성향 인물 배제,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한 자금줄 차단 등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문체부 등을 통해 실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기준점을 제시하였다. 당시 국정원 지휘부도 위 내용을 보고받고 호평하였다. 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16)</sup>

<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現況 및 고려사항' 보고서(2014.3.19) 주요 내용 >

- 문예계의 좌성향 세력 근절 미흡 원인으로
  - √ 문예계의 근본적 사회 비판성
  - √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자금줄 마련
  - √ 보조금 확보 목적으로 단체명 변경 및 신규 단체 설립으로 좌 이미지 감추기 시도
  - √ 한예종 좌성향 교수들의 이념 편향적 교육 등을 지적하고
- 분야별 단체·인물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
  - √ 문체부는
    - 예술위 등 문예기금 지원기관을 포함한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주요보직에 좌성향 인물이 배치되지 않도록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며, 특히 예술위·영진위 등 자금지원 기관에 잔존하는 좌성향 실무진 청산 병행
    - 문제단체·인물에 대한 기사 등을 통해 비리·부조리 관련 증거를 확보해 자발적 사임을 유도하고, 익기만료시 연임 차단
    - 한예종의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에 연구실적 등이 부진한 교수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 이념 편향적 교수 퇴출방안 확보
  - √ 민간단체의 경우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대북연동을 일삼는 싸구려 좌파는 철저히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시켜 고립·고사시키고 중도성향 세력은 적극 포용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

언론·인터넷을 통한 좌성향 문예인들의 이념·정치적 활동에 대한 비판 여론을 집중 부각, 국민적 거부감 확산 및 순수예술 지향 풍토 조성

좌성향 문예계에 대항할 수 있는 건전문예단체(차세대 문화인연대 등) 중심으로 각종 자금을 배정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이 우파 전향 유도

16) 국정원 개혁위원회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2017. 10. 30.)

## 마.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국정원은 2014. 3. 19.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 하의 청와대 보고서를 통해 대표자 경력 및 활동(정부비판 작품저술, 시국선언, 야당 인사지지 등) 등에 따라 소위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 단체 15개, 인물 249명을 열거·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근절 미흡 원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문제 인물에 대해서는 활동 전력, 영향력에 따라 249명을 A급(24명), B급(79명), C급(146명)으로 분류하였다.

## 바. 국정원을 통한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

### (1) 문체부가 국정원에 ‘인물 검증’을 협조요청한 경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2014. 2. 21. 문체부로부터 예술위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을 보고받으며, 국정원의 보고를 토대로 좌성향 인물·단체가 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고, 문체부 장관 유진룡에게 “문체부 예산과 기금이 좌파세력에게 흘러들어가고 있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만큼 국정원과 협의해 정체성을 검증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문체부 장관 유진룡은 위와 같은 지시를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국정원 국익정보국 대공5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 조OO에게 문체부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신청자들의 이념적인 성향을 국정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와 같은 요청은 국정원 내부보고 체계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2차장, 국정원장에게 순차로 보고되었고,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문체부의 요청사항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체부는 2014. 2. 22.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과 여부는 경찰, 이적단체 가입 등 정체성 검증은 국정원에 의존할 수 없다”며 국정원에 이념편향성 인물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국정원에 검증을 요청하게 되었다.<sup>17)</sup>

또, 문체부 제1차관 박민권은 2015. 4.경 문체부 담당 I/O 김OO에게 “비서실장 이병기가 정무수석실은 스크린 능력이 안 되니 국정원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하며 국정원에 협조를 지속 요청하였다.

17) 국정원 개혁위원회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2017. 10. 30.)

## (2) 국정원의 '인물 검증' 절차

국익정보국 공안5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는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하여, 문체부 담당자로부터 문체부의 각종 지원사업 신청자나 포상자 또는 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문서 또는 이메일(초기에는 외부유출에 대비하여 종이 문서 형태로 명단을 받다가 이메일로 전환함)로 받아 이를 국익정보국장 T에게 보고한 다음 국익전략실 안보5처 소속 직원에게 인계하고, 안보5처 소속 직원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명단을 3차장 산하 과학정보국 및 2차장 산하 수사국에 건네주고, 과학정보국 및 수사국에서는 위 신청자 등의 성향을 대상자의 시국선언 참여, 국보법 위반 전과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빈도, 가담정도 등 고려, 경미 특이자 배제)으로 검증하였다. 위와 같이 지원 배제 여부를 결정한 자료를 안보5처에 전달해주면, 안보4처에서는 배제 사유와 배제 명단을 보고서로 작성한 다음 2차장 최OO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2차장 최OO는 위 보고서에 기재된 부적격자들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지원 사업이나 심의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할 것을 승인한 다음 이를 문체부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고, 위 안보5처 직원은 위와 같이 2차장 최OO의 결제를 받아 배제명단만을 위 문체부 담당 I/O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문체부 담당 I/O는 이를 다시 문체부 예술정책관 산하 예술정책과 소속 공무원 오OO 등에게 구두로 통보해주었다.

국정원은 검증내용 유출시 시비 소지에 대비하여 검증결과를 구두로 통보하였고, 협력창구를 문체부 장관과 국정원 I/O로 일원화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였다(2014. 8. '문체부, 당원에 각종 현안 관련 검증 요청 방침' 및 2014. 9. '문체부 원에 문화융성위 분과위원 정체성 검증 요청' 제하 보고서). 2015. 9.부터는 국정감사에서 문예기금 지원자 선정시 사전사찰 문제가 제기되자 문체부와의 연락창구를 문체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오OO과 국정원 I/O로 일원화하고, 이메일로 받던 문체부 요청자료를 문취편으로 전달받는 등 보안을 강화하였다.

## (3) 국정원의 '인물검증'을 통한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국정원은 2014. 2. ~ 2016. 9.간 문체부로부터 약 8,500여명의 인물검증요청을 받아 민주당, 구 통진당 당원, 정부비판·시국선언 참여,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등 348명을 '문제인물'로 선별하여 통보하였다.

연도	요청인원수(명)	통보인원수(명)
2014년	1,400	102
2015년	3,700	177
2016년	3,400	69
<b>총 통보인원수(명)</b>		<b>348</b>

위 인원수는 전체 실적취합을 위해 종합분석국이 작성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문체부 담당 국정원 I/O는 외부 유출에 대비하여 선별된 명단을 전화로 불러주고 별도로 문서자료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선별·통보 대상자 실명이 모두 기재된 자료는 국정원 내부에는 보존되어 있지 않다. 다만 특정 인물을 선별·통보하는 과정에서 지휘부 보고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국정원 내 잔존 보고서와 문체부 블랙리스트 명단 등을 종합하면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348명 중 181명의 실명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문체부 공무원들은 각 소관부서별로 위 지원배제 명단에 포함된 개인명·단체명을 비롯하여 그 후 청와대 문체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전화연락 등을 통해 수시로 문체부에 전달한 지원배제 개인명·단체명,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에서 정부의 기금지원 등을 문제 삼은 개인명·단체명, 문체부에서 국정원에 지원배제 여부를 검토의뢰하여 회신 받은 개인명·단체명 등을 그때그때 메모하거나 별도의 컴퓨터파일로 취합해 가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계속 업데이트하였고, 부서 상호간에 이를 공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면서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기금·예산지원, 공연장·상영관 대관 등), 각종 인선(기관장, 임원, 심사위원 등), 각종 훈·포장 등의 수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작성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기준삼아 여기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최대한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 (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사례

사업명	검토요청일	배제통보일	배제대상자	기타
지역문화재단	2013. 10.경		① 인천문화재단 : 민예총 출신 강광 임명 → 낙하산 서울문화재단 ② 김정현 이사장 및 전교조, 참여연대 등 5명 이사 포진 ③ 윤한솔(국보법 폐지 연극 연출가) 2회 선정(6,000만 원 지원)	국정원 자료였던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 문건의 내용 요약하여 기재한 것

사업명	검토요청일	배제통보일	배제대상자	기타
			광주문화재단 ④ 월북 음악가 정율성 추모음악제 ⑤ 흥성담 활동 중인 광주민예총 지원 부산문화재단 : 예술공연 지원센터 개설하여 좌편향 단체 후원 확대	
2014 책임심의위원	2014. 3.		(1차) - 문학 : 황현산(45), 방민호(65), 신덕룡(55), 김사인(56), 최수철(58), 정끝별(64), 나희덕(66), 방현성(방재석, 61 - 제주해군기지반대, 국보법폐지 등), 김OO(68, 민노당원, 진보신당 홍보대사) 시각예술 : 김OO(민노당지지, 시국선언) - 연극 : 차근호(노무현스토리 제작비 모금, 시국선언), 안치운 (전교조해직교사 철회촉구, 김상곤지지) - 무용 : 백영태(시국선언), 김외곤(상명대 영화영상 조교수 - 소고기협정폐기촉구, 대운하 반대) - 음악 : 민경찬(적기가논란) - 전통예술 : 류형선(문익환방북 헌정) (2차) - 문학 : 서영채(61), 임철우(54, 시국선언, 촛불시위), 정호승(50, 노무현시민학교 강좌, 국정원국기문란비판 성명, 미국규탄성명)	
아르코문학 창작기금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이 국정원과 청와대로부터 배제명단을 회신 받아 오 OO에게 알려주었고, 청와대로 보내 최종적으로 배제여

사업명	검토요청일	배제통보일	배제대상자	기타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2015. 10. 6.	2015. 10. 8.	X	부를 확인받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온 명단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
문화창조융합벨트 융복합공영장 개관 공연페스티벌	2015. 10. 6.	2015. 11. 2.	김준(한국멀티미디어음악학회), 박종우(청소년전문극단진동), 천재현((사)정가악회), 김제민(M), 이승효(페스티벌봄)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지원	2015. 10. 13.	2015. 11. 4.	임민욱(설치미술가)	
예술인활동증명	2015. 10. 20.	2015. 10. 26.	한상정(만화, 상지대학교수), 정준모(미술), 강용석(사진, 백제대학교수), 손정우(영화, 시나리오작가조합)	
국어심의회 위원		2015. 10. 20.	최경봉(원광대 교수)	
아르코주목할만한 작가상	2015. 11. 12.	2015. 12. 7.	한용국, 신용목, 김성규, 황인찬, 백가흠, 손흥규, 조혜진, 황정은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2015. 11. 15.	2015. 12. 7.	김학원	
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풀	2015. 12. 2.	2016. 2. 23.	문학 : 안현미, 박범심, 은희경, 강은교, 이문재, 이승하, 복효근, 나희덕, 이명재, 임영천, 홍정선, 구모룡, 정홍수, 유성호, 김형중 음악 : 이건용 문화일반 : 최재봉	심사위원으로 활용하지 않음.
연출가 고선웅	2015. 12. 8.		양해됨	
차세대인력육성(문학)	2015. 12. 10.	2015. 12. 14.	X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1차)	2015. 12. 11.	2016. 4. 4.	홍정선, 정영효, 김재연, 이시규(평화미술협회), 김정오(화성 열린문화터)	김재연, 이시규, 김정오는 국정원으로부터 배제화신을 받기 전에 이미 심사에서 탈락하였던 사람들이고, 홍정선은 청와대에 양해요청을 하여 지원하게 되었음.
사회예술강사(복지	2015. 12.	인원과다로	X	

사업명	검토요청일	배제통보일	배제대상자	기타
기관)선발	중순	확인 불가		
인문정신문화특위 후보자	2015. 12. 23.	2016. 1. 7.	X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2015. 12. 29.	2016. 5. 23.	이훈희, 천재현, 양진성, 홍성덕	국정원에서 통보가 너무 늦게 옴.
(해외홍보원)전시작가 2명 의뢰	2016. 1. 7.	2016. 1. 7.	X	
지역대표공연 예술제	2016. 1. 8.	X	X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 위원	2016. 1. 11.	2016. 1. 12.	최영렬(정치활동)	
패럴림픽감독단 구성	2016. 1. 13.	2016. 1. 중순		
패럴림픽감독단 구성	2016. 2. 4.	2016. 2. 4.		
패럴림픽개폐회식 부문별감독	2016. 4. 20.	2016. 4. 20.		
패럴림픽개폐회식 부문별감독	2016. 4. 27.	2016. 4. 27.	X	
패럴림픽개폐회식 미술감독 후보	2016. 5. 23.	2016. 5. 23.		
패럴림픽개폐회식 미술감독 후보 추가	2016. 5. 30.	2016. 5. 30.		
패럴림픽개폐회식 미술감독 후보 추가	2016. 6. 10.	2016. 6. 10.		
아시아문화원 간부진	2016. 1. 19.	2016. 1. 27.	김OO : 민주통합당, 임수경 방북지지, 노무현추모공연기획, 친노, 남편 한겨레 활동 등 박영택 : 경향, 미디어오늘 등 필진활동, 홍성담의 그림 옹호, 박정희시대 비판 등 성무량 : 2009소고기반대 시국선언 1건 조현중 : 광주사태 연루, 복원됨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2016. 1. 20.	2016. 4. 4.	연극 : 선아트 컴퍼니(김명곤, (사)전문예술극단예인방(김진호), 엠제이플래닛(오준석), 큰틀 문화예술센터(전민규), 극단다 (DA)(임세륜) 음악 : 예술기획파홀로(백형기),	국정원에서 통보가 너무 늦게 옴.

사업명	검토요청일	배제통보일	배제대상자	기타
			김선국제오페라단(김진) 전통예술 : 두들쟁이타래 (박관우) 다원예술 : 숨엔터테인먼트 (유수훈), (즈)인비트윈 아트매니지먼트(이승호)	
소외계층 순회사업 일반공모	2016. 1. 21.	2016. 5. 23.	연극 : 극단완자무늬(김태수), 극단 현장(고능석), 큰들문화 센터(전민규) 문학 : 섬문화연구소(박상건), 창작21작가회(문창길), 작가 놀이단(이재복), 청소년문화연대키킥(정진화) 다원 : 종이로만든배(하일호)	국정원에서 통보가 너무 늦게 옴.
2016년 정기대관	2016. 1. 21.	2016. 4. 4.	극단허리(유준식), 극단 작은 신화(최용훈), 서울연극협회 (박장열), 극단 놀땅(최진아), 블루바이씨클프로덕션(김준삼), 극단 대학로극장(이우천), 예술집단 페페(백훈기)	박장열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지원받지 못함. (국정원에서 통보가 너무 늦게 온 것으로 보임 - 발표일 2016. 2. 초순경)
공연예술행사지원	2016. 2. 2.		김민(서울국제음악제조직위) : 윤이상재단이사 이동신(고양방송예술인협회) : 문재인특보 양진성(임실필봉농악보존회) : 공안정부규탄시국선언 양영두 의원 : 소총사선문화재전위원회	국정원에서 통보가 너무 늦게 옴.
(국제문화과)전시 관련 2명 의뢰	2016. 2. 2.		X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지원	2016. 2. 17.	2016. 2. 17.	X	
융합벨트아카데미 강사	2016. 2. 12.	2016. 2. 12.	승효상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융성위 추천	2016. 2. 23.	2016. 2. 23.	X	
동학농민혁명기념 재단 임원	2016. 2. 24.		임형진(615공동선언 등 좌활동), 고석규(역사교과서반대 등 야쪽 활동), 이종민(노무현, 문재인 전북지역공동선대위원장),	
동학농민혁명기념 재단 임원	2016. 3. 11.			

사업명	검토요청일	배제통보일	배제대상자	기타
			변주승(역사교과서 단골반대), 김현승(민변변호사, 좌파), 신순철(의심사례, 가능한 안하는 것으로)	
원로연극제사업	2016. 3. 4.		천승세	청와대에서 천승세 양해됨 (2016. 3. 7.)
시각예술 창작산실 전시지원	2016. 3. 7.	2016. 7. 7.	신현경, 이훈희, 정형탁	
2016문화의달 행사 추진위 위원	2016. 3. 17.	2016. 3. 21.	X	
기간문학단체활동 지원	2016. 3. 18.	2016. 7. 7.	한국문예창작학회(이승하)	
올림픽 개폐회식 감독단 실행연출후보자	2016. 3. 21.	2016. 3. 21.	X	
세종문화상 후보자	2016. 3. 22.		황OO(사회당 은평을 후보)	
관객참여형 프로그램(극장)	2016. 3. 24.	2016. 3. 29.	X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운영기획위원	2016. 3. 24.	2016. 3. 28.	X	
공연예술 전략적 해외진출사업	2016. 3. 30.	2016. 7. 7.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 이사 이은서	
2016 장애인문화예술향 수지원사업	2016. 3. 31.	2016. 7. 7.	극단 함께사는 세상(박연희), (사)장애여성공감(배복주), 도와지(안태성), 씨앗(성락윤), 생활그림발전소(김진열), 제주장애인야간학교(박주희)	
병영독서활성화사 업-독서코칭위원회	2016. 4. 6.	2016. 4. 7.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이OO - 정의당)	
세계 책의 날 기념 책드림콘서트 초청작가	2016. 4. 6.		연세대 교수(이명현), 영화감독 이준익, 문학작가 박시백, 소설가 천명관	
예술파출소 수행인력	2016. 4. 11.	2016. 4. 11.	X	
국립현대무용단 프랑스초청공연 '이미 아직'	2016. 4. 초		문제제기 : 시각예술 주재환 (도깨비난장주재)	예정대로 참여함
예술가의 장한	2016. 4. 20.	2016. 4. 20.	X	

사업명	검토요청일	배제통보일	배제대상자	기타
어머니상				
2016 국제교류공보사업 (2차)	2016. 4. 21.	2016. 7. 7.	미술 : (사)무빙이미지포럼 (박동현), (사)왕산(최옥영), 임흥순, 김성희 연극 : 극장씨어터제로(심철중), (사)경기인형극진흥회(서종훈), 극단드림플레이(김재엽) 전통 : 강원민예총국악협회 (최윤필)	
(도정단)작가와 함께하는 독서문학기행	2016. 4. 27.	2016. 4. 27.	인천민들레장애인야학(노경실 - 국정교과서, 각종시국선언)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2016. 5. 2.	?	김용택, 유진규	검토과정에서 사업 자체 취소되었음.
전통품물 활성화사업	2016. 5. 2.	2016. 7. 12.	품물패(성창훈), 한국전통예술단 아울(강주석), 전통예술원 '판' (안대식)	
토크콘서트 "청춘수업" 강사(1차)		2016. 5. 2.		
토크콘서트 "청춘수업" 강사(1차)		2016. 6. 23.		
토크콘서트 "청춘수업" 강사(2차)		2016. 7. 4.	연리목	
토크콘서트 "청춘수업" 강사(3차)		2016. 7. 11.		
토크콘서트 "청춘수업" 강사(4차)		2016. 8. 22.		
토크콘서트 "청춘수업" 강사(5차)		2016. 9. 22.		
창작국악극 페스티벌	2016. 5. 12.	2016. 7. 12.	희미쌍곡선 박인혜	
2016 하반기 정기대관	2016. 5. 20.	X	X	
서울아트마켓팜스 초이스	2016. 5. 20.	2016. 7. 15.	(사)정가악회 천재현	

사업명	검토요청일	배제통보일	배제대상자	기타
세계무형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2016. 5. 24.	2016. 7. 15.	(사)정가악회 천재현	
2016 인생나눔교실	2016. 5. 24.	2016. 7. 15.	남상순(수도권)	
공연예술스텝지원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	2016. 5. 30.	2016. 7. 12.	성북마을공장(배미영), 극단허리 (유준식), 극단함께사는세상 (박연희)	
공연예술스텝지원 - 공연기획 및 경영전문인력지원	2016. 5. 30.	2016. 7. 12.	장애인문화예술판(좌동엽), (사)정가학회(천재현), 사회적협동조합살판(전동일)	
현대미술과-현대카 드컬처프로젝트,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2016. 6. 21.	신형철 - 특이없음	
2016 젊은 건축가상	2016. 6. 3.		X	
2017 베니스 베엔날레미술전 한국관 예술감독	2016. 6. 7., 9.		X	
한국다문화예술협 회법인설립(정동주)		2016. 6. 10.	X	
'시시콜콜' 공모사업	2016. 6.10., 21.	2016. 6. 10., 7. 11.	(사)성장과나눔시민협의회(오준 성, 유태명, 이용진) : 정치인. 부적합 남동희망공간(유병희), 햇살나무 도서관(조차리), 구로생활연극 공작단 연상연하(송지현)	
문화예술 명예교사	2016. 6. 21.	2016. 7. 11.	장형윤(애니메이션감독), 정희성 (시인), 오동진(영화평론가), 임집택(연극연출, 국악인), 장강명(소설), 류승완(감독), 이기호(소설), 박영택 (미술평론가, 교수)	
우수상품 2차 심사위원 후보자		2016. 7. 4.	승효상	
지역전통한식문화 사업 기획감독		2016. 7. 7.	X	
세종학당파견교원 무기계약직		2016. 7. 12.	X	
미술작가장터		2016. 7. 15.	X	

사업명	검토요청일	배제통보일	배제대상자	기타
국립극단 비상임이사, 감사		2016. 7. 14.	X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2016. 7. 20.	X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장 후보		2016. 7. 21.	X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신경림, 박범신	
2016문화예술발전 유공자 포상(1차)		2016. 7. 29.	X	
현대미술관과천30 주년기념포상		2016. 7. 29.	최열	
평창문화올림픽 공공미술프로젝트	2016. 7. 8.	2016. 7. 13.	X	
커미셔너 후보자 커미셔너 후보자 참여작가	2016. 7. 26.	2016. 8. 22.	천태광	
커미셔너 후보	2016. 10. 4.	2017. 10. 4.	X	
창작뮤지컬 해외공동제작지원	2016. 7. 20.	2016. 8. 22.	박정의	
문화파출소 운영 사업	2016. 7. 21.	2016. 8. 22.	서강석	
한글문화큰잔치 문화예술행사	2016. 7. 21.	2016. 8. 4.	가극단 미래(유정숙)	
2016 커넥션-스페인/ 중국-참가자선정		2016. 9. 5.	손혜정(극단마실)	
융복합협업 프로젝트	2016. 7. 26.	2016. 8. 22.	아이디어박스(박진배), 유에프오소프트(권오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지원 사업	2016. 8. 9.	2016. 9. 5.	김인숙, 이기호, 고은태	
시각예술 글로벌기획인력 양성사업	2016. 8. 17.	2016. 9. 5.	강영민, 서평주, 김만석	
평창동계올림픽 미디어파사드		2016. 9. 22.	X	
오크리에이티브 리그 융복합콘텐츠	2016. 9. 26.	2016. 9. 28.	X	

2017. 10.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담당자 오OO은 국정원 문체부 담당 I/O 조OO·김OO에게 위 표 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직접 서류로 건네며 이들의 이념적 성향이 해당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고, 문체부 담당 I/O 조OO·김OO은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도록 구두통보하였으며, 위와 같이 구두통보된 문화예술인은 이후 사업에서도 배제대상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오OO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K는 국정원에서 검증을 받아 회신을 받았다는 의미라고도 진술하였다.<sup>18)</sup>

문체부 예술정책과 담당자 오OO은 위와 같이 국정원에서 통보받은 배제명단을 예술정책과 과장, 예술정책관, 문체부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예술위 임직원 등에게 고지하며 이들이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등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예술위 임직원 등은 국정원에서 통지한 인물들이 지원심의에서 배제되도록 해당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 대한 배제지시에 관하여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OO은 "(영진위를 통해서 위와 같은 배제를 하는 경우 그 체계나 과정의 실행 경위가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 지시받고 영진위 담당자에게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영진위에서는 대부분 수용해서 시행했습니다. 공공기관 파트너이기 때문에 문체부 방침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뒤이어 "영진위 개별 공모사업에서 지원 신청 및 내용을 국정원 및 문체부에 전달하면 이를 다시 청와대로도 전달→국정원 및 청와대는 이를 분석, 지원배제 대상작품(단체나 개인) 선별→문체부로 지원배제 지시→문체부는 영진위로 이를 하달하면, 영진위는 공모사업 심사과정을 통해 이를 관철시켜온 것"에 대해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다.<sup>19)</sup>

18) 오OO에 대한 진술조서(2017. 10.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4. 4.자 진술조서

## 사. 국정원을 통한 문체부 산하기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 (1) 한예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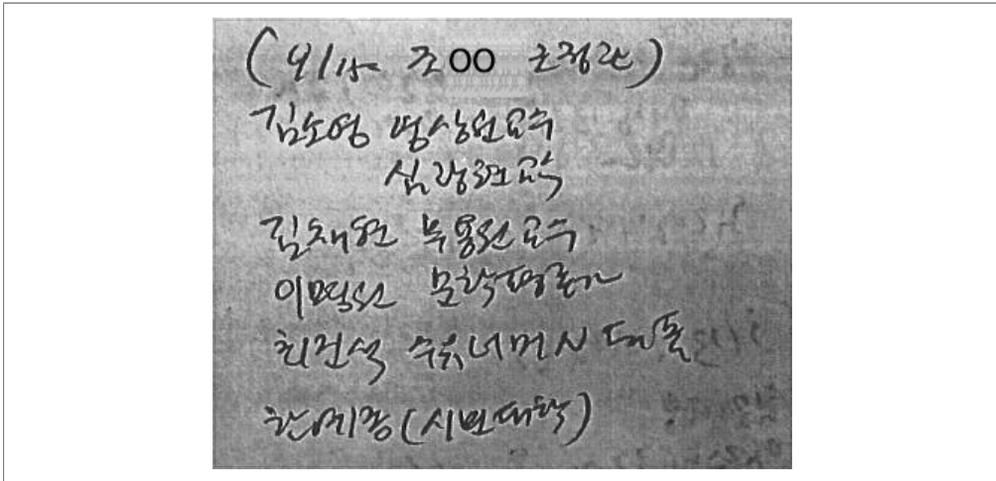
#### (가) 서론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에는 한예종 담당 I/O가 있었으나, 해당 국정원 I/O가 직접 한예종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한예종을 관할하는 문체부 제1차관을 통해 이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 (나) 2014년 한예종 서울자유시민대학 취소 압박<sup>20)</sup>

한예종은 2014. 7. 21.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서울특별시의 권역별 대학연계 시민대학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3. 9. 29. ~ 12. 12. <예술과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국정원 IO인 조OO 조정관이 2014. 9. 15. 문체부 제1차관인 김희범에게 전화를 하여 한예종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에 김소영 영상원 교수, 심광현 영상원 교수, 김채현(본명 김종원) 무용원 교수, 이명원 문학평론가, 최진석 수유너머N 대표가 참가하는데, 이들이 좌파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김희범은 한예종 사무국장 김OO을 통하거나 직접 2014년 예술과 인문학 강좌를 취소하도록 한예종 총장 김봉렬을 압박하였고, 결국 김봉렬은 한예종 교수 심광현에게 “윗선에서 갑자기 시민대학 강좌를 취소하라고 지시가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한예종은 개강일 3일 전인 2013. 9. 26. 서울특별시장(평생교육과장)에게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한예종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중 강좌운영이 어려워져 운영시기를 연기할 것’을 급하게 협조요청하여 2014년 예술과 인문학 강좌를 취소하였다.

20) 신청인 심광현에 대한 2018. 1. 11.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봉렬에 대한 2018. 3. 19.자 녹취록,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3. 12.자 전화면담결과보고,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희범에 대한 2016. 12. 31.자 진술조서,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희범에 대한 2017. 5. 22.자 녹취록,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3. 20.자 전화면담결과보고



(다) 한예종 일부 교수들에 대한 퇴출·보직에서 배제 시도<sup>21)</sup>

2013. 10.경 청와대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2013. 4. 22. ~ 2014. 11. 10.),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김OO을 통해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이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6. 8.경 후임인 C에게 인계한 「문화관련 이념문제 보고서 요약」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정원으로부터 ‘한예종 총장이 좌성향교수의 보직교수 임명에 유의하고 연구실적이 부진한 좌성향교수에 대하여는 퇴출유도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문체부에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 7. 27.경 문체부 제1차관으로 취임한 김희범은 한예종 총장 김봉렬에게 위와 같은 청와대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위 지시를 들은 김봉렬은 심광현, 김소영 등 소위 ‘좌성향’ 교수를 퇴출하라는 이야기에는 크게 반발하였으나, 심광현에게 영상이론과 학과장 보직은 주지 않았다.

## (2) 영진위

### (가) 서론

국가정보원은 영진위에 상시적인 “채널”로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을 통해 독립영화제작지원,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영화단체 지원사업 등 주요한 지원사업의 신청내역을 파악하여 ‘스크린(검열)’을 거쳐 특정 작품에 대해 “지원배제”를 요구하고 다시

21) 참고인 김봉렬에 대한 2018. 3. 19.자 녹취록

영진위의 기반조성본부장 김OO은 이를 영진위원장에게도 보고하고 협의하는 한편, 각 사업담당자(팀)에 하달하여 이와 같은 배제를 관철시켜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 (나) '건전영화'에 대한 정보보고와 관리

국정원은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에게 '친정부적', '우파적'인, 이른바 '건전영화' 목록(〈퍼스트레이디-그녀에게〉, 〈통영의 딸〉, 〈아텐만의 여명(가제)〉, 〈아, 흥남(가제)〉, 〈수요일〉, 〈청야〉, 〈신이 보낸 사람〉, 〈디 인터뷰〉 등)을 불러주며, 이러한 영화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 국정원에 정보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은 업무부서의 부장 등을 경유하지 않고 신입사원인 OOO 등에게 '건전영화'에 대한 제작 현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sup>22)</sup>

#### (다) 정부비판적 영화에 대한 정보보고와 관리

영진위 담당 국정원 I/O 배OO는 2014년경부터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에게 '대북',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편취' 등의 용어를 쓰면서 영진위 지원대상에 이런 것과 관련된 영화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영화에는 크게 보면 정부비판적이거나 좌파 성향의 작품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은 영진위 담당 국정원 I/O 배OO에게 '불온한 당신', '자백' 등의 문제가 될 것 같은 작품들을 알려주었으며, 영진위 담당 국정원 I/O 배OO는 위와 같은 소위 '문제영화'를 지원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은 사업을 진행하는 본부장이나 팀장들에게 국정원에서 이러한 요청이 왔으니 이 영화를 사업에서 배제해달라고 전했고, 영진위 위원장에게도 보고하였다.<sup>23)</sup>

영진위 국내진흥부장 문OO은 '문제영화'를 걸러내는 키워드에 대해 "정부 비판적인 내용이거나 반북, 간첩, 공권력에 저항하는 등의 해당 시기 시국 사건과 연관된 키워드가 발견되면 배제 일순위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sup>24)</sup> 2015. 당시 영진위 창작지원팀장 구OO은 "당시 접수내역을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에게 제출하고 나서, 사후에

22)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7. 11. 23.자 진술청취보고, 참고인 OOO에 대한 2018. 1. 22.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3. 6.자 진술조서

2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의 증거 중 김OO이 작성한 2017. 1. 5.자 진술서

24) 참고인 문OO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김OO 본부장이 위와 같이 ‘세월호’나 ‘국정원 비판’을 다룬 영화들의 특정 작품에 대한 접수 서류를 요구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sup>25)</sup> 특히 국정원은 ‘국가원수나 국가에 대한 편취’, ‘대공’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민감하였다.<sup>26)</sup>

2014년 독립영화제작지원을 담당하였던 영진위 국내진흥부 나OO은 “통상 김OO 본부장이 지원사업 신청 접수 리스트를 다 받아 왔는데 13년 까지는 특별히 배제 또는 지시 관련해서 언급을 한바가 없고, 14년 이후 리스트 목록이 넘어 가면 김OO 본부장이 사업 담당자보다 영화 소재 뿐 아니라 영화 제작자 또는 감독의 성향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리스트 검증을 하는 듯 하였습니다. 해당 리스트 목록인에 대한 시위 참여 경력, 소속 단체, 정치적 성향 등 영화정보 외에 다른 정부가 파악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영화진흥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sup>27)</sup>

다양성영화개봉지원 등을 담당하였던 다양성진흥팀장 김OO 또한 “(2015년 다양성영화개봉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김OO) 기반조성본부장이 저에게 시놉시스를 국정원에게 보내주라고 하여 (메일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그 시놉시스와 접수현황 등을 보고 배제 작품에 대해 압박한 사실에 대해 (저에게 연락을 해온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sup>28)</sup>

위 나OO의 후임으로 독립영화제작지원,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등을 담당한 이OO는 “사업 신청접수가 끝나면 문자로 몇 편 접수되었다고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2016년부터 매번 보고 때마다 ‘김OO 본부장과 상의해서 진행하세요’라는 답장을 받았다. 그 때부터 김OO 본부장에게 목록을 제출했다. 사실 다른 부서와 본부장과 상의를 하는 것도 이상하고 사업목록을 가져갈 이유도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sup>29)</sup>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은 “2013년 하반기[김기춘 비서실장(2013. 8.~2015. 2.) 시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함]부터 국정원 I/O 배OO로부터 위에서 언급된 영화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지원사업 접수한 것들 중에 제목과 시놉시스를 함께 보고 선별하였다.”, “해당부서에 위에 말한 기준을 주고 문제가 될 만한 작품을 걸러내라고 지시하였다”, “[선별된 문제작품들은] 국정원에 유선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30)</sup>

25) 참고인 구OO에 대한 2018. 4. 12.자 진술조서

26)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2. 27.자 진술조서

27) 참고인 나OO에 대한 2018. 2. 13.자 진술조서

28)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3. 8.자 진술조서

29)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7. 12. 8.자 진술조서

30)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7. 12. 18.자 진술조서

## (라) 정부비판적 영화에 대한 배제지시

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의 증거 중 이OO의 진술조서(2017. 1. 5.)에는 “매해 공모하는 영진위 지원사업(독립영화제작지원, 예술영화제작지원, 다양성영화 배급사업 등)에 작품 리스트와 영화 개요를 신OO 행정관에게 보내주면 신OO 행정관이 정부 비판적이거나 좌파 성향을 띠는 작품을 지원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고 그러면 이를 영진위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영진위는 친소관계가 있는 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하여 지원에서 배제한 일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sup>31)</sup>

② 영진위 창작지원팀 이OO는 김OO 본부장이 (배제해야 할 작품들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한 것은 없는데 정황상 알 수 있는 것들은 있었습니다. 이전 진술에서 말한 바와 같이 김OO 본부장이 때로 특정 작품에 대해서 시놉시스나 제작계획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적들이 있어서 무엇을 떨어뜨려야 하는 작품이구나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특정작품들은) 잘 기억은 나지 않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이유는 작품이 하나이면 딱 기억이 날 텐데 워낙 사업들마다 물어오는 작품이 서, 너 개 정도로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sup>32)</sup>

③ 영진위 국내진흥부장 문OO은 “먼저 영진위 내부에서 신청 접수 목록이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에게 보고가 되고 이를 짐작상 국정원에 보고를 하면 배제 여부에 대한 지시가 저에게 다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사후에 문체부에서 관련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지원 배제 또는 배급 및 상영 방해 등의 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안함 프로젝트, 자가당착, 다이빙벨 등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sup>33)</sup>

3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의 증거 중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7. 1. 5.자 진술조서

32)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22.자 진술조서

33) 참고인 문OO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 (마) 구체적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사례

## 1)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사업공고시기	배제작품, 배제단체	국정원의 배제지시	영진위의 배제실행
2013. 3.	모래가 흐르는 강, 시네마달, <sup>34)</sup>	국정원에서 영화 내용을 스크린하고 영진위 담당 국정원 I/O가 김OO 본 부장을 통해서 배제지시를 함 <sup>35)</sup> .	문OO이 심사위원에게 부담이 되는 영화는 배제해달라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함 <sup>36)</sup> .
2014. 4.	구름비 바람이 분다 <sup>37)</sup>	국정원에서 영화 내용을 스크린하고 영진위 담당 국정원 I/O가 김OO 본 부장을 통해서 배제지시를 함 <sup>38)</sup> .	문OO이 심사위원에게 부담이 되는 영화는 배제해달라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함 <sup>39)</sup> .
2014. 8.	그림자들의 섬 <sup>40)</sup>	국정원에서 영화 내용을 스크린하고 영진위 담당 국정원 I/O가 김OO 본 부장을 통해서 배제지시를 함 <sup>41)</sup> .	문OO이 심사위원에게 부담이 되는 영화는 배제해달라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함 <sup>42)</sup> .
2015. 5.	불안한 외출 <sup>43)</sup>	국가보안법에 관한 내용이라 김OO 본부장을 통해서 배제지시를 함 <sup>44)</sup> . 「영진위의 다양성영화 지원예산작 엄선 필요(2015. 9. 16.)」를 보면 “차세대문화연대’ 등 건전 영화단체들은”, “상반기 지원대상 작품(10편)에 노동운동을 선동하는 ‘위로공단’, 재일 「조선학교」(조총련계열)를 부각시킨 ‘올보 권투부’ 등이 선정된 바 있고” 등 당시 선정작품들에 대하여 문제제기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2015. 8.	그림자들의 섬, 소년, 달리다, 산다 <sup>45)</sup>	국정원의 「영진위의 다양성영화 지원 예산작 엄선 필요(2015. 9. 16.)」제하의 문서에는 “건전영화계에서는 영화진흥위의 독립·다큐영화 개봉지원을 위한 ‘하반기 다양성영화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비·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3,000만원, 1편지원) 대상작 발표(10월초)를 앞두고”, “응모작 중(총 43편) 가운데 사실 왜곡·정부비판 내용의 영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심사과정에서 걸러내야 한다는 여론 제기”, “(관련 작품들로) 산다 : KT 민영화에 따른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 부각, 그림자들의 섬 : 한진중공업 고공농성 파업 주동자 미화 내용, 소년, 달리다 : 국보법 위반사범 주도 공동체 ‘마포 성미산마을’ 홍보(대표	김OO 팀장이 직접 심사위원들에게 연락 <sup>47)</sup>

사업공고시기	배제작품, 배제단체	국정원의 배제지시	영진위의 배제실행
		<p>강대원)를 지적하고, “(건전영화단체들은) 이번 예비심사 위원(5명)에 좌파 성향 감독 김명화(송두율 미화 ‘경계도시2’ 제작)가 포함, 영화제 수상경력을 내세운 문제작 ‘끼워넣기’ 행태가 되풀이될 소지가 크다며”, “독립·다큐 영화계에 만연해 온 「비판영화 제작→영화제 수상→정부지원 획득」이라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 “ 문체부는 영진위에 지원대상 편수를 줄이더라도 비판성향 작품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강력 주문, 독립·다큐 영화계 건전화 도모” 등이 기재되어 있음.</p> <p>국정원 문서 중 「영진위, ‘다양성영화 지원’ 대상에서 비판영화 배제 조치 (2015. 9. 24.)」에는 “독립·다큐 영화 지원(1인당 3,000만원) 대상 작품 (10편) 선정 예비심사위(9. 11.~22 예비심사, 10월초 9인위 최종 결정)를 통해 &lt;산다&gt;·&lt;그림자들의 섬&gt;·&lt;소년, 달리다&gt; 등 사실왜곡·이념 작품은 모두 배제” 등이 기재되어 있다.</p> <p>문화부로부터 배제 요청이 있었던 작품<sup>46)</sup></p>	
2016. 4.	그림자들의 섬, 불온한 당신, 소년 달리다, 산다 <sup>48)</sup>		김OO 본부장이 X표시하여 이OO에게 알려줌 <sup>49)</sup>
2016. 8.	TwentyTwo, 자백, 그림자들의 섬, 불온한 당신, 소년 달리다, 산다 <sup>50)</sup>	<p>자백 : 시놉시스에 국정원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서 문제가 됨</p> <p>불온한 당신 : 간첩사건을 다루고 국가정보원을 언급하면서 정부기관을 폄훼하는 영화로 포함된다고 알고 당시 국정원 보고에 포함.<sup>51)</sup></p>	본부장이 OOO, OOO, OOO에게 연락함. <sup>52)</sup>

34) 참고인 문OO에 대한 2018. 4. 6.자 전화통화결과보고

35) 참고인 문OO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36) 참고인 문OO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37) 참고인 문OO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38) 참고인 문OO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39) 참고인 문OO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 2) '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

사업공고시기	배제작품, 배제단체	국정원의 배제지시	영진위의 배제실행
2013년 하반기	빛, 시네마달 <sup>53)</sup>		
2014년 상반기	빛 <sup>54)</sup>	국정원에서 영화 내용을 스크린하고 영진위 담당 국정원 I/O가 김OO 본 부장을 통해서 배제지시를 함 <sup>55)</sup> .	다큐의 경우 통상적으로 국정원이 제시한 키워드를 대조해서 스크린을 해서 국정원에 주기도 함 2014년부터 좀 더 외압의 강도가 세지면서 다큐는 별도로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심사위원 구성도 별도로 하고 숙박심사만 진행. 이러한 방식은 영진위 내부 가이드라인. 심사위원 선정 <sup>56)</sup>
2014년 하반기	명령불복종 교사, 투 워스 <sup>57)</sup>	국정원과 스크린 과정 <sup>58)</sup>	심사위원에게 이야기 <sup>59)</sup>
2015년 상반기	엄마가 팽목항으로 올 때면 난 엄마보다 먼저 <sup>60)</sup>		
2015년 하반기	두 개의 문 <sup>261)</sup> , 할매꽃2, 시읽는 시간, 언더그라운드 <sup>62)</sup>		

40) 참고인 문OO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41) 참고인 문OO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42) 참고인 문OO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43)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3. 6.자 진술조서

44)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3. 6.자 진술조서

45) 참고인 이OO이 2018. 2. 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5(하) 접수표」

46)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3. 6.자 진술조서

47)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17.자 진술조서

48)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17.자 진술조서

49)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17.자 진술조서

50)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17.자 진술조서

51)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7. 12. 18.자 진술조서

52)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17.자 진술조서

53) 참고인 문OO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 3) '2015년 영화단체 지원사업'

① 영진위는 2015. 5.경 영화 관련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 영화단체 지원사업'을 공고하였다.

② 2018. 1. 19.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공(열람 및 재정리)받은 「영화진흥위, 비판 영화단체 예산지원 배제계획(2015. 7. 13.)」에는 “7월말 영화단체 지원사업(5억여원, 76개 단체 신청) 지원단체 최종 선정 시 ‘영화제작가협회’(회장 : 이은 명필름) 등 정치·이념 편향 단체는 배제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영진위 다양성진흥팀 소속 000은 “이야기가 나온 거는 영화제작가협회였는데 실제로 저희 공모나 심사규정상 심사를 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략의 가이드라인 안에 3회 이상 행사를 진행했던 단체를 줘야되는 거라서 사실은 여기는 2회였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심사위원 선정을] 무작위로 해서 들어올 경우에 이게 대중영화제를 빠자는 의견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영화인총연합회에 계신 분들이 영진위에 와서 하실 행태들과 그런게 사전에 저희들은 예측이 되었던 거라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좀 컸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sup>63)</sup>

그러나 이후 영진위 다양성진흥팀 소속 000은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 영진위 내에서 영화제작가협회 신청 건에 대해 사전에 상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작가협회 사업은 작은 규모의 조직도 아니고 상징성있는 사업에 대해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문체부는 그렇게 지원하는 것에서 반대를 할 것이고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작가협회의 신청사업의 경우 3회 이상 시행된 사업이 아니어서 우리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김OO 본부장 말하는

54) 참고인 문OO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55) 참고인 문OO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56) 참고인 문OO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57) 참고인 나OO에 대한 2018. 2. 2.자 진술조서

58)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4. 4.자 진술조서

59) 참고인 나OO에 대한 2018. 2. 2.자 진술조서

60) 참고인 나OO에 대한 2018. 2. 2.자 진술조서

61) 참고인 문OO에 대한 2018. 1. 29.자 진술조서

62)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1. 22.자 진술조서

63) 참고인 000에 대한 2017. 12. 14.자 녹취록

성향 상 어디를 배제해야 한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고 그가 ‘영화제작가협회, 여기 들어가면 힘든데?’라고 하길래 저는 그거와 상관 없이 우리 가이드라인 때문에 지원하기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라 하고, 다만 “이런(배제) 계획이 있었건 없었건 저희로서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지원을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어쩌면 문체부 입장에서는 배제계획이 있거나 또는 없었다하더라도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탈락 대상이 편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000은 위에서 언급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에 대해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 2018. 2. 6. 답변한 바, “자료를 탐색하여 보았으나 문서로 기재된 내부가이드라인은 없음이 확인된다”고 하였다.<sup>64)</sup> 영진위의 「2015년 영화단체사업지원(공모) 심사자료」(2015. 7.)의 “2015년 단체사업 심사 기본 가이드라인”에서도 000이 언급한 ‘가이드라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다양성진흥팀장 김00는 “제 기억으로는 3회 미만 개최된 사업은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담당자와 위와 같은 3회 미만 개최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일 그와 같은 규정 등이 없었다면 그와 같이 배제 명분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sup>65)</sup>

#### 4) <철의 여인> 상영 방해

2018. 1. 19.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열람 및 재정리한 「대통령님 비하 독립영화 <철의 여인> 개봉차단 추진」을 보면, “정부 비판성향 영화 제작사인 곡사의 김곡, 김선 감독은 최근 대통령님 펴헤 내용 독립영화 ‘철의 여인(상영시간:30분)’의 극장 개봉을 추진” 중인데, “폭력·선정성 등에 관한 사전심사(3. 28.)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5단계 중 4등급)을 받았으며, 현재로서는 최종 심사 시 번복 가능성은 낮다는 여론”인데, “영등위 심사(4. 18.)를 앞두고 좌파의 노이즈마케팅 및 이슈화 빌미 만들어가기 말려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① 청와대 교문수석실과 문체부에 관련 사실 통보. 상영등급제한 방안 및 상영 시 법적 대응 등 조치 강구”, “② 영화계 건전 인사 및 여성단체 등 통해 영등위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리도록 적극적 압박활동 전개토록 유도” 등의 방침이 기재되어 있다.

64) 참고인 000에 대한 2018. 2. 2.자 진술조서

65) 참고인 김00에 대한 2018. 3. 8.자 진술조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검색에 의하면 이 영화는 2013. 4. 10.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 5) <자가당착> 상영 방해

국정원 문서 중 「문체부, 독립영화협회 ‘청와대 비판’ 영화 상영계획 취소(2015. 1. 21.)」에는 “문체부는 1. 21. 독립영화협회 대통령님 편휘 영화 ‘자가당착’ 등의 상영 계획을 취소토록 조치하고,” “영진위에 ‘등급미분류’ 영화 상영계획 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김세훈 위원장 경위서 제출·담당자 징계 등을 지시” 등이 기재되어 있다.

#### 6) <귀향> 상영 방해

국정원 문서 중 「문체부, 위안부 영화 ‘귀향’ 개봉관 최소화 조치」(2016. 2. 16.) 제하의 문서에는 “2. 15. 영진위에 영화 ‘귀향’ 개봉(2. 2.4.)과 관련 ‘인디플러스’ 등 정부 산하 영화관에서 상영을 금지하고, 일반극장 개봉관 확보가 최소화되도록 지시” 라고 기재되어 있다.

#### 7) <송환>, <레드헌터> 상영 방해

2015. 예술영화유통배급지원을 담당한 000은, “부산 ‘영화의 전당’이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를 개관, 개관 영화제를 개최하는 데 상영작으로 <송환>과 <레드헌터>가 상영예정이었었는데 김00 본부장이 상영이 부담스럽다고 뺄 것을 지시하여서 영화의 전당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이 영화를 빼는 대신 독립영화 컨셉을 대중적 영화로 변경하여 영화제를 열었다.”라고 진술하였다.<sup>66)</sup>

부산 ‘영화의전당’ 시네마떼끄 팀장 이00은 “2016. 3.경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확정을 받고, ‘영화의전당’의 공간을 개·보수하여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를 개관, 개관영화제를 준비하였다. 당시 부산지역 영화평론가협회의 도움을 받아 ‘한국독립영화 10BEST’를 선정 추진하였으나 당시 영진위 다양성진흥팀장 및 000으로부터 영화 <레드헌터>, <송환> 등이 포함되어 ‘이와 같은 영화들을 상영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요구를 들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상영 리스

66) 참고인 000에 대한 2017. 11. 23.자 진술청취보고

트를 수정하여 위 영화제를 개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sup>67)</sup>

#### 아. 사기업 CJ에 대한 개입<sup>68)</sup>

국정원은 2013. 8. 27. ‘CJ의 좌편향 문화사업 확장 및 인물 영입 여론’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보고서를 통해 CJ그룹 계열사 CJ E&M이 제작한 영화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영화 이름	문제제기 내용
살인의 추억, 공공의 적, 도가니	공무원, 경찰을 부패하고 무능한 비리집단으로 묘사하여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입함
공동경비구역 JSA, 베를린	북한의 군인, 첩보원 등을 동지나 착한 친구로 묘사하여 증북세력을 친근한 이미지로 오도함
설국열차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사회저항 운동을 부추김
광해	前 대통령 노무현을 연상하도록 하는 등 지난 대선시 문재인 후보를 간접 지원한 의혹이 있음

그 외에도 같은 보고서에서 ① ‘좌파’ 영화감독 장진에게 ‘SNL 코리아’의 연출 및 진행을 맡겨 대통령 박근혜를 폄훼하고, ‘여의도 텔레토비’ 코너에서 박근혜를 패러디한 ‘또’를 욕설을 가장 많이 하고 안하무인인 민물로 묘사하는 등 예능채널(tvn)의 풍자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비판 시각을 조장하였다는 점, ② MBC 노조파업에 적극 가담했던 최일구·오상진 아나운서를 방송진행자로, KBS 노조파업을 지지했던 나영석 PD를 예능감독으로 기용하는 등 ‘좌파’ 세력을 영입하였다는 점, ③ 탁현민, 김어준, 표창원, 진중권과 임수경 의원,성한용 한겨레 신문 기자 등을 토론 패널로 집중 출연시켜 ‘증북좌파’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국정원은 이러한 ‘CJ 좌경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회장 이미경이 회사의 좌성향 활동을 묵인, 지원한 때문이라면서 국가정체성 훼손 등 정부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CJ 측에 시정을 강력 경고하고, 과도한 사업확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67)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4. 26.자 진술청취보고

68) 국정원 개혁위원회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2017. 10. 30.)

## 제4절 | 결론

### 1. 진상규명 사실

#### 가. 국정원에 의한 이명박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단체 지원배제

- (1) 국정원장 원세훈은 2009. 2. ~ 2013. 3. 국정원 내부에서 정권비판적 인사·단체를 ‘중복세력’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퇴출활동을 전개할 것을 반복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정권비판적 인사·단체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제기, 이들에 대한 지원배제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보고함으로써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단체 지원배제 국정기조를 수립하였다.
- (2) 국정원장 원세훈은 2009. 7.경 기획조정실장 김OO으로 하여금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국익정보국은 좌파 연예인들의 동향 및 성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익전략실이 마련한 대응방안을 실행부서인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에 전달하여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퇴출·견제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구성된 ‘좌파 연예인 대응 T/F’에서는 김제동·윤도현이 소속된 다음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유도, 지원대상·인사선임에서 정권비판적 인사·단체 배제 유도, MBC 등 방송에서 정권비판적 인사 배제 요청, 정보수집 및 배제방안마련,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심리전단 활동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다.
- (3) 구체적으로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은 ① 주요 좌파연예인 명단을 작성하고, ② 위 인물들을 ‘강성 좌파’와 ‘온건 좌파’로 나눈 뒤, ③ 강성 좌파 연예인(김미화, 김제동, 윤도현, 문성근 등)에 대해서는 출연분량 축소, 경제단체를 통해 대기업 광고 섭외 배제, 보수 언론을 통해 강성 좌파 연예인들의 비리나 부도덕한 행태를 부각시키는 등으로 견제·압박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국익전략실 2단장 최OO, 국익전략실장 신OO, 2차장과 국정원장 원세훈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에도 수시로 보고하였다.
- (4)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에서 수립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방안은 국익정보국 I/O 등을 통하여 실제로 이행되었고, 그 결과 ① 김미화 2011. 4. 25.경 MBC

방송국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라디오 프로그램 MC직 퇴직, ② 김제동·윤도현 소속 기획사 ‘다음기획’ 세무조사 시도, ③ 연기자 겸 정치인 문성근에 대한 비방·반대 글 트위터 게시·확산,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의 문성근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집회 및 1인 릴레이시위, 문성근에 대한 부적절한 합성사진 제작·유포, ④ 보수매체 ‘미디어워치’를 통한 좌성향 인물·단체 비판기사 개재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

## 나. 국정원에 의한 박근혜 정부의 특정문화예술계 인사·단체 지원배제

### (1) 국정기조 수립

국정원은 2013. 2. 25.경 대통령 박근혜가 취임한 이후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의 제도권 진입 차단을 목적으로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여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국정기조를 수립하였다.

###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방안 제언 및 실행상황 검토

국정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인물·단체에 대하여 ① 인사선임에서 배제, ② 보조금 등 지원배제, ③ 회계감사 등을 통한 퇴출, ④ 심사위원에서 배제, ⑤ 비판 여론 집중 부각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보고서로 작성한 후 지속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장 및 각 수석에게 제언하였다.

또한 국정원 국익정보국은 I/O를 통하여 문체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철저히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위 블랙리스트가 철저히 실행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속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장 및 각 수석에게 보고하였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교문수석, 정무수석 등에게 국정원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위 제언내용을 실행하고 문제제기 내용을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내용은 교문수석실 산하 문체비서관실로 전달되었으며, 문체비서관 김소영은 위 지시내용을 문체부 및 그 산하기관에 전달하여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다보니 청와대 교문수석실, 문체부

및 그 산하기관 실무자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철저하게 실행하여 국정원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3)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국정원은 2014. 3. 19. ‘문예계내 左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 하의 청와대 보고서를 통해 대표자 경력 및 활동(정부비판 작품저술, 시국선언, 야당 인사지지 등) 등에 따라 소위 ‘문화예술계 주요 左성향 문제 단체 15개, 인물 249명을 열거·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근절 미흡 원인’을 분석하였다.

### (4) 국정원을 통한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으로부터 국정원에 보조금 등 지원대상자 및 심사위원 후보자 등이 좌성향 인물·단체인지 여부를 검증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문체부 장관 유진룡은 위와 같은 지시를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김OO은 2014. 2. 22.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부터 국정원 국익정보국 대공5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 조OO에게 문체부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신청자들의 이념적인 성향을 국정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와 같은 요청은 국정원 내부 보고 체계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2차장, 국정원장에게 순차로 보고되었고,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문체부의 요청사항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인물 검증’에 관해 국정원에 협조를 지속 요청하게 되었다.

국익정보국 공안5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는 문체부 담당자로부터 문체부의 각종 지원사업 신청자나 포상자 또는 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문서 또는 이메일로 받아 이를 국익정보국장 T에게 보고한 다음 국익전략실 안보5처 소속 직원에게 인계하고, 안보5처 소속 직원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명단을 3차장 산하 과학정보국 및 2차장 산하 수사국에 건네주고, 과학정보국 및 수사국에서는 위 신청자 등의 성향을 대상자의 시국선언 참여, 국보법 위반 전과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빈도, 가담정도 등 고려, 경미 특이자 배제)으로 검증하였다. 위와 같이 지원 배제 여부를 결정한 자료를 안보5처에 전달해주면, 안보4처에서는 배제 사유와 배제 명단을 보고서로 작성한 다음 2차장 최OO에게 보고하였다. 2차장 최OO는 위 보고서에 기재된 부적격자들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지원 사업이나 심의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할 것을 승인한 다음 이를 문체부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고, 위

안보5처 직원은 위와 같이 2차장 최OO의 결제를 받아 배제명단만을 위 문체부 담당 I/O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문체부 담당 I/O는 이를 다시 문체부 예술정책관 산하 예술정책과 소속 공무원 오OO 등에게 구두로 통보해 주었다.

국정원은 2014. 2. ~ 2016. 9.간 문체부로부터 약 8,500여명의 인물검증요청을 받아 민주당, 구 통진당 당원, 정부비판·시국선언 참여,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등 348명을 ‘문제인물’로 선별하여 통보하였다. 문체부 공무원들은 각 소관부서별로 위 지원배제 명단에 포함된 개인명·단체명을 비롯하여 그 후 청와대 문체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전화연락 등을 통해 수시로 문체부에 전달한 지원배제 개인명·단체명,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에서 정부의 기금지원 등을 문제 삼은 개인명·단체명, 문체부에서 국정원에 지원배제 여부를 검토의뢰하여 회신 받은 개인명·단체명 등을 그때그때 메모하거나 별도의 컴퓨터파일로 취합해 가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계속 업데이트하였고, 부서 상호간에 이를 공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면서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기금·예산지원, 공연장·상영관 대관 등), 각종 인선(기관장, 임원, 심사위원 등), 각종 훈·포장 등의 수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작성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기준삼아 여기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최대한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 (5) 국정원을 통한 문체부 산하기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 (가) 한예종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에는 한예종 담당 I/O가 있었으나, 해당 국정원 I/O가 직접 한예종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한예종을 관할하는 문체부 제1차관을 통해 ① 정부비판적 성향의 인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2014년 한예종 서울자유시민대학 취소, ② 한예종 일부 정부비판적 성향의 교수들에 대한 퇴출·보직에서 배제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 (나) 영진위

1) 국가정보원은 영진위에 상시적인 “채널”로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을 마련하여 독립영화제작지원,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영화단체 지원사업 등 주요한 지원사업의 신청내역을 파악하여 ‘스크린(검열)’을 거쳐 특정 작품에 대해 “지원배제”를

요구하고 다시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은 이를 영진위원장에게도 보고하고 협의하는 한편, 각 사업담당자(팀)에 하달하여 이와 같은 배제를 관철시켜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 2) 국정원은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에게 ‘친정부적’, ‘우파적’인, 이른바 ‘건전영화’ 목록(〈퍼스트레이디-그녀에게〉, 〈통영의 딸〉, 〈아덴만의 여명(가제)〉, 〈아, 흥남(가제)〉, 〈수요일〉, 〈청야〉, 〈신이 보낸 사람〉, 〈디 인터뷰〉 등)을 불러주며, 이러한 영화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 국정원에 정보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은 황OO이나 주OO 등에게 ‘건전영화’에 대한 제작 현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한 후 관련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영진위 담당 국정원 I/O 배OO는 2014년경부터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에게 ‘대북’,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편취’ 등의 용어를 쓰면서 영진위 지원대상에 이런 것과 관련된 영화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영화에는 크게 보면 정부비판적이거나 좌파 성향의 작품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은 영진위 담당 국정원 I/O 배OO에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작품들을 알려주었다. 영진위 담당 국정원 I/O 배OO는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이 알려준 영화를 포함하여 정권비판적인, 소위 ‘문제영화’를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 ‘2015년 영화단체 지원사업’ 등에서 지원배제하고, 심지어는 상영 방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영진위 기반조성본부장 김OO은 사업을 진행하는 본부장이나 팀장들에게 국정원에서 이러한 요청이 왔으니 이 영화를 사업에서 배제해달라고 전했고, 영진위 위원장에게도 보고하였다. 그러면 영진위는 친소관계가 있는 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은 요청이 온 작품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 (6) 사기업 CJ에 대한 개입

국정원은 2013. 8. 27. ‘CJ의 좌편향 문화사업 확장 및 인물 영입 여론’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보고서를 통해 살인의 추억, 공공의 적, 도가니, 공동경비구역 JSA, 베를린, 설국열차, 광해 등의 작품들이 정권비판적이라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예능채널(tvn)의 ‘SNL 코리아’를 통해 정부비판 시각을 조장하고, MBC 노조파업에 적극 가담했던 최일

구·오상진 아나운서를 방송진행자로, KBS 노조파업을 지지했던 나영성 PD를 예능감독으로 기용하는 등 '좌파' 세력을 영입하고, 탁현민, 김어준, 표창원, 진중권과 임수경 의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기자 등을 토론 패널로 집중 출연시켜 '종북좌파'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국정원은 부회장 이미경이 회사의 좌성향 활동을 묵인, 지원하였기 때문에 'CJ 좌경화'가 이루어졌으므로 CJ측에 시정을 강력 경고하고, 과도한 사업확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본건은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걸쳐 장기간 이루어졌고, 국정원은 청와대·문체부·그 산하기관 등 넓은 범위의 국가기관에서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 규모와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러나 조사기한과 조사권한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청와대·문체부·그 산하기관 등에서 국정원이 수행한 역할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였다.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국정원이 문체부 산하기관에 개입한 정황 및 세분화된 문화예술 분야에 따른 개입 방식 등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진상규명 및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

# 2

## 이명박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 사건



# 2

## 이명박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 사건



###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특3(2017특3, 2017특6, 2017특11 병합)[이명박 정부의 특정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탄압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 가. 직권 조사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2008. 8. 27. 작성한 「문화권력균형화 전략」은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을 문화 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 했다. 그 방안으로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하기관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그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진두지휘하고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청산 작업을 지속 감시·독려’하는 한편, ‘좌파를 대신할 건전한 우파의 구심점을 신진세력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등 세부 방안을 수립한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부임(2008. 2. 29.) 이래 당시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과 김정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부당하게 해임되었다.

국가정보원은 2017. 9. 11. 이명박 정부 시기에 82명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소위 ‘좌파’라 규정하고 해당 업계에서 ‘퇴출’ 내지 ‘지원 배제’ 하였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 2.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

예술계 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요지다. 이에 우리 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재발방지책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행정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나. 신청 조사

### (1) 신청인 변영주의 신청 취지

신청인은 영화감독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 2006. 5.경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31명의 대중문화예술인들과 같이 당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선언에 참여하였다. 이후 2017. 9. 11. 국가정보원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에 작성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자신의 성명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문화예술인들의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이기에 블랙리스트가 생성되게 된 경위 및 이로 인한 문화예술인들의 피해내용 등을 규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2) 신청인 김미화의 신청 취지

신청인은 방송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1. 4.경 지난 8년 동안 진행해온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돌연 하차하는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부당한 처우가 있었던 터에, 2017. 9. 11.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에서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 의 조사결과, 자신을 포함한 문화 연예계 인사 82명에 대해 MB 정부에서 정부 비판세력이라는 이유로 퇴출하려 했다는 요지의 보도 내용을 보고, 자신을 포함하여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위 및 피해내용 등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3) 신청인 김상균의 신청 취지

국가정보원이 2017. 9. 11.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연예인 신해철이 82명의 퇴출 대상 문화예술인,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신해철이 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위와 이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한을 당한 경위 등을 규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 (1)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예술계 우편향을 위한 전략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물들을 '중복좌파'로 규정하고, 이들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해당 인물들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부 비판적 인물들의 활동을 억압·방해하고 친정부적 인물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공작을 전개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2)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 사례

#### 가) 문체부 산하 소속기관 기관장에 대한 강압적 교체

김정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재판을 통해 기관장 계약 해지가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황지우 한예종 총장의 교수직 박탈도 재판을 통해 교수직 박탈이 부당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나) 방송·연예 부문

방송인 김미화, 가수 신해철, 방송인 김제동이 국정원의 '좌파 연예인 대응 T/F'의 계획에 의해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하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다) 미술 부문

2007. 5.경 도라산역에서 설치된 이반 작가의 벽화가 2010. 5.에 철거되었는데, 대법원은 정부의 이반 작가의 벽화 철거는 저작권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 라) 영화 부문

이명박 정부 시기 영진위의 특정 영화 및 단체 지원 배제는 11건으로 확인되었다.

**붙임 : [이명박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특3, 이명박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 사건  
 조사신청 사건번호 2017특3, 2017특6, 2017특11 병합  
 [신청인] 변영주(2017특3), 김미화(2017특6), 김상균(2017특11)

## 제1절 | 조사 개요

### 1. 직권조사 및 신청의 취지

#### 가. 직권조사 취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은 2008. 8. 27. 문화권력균형화전략」제하의 문건 작성하여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을 문화 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 했다. 그 방안으로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하기관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그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진두지휘하고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청산 작업을 지속 감시·독려'하는 한편, '좌파를 대신할 건전한 우파의 구심점을 신진세력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등 세부 방안을 수립한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부임(2008. 2. 29.) 이래 당시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과 김정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부당하게 해임되었다.

국가정보원은 2017. 9. 11. 이명박 정부 시기에 82명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소위 '좌파'라 규정하고 해당 업계에서 '퇴출' 내지 '지원 배제' 하였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2009. 2.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요지다. 이에 본 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재발방지책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행정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나. 신청인 변영주의 신청 취지

신청인은 영화감독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 2006. 5.경 전국지방동시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531명의 대중문화예술인들과 같이 당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선언에 참

여하였다. 이후 2017. 9. 11. 국가정보원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에 작성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자신의 성명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문화예술인들의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이기에 블랙리스트가 생성되게 된 경위 및 이로 인한 작가들의 피해내용 등을 규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 신청인 김미화의 신청 취지

신청인은 방송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1. 4.경 지난 8년 동안 진행해온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돌연 하차하는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부당한 처우가 있었던 터에, 2017. 9. 11.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에서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의 조사결과, 자신을 포함한 문화 연예계 인사 82명에 대해 MB 정부에서 정부 비판세력이라는 이유로 퇴출하려 했다는 요지의 보도 내용을 보고, 자신을 포함하여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위 및 피해내용 등에 대해 규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라. 신청인 김상균의 신청 취지

국가정보원이 2017. 9. 11.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연예인 신해철이 82명의 퇴출 대상 문화예술인,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신해철이 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경위와 이로 인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한당한 경위 등을 규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 가. 조사개시의 근거

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 제3조(기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신청인 변영주(2017특3) 건에 대해서 2017. 10. 13. ▲신청인 김미화(2017특6) 건에 대해서는 2017. 10. 20. ▲신청인 김상균

(2017특11) 건에 대해서는 2017. 12. 15. 각 전원위원회를 통해 조사개시 하였다. 직권 사건인 이명박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2017직특3)에 대해서는 2017. 12. 1. 제17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조사개시 하였다.

## 나. 조사 목적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소위 ‘좌파’라 낙인찍어 부당한 방식으로 ‘지원 배제’, ‘퇴출’ 등의 탄압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났고,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문화·예술계 정책 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 위원회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경위와 이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이 입은 부당한 피해 내용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재발방지책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행정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절 | 조사 방법

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에 있어서 한정된 조사활동기간과 권한, 인력 등의 이유로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없었기에 주요 쟁점별로 지금까지 조사된 피해 내용을 정리하였고, 조사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 과제로 정리하였다.

### 1. 자료조사

[표-1] 자료 조사 목록

연번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비고
1	문화예술인 531명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레디앙	2006. 5. 23.	
2	문화미래포럼 보도자료	문화미래포럼	2006. 11. 21.	
3	「안상수 대표, “노 정권 추종세력 물러나라”」	MBC	2008. 3. 11.	
4	「안상수 원내대표 '인적청산' 발언 파문	경향신문	2008. 3. 11.	
5	유인촌 장관도 '전 정권 인사 퇴진' 압박	YTN	2008. 3. 12.	
6	좌파 코드 뽑아라 ... '문화권력 교체' 시작	중앙일보	2008. 3. 13.	

연번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비고
7	“유인촌 장관님, 문화 예술인 출신 맞나요?”	시사인	2009. 3. 16.	
8	유인촌 문화, 실명 거론 ‘사퇴 압박’…‘저격수’ 총대 땀다	한겨레신문	2008. 3. 17.	
9	「유인촌 장관 “나도 물러난 경험…당·청와대와 조율 안해”」	중앙일보	2008. 3. 17.	
10	「“김정현·김윤수 안 나가면 재임 중 일으킨 문제 공개”」	중앙일보	2008. 3. 17.	
11	유인촌 “김정현·김윤수 안 나가면 재임시 일으킨 문제 공개”	경향신문	2008. 3. 17.	
12	영화인 165명 진보신당 지지선언	레디앙	2008. 3. 31.	
13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이명박 청와대	2008. 8. 27.	
14	문화예술계 현안과 과제(사본)	문화미래포럼	2008. 9.	
15	“유인촌 장관, 그 동안 애 많이 쓰셨소” - [기고] 문화예술위 위원장 직을 떠나면서	프레시안	2008. 12. 7.	
16	계약해지무효확인 소장	김윤수	2009. 1.	
17	국립오페라합창단 ‘거리의 희망가’	한겨레신문	2009. 1. 28.	
18	「답변서, 피고 대한민국(사건 2009구합2290, 계약해지무효확인)」,	울촌	2009. 2.	
19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는 ‘명박스러운 일’	오마이뉴스	2009. 3. 24.	
20	융합 흐름 반영한 실험…학생들 ‘만족’ 높았는데	교수신문	2009. 6. 1.	
21	[시국선언] 한국작가회의의 시국선언 514명 (6월 9일)	한겨레신문	2009. 6. 10.	
22	박찬욱·봉준호 감독도 시국선언	한겨레신문	2009. 6. 17.	
23	영화인 225명, 시국선언 동참	프레시안	2009. 6. 17.	
24	연극인 1천여명 시국선언	한겨레신문	2009. 6. 25.	
25	MB의 ‘좌파 색출대’ 문화미래포럼, 넌 누구냐?	프레시안	2009. 7. 14.	
26	“좌파를 적출하라!”…문화미래포럼의 ‘한예종 죽이기’	프레시안	2009. 7. 15.	
27	원고 황재우(전 한예종 총장) 해임무효확인 소송 등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문 포함
28	원고 김정현(전 예술위원장) 해임무효확인 판결문(2008구합49513, 2010누4133, 2010두19317)	서울행정법원	2009. 12. 16.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문 포함
29	김재철, MBC 사장 공식 선임	뉴시스	2010. 2. 26.	
30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사본)	MBC 노조	2010. 3. 2.	국정원 문건
31	“김재철 사장,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 맞고 깨진 뒤 좌파 정리했다	신동아	2010. 4. 1.	

연번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비고
32	서울고등법원 2009누25066	서울고등법원	2010. 4. 8.	
33	“유인촌 장관, 반말로 지시하며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한겨레신문	2010. 4. 14.	
34	작가 몰래 철거된 도라산 벽화... “몰상식이 빛은 과잉충성”	오마이뉴스	2010. 8. 19.	
35	「한지봉 두 위원장 사태 “유인촌 장관 사과하고 물러나야”」	미디어오늘	2010. 12. 29.	
36	MBC 김미화 하차 막전막후 상황	시사인	2011. 5. 6.	
37	문화방송 노보(159호)	MBC 노조	2011. 6. 2.	
38	윤도현, MBC '2시의 데이트' 하차 통보 받아	경향신문	2011. 9. 27.	
39	김어준, MBC 라디오 '색다른 상담소' DJ 강제하차	OSEN	2011. 10. 14.	
40	서울지방법원 2011가합49085	서울지방법원	2012. 3. 20.	
41	'두드림' 송승환·신해철 “6개월간 좋은시간” 하차소감	스타뉴스	2012. 4. 29.	
42	공직윤리지원관실, MB판 '일심(一心)회' 였다	프레시안	2012. 5. 16.	
43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현실화 현황	진선미 의원실	2012. 7. 30.	
44	청와대 문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집행 결과 분석	진선미 의원실	2012. 7. 30.	
45	정청래 “靑, 좌파 문화예술인사 숙청 시도”	뉴시스	2012. 7. 23.	
46	MBC라디오 국장 “청취율 저하, DJ들과 청취자 소통 부족했다	노컷뉴스	2012. 10. 18.	
47	서울고등법원 2012나31842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48	영화 '26년은'...광주항쟁 소재의 복수극, '두레' 방식 제작도 독특	뉴스1	2012. 12. 2.	
49	진보판사 동향에 이견희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문어발 사찰'	한겨레신문	2012. 12. 5.	
50	서울고등법원 2013나60403	서울고등법원	2014. 8. 22.	
51	대법원 2012다204587	대법원	2015. 8. 27.	
52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결과	국가정보원	2017. 9. 11.	
53	MB정부 블랙리스트 나왔다 ...박미선·이준기에 여군동 감독까지	연합뉴스	2017. 9. 12.	
54	[표] MB정부 국정원 문화·예술·연예계 '블랙리스트'	연합뉴스	2017. 9. 12.	
55	MBC 파괴공작 '판도라 상자' 열렸다	MBC노조	2017. 9. 14.	
56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렇게 시작됐다	경향신문	2017. 9. 16.	

연번	자료명	생산자/기관	생산일자	비고
57	소위 '공영방송 장악 문건' 주요내용 언론 공개 권고 결정	국정원 개혁위	2017. 9. 18.	
58	문성근, 검찰 출석... "MB 블랙리스트, 경악스러운 일"	뉴스스	2017. 9. 18.	
59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이명박 고소... 박근혜·김기춘 포함	SBS	2017. 9. 25.	
60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2017. 9. 28.	
61	[단독] "윤도현 8월경, 김어준 10일 물갈이"... 국정원 예고대로 퇴출	한겨레신문	2017. 9. 29.	
62	[단독] 국정원 연예인 불법사찰 문건 'MB맨' 임태희가 직접 챙겼다	경향신문	2017. 11. 15.	
63	2009년 한예중 표적감사와 블랙리스트	심광현	2017. 11. 24.	
64	원세훈 前국정원장의 문화·예술계 불법 관여 및 김재철 前MBC 사장과의 공모에 의한 MBC 방송 장악 등 사건 수사 결과	서울지검	2018. 1. 17.	
65	「블랙리스트 원조는 MB정부, 관련 문건 발견됐다	MBC	2018. 3. 21.	
66	영화진흥위원회 대국민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2018. 4. 4.	
67	국정원, 2010년 악성코드로 불법사찰 정황... "문성근 PC 해킹"	JTBC	2018. 4. 25.	
68	문성근, 국정원 합성사진 유포 피해 이어 PC 해킹도 당했다	SBS	2018. 4. 25.	

## 2. 신청인 임의 제출 자료

[표-2] 신청인 제출 자료 목록

연번	기록명	제출자	입수일	비고
1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성명서	김미화	2017. 9. 25.	
2	KBS 임원회의 결정 사항	김미화	2017. 9. 25.	
3	2008년부터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김미화	2017. 9. 25.	
4	변호사 국정원 자료	김미화	2017. 9. 25.	
5	국정원 김미화에 관한 자료	김미화	2017. 9. 25.	

### 3. 신청인 등 대인 조사

[표-3] 대인 조사 목록

연번	진술인	사건관계	방식	일자
1	김상균	신청인(신해철 건)	진술녹취	2017. 11. 3.
2	최OO	영화사 청어람 대표	진술녹취	2018. 1. 3.
3	OOO	전 국립오페라합창단 단원	진술조서	2018. 1. 12. 2018. 1. 16.
4	OOO	전 국립오페라합창단 단원	진술조서	2018. 1. 12. 2018. 1. 16.
5	OOO	전 국립오페라합창단 단원	진술조서	2018. 1. 12.
6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진술조서	2018. 1. 22.
7	OOO	연극평론가	진술녹취	2018. 2. 23.
8	김OO	연극 연출가	진술녹취	2018. 3. 8.
9	채OO	연극 연출가	진술녹취	2018. 3. 18.

## 제3절 | 조사 내용

### 1.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예술계 우편향을 위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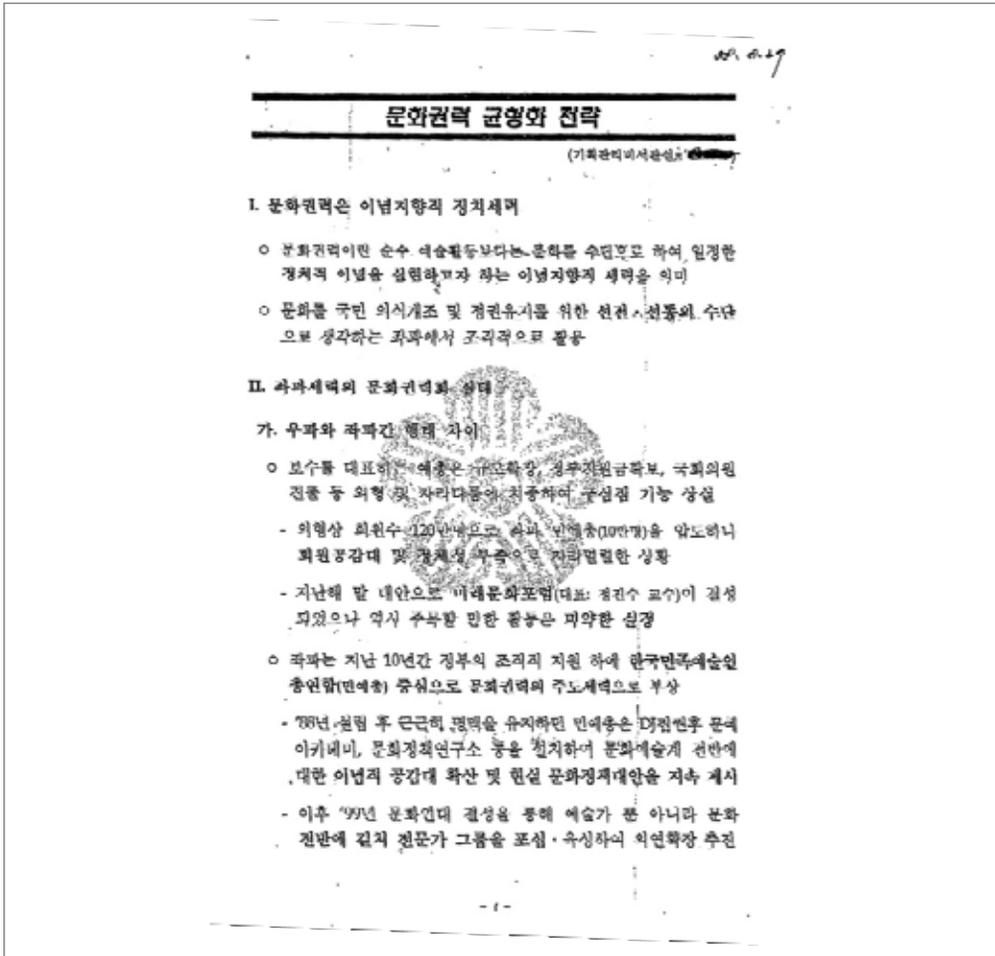
#### 가.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수립

##### (1)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2012. 7. 23. 제19대 국회 사회·문화·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청와대 기획비서관실이 2008. 8. 27. 좌파 예술인사 숙청 문건을 만들었다”며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sup>1)</sup>

1) 정청래 “靑, 좌파 문화예술인사 숙청 시도”, 뉴시스, 2012. 7. 23.

[그림-1]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2008. 8. 27.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1면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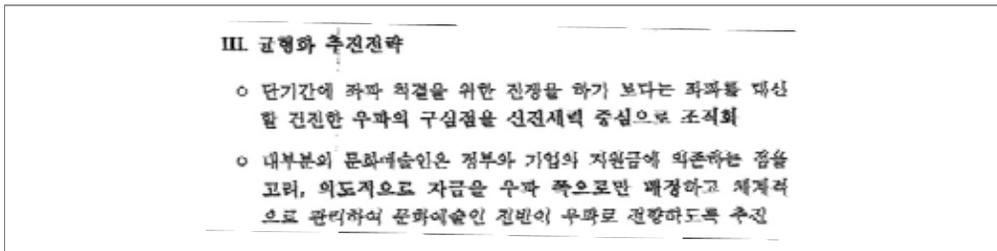
이 문건은 모두 7쪽 분량이고, '▲ I. 문화권력은 이념지향적 정치 세력 ▲ II. 좌파 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 ▲ III. 균형화 추진 전략 ▲ IV. 주요 대책(안) ▲ V. 추진 체계 및 재원계획 ▲ VI. 향후 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문건에는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은 규모는 크지만 구심점 기능을 상실한 반면, 좌파 측은 회원 수는 적지만 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민예총)을 중심으로 문화계 주도 세력으로 부상했다'며 '그간 이루어진 좌파의 문화권력화 실태'로 '대중이 쉽게 접하고 무의식 중에 좌파 메시지에 동조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인 영화를 중심으로 국민의식의 좌경화 추진'이라며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킨 '괴물',

북한을 동지로 묘사한 <JSA>, 국가권력의 몰인정성을 비판한 <효자동 이발사>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배급했다며 예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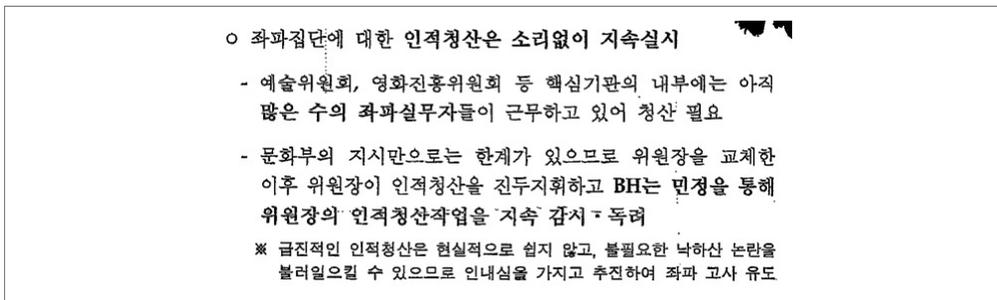
그래서 우파의 구심점을 키우고 좌파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인사와 자금을 들고 있는데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 [그림-2]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일부 내용



이 문건은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 실시’해야 한다며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진두지휘하고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청산작업을 지속 감시·독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 [그림-3]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일부 내용



이 문건 ‘V. 추진체계 및 지원계획’에는 청와대와 문체부·기재부 그리고 기업의 역할 분담을 적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추진체계

청와대	총괄기획 및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 역할조정
문화부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 과거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등 역할
기재부	문화부 예산을 정밀 검토하여 좌파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우파 지원사업에 대규모 예산 지원
기업	별도 협의를 거쳐 기부금, 후원금, 자체 투자 등의 형태로 문화예술분야 건전화 지원

이 문건은 향후 일정으로 9월에 전략(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2월에 '09년도 예산 확정 및 좌파단체 지원차단 점검을 한다고 적시하였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4]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조직도



## (2)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집행 결과 분석

2012. 7. 23.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을 공개한 후 2012. 7. 30.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청와대 문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집행 결과 분석을 발표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이 발표에서 2008. 8. 27.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 작성될 때는 미국 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하 촛불정국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5. 22.과 6. 19. 두 차례의 사과 이후, 정권 차원의 분위기 반전의 시기였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 [표-5] 진선미 의원 발표문 중

- 8월8일 ~ 24일 : 베이징 올림픽
- 8월 1일 : 법원 PD수첩 정정보도 판결,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청구
- 8월 8일 : 정연주 KBS 사장 축출 성공  
정연주 사장 감사원 감사결과, 검찰 소환 체포 기사
- 8월26일 : KBS 이병순 사장 선임

또 진선미 의원은 2012. 7. 30. ‘청와대 문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집행 현실화 결과 분석’에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실제 집행 결과를 밝혔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6]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실제 집행 결과

문건 내용	실제 집행 결과	비고
미래문화포럼(대표:정OO 교수)이 결성되었으나 활동은 미약한 실정	2008년 9월 한나라당 고홍길 문방 위원장에게 ‘문화예술계 현안과 과제’ 문건전달	• 한국종합예술학교개혁 황지우 총장 사퇴, 학부통합 • 부산국제영화제 국비 3억 축소 등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 실시	1년 동안 문화예술 기관장 25명이 상 사퇴하거나 해임. 임기 끝나지 않은 기관장만도 20여명 사퇴하거나 면직해임	• 유인촌 장관 공식석상에서 퇴진 요구 발언
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기관 내부에 많은 수의 좌파 실무자들 청산필요	2008. 12. 5 한국예술위원회 김정현 위원장 강제해임. 2008. 11.7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관장 계약 해지. 2008.11.12 예술위원회 박명학 사무처장등 직원4명 해임	• 2010. 12.29 김정현 위원장 해임 무효소송 대법 승소. • 2010. 9.9 김윤수 관장 해임 무효소송 대법 승소. • 2010. 5.8 예술위원회 박OO 사무처장 해임 무효판결

문건 내용	실제 집행 결과	비고
건전문화 세력 형성 새로운 ThinkTank로 '문화정책포럼' 형성 사단법인화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문화컨텐츠 산업협회 등록. 조직기구에 '문화컨텐츠포럼'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월 뒤인 11월 28일 사단법인 등록</li> <li>• 12월 4일 출범식 (유인촌 장관 참석)</li> <li>• '글로벌컨텐츠포럼'으로 명칭 변경</li> </ul>
	대표 : 손O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KBS이사와 삼성장학재단 이사장 선임</li> </ul>
우파 실행기관으로 '한국문화산업 연구소' 설립	한국문화컨텐츠 산업협회 산하 조직기구로 문화컨텐츠산업연구소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한국문화산업연구소'로 했다가 '문화컨텐츠산업 연구소'로 명칭 변경</li> </ul>
사단법인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연구, 심포지엄, 출판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한국문화컨텐츠 산업협회 - 종편 도입 좌담회 - 영상컨텐츠의 사회적 책임 토론회 - 글로벌컨텐츠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원 :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li> </ul>
기업은 기부금, 후원금, 자체투자로 지원	협찬 : KT, SK 텔레콤, 포스코, 한국전력, NHN,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OO 기획관리비서관 기업에 협회 후원금 요구 물의로 자진사퇴</li> </ul>
대규모 문화자본과 정부간 새로운 문화펀드 조성	영진위, 800억 규모 펀드조성 발표 (2008년 10월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건관련 회의날로부터 정확히 두달 뒤 현실화</li> </ul>
창조문화센터설립 (송현동 미대사관부지)	대한항공, 7성급 호텔 포함 복합문화공간 건설추진(2008년~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보건법 위반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대법원 패소</li> <li>• 문광부 「관광진흥법」개정안 추진중</li> </ul>
좌파세력에 대한 정부지원금 평가 재조정	2009년 민예총 예산, 2007년 대비 1/4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촛불시위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삭감</li> </ul>
SKT펀드를 활용한 우파영화제작	SK최태원 회장, 2008년 10월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태원 회장, 베넥스인베스트먼트를 횡령 혐의로 재판진행중</li> <li>• 김OO 미래저축은행 회장, 신용한도 규정어기고 최태원 회장에게 630억 차명대출</li> </ul>
컨텐츠 공모전을 통한 건전인재 기반 조성	클린컨텐츠국민운동본부 설립 (2008년 11월) 클린컨텐츠UCC공모전 개최 (2009년~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문광부장관상 수여</li> </ul>
	한국문화컨텐츠 산업협회 대한민국 콘텐츠 공모전 개최 2009년 12월. 1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문광부장관상 수여</li> </ul>

위 <표6>에 나타나듯이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상당 부분 실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문화미래포럼 「문화예술계 현안과 과제」

문화미래포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80명이 모여 2006. 10.에 발족되었다. 문화미래포럼에는 정OO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교수, 소설가 OOO, 정OO 전 한양대 연극영화과 교수 등이 참여하였는데 정OO 전 한양대 교수는 뉴라이트문화예술연합의 공동대표를 겸임하였다.<sup>2)</sup> 창립 이후 뚜렷한 활동을 하지 않던 문화미래포럼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2008년 이후인데 문화미래포럼은 2달 만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법인 인가를 받았다.<sup>3)</sup>

2008. 9. 문화미래포럼은 한나라당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 통신위원회(문방위) 위원장에게 「문화예술계 현안과 과제」라는 문건을 제출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이 문건을 인터넷 매체 프레스안의 선OO 기자로부터 제공받았는데 선OO 기자는 이 문건에 대해 다음에 같이 답변하였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카페에 문화미래포럼 카페가 개설되어 있었고, 위 카페에 이 문건이 게시되어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모 언론사에서 이 문건을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에게 제출되었다는 보도가 된 후 카페에서 이 문건이 삭제되었다고 하였다.<sup>4)</sup>

이 문건에는 ▲영화계 좌파 세력의 청산 ▲민예총 등 문화예술단체의 개혁 ▲한예종의 개혁 ▲국공립 예술단체들의 전속제를 철폐하고 계약제로 전환 할 것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또 이 문건에는 ‘지난 정권에서 민예총, 문화연대 등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으로 좌파 예술인들에게 문화 권력을 안겨주었으며 그 폐해는 심각하기 짝이 없다’며 문화연대, 한 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을 이르러 ‘반정부 활동의 근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의 영화계 현안을 다룬 부분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영화진흥위원회는 좌파 문화운동의 근거지 역할’을 했다고 하며 ‘영화법 개정을 통해 영화진흥위원회의

2) MB의 ‘좌파 색출대’ 문화미래포럼, 넌 누구냐?, 프레스안, 2009. 7. 14.

3) “좌파를 적출하라!”…문화미래포럼의 ‘한예종 죽이기’, 프레스안, 2009. 7. 15.

4) 참고자료 수집 결과보고(2018. 2. 19.)

위상과 기능을 진흥기구로 개편, 가칭 영화진흥원으로 개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산 국제영화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등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영화제를 비롯해 서울영상위원회, 경기영상위원회 등 각종 단체들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 단체의 상당수가 '좌파 영화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그동안 이들 단체 및 소속 영화인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FTA 체결 반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좌파 문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을 변혁시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각종 특혜를 누려온 한예종은 문화예술 분야의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전면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sup>5)</sup>

#### 다.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결과

##### (1) 국정원 개혁위 발표

국정원 개혁위는 2017. 9. 11.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결과』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원세훈 국정원장이 2009. 2.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 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했고, 문화·연예계내 정부 비판세력을 ▲대통령에 대한 언어 테러로 명예를 실추 ▲좌(左)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촛불시위 참여를 통해 젊은 층 선동 등을 사유로 '각 분야별로 퇴출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하면서 퇴출 대상이 되었던 문화·예술계 인사 82명의 명단을 아래 표와 같이 발표했다.<sup>6)</sup>

5) 문화미래포럼, 문화예술계 현안과 과제, 2008. 9.

6) 국정원, 보도자료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결과』, 3쪽, 2017. 9. 11.

**[표-7] 국정원이 발표한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국정원 개혁위)**

구분	강성 성향(69명)	온건 성향(13명)
문화계	이외수, 김명곤, 조정래, 진중권, 탁현민, 신학철	.
배우	문성근, 명계남, 권해효, 문소리	김민선, 이준기, 유준상, 김가연
영화감독	이창동, 여균동, 박찬욱, 봉준호, 김동원, 박광현, 장준환 및 2006년 5월 「민노당」 지지선언 참여 양운모 등(총 52명)	.
방송인	김미화, 노정렬, 오종록	김구라, 김제동, 박미선, 배철수, 황현희
가수	윤도현, 신해철, 안치완, 윤민석	양희은, 김장훈, 이하늘, 이수

문화·예술인들 내에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세간의 ‘의혹’으로만 여겨졌던 사항이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서 확인된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2009. 7. 당시 김OO 국정원 기초실장 주도로 「문화·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팀장: 기초실장),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 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으로 퇴출을 압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청와대(기획관리비서관, 홍보·민정수석)과 국정원 지휘부는 문화·연예계 특정 인물 견제 관련 지시를 계속 하달하였고 담당 부서는 온·오프라인에서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유관부처 및 기관을 조정, 직접적인 조치를 통해 압박하고 온라인에서는 소위 ‘문화·연예계 중복세력’ 대상 심리전을 주도하였다고 발표했다.

2017. 9. 12. 연합뉴스는 ‘MB정부 블랙리스트 나왔다…박미선·이준기에 여균동 감독까지’ 에서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뿐만이 아니라 이전 정권에서 진보정당 지지를 선언한 이력까지 뒤져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기도 했으며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9. 11.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한 연예인 명단 외에 연합뉴스가 입수한 명단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보였던 연예인은 대부분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하였다.<sup>7)</sup>

연합뉴스가 입수한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82명의 명단을 보도하였는데 이 명단은 다음과 같다.<sup>8)</sup>

7) MB정부 블랙리스트 나왔다…박미선·이준기에 여균동 감독까지, 연합뉴스, 2017. 9. 12.

8) [표] MB정부 국정원 문화·예술·연예계 ‘블랙리스트’, 연합뉴스, 2017. 9. 12.

**[표-8]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연합뉴스)**

구분	대상
문화계	이외수 김명곤 조정래 진중권 탁현민 신학철(6명)
배우	문성근 명계남 권해오 문소리 김민선 이준기 유준상 김가연(8명)
영화계	이창동 여균동 박찬욱 봉준호 김동원 박광현 장준환 양윤모 김경형 정윤철 오지혜 변영주 윤인호 박진표 김대승 김지운 권칠인 권병길 황철민 공미연 김태용 류승완 신동일 이윤빈 조성봉 최진성 최태규 김조광수 김동현 김선화 김태완 김화범 남태우 맹수진 민병훈 박광수 손영득 공덕호 안현주 유창서 원승환 이지연 이지형 이송희일 이찬현 장현희 장형운 조영각 최송길 최유진 최은정 함주리(52명)
방송인	김미화 노정렬 오종록 김구라 김제동 박미선 배철수 황현희(8명)
가수	윤도현 신해철 안치환 윤민석 양희은 김장훈 이하늘 이수(8명)

연합뉴스는 위 ‘MB정부 블랙리스트 나왔다…박미선·이준기에 여균동 감독까지’ 기사에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6. 5.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던 영화감독 명단을 뒤져 대거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국정원 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심리전단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담당할 직원이 ‘민노당을 지지하는 성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과거 이력까지 들춰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sup>9)</sup>

위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2006. 5.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지지를 선언한 영화감독이 포함된 명단은 2006. 5. 23. ‘문화예술인 531명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으로 2006. 5.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화예술인 531명이 민주노동당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지지선언 명단에는 ■ 영화 (48), ■ 문학 (119명), ■ 미술 (92명), ■ 문화단체 (58명), ■ 만화 (9명), ■ 영화진흥위원회노조 (8명), ■ 음악 (42명), ■ 전국문화예술노조 (27명), ■ 전주시립예술단 (68명), ■ 전북도립국악원 (18), ■ 춤 / 무용 (18명), ■ 풍물 / 국악 (24명), ■ 지역 (18명)가 포함되었다.<sup>10)</sup>

위 영화 명단 48명 중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52명)에 포함된 사람은 양윤모를 포함해서 47명이다. 이 선언에 참여한 단체인 영상창작단 ‘사람’을 제외하고 개인으로 참여한 사람 모두가 포함된 것이다. 민노당 지지 선언을 한 영화인(48명) 중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47명은 다음과 같다(문화예술인 531명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에 참여한 전체 명단은 이 보고서 말미에 첨부하였다.).

9) MB정부 블랙리스트 나왔다…박미선·이준기에 여균동 감독까지, 연합뉴스, 2017. 9. 12.

10) 문화예술인 531명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레디앙, 2006. 5. 23.

양윤모(영화평론가협회장), 김경형(감독조합 스크린쿼터특별위원장/‘동갑내기과외하기’감독), 정윤철(감독/말아톤), 박찬욱(감독/올드보이), 오지혜(배우/‘와이키키브라더스’), 변영주(감독/밀애), 윤인호(감독/아홉살인생), 박진표(감독/너는내운명), 김대승(감독/혈의누), 김지운(감독/달콤한인생), 권철인(감독협회 공동대표/‘싱글즈’감독), 권병길(배우/‘그때그사람들’출연), 황철민(한국독립영화협회이사장/‘프락치’감독), 공미연(감독/녹색 발자국), 김동원(감독/송환), 김태용(감독/가족의탄생), 류승완(감독/짜패), 신동일(감독/방문자), 이윤빈(감독), 조성봉(감독/레드헌트), 최진성(감독/그들만의월드컵), 최태규(감독/소리), 김조광수(청년필름대표), 김동현(정동진독립영화제 사무국장), 김선화(청주씨네오딧세이 대표), 김태완(영화사 청어람 프로듀서), 김화범(한국독립영화협회 배급팀장), 남태우(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민병훈(대전독립영화협회 사무차장), 박광수(강릉씨네마떼끄 사무국장), 손영득(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표), 송덕호(대전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안현주(정동진독립영화제 홍보팀장), 유창서(영화인회의 사무국장), 원승환(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이지연(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차장), 이지형(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사무차장), 이송희일(감독/굿로맨스), 이찬현(대전독립영화협회 대표), 장현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기술지원팀), 장형윤(독립애니메이션 감독/‘아빠가 필요해’), 조영각(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최송길(강릉 씨네마떼끄 대표), 최유진(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사무차장), 최은정(독립미디어활동가), 함주리(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장), 영상창작단 ‘사람’

위의 사실을 볼 때 연합뉴스의 보도는 사실로 보여지며, 신청인 변영주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노당을 지지했고 이명박 정부 시기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고 신청서에 기재하였는데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또 영화인들 165명은 2008. 3. 31.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신당 지지선언을 하였다. 이 명단에는 영화배우 김부선, 오지혜와 영화감독 권철인, 김경형, 김대승, 김태용, 박찬욱, 변영주, 임순례 감독 등이 포함되었다. 또 제작자 심재명, 이은, 오기민과 김소영 영상원 교수, 조영각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등도 포함되었다.<sup>11)</sup>

이 지지선언(165명)에 포함된 사람들 중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52명)에 포함된 사람은 권철인을 포함해 23명이다. 이 명단은 다음과 같다(진보신당 지지선언에 참여한 영화인 165명 명단은 이 보고서 말미에 첨부하였다.).

11) 영화인 165명 진보신당 지지 선언, 레디앙, 2008. 3. 31.

**권철인**(〈싱글즈〉감독), **김경형**(〈동갑내기과외하기〉감독), **김대승**(〈혈의누〉감독), **김동현**(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장), **김조광수**(제작자), **김태완**(프로듀서), **김태용**(〈가족의탄생〉감독), **김화범**(독립영화 프로듀서), **남태우**(대구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 **맹수진**(영화평론가), **박광수**(정동진독립영화제 프로그래머), **박찬욱**(〈올드보이〉감독), **변영주**(〈발레교습소〉감독), **손영득**(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표), **신동일**(〈나의친구, 그의 아내〉감독), **오지혜**(연기자), **원승환**(독립영화 배급활동가), **장형운**(애니메이션 감독), **조성봉**(다큐멘터리 감독), **조영각**(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최송길**(강릉씨네마테크 대표), **최진성**(〈히치하이킹〉감독), **황철민**(〈우리 쫓내자!〉감독)

또 영화인들은 2009. 6.에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하였다.

2009. 6. 17. “거꾸로 흐른 시간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는 그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영화인 225명의 서명이 담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영화인들은 “진실을 호도하고 소통을 차단하며 국민의 양심을 권력으로 잠재우려는 역사의 역류가 계속되는 한 어찌면 이 땅의 모든 영화는 거짓일지 모른다”며, “함께 쌓아온 소중한 민주주의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현실에 순응하는 삶 속에서의 영화는 무가치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겸허하고 진정한 사과”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박찬욱, 봉준호, 최동훈, 류승완, 김태용, 임순례, 임필성, 김성홍, 김현석 등의 영화 감독과 윤성호, 양해훈, 김경만, 이마리오 등 독립영화 감독들, 오기민, 김조광수 등의 제작자 등이 참여했다.<sup>12)</sup>

이 시국선언(225명)에 포함된 사람들 중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이명박 정부 시기 퇴출 대상이 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52명)에 포함된 사람은 공미연을 포함해 21명이다. 이 명단은 다음과 같다(시국선언에 참여한 영화인 225명 명단은 이 보고서 말미에 첨부하였다.).

**공미연, 박광수, 김동현, 황철민, 김경형, 김대승, 김조광수, 김태용, 김화범, 남태우, 류승완, 민병훈, 박찬욱, 변영주, 봉준호, 유창서, 윤인호, 이지연, 장준환, 정윤철, 조영각**

12) 프레시안, 「영화인 225명, 시국선언 동참」, 2009. 6. 17.

위의 사실들로 볼 때 민노당, 진보신당 지지선언을 한 영화인들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영화인들이 이명박 정부 시기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이 확인된다.

2009. 6.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정부의 사정 권력기관 중립화를 촉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2009. 6. 7. 한국작가회의의 문인 514인은 시국선언을 하였는데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대통령의 사과, 공권력에 의한 치안통치 중단, 냉전적 대북정책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였다.<sup>13)</sup>

그리고 2009. 6. 25. 연극인 1,037명이 현 시국에 대한 연극인 시국선언을 하였다.

이들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각종 정책의 중단 및 포기 △국민을 폭행하고 탄압하는 3류 국가적 공안통치 중단 △정경유착을 심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미디어 악법의 추진 중단 △경쟁 중심의 비인간적 교육정책 포기 △구시대적, 반예술적 문화정책 중단 등을 요구했다.<sup>14)</sup>

## (2) 검찰 수사

2017. 9. 14.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 활동과 블랙리스트 운영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재된 영화배우 문성근이 2017. 9. 18.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sup>15)</sup>

그리고 위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재되었고 우리 위원회 신청인인 방송인 김미화가 2017. 9. 19.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때 검찰에서 보여주었다는 국정원 문건을 입회 변호인과 김미화가 메모하였는데, 이 메모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메모에 적시된 국정원 문건은 14개이며 작성 시기는 2009. 12. 24.부터 2011. 7. 경 까지이다.

이 문건 14개는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하였는데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확보한 국정원 문건이라고 보도하였다.<sup>16)</sup>

13) [시국선언] 한국작가회의의 시국선언 514명(6월9일), 한겨레신문, 2009. 6. 10.

14) 연극인 1천여명 시국선언, 한겨레신문,

15) 문성근, 검찰 출석...“MB 블랙리스트, 경악스러운 일”, 뉴시스, 2017. 9. 18

16) [단독] “윤도현 8월경, 김어준 10월 물갈이”...국정원 예고대로 퇴출, 한겨레 신문, 2017. 9. 29.

[표-9] 신청인 김미화와 입회 변호인이 메모한 국정원 문건 14개

연번	작성시기	문서명	입회 변호인의 메모 내용	신청인 메모 내용
1	2009. 12. 24.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일부 좌편향 피디 진행자들이 라디오 시사프로를 통해 국정현안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고 일삼고 있어 대책마련 시급하다면서, 사별보도실태-MBC 손석희 김미화 중심 좌익 편들기 지속 여론선동 / 평가 및 고려사항 - 지방선거 앞두고 정부비판 급증예상, 방송사 자정 노력, 행정 제재. 경영진 주의 환기하여 자발적 시정하고 손석희 김미화 퇴출, 교체권고. 프로그램은 개편으로 폐지.	2009년 12월 24일 [발견된 최초권고안]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좌편향 진행자 김미화, 손석희 [소제목] 평가 및 고려사항 KBS, MBC, CBS 경영진 주의 환기시키고, 자발적 시정 촉구. 손석희, 김미화 좌편향 진행자 퇴출, 교체권고, 포맷변경하라. 세종시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하였다
2	2010. 1. 19.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	2009년부터 기초실장 주재로 '연예인건전화사업TF'으로 좌파 연예인 방송활동 차단 강화, 6월 지방선거 관련 김미화, 김제동, 권해효, 신해철 등이 우려됨. / 방송사 간부, 광고주 등에게 주지시켜 배제하도록 하고 그들의 비리를 적출하여 사회적공분유도.	2010년 문화예술, 체육인 건전화사업 계획 작년 6.29일부터 기초실장 연예인 건전화사업TF팀 [소제목] 좌파문화예술인 '체육인' 척결활동 김미화, 김제동, 신해철, 권해효 방송사 간부와 광고주들에게 방송활동 차단강화 비리를 적출, 사회적 공분을 유도하라.
3	2010. 2. 22.	여성부 좌파연예인 활용 홍보활동 시정필요	최근 여성부가 김미화 진행 라디오 오프로에 공익광고 게재함. 그 광고는 윤도현 김제동등 좌파연예인과 친분이 돈독한 김C 가 나레이션을 함. 이번 공익광고는 여성부 실무진들이 홍보효과제고에 연연하여 공공기관의 책무를 간과한데서 기인한 것. 여성부에 광고를 즉시 중단토록하고 강력 경고하여 재발방지.	2010. 2월 22일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공익광고 즉시중단 여성부의 좌파연예인 활용 홍보 활동 시정필요 여성부 실무진에 좌파연예인 광고 즉시중단 강력비판함(아동성폭력예방관련 공익광고를 게재함). 김씨가 나레이션함(김제동 윤도현과 친해서 중단하라).
4	2010. 3. 2.	mbc정상화전략 및 추진방안	신임사장 취임 계기로 공영방송 잔재청산, 고강도인적쇄신, 편파프로 퇴출 / 손석희, 김미화, 성경섭, 김성수 등 문제 진행자 반드시 교체/ 좌편향 프로 작가 김현정, 패널 김종배 등 외부의 좌파인물도 일소해야.	2010. 3. 2.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편파프로 퇴출 초점 봄 프로 김재철 신임사장 (3.2.) 취임 예정을 계기로 좌편향 프로그램 '제작진전면쇄신' 시사고발프로 제작진 교체. 진행자들 '반드시교체' 손석희, 김미화 진행자 반드시 교체

연번	작성시기	문서명	입회 변호인의 메모 내용	신청인 메모 내용
5	2010. 3. 5.	연예인 관리 TF 회의자료	여성부 광고 방송사실 직접 득문, B실 통해 지휘보고(2.23.)한 후 여성부에 문제점 지적, 재발 방지 등 시정 강력요구. / 좌파 라디오방송에 여성부 공익 광고 포착 및 시정조치.	2010. 3. 5. [회의자료] 좌파 연예인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여성부 문제점을 지적. 광고 중단 과 재발방지 등 시정 강력요구
6	2010. 6. 10.	김제동 등 좌파성향 방송연예인 순화 견제 활동방향	지난해에는 방송인들 퇴출활동에 주력했음. 원장님께서는 순화 유도가능인물은 포용하라고 지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진행경과보고 - 김미화 등 퇴출 유도, 신해철 수사착수	2010. 6. 10. 김미화. 김제동 등 좌파 성향 방송 연예인 순화, 견제활동방향. [진행경과] 좌파 방송인 김미화 KBS 등 공영방송 퇴출을 유도하고 김제동 윤도현 퇴출유도
7	2010. 7. 8.	대중예술인 TF 회의자료	김미화 KBS 블랙리스트 발언 관련 특이여론 점검. / 동향파악-방송 콘텐츠 관련자들은 전형적인 폴리테이너라면서 비난여론 우세. 추가발언 동향 등 지속적 파악.	2010.7.8. 대중 예술인 TF 회의자료 방송인 김미화의 KBS 블랙리스트 발언 관련 특이 여론 점검 -방송 콘텐츠 관련자들은 '이번 김미화의 행동을 전형적인' 폴리테이너' 성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비난하는 여론이 우세하다함. 관련 특이동향 지속파악
8	2010. 8. 24.	좌파연예인 활동실태 및 고려사항	대표적 좌파연예인, 강성좌파 등 정부비판발언. / 조치 및 고려사항-포용불가 연예인은 방송차단 등 직접 제재 말고 무대응을 기본으로. 간접제재로 분량축소, 각 부처나 지자체, 경제단체 통해 대기업이 활용안하도록 유도, 보수언론 협조 하에 비리의혹 부각, 불신여론조성,	2010. 8. 24 좌파 연예인 김미화 활동실태 및 고려사항 강성 좌파 연예인 김미화 더욱 반발. 각 부처, 지자체 공익광고, 지역 축제, 홍보대사 섭외 시 좌파 연예인 배제. 경제단체 대기업들 좌파연예인 활용하지 않도록 유도. PD수첩 정상화시위. KBS블랙리스트 특히, 허위 사실까지 퍼뜨려 반정부 여론몰이 주도해온 김미화를 '즉각퇴출'토록 촉구(KBS블랙리스트 당시 SBS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며 변OO 미디어워치, 당시 독립신문 박OO기자를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각하 처리된 사항을 '형사고소

연번	작성시기	문서명	입회 변호인의 메모 내용	신청인 메모 내용
				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허위 사실까지 퍼뜨렸다 기재되어 있었음. 이러한 인터넷 신문들이 국정원 행동대원이었다라고 생각한다(증언함).
9	2010. 9월경 작성추정		좌파연예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늘어. 경찰이 부실조사. 검경이 여론논치 살피며 소극적대처. /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하여 현업 복귀 차단 영구퇴출, 즉각 퇴출 대책 강구, 보수매체 통해 분위기 조성	MBC 편파방송 근절 좌파 방송인 김미화 사법처리 확행으로 방송협회 차원 좌편향 연예인 고립유도
10	2010. 9월경 작성추정		좌파연예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 조짐 엄단. MBC 김미화 손석희 등 견재함. / 교체촉구, 방송협회 등 통해 고립유도, 심의강화	좌파 방송인 김미화 온정주의 확산 좌파 방송인 김미화 편파방송 재연 우려
11	2010. 10. 26.	문화연예계 좌파 실태 및 순화 방안	좌파연예인에 대해 온오프대응 활동으로 순화 및 퇴출여론을 조성해나갈 계획 / 실태 및 문제점-핵심 문제인물 100여명이 지난정권때 대거 요직에 진출함. VIP에 언어테러로 국가원수 명예실추(김구라 명예님), 좌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감 주입(박찬욱 봉준호), 깃발시위와 공연으로 젊은층 쯤비화에 앞장(김미화 윤도현)	2010. 10. 26. 문화 연예계 좌파실태 순화방안. 100여명선으로 순화 및 퇴출여론을 조성해 나갈 계획 김미화, 윤도현, 깃발시위, 공연 참여 젊은층 '쯤비화'에 앞장
12	2010. 11. 1.	좌파연예인 활동실태 관리방안	강성좌파, 인기하락 유도	2010. 11. 1. 골수 좌파 연예인 김미화 공공부문섭외배제 등 대중적 인기 하락 유도. 젊은층 쯤비화에 앞장
13	2010. 11. 5.	중복세력퇴출 심리전 강화	사주, 관계기관 협조로 퇴출 압박/ 강경파는 철저관리, 배제유도, 신해철김미화등 각 부처 지자체 경제단체공조 / 김장훈 김구라는 안티세력 활용 위촉시킴/ 박미선 이하늘 광고주에	2010. 11. 5. 중복 세력 연예인 김미화 대응전략 연예계 퇴출압박. 방송사 경영진 협조. 출연축소, 차단, 문화부 산 하단체행사 관계부처 철저관리. 통제. 출연배제.

연번	작성시기	문서명	입회 변호인의 메모 내용	신청인 메모 내용
			모델교체 압박	김미화 (강성) 수용불가 각 부처, 지자체, 경제단체, 지역 축제, 홍보대사 섭외 철저배제.
14	2011. 7월 이후 작성 추정	MBC 좌편향출연자 조기퇴출 확행	MBC는 4월 김미화 7월 김여진 하차시킴. 사유인 방송심의규정 개정하여 소셜테이너 출연제한 근거규정 마련. / 후속조치로 윤도현 등 추가퇴출 추진 윤도현 김규리를 장기출연, 프로 종결 이유로 8월경 자연스 레 교체예정. / 10월중 가을개편시 신해철 김어준도 하차시켜 순차적 물갈이방침	MBC 좌편향 출연자 조기퇴출 확행 MBC '방송제자리찾기' 일환으 로 김미화 4월 하차시키고 소셜 테이너 등 출연제한 근거 마련.

[그림-5] 2017. 9. 29. 한겨레 보도



이 국정원 문건을 보면 국정원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블랙리스트 연예인들을 퇴출하려고 한 정황을 알 수 있다. 블랙리스트 연예인들의 퇴출 시기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온·오프상에서의 대응 여론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보수 언론과 매체를 이용해 블랙리스트 연예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에 대응케 하고 중복 프레임을 씌우고 광고주들까지 압박해 광고 모델에서 교체하게 하는 등 블랙리

스트 연예인들을 퇴출 시키기 위해 국정원은 갖은 방법들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국정원의 계획대로 블랙리스트 연예인들이 퇴출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2011. 7.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MBC 좌편향 출연자 조기퇴출 확행」에 4월 김미화, 7월 김여진을 하차시키고 윤도현·김규리 8월경 교체 예정으로, 신해철·김어준 10월중 하차 시킨다고 적시하였는데 윤도현은 2011. 9.에 MBC 라디오 프로그램 '2시의 데이트'에서<sup>17)</sup>, 김어준은 같은 해 10.에 MBC 라디오 프로그램 '색다른 상담소'에서 각각 하차하였다.<sup>18)</sup>

또 2010. 10. 26. 「문화연예계 좌파 실태 및 순화 방안」을 보면 VIP(대통령)에 언어테러를 가해 국가 원수 명예를 실추 시킨 김구라를 온·오프 대응 활동으로 순화 및 퇴출 여론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적시하였는데 국정원이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에 김구라의 과거 막말 동영상 등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배포되었다.<sup>19)</sup>

**[표-10]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확보한 국정원 문건**

연번	작성시기	문서명
1	2009. 12. 24.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2	2010. 1. 19.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
3	2010. 2. 22.	여성부 좌파연예인활용 홍보활동 시정필요
4	2010. 3. 2.	MBC 정상화전략 및 추진방안
5	2010. 3. 5.	연예인 관리 TF 회의자료
6	2010. 6. 10.	김제동 등 좌파성향 방송연예인 순화 견제 활동방향
7	2010. 7. 8.	대중예술인 TF" 회의자료
8	2010. 8. 24.	좌파연예인 활동실태 및 고려사항" 활동실태
9	2010. 9월경 작성추정	제목 없음
10	2010. 9월경 작성추정	제목 없음
11	2010. 10. 26.	문화연예계 좌파 실태 및 순화 방안
12	2010. 11. 1.	좌파연예인 활동실태 관리방안
13	2010. 11. 5.	종북세력퇴출 심리전 강화
14	2011. 7월 이후 작성 추정	MBC 좌편향출연자 조기퇴출 확행

17) 윤도현, MBC '2시의 데이트' 하차 통보 받아, 경향신문, 2011. 9. 27.

18) 김어준, MBC 라디오 '색다른 상담소' DJ 강제하차, OSEN, 2011. 10. 14.

19) [단독] "윤도현 8월경, 김어준 10월 물갈이"…국정원 예고대로 퇴출, 한겨레 신문, 2017. 9. 29.

###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지검) 수사 결과

서울지검은 2018. 1. 17. ‘원세훈 前국정원장의 문화·예술계 불법관여 및 김재철 前 MBC 사장과의 공모에 의한 MBC 방송 장악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지검은 수사결과에서 '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으로 정부 지지도 급락을 겪었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부비판적 인물 및 단체들을 다각도로 압박하면서, MBC 등 방송사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전반을 친정부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원세훈 前 국정원장은 '09. 2. 취임 이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물들을 ‘중복좌파’로 규정하고, 그들을 명단화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면서 해당 인물들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 비판적 인물들의 활동을 억압·방해하는 한편 친정부적 인물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공작을 전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sup>20)</sup>

#### [그림-6] 서울지검 수사결과

##### ■ 수사결과,

- 원세훈 前 국정원장은, '09. 2. 취임 직후부터 방송·문화·예술·연예계의 친정부화를 목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동원하여, 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물들을 ‘중복좌파’로 규정하고 그들을 명단화한 **속칭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면서 해당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을 뿐 아니라, ② 이를 통해 정부비판적 인물들의 활동을 억압·방해하는 한편 친정부적 인물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공작을 전개하였던 사실 및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원세훈 前국정원장의 문화·예술계 불법관여 및 김재철 前MBC 사장과의 공모에 의한 MBC 방송 장악 등 사건 수사 결과’, 2018. 1. 17.

- 이명박 정부 초기 사장으로 임명된 김재철 前 MBC 사장과 공모하여, MBC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통해 방송제작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PD수첩>의 정부비판적 방송 제작을 중지시키는 한편, 방송인 김미화 및 연기자 김여진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 및 출연을 부당하게 금지시키는 등으로, 공영방송 MBC에서 정부비판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 아울러 김재철의 경우, ‘공영방송 정상화’ 및 ‘김재철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였던 언론노조 MBC 서울지부(이하 ‘MBC 노조’로 약칭)의 노조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MBC 노조원들에 대해 방송제작 현장을 떠나 ‘요리 방법 교육’ 등 방송제작과 전혀 무관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등 MBC 노조의 운영 및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규명되었음

※ 기소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원세훈의 원장 재직 중(‘09. 2.~’13. 3.) 국정원에 의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블랙리스트 작성, 정부비판적 문화·예술계 인물들의 활동에 대한 불법 관여 등은 모두 국정원법에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들로 볼 소지가 충분하나,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이 사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기초사실>로 적시하였음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소재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2018. 3. 21. 언론에 보도되었다. 언론에는 “100여 명의 연예인을 강성과 포섭 가능 등으로 분류한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도되었다.<sup>21)</sup> 이는 2017. 9. 11. 국정원에서 발표한 이명박 정부 시기 블랙리스트 82명과는 차이가 있다.

## 라.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2017. 9. 18.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당시 국정원이 공영방송 경영개입 정황이 담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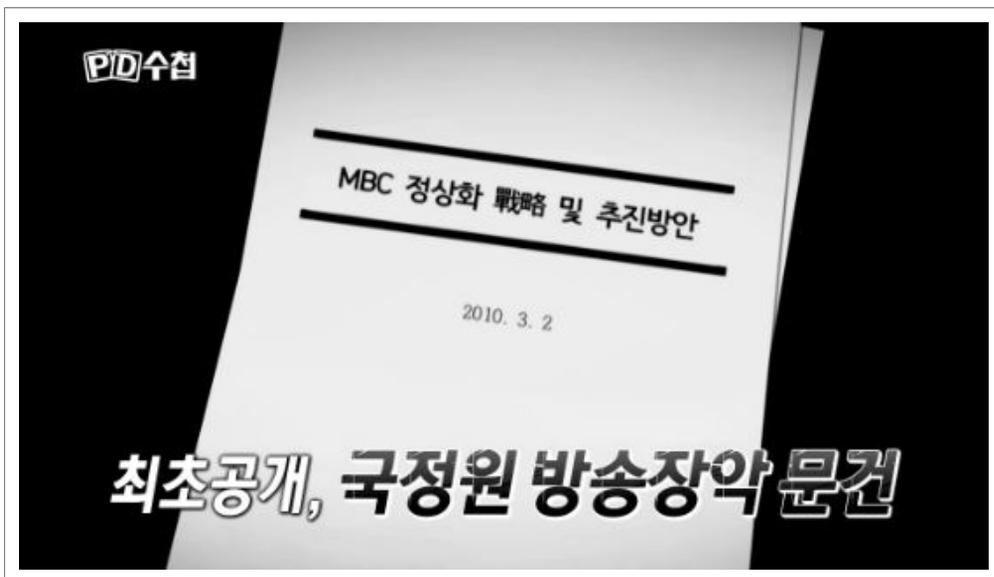
21) MBC, 「‘블랙리스트’ 원조는 MB정부, 관련 문건 발견됐다」, 2018. 3. 21.

추진방안' 등 2건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등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 문건이 당시 원세훈 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0. 3. 2. 신임 김재철 사장 취임 예정을 계기로 '공영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 퇴출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체질개선 추진' 등의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발표했다.<sup>22)</sup>

우리 위원회는 2017. 12. 21. MBC 프로듀서 한재희·김재영으로부터 'MBC 정상화 戰略 및 추진방안'(2010. 3. 2.)을 수집하였다.<sup>23)</sup>

#### [그림-7] 2017. 12. 12. 방영된 MBC <PD수첩>의 한 장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 공개되었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은 MBC의 당면과제로 '△ 노영(勞營)방송 척결 → 불합리한 제도·관행 혁파 시급 △ 편파방송 시정 →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 필요 △ 방만경영 해소 → 이익금 나눠먹기 등 도덕적 해이에 경종'이 적시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편파 방송 시정을 언급하며 김미화(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김구라(황금어장), 김종배(시선집중) 등 좌편향 출연자들을 편중 섭외하여 왜곡 보도가 악순환 되고 있다며 특정 인물을 거론하였다.

22) 국정원 개혁위, 소위 '공영방송 장악 문건' 주요내용 언론 공개 권고 결정(2017. 9. 18)

23) 위원회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을 MBC 노동조합으로부터 필사본을 제출받았다.

국정원은 이 문건에서 MBC 정상화를 위한 3단계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간부진 인적 쇄신과 편파 프로그램 퇴출이다. 제작본부 산하부서·논설위원실은 대폭적 물갈이 인사하고, ‘편파방송 주도 시사고발프로(PD수첩, MBC스페셜, 시사매거진 2580후플러스) 제작진 교체, 진행자·포맷·명칭 변경으로 환골탈태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도 ‘손석희·김미화·성경섭·김성수 등 진행자와 김현정 작가·김종배 패널 등 반드시 교체’라며 특정 인물이 거론하였다. 2단계 목표는 노조 무력화인데 ‘좌파 정부 시절 비리 의혹 및 노조 배후 인물들의 부도덕성 등 내부비리 폭로 독려, 개혁 명분으로 활용’과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또 ‘노조의 불법파업·업무방해 행위는 사규에 따라 엄중 징계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사법처리로 영구퇴출 추진’이라고 적시하였다. 3단계는 소유구조 개편 논의인데 이것은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방만 경영 및 공정정보도 견제 활동을 강화, 스스로 민·공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 하라고 적시되어 있다.<sup>24)</sup>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문건은 2010. 5. 28.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담당부서가 작성해 6. 3.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 개혁위는 밝혔다.

이 문건에는 KBS가 2010. 6. 4.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곧바로 후속인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면밀한 인사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직안정 차원에서 신편직제 충원·문제간부 교체에 초점을 맞추며 복무동향을 엄정평가 하여 △좌편향 △무능·무소신 △비리연루 여부 기준 인사 대상자 색출하되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KBS에 일임토록 하며 중점 고려사항으로 좌편향 간부는 반드시 퇴출하고 무능·무소신 간부는 보직 변경하고 비리연루 간부는 신상필별로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sup>25)</sup>

## 마. 소결

2008. 4. 19. 한미 정상 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의 급격한 전면 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 쇠고기 2차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어 2008. 4. 29. MBC ‘PD 수첩’에서 미국산 소의 위험성을 다룬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였다. 같은 해 5. 2. 정부에서 미국산 소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 안전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따른 안전 조치에 대한 내용은

24)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국가정보원, 2010. 3. 2.

25) 국정원 개혁위, 소위 ‘공영방송 장악 문건’ 주요내용 언론 공개 권고 결정(2017. 9. 18.)

없었다.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광우병 촛불 집회는 이 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한 비판과 퇴진 요구로 확대되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의 정당과 약 1,000여 개의 시민단체 및 인터넷 카페가 모여 2008. 5. 6.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 대책회의'(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어 대한민국-미국 쇠고기 협상 반대 시위를 벌 였으며 점차 이명박 정부의 다른 정책에 대한 반대 의제도 등장하였다.

2008. 5. 부터 시작된 광우병 촛불 집회가 계속되면서 쟁점이 교육 문제, 대운하·공기 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 등으로 점차 정치적으로 확대되었다. 첫 집회 이후 수백에서 수십만 명이 참가하였으며, 6월 10일을 정점으로 하여 7월 이후에는 주말 집회가 계속되 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광우병 촛불집회로 지지도가 급락하자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부 비판적 인물 및 단체들을 다각도로 압박하면서, MBC 등 방송사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전반을 친정부화하는 정책을 시행 하였다.

2008. 8. 27.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문화예 술계를 좌우로 나누어, 좌파는 고사시키고 우파는 활성화 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 언급한 대로 건전문화 세력 형성을 위한 새 로운 ThinkTank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에 한국문화컨텐츠 산업협회를 등록 시키고 조직 기구에 '문화콘텐츠포럼'을 운영하였고, 우파 문화·예술계 실행기관으 로 '한국문화산업연구소' 설립하였고 한국문화컨텐츠 산업협회 산하 조직기구로 문화컨 텐츠산업연구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문화미래포럼은 「문화예술계 현안과 과제」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좌파 청산 을 위해 몇가지 주요 현안을 제시하였는데 영화계 좌파 세력의 청산, 민예총 등 문화예술 단체의 개혁, 한예종의 개혁, 국공립 예술단체들의 전속제를 철폐하고 계약제로 전환 할 것 등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 인 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김OO 국정원 기초실장 주 도로 「문화·연예인 대응 T/F」를 구성,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 비 판 연예인들의 퇴출을 압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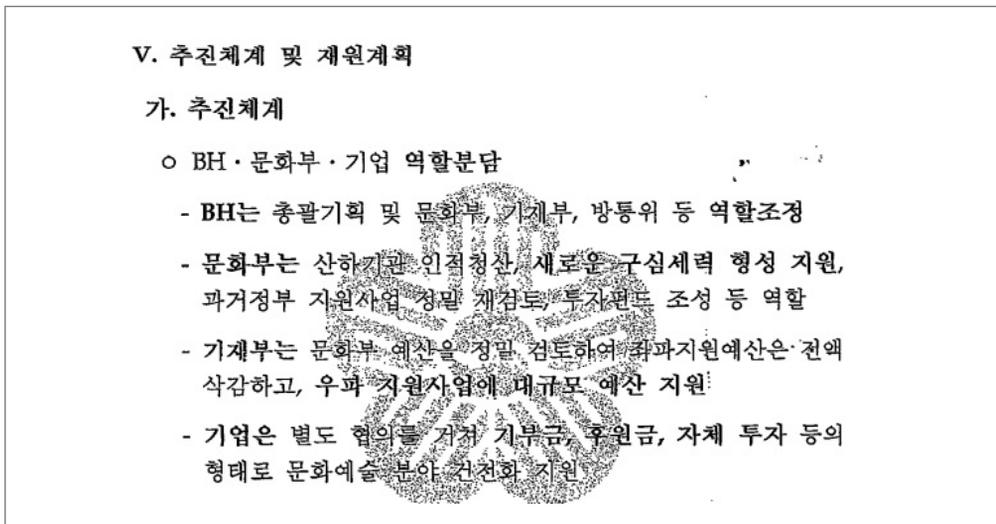
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공영방송 경영개입 정황이 담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등 2건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등에 보고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

문화·예술계 좌파 청산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청와대와 문화부, 기재부, 기업 역할을 정했는데 각각의 역할은 위에서 언급한 <표4>와 같다.

## 2.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예술인들의 탄압 사례

### 가. 문체부 산하 소속기관 기관장에 대한 강압적 교체

[그림-8]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일부 내용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내용을 보면, 위 그림과 같이 ‘V. 추진전략’으로 문체부는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 과거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등 역할’이라 제시되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유인촌 문체부 장관(재임 기간: 2008. 2. 29. ~ 2011. 1. 26.)을 임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직후인 2008. 3. 12. ‘광화문 문화포럼’(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 참석하여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sup>26)</sup>

26) 유인촌 장관도 ‘전 정권 인사 퇴진’ 압박, YTN, 2008. 3. 12.

유인촌 장관의 발언이 있기 하루 전인 3. 11.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안상수 대표는 당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들은 국가사회의 각계각층 중요자리에 광범위하게 남아서 이명박 새 정부 출범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그 자리에서 하루 빨리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에서 이뤄진 수많은 좌파적 법안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이런 좌파법안에 대한 심사기구를 만들어 정비하는 작업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도 전 정권에서 일한 사람은 물러나는 것이 정치적 상식이라고 밝혀 안대표의 발언이 청와대와 의 교감에서 나온 것임을 강하게 시사 한다고 언론은 보도했다.<sup>27)</sup>

유인촌 장관은 청와대·여권 등과의 사전 교감 여부를 묻는 언론사의 질문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 다음날이라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양심을 걸고 말하지만 의견 조율 등은 없었다. ‘광화문포럼’에서도 강연 때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산하 단체장 교체 등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자연스럽게 내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다.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 몰랐다. 내가 순진한 거다. 그래도 할 수 없다. 평소 소신이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sup>28)</su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sup>29)</sup> 당시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해당하는 2007. 9.부터 2008. 1. 경에 새로 임명된 기관장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정현),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래부), 국립오페라단(단장 정은숙) 등 7곳이었다. 또한 당시 임기가 1년 ~ 1년 반 정도 남아있는 기관장으로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철호 국립국악원장, 윤지관 한국문학번역원장 등이었다.<sup>30)</sup>

유인촌 전장관은 문화예술계 기관장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먼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을 지목했다.<sup>31)</sup>

27) 안상수 대표, “노 정권 추종세력 물러나라”, MBC, 2008. 3. 11. 안상수 원내대표 ‘인적청산’ 발언 파문, 경향신문, 2008. 3. 11.

28) 유인촌 장관 “나도 물러난 경험 … 당·청와대와 조율 안 해”, 중앙일보, 2008. 3. 17.

29) 제28조 (임기) ①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0) 좌파 코드 뽑아라 … ‘문화권력 교체’ 시작, 중앙일보, 2008. 3. 13.

31) 유인촌 문화, 실명거론 ‘사퇴 협박’ … ‘저격수’ 총대 땀다, 한겨레신문, 2008. 3. 17.

## 나. 문화예술계 기관장들의 강압적 교체 사례

### (1) 김정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부당 해임

김정현은 2007. 9.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라 한다) 2기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정현 전 위원장의 3년 임기 중 1년도 채 안 된 시점인 2008. 3. 17. 유인촌 장관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정현 예술위 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 아니겠는가”며, “끝까지 자리에 연연해한다면 재임 기간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며, “김정현 예술위원장을 예로 들어 보자. 예술위 내홍으로 김병익 위원장이 용퇴하면서 그 자리를 이어 받으셨는데, 김 전 위원장과 같이 1기 위원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연대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sup>32)</sup>

김정현 위원장은 이로부터 2008. 12. 5. 해임 통고를 받을 때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일지로 정리하여 언론사에 제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3)</sup>

**[표-11] 김정현 전 예술위 위원장 해임 경과(정리)**

시기	내용
2008. 3. 말	유인촌 장관과 식사시 유장관으로부터 앞서의 발언에 대해 사과 받음. 그러면서 크게 결심을 해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말을 전달
8. 11	문화부 예술국장 내방, 1기 위원들과 같이 사퇴할 것을 종용
9. 9.	문화부 예술정책과장, 한국문화진흥 뉴서울 골프장 감사, 전무 후보자 이력서 가져와서 처리할 것을 부탁
10. 9.	조선일보, '청와대가 사표 제출을 요구했으나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관장과 감사들' 제하의 기사에서 김정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등 4명의 공공기관 기관장과 23개 공공기관의 감사들 일람표 게재
11. 6.	문화부 김장실 차관이 문화부로 불러 10시에는 김윤수 현대미술관장, 11시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현 위원장에게 '유인촌 장관의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11월 말까지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
11. 26	문화부 감사관실에서 4명의 직원들이 감사를 위해 나옴. 일주일 전부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자료요구. 감사 나온 문화부 직원이 '한 건이라도 나올 때까지 끝까지 뒤지겠다. 아마 (위원장)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발언
12. 5.	해임 통고

32) “김정현·김윤수 안 나가면 재임 중 일으킨 문제 공개”, 유인촌 장관 “나도 물러난 경험 … 당·청와대와 조율 안 해”, 중앙일보, 2008. 3. 17.

33) “유인촌 장관, 그동안 애 많이 쓰셨소”, 프레시안, 2008. 12. 7.

“끝까지 자리에 연연해한다면 재임 기간 어떤 문제를 야기 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하겠다는 유인촌 장관의 발언은 2008. 11. 26.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예술위 특별조사 실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 대해 김정현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러한 모든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퇴하지 않자, 유인촌 장관은 문화부 직원을 보내 특별조사를 했는데, 그 직원들은 ‘한 건이라도 나올 때까지 끝까지 뒤통지겠다. 아마 (위원장)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뒤져서 찾아낸 해임사유가 대부분 틀리거나, 부실하거나, 이미 감사원의 감사로 지적되어 더 이상 다른 기관에서 감사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점이다.”<sup>34)</sup>

2008. 12. 5. 해임 통고를 받은 김정현 위원장은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09. 12. 6. 서울행정법원에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sup>35)</sup> 2010. 1. 26.에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해임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 사이에 문체부는 2009. 2.경 신임 예술위원장에 오광수를 임명하였다. 재판에서 승소한 김정현 위원장은 2010. 2. 1.부터 예술위에 위원장의 자격으로 정상 출근을 하였고, 2. 19. 국회에 두 명의 위원장이 출석하여 업무보고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 [그림-9] 당시 예술위 사태를 풍자한 이철수 판화가의 작품(출처 : 미디어오늘)



34) 프레시안, 위 기사.

35)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9513

이른바 예술위 ‘두 위원장’ 사태는 2010. 3. 19. 법원이 문체부의 항고를 받아들여 김정현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 정지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끝났다. 이에 대해 김정현 위원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위원장 지위에서 물러나지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0. 12. 24. 대법원에서 김정현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원고 김정현이 승소하면서 끝났다.<sup>36)</sup> 그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정권과 관계없이 보장된 자리인 만큼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라 하더라도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 특히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경우 독립성은 더욱 중요하다”며 “(당시)한나라당이 발의해 합의한 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치를 얘기할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sup>37)</sup>

## (2)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은 2003. 9.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임명되었고, 3년이 경과한 2006. 9. 연임이 되어 계속 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08. 3. 17.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의 경우 임명 초기 000 학예실장을 쫓아낸 것은 지나친 일 아닌가. 계속 싸움을 확대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끝내 자리를 고집하신다면 나로서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sup>38)</sup> 이른바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해석을 낳게 하는 발언이었다.

2009. 9.경이 김윤수 관장의 임기만료 시한이었지만 문체부는 2008. 11. 7. ‘채용계약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내면서 해임했다. 통지서 상에 사유는 없었다고 한다.<sup>39)</sup> 이에 김윤수 관장은 2009. 1.경 ‘계약해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정부 측은 김윤수 관장이 재임 중 2007. 5. 29.~7. 6.경 프랑스 화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작품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경위와 관련하여 문체부가 2007. 10. 23. ~ 26. 특별감사를 한 결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하여 ‘국내 반입 처리 불철저’, ‘진위여부 불분명’,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부적정’ 등의 이유를 들어 김윤

36) 대법원 2010두19317

37) 한지봉 두 위원장 사태 “유인촌 장관 사과하고 물러나야”, 미디어오늘, 2010. 12. 29.

38) 중앙일보, 위 기사, 2008. 3. 17.

39) 계약해지무효확인 소송 소장, 원고 김윤수, 2009. 1.

수 관장에게 자체 징계를 요구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2008. 1. 14. 경 문체부에 이 사건 미술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한 추가조사’를 요구하여 문체부가 같은 해 2. 21. 경 관세청에 ‘관세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관세청은 7. 9. 김윤수 관장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검찰청은 7. 30. 김윤수 관장에 대해 ‘고령’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8. 20. 문체부에 공무원 범죄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문체부는 11. 7. 채용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며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sup>40)</sup>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작품의 ‘최종 수집결정 이전에 심의결과 및 내용을 원고(김윤수)가 외부에 유출’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작품에 대한 제안가격 및 구입 가격 결정 상에서도 규정을 위반하는 등 뚜렷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규정하기 어렵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했으며, 관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술품은 세율이 0%인 무관세 품목으로서 굳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 위임 전결 규정상 작품의 운송 및 통관은 학예실장의 전결사항인 점 등을 들어 관세법위반죄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열거하며 원고인 김윤수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sup>41)</sup> 상급심인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sup>42)</sup>

김윤수 전 관장은 당시 과정에 대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sup>43)</sup>

“미술관장 마음대로 작품을 살 수 없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체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1차 심의위원회에서 구입을 결정한 뒤 중개사에 조건을 붙여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미술품의 진위 확인과 가격협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내가 그들에게서 뒤통을 받고 미술품을 구입하기로 약속해준 것처럼 만들어간 것인데 누명을 씌운 것이다. 편지 내용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점을 잘 이해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8개월을 잊을 수 없다. (퇴임) 압력과 회유, 협박에 시달렸다. 때론 공개적인 수모도 겪었다. 이런 수모를 견뎌가며 버텼는데 강제로 퇴출당했을 때는

40) 답변서, 피고 대한민국(사건 2009구합2290, 계약해지무효확인), 올촌, 2009. 2.

41) 서울고등법원 2009누25066(2010. 4. 8.) 원고 김윤수는 재판 중 ‘채용계약 해지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서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42) 대법원 2010두19317

43) “유인촌 장관, 반말로 지시하며 공개적으로 모욕됐다”, 한겨레신문, 2010. 4. 14.

정말 힘들었다. 유인촌 장관은 그의 첫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권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물러나는 게 순리’라고 했다. 내 이름을 꼭 짚어서 말했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재임 때 했던 일을 낱낱이 조사해 밝히겠다고 했는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게 수치스러웠다.

각 기관장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많이 당했다. 함께 참여했던 기관장들도 뒤에서 수군거릴 정도였다. 그는(유 전장관) 내게 반말도 서슴지 않았다. 문광부가 현대미술관과 관련한 사업을 논의할 때 나를 뺀 채 미술관 직원들을 따로 불러 회의하는 등 날 모욕하기도 했다.”

김윤수 전 관장은 ‘미술관장이 임기나 채우는 사무관장이 아니’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술관장을 바꾼다는 것은 외국에선 비웃음당할 일’이라면서 ‘최소 5~6년 임기를 보장해 미술관장의 뜻이 잘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sup>44)</sup>

### (3)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에 대한 교수직 박탈

황지우(본명 ‘황재우’)는 1997년에 한예중 연극원 극작과 교수로 임용되었다.<sup>45)</sup> 이후 2004. 3.경부터 같은 학교 연극원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06. 3. 1. 임기 4년의 총장에 임명됐다. 총장으로서의 임기 중반 경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새로 부임한 직후인 2008. 3. 28.경 한예중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유인촌 장관은 ‘U-AT 교육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sup>46)</sup> 이 과정에 대해 황지우는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sup>47)</sup>

“‘U-AT 교육사업’은 컴퓨팅 기술에 전통음악, 영상, 퍼포먼스 등 여러 예술 장르의 ‘통섭’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한예중은 문체부 지침에 따라 매년 학교 전체예산한도(‘Ceiling’) 10% 감축 누적에 해당하는 ‘신규중기과제(4년)’로 2007년 문체부와 기획예

44) 한겨레신문, 위 기사.

45)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0. 6. ‘문화발전 10년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된 국립예술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1991. 12. 제정된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1993. 3. 8. 음악원을 개원하면서 개교하였고, 1998년 소관 부처가 문화관광부로 바뀌었고, 1999. 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서초동캠퍼스를 신축하였다.

46) ‘U-AT(유비쿼터스 - 아트 테크놀로지) 통섭교육’ 사업은 과학기술과 예술 두 영역 간의 융·복합형 교육사업으로 해외에서는 미국 MIT공대 건축과의 ‘미디어랩’, 카네기멜론대학교의 ‘ETC센터’, 독일 칼스루에 대학의 ‘예술과 미디어 기술센터 ZKM’ 등의 사례가 있다(참고인 황지우 진술조서 (2018. 1. 22.).

47) 황지우, 진술조서 첨부(2018. 1. 22.),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지위 복직을 위한 소송의 건」,

산처에 ‘U-AT통섭교육사업’을 신청, 매년 40억 예산을 반영 받았고, 같은 해 12월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2008년 3월부터 본교 ‘미래교육준비단’에서 ‘사운드 알고리즘 랩’, ‘키네틱 아트 랩’, ‘모션 그래픽스 랩’ 등 9개 랩의 기초리서치 과제(2008년 목표과제)와 10개 U-AT시범교과를 힘차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 시대적 요청으로 보나 미국 유럽 등 선진예술교육의 새로운 트렌드로 보나 크리에이티브 산업에서의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2008년 문화부 정책기조로 보나 오히려 문화부 장관이 격려하고 촉진해야 마땅할, 그리고 이미 행정, 국회에 의해 4년 중기과제로 승인된 본 사업을 시행 1년도 못되어 장관이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 본인이 누차에 걸쳐 면담 요청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U-AT 통섭교육은 내가 총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08년 10월 국회 문방위 예산심의에서도 한예종 U-AT 통섭교육사업 예산의 갑작스런 전액삭감의 문제점에 대해 의원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반대에 부딪쳐 끝내 반영되지 못하게 된 것은 결국 본인의 총장직 퇴진에 대한 간접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압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008. 12. 한예종 미래교육준비단은 2008년 2학기에 개설한 ‘통섭시범교과’ 8과목, 포스텍 교차강의 수강생 등 총 223명(응답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수강생의 94%가 ‘통섭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앞으로 통섭수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97%가 공감했다. 교차강의에 대한 반응도 비슷했다. 포스텍 교수 15명이 릴레이 특강 형식으로 운영된 ‘과학의 산책’ 수업에서 한예종 학생 8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sup>48)</sup>

한예종은 기 투입된 예산의 낭비와 콘텐츠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잃는 손해 등을 우려하여 문체부 기획재정담당관실에 2009년 U-AT 사업 예산을 신청하였다. 문체부는 2008. 10. 7. 경 2009년도 문체부 예산사업에서 U-AT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U-AT 사업 예산을 최종적으로 미반영하였다. 이에 황지우 전 총장은 U-AT 사업을 ‘AT 시범교육사업’으로 축소·재정비하여 한예종의 ‘기성회비 및 발전기금’ 재원으로 2009년에도 U-AT 사업을 운영하였다.

우리 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문체부 감사실은 2009. 3. 18. ~ 4. 24. 경까지 한예종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인이 예년보다 2배가량 많았으며, 이 사건 종합감사 통보 당시 감사기간의 중기가 명시

48) 융합 흐름 반영한 실험 ... 학생들 ‘만족’ 높았는데, 교수신문, 2009. 6. 1.

되어 있지 않았고, 최종 감사기간이 예년보다 4배가량 길어 감사의 규모 및 내용이 예년 감사와 차이가 있었다. 감사는 ‘U-AT 사업’ 등에 집중되었다. 당시 미래교육단장 심광현과 참고인 김OO, 김봉렬, 박OO, 박종원, 한예종 교협 역시 이 사건 종합감사는 기존 한예종에 대한 종합감사와 달리 참여한 감사관 총 인원, 감사기간 등의 측면에서 “문체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이 사건 종합감사의 진행과정을 보면, 이 사건 종합감사가 ① 총장퇴진 압박, ② 한예종 구조개편 내지 리모델링을 겨냥한 전형적인 ‘표적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참고인 박OO도 이 사건 종합감사의 목적이 한예종 총장 황지우 퇴진 압박이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sup>49)</sup>

황지우 총장은 2009. 5. 19. 이 사건 종합감사가 “전형적인 표적감사”라고 비판하며 총장직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문체부는 2009. 5. 30. 황지우가 제출한 사퇴서를 수리하였다. 이후 한예종은 황지우가 한예종 총장으로서의 임기만료 전 사임하였으므로 종전 교수 등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황지우에 대한 교수직 퇴직처리를 하였다.

황지우 전 총장은 교수직 지위 확인 소송을 하였고, 대법원은 교수가 총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총장직에서 사직한 경우에도,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 등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 등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고 판단하여, 황지우의 한예종 교수 직위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을 파기·환송하였다.<sup>50)</sup>

황지우 전 총장은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위 2009. 3. 18.~4. 24.경까지 한예종 종합감사 과정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점검반이 개입한 ‘표적감사’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sup>51)</sup>

“2009. 4. 23. 밤10시부터 12시경까지 총리실 공직윤리점검반 3명, 문화부 감사실 김OO 사무관 외 2명이 총장 집무실을 심야수색하였고, 집무실 뒤편(화장실)에 뒹터본 본인의 개인 사물함을 ‘사전 영장’ 없이 뒤졌고, 1994년 경 본인이 백두산, 두만강 답사 때 관광기념품으로 구입한 북한 우표집과 북한 화폐 2장을 사진 촬영해 갔으며, 동년 5. 19. ‘문화부 관계자’는 국민일보 임OO 기자에게 총장실에서 “북한 우편소인이 찍힌 우편물이 여러 통 나왔다”라고 흘려 이를 취재케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남용된 국가권력이

49) 본 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사건번호 : 2017특24)] 조사결과보고서 참조. 심광현·김OO·박OO은 한예종 교수, 김봉렬은 한예종 총장, 박종원은 전 한예종 총장, 박OO는 문체부 예술정책관 이다.

50) 대법원 2010두15490

51) 황지우, 위 진술조서 첨부자료.

개인의 사적인 삶의 영역까지 침범한 ‘인권’ 침해의 심각한 상황이라 본인은 생각하며, 지난 7, 80년대 공안적 공포정치에 ‘트라우마’를 경험한 본인(1973년 반유신시위로 구속, 1980년 광주시민항쟁 시 포고령위반으로 구속 및 합수부의 가혹한 고문 경험)과 그 가족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2012. 5. 16.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 추진 체계(2008. 8. 28. 작성)」제목의 문건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됐지만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고 돼 있다. 조직 설립 목적도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명시돼 있다. 000 전 총리실 주무관의 USB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팀이 확보한 이 문건의 작성자는 진OO 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 제출 유도’라는 문구가 있다.<sup>52)</sup>

이어 2012. 12. 5. 언론에 2009. 4. 당시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지시로 시작된 ‘한예종 공직기강 점검’의 조치 결과로 ‘문화부 통보(4. 28), 황지우 총장 사퇴(09. 5)’가 적혀 있는 사실이 보도되었다.<sup>53)</sup>

위원회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9년도 한예종에 대한 감사에 개입하였는지 여부와 내용과 경위, 목적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한정된 조사기간과 인력, 조사 권한 등의 문제로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였다.

#### (4) 이명박 정부 초기 문화계 기관장에 대한 교체

2012. 7. 30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청와대 문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집행 결과 분석’을 발표하였는데 이 발표에서 ‘이명박 취임 1년뒤 문화계 기관장 축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52) 공직윤리지원관실, MB판 ‘일심(一心)회’였다, 프레시안, 2012. 5. 16.

53) 진보판사 동향에 이견희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문어발 사찰’, 한겨레신문, 2012. 12. 5.

[표-12] 이명박 취임 1년 뒤 문화예술계 기관장 축출 결과

기관명	축출 인사	퇴출일	후임 인사	직책	주요경력	비고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김정현	2008.12	오광수	위원장	- 국립현대 미술관장	- 해고무효 소송 승소, 한지봉 두위원장 체재
국립 현대미술관	김윤수	2008.11	배순훈	관장	- 대우전자 CEO	- 해고무효 소송 승소
한국예술 종합학교	황지우	2009.5.19	박종원	총장	- 한예종 영상원장	- 해고무효 소송 승소
영화진흥 위원회	안정숙	2008.5	강한섭	위원장	- 영상물등급 위원회 위원	- 이명박후보 문화예술정책위, - 뉴라이트 문화미래포럼 발기인
			조희문	위원장	- 인터넷문화 협회 회장	
국립 중앙박물관	김홍남	2008.4.7	최광식	관장	- 고려대 박물관장	- 이명박·김윤옥 부부, 고대박물관 문화예술최고위 과정(APCA) 1기 수료 2008.4 출마 낙선
국립중앙극장	신선희	2008.	임연철	극장장	- 동아일보 논설위원	- 이명박후보 경선대책위 언론특보 - 이명박후보 언론위원회 위원
국립국악원	김철호	2009.1	박일훈	원장	-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실장	
국립오페라단	정은숙	2008.7	이소영	단장	-	- 오페라단 해고, 허위경력 논란
			김OO	사무국장	- 전 청와대 행정관	- 청와대 대변인실 재직 시 업무 부적응 등으로 퇴출
예술의전당	신현택	2008.7	신홍순	이사장	- LG 상사 CEO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2008.11	고학용	이사장	- 조선일보 논설위원	- 이명박 대통령 고려대 동기동창, 언론특보
한국방송 광고공사	정순균	2008.6	양휘부	사장	- 전 KBS 기자 - 방송위원회 위원	- 이명박후보 방송특보단장
게임물 등급위원회	김기만	2008.12	이수근	위원장	- 중앙일보 정치부장	- 2006년 KBS이사에 내정됐다가 돌연 사퇴 - 위원장 선출 당시 청와대·문체부 압력 논란

기관명	축출 인사	퇴출일	후임 인사	직책	주요경력	비고
영상물 등급위원회	이경순	2008.6	지명혁	위원장	-	- 한강사랑 시민연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김주호	2008.7	이대영	원장	- 중앙대 교수	- 뉴라이트 자유주의연대 문화위원장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송재호	2008.10	정갑영	원장	-	-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
신문발전 위원회	장행훈	2008.11	김호준	위원장	- 전 문화일보 편집인	
			류OO	사무국장	- 조선일보 경기취재팀장	
신문유통원	강기석	2008.11	임은순	원장	- 경향신문 논설위원	- 이명박 후보 언론위원회 위원 -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실 자문위원
뉴스통신 진흥회	이창우	2008.10	최규철	이사장	- 동아일보 논설주간	- 이명박 후보 언론특보
아리랑TV	장명호	2008.6	정국록	사장	- 진주MBC 사장 - EBS 비상임이사	- 이명박후보 방송특보
			이OO	방송 본부장	- KBS 주간	- 이명박후보 TV토론팀장
경북관광 개발공사	김진태	2008.4	고웅삼	감사	- 강재섭 전 의원 사무국장	- 한나라당 17대 대통령선거 대구서구 선대본부장
한국관광공사	오지철	2008.3	이참	사장	- 방송인	- 소망교회 집사, 한나라당 선대위 산하 '한반도대운하 특위' 특별보좌관
국민체육 진흥공단	박재호	2008.5	김주훈	이사장	- 조선대 총장	- 한나라당 체육청소년분야 선대위원장
			김OO	상무이사	- 동아일보 부국장 - 한국체육 언론인회 이사	- 이명박후보 언론위원회 위원

## 다. 방송·연예 부문

### (1) 국정원의 관여 내용

국정원 개혁위는 2017. 9. 11.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결과』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원세훈 국정원장은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했고, 김OO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 정부 비판 연예인들의 퇴출을 압박하였다고 발표했다.<sup>54)</sup>

### (2) 국정원 작성,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 주요 내용

2010. 2. 16.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재철 당시 청주 MBC 사장을 차기 사장으로 내정했고, 이어 2. 26.경 김재철은 주주총회를 통해 MBC 28대 사장으로 선임되었다.<sup>55)</sup>

김재철 사장의 선임 배경에 대해 김우룡 당시 방문진 이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쉽게 말해 말귀 잘 알아듣고 말 잘 듣는 사람이냐는 게 첫 번째 기준이었다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어제(3월8일)부터 대학살이 시작됐죠. 인사가 잘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정방송을 실현하고 무능한 사람을 정리하고, 특정 정권에 빌붙은 사람을 척결한다는 의미에서는 80점 정도는 되는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는 김재철 사장(혼자 한) 인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김 사장이 좌파들한테 얼마나 휘둘렸는데, 큰집도(김사장을) 불러다가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만들어진 인사입니다).”고 발언했다.<sup>56)</sup>

신임 김재철 사장의 취임 무렵, 국정원에서는『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을 작성하여 지휘부에 보고했다. 이 문건은 당시 원세훈 원장의 지시에 따라 신임 김재철 MBC 사장 취임 예정을 계기로 ‘공영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 퇴출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체질개선 추진’ 등의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발표했다.

54) 국정원, 보도자료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결과』, 2017. 9. 11.

55) 김재철, MBC 사장 공식 선임, 뉴시스, 2010. 2. 26.

56) 신동아, 「(단독보도) “김재철 사장, ‘큰집’에 불러가 쪼인트 맞고 깨진 뒤 좌파 정리했다”」, 2010. 4. 1. 해당 기사가 게재된 『신동아』 4월호는 3. 17.에 발행되었다. 김우룡 이사장은 위 발언으로 인한 파문 때문인지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2010. 3. 19. 사퇴했다.

따라서 당시 ‘청와대’에서 신입 김재철 사장을 불러 소위 ‘좌파’ 연예인 및 방송인들에 대한 ‘대학살’의 지시를 내렸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국정원에서 문건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3) 피해 사례

#### 가) 방송인 김미화

위 국정원에서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을 보면, “『손석희의 시선집중』·『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등 左편향 프로들은 사내(社內) 높은 반발과 높은 청취율을 내세우며 ‘무풍지대(無風地帶)’로 군림”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고, 이들 ‘左편향 프로 제작진’의 경우 ‘담당 PD는 물론, 프리랜서 작가·외부 출연자까지 전면 교체’하는 전략이 수립되어 있다.

이어 ‘손석희·김미화·성경섭·김성수 등 문제 진행자들도 반드시 교체’할 것과 ‘김현정(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등 左편향 프로그램 작가들과 김종배(『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뉴스브리핑 진행) 등 고정 패널로 출연중인 외부(外部) 좌파(左派) 인물들도 일소’ 등 개별 인물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교체’, ‘일소’ 등 해당 프로그램에서 배제할 것을 제시했다.

당시 신청인 김미화가 진행하던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은 라디오 시사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1~4부로 나누어 방송되었다. 김미화는 이 프로그램 진행자로 2003. 10.경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2011. 4. 25.경 하차할 때까지 약 8년6개월여 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하차 당일 신청인 김미화가 하차 의사를 밝힌 지 2시간 30분만인 오후 4시께 후임자가 결정되었다.<sup>57)</sup>

이에 MBC라디오 PD들은 이튿날인 4. 26. 총회를 열고 당시 이OO MBC 라디오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체 38명의 PD중 26명이 참여했고, 본부장 사퇴 요구에는 부장급 PD까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디오 PD들은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에 대해 ‘눈높이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자긍심이 강했고, 김미화가 하차한 이후 회사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회사 노동조사 소식지에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sup>58)</sup>

57) MBC 김미화 하차 막전막후 상황, 시사인, 2011. 5. 6. 제190호.

58) 문화방송노보 제159호,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2011. 6. 2.

한국리서치가 주관하여 지난 5. 12.부터 25일까지 2주간 라디오 청취성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청취율은 김미화 씨가 진행하던 지난 3월의 7.4%에서 5.3%로 30%가까이 감소했다. 3월 조사 당시 전체 5위이던 프로그램별 청취율 순위 역시 10위로 내려앉았다. 김미화씨가 물러나고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가 최명길 부국장으로 교체된 시점은 4. 26.이다. 그후 3주 만에 청취율이 2.1%만큼 감소한 것이다. 2.1%라는 청취율 수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웬만한 음악FM 주요 프로그램의 청취율 자체에 해당되는 큰 수치이다.

신청인 김미화는 문성근 등과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를 검찰에 고소했다.<sup>59)</sup>

서울지검은 2017. 1. 17.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문화·예술계 불법관여 및 김재철 전 MBC 사장과의 공모에 의한 MBC 방송 장악 등 사건 수사 결과’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 김미화의 지위 박탈을 확인했다고 발표하였다.<sup>60)</sup>

#### 나) 가수 신해철

신청인 김상균은 가수 신해철이 2012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고스트스테이션’ 과 2012년 KBS의 ‘두드림’의 에서 하차 하게 된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규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가수 신해철이 진행했던 ‘고스트스테이션’은 2001. 4. 1.에서 시작되었는데 방송국과 방송 시간이 변경되어 방송되다가 2011. 5. 9.부터 MBC 라디오 봄철 프로그램 개편으로 MBC FM 4U를 통해 방송되었는데, 2012. 10. 22. 폐지되었다.<sup>61)</sup>

가수 신해철은 2011. 11.부터 KBS 2TV의 토크쇼 프로그램 ‘이야기쇼 두드림’에 출연하다가, 2012. 4.에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였는데 같이 출연하고 있던 소설가 황석영, 문화기획자 송승환도 같이 하차하였다.<sup>62)</sup>

2017. 11. 15. 경향신문은 ‘[단독]국정원 연예인 불법사찰 문건 MB맨 임태희가 직접

59)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이명박 고소 ... 박근혜·김기춘 포함, SBS, 2017. 9. 25.

6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원세훈 前국정원장의 문화·예술계 불법관여 및 김재철 前MBC 사장과의 공모에 의한 MBC 방송 장악 등 사건 수사 결과’, 2018. 1. 17.

61) MBC라디오 국장 “청취율 저하, DJ들과 청취자 소통 부족했다”, 노컷뉴스, 2012. 10. 18.

62) ‘두드림’ 송승환·신해철 “6개월간 좋은시간” 하차소감, 스타뉴스, 2012. 4. 29.

챙겼다' 기사에서 '2011년 7월 무렵 국정원이 작성한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 '좌파 연예인들의 등록금 불법시위 참여 제어', 'MBC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 등의 문건에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반값 등록금 실현 요구'를 비롯한 정부 비판적 사회 활동을 해오던 배우 김여진·김규리, 방송인 김미화, 가수 고 신해철·윤도현씨 등 연예인들을 '강경 좌파'로 분류하고 직원들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국정원은 이들 연예인을 출연 중이거나 출연이 예정된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의 공작을 했다'고 보도하였다.<sup>63)</sup>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MBC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은 신청인 김미화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원 문건이며, 이 문건의 내용은 'MBC는 4월 김미화 7월 김여진 하차시킴. 사규인 방송심의규정 개정하여 소셜테이너 출연제한 근거규정 마련. / 후속 조치로 윤도현 등 추가퇴출 추진 윤도현 김규리를 장기출연, 프로 종결 이유로 8월경 자연스레 교체예정. / 10월중 가을개편시 신해철 김어준도 하차시켜 순차적 물갈이방침'이다.

그리고 신청인 김미화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국정원 문건 중 신해철이 언급된 문건은 위의 'MBC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을 포함해 4건인데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2010. 1. 19.), '김제동 등 좌파성향 방송연예인 순화 견제 활동방향'(2010. 6. 10.), '중복세력퇴출 심리전 강화'(2010. 11. 5.)이다(〈표7〉 참조).

경향신문의 보도와 신청인 김미화가 제출한 국정원 문건을 보면, 신해철은 국정원에 의해 MBC 라디오 프로그램 '고스트스테이션'과 KBS의 '두드림'에서 하차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방송인 김제동

방송인 김제동은 2017. 9. 13. 2017년 MBC 파업 집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기 본인이 국정원 직원을 만났던 일화를 발언하였는데 이 발언 내용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총파업특보 7호-MBC 파괴공장 '판도라 상자' 열렸다』(2017. 9. 14.)에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64)</sup>

김제동 씨는 "그동안은 쪽팔려서 말 못했다"면서, 자신을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을 직접 만났던 일화를 MBC 조합원들 앞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이 '몇 시 몇

63) [단독]국정원 연예인 불법사찰 문건 'MB맨' 임태희가 직접 챙겼다, 경향신문, 2017. 11. 15.

64)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총파업특보 7호-MBC 파괴공장 '판도라 상자' 열렸다』, 「“우리가 블랙리스트 피해자이자 증인입니다”」, 2쪽, 2017. 9. 14.

분, 서래마을에서 김제동 만남' 이런 보고 문자를 (윗선이 아닌) 저한테 잘 못 보냈다.” 김제동 씨는 ‘문자 잘못 보냈다’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직원을 직접 만나게 됐다고 전했다. “자신을 VIP한테 ‘직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 때는 안 믿었다. 그런데 이번에 문건 나온거 보니까 진짜더라”

술자리에 마주앉은 국정원 직원은 김제동 씨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노제사회도 봤으니 1주기는 안 가도 되지 않냐”며 “김제동 씨 방송해야 되지 않냐”, “VIP가 김제동 씨 걱정이 많다”는 말을 꺼냈다. 당시 ‘VIP’,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니, 밋보이면 방송 출연 어렵다는 얘기였고, 사실상 ‘밥줄’ 끊길 각오를 하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였다.

김제동 씨는 그러나 “그 때만 해도 촌놈 시절이어서 무서운 게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거꾸로 국정원 직원에게 충고했다. “VIP 임기는 4년 남았지만 내 유권자 임기는 평생 남았다. 국가기관 정보원이 민간인을 협박하면 훗날 당신에게도 뒤탈이 생긴다. 난 그 행사 갈 거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라.” 소주 4병 마신 술값까지 호쾌하게 계산하고 나왔지만, 집 안에 들어서서는 순간 김제동 씨는 무릎이 ‘딱’ 꺾일 정도로 무서웠다고 했다. “아, 그 얘긴 하지 말걸... 온갖 생각과 자괴감이 들었고, 공황장애 증세까지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보면 국정원 직원이 방송인 김제동을 사찰하였고, 사찰한 내용을 윗선에 보고하였으며, 김제동에게 더 이상 활동하지 말라는 경고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총파업특보에는 국정원의 ‘좌파 연예인 대응 T/F’의 조치가 MBC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정리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65)</sup>

**[표-13] 국정원 T/F - MBC 장악 주요 경과**

일시	국정원 좌파연예인 대응 TF 조치	MBC 상황
2009. 7.	국정원 좌파연예인 대응 T/F 가동	
2009. 10.	특정 연예인 기획사 세무조사 유도	- 김제동 출연 <오마이텐트> 편성 불가 - <100분 토론> 손석희 MC 퇴출
2010. 2.	MBC라디오 진행자 교체(연예인) 유도	
2010. 3.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수립	- 김재철 사장 취임 -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 “큰 집 가서 조인트 맞고 좌파 정리” 발언
2010. 4.	MBC 김제동 출연 <환상의 짝꿍> 폐지 유도	- 김제동 출연 <환상의 짝꿍> 폐지 - 김재철 사장 반대 노동조합 39일 파업

65)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위 총파업특보, 6쪽.

일시	국정원 좌파연예인 대응 TF 조치	MBC 상황
2010. 8.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보고	- <PD수첩>'4대강 수심 6m 비밀' 불방 - 청와대 '대통령과의 대화' 생중계 압력
2011. 4.	MBC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	-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김미화 퇴출 - <시선집중> 시사평론가 김종배 퇴출
2011. 8.	MBC 문화·연예계 출연인물 퇴출 유도 - 특정인물 전보·하차, 사규 출연제한 규정 마련	- MBC 소셜테이너 금지 사규 신설 - 김여진, 김장훈, 윤도현, - 박미선, 김어준, 이하늘 퇴출

위 [표12]를 보면 2010. 김제동이 출연하던 MBC <환상의 짝꿍>이 국정원 좌파연예인 대응 T/F의 조치로 폐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언론에도 보도되었다.<sup>66)</sup>

그리고 방송인 김제동은 신청인 김미화가 제출한 국정원 문건에도 적시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2010. 1. 19.), '여성부 좌파연예인활용 홍보활동 시정필요'(2010.2. 22.), '김제동 등 좌파성향 방송연예인 순화 견제 활동방향'(2010. 6. 10.)이다(<표6> 참조).

#### 라) 배우 문성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배우 문성근을 불법 사찰하였다고 언론에서 보도하였다. 2010년 쯤부터 국정원이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불법 사찰을 벌인 정황을 검찰이 최근 포착했는데 '이메일 침투' 등이 명시된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는 배우 문성근의 개인 PC를 해킹해 자료를 수집했다고 보도하였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종북·좌파세력 척결'을 지시하였는데 국정원 3차장 산하에 특별팀을 운영하였고 이 특별팀의 내부 보고서에 배우 문성근 씨의 개인PC를 해킹해 자료를 수집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보도하였다.<sup>67)</sup>

또 배우 문성근은 이명박 정권 국정원으로부터 배우 김여진 씨와 합성된 나체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배우 문성근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국정원 직원 유 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sup>68)</sup>

66) 김제동 '환상의 짝꿍' 국정원 언급 후 돌연 폐지, 한국일보, 2017. 9. 12.

67) JTBC, 「국정원, 1010년 악성코드로 불법사찰 정황... "문성근 PC 해킹"」, 2018. 4. 24.

68) SBS, 「문성근, 국정원 합성사진 유포 피해 이어 PC 해킹도 당했다」, 2018. 4. 25.

## 라. 연극 부문

이명박 정부는 연극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극평론가 000, 연극 연출가 000, 연극 연출가 000의 진술을 종합해서 연극 부문의 블랙리스트 사례를 정리하였다.

### (1) 연극계 시국선언의 배경

2009. 6.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이명박 정부의 사정 권력기관 중립화를 촉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전국에서 일어났는데, 2009. 6. 25. 연극인 1,037명이 현 시국에 대한 연극인 시국선언을 하였다.<sup>69)</sup>

### (2) 연극계 시국선언이 발표된 경위

위 연극인 시국선언의 최초 제안자들은 채승훈, 심재찬, 박근형, 이성렬 등이고 박상현이 초안을 맡았고 참고인 김재엽과 박정희, 박혜선 3명이 선언에 참여할 사람들을 확인했고 박상현, 참고인 김명화가 선언문을 작성하였다.<sup>70)</sup> 연극인 1,037명이 참여한 이 연극인 시국선언에 대해 참고인 000는 이 시국선언이 연극계 블랙리스트의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sup>71)</sup>

### (3) 블랙리스트가 적용된 사례

가) 2009년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참고인 김명화는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1) 2009. 8.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했던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당시 심사위원은 5명이었으며 참고인 000를 포함해서 4명은 연극인이었고 한명은 문체부 문화정책과장이었다.
- (2) 문체부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경우가 많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했고 심사위

69) 연극인 1천여명 시국선언, 한겨레신문, 2009. 6. 25.

70) 참고인 000 진술녹취(2018. 3. 8.)

71) 참고인 000 진술녹취(2018. 2. 23.)

- 원으로 참여했던 문체부 문화정책과장이 심사 과정을 관찰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 (3)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연극인이자 서울문화재단 관계자이기도 한 사람이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신청한 몇몇 팀들에게 ‘저 팀들은 시국선언 발기인들이니까 빠져’를 얘기를 했다.
- (4) 그 후 문체부 쪽에서 그 팀을 배제하라는 오더를 받았다는 얘기를 지인에게 들었다.
- (5) 또 연극인 시국선언 때문에 유인촌 장관이 언짢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는 후 배로부터 시국선언 발기인 중심의 블랙리스트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 입수해서 보았는데 참고인 000의 이름도 포함되었고 리스트 명단 자체를 장관이 갖고 다니면서 꺼내서 심사할 때 반영한다는 루머들이 돌아다녔다.<sup>72)</sup>

#### 나) 명동예술극장 신작개발 프로그램 워크숍의 경우

참고인 000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1) 2010년에 지원금 사업에서 계속 탈락하였는데 본인이 지원 프로그램에서 탈락했다는 얘기를 국공립 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 들었다.
- (2) 시사인 고재열 기자가 참고인 000, 참고인 000, 박상현, 이동형이 연극계 블랙리스트에 있다는 얘기를 하였고, 당시 참고인 000의 극단 홈페이지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근조를 걸었는데, 이 극단 홈페이지를 복사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나눠줬다는 얘기를 명동예술극장 기획팀장에게 들었다.
- (3) 중추적인 멤버의 극단들인 백수광부, 골목길 등이 감사를 받았다고 들었고, 참고인이 명동예술극장 신작 개발 프로그램 워크숍에 추천 되었는데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서 배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sup>73)</sup>

#### 다) 극단 골목길, 극단 백수광부 등에 대한 감사의 경우

참고인 채승훈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1) 연극인 시국선언 후 극단 골목길(박근형), 극단 백수광부(이성렬) 등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이 대표로 있는 극단들이 감사를 받았는데 극단이 감사를 받는 일에는 없었다.

72) 참고인 000 진술녹취(2018. 2. 23.)

73) 참고인 000 진술녹취(2018. 3. 8.)

(2)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연극인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유인촌 장관 본인이 연극인인데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굉장히 화가 났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극인들을 두서없이 감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산울림(임영웅)은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없는데도 감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연극계 여러 단체들이 감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sup>74)</sup>

참고인 000, 000, 000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 (1) 채승훈, 심재찬, 박근형, 이성렬 등이 제안하고 박상현이 초안을 맡고 참고인 김재엽과 박정희, 박혜선이 선언에 참여할 사람들을 확인하고 박상현, 참고인 김명화가 선언문을 작성하여 2009. 6. 26. 연극인 1,037명이 시국선언을 하였다.
- (2) 그 후 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리스트가 연극계 블랙리스트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연극계 블랙리스트를 유인촌 장관이 가지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다.
- (3) 이러한 얘기가 있는 후, 2009. 8.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했던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에서 시국선언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팀들은 제외하라는 문광부의 지시가 있었다.
- (4) 참고인 000은 명동예술극장 신작 개발 프로그램 워크숍에 추천 되었는데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서 배제되었다.
- (5) 시국선언 이후 예전에는 없던 극단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극단 골목길(박근형), 극단 백수광부(이성렬) 등의 극단이 감사를 받았고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산울림(임영웅)도 감사를 받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2009. 6. 연극인 시국선언 이후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연극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고, 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인사들이 지원 사업에 배제되고, 프로그램에 제외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극단 중 몇몇이 감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고인들이 언급한 당시 문체부 문화정책과장, 당시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를 조사하지 못하였고, 이 연극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하지 못하여 이 연극계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시사인 고재열 기자가 운영하는 독설닷컴에 ‘연극인 선언에 연극계 출신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움찐했다. 그는 “연극인 시국선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딱 그만두고 싶었다”라고 나중에 심정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연극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괴로운

74) 참고인 000 진술녹취(2018. 3. 18.)

사람은 연극인이었다. 연극인 선언을 주동했던 소장 연출가 5인에 대한 살생부가 나돌았다. 그리고 연극 관련 상을 싹쓸이하고 지원금 공모전에서 빠지지 않던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살생부에 이름을 올린 한 연출가는 “정부 돈 받고 정부 비판을 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돈 안 받고 실컷 비판하겠다”라고 말했다.’고 게시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다.<sup>75)</sup>

2009년 연극인 시국선언의 최초 제안자들인 채승훈, 이성렬과 이 시국선언문을 작성한 박상현이 2013. 9. 3.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서에서 언급되는데 2017. 10. 30.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발표한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 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자료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左편향 대응책 보고(2013. 9. 3.)에 적시되었다. 참고인 채승훈, 이성렬, 박상현에 대한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 [그림-10]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2017. 10. 30.) 자료 중

<p>붙임 3. 연극계 시국선언</p> <p>□ 장소 및 일시 : 2013.7.25, 대학로 노을소극장</p> <p>□ 공동명의 : 기국서, 김태웅, 박상현, 오세곤, 오태영, 윤한솔, 이성열, 이해성, 이호성, 전용환, 채승훈, 최종원</p> <p>□ 시국선언 내용</p> <p>- 진실 앞에 무릎을 꿇어라 -</p> <p>우리는 지금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대화록 공개, 그리고 여권의 국가기밀문서 대선 이용 등의 사실을 보며, 늘 진실의 문제와 마주하는 연극인으로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귀중한 한표를 행사한 민주시민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p>
--

75) 고재열의 독설닷컴 세상은 ‘지랄이 풍년’ 연극계는 ‘풍자가 풍년’  
(<http://poisontongue.sisain.co.kr/1495>)

## 마. 미술 부문

우리 위원회에서 입수한 이반 작가의 판결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반 작가의 벽화가 도라산역에서 철거된 후 소각된 사건에 대해 정리하였다.

2006. 3. 통일부는 도라산역 건축 공사를 하면서 이반 작가에게 통일문화광장을 도라산역에 조성하려 하는데 이를 위해 도라산역 방문객들에게 남북교류협력의 현실과 통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창작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반 작가는 이에 따라 도라산역사 내에 폭 2.8미터, 길이 100여미터에 이르는 대형 벽화를 제작하여 2007. 5.경 설치하였고, 소유권은 통일부에 이전하였다. 벽화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명사상을 축으로 생명·인간·자유·평화·자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였다.

그런데 통일부는 도라산역 관광객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0. 5.에 이반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였고, 2011.초순경 이를 소각하였다.

통일부 남북출입국사무소는 “도라산역을 찾은 방문객들의 반응이 ‘어둡고 난해해 이해할 수 없다, 정치 이념적 색깔이 가미된 민중화 같다, 외설스런 표현이 있다’ 등이었다”며 이런 여론을 수렴해 철거한 것으로 정치적 이념이나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측은 ”소유권이 정부에 있기에 작가와 협의 없이 작품을 철거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sup>76)</sup>

### [그림-11] 이반 작가 벽화



76) 작가 몰래 철거된 도라산 벽화...“물상식이 빛은 과잉충성”, 오마이뉴스, 2010. 8. 19.



이반 작가는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정부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동의는 구하지 않았지만 예술가가 대가를 받았다면 저작물에 대한 운명을 점유자의 손에 맡긴 것이라고 판단, 이반 작가 패소로 판결했다.<sup>77)</sup>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벽화를 철거하고 조각한 것은 이반 작가가 예술창작자로서 갖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22조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고,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특정 예술작품을 국가가 일방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자칫 예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고, 정부가 관람객 설문과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벽화를 폐기한 것은 정부의 미술품 보관 관리규정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sup>78)</sup>

그리고 대법원은 이반 작가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9085

78) 서울고등법원 2012나31842

대법원은 국가가 스스로 의뢰해 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설치했고, 사실상 재현이 불가능한 벽화를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작가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조급하게 철거하기로 한 것은 저작권권 침해일 뿐 아니라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벽화를 폐기하는 것은 비록 벽화에 대한 소유권에 근거한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작가가 가지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sup>79)</sup>

## 바. 영화 부문

이명박 정부 시기 영화 부문에 대한 탄압 사례는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기 영화 부문 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총 6건이다. 6건은 ‘2010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 배제 사건’, ‘영화사 청어람 블랙리스트 사건’,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독립영화전용관 지원배제사건’, ‘맹수진의 영진위 독립영화 사전제작지원 심사위원 배제 등 사건’, ‘유인택 출자사업 지원배제 사건’ 이다 (각 사건에 자세한 사항은 각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참조).

이중 ‘영화사 청어람 블랙리스트 사건’의 신청인인 영화사 청어람 전 대표이사 최OO를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결과를 정리하였다.

### (1) 이명박 정부 시기 특정 영화 및 단체 지원 배제

이명박 정부 시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특정 영화 및 단체 지원 배제<sup>80)</sup>는 다음 표와 같다.

[표-14] 영화진흥위원회 특정 영화 및 단체 지원배제 일람(이명박 정부 시기)

사업	시기	배제 작품 또는 단체	배제내용	배제의 방법 또는 사유
영화단체사업 지원	2009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디포럼, 서울인권영화제, 서울국제노동영화제,	기재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제한 지침, 문체부→영진위 지시

79) 대법원 2012다204587

80)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인용하였다.

사업	시기	배제 작품 또는 단체	배제내용	배제의 방법 또는 사유
		노동자뉴스제작단,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전북독립영화제 등 지원배제	
	2010	인디포럼 작가회의	인디포럼 지원배제	위와 같음
	2011	인권운동사랑방, 인디다큐페스티벌	서울인권영화제 및 인디다큐페스티벌	위와 같음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2010	미디어액트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정위탁→공모제로 전환
	2010	한국독립영화협회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지정위탁→공모제로 전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2010	인디포럼작가회의, 독립영화협회의, 한국예술전용관협회,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 의회(최공재) 선정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2011	江, 원래 프로젝트	인디플러스 100일 기획전 상영 거부	
영화상영 검열 및 거부	2012. 7.	잼 다크 강정	인디플러스 개봉 프로그램 상영 거부(보류)	상영거부→사후 상영승인
	2012. 10.	MB의 추억	인디플러스 상영 거부	선거법 위반 검토 이유 상영보류→배급사의 상영거부

또 2018. 4. 4. 영진위의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영화단체 지원사업 배제와 관련한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sup>81)</sup>

**[표-15] 2018. 4. 4. 영진위의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 자료 중 2009 ~ 2011. 영화단체 지원 사업 배제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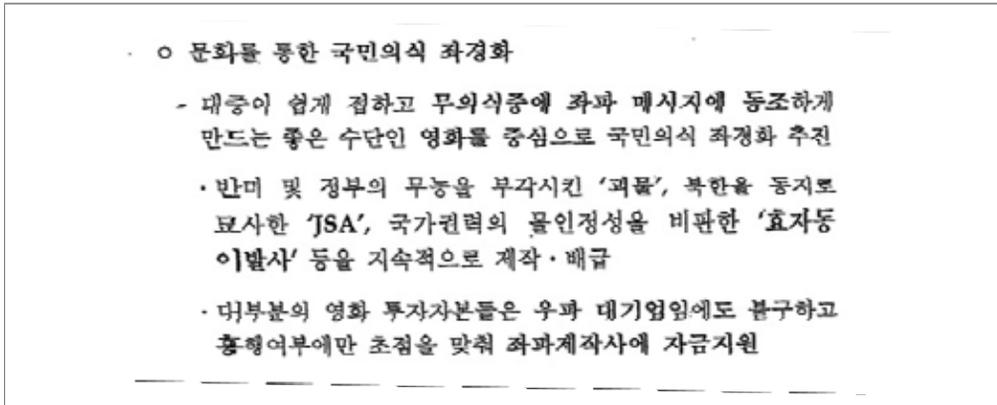
번호	구분	사업 연도	지원사업명	배제 대상	배제 내역	배제 배경
1	단체 배제	2009	단체지원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인디포럼 작가회의가 주최하는 인디포럼 지원 배제	촛불집회 참여 시민단체들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2	단체 배제	2009	단체지원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서울인권영화제 지원 배제	제외시키는 '불법 시위 주최·주도 및 참여단체 배제 조항'('09)

81) 영화진흥위원회 대국민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2018. 4. 4.)

번호	구분	사업 연도	지원사업명	배제 대상	배제 내역	배제 배경
3	단체 배제	2009	단체지원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뉴스제작단이 주최하는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지원 배제	
4	단체 배제	2009	단체지원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전북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하는 전북독립영화제 지원 배제	
5	단체 배제	2010	단체지원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인디포럼 작가회의가 주최하는 인디포럼 지원 배제	
6	단체 배제	2010	영상미디어 센터 운영 지원	한국독립영화협회 및 미디어액트	지정위탁을 공모에 따른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배제	
7	단체 배제	2010	영상미디어 센터 운영 지원	(사)한국영상미디어 교육협회 (*독협의 신청 자격 상실에 따라 신규 설립)	심사에서 70점 미만으로 탈락, 재공모 심사에서 2위로 탈락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작성 '문화권력 균형화전략'('08)에 따른 '8천만원 이상 보조민간 단체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 실태' 감사('09)
8	단체 배제	2010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지정위탁을 공모에 따른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배제	
9	단체 배제	2010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독협의 신청 자격 상실에 따라 독립영화계 대표로 신청)	심사에서 70점 미만(63점/순위는 1위)으로 탈락, 재공모 심사에서 4위로 탈락	
10	단체 배제	2011	단체지원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서울인권영화제 지원 배제	촛불집회 참여 시민단체들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불법 시위 주최·주도 및 참여단체 배제 조항'('09)
11	단체 배제	2011	단체지원	인디다큐페스티벌	인디다큐페스티벌 지원 배제	

## (2) 영화 '26년'에 대한 투자 철회 과정에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 의혹

### [그림-12]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일부 내용



청와대에서 작성한「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보면, 위 [그림15]와 같이 ‘국민의식을 좌경화’ 시키는 영화로 ‘괴물’, ‘JSA’, ‘효자동 이발사’를 들고 있다. 3편의 영화 중 ‘괴물’과 ‘효자동 이발사’는 모두 영화제작사 ‘청어람’에서 제작했다. 영화사 청어람은 위 영화 외에도 영화 ‘26년’을 2006. 8. 경부터 제작 준비하고 있었다.

영화 ‘26년’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신군부 계엄군의 학살에 희생당한 사람들과 관련된 국가대표 사격선수, 조직폭력배, 현직 경찰, 대기업 총수, 사설 경호업체 실장 등이 26년 후 바로 그날, 학살의 주범을 단죄한다는 내용의 영화다.

당시 영화제작사 청어람 최OO 대표이사를 참고인 조사하였고 최OO 대표이사는 우리 위원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sup>82)</sup>

영화사 청어람은 작가 강풀의 원작 웹툰을 2006. 8. 1.경 영화화 계약을 맺고 2007. 4. 23.경 영화 각본 계약을 하였다. 총 제작비 약 85억원중 20억원 정도를 2개 회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고 KT와 대규모 투자조합을 결성한 OOOOOOOO로부터 10억~15억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 2008. 7~8.경 문OO OOOOOOOO 대표이사가 최용배 청어람 대표이사에게 투자를 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철회하였다. 그 이유는 ‘KT의 임원이 이 영화에 투자하면 소위 찢릴 수도 있으니 우리가 앞으로 대규모 펀드를 만들어서 잘 해나가야 되는 파트너인데 투자를 안 하면 좋겠다’고 했고, 이에 문OO 대표이사는 최OO 대표이사에게 그런 상황을 이해해 달라”며 “투자를 결국 못 하

82) 참고인 최OO 진술녹취(2018. 1. 3.)

겠다”고 얘기했다. 당시 영화 ‘26년’을 제작하는데 20억 정도의 투자 유치 약속을 받았고, OOOOOOOO로부터 10억 정도, 5~10억 정도 투자할 회사 4~5군데를 컨택하고 있었는데 OOOOOOOO의 투자 철회가 영화계에 알려지면서 투자를 약속했던 곳에서 투자를 유보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결국 영화 ‘26년’의 영화화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몇 년후 이OO KT 투자담당 상무가 최OO 대표이사에게 2008년 당시 “남중수 KT 사장이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26년’이라는 영화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전해주었고, 이로 인해 ‘26년’에 대한 투자가 철회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다. 또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나, 2012년 국회 국정감사 때 김한길 국회의원 보좌관 김OO가 자신을 찾아와 위 비서관은 정OO 기획관리비서관으로 추정하여, 남OO KT 사장과 최OO 대표이사, 정OO 비서관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시킬 것을 추진했고 최OO 대표이사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청에 동의했으나 다른 증인들이 불출석하여 국회 증인 신문이 무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최OO의 진술을 정리하면 영화 ‘26년’의 제작과정 중 KT와 투자조합을 결성한 OOOOOOOO가 영화 ‘26년’에 10~15억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의 압력을 받은 남OO KT 사장이 문OO OOOOOOOO 사장에게 영화 ‘26년’에 투자 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했고, 문OO 사장은 영화 ‘26년’에 대한 투자를 취소하여 영화 ‘26년’의 제작이 미뤄졌다는 것이다.

영화 ‘26년’은 관객들이 제작비를 모아 영화를 만드는 제작두레 방식으로 제작되어 2012. 11. 29에 개봉되었다.<sup>83)</sup>

참고인 김OO(2012년 당시 김한길 국회의원 보좌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 영화제작사 청어람이 영화 ‘26년’의 제작 과정 중 주요 투자자들의 투자를 철회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에서 관여한 의혹이 있어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증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증언이나 증거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sup>84)</sup>

참고인 최OO의 진술과 다수의 언론에서 영화 ‘26년’의 투자 외압설에 대해 보도되었던 사실(‘전직 대통령 암살 프로젝트’ 다룬 강풀 웹툰 ‘26년’, 정치외압의혹 끝에 제작 착수, 헤럴드경제, 2012. 3. 26, 강풀 원작 ‘26년’ 외압설 딛고 영화화...대기업 자본서 해

83) 영화 ‘26년은’...광주항쟁 소재의 복수극, ‘두레’ 방식 제작도 독특, 뉴스1, 2012. 12. 2.

84) 참고인 김OO 조사보고(2018. 1. 9.)

방, 쿠키뉴스, 2012. 3. 26, 박근혜의 여론조작... 영화계에 가해진 상상이상의 작업들, 오마이뉴스, 2018. 5. 8. 등)을 볼 때 2008년 영화 '26년'의 제작비 투자에 대한 청와대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참고인 최OO가 진술한 정OO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과 남OO KT 사장, 문OO OOOOOOOO 대표이사 등을 조사하지 못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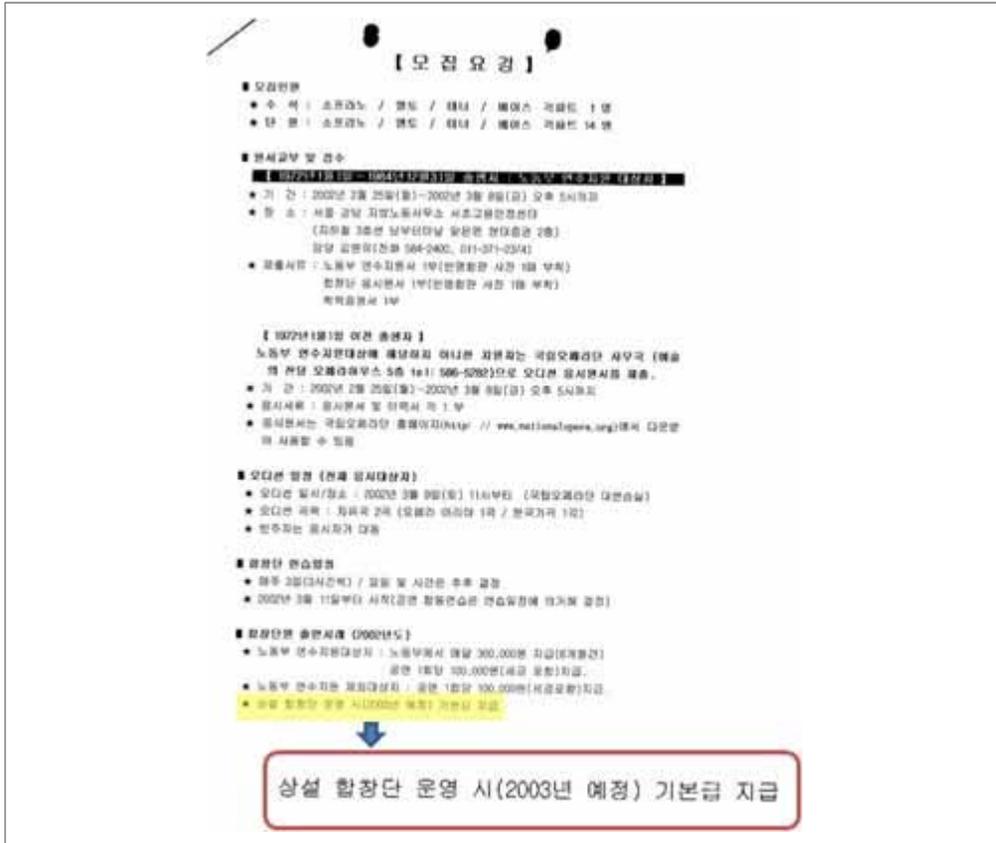
### 사. 기타 부문

국립오페라합창단 단원이었던 OOO의 진술과 OOO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언론보도 등 통해 2009년 해산된 국립오페라합창단(이하 합창단)의 해산 과정을 정리하였다.

합창단은 2002년 독자적 오페라 공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오페라 전문 합창단의 필요에 의해 창단되었다. 합창단 창단 당시 상임화를 조건으로 단원을 모집하였고 상임화를 매년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합창단측이 보장했어야 할 4대 보험도 가입시키지 않았고 겸직이 허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과 한 작품 당 평균 105시간의 엄청난 연습 시간이 할당되었다. 합창단이 창단되고 수년이 지났지만 오페라단은 합창단원이 제외된 규정집 조차 수정하지 않았다. 합창단은 국립오페라단 규정에 없는 이유로 국립오페라단 사업비에서 합창단원의 임금이 지급되었다.<sup>85)</sup>

85) 참고인 OOO 진술조서(2018. 1. 12.) 국립오페라단 창단을 위한 단원 모집 공고(2002)에 2003년 상설합창단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고 공고하였다. 참고인 OOO 제출

[그림-13] 2002년 국립오페라합창단 모집 요강



2008. 7. 이소영 국립오페라단장이 취임하였다. 이소영 단장 이전 단장인 정은숙 단장은 2008. 3. 당시 유인촌 장관의 사퇴 압박으로 2008. 7. 사퇴하였다.<sup>86)</sup> 이소영 단장은 2009. 1. 합창단 해체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같은 해 3월 합창단은 해체되었다.<sup>87)</sup>

국립오페라합창단을 해체시킨 이유에 대해 이소영 단장은 “규정에 없는 단체를 존속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고, 오페라단 관계자는 “오페라합창단의 기능이 국립합창단과 중복된다”며 “오페라단은 국립합창단과 함께 공연하고, 필요하면 외부 합창단과 계약해 공연할 것”이라고 말했다.<sup>88)</sup>

86) 유인촌 문화, 실명거론 '사퇴 협박'... '저격수' 총대 뗏다, 한겨레신문, 2008. 3.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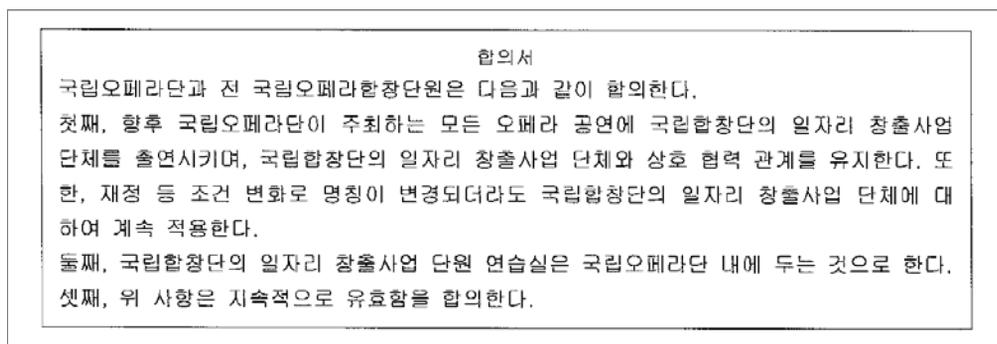
87) 참고인 문대균 진술조서(2018. 1. 12.)

88) 국립오페라합창단 '거리 위의 희망가', 한겨레신문, 2009. 1. 28.

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립오페라단에는 합창단 규정이 없다. 지난 단장이 인건비 책정 없이 단원을 뽑아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써왔다’, ‘외국에는 이런 오페라합창단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sup>89)</sup>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를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졌고 오페라합창단원들은 국립오페라단(이하 오페라단)과 문체부 등을 상대로 고용보장을 요구하였다. 이에 문체부는 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3년간의 임시 재정을 마련하여 재단법인 국립합창단 산하에 나라오페라합창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합창단 단원들은 2009. 6. 16. 오페라단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그림-14] 합창단원들과 오페라단과의 합의서



합창단 단원들은 2009. 6. 17. 국립합창단이 주관하는 합창단원 선발절차에 응하여 다음날 각 합격 통지를 받고 2009. 6. 19. 국립합창단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나라오페라합창단에 소속되어 오페라 공연을 하였다. 그러나 2011. 4. 19.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오페라합창단 단원들의 각 근로계약은 모두 종료되었다.<sup>90)</sup>

합창단 해체 이유에 대해 당시 문체부는 합창단은 국립오페라단 규정에 없으며, 세계에서 오페라합창단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으며,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참고인 문대균은 OECD 국가 중 국립오페라합창단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 뿐이며, 이소영 전 오페라단장은 2009년에 전년 대비 8억원의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운영비가 3억원인 합창단을 해체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은숙 전 오페라단장 재임 시기 문체부는 오페라단에 두 번이나 감사를 진행

89) “유인촌 장관님, 문화 예술인 출신 맞나요?”, 시사인, 2009. 3. 16.

90) 서울고등법원 2013나60403

했음에도 편법으로 운영된 합창단에 대해 지적하지 않다가 합창단 해체를 주장하면서 편법 운영을 지적하는 것은 문체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였다.<sup>91)</sup>

문체부에서 합창단을 해체시킨 이유에 대하여 합창단원들은 정은숙 전 오페라단장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정은숙 전 오페라단장은 2002년 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취임하였고 2002년 합창단을 창단하였다. 임기 3년을 마치고 노무현 정권 시기인 2005년에 다시 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취임하였는데 그는 통일운동가인 고 문익환 목사의 며느리이며 이명박 정부 시기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배우 문성근의 형수이다. 정은숙 전 오페라단장은 유인촌 장관의 좌파척결 발언 이후에 오페라단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유인촌 전 장관과 이소영 전 오페라단장, 정은숙 전 오페라단장과 오페라단 관련자, 당시 문체부 관련자 등을 조사하지 못하여 합창단의 명확한 해체 이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제4절 | 조사 결과

### 1. 진상규명 사실

#### 가.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예술계 우편향을 위한 전략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광우병 촛불집회로 지지도가 급락하자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부 비판적 인물 및 단체들을 다각도로 압박하면서, MBC 등 방송사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전반을 친정부화하는 정책을 시행 하였다.

2008. 8. 27.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문화예술계를 좌우로 나누어, 좌파는 고사시키고 우파는 활성화 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대체로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미래포럼은 「문화예술계 현안과 과제」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좌파 청산을 위해 몇

91) 참고인 문대균 진술조서(2018. 1. 16.)

가지 주요 현안을 제시하였는데 영화계 좌파 세력의 청산, 민예총 등 문화예술단체의 개혁, 한예종의 개혁, 국공립 예술단체들의 전속제를 철폐하고 계약제로 전환 할 것 등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 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김OO 국정원 기초실장 주도로 「문화·연예인 대응 T/F」를 구성,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으로 퇴출을 압박하였다.

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공영방송 경영개입 현황이 담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등 2건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등에 보고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

서울지검은 수사결과(2018. 1. 17.) 발표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물들을 '중복좌파'로 규정하고, 이들이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해당 인물들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부 비판적 인물들의 활동을 억압·방해하고 친정부적 인물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공작을 전개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화·예술계 좌파 청산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좌파 청산을 위한 총괄기획과 역할 조정 역할을, 문체부는 산하기관 인적청산과 과거정부 지원사업 검토 등을, 기재부는 좌파지원예산 삭감과 우파 지원사업 예산 지원을, 국정원은 문화·예술계 좌파 청산을 위한 주요 문건들을 생산하고, 이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그리고 기업은 문화예술 분야 건전화를 지원하였다.

## 나.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예술인들의 탄압 사례

### (1) 문체부 산하 소속기관 기관장에 대한 강압적 교체

이명박 정부의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한 유인촌(2008. 2. 29. 취임)은 취임 직후 이전 정권의 문화예술계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문화예술계 기관장들에게 자진 사퇴를 강요하였다. 이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강압적으로 퇴출된 문체부 산하 소속 기관 기관장은 22명으로 판단된다.

연번	기관명	기관장	퇴출 시기
1	국립중앙극장	신선희	2008.
2	한국관광공사	오지철	2008. 3.
3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남	2008. 4. 7.
4	경북관광개발공사	김진태	2008. 4.
5	국민체육진흥공단	박재호	2008. 5.
6	영화진흥위원회	안정숙	2008. 5.
7	한국방송광고공사	정순균	2008. 6.
8	영상물등급위원회	이경순	2008. 6.
9	아리랑TV	장명호	2008. 6.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주호	2008. 7.
11	국립오페라단	정은숙	2008. 7.
12	예술의전당	신현택	2008. 7.
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송재호	2008. 10.
14	뉴스통신진흥회	이창우	2008. 10.
15	신문발전위원회	장행훈	2008. 11.
16	신문유통원	강기석	2008. 11.
17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2008. 11.
18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2008. 11.
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현	2008. 12.
20	게임물등급위원회	김기만	2008. 12.
21	국립국악원	김철호	2009. 1.
22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2009. 5. 19.

이중 김정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재판을 통해 기관장 계약 해지가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황지우 한예종 총장의 교수직 박탈도 재판을 통해 교수직 박탈이 부당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2) 방송·연예 부문

방송인 김미화, 가수 신해철, 방송인 김제동이 국정원의 '좌파 연예인 대응 T/F'의 계획에 의해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하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3) 미술 부문

2007. 5.경 도라산역에서 설치된 이반 작가의 벽화가 2010. 5.에 철거되었는데, 대법원은 정부의 이반 작가의 벽화 철거는 저작권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 (4) 영화 부문

이명박 정부 시기 영진위의 특정 영화 및 단체 지원 배제는 11건으로 확인되었다.

연번	사업연도	지원사업명	배제 대상
1	2009	단체지원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2	2009	단체지원	인권운동사랑방
3	2009	단체지원	노동자뉴스제작단
4	2009	단체지원	(사)전북독립영화협회
5	2010	단체지원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6	2010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한국독립영화협회 및 미디어엑트
7	2010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8	2010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한국독립영화협회
9	2010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10	2011	단체지원	인권운동사랑방
11	2011	단체지원	인디다큐페스티벌

##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건 내지 제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했음에도 위원회 한계로 인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 했던 사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청와대 문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작성 주체 및 경위
- ② 신청인 김미화가 제출한 국정원 문건 14건에 대한 실행 결과
- ③ 국정원 문건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실제 여부 및 실행 결과
- ④ 진선미 의원실에서 밝힌 22명 이외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문화계 기관장의 강압적 퇴출 사례
- ⑤ 이명박 정부 시기 연극계 블랙리스트 실재 여부
- ⑥ 영화 '26년'에 대한 투자 철회 과정에 청와대 부당한 개입
- ⑦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 과정에서 부당성 여부

- ⑧ 이명박 정부 시기에 탄압 받았던 문화예술인 추가 사례
- ⑨ 2018. 3.경 영포 빌딩에서 발견된 이명박 정부 시기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 3.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이 보고서는 참고인 진술과 법원 판결, 국회,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었던 내용들과 서울 지검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위원회 조사 또한 병행되고 있었기에 수사 중인 자료에 대해 위원회가 공유하는 것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우리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간과하거나 미처 다루지 못한 사항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에도 이런 사항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 붙임 1. 문화예술인 531명 민주노동당 지지선언(2006. 5. 23.)

### 〈문화예술계 531인 지지선언〉

우리는 진보와 개혁의 대표주자, 민주노동당을 지지합니다

오늘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여러분께 민주노동당과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늘 선거때만 되면 불어오는 껍데기 개혁 열풍은 이제 유권자들로 하여금 일말의 기대와 희망마저 버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한국 정치의 모습은 선거때마다 말하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충격적입니다.

후보등록을 시작하자마자 터진 공천비리는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매 관매직의 실태를 여지없이 보여주었고 성추행, 내기골프, 황제테니스 등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끊임없이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죄과를 뉘우치고 반성하기 보다는 권력을 이용해서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들이 국민적 합의와정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은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힘으로 추진되었고 급기야 군대까지 투입되어 마치 80년 오월 광주를 연상케하는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일방적인 강제집행에 반대하면서 예술작품을 설치하고 평화를 기원했지만 그들은 예술작품마저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우려스러운 일은 그 뿐이 아닙니다. 한국 영화 발전의 버팀목이었던 스크린쿼터제를 영화인들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했고, 모든 것을 미국에 통째로 내어달라고 하는 한미FTA를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진보와 개혁을 외치는 수많은 정치세력들 중 진짜 진보와 개혁의 주자는 민주노동당 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탄생한 열 명의 국회의원은 비록 교섭단체가 될 수는 없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평택 주민들에게도, 영화인들의 농성장에도 언제나 민주노동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주노동당이 거대한 소수가 되어 국회를 넘어 지역 정치까지 조금씩 갈아엎는 희망의 싹을 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주노동당에 던지는 표는 진보와 개혁을 현실화시키는 희망의 표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부패와 무능으

로 얼룩진 한국정치를 희망으로 갈아엎을 민주노동당을 지지합니다.

2006년 5월 23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

## [문화예술계 지지선언 명단]

### ■ 영화 (48)

양윤모(영화평론가협회장), 김경형(감독조합 스크린쿼터특별위원장/‘동갑내기과외하기’감독), 정윤철(감독/말아톤), 박찬욱(감독/올드보이), 오지혜(배우/‘와이키키브라더스’), 변영주(감독/밀애), 윤인호(감독/아홉살인생), 박진표(감독/너는내운명), 김대승(감독/혈의누), 김지운(감독/달콤한인생), 권철인(감독협회 공동대표/‘싱글즈’감독), 권병길(배우/‘그때그사람들’출연), 황철민(한국독립영화협회이사장/‘프락치’감독), 공미연(감독/녹색 발자국), 김동원(감독/송환), 김태용(감독/가족의탄생), 류승완(감독/짜패), 신동일(감독/방문자), 이윤빈(감독), 조성봉(감독/레드헌트), 최진성(감독/그들만의월드컵), 최태규(감독/소리), 김조광수(청년필름대표), 김동현(정동진독립영화제 사무국장), 김선화(청주씨네오딧세이 대표), 김태완(영화사 청어람 프로듀서), 김화범(한국독립영화협회 배급팀장), 남태우(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맹수진(영화평론가), 민병훈(대전독립영화협회 사무차장), 박광수(강릉씨네마떼끄 사무국장), 손영득(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표), 송덕호(대전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안현주(정동진독립영화제 홍보팀장), 유창서(영화인회의 사무국장), 원승환(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이지연(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차장), 이지형(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사무차장), 이송희일(감독/굿로맨스), 이찬현(대전독립영화협회 대표), 장현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기술지원팀), 장형운(독립애니메이션 감독/‘아빠가 필요해’), 조영각(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최송길(강릉 씨네마떼끄 대표), 최유진(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사무차장), 최은정(독립미디어활동가), 함주리(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장), 영상창작단‘사람’

## ■ 문학 (119명)

강경희(평론가), 고경숙(소설가), 고명철(평론가), 고재종(시인), 공광규(시인), 공선옥(소설가), 김규성(시인), 김기선(평전작가), 김기홍(시인), 김남일(소설가), 김명인(평론가), 김명환(평론가), 김민형(시인), 김사이(시인), 김순천(보고문학), 김영산(시인), 김용락(시인), 김용만(시인), 김은경(시인), 김이구(소설가), 김인호(시인), 김재영(소설가), 김재호(소설가), 김중미(소설가), 김지우(소설가), 김창규(시인), 김창수(평론가), 김하경(소설가), 김한수(소설가), 김해자(시인), 김해화(시인), 류민영(시인), 류외향(시인), 맹문재(시인), 문동만(시인), 문창길(시인), 박관서(시인), 박기범(동화작가), 박민규(시인), 박병례(소설가), 박성우(시인), 박수정(극작/보고문학), 박영희(시인), 박인섭(시인), 박인혜(극작가), 박형숙(소설가), 박흥식(시인), 방현석(소설가), 배재운(시인), 서성란(소설가), 서정홍(시인), 손상열(시인), 손홍규(소설가), 송경동(시인), 송경아(소설가), 송승환(시인), 송태웅(시인), 송호필(시인), 안건모(보고문학), 안기현(전국노동자문학연대), 안상학(시인), 안재성(소설가), 안찬수(시인), 양재성(시인), 양혜원(시인), 엄경희(평론가), 오도엽(시인), 오창은(평론가), 오철수(시인), 원명희(소설가), 원종찬(아동문학), 유명갑(소설가), 유용주(시인), 육봉수(시인), 윤기현(아동문학), 윤동수(소설가), 윤석주(시인), 은미희(소설가), 이기형(시인), 이대흠(시인), 이명원(평론가), 이명희(시인), 이산하(시인), 이상국(시인), 이설야(시인), 이수행(시인), 이세기(시인), 이안(시인), 이원규(시인), 이인휘(소설가), 이재무(시인), 이재현(평론가), 이중기(시인), 이철산(시인), 이희환(평론가), 임성용(시인), 정세훈(시인), 조세희(소설가), 정규화(시인), 정동용(시인), 정은호(시인), 정인화(시인), 정종목(시인), 정지아(소설가), 정혜주(소설가), 정화진(소설가), 조진태(시인), 조혁신(소설가), 조혜영(시인), 최종천(시인), 표광소(시인), 표성배(시인), 하상일(평론가), 허은미(아동문학), 홍기돈(평론가), 홍명진(소설가), 홍인기(소설가), 황규관(시인), 황병목(시인)

## ■ 미술 (92명)

강경근, 강금복, 강시원, 광재경, 권성택, 김근태, 김남술, 김도근, 김도형, 김문호, 김상규, 김상훈, 김선도, 김성준, 김수, 김수진, 김순기, 김윤기, 김재규, 김정, 김종길, 김창세, 김천일, 김호원, 나보영, 두시영, 맹난숙, 박대석, 박대용, 박동근, 박득규, 박석규, 박선주, 박영도, 박일정, 박찬향, 박현화, 방극진, 배성한, 배인석, 서거라, 성효

숙, 송일석, 송홍범, 안상오, 엄원영, 여 운, 원동석, 윤인자, 이귀남, 이범수, 이봉주, 이성래, 이성술, 이성재, 이오연, 이우진, 이윤기, 이윤엽, 이은정, 임건식, 임성남, 임창준, 장인기, 전정호, 정경모, 정덕영, 정봉진, 정성순, 정운태, 정태관, 조미영, 조병연, 조영호, 주경남, 주정화, 진수연, 최병옥, 허영미, 홍효심, 인송자, 김홍모, 전진경, 김경진, 김성건, 장진익, 김주철, 신미연, 류연복, 김성수, 한유진, 미술패 ‘획’

### ■ 문화단체 (58명)

이태웅(울산민예총 지회장), 김세주(울산민예총 부지회장), 이한별(울산민예총 사무처장), 김성연(동해민속예술원 대표), 김구대(내드름풍물마당), 추재천(타악연희예술단 ‘천공’ 대표), 현숙희(창무용단 단장), 김소영 (민족소리원 원장), 이노형(울산대학교 교수), 정현신(울산민예총 문학분과위원장), 심기보(시인), 정인화(전태일문학상 수상자/시인), 이희섭(울산민예총부지회장/사진작가), 김근숙(울산민예총미술분과장/울산민미협 회장), 황정주(성남민예총 지부장), 김수란(성남민예총 사무국장), 정봉진(판화가), 박은정(문화예술센터 ‘결’ 대표), 김철, 정도영, 이화수, 이동근, 정예진, 서정민갑, 위지혜, 안태호, 박희정, 하창범, 전동일, 강학수, 김영현, 박현정, 류정석, 최현경, 임창웅, 김태호, 김소연, 강성률, 최지선, 염신규, 한대수, 전희련, 권경우(문화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이승희, 이원재, 정은희, 최준영, 박주희, 전민아, 김선구, 김태일, 조옥형, 정보선, 김동호, 이은진, 정미숙, 유광식, 김미순

### ■ 만화 (9명)

이동수(우리만화연대 부회장), 신성식(우리만화연대 사무국장), 조남준, 이은홍, 임소희, 박건웅, 정재훈, 김홍모, 김태형

### ■ 영화진흥위원회노조 (8명)

권오기(위원장), 유재천(사무국장), 김경현, 광철선, 심덕주, 차현정, 손동오, 한인철

### ■ 음악 (42명)

민정연, 하장호, 조성일, 이태수, 강윤정, 정윤경, 강문주, 김지영, 김창배, 김혜진, 서현규, 송명순, 유정숙, 이정민, 임현경, 하재용, 강상구, 지정환, 백 자, 이광석, 한선희, 박일규, 이혜진, 이정석, 송순규, 최 현, 조재현, 차준호, 이은영, 정윤희, 김혜림, 이정아, 정상훈, 오유섭, 신동석, 강승희, 강연승, 이원경, 서기상, 문진오, 아름다운청년, 음악창작단 ‘소리밭’

### ■ 전국문화예술노조 (27명)

김은정(세종문화회관 / 관현악), 이창선(전주시립예술단 / 관현악), 김희중(성남시립예술단), 한상희(세종문화회관), 홍동길(수원시립예술단), 박종열(순천시립예술단), 박형주(순천시립예술단), 김철기(청주시립예술단), 강성주(울산시립예술단), 서길원(충주우륵국악단), 송영규(충주우륵국악단), 한경식(영동난계국악단), 고재록(영동난계국악단), 김진경(영동난계국악단), 권문경 (경주신라국악예술단), 고양곤(전북도립국악원), 이수희(국립발레단), 고석진(서울예술단), 이정노(서울예술단), 한수정(울산시립예술단), 이종덕(세종문화회관), 심정완(서울예술단/뮤지컬), 김용란(인천시립예술단/연극), 고조영(전주시립예술단), 류재운(애니메이션), 윤훈, 박영흠

### ■ 전주시립예술단 (68명)

강은진, 강진아, 고혜숙, 곽영종, 김선경, 김선우, 김성택, 김성호, 김수연, 김영란, 김영언, 김영주, 김은아, 김정영, 김태민, 김현정, 김홍연, 김희선, 노민영, 유승열, 박아영, 박영선, 박종석, 백민기, 변지연, 서주희, 서형화, 소종호, 송호은, 신성운, 신유경, 심배림, 안대원, 안세형, 안정희, 엄윤정, 연소희, 염정숙, 오민정, 오승룡, 유애숙, 은종표, 이고은, 이광진, 이민주, 이병옥, 이소윤, 이술원, 이한녕, 임영란, 장유진, 정경선, 정영찬, 정준수, 정애숙, 조규철, 조재한, 조혜선, 최 균, 최명호, 최재희, 최진희, 한서희, 한운학, 함상원, 홍자연, 홍지예, 황선희

**■ 전북도립국악원 (18)**

박양규, 조용오, 최현주, 정윤정, 심소형, 유재준, 강현범, 서인철, 임청현, 유인숙, 장윤미, 배승현, 조용안, 박지중, 황승주, 김종균

**■ 춤 / 무용 (18명)**

이병근, 문미니, 박성철, 김경범, 박대선, 전식렬, 구영희, 이은하, 김경수, 박인희, 김희선, 오현경, 김소현, 장세린, 조희정, 김태균, 이주현, 이삼현

**■ 풍물 / 국악 (24명)**

이성호, 조은아, 한별님, 구송택, 방지은, 김영구, 심종석, 김지영, 김재홍, 김재영, 권용우, 박은진, 윤은하, 박기태, 홍선진, 전수형, 임채형, 김유연, 이덕인, 정유숙, 박미진, 이진섭, 박현정, 한정이

**■ 지역 (18명)**

진병학, 강은미, 고광문, 박상준, 김천석, 김현순, 서인식, 이성호, 박홍규, 진창윤, 김은희, 박연희, 김혜선, 윤애경, 양진성, 이정우, 최호인, 정원경

## 붙임 2. 진보신당 지지 영화인 명단 (2008. 3. 31.)

### 진보신당 지지 영화인 명단 (가나다순)

강석필(프로듀서), 강영훈(영화감독), 건명환(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조명지부 지부장), 고길수(프로듀서), 고미희(조감독), 고영범(시나리오작가), 공부성(조감독), 광용수(독립영화 프로듀서), 구정아(프로듀서), 권은선(프로듀서), 권칠인(〈싱글즈〉감독), 권현준(독립영화 배급), 김경형(〈동갑내기과외하기〉감독)

김나현(마술피리 마케팅), 김대승(〈혈의누〉감독), 김도형(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촬영지부 조직부장), 김동욱(조감독), 김동현(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장), 김만곤(시나리오작가), 김문성(시나리오작가), 김민오(미술감독), 김병일(촬영감독), 김부선(영화배우), 김부현(프로듀서), 김삼력(〈아스라이〉감독)

김선아(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김성제(프로듀서), 김소연(프로듀서), 김소영(영상원 교수), 김수덕(영화사운드),

김숙(영화평론), 김시천(아시아나국제단! 편영화제 사무국장), 김영(프로듀서), 김영덕(프로듀서), 김용언(판타스틱 기자), 김우형(촬영감독), 김유진(영화감독), 김유희(프로듀서), 김일안(영화제 스텝), 김재록(연기자), 김조광수(제작자), 김진영(올댓시네마 마케팅), 김태완(프로듀서), 김태용(〈가족의탄생〉감독)

김태은(〈애인〉감독), 김한상(독립영화 기획자), 김화범(독립영화 프로듀서), 김환태(다큐멘터리 감독), 남선호(〈모두들 께챌아요〉감독), 남인영(영화평론가), 남태우(대구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 노홍진(조감독), 도동준(영화정책), 류진옥(프로듀서), 류형진(영화정책), 맹수진(영화평론가), 모은영(영화평론가), 문선영(해외마케팅).

박광수(정동진독립영화제 프로그래머), 박근범(독립영화감독), 박동현(서울국제실험영화제 집행위원장), 박미경(프로듀서), 박민철(영화기술), 박영훈(〈브라보마이라이프〉감독), 박준일(조감독), 박찬욱(〈올드보이〉감독), 박현진(조감독), 박현철(조감독), 박혜경(반짝반짝 마케팅), 박흥식(〈인어공주〉감독)

배형준(〈소년은 울지않는다〉감독), 변영주(〈발레교습소〉감독), 봉만대(〈신데렐라〉감독), 부지영(〈지금 이대로그 좋아요〉감독), 서경(시나리오작가), 서 봉성(조감독), 서수민(서울영상위원회), 서정욱(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촬영지부 부지부장), 서종환(프로듀서), 손소영(프로듀서)

손영득(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표), 송명섭(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촬영지부 부지부장), 손재곤(〈달콤살벌한 연인〉감독), 송준(평론가).

신동일(〈나의 친구, 그의 아내〉감독), 신혜은(프로듀서), 심재명(제작자),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촬영지부 부지부장), 안여진(프로듀서), 여미정(프로듀서), 오기민(제작자), 오민선(프로듀서), 오지혜(연기자), 원승환(독립영화 배급활동가), 유대현(조감독), 윤성호(〈은하해방전선〉감독), 윤수정(카피라이터)

윤지석(독립영화감독), 윤행각(스크린쿼터문화연대 조사통계팀장), 이규곤(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촬영조합원), 이마리오(다큐멘터리 감독), 이무영(〈휴머니스트〉감독), 이민복(미술감독), 이상윤(영화기획), 이성국(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촬영지부 지부장), 이성중(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촬영조합원), 이수정(시나리오 작가).

이영재(〈내마음속의풍금〉감독), 이용배(계원조형예술대학 교수), 이용연(시나리오 작가), 이용희(현장편집), 이우열(〈소년감독〉감독), 이원식(조감독), 이원우(독립영화감독), 이은(제작자), 이인옥(미술감독), 이정아(다르마 기획실장), 이지선(평론가), 이진구(조감독), 이진우(〈팔월의일요일들〉감독)

이하나(프로듀서), 이해영(〈천하장사마돈나〉감독), 이형주(미술감독), 이해원(크로스 필름), 임순례(〈우리생애최고의순간〉감독), 임우정(영화정책), 임원근(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촬영조합원), 임창재(〈하안방〉감독), 장성연(독립영화 프로듀서), 장철수(조감독), 장형운(애니메이션 감독), 장희선(〈고추말리기〉감독)

정경록(독립영화 감독), 정동훈(조감독), 정석현(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촬영조합원), 정종훈(조감독), 정호현(다큐멘터리 감독), 조민호(<정글쥬스>감독), 조성봉(다큐멘터리 감독), 조성제(독립영화감독).

조영각(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원희(영화감독), 주유신(영화평론가), 최금학(조감독), 최소원(독립영화 기획자), 최송길(강릉씨네마테크 대표), 최영재(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국장), 최은종(조감독), 최진성(<히치하이킹>감독), 최헌규(조감독), 최홍석(독립영화 프로듀서), 하성태(무비스! 기자)

하수민(미술감독), 한재덕(프로듀서), 한진(프로듀서), 현경림(프로듀서), 홍덕표(애니메이션 감독), 홍정혜(제작자), 홍태화(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 홍형숙(다큐멘터리 감독), 홍효숙(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황동미(영화정책), 황선형(필름커미셔너), 황윤경(프로듀서), 황철민(<우리 쫓내자!>감독) 이상 총 165명

### 붙임 3. 영화인 시국선언 (2009. 6. 16.)

#### 영화인 시국선언 전문

“거꾸로 흐른 시간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는 그 증거입니다”

어려운 만큼 희망을 말해야하는 영화의 의무는 이미 순진합니다.  
누군가 죽었고 죽어가고 죽어 나가는 것이 무관심한 이 세상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뻔뻔함이 버겁습니다.  
진실을 호도하고 소통을 차단하며 국민의 양심을 권력으로 잠재우려는 역사의 역류가  
계속되는 한,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영화는 거짓일지 모릅니다.

영화는 삶을 이야기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동등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람을 위 아래로 나누어 짓누르고 허덕이는 세상에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좌우로 가르며 상처내고 증오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생존마저 철저히 소외시키면서 위선과 기만으로 국민을 유린하는 시대  
입니다.  
원칙과 소신은 공허한 이상일 뿐이고  
우리 모두 함께 쌓아온 소중한 민주주의가 마치 헌신짝 버려지듯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우리가 이런 현실에 무감해지길 바라는 권력의 의도이고  
그것에 순응해 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의 영화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살아 보고자 합니다.

국민을 다스리겠다는 권력의 오만한 자세가 너무나 역겹지만,

우리도 방조와 무관심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책임을 나누며  
 이 땅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로 반성의 기회를 주려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각성과 쇄신의 기회를 주려 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겸허하고 진정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반민  
 주주의적인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거꾸로 흐른 시간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온 몸과 온 가슴으로 온전히 기록하여 역사에 전할 것임을  
 당당히 천명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훗날 우리에게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게으르지 않았음을 말할 때  
 떳떳할 수 있기를 약속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영화는, 그 증거일 것 입니다.

2009. 6. 16.

영화인 일동

강봉래, 강소영, 강원숙, 강이관, 강철우, 공미연, 김주영, 김진열, 김지현, 김경목, 장  
 성연, 권정삼, 박광수, 김동현, 황철민, 공수창, 구성주, 권정인, 권종관, 김경만, 김경  
 옥, 김경진, 김경형, 김국형, 김남정, 김대승, 김도학, 김명준, 김문성, 김미현, 김선아,  
 김성수, 김성우, 김성욱, 김성홍, 김성훈, 김승규, 김시무, 김신태, 김연호, 김영, 김영  
 덕, 김영로, 김영심, 김영혜, 김유성, 김윤아, 김재수, 김정권, 김정영, 김조광수, 김중

현, 김지영, 김진상, 김태용, 김태은, 김태형, 김태훈, 김현석, 김현수,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홍록, 김화범, 나현, 남태우, 노재원, 류맹철, 류승완, 류장하, 류진옥, 류형진, 모성진, 모지은, 민규동, 민병훈, 박경미, 박관수, 박대영, 박미령, 박범, 박부식, 박상백, 박성경, 박성호, 박성호, 박영훈, 박유희, 박은영, 박은형, 박지성, 박지연, 박지영, 박지예, 박찬욱, 박철희, 박홍식, 박홍식, 박희성, 방은진, 변성찬, 변영주, 변재란, 봉만대, 봉준호, 부지영, 서경미, 서미성, 서은정, 서제인, 설인재, 성수아, 손소영, 손정우, 송경식, 송미선, 송태종, 송해성, 신성은, 신은실, 신찬비, 신창길, 신창환, 신철, 심광진, 심산, 심현우, 안상훈, 안영진, 안정숙, 양유정, 양종곤, 양해훈, 염찬희, 오기민, 오기현, 오상민, 오영필, 오주연, 유창서, 윤덕현, 윤성호, 윤인호, 윤종빈, 윤주형, 윤혜숙, 이경희, 이근아, 이길성, 이동은, 이동훈, 이마리오, 이미경, 이미연, 이병원, 이봉규, 이상윤, 이성은, 이수연, 이안숙, 이애자, 이영, 이용연, 이원재, 이은경, 이은경, 이정범, 이정욱, 이지선, 이지연, 이진영, 이철하, 이태운, 이필훈, 이현명, 이혜경, 이혜란, 이혜진, 임순례, 임우정, 임찬상, 임창재, 임필성, 장준환, 장희선, 전수일, 정병각, 정서경, 정연주, 정윤철, 정재은, 정주현, 정지영, 조근식, 조민호, 조민희, 조석순애, 조영각, 조인숙, 조종국, 조창호, 주유신, 주진숙, 최광희, 최동훈, 최 설, 최영진, 최용기, 최은화, 최정운, 최정인, 최주연, 최지원, 최현용, 최홍석, 추창민, 하기호, 한상범, 한지승, 허경, 허인무, 홍성은, 황동미 (가나다순/225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

# 3

## 한국예술종합학교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 3

## 한국예술종합학교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특24[한국예술종합학교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 가. 신청 취지

신청인 심광현은 1996. 3.부터 현재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영상원 영상이론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 자신의 정치적 성향·정부비판적 활동 때문에 자신이 미래 교육준비단장으로 준비하였던 한예종 U-AT 통섭교육사업의 2009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2009년 한예종 종합감사에서 부당하게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2011년 신청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영상원 영상이론과의 신규교수 채용 심사위원에서 배제되었고, 2012년 충남교육청 소속 연구년 교사의 논문작성 지도교수 자격을 한예종 측에서 불허하는 한편, 2014년 신청인이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획한 서울시민대학 강좌가 갑자기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 (1) 이명박 정권은 한예종이 ‘한예종이 문화예술분야의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U-AT 사업은 좌파인 신청인, 황지우, 진중권 등이 주도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 (2) 2009년 한예종 종합감사의 목적 또는 배경은 당시 정권에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신청인, 황지우 등을 ‘좌편향적인 노 정권 코드인사’, 한예종을 ‘문화예술계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이라고 규정하고, ① 위 인물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기 위해, 그리고 ② 한예종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및 문체부 감사관실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한편, 국정원은 진보적 인사인 서울시장 박원순이 추진하는 2014년 서울자유시민대학 사업에 한예종의 진보적 교수들·인사들이 참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후, 위 진보적 교수들·인사들, 그리고 서울시장 박원순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문체부 제1차관 김희범을 통해 2014년 예술과 인문학 강좌를 취소하도록 한예종 총장 김봉렬을 압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국정원은 2013. 10.경 및 2014. 3. 19.경 신청인을 포함한 위와 같은 한예종 교수들을 ‘좌성향’으로 판단하고, 연구실적 등이 부진한 이념편향적 교수 퇴출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와대 교문수석실은 2013. 10.경 문체부에 좌성향 교수들에게 보직을 주지 말고, 연구실적이 부진한 좌성향 교수는 퇴출 유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2014. 7. 27.경 문체부 제1차관으로 취임한 김희범은 한예종 총장 김봉렬에게 위와 같은 청와대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지시를 들은 김봉렬은 신청인 김소영 등 소위 ‘좌성향’ 교수를 퇴출하라는 이야기에 크게 반발하였으나, 신청인에게 영상이론과 학과장 보직은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5) 문체부 제1차관 김희범은 신청인이 소속된 한예종 영상이론과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한예종 사무국장 김OO을 통해 김봉렬에게 영상원의 모든 학과를 없애고 영상원을 통합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sup>1)</sup>
- (6) 국정원은 2016년 상반기에 한예종 교수들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청와대에 한예종 진

1) 이에 대해 당시 사무국장 김OO은 ‘몇몇 교수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모든 영상원 교수가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동 내용 기술이 추측성으로 판단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18. 11. 5.).

보성향 교수들이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데 교원업적평가에서 외부활동 부분의 가중치가 높아서 오히려 점수를 잘 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 평가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와대 교문수석실은 문체부(장관 김종덕, 제1차관 정관주, 예술정책관 B)를 통해 한예종 교원업적평가를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sup>2)</sup> 그러나 실제로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 한예종 진보성향 교수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예종 교원업적평가가 개정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7) 2009년 한예종 총장 선임 과정에 문체부가 개입한 정황, 2011년 한예종 영상원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2012학년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지도교수에 관한 의혹은 진상규명하지 못하였다.

**붙임 : [한국예술종합학교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진] 2017특24, 한국예술종합학교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신청인] 심광현

## 제1절 | 사건 개요

### 1. 신청의 취지

신청인 심광현(이하 ‘신청인’)은 1996. 3.부터 현재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영상원 영상이론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예종의 U-AT 통섭교육사업(Education for Consilience of Arts & Technology in the Age of Ubiquitous Computing, 이하 ‘U-AT 사업’)의 미래교육단장을 2007. 11. ~ 2008. 12.까지 역임하였다.

문체부 장관 유인촌은 2008. 3. 28. 한예종 총장인 황지우(본명 ‘황재우’, 이하 ‘황지우’)에게 “U-AT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구두 지시하였고, 같은 해 12월경 국회에서 2009년 U-AT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문체부는 2009. 3. 18. ~ 4. 24. 한예종에 대해 종합감사(이하 ‘이 사건 종합감사’)를  
 2) 이와 관련하여 예술정책관 B는 그러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이의제기하였다(18. 11. 6.).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4. 1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U-AT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U-AT 사업에 대해 48.5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문체부는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예종에게 U-AT 사업을 중단하고 미래교육준비단장인 신청인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예종은 2009. 12. 23. 신청인에 대하여 U-AT 사업과 관련해 예산 대비 성과 미미 및 예산낭비 초래, 연구원 채용 및 운용의 부적정, 기자재 과도 구입, 한예종의 지시 거부, 인센티브 부당지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 처분')을 하였고, 유인촌은 2009. 5. 30. 황지우가 제출한 총장 사표를 수리하며 교수직 퇴직처리 하였다. 신청인은 2010. 8. 30. 이 사건 정직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11. 17. 신청인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황지우 역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교수직 복직 및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청인은 2011년 신청인이 교수로 재직(당시 교수는 신청인 포함 총 2명)하고 있던 영상원 영상이론과의 신규교수 채용 심사위원회에서 배제되었고, 2012년 충남교육청 소속 연구원 교사의 논문작성 지도교수 자격을 한예종 측에서 불허하는 한편, 2014년 신청인이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획한 서울시민대학 강좌가 갑자기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본인의 이름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제3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어 2017. 12. 27.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되었다.

### 나. 조사의 목적(규명과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신청인이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2009년 이 사건 종합감사

가 이루어진 목적 및 경위, 이로 인해 신청인이 받은 정직처분의 부당성, 신청인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① 2011년 신규교수 채용 심사위원에서 배제되고, ② 2012년 연구년 교사의 논문작성 지도교수 자격이 불허되고, ③ 2014년 서울시민대학 강좌가 갑자기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 조사 경과

### 1. 문건 등 자료조사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	2009년 한예중 표적심사와 블랙리스트	심광현	2017. 11. 24.
2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문건 현실화 현황	진선미	2017. 11. 24.
3	청와대 문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집행 결과 분석	진선미	2017. 11. 24.
4	황지우 교수직위 확인 등에 관한 2010두15490 재판기록 등 관련 서류	대법원 등	2017. 12. 1.
5	신청인 정직처분 취소에 관한 2011누13639 재판기록 등 관련 서류	서울고등법원 등	2017. 12. 1.
6	문화관련 이념문제 보고서 요약	문체부	2018. 1. 11.
7	김희범 업무수첩 일부	김희범	2018. 1. 11.
8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소영에 대한 2017. 1. 1.자 제2회 진술조서	특검	2018. 1. 11.
9	한예중 교원 업적평가 지침	한예중	2018. 1. 11.
10	한예중 전임교원 외부강의등 신고지침	한예중	2018. 1. 11.
11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법제처	2018. 1. 17.
1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6호로 개정된 것)	법제처	2018. 1. 17.
13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2018. 1. 17.
14	2012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계획	충남교육청 교원정책과	2018. 1. 17.
15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자기연구계획서	김인규	2018. 1. 17.
16	서울시 권역별 시민대학 사업계획안(한예중)	심광현	2018. 1. 17.
17	2008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체육통신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2018. 1. 22.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18	2011년도 영상이론과 신규 전임교원 채용과정에 관한 자료 모음	김소영	2018. 1. 22.
19	교수공채과정중단가처분 신청 관련 소송자료 등	심광현	2018. 1. 22.
20	2009. 5. 20.자 한예종 교수협의회 성명서	한예종 교수협의회	2018. 1. 30.
21	2009. 6. 1.자 한예종 교수협의회 성명서	한예종 교수협의회	2018. 1. 30.
22	2009. 6. 3.자 한예종 교수협의회 공개질의서	한예종 교수협의회	2018. 1. 30.
23	2009. 6. 15.자 한예종 학부모 호소문	한예종 학부모	2018. 1. 30.
24	2009. 6. 23.자 한예종 사태 대응 연석회의 일동 성명서	한예종 사태 대응 연석회의	2018. 1. 30.
25	2009. 6. 23. 작성된 한예종 사태 대응 연석회의 성명서	한예종 사태 대응 연석회의	2018. 1. 30.
26	2009. 8. 27.자 한예종 교수협의회 성명서	한예종 교수협의회	2018. 1. 30.
27	2009. 11. 19.자 한예종 교수협의회 성명서	한예종 교수협의회	2018. 1. 30.
28	2010. 4. 30.자 한예종 교수협의회 성명서	한예종 교수협의회	2018. 1. 30.
29	2010. 11. 26.자 한예종 교수협의회 성명서	한예종 교수협의회	2018. 1. 30.
30	2011. 6. 13.자 한예종 교수협의회 성명서	한예종 교수협의회	2018. 1. 30.
31	2011. 7. 26.자 한예종 교수협의회 성명서	한예종 교수협의회	2018. 1. 30.
32	2011. 12. 20.자 한예종 교수협의회 성명서	한예종 교수협의회	2018. 1. 30.
33	한예종 총장 기자회견 관련	문체부 감사담당관	2018. 2. 28.
34	한예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자료	문체부 감사담당관	2018. 2. 28.
35	한예종 종합감사결과	문체부 감사담당관	2018. 3. 5.
36	U-AT 통섭교육사업 책임교수 연구수당 환수조치관련 원수 보고	한예종	2018. 3. 7.
37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기관 위탁 요청 문서	충청남도교육연수원	2018. 3. 7.
38	2012년 연구년제 연구교원 확정 통보	한예종	2018. 3. 7.
39	한예종연구년제연구교원규정(2010. 8. 20. 규칙 제413호로 개정된 것)	한예종	2018. 3. 7.
40	2007년 한예종 종합감사 실시 내용	문체부	2018. 3. 8.
41	유엔 사회권 규약 심의 참가 출장 결과 보고	문체부	2018. 3. 8.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42	2009. 12. 17.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관련 부분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2018. 3. 8.
43	한예중 학칙 개정안	한예중	2018. 3. 8.
44	2012학년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협조조건에 대한 의견 회신	한예중	2018. 3. 9.
45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 관련 협조요청	한예중	2018. 3. 12.
46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희범에 대한 2016. 12. 31.자 진술조서	특검	2018. 3. 12.
47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희범에 대한 2017. 5.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대법원	2018. 3. 12.
48	한예중 종합감사 계획 보고	문체부 감사담당관실	2018. 3. 14.
49	한예중 정기 종합감사 실시 통보	문체부 감사담당관실	2018. 3. 14.
50	한예중 종합감사 결과 통보	문체부 감사담당관실	2018. 3. 14.
51	'09년도 종합감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한예중	2018. 3. 14.
52	이의신청서	한예중	2018. 3. 14.
53	한예중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문체부	2018. 3. 14.
54	'14년 권역별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MOU 체결계획	서울특별시	2018. 3. 22.
55	MOU체결 협조요청	서울특별시	2018. 3. 22.
56	2009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제출	한예중	2018. 4. 3.
57	한예중 2009 세출예산 요구 현황 일부	문체부	2018. 4. 3.
58	2009 지출 한도내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일부(U-AT 사업 관련)	한예중	2018. 4. 3.
59	2009년도 문체부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제출	문체부	2018. 4. 3.
60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 일부(U-AT 사업 관련)	문체부	2018. 4. 3.
61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차심의 결과 통보 및 문제사업 제출	문체부	2018. 4. 3.
62	2009년도 예산 및 기금 조정 현황	문체부	2018. 4. 3.
63	2009년도 예산기금운영계획(안) 개요 일부(U-AT 사업 관련)	문체부	2018. 4. 3.
64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2018. 4. 3.
65	문화예술계 현안과 과제 및 토론자료	문화미래포럼	2018. 4. 3.
66	문체부 현 실장급 인사 및 승진 후보자 개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2018. 4. 3.
67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8. 4. 3.
68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문건 보관 파일철 표지	C	2018. 4. 3.
69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OO에 대한 2017. 1. 1.자 진술조서 일부	김OO	2018. 4. 3.
70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오OO에 대한 2017. 4. 12.자 녹취서 일부	오OO	2018. 4. 3.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71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C에 대한 2017. 4. 12.자 녹취서 일부	C	2018. 4. 3.
72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희범에 대한 2017. 5. 22.자 녹취서	김희범	2018. 4. 3.
73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모철민에 대한 2017. 5. 24.자 녹취서 일부	모철민	2018. 4. 3.
74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작성의 오OO에 대한 2017. 10. 10.자 진술조서 일부	오OO	2018. 4. 3.
75	2011년 전임교원 공개채용 기본계획 및 심사지침 통보	한예종	2018. 4. 4.
76	2011년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계획, 심사위원 추천명단 제출	한예종	2018. 4. 4.
77	2011년 전임교원 공개채용 기초심사 일정 및 위촉위원	한예종	2018. 4. 4.
78	2011년 전임교원 공개채용 전공심사 일정 및 위촉위원	한예종	2018. 4. 4.
79	2008-2학기 제2차 원장회의 자료	한예종	2018. 4. 4.
80	대법원 2010두15490 판결서	대법원	2018. 4. 4.
81	김윤수 “유인촌, 양심 없는 사람”, <미디어오늘>, 2010. 9. 10.	미디어오늘	2018. 4. 4.
82	유인촌 “김윤수-김정현 등 5명 물러나라”, <뉴스앤뉴스>, 2008. 3. 17.	뉴스앤뉴스	2018. 4. 4.
83	[전문]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오마이뉴스>, 2012. 5. 20.	오마이뉴스	2018. 4. 5.
84	진보판사 동향에 이견회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문어발 사찰’, <한겨레>, 2012. 12. 5.	한겨레	2018. 4. 5.

##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심광현	신청인	진술조서 (2018. 1. 11.)
2	황지우	前 한예종 총장	진술조서 (2018. 1. 22.)
3	김OO	한예종 교수	진술조서 (2018. 1. 24.)
4	최OO	한예종 교수	진술조서 (2018. 1. 25.)
5	김OO	한예종 교수	진술조서 (2018. 1. 30.)
6	박OO	한예종 교수	진술조서 (2018. 2. 7.)
7	임OO	前 문체부 인사과장	진술조서 (2018. 2. 8.)
8	박OO	한예종 교수	진술조서 (2018. 2. 20.)
9	장OO	前 한예종 영상원장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2. 26.)
10	김OO	前 한예종 영상원 행정실장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2. 27.)
11	박OO	前 문체부 예술정책관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2. 27.)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2	이OO	前 한예중 대외협력과장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12.)
13	최OO	前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자유시민대학 담당 주무관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15.)
14	김봉렬	한예중 총장	녹취록 (2018. 3. 19.)
15	김OO	前 한예중 사무국장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20.)
16	정OO	前 문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주무관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30.)
17	정OO	前 문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30.)
18	김OO	前 한예중 기획과장	전화통화결과보고 (2018. 3. 30.)
19	박종원	前 한예중 총장	진술조서 (2018. 4. 19.)

### 제3절 | 조사 사항·내용

#### 1. 한예중 개요

한예중은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해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려는 목적<sup>3)</sup>으로 고등교육법 제19조 제1항<sup>4)</sup> 및 제59조<sup>5)</sup>에 따라 제정된 ‘한예중 설치령’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1993. 3.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이 개원하였고, 1996. 3. 무용원, 1997. 3. 미술원, 1998. 3. 전통예술원이 개원하여 총 6개원으로 구성되었다.

- 3) 한예중 설치령 제3조(설치 등) ①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두되, 교육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 4)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 5)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6항과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그림-1] 한예종 조직도



한예종의 전체적인 조직도는 위와 같다.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sup>6)</sup>, 각 원에는 행정실을 두는데, 각 행정실장은 교학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해 학사행정업무에 대하여 원장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sup>7)</sup>

6) 한예종 학칙 제22조 ②교학처장 및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 한예종 학칙 제24조(행정실) ①원에 행정실을 둔다.  
 ②행정실장은 교학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행정실장은 학사행정업무에 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 2. 한예종에 대한 이명박 정권(2008. 2. 25. ~ 2013. 2. 24.)의 인식

### 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위 문건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2008. 8. 27.경 작성한 것이다. 위 문건에는 ‘문화권력은 일정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지향적 세력을 의미하며, 좌파 세력이 10년간 정부의 조직적 지원 하에 문화권력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하여 문화를 통한 국민의식 좌경화를 이끌었다’는 내용과 함께,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은 소리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요대책(안)이 기재되어 있다.

#### ○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은 소리없이 지속 실시

- 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기관의 내부에는 아직 많은 수의 좌파실무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청산 필요
-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진두지휘하고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청산작업을 지속 감시·독려**
- ※ 급진적인 인적청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불필요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좌파 고사 유도

또한 위 문건 중 II. 좌파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를 보면, 우파 단체인 “문화미래포럼(아래 ‘미래문화포럼’이라는 기재는 ‘문화미래포럼’의 오타에 해당함)의 활동이 미약하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을 알 수 있다.

#### II. 좌파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

##### 가. 우파와 좌파간 행태 차이

- 보수를 대표하는 예종은 규모확장, 정부지원금 확보, 국회의원 진출 등 의형 및 자리다툼에 치중하여 중심점 기능 상실
- 의형상 회원수 120만명으로 좌파 민예총(10만명)을 압도하나 회원공감대 및 정체성 부족으로 자리멀려한 상황
- 지난해 말 대안으로 미래문화포럼(대표: 정 00 교수)이 결성되었으나 역시 주목할 만한 활동은 미약한 실정

## 나. 「문화예술계 현안과 과제」

위 문건은 청와대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에서 문화미래포럼의 활동이 미진하다는 평가를 내린 이후인 2008. 9.경 문화미래포럼이 국회 한나라당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것이다.<sup>8)</sup> 위 문건은 한예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 4.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개혁

문화부 산하의 예술 분야 고등교육기관으로 출범하여 각종 특혜를 누려온 **한국예종은 문화예술분야의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전면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함**. 더구나 방만한 예산을 특혜 배정받아 예술 영재를 발굴하여 해외 유학을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아 현장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벗어나 일반 대학의 편제를 답습하려는 종전의 시도는 결국 일반 대학과의 차별화를 짓지 못해 정체성을 상실한 결과를 초래.

## 다. 참고인 김OO의 진술<sup>9)</sup>

한예종 교수인 김OO은 2018. 1. 30.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문화미래포럼(정OO, 정OO 등)에서 2008. 9. 초순 토론회를 했는데, 한예종의 6개월을 각 광역지자체 등에서 육성시키고 싶은 예술분야에 따라 분할하자는 의견 등 한예종에 대해 진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듯한 발언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다.
- 결국 문화미래포럼의 의견이 한예종 표적감사로 이어진 것 같다.
- 문화미래포럼의 토론회가 국정방송(KTV)<sup>10)</sup>에서 중계되었는데, 민간단체의 토론회를 국정방송(KTV)에서 중계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 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2017. 9. 25. 작성한 「국정원 개혁위, ‘정치인·교수 등 MB 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 조사결과 발표」 및 미디어워치 관련 기사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개혁위, ‘정치인·교수 등 MB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

8) 청와대 문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집행 결과 분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진선미, 제5쪽

9)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1. 30.자 진술조서

10) 현 KTV 국민방송(<http://www.ktv.go.kr/>)

등' 조사결과 발표」에서 국정원이 보수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를 활용하여 '보도협조'를 하였다고 하며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1) 보수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활용 '보도협조'**

가) 국정원은 2009년 2월 「미디어워치」(대표 변OO) 창간시부터 국정 지지 여론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간재원 마련 관련 조언을 해주거나, 여권 측면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휘부와 청와대에 보고하였음

《 「미디어워치」 운영실태 및 지원 관련 보고서 내용 》

- 2009.5.20 '미디어워치, 운영실태 및 활성화 지원방안'
- 2009.8.12 '미디어워치 활성화 중간 보고'
- 2012.3.30 (BH보고) '건전 인터넷 매체 경영난으로 종북매체 대응 위축 우려'

나) 국정원 지휘부는 국내부서 기업체 및 정부부처 담당 수집관들에게 「미디어워치」 정기구독 및 광고지원 요청을 지시하였음

다) 또한 변OO 대표를 통해 당시 국정 현안 및 특정 정치인 대상 비평기사를 등을 「미디어워치」에 수차례 보도토록 하는 한편

라) 경제 및 기관 담당 수집관에게 전경련, 삼성 등 26개 민간기업 및 한전 등 10개 공공기관에 「미디어워치」 '광고지원'을 요청토록 지시하여 미디어워치는 2009.4월~2013.2월간 4억여 원 가량의 기업 광고비를 수수하였음

바) 「미디어워치」를 통한 '국정홍보' 관련 우호 기사 및 좌성향 인물 비판기사 '보도 협조' 사례는 다음과 같음

- 2009.3.20 변OO 대표, '뉴데일리'에 좌파교수 비리 의혹 기사 협조 보도  
→ 2009.3.20 '한예중 사업 좌파 나눠먹기 의혹' 제하 보도
- 2009.6.16 「미디어워치」 대상 진중권 퇴출유도 등 현안관련 보도협조 결과  
→ 2009.6.17 '미디어워치, 진중권·전유경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로 검찰 고소'
- 2010.5.11 「미디어워치」, 호외판 발행으로 지방선거 지원 예정  
→ 2010.5.13 '한명숙 후보' 비난 논조 호외판 10만부 발행, 배포

즉,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디어워치가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고, 국정원은 미디어워치를 통해 '국정홍보' 관련 우호 기사 및 좌성향 인물 비판기사를 '보도 협조'하였는데, 그 중 한예중 U-AT 사업을 좌파(신청인, 황지우, 진중권 등)가 나눠먹고 있다는 기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 미디어워치는 2017. 9. 26. 위 조사결과에 반박하는 취지의 「하다하다 '국정원 배후설'까지 등장한 미디어워치 특종 '재조명」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 미디어워치 단독 특종은 국정원이고, 청와대고 지시 내려서 쓸 수 있는 수준의 기사

가 아니다.

-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변OO의 반론도 없이 보도한 언론사 모두에 대해 역대 민사소송을 하겠다.
- 국정원이 미디어워치에 1년에 한두 건 정도 기사 요청한 적이 있지만 모두 다 북한, 탈북, 이런 관련 기사여서 바로 기자에게 토스했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난다.
- 한예종 사기극 기사는 변OO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인생을 걸고 잡은 기사이지, 국정원 작품이 아니다. 이걸 한예종을 장악한 서울대 미학과 내부를 모르면 쓸 수 없는 기사이다. 이 기사 한방으로 변OO가 20대 전체를 보낸 서울대 미학과 선후배와 완전히 절연됐는데, 이런 걸 국정원 지시로 하겠는가.

### 3. 한예종 U-AT 사업 중단

#### 가. U-AT 사업의 의미

U-AT 사업은 유비쿼터스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크게 증가된 예술과 과학·기술의 증가된 접촉 기회를 예술교육의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려는 기획<sup>11)</sup>을 말한다. 문체부는 문화와 과학기술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부터 CT(Culture Technology) 정책을 시작하였다. 황지우 한예종 前 총장은 2007. 2.경 새로운 통섭 예술장르(예술+예술, 예술+인문학+기술)를 개척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창작할 수 있는 예술영역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U-AT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예종 총장의 결제로 수립된 U-AT 사업안(2008. 1. 20. 기획과-171)은 사업기간을 2008~2011년 총 4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한예종은 아래 「표」<sup>12)</sup>와 같은 경위로 2008년 U-AT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다.<sup>13)</sup>

시기	추진 내용
2007. 3.	문체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등 유관기관 설명
2007. 5. 16.	문체부장관 면담하여 사업계획 설명
2007. 5. 23.	U-AT 사업 관련 08년 예산 문체부 한도외 총 50억 원 요구(예산처)
2007. 7. 6.	R&D 사업 관련 08년 예산요구(과기부) : 한도외. “디지털콘텐츠 저작물 연구개발” 총 10억 원(3D 스토리 시뮬레이션 S/W 기본 알고리즘 연구개발, 디지털콘텐츠 포매팅 연구개발 각 5억 원)

11) U-AT 사업 기본계획 2008 “유비쿼터스 시대의 ‘마음의 피뢰침’” 제32쪽

12)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4477 재판기록 중 교원일반징계위원회 심의 자료 중 확인서

13)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4477 재판기록 중 교원일반징계위원회결정문

시기	추진 내용
2007. 7. 23.	U-AT 사업 예산 설명(예산처)
2007. 7. 25.	08년 예산 요구 관련 문제사업 제출(예산처) : 총 45억 원(일반사업 40, R&D 5)
2007. 7. 26.	디지털 콘텐츠 포매팅 연구개발 사업 예산 설명(과기부 정보전자심의관실)
2007. 8. 3.	U-AT 사업 예산 설명(예산처 산업정보재정과)
2007. 8. 16.	R&D 사업 예산 설명(예산처 과학환경재정과)
2007. 8. 23.	08년 예산안 문광위 예비검토
2007. 9. 5.	U-AT 사업 예산 예산처 심의 통과
2007. 10. 8.	문광위 전체회의. 08년 예산안 상정
2007. 10. 10.	문광위 예산소위 08년 예산안 심의(~10. 11.)
2007. 10. 11.	08년 예산안 예결위 전문위원 예비검토
2007. 11. 22.	U-AT 사업 관련 예산 45억 원, 예결위 소위 의결

## 나. U-AT 사업 예산 삭감 과정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은 2008. 3. 25. 한예종의 업무보고 당시 황지우에게 “한예종은 순수예술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CT 대학원, CT 기술연구소 등 문화 콘텐츠 관련 기구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여러 시도들을 집약적으로 묶어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큰 그림을 계획하고 있으니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하였으면 한다. 오늘 논의 한 학교 현안사항들은 긴 호흡을 가지고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U-AT 사업의 재검토를 지시하였다.<sup>14)</sup>

그러나 U-AT 사업이 갑자기 취소되면 기투입한 34억 5천만 원 정도가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는 국고 낭비의 측면이 있고, 콘텐츠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잃는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sup>15)</sup> 한예종은 2008. 5. 27. 문체부 기획재정담당관실에 한예종 2009 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며, U-AT 사업 예산으로 32억 6,2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는 2008년 U-AT 사업 예산 40억 원 대비 7억 3,8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었다.<sup>16)</sup> 문체부 기획재정담당관실은 2008. 6. 30. 기획재정부 문화방송예산과에 ‘2009년도 문체부 예산요구서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sup>17)</sup> 2009년도 U-AT 사업 예산으로 한예종이 신청한 금액보다 12억 6,200만 원 삭감된 약 20억 원(1,999,998,000원)을 요구하였

14) 한예종 업무보고 결과

15) 참고인 황지우에 대한 2018. 1. 22.자 진술조서

16) 2009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제출, 한예종 2009 세출예산 요구 현황

17) 2009년도 문체부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제출

다.18)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U-AT 사업 예산을 20억 원으로 1차 검토하여 통보하였고, 19) 문체부 기획재정담당관실은 기획재정부의 1차 검토 내용을 2008. 7. 14. 한예종에 통보하였다.20) 그러나 문체부는 2008. 10. 7. 경 2009년도 문체부 예산사업에서 U-AT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21) 당초 한예종이 산정하였던 U-AT 사업 예산은 아래 「표」와 같다.22)

(백만원)

총사업비※	-
'07까지	-
2008	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 인건비 1,420백만원</li> <li>• lab운영비 563백만원</li> <li>• 시설공사비 170백만원</li> <li>• 연구장비 구입비 1,847백만원</li> </ul>
2009	3,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 인건비 1,463백만원</li> <li>• lab운영비 857백만원</li> <li>• 시설공사비 65백만원</li> <li>• 연구장비 구입비 877백만원</li> </ul>
2010	3,3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 인건비 1,557백만원</li> <li>• lab운영비 890백만원</li> <li>• 시설공사비 20백만원</li> <li>• 연구장비 구입비 875백만원</li> </ul>
2011	3,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 인건비 1,604백만원</li> <li>• lab운영비 877백만원</li> <li>• 시설공사비 20백만원</li> <li>• 연구장비 구입비 665백만원</li> </ul>
2012	-

2008. 10. 7.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2009년 U-AT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이 문제되었다. 위 국정감사 당시 언급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23)와 같다.

18)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

19) 기획재정부 1차 심의결과 내용 제14쪽

20)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차심의 결과 통보 및 문제사업 제출

21) 2009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2) 2009 한도내 세출예산안 설명자료(한예종 제출)

23) 2008-2학기 제2차 원장회의 자료, 2008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위원명(당)	내용
조영택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T통섭교육 '09년 예산 미반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간의 중기계획사업인데 갑작스런 예산취소시 발생하는 문제점 질의</li> <li>- MB정부의 콘텐츠에 부합하는 사업인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하면서 재차 미반영 사유 질의</li> </ul> </li> </ul>
최문순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체부(본부)는 국회가 통섭예산을 다시 살리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예술국장에게 재차 답변 요구, 통섭예산의 재논의 부탁하며 가능하면 40억으로 노력해줄길 부탁함. TV매체에서 유망한 학문영역으로 들었기에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의견 제시</li> <li>• 한예종 교수 등의 코드 (좌파인사) 관련 코드(이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총장에게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예종에는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총장 답변</li> </ul> </li> </ul>
이정현 (한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설립 이후 우수 졸업생 배출 등 괄목할 만한 성과에 경탄, 감사드리며 이에 머물지 말고 매진할 것을 당부</li> <li>• 예결위 위원으로서 '09년 통섭교육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국회에서 다시 살리도록 하겠음</li> </ul>
정병국 (한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섭교육 및 한예종 위상을 인정하나, 현재 예술교육계들의 반발이 있음. 이들과의 공동연구 및 설득의 노력을 해가며 소신을 가지고 임하기 바람</li> </ul>
나경원 (한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정부 시절, 교수 징계와 승진에 대한 의문제기</li> <li>• 교수 특별채용시 선거와 관련되거나 문화연대 출신이 상당수여서 우려, 그리고 직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알아서 물러나야 함</li> <li>• 설치령 상 예술영재 및 실기교육이 목적인데 통섭까지 같이 해야 하는지, CT대학원 및 연구원과의 중복투자가 아닌지, 국가차원 및 문화부 전체관점에서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함</li> </ul>

이와 같이 논란이 증폭되자, 당시 문체부 예술정책관이었던 박OO는 “국회에서 노력을 하면 U-AT 사업 예산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취지로 국정감사 질문에 답변하였다. 그러나 문체부는 2009년 U-AT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8. 12. 경 국회에서 이 예산안은 확정되었다.

황지우는 2009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자 2008. 12. 30. 학칙 제21조 제2항을 삭제하여 미래교육준비단을 폐지하고, 같은 날 협동과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그때부터 한예종의 ‘기성회비 및 발전기금’ 재원으로 통섭교육시범과목 8개를 5개로 축소하는 등 U-AT 사업을 ‘AT 시범교육사업’으로 축소·재정비하여 운영하였다.<sup>24)</sup>

24) 서울행정법원 2011. 3. 31. 선고 2010구합34477 판결 판결문

#### 다. 유인촌이 U-AT 사업 중단방침을 세우고 예산 미반영을 지시한 정황

당시 문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이었던 정OO, 주무관이었던 OOO, 한예종 기획과장이었던 김OO은 2009년 U-AT 사업 예산 삭감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유인촌이 위 예산을 삭감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25)</sup>

그러나 문체부가 2008. 6. 10. 한예종에 보낸 자료에는 유인촌의 지시라는 내용과 함께 ‘한예종의 설립 취지가 실기 중심 교육이니까 U-AT는 취지, 본래의 기능에 벗어난 것이므로 중지가 적절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sup>26)</sup>

또한 당시 한예종 총장직무대리였던 박OO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시 한예종 사무국장인 이OO에게 ‘유인촌이 U-AT 사업 예산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자, 2008. 8. 쯤 기획재정부의 문체부 예산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위 예산을 아예 제로로 만들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이미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2009년도 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유인촌이 기획재정부에 직접 전화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sup>27)</sup>

당시 한예종 기획처장이었던 김봉렬(2007. 8. 16. ~ 2009. 2. 28.)<sup>28)</sup> 역시 박OO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U-AT 사업 예산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전액 삭감된 것은 “유인촌의 뜻”이라는 사실이 자신에게도 다 알려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9년 당시 야당 의원들은 U-AT 사업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처인 문체부와 기재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김봉렬이 알기로는 부처인 문체부에서 “이거는 부처의 뜻, 장관의 뜻이다.” 이런 정도의 강력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U-AT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29)</sup>

보수매체인 뉴데일리로 2009. 3. 20.자 「한예종 사업...‘좌파 나눠먹기’?’ 기사에서 前 문체부 장관 유인촌의 지시로 예산이 2009년도 U-AT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밝히고 있다.<sup>30)</sup>

25) 참고인 정OO·OOO·김OO에 대한 2018. 3. 30.자 전화통화결과보고

26) 2008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27) 참고인 박OO에 대한 2018. 2. 7.자 진술조서

28) 보직교수 변동 내역

29) 참고인 김봉렬에 대한 2018. 3. 19.자 녹취록

30) 한예종 사업...‘좌파 나눠먹기’?, 〈뉴데일리〉, 2009. 3. 20.

## 라. 유인촌이 U-AT 사업 종단을 지시한 이유

당시 한예종 총장직무대리였던 박OO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유인촌이 문체부 장관으로 부임할 무렵, 유인촌이 문체부 장관이 된 것은 심광현, 황지우, 이동연 교수 등 운동권 교수들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들려왔기 때문에, 위 교수들이 추진한 U-AT 사업을 무산시키려고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31)</sup>

황지우는 유인촌이 2008. 3. 25. U-AT 사업의 재검토를 구두지시한 것은 “한예종 해체 작업”의 일환이자 자신을 해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황지우는 유인촌이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한예종이 좌파의 온상이다”라는 프레임 을 걸어 한예종 해체 작업을 이어나간 것이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sup>32)</sup> 신청인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sup>33)</sup>

그러나 한예종 교수인 박OO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 같이 한예종이 정부에서 핍박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OO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U-AT 사업을 위해선 궁극적으로 제7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내부적으로 교수들도 제7원 신설에 전부 동의하고 있지는 않았고, 위 사업이나 새로운 원의 내용·목적에 대해 이해·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즉, 박OO는 당시 한예종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때마침 이명박 정권에서 위 사업과 제7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sup>34)</sup>

31) 참고인 박OO에 대한 2018. 2. 7.자 진술조서

32) 참고인 황지우에 대한 2018. 1. 22.자 진술조서

33) 신청인에 대한 2018. 1. 11.자 진술조서

34) 참고인 박OO에 대한 2018. 2. 20.자 진술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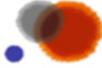
#### 4. 2009년 한예중 종합감사

##### 가. 2009년 한예중 종합감사 진행 경위<sup>35)</sup>

##### (1) 문체부의 종합감사 일정 및 내용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은 2009. 3. 10. ‘한예중 종합감사 계획 보고’에서 이 사건 종합감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함께하는 문화가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국예술종합학교 종합감사 계획 보고

---

2009년도 행정감사계획에 의거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코자 합니다.

1. 감사기간 : 2009.3.17부터
2. 감사자 : 감사담당관실 직원 11명
3. 감사방법 : 실지감사
4. 감사 중점사항
  - U-AT 통섭교육 관련사항
  - 조직·인력 운영실태
  - 학사관리 실태
  - 시설공사 관련사항
  - 산학협력단 및 발전기금 운영사항 등.

위 문건에는 감사의 종기(終期)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감사자가 감사담당관실 직원 11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감사 중점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U-AT 사업 관련사항이 첫줄에 기재되어 있다. 이는 2006년, 2007년 한예중 감사에서 모두 감사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고, 감사인원이 2~6명이었으며, 감사 중점사항 대신 감사범위가 ‘업무전반’으로 기재된 것과 차이가 있다.

35) 황지우 교수직위 확인 등에 관한 2010두15490 재판기록 중 소장, 한예중에 대한 문체부 종합감사 일지, 한예중 교수직위 복직을 위한 소송의 건

[그림-2] 2006년 한예중 취약업무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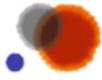
제목	취약업무감사(1차, 10.23-11.1) 시작
과제카드명	과제없는 기타일잘 합니다.
언론공개여부	공개
시간	2006.10.23. 09:00 [종일]
장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업무 개요</li> <li>○ 감사분담 : 민간용역업체에 위탁된 시설관리,운영실태</li> <li>○ 감사기간 : 06.10.23 ~ 11.1, 12.4 ~ 12.15(19일간)</li> <li>○ 감사원칙 : 2명(비교) 2OO, 6명(000)</li> <li>○ 감사대상 : 소속기관 및 공공 산하기관 중 외부용역 실시기관(1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10.24), 국립현대미술관(10.25), 국립민속박물관(10.23), 국립춘천(10.30-31), 공주(12.4), 김해박물관(12.5-6), 국립민속국악원(12.7-8)</li> <li>- 산하 공공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12.12), 영희진동위원회(12.13), 영산출판문화위원회(12.14), 평통국장(11.1), 국민체육진흥공단(10.26-27), 대한체육회(12.15),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12.11)</li> </ul> </li> </ul>

[그림-3] 2007년 한예중 자체종합감사

제목	한국예술종합학교 자체종합감사 실시(2007.8.28-9.7)
과제카드명	단위   자체 종합감사
언론공개여부	공개
시간	2007.08.28. 09:00 [종일]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예술종합학교 종합감사 실시</li> <li>○ 감사기간 : 2007.8.28-9.7(9일간)</li> <li>- 감사장소 : 한국예술종합학교 본부 2층</li> <li>- 감 사 반 : 감사팀장 1OO 외 6명</li> <li>- 감사방법 : 실지감사</li> <li>- 감사범위 : 2004.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전반</li> </ul>

다음날인 2009. 3. 11.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은 한예중에 ‘한예중 정기 종합감사 실시 통보’ 공문을 보내, 이 사건 종합감사 계획을 통보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함께하는 문화가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수신자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경유)

제목 한국예술종합학교 정기 종합감사 실시 통보

---

2009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감사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 2009.3.18(수)부터
2. 감사자 : 전 00 감사담당관 등 9명
3. 감사방법 : 실지감사
4. 감사 중점사항
  - 조직·인력 및 학사관리 운영실태
  - 예산집행 및 시설공사 관련사항
  - 산학협력단 및 발전기금 운영사항 등
5. 협조사항
  - 감사장 준비 : 컴퓨터(인터넷), 프린터, 전화, 책상, 의자, 사무용품 등
  - 감사자료 비치 : 규정집, 예산서, 결산서, 지출증거서류, 각종 문서철 등, 끝.

위 통보에서도 감사기간의 종기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감사기간은 2009. 3. 18. 부터로 변경되었고, 감사자는 10명으로 1명 감소하였으며, 감사 중점사항에서 U-AT 사업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다.

## (2)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한 종합감사의 진행 상황

### (가) 황지우의 소송기록에서 나타나는 진술

당시 한예중 총장이었던 황지우의 진술<sup>36)</sup>에 의하면, 문체부 감사실 국장 조OO는 2009. 3. 16.경 황지우에게 전화하여 “예술학교에 감사 들어간다. 지난 2월에 총리실에서 문화부 소속 산하기관들 감사가 계획된 것이어서 하게 된 것이니까 총장님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황지우는 “환영한다. 감사 잘 받으면 한예중 건강성이 입증되는 거 아니냐.”고 답변하였다.

36) 황지우 교수직위 확인 등에 관한 2010두15490 재판기록 등 관련 서류

이후 문체부 장관은 2009. 3. 18. ~ 4. 24. 한예종에 대한 이 사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문체부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10명 가량이 한예종에 투입되었고, 문체부 감사실 국장 조OO가 2009. 3. 19. 이후 한예종 총장 황지우나 사무국장 이OO에게 보고 없이 3차례 한예종에 와서 직접 감사를 지휘하였다. 2007년 문체부 감사, 200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상 5~6명이 직무감사를 했었다.<sup>37)</sup>

2009. 4. 14. 내지 17.경 조OO가 한예종에 3차 방문한 후 감사 방향은 황지우가 비전 역점과제로 추진했던 사항들(U-AT 통섭교육, 협동과정 등)과 황지우 개인에 집중되었다. 문체부 감사실은 한예종 운영과 무관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에 대해서도 황지우가 위 행사의 총감독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위 행사 시행대행사인 TBWA 부장 임OO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황지우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및 문체부 감사관실 강OO 등이 2009. 4. 23. 22:30~24:10 총장실을 수색하여 집무실 뒤편 화장실에 있는 개인 사물함(4단 캐비닛)에서 북한우표집, 북한지폐 2장, 료녕신문(조선족신문)을 발견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상기 자료들은 황지우가 1994년경 '역사비평 연구소'가 주선한 백두산-용정-두만강 답사에 국사학자, 국문학자 등과 함께 참여하여 관광기념품으로 샀던 것이다. 위 물건들은 2009. 5. 19. 국민일보에서 “황 총장의 집무실에서 북한 소인이 찍힌 우편물이 여러 통 발견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지적도 정부 측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기사화되었다.<sup>38)</sup> 황지우는 위 기사를 쓴 임세정 기자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前 문체부 차관 신재민에게 들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으므로, 당시 문체부에서 자신이 종북좌파로 북한과 교신하고 있다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발표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황지우는 위와 같은 심야수색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 받지 못했다고 하며, “위와 같은 행태는 민간인 사찰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러면서 황지우는 “아무리 제가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한 대학의 총장실을 야반에 도둑처럼 들어와서 사적 영역을 난도질하고 이에 관한 미확인 보도를 언론에 흘려버린 것은 심대한 인권 및 교권 침해입니다. 공직윤리를 점검하려면 저의 동의를 구하고 금고를 열던지, 총장 집무실에 들어와 제가 동석한 자리에서 자료 확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7) 2007년 한예종 종합감사

38) 진보시인 황지우 총장 전격 사퇴... 한예종 무슨 일 있었기에, <국민일보>, 2009. 5. 19.

한편, 문체부 감사관실은 2009. 4. 27. 황지우의 자녀인 황O의 한예중 2002년 입시를 감사하였다. 위 내용은 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2009. 5. 22. 총장이 자제 본교 입학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를 하였다.

#### (나) 참고인 최OO, 김OO의 진술<sup>39)</sup>

이 사건 종합감사의 배후에 관하여, 한예중 교수인 최OO는 신재민은 자신이 “이 정권의 차관이지 문체부의 차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닐 정도였으므로, 당시 문체부 예술정책관 박OO의 뒷선에는 前 문체부 차관 신재민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예중 교수인 김OO은 前 문체부 차관 신재민이 이 사건 종합감사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면에 나서서 교수들을 압박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 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U-AT 사업 평가과정상의 문제점

#### (1) 평가 개요

문체부는 2009. 4. 15.경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 U-AT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콘진원은 2009. 4. 17. 「U-AT 사업 중복성 검토를 위한 평가추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에 의거하여 2009. 4. 21. 콘진원 2층 회의실에 콘진원 담당자 3인과 10개 분야 전문가 10인이 모여 14:00~17:30까지 U-AT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위 평가의 세부적인 시간배정은 아래 「표」와 같다.

시간	세부내용	진행
14:00~14:25	오리엔테이션	백OO 책임
14:30~16:00	U-AT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검토	평가위원
16:00~17:30	토의 및 정리	백OO 책임

평가는 ① 전문가 각 1인이 총 10개 분과 평가, ② 평가 기준에 따라 작성된 평가표에 의거 평가, ③ 10인의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점 산출(총점 100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9) 참고인 최OO에 대한 2018. 1. 25.자 진술조서,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1. 30.자 진술조서

① 위 평가계획 제목이 「U-AT 사업 중복성 검토를 위한 평가추진계획(안)」인 점, ② 평가결과보고 문서의 제목 역시 「U-AT 사업 중복성 검토를 위한 평가 결과 보고」인 점, ③ 평가기준과 내용면에서도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중복성>과 관련된 항목의 배점이 100점 만점 중 80점에 해당하며, <사업성 부실 여부> 관련 배점은 20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평가는 <U-AT 사업 중복성 검토를 위한 평가>에 대한 것이지, 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 내용인 <사업성과 부실 및 예산 낭비 여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점수
사업수행결과물의 질적 수준 및 사업화 가능성 (40점)	결과물의 질적 수준 및 사업화 가능성	20점(사업 성과 평가)
	연구 수행의 적정성	10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10점
기존 수행 사업과의 차별성(40점)	CT R&D 사업과의 차별성	40점 80점(사업 중복성 평가)
기존 CT 교육기관과의 차별성(40점)	KAIST CT 대학원과의 차별성	20점

## (2) 평가과정의 문제점

U-AT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가 U-AT 사업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U-AT 사업과 관련된 총 35권의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했는데, 콘진원에서 진행된 2009. 4. 21. 전문가 평가과정을 보면 1시간 30분(14:30~16:00)동안 평가위원들이 동 사업 관련 자료를 보고 평가하였다. 콘진원은 평가 전날 평가위원에게 검토자료 중 요약문 등 일부만을 배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시간 동안 평가위원들이 35권의 보고서를 모두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담당자인 콘진원 CT개발팀 000은 평가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다소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사안”이라 급하게 연락을 했다고 양해를 구하였으며, 콘진원 CT개발팀 팀장 백00 역시 신청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4477 재판에서 “콘진원에서 진행하는 전체 평가의 50% 이상이 1일 전에 수십 권에 달하는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문을 보내고 당일 2시간 반 정도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체부로 받은 10권의 보고서(전체 자료)를 평가위원들이 평가 당일 1시간 동안 열람했고, <전시공연 비디오 자료>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평가위원들은 U-AT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제공받지도 못했고,<sup>40)</sup>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평가과정에서 신청인등 사업관련자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는 기회도 가지지 못하였다.

위 평가 이후 문체부는 2009. 4. 21. 콘진원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U-AT 사업 중복성 검토를 위한 평가 결과보고'를 받았다.

#### 평가결과 종합의견

- 사업수행결과물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견
  - 새로운 예술+기술 개념 제시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솔루션 제시 미흡
  - 산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음
- 기존 CT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의견
  - 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없음
- 기존 CT 대학원과의 차별성에 대한 의견
  - CT 대학원과의 근본적 차이가 없어 보임

### 다. 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

#### (1) 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 및 이에 대한 한예종의 이의신청

문체부 장관은 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2009. 5. 18. 한예종에 처분요구서를 보내 최초 요구 조치 사항을 지시하였다. 한예종은 2009. 6. 11. 문체부 장관에게 처분요구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전공과 무관한 교수 채용 부당

##### 비전공자 교수 채용 현황

소속	소속(과)	이름	학력(학사, 석사, 박사)
영상원	영화과	김OO	서울대 인류학과 / 미국 템플대 인류학과 석사, 박사 수료
영상원	영상이론과	심광현	서울대 독어교육 / 서울대 미학과 석사, 박사 수료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이OO	중앙대 영어영문 / 중앙대 영어영문 석사, 박사
협동과정	예술경영	홍OO	서울대 작곡과 / 서울대 음악학과 석사, 박사 수료

40) U-AT 사업의 핵심 결과물이 교육 및 전시공연창작물이라는 점에서, <8개 시범교과>의 결과보고서와 <전시공연 비디오 자료>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했으나, 제공되지 않았다.

소속	소속(과)	이름	학력(학사, 석사, 박사)
협동과정	예술경영	전OO	서울대 경영학과 / 일리노이대 비즈니스학과 석사
협동과정	예술경영	전OO	연세대 전산학과 / 한국과학기술원 경영정보공학 석사, 박사
계		6명	

문체부는 2009. 5. 18.자 처분요구서에서 한예종이 비전공자를 교수로 채용하였다고 지적하며, 위 「표」에 기재된 교수들은 학사·석사·박사전공이 임용대상 전공분야와 상이하므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41)을 위반하여 채용된 자들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예종은 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의 ‘전공분야’는 해당 학교의 교육 목표와 실행방침에 따라 정의된 특정 학문·예술의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학과·전공의 명칭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② 위 교수들의 학사·석사·박사전공 명칭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 교수들의 경력, 석사·박사 과정 등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연구, 저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③ 한예종 전공 중에는 ‘영상이론과’, ‘예술경영’ 처럼 위 교수들이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수학할 때는 존재하지

- 4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은 연도 말에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 ③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등의 심사
- ④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교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 ⑤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⑥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않았던 학과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전공 명칭만으로 전공일치여부를 판단한다면 채용할 수 있는 교수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일 것이므로 문체부의 지적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나) 초빙교원 채용 부당

문체부는 한예종설치령, 학칙, 설립이념 등에 따르면 한예종은 “예술실기를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므로 한예종 교수는 실기교육을 위한 자여야 하는데, 객원교수 서OO, 진OO은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 교원 채용은 한예종설치령, 학칙, 설립이념 등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진OO은 2008년 2학기에는 연구 활동만 전담했으므로, 학칙에 위반된다고 명시하였다.

반면, 한예종은 ① 한예종설치령, 학칙 등에 의하면 한예종은 예술실기뿐만 아니라 예술이론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며, ② 진OO은 학칙42)에 따라 연구 활동만 전담한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 (다) 이론학과 확대 운영 부적정

문체부는 한예종에 협동과정 등 이론학과가 확대개설되어 타 예술대학과의 차별성이 축소되고 실기중심교육이라는 한예종 설립취지가 퇴색하고 있으며, ① 실제로 이론전공 학과 선발 학생은 대부분 인문계 학교 출신이라는 점, ② 각 원별로 이론과목 8~30 학점을 공통필수로 두어 실제 수업시수가 타 학교에 비해 훨씬 많은 학생들에게 이론교과 수업부담에 따른 창의력 저하 등 실기학습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면, 한예종은 ① 한예종설치령 제2조에서는 예술 실기교육과 예술 이론교육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단순 기술 이상의 창의적 예술이 구사될 수 있으므로 한예종의 설립취지가 실기중심교육이라는 주장이 부당하고, ② 6개의 이론학과는 1989년에 개설된 이래 정원을 확대한 적이 한 번도 없고, ③ 협동과정은 실기계열의 협동과정과 실기와 기획경영을 연결하는 복합전공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론과의 확대가 아니고, ④ 관련 법령 등에서도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학교가 정하

42) 학칙 제13조의 2(교수시간) 전임교수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시간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연구 활동만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고 교육부 또는 문체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정해놓고 있을 뿐이고, ⑤ 한예종 신입생 중 상당수가 타 대학 재학 또는 졸업 후 본교에 입학한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출신 고등학교만으로 입학생 통계를 작성하였고, ⑥ 실기능력을 갖춘 학생은 예술고를 졸업해야 한다는 전제에 문제가 있고, ⑦ 문체부는 한예종 이론과 자체를 잘못 파악하였고(실기과인 영화과, 방송영상과, 연출과, 극작과, 연극학과를 이론과로 파악한 것으로 보임), ⑧ 세계적인 외국대학도 30학점 가량의 전공 관련 이론과목들을 필수이수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 (라) U-AT 사업 추진 부당

문체부는 U-AT 사업에 관하여 ① 반대하는 교수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부 교수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투입예산에 비해 사업결과물이 당초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고, ② 미래교육준비단 연구원(상임·비상임) 채용 및 운용이 부적정(공채 18명, 특별채용 59명)하고, ③ 기자재를 과도하게 구입 운영하였고, ④ 유인촌 장관의 지시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고, ④ 관련 규정 없이 U-AT 사업 참여 교수 인센티브를 부당지급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예산 낭비 내역

기자재명	평균단가	실제 구입 금액		적정 구입 금액		절감가능액(A-B)
		개수	금액(A)	개수	금액(B)	
작업용의자	94,155	210	19,772,660	111	10,457,205	9,321,455
칸막이	254,722	202	51,454,000	151	38,463,022	12,990,978
회의용 책상	256,651	13	3,336,500	10	2,566,530	769,970
복사기	5,877,746	8	47,021,974	6	35,266,476	11,755,498
노트북 컴퓨터	2,239,146	29	64,935,247	18	40,304,628	24,630,619
합계						59,468,520

반면, 한예종은 U-AT 사업에 관하여 ① isAT2008 행사 등을 통해 국내외 참여자들 및 국내 대다수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전도유망한 사업인 점, ② 특채는 인사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표에 의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된 점, ③ 기자재는 상시적인 랩별 회의와 각종 워크숍 및 시범교육 사업 운영, 외부인사 방문 등을 고려하여 구입한 것이므로 과다하지 않은 점(문체부의 계산에 따르면

전체회의를 할 경우 각 층에서 책상을 들고 와야 함), ④ 2009년부터 U-AT 사업은 국고가 아니라 한예중 자체 예산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장관의 결재가 필요한 점, ⑤ 한예중 교원 연구수당은 1년 단위로 연구 종료 후 연구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사업수행결과가 모두 완료되기 전에는 세부평가기준을 만들기 어려워 평가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것인 점, ⑥ 미래교육준비단 단장 및 부단장은 업무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점, ⑦ 문체부의 U-AT 사업에 관한 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 (마) 예술학교 협동과정 운영 부당

문체부는 서사창작과는 사실상 문예창작과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서사창작전공에서 신설된 과이므로 협동과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예중은 협동과정을 사실상 별도의 원으로서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여 신입생을 따로 모집하고 독자적으로 행정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한예중은 협동과정은 새로운 원이 아니라 각 원에 분산된 간학제적 교육역량을 모은 단위이며, 서사창작과는 문예창작과와 현저히 차별화된 협동과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바) 대학입시 운영 부적정

문체부는 일부 교수가 자신의 자녀 입학 입시 과정에서 출제 및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점, 입시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 교수의 입시관련 마스터클래스 참가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한예중은 입시 평가는 지원자 인적사항이 철저히 가려진 상태에서 3인의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고, 당시 교수의 구성상 채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하였다.

#### (사) 예술실기연수과정(이하 '예비학교') 운영 부적정

문체부는 예비학교가 예술영재교육원과 기능이 중복되고, 예비학교 선발심사의 위원 구성에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한예중은 예비학교와 영재교육원을 지속적으로 병행 운영할 계획은 없으나, 영재교육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아) (재)한예중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문체부는 발전기금 조성목적 외 부당집행, 석좌교수 지원 기금잠식분에 대한 대책 미비, 기금 보조금 정산관리 부실을 지적하였고, 한예중은 2007. 9. 시정 이후에는 발전기금이 부적정하게 운영된 예가 없으며, 석좌교수 지원기금 잠식분 지적은 교무과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자)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

문체부는 겸직 허가규정 위배, 교원 대외 활동지침 위배, 결·보강 업무처리 부적정에 관한 점을 지적하였고, 한예중은 결·보강을 문제없이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차) 학교 발전기금 및 업무추진비 사적용도 불법 사용

문체부는 한예중 총장이었던 황지우가 총장 사진전 개최 명목으로 발전기금 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사진전을 개최하지 않았는데 자세한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고 지적하였다.

학교 발전기금 600만원 사용내역 제출자료

사용일자	금액(원)	사용내역	비고
'07.8.8	2500000	개인 카메라 구입	본인 개인카드
'08.1.29	1500000	개인 카메라 렌즈 구입	"
'08.1.4~'08.5.5	425000	숙박비 및 주유비(6건)	"
'08.2.4~'08.5.2	1773300	주로필름, 사진인화비, 카메라 수리비 등(12건)	본인 개인카드 및 부인 명의 카드

이에 대해 한예중은 위 사진전은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목적으로 박OOO 갤러리 '눈' 대표의 계획 하에, 발전기금 사무국장이었던 하OO과 실무협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총장 비서가 직무대행자로 임시변경된 상황에서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었고, 사진전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연기된 상황이라고 해명하였다.

또, 문체부는 한예중 총장 황지우가 지도감독부서의 사전 허가 없이 총장 취임 후 4회의 공무외 국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점, 근무시간에 사진촬영을 위하여 32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점,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한예종은 위 업무추진비는 사진전을 위한 사진촬영, 학교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인사와 만찬 시 등에 사용한 것이므로 문체부의 판단은 기관장 업무추진 활동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 (2) 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문체부 장관은 2009. 6. 16. 위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변경된 최종 요구 조치 사항을 지시하였다. 각 요구 조치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연번	지적내용	최초 요구 조치	최종 요구 조치
1	전공과 무관한 교수 채용 부당	주의사항 : 신규교수 채용 시 교육공무원법령에 정한 신규채용절차 준수 개선사항 : 교육공무원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관련 하위규정(전임교수 및 조교임용규정 등) 개정	변경 없음
2	초빙교원 채용 부당	주의사항 : 실기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초빙교수를 채용할 것 개선사항 : 한예종 설치령 제7조 목적에 반하거나 해석에 과도한 재량의 여지가 개입될 수 있는 불명확한 내용의 관련 하위규정 개정 시정사항 : 진OO에게 부당지급된 보수 1,736만 원 환수조치	변경 없음
3	이론학과 확대 운영 부적정	개선사항 : 이론학과 축소 등 이론교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개선사항 : 설립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이론교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4	U-AT 사업 추진 부당	U-AT 사업 중단 징계사항 : 심광현(미래교육준비단장), 전OO(미래교육준비단 부단장) 중징계 시정사항 : U-AT 사업 참여교수에게 부당지급된 인센티브(12명, 37,500천 원) 환수조치	U-AT 사업 중단 징계사항 : 심광현(미래교육준비단장) 중징계, 전OO(미래교육준비단 부단장) 엄중주의(주의사항)를 촉구
5	예술학교 협동과정 운영 부적정	시정사항 : 서사창작과 폐지 등	협동과정을 고등교육법령에 부합되도록 운영
6	대학입시 운영 부적정	징계사항 : 김OO 징계조치 개선사항 : 입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 강구 개선사항 : 마스터클래스 참가 관련 규정 마련	개선사항 : 입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 강구 개선사항 : 마스터클래스 참가 관련 규정 마련

연번	지적내용	최초 요구 조치	최종 요구 조치
7	예술실기연수과정 (예비학교) 운영 부적정	시정사항 : 음악원 실기연수과정 폐지 개선사항 : 영재 선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변경 없음
8	기성회계 예산집행 부적정	개선사항 : 한예종 총장의 대외연구 활동비 및 교수 보직수행경비를 편법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강구 주의사항 : 기성회계의 법인카드를 세목별로 분리하여 운용	변경 없음
9	(재)한예종 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주의사항 : (재) 한예종 발전기금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변경 없음
10	교원 복무 관리 부적정	주의사항 : 직원 복무관리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주의 및 재발방지	변경 없음
11	학칙 등 제 규정 단서 조항 과다	개선사항 : 한예종 운영의 중요사항 학칙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 정비	변경 없음
12	한예종 발전기금 및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징계사항 : 황지우에 대한 중징계 의결 시정사항 : 불법사용한 한예종 발전기금 6,000천 원과 업무추진비 2,834천 원 회수	징계사항 : 황지우에 대한 중징계 의결 시정사항 : 불법사용한 한예종 발전기금 6,000천 원 회수

## 라. 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처분 등

### (1) 신청인에 대한 정직 처분

前 한예종 총장 박종원은 문체부의 한예종 종합감사 결과 통보(2009. 5. 18.) 및 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2009. 6. 16.)에 따라 2009. 10. 27. 한예종 징계위원회위원장에게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보내 신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위원회위원장 박인석은 2009. 11. 3. 신청인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 2009. 11. 11. 예정된 제1차 교원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2009. 11. 11. 개최된 제1차 교원일반징계위원회에는 사무국장 이OO, 음악원장 오OO, 영상원장 박OO, 무용원장 김OO, 미술원장 곽OO, 전통예술원장 김OO이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신청인도 위 교원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위 교원일반징계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한 추가검토를 진행한 후 2009. 12. 9. 제2차 교원일반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위 날짜에 개최된 제2차 교원일반징계위원회에는 동일한 위원이 참가하였고, 해임의견 1명, 정직 3개월 의견 5명으로 신청인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이 의결되었다.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징계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징계위원들은 자신들은 자세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문체부가 요구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를 뿐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이후 문체부가 처음 신청인에 대해 요구한 징계는 파면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당시 한예종 학생들이 큰 규모로 집회를 하였고, 학부모들도 나서서 항의를 하자, 유인촌 라인으로 총장이 된 박종원과 교수들이 눈치를 보다가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sup>43)</sup>

결국 한예종은 2009. 12. 23. 신청인에 대하여 U-AT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대비 성과 미미 및 예산낭비 초래, 연구원 채용 및 운용의 부적정, 기자재 과도 구입, 한예종의 지시 거부, 인센티브 부당지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10. 5. 17. 정직 2월의 처분으로 변경되었다.<sup>44)</sup> 징계사유는 아래 「표」와 같다.

2009. 12. 23.자 정직처분 사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정직처분 사유
신청인은 'U-AT 사업'과 관련하여, ① 32억 원 투입예산(인건비 12억 원, 기자재 15억 원 등)에 비하여 사업결과물이 당초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고, ② 미래교육준비단 연구원 채용 및 운용 부적정, ③ 기자재를 과도하게 구입운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④ 2008. 3.경 기관장 회의 당시 "예술학교의 통섭교육사업을 재검토하라."라는 문체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⑤ 통섭교육사업 참여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U-AT 사업'과 관련하여, ① 32억 원 투입예산(인건비 12억 원, 기자재 15억 원 등)에 비하여 사업결과물이 당초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고(이하 '제1징계사유'), ② 2008. 3.경 기관장 회의 당시 "예술학교의 통섭교육사업을 재검토하라."라는 문체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이하 '제2징계사유'), ③ 통섭교육사업 참여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하였다(이하 '제3징계사유').

제1·2차 교원일반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한예종 교수 박OO는 당시 자신은 위 교원일반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옹호하였으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신청인에 대해 우호적이진 않았고, 정직 3개월보다 더 중한 징계를 하려고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45)</sup>

43) 신청인에 대한 2018. 1. 11.자 진술조서

44) 소청심사청구사건 결정통지(2010-41 정직3월처분취소청구)

45) 참고인 박OO에 대한 2018. 2. 20.자 진술조서

## (2) 황지우에 대한 한예종 교수직 퇴직처리

황지우는 2009. 5. 19. 이 사건 종합감사가 “전형적인 표적감사”라고 비판하며 총장직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문체부는 2009. 5. 30. 황지우가 제출한 사퇴서를 수리하였다. 이후 한예종은 황지우가 한예종 총장으로서의 임기만료 전 사임하였으므로 종전 교수등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황지우에 대한 교수직 퇴직처리를 하였다.

황지우의 진술<sup>46)</sup>에 의하면, 황지우가 한예종 총장직 사퇴서를 제출한 직후, 당시 문체부 인사과 사무관 김OO이 한예종 총장비서 박OO에게 전화하여 “사표 수리되면 교수직 상실된다는 것 알고서 사표 제출한 것이지?”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2009. 5. 28.경 문체부 제2차관 김대기가 한예종 기획처장 김OO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한예종 경리계장 김OO은 총장비서실에 총장 퇴직금 인출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당시 한예종 사무국장이었던 이OO<sup>47)</sup>은 2009. 5. 29. 황지우에게 전화하여, “내일 자(5월 30일)로 총장직 사표수리가 된 공문을 지금 받았고, 총장직은 정무직으로 교수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표 수리되면 교수직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에 황지우는 교수직 상실이 공문에 명기되었는지 질의하였고, 이OO은 “명기는 되지 않고 문체부 인사과장 임OO에게서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당시 문체부 인사과장이었던 임OO는 본인이 이OO에게 “총장직 사표 수리되면 교수직이 상실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면서, 황지우가 사퇴서를 제출할 당시 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황지우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퇴서를 수리할지 아니면 징계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였다. 임OO는 만일 황지우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다면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거라고 주장하였다.<sup>48)</sup>

황지우는 2009. 6. 2. ‘한예종 교수직 박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였고, 그날 12시 한예종 원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당시 문체부 장관 유인촌은 원장들이 제기한 황지우의 교수직 복직의 건에 대해 “그건 학교가 알아서 하면 된다. 학교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채용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황지우의 진술에 의하면, 2009. 6. 9. 황지우가 한예종 교무과에 교수직 복직

46) 황지우 교수직위 확인 등에 관한 2010두15490 재판기록 등 관련 서류

47) 2009. 5. 1. 한예종 사무국장으로 임명됨

48) 참고인 임OO에 대한 2018. 2. 8.자 진술조서

신청방법을 묻자 사무국장 이OO은 “재임용으로 해야 할지 신규채용으로 해야 할지 문체부 지침을 알아보고 말해주겠다”며 답변을 미루었으며 2009. 6. 16.경 한예종 주무과인 예술정책과의 과장이었던 A가 한예종 총장 직무대리 박인석에게 와서 황지우의 교수직 복직은 총장의 특별채용으로 하는 것이 좋고, “총장 직무대리의 권한은 제한적이므로 지금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무대리가 교수 특채를 결정할 수 없고 다음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취지의 지침을 주고 갔다.

한편, 한예종 교무과는 2009. 6. 15. 교육과학기술부에 “임기를 마치기 전 한예종 총장직에서 사임하면 한예종 교수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상실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인쇄 : 한지혜 / 교무과 (2009-07-03 15:36:45)

보관

미래를 위한 교육,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



## 교육과학기술부

수신자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한국예술종합학교)

---

1. 관련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1202 (2009.6.15.)
2. 귀 교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질의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관련
    - 대학의 장이 임기도중 의원면직의 경우에도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자동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교원으로 별도 임용절차가 필요한 지 여부
    - 교원으로 임용절차가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직은 자동상실 및 자격박탈 등 어떤 성격인지 여부
4. 회신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교원은 총장 및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있고 각각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의거 임용되는 바,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시점에서 직전의 교원의 직은 자동 상실 되는 것임.
  -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에 의거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 제1호의 임기(4년)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임기도중 의원면직의 사유로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마. 관련 판결

### (1) 신청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13639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한예중 총장이 2009. 12. 23. 신청인에게 한 정직 2월 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정직처분’)을 취소하며, 아래 「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변경정직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징계사유	존부 근거
제1징계사유 X	<p>U-AT 사업은 2008 ~ 2011년까지 계획된 것인데, 콘진원의 평가는 2009. 4.경 이루어졌으므로 U-AT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p> <p>콘진원의 평가만으로는 신청인이 성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미흡한 사업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p> <p>콘진원의 평가는 U-AT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므로 신청인이 U-AT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p>
제2징계사유 X	<p>한예중은 단순히 문체부장관 하부조직이 아니라 문체부장관에 소속된 별도 기관이고, 문체부장관은 한예중 총장을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한예중에 소속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이므로, 문체부장관이 한 지시가 한예중 총장을 통해 신청인에게 직접적인 명령 형태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신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58조가 정한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p> <p>U-AT 사업은 일반 교과과정 편성에 관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총장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문체부, 기획예산처 등 유관기관을 거쳐 국회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문체부장관이 한 재검토 지시가 전면적인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p> <p>U-AT 사업을 계속 수행하도록 한 황지우 총장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적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u>기존에 문체부, 기획예산처 등 유관기관을 거쳐 국회로부터 45억 원의 예산까지 책정받았던 위 사업에 대하여 문체부장관이 일방적인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총장의 교육과정 편성권한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u></p>
제3징계사유 O	<p>신청인은 운영세칙에 따라 책임교수에 대한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운영세칙이 미비한 상태로 법령 등 근거없이 연구수당을 지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가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함.</p> <p>다만, <u>연구수당 지급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평가나 그 지급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함.</u></p>
<b>징계양정의 적정성</b>	<p>한예중 총장은 5개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정직 3월이라는 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3개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정직 기간을 2월로 감경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제3징계사유 하나뿐이고, 연구수당 지급경위, 재원이 된 기성회계 중 연구보조비 과목 성격, 신청인이 한 행위 내용,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u>이 사건 변경정직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하다.</u></p>

## (2) 황지우에 대한 대법원 2010. 11. 24. 선고 2010두15490 판결

대법원은 교수가 총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총장직에서 사직한 경우에도,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 등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 등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고 판단하여, 황지우의 한예종 교수 직위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① 교육공무원법은 교권과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고<sup>49)</sup>, ② 교육공무원법상 교수 등이 재직 중인 대학의 총장 등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③ 교육공무원법에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 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당시 대학의 장 임용과 동시에 교원직을 의원면직 처리한 후 임기만료 후 재임용하던 관행으로 인해 젊고 유능한 대학교원이 대학의 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꺼리고 대학의 장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자 대학의 장이 임기만료 후에 교수 등으로 당연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장과 교수 등 대학 교원의 신분을 더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 의원면직되지도 아니한 교수 등에 대해 대학의 장 임용으로 인해 당연히 종전 교수 등의 신분을 상실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④ 그와 같은 취지에서는 대학의 장이 그 임기를 마친 경우와 도중에 사임하여 대학의 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를 구별하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원이다른 공직에 진출하는 때에도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이 재직 중에 같은 교육공무원인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전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49)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바. 이 사건 종합감사의 배경

### (1) 서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2008. 8. 27.경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국정원이 미디어워치를 통해 2009. 3. 20. ‘보도 협조’한 한예종 U-AT 사업을 좌파(신청인, 황지우, 진중권 등)가 나눠먹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관련자들의 진술, 관련 기사, 2008. 8. 20.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①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한예종 총장으로 임명된 황지우, 소위 ‘좌성향’ 교수인 심광현을 인적청산하려는 움직임, ② ‘문화예술분야의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으로 인식된 한예종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신청인과 참고인 황지우의 주장

#### (가) 신청인의 진술<sup>50)</sup>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종합감사는 기존 한예종에 대한 종합감사와 달리 참여한 감사관 총 인원, 감사기간 등의 측면에서 “문체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 또, 당시 한 감사관이 미래교육준비단 조교 000에게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아무거나 자료를 내놔라.”, “장비를 잘못 쓰거나, 분실하거나, 10원이라도 잘못 쓴 돈이 있을 텐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법이 있냐”는 이야기를 하며 압력을 가하기도 했으므로 이 사건 종합감사는 소위 ‘표적감사’에 해당한다.
- 당시 문체부 제1차관 신재민은 2009. 6. 2. 서초동 한예종을 방문하여 “정권이 바뀌면 정권에 맞는 총장이 오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sup>51)</sup>

50) 신청인에 대한 2018. 1. 11.자 진술조서

51) 2009년 한예종 표적심사와 블랙리스트

(나) 참고인 황지우의 진술<sup>52)</sup>

당시 한예종 총장이었던 황지우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문체부 예술정책관 박OO가 2009. 1. 8.<sup>53)</sup> 13:30경 최OO 사무관을 대동하고 한예종에 내방하여 황지우에게 “청와대에서 몇 차례 전화가 왔다. 총장거취, 어떻게 할 것인가?”, “장관 말 듣고 총장직에서 물러나 줄 수 있냐”라고 질문하였고, 황지우는 “여기는 대학이다. 총장을 교수들이 선출한다. 임기를 지키는 것이 학내 동요나 사회적 잡음을 없애고 다음 총장이 순리대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황지우도 마음 같아서는 총장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예종과 같은 대학을 정권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쉽사리 물러날 수도 없었다. 그러자 박OO는 “알았다. 그렇게 전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 사실 박OO의 뒷선에 신재민 차관이 있지 않았나 싶다. 황지우가 2009년 당시 입학식 배너의 문구를 논어에 나온 화이부동(和而不同)을 문구로 결정하자, 신재민이 위 문구를 황지우가 MB 정권과 동(同)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여온 확대기관장 회의 때 그 문구를 문제 삼아 발끈 하면서 “총장이 이렇게 정치적인 문구를 적으면 되냐”고 힐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황지우는 “한예종에 여섯 개의 다른 장르가 있는데, 함께 어울려 통섭하되, 각 장르가 같아지지 않고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문구를 선택한 것이었다.
- 또, 신재민은 그 무렵 라디오 대담에서 “황지우 총장은 누가 봐도 전 정권 인사지 않느냐. 새로운 정권과 일을 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 그래서 그 당시 황지우는 신재민이 이명박과 가깝기 때문에 신재민과 청와대 사이에 이어진 선이 작동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졌었다.
- 특히 문체부 인사, 정책 등의 결정은 차관인 신재민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 이러한 점과 이 사건 종합감사의 진행과정을 보면, 이 사건 종합감사가 ① 총장퇴진 압박, ② 한예종 구조개편 내지 리모델링을 겨냥한 전형적인 ‘표적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2) 참고인 황지우에 대한 2018. 1. 22.자 진술조서, 황지우 교수직위 확인 등에 관한 2010두15490 재판기록 등 관련 서류

53) 관련 기사(황지우 “한예종 총장직 사퇴”(종합2보), <연합뉴스>, 2009. 5. 19.)에는 3월초로 기재되어 있다.

### (3) 문체부 관계자의 주장

#### (가) 참고인 박OO의 진술<sup>54)</sup>

2009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종합감사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이었던 박OO는 2018. 2. 27.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09. 1. 8.<sup>55)</sup>경 최OO 사무관을 대동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내방하여 황지우에게 “청와대에서 몇 차례 전화가 왔다. 총장거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종합감사에는 前 총장 황지우를 해임하려는 목적이 없지 않았으나,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해임하는 일은 정권이 바뀌면 항상 있는 일이다.

#### (나) 한예종 총장 기자회견 관련(자료목록 33)

위 문건은 2009. 5. 20. 당시 문체부 감사담당관 신OO이 작성한 것이다. 위 문건에서 문체부는 문체부 예술정책관 박OO가 한예종을 찾아가 황지우의 거취를 물어본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종합감사는 황지우의 퇴진과 한예종 구조개편을 위한 표적감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체부의 정기종합감사라고 주장하였다.

#### (다) 한예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자료(자료목록 34)

위 문건은 2009. 6. 17. 당시 문체부 감사담당관 신OO이 작성한 것이다. 위 문건에서 문체부는 이 사건 종합감사는 정기적인 행정감사 계획에 따른 종합감사이고,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54) 참고인 박OO에 대한 2018. 2. 27.자 전화통화결과보고

55) 관련 기사(황지우 “한예종 총장직 사퇴”(종합2보), <연합뉴스>, 2009. 5. 19.)에는 3월초로 기재되어 있다.

#### (4)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인식

##### (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08. 8. 20 공직윤리지원관)

###### □ 조직신설 목적

-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盧)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의 국정수행에 차질
- 공직 사회의 기강확립과 사기진작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7. 21)

###### □ 지휘체계 검토(안)

- 검토방향 : VIP 의중이 ①정확히 전달되고 ②보안을 유지하면서 ③불필요한 마찰 없이 ④밀도 높게 추진될 수 있는 지휘 보고라인을 모색

구분	(제1안) 국무총리	(제2안) BH 민정비서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당의 정치공세와 VIP부담 완화</li> <li>- 표적사정 논란 회피, 활동제약 완화</li> <li>* 총리가 순수한 행정조직을 통해 내각통할권을 발동한다는 인식</li> <li>* 점검대상, 정치일정에 구애받지 않음</li> <li>- 업무의 효율성 제고</li> <li>* 공직사회를 다스리는 원리(공무원법상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잘 활용</li> <li>- 지휘체계가 법령(직제)에 부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추진에 힘 실려</li> <li>· 각 부처의 지원과 통제가 원활</li> <li>- 업무분장상 BH(민정)의 고유업무라는 인식이 더 많고, 전 정권에서도 민정라인이 지휘</li> <li>- VIP 국정철학 구현에 더 유리</li> <li>* 민정라인은 VIP 직할부대로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몰입도가 높음</li> <li>- 공직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고급정보 활용</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H(민정)보다 업무추진시 힘이 덜 실리고</li> <li>· 각 부처의 지원과 통제 약화</li> <li>* 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부처의 지원을 얻고 부처를 원활히 컨트롤</li> <li>- VIP 국정철학 접목에 한계</li> <li>* 상대적으로 VIP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몰입도가 낮을 개연성</li> <li>- 사회 각계의 다양한 고급정보 활용에 한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당의 정치공세에 전면 노출, VIP 국정수행에 부담 가중</li> <li>- 표적사정 논란, 활동상 제약</li> <li>* 정치인인 민정비서관이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사찰을 한다는 인식</li> <li>* 업무추진시 점검대상, 정치일정 고려</li> <li>- 업무의 효율성 저하</li> <li>* 민간인 사법처리를 해온 민정라인이 형법(뇌물·직무유기죄) 외의 다른 정책수단을 쓰기에는 한계</li> <li>- 지휘체계가 법령에 부합하지 않음</li> </ul>

※ 검토의견 : 국무총리(다만, VIP께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

- 현 정국은 야당이 정권교체로 인한 상실감, 재집권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정치공세의 빌미만 생기기를 바라는 상황

- 정치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VIP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 운영의 묘를 살려,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며,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
  - ※ 정부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위임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형식적인 업무분장에 구애될 필요가 없으며, 비선활용은 추후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도 긴요
- 보고라인은 최대한 줄이되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BH 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으로 하고
  - 총리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총리」로 함
  - ※ 우수공무원 발굴, 감찰결과 조치는 BH 공직기강팀장(이OO)과 사전 조율

#### □ 당면과제

-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조속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
  - 무능·복지부동한 공직자에 대해 一罰百戒 차원에서 단호히 인사조치
  - 추석, 2학기 교직원 인사철 전후로 금품수수·향응 제공행위 적발(9월중) 등 집중 감찰
- 각 부처에 대해 국정과제·VIP 지시사항 관련 정책점검 실시(9월)
  - 특히, ‘공기업 선진화’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 지원(선진화 완료시까지)
-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제출 유도(9월, 공기업 임원 39명)**
  - ※ 필요시 각 부처 감사관실 동원

#### □ 운영상 유의사항

-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는 고도의 보안성을 요하므로
  - 이를 기획총괄하는 국.과장 인사는 BH에서 직접 챙겨야 하고, 예산 편성은 총리실에서 하되,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도록 조치
- 위 지휘 보고체계 이외의 라인에서 관여하게 되면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고 보안유지가 안되므로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별도 지시
  - ※ 대통령실장이 민정비서실에서 자료요구 등 업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보고라인 정리  
 논거 : 과거 사직동팀이 곧바로 청와대 공격루트가 되었으므로 외양을 총리실 소속으로 하여 일상적인 것은 총리께 보고하되 민감한 사안은 절대 충성심이 보장되어 있는 비공식 선을 활용할 필요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관련 VIP 보고사항은 공직윤리지원관이 대통령실장께 보고하되
  - 자체 기획하거나 VIP 지시사항은 BH 공직기강팀과, 첩보 인지 등 기타 비공식적으로 추진된 내용은 고용노사비서관과 사전 조율

위 문건은 2008. 8. 20.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2009. 5. 16. 위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였다. 위 문건은 조직신설 목적 중 하나로 “노(盧)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을 언급하고 있고, 당면과제로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제출 유도(9월, 공기업 임원 39명)”해야 한다는 점을 꼽으며, “필요시 각 부처 감사관실 동원”하라고 기재하고 있다.

(나) 진보판사 동향에 이견희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문어발 사찰’, <한겨레>, 2012. 12. 5.

한겨레는 2012. 12. 5. 위 기사에서 민간인 사찰 사건 재수사 기록 중에 前 한예종 총장 황지우도 등장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2009년 4월 이영호(48)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하명으로 시작된 ‘한예종 공직기강 점검’의 조치 결과로 ‘문화부 통보(4. 28), 황지우 총장 사퇴(09. 5)’가 적혀 있다.

##### (5) 관련 기사<sup>56)</sup>

① 뷰스앤뉴스는 2008. 3. 17. ‘유인촌 “김윤수-김정현 등 5명 물러나라’ 제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 前 문체부 장관 유인촌은 2008. 3. 17. 김정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산하기관장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재임기간중 문제’를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경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유인촌은 “계속 싸움을 확대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끝내 자리를 고집하신다면 나로서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 그는 친노 기관장 축출 논란과 관련해선, “모든 인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코드’로 자리에 앉았지만 이후 능력을 발휘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분이라면 정권이 바뀌어도 당연히 임기를 보장받는 게 맞다. 아니 그런 분들은 더 대우를 해 드리고 싶다”며 “문제가 되는 건 계속 잡음을 일으키는 분들”이라고 해명했다.

56) 유인촌 “김윤수-김정현 등 5명 물러나라”, <뷰스앤뉴스>, 2008. 3. 17., 김윤수 “유인촌, 양심 없는 사람”, <미디어오늘>, 2010. 9. 10.

② 미디어오늘은 2010. 9. 10.자 ‘김윤수 “유인촌, 양심 없는 사람”’ 제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 ‘표적성 물갈이’ 논란이 일었다. 유인촌(6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08년 3월 중앙일보를 통해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김 전 관장을 지목했다. 자진 사퇴하지 않은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졌다. 결국 김정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진보 성향의 인사들은 줄줄이 중도 해임당했다.

- 대법원은 2010. 9. 9. 김윤수(7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임조치가 부당하므로 미지급 급여 8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윤수 전 관장은 지난 9일 오후 전화 인터뷰에서 “과거 전두환 정권도 이렇게 중도 해임을 안 시켰는데, 이 정권이 그렇게 했다”며 “안 나가고 버티니까 이것저것 뒤져서 해임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유인촌 장관이 나를 쫓아내려고 여러 사람이 모인 기관장 회의 때 반말로 지시를 하면서 모욕을 주기도 했다”는 발언도 재차 확인하며, “당시엔 문화부 주요 부서 관리들이 날 만나서 협박도 하고 회유도 했다”고 말했다.

- 김윤수 전 관장은 인터뷰에서 “참여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해임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미술관장에서 임기 중도에 쫓겨난 사람이 사실상 없다. (1969년 건립 이후) 미술관 초창기에는 관리들이 맡았기 때문에 (임기 중) 인사조치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 후엔 임기를 못 마친 사람은 없다. 과거 전두환 정권도 이렇게 중도 해임을 안 시켰는데, 이 정권이 그렇게 했다. 문화부쪽에선 ‘외국 선진국에도 정권이 바뀌면 문화 기관장이 바뀐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도 그런 일은 없다. 독일에서는 새 정권 책임자가 문화 기관장을 맘대로 못 바꾸도록 하는 법률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 (6) 한예종 관계자들의 주장

### (가) 참고인 김OO의 진술<sup>57)</sup>

한예종 영상원 영상이론학과 교수인 김OO은 2018. 1. 24.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감사 당시 교수협의회 부의장이었던 김OO 교수가 학교 식당 가는 길에서 문체부 감사관들끼리 “교수 누구는 날리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위 이야기를 듣고 김OO은 이 사건 종합감사가 소위 “표적감사”구나라는 것을 더욱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 당시 변OO가 미디어워치 등에서 활약하고 있었는데, U-AT 사업 및 한예종에 흠집 내기를 시도했다.
- 김OO은 신재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

### (나) 참고인 김봉렬의 진술<sup>58)</sup>

이 사건 종합감사 당시 한예종 교수였던 김봉렬은 2018. 3. 19.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종합감사 당시 평교수들 사이에서도 “좀 집요하게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일반적으로 문체부에서 한예종 종합감사를 하면 학과에도 자료요구를 하는데, 당시에는 학과에는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지우를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쓰지 않았나 싶다.

### (다) 한예종 교협의 입장<sup>59)</sup>

한예종 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 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할 문체부가 오히려 감사를 빌미로 학교의 미래지향적인 교육 사업들을 좌절시키고, 교수들의 정당한 교권을

57)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1. 24.자 진술조서

58) 참고인 김봉렬에 대한 2018. 3. 19.자 녹취록

59) 2009. 5. 20.자 한예종 교수협의회 성명서, 2009. 6. 1.자 한예종 교수협의회 성명서, 2009. 6. 3.자 한예종 교수협의회 공개질의서, 2009. 8. 27.자 한예종 교수협의회 성명서, 2009. 11. 19.자 한예종 교수협의회 성명서

짓밟고, 본교 교수들의 총의를 통해 선임된 총장을 좌파 코드인사로 몰아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본교 교수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의 내용만 놓고 보면 작년 9월 문화미래포럼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고 있고, 본교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감사가 본교 정체성을 흔들려는 외부 세력과 연계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
- 이번 감사 결과서와 처분 요구조항들은 행정적인 보완의 수준을 넘어서 학교 전체의 행정적 권한과 교원의 권리를 본부가 통제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냈다.
- 이 사건 종합감사는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특정한 사업과 특정한 개인들을 표적하여 이루어졌다.
- 문체부 제1차관 신재민은 2009. 6. 2. 오후 한예종 서초동 캠퍼스를 방문하여 한예종 일부 원장, 기획처장, 교수들, 문체부 직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황지우 총장이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유럽에서는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총장도 좌파에서 나오고,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에서 총장이 나와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갖는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신재민의 발언은 이 사건 종합감사가 현 정권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총장의 퇴출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감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라) 참고인 박OO의 진술<sup>60)</sup>

당시 한예종 교학처장이었던 박OO은 2018. 2. 7.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문체부 공무원들이 “이번 감사는 특별한 게 아니고 매년 나오는 거라 며칠이면 끝날 것”이라고 하며, 교학처장인 박OO이 할 일은 없고 담당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종합감사는 3주가 되어도 끝나지 않았다.
- 한예종에 파견된 문체부 공무원으로부터 “들춰내지 못하면 들어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해 들었다. 심지어 “별 문제 안 될 것이라도 감사실에서 적발하도록 이야기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60) 참고인 박OO에 대한 2018. 2. 7.자 진술조서

- 문체부 감사실 국장이었던 조OO의 진두지휘로 뭔가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마) 참고인 박OO의 진술<sup>61)</sup>

당시 한예종 영상원장이었던 박OO은 2018. 4. 19.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저 역시 많은 감사자료제출을 요구받았고, 한예종 영상원 행정실 직원들이 2009년 종합감사가 예년보다 세게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다.

**(7)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의 우려표명**

2009년 하반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이 사건 종합감사를 문제 삼았다. 문체부는 2009. 11. 10. ~ 11. 위 위원회에 정부대표단으로 참가하여 이 사건 감사에 관한 위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단단 위원의 질문 : 한예종의 학문적 자유 보장에 관한 질의
- 답변 : 한예종에 대한 감사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감사계획에 의거, 소속기관에 대하여 통상 2년에 한번 실시하는 종합감사로서, 회계운영, 교수 채용, 입시 관리, 학과 개설, 교원 복무 등의 교무 행정에 대하여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서, 자율성, 또는 교권이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한예종이 학문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국가 예술 영재를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2009. 11. 21. 최종 견해 초안을 접수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체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종합감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61) 참고인 박OO에 대한 2018. 4. 19.자 진술조서

**원문****D. 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35.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absence of self-regulation and diversity in university education in arts and culture, following the reques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o solely concentrate on “practical education”.

The Committee, while noting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on the need for general audits, recommends that universities be guaranteed the freedom to exercise fully their academic authority and control their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번역****D. 우려와 권고 사항**

위원회는 문체부가 한예종에게 “실기교육”에만 집중해달라고 요구한 점에 관하여, 문화예술분야 대학(고등교육기관)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위원회는 전반적인 감사의 필요성을 피력한 문체부의 답변에 주목하며, 대학의 완전한 교권행사과 교과과정 및 교수법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함.

문체부는 위 지적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해달라고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에 요청하였으나, 위원회는 위원회가 종료되어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고, 다만 우리 정부의 견해를 병기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문체부 국제문화과 행정사무관 김OO은 2009. 11. 21. 아래와 같은 의견을 외교통상부에 수정 요청하고, 외교통상부 담당 서기관과 통화한 내용을 출장결과로 보고하였다.

**〈외교통상부에 수정 요청한 내용(11. 21)〉**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실기 교육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이론 교육의 확대 운영이 원래의 학교 설치령에 있는 설립 취지인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설치령 제3조)에 비추어 예술가가 아닌 이론가 양성 과정 확대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며, 따라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교수와 학생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론 교육 시스템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임.

아울러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교권과 학습권에 대하여 완전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국민의 세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국립대학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교육에 관한 일반법인 고등 교육법과 고등 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한국종합예술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극소수 일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므로 커리큘럼과, 교수법 등에 대하여 학교의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아님.

따라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삭제 내지 위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함

#### 〈외교통상부 담당 서기관과 통화(11. 21)〉

##### 1. 실기 교육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2.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교권과 학습권 등 완전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사회권 규약 위원회에 수정 요청하기로 함

그러나 위 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체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2009. 11. 24. 초안과 동일한 최종 견해 문서를 접수하였다. 그러자 문체부 국제문화과 행정사무관 김OO은 2009. 11. 25. 위 최종 견해 문서의 내용을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에 전달하고, 문체부 답변 내용을 검토 요청하였다. 그러나 2009. 12. 17.자 위 위원회의 최종 견해 문서에는 문체부 답변 내용이 병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문체부 국제문화과 행정사무관 김OO은 위 최종 견해 문서와 관련된 동향보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최종 견해 발표 이후 동향

- 법무부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법무부 입장 보도자료 배포(11.24)
  - 정부 대표단은 심의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에 기초한 질의 등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였으며, 11. 23. 최종 견해 초안에 대하여 정정 의견을 제출하였음
  -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오류와 우리의 법·제도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가 다수 포함된 최종견해를 발표한 사실에 대하여 유감 표명
  -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국내 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적절한 권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임
  - 최종 견해에 대하여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최종 견해와 함께 공식 게재됨
-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주요 재 권고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를 파리원칙에 부합하도록 설치, 비정규 노동자 권리 보장, 교원 및 공무원 등의 노동 3권 보장, 강제 철거 피해자에게 보상, 임시 주거시설 제공 등, 여성부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필요 예산 배정 등
- 참여 연대 성명 발표 : 유엔의 권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하라(11.25)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5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 25. 오후 정부 중앙청사 후문에서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5. 2009년 한예종 총장 선임 과정에 문체부가 개입한 정황

### 가. 참고인 황지우의 진술<sup>62)</sup>

당시 한예종 총장이었던 황지우는 2018. 1. 22.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박OO이 소위 ‘유인촌의 라인’이라는 건 명백하다. 한예종에 유인촌과 친했던 교수가 두어 명 있었는데, 유인촌과 굉장히 사적인 분위기에서 자주 식사를 하였고, 그 중에 박OO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 당시 총장 선거에서 1위가 김OO 교수였고, 2위가 박OO 교수였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국립대 총장 선거는 학교에서 1, 2위를 매겨서 문체부에 보내면 장관이 그걸 그대로 청와대에 보내고, 관행적으로 1위를 총장으로 선임함으로써 교수의 총의를 존중해주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2위인 박OO이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 나. 참고인 김OO의 진술<sup>63)</sup>

한예종 교수인 김OO은 2018. 1. 24.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한예종을 위협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박OO 前 총장이 나서서 문체부나 정권과의 일을 잘 풀어나가겠다고 하며 교수들을 설득했다.
- 박OO은 뉴라이트이기도 했고, 유인촌과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교수들은 박OO이 한예종 총장이 되면 한예종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김OO 무용원 교수, 조OO 교수 역시 뉴라이트로 같이 이름이 올라 있어 박OO과 함께 움직이곤 했다.
- 박OO 교수는 원래 학교 일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2008년 갑자기 영상원장 후보로 나와 당선되었다. 그때 신청인은 박OO이 영상원장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 총장까지 되려고 하겠다는 우려를 표했는데 정말 박OO은 영상원장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만에 총장에 지원하여 선임되었다. 당시 교수들 사이에서는 박OO 교수가 2위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총장으로 뽑힐 수가 있냐고 비

62) 참고인 황지우에 대한 2018. 1. 22.자 진술조서

63)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1. 24.자 진술조서

판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 이에 관해 유인촌 前 장관이 김OO 교수에게 전화해서 한예종 총장 후보로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하였다는 루머를 들었다.

#### 다. 신청인의 진술<sup>64)</sup>

신청인은 2018. 1. 11.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총장 후보로 한예종 교수 김OO이 나왔는데, 김OO은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하고 성격도 활달하여 다들 당연히 김OO이 총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투표 결과를 보니 2위인 박OO과 2표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박OO은 김OO에 비하면 저명하다고 보기 어려웠고, 평소에 학교일을 대단히 열심히 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젊은 나이의 교수였기 때문이었다.
- 누군가 물밑 작업을 해주지 않았다면 박OO이 총장으로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 라. 참고인 박OO의 진술<sup>65)</sup>

참고인 박OO은 2018. 2. 7.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박OO이 총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굉장히 의외였다. 총장 선거에 출마한 김남윤 교수는 실력이 있고 활발하고 유명해서 다 좋았는데, 총장 선거에서 다소 방심한 것 같다.
- 일반적으로 문체부에서는 교수 투표 결과 1위를 한 총장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하기는 하지만, 2위인 후보가 총장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OO 교수가 총장이 되었을 때도 그랬다.
- 생각해보니 특이한 점이 있다. 박OO 총장 임명이 된 후 3~4개월이 지나고 나서 학교에서 예술정책세미나를 하자고 해서 회의실에 갔더니, 국무총리실 차장이었던 박영준이 그 자리에 와 있었다. 한 6개월 정도 매월 한 차례씩 위 세미나를 했는데, 박영준이 예술계의 사정을 잘 모른다고 하며, 매번 참석을 했다. 박OO은 바쁜 일정에서도 비교적 성실하게 위 세미나에 참여했다. 학교에서는 위 세미나에서 발표할 사람을 섭외해서 키워드를 정하고 30분 ~ 한 시간 정도 발표하고 토론한 뒤 헤어졌다.

64) 신청인에 대한 2018. 1. 11.자 진술조서

65) 참고인 박OO에 대한 2018. 2. 7.자 진술조서

아마 정책적으로 문화예술계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한 게 아닌가 싶다. 다만 위 세미나에서 박 총장을 처음 만나는 관계인 것 같지는 않았고, 기존에 알던 사이인 것 같아, ‘박OO 총장이 정말 뉴라이트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 마. 참고인 박종원의 진술<sup>66)</sup>

당시 한예종 총장이었던 박종원은 2018. 4. 19.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1차 투표 때는 제가 1위였고, 2차 투표 때는 제가 2표 차이로 2위였다. 그러나 제가 총장으로 임명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다.
- 저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저는 2009년 한예종 총장 선거기간에 제가 뉴라이트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뉴라이트 조직을 주관하는 곳에 전화를 걸어 실제로 제 이름이 뉴라이트 회원명부에 올라있는지를 문의하였고, 그곳에서는 어떤 경위에서였는지 몰라도 기재되어있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착오가 있어서 기재가 된 것 같으니 제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하였고, 위 조직에서는 제 이름을 바로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 또한, 유인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수상식 자리에서 한 번 정도밖에 없으므로, 제가 유인촌 라인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 6. 신청인에 대한 2011년 한예종 영상원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심사위원 배제 의혹

### 가. 신청인의 주장

한예종 영상원 영상이론과 교수인 신청인은 본인이 당연히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심사위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기초심사 당일인 2011. 5. 26.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기초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영상원장실로 가서야 본인이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기초심사 심사위원 및 전공심사 심사위원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 이야기를 들은 신청인과 영상이론과 학과장 김OO은 당일 영상원장 박OO, 총장 박종원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결국 2011년 한예종 영상원 영상이론과 신규 전임교원 채용과

66) 참고인 박종원에 대한 2018. 4. 19.자 진술조서

정에서 신청인은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심사위원에서 제외되었다. 신청인은 자신이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심사위원에서 제외된 것 역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적용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나. 관련 규정 재·개정

한예중은 2010. 10. 6. ‘전임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 등 관련 규정의 재개정에 관한 의견을 조희화하였고, 2010. 11. 1. 위 규정이 개정 및 제정되었음을 공지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 중 본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행	개정안
한국예술종합학교전임교수공개채용심사지침	한국예술종합학교전임교수공개채용심사지침
6. 심사방법 및 내용	6. 심사방법 및 내용
가. 기초심사	가. 기초심사
1) 심사위원회 구성	1) (현행과 동일)
가) 기초심사위원회는 교학처장과 해당원장·채용분야 학과에 재직중인 전임교수 중 총장이 위촉하는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 3인과 2인 이상의 관련분야 전공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통할한다.	가) ----- -----학과 또는 동일전공분야에-----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
나) 원의 채용분야 전공에 재직중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원의 채용분야 전공의 조교수를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대체 위촉하여 전공분야 교내 전임교수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나) -----학과 또는 동일전공분야에----- -----3인 미만일----- 경우에는-----학과 또는----- 동일전공분야에 재직중인 조교수 1인을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대체 위촉한다.
다) 원의 채용분야 학과에 재직중인 전임교수가 3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원의 다른 인접학과 교수를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대체 위촉하여 교내 전임 교수가 최소한 3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다) -----학과 또는 동일전공분야에 재직중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와 조교수 1인을 합하여----- -----인접전공분야의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 중 1인을----- -----
<신 설>	라) 원장이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동일전공 및 인접전공의 범위 등을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나. 전공심사	나. 전공심사

현행	개정안
<p>2) 심사위원회 구성</p> <p>가) 전공심사위원회는 해당원장과 채용분야 학과에 재직중인 전임교수중 총장이 위촉하는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 3인과 총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관련분야 전공외부인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통할한다.</p> <p>나) 원의 채용분야 전공에 재직중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원의 채용분야 전공의 조교수를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대체 위촉하여 전공분야 교내 전임교수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다) 원의 채용분야 학과에 재직중인 전임교수가 3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원의 다른 인접학과 교수를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대체 위촉하여 교내 전임 교수가 최소한 3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p> <p>&lt; 신 설 &gt;</p> <p>3)~6) (생 략)</p> <p><b>다. 학교본부위원회 심사</b></p> <p><b>라. 면접심사위원회 심사</b></p> <p>1)~2) (생 략)</p> <p>3) 심사방법</p> <p>가) 품행,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교육관, 적성, 기타 교수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한다.</p> <p>나) 각 항목 별로 5점 만점 총 25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위원별로(붙임13 서식)에 따라 심사한다.</p> <p>다)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붙임14 서식)에 따라 종합평정한 결과 평균점수가 20점 이상인 자중 모집분야별 최고득점자를 채용적격자로 하되, 최고득점자가 2인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p> <p>&lt; 신 설 &gt;</p>	<p>2) (현행과 동일)</p> <p>가) -----학과 또는 동일전공분야에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구성하며,-----.</p> <p>나) -----학과 또는 동일전공분야에-----3인 미만일 경우에는 -----학과 또는 동일전공분야의 조교수 1인을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대체 위촉한다.</p> <p>다) -----학과 또는 동일전공분야에 재직중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와 조교수 1인을 합하여 -----인접전공분야의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 중 1인을-----.</p> <p>라) 원장이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동일전공 및 인접전공의 범위 등을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p> <p>3)~6) (현행과 동일)</p> <p><b>다. (현행과 동일)</b></p> <p><b>라. 면접심사위원회 심사</b></p> <p>1)~2) (현행과 동일)</p> <p>3) 심사방법</p> <p>가) -----.</p> <p>나) 심사위원별로 심사기준에 따라 적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붙임13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위원장은 면접심사대상자에 대한 적부 판단을 하지 아니하되, 면접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다)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붙임14 서식)에 따라 종합한 결과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적정하다고 할 경우 최종적으로 임용이 적정한 것으로 한다. 적부 동수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p> <p>라) 총장은 필요시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p>

현행 개정안

면접결과 부적격자로 심사된 후보자에 대한 추가면접이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4) (생략)

4) (현행과 동일)

7. 임용후보자 선정

7. 임용후보자 선정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로 판정 받은 자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신원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임용후보자로 선정한다.

1) -----  
-----  
-----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 최종 임용 여부는 1)의 보고 결과를 참고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신설>

3) 총장은 임용후보자가 최종 선정된 이후라도 임용일전까지 교수임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붙임 13]

[붙임 13]

지원자 개인별 면접심사표

지원자 개인별 면접심사표

- 1. 심사분야 : 원 과 전공
- 2. 면접심사대상자 : 성명 생년월일 ..일생
- 3. 심사내용

- 1. (현행과 동일)
- 2. (현행과 동일)
- 3. 심사내용

현행						개정안			
심사 항목	① 품행	② 의사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③ 교육관	④ 적성	⑤ 교수로서의 자질과 능력	합계	심사 항목	적·부 판정 결과	비고
점수							① 품행 ②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③ 교육관 ④ 적성 ⑤ 교수로서의 자질 및 능력		

위와 같이 심사함.

2010 년 월 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심사위원 : 현직                      성명                      (인)

(인)

※ 각 항목별로 5점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부여  
- 5점(수), 4점(우), 3점(미), 2점(양), 1점(가)  
※ 심사위원 전원의 평균점수가 2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함.

※ 각 항목별 종합 평가 결과를 '적·부 판정 결과'란에  
기재(필요 시 비고란에 의견 기재)

[붙임 14]

[붙임 14]

지원자 개인별 면접심사결과 종합평정표

지원자 개인별 면접심사결과 종합의견

1. 지원분야 : 원 학과 전공

1. (현행과 동일)

2. 면접심사대상자 : 성명 생년월일 일생

2. (현행과 동일)

3. 종합평정결과

3. 종합평정결과

• 평가항목 : ①품행 ②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현행** **개정안**

③교육관 ④적성 ⑤기타 교수로서의 자질·능력 등

• 평가결과

심사 항목	① 품행	② 의사 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③ 교육관	④ 적성	⑤ 기타 교수 로서의 자질 능력 등	합계
<b>평균 점수</b>						
<b>적·부 판정</b>						

심사 위원명	적부판정결과		서명	비고
	적	부		
홍길동	○		서명	
		○		
합계	총 0명	총 0명		
종합 의견	총 0명 참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인 0명이 적정/부적정으므로 적정/부적정 판정 (필요 시 비교란에 의견 기재)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면접심사위원장 (인)**

2010 년 월 일

**4. 심사위원 서명 날인**

성명							
날인							

[표-1] 전임교수공개채용심사 관련 규정 대비표

한국예술종합학교 개정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개정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	[한국예술종합학교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
제2장 신규임용	제2장 신규임용
제6조(공개채용신규임용심사위원회)	제6조(공개채용신규임용심사위원회)
<p>① 공개채용에 의한 신규임용 심사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수자격·전공일치여부·연구실적·경력 등의 심사를 담당하는 기초심사위원회,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하는 전공심사 위원회, 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의 공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학교본부심사위원회와 면접심사를 위한 면접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심사위원회는 원장과 채용분야 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 중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전임교수와 총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관련분야 전공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심사위원회는 해당원장과 채용분야 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 중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전임교수와 총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관련분야 전공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p> <p>④ 위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있어 채용분야 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가 3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원의 인접학과 교수를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대체 위촉하여 각 심사분야 별로 본교 전임교수가 3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p>	<p>① 공개채용에 의한 신규임용 심사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수자격·전공일치여부·연구실적·경력 등의 심사를 담당하는 기초심사위원회,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하는 전공심사 위원회, 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의 공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학교본부심사위원회와 면접심사를 위한 면접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심사위원회는 원장과 채용분야 학과 또는 동일전공분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 중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와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관련분야 전공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단, 외부위원은 심사위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0.11.1]</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심사위원회는 해당원장과 채용분야 학과 또는 동일전공분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 중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와 총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관련분야 전공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단, 외부위원은 심사위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0.11.1]</p> <p>④ 위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있어 채용분야 학과 또는 동일전공분야에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가 3인 미만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원의 채용분야 학과 또는 동일전공분야 조교수 1인을, 채용분야 학과 또는 동일전공분야에 재직중인 조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원의 인접전공분야의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 중 1인을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대체 위촉하여 각 심사분야 별로 본교 전임교수가 3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p>

## 한국예술종합학교 개정 전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본부심사위원회는 교학처장과 조교수이상의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교학처장 및 각 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 [한국예술종합학교전임교수공개채용심사지침]

## 6. 심사방법 및 내용

## 가. 기초심사

## 1) 심사위원회 구성

가) 기초심사위원회는 교학처장과 해당원장·채용분야 학과에 재직중인 전임교수 중 총장이 위촉하는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 3인과 2인 이상의 관련분야 전공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통할한다.

나) 원의 채용분야 전공에 재직중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원의 채용분야 전공의 조교수를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대체 위촉하여 전공분야 교내 전임교수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원의 채용분야 학과에 재직중인 전임교수가 3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원의 다른 인접학과 교수를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대체 위촉하여 교내 전임 교수가 최소한 3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개정 후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본부심사위원회는 교학처장과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개정 2010.11.1]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교학처장 및 각 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 [한국예술종합학교전임교수공개채용심사지침]

## 6. 심사방법 및 내용

## 가. 기초심사

## 1) 심사위원회 구성

가) 기초심사위원회는 교학처장과 해당원장·채용분야 학과 또는 동일전공분야에 재직중인 전임교수 중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 3인과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관련분야 전공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통할한다.

나) 원의 채용분야 학과 또는 동일전공분야에 재직중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가 3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원의 채용분야 학과 또는 동일전공분야에 재직중인 조교수 1인을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대체 위촉한다.

다) 원의 채용분야 학과 또는 동일전공분야에 재직중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와 조교수 1인을 합하여 3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원의 인접전공분야의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 중 1인을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대체 위촉하여 교내 전임 교수가 최소한 3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라) 원장이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동일전공 및 인접전공의 범위 등을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다. 2011년 한예종 영상원 영상이론과 신규 전임교원(이하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과정

2011. 2. 11. 개최된 학과장회의에서 영상이론과 신규 전임교원이 필요하다는 '채용 분야 수요'가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모집 분야 : 영상이론(일본 영상문화이론 전공자), 영상이론 학과
- 우선 채용사유 : 영상이론과는 최○ 교수와 정○○ 교수의 퇴임 이후 교수 2인(신청인, 김소영)이 학생 67명을 담당하고 있는데다가 영상이론에 대한 수요도 증가(부전공자 70명)하고 있어 시급성이 있음. 동아시아 영화 전공 전문가 강의를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교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중요도가 있음. 영상이론과는 상당수의 유망한 젊은 전문 연구자 후보군들을 배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 영상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영상원은 2009. 3. 25. 교무과에 '영상원 2011년 전임교원 공개채용 자격요건'을 제출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영화이론전공 전임교원의 자격요건으로 '영화이론 분야 박사 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일 것과 '해당 전공자로서 관련 교육경력이 있는 자'일 것이 기재되어 있다. 교무과는 2011. 3. 28. 개최된 학과장회의에서 '전임교원 공개 채용 전공분야 계획안'을 통지하였다. 위 계획안에는 영상원 영화이론 전임교원 채용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한예종은 이에 따라 2011. 4. 8.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위 자격요건과 같은 내용의 자격요건이 기재되어 있다.

라. 기초심사위원회 및 전공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 후보자<sup>67)</sup>

한예중 영상원장 박OO가 2011. 5. 16. 교무과장에게 제출한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관련 기초심사위원회 및 전공심사위원회 후보자 목록은 아래와 같다.

[붙임 17]

### 교수공개채용 심사위원 추천자 명단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심사 구분	분 아	위촉구분 (교내/교외)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주요 학경력	비 고
기 초 심 사	영 화 이 론	교 내	김 ●●		교학처장		위원장
		교 내	박 ●●		영상원장	영 화 연 출 (전 공)	
		교 내 교수 ①	김 ●●		교 수	영 상 이 론 (전 공)	
		교 내 교수 ②	심 ●●		교 수	영 상 미 학 (전 공)	
		교 내 교수 ③	권 ●●		교 수	영 화 연 출 (전 공)	
		교 내 교수 ④	이 ●●		교 수	영 상 제 작 (전 공)	
		교 내 교수 ⑤	이 ●●		교 수	영 상 / TV (전 공)	
		교 내 교수 ⑥	김 ●●		교 수	사 회 역 연 구 (전 공)	
		교 외 인사 ①	문 ●●		조 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영상학과(영화학)</li> <li>동국대학교 영화과 박사</li> <li>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전문사</li> </ul>	
		교 외 인사 ②	임 ●●		조 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대학교 사어사문학과 (현대희곡 영화)</li> <li>이온트론(교내) 대학원 석사</li> <li>이온트론(교외) 대학원 석사</li> <li>서울대학교 사어사문학과 석사</li> </ul>	
		교 외 인사 ③	김 ●●		부 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황준대 방송영상학부 (문화연구 영상제작) 석사</li> <li>한양대 골드스미스대 석사 및 박사</li> <li>서울대 신문학과 석사</li> </ul>	
		교 외 인사 ④	이 ●●		부 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영화미학 이미지학)</li> <li>이온트론(교내) 대학원 석사</li> <li>서울대(교외) 대학원 석사</li> <li>서울대(교외) 대학원 석사</li> </ul>	
		교 외 인사 ⑤	장 ●●		부 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황준대 문화영상학부 (입문대중문화 및 공연영상 프로그래밍)</li> <li>동국대 표선문화원 박사 (일본영화전공)</li> <li>서울대 통일사학 석사</li> </ul>	
		교 외 인사 ⑥	임 ●●		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문화콘텐츠학과 중기영화 문화연구소 문화콘텐츠 이론 비평-정책</li> <li>한국외대 박사</li> <li>한국외대 중국어과 석사</li> </ul>	

67) 2011년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계획, 심사위원 추천명단 제출

심사 구분	분 야	위촉구분 (교내/교외)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주요 학경력	비 고
		교외인사⑦	김●●		조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대학교 신문영상학과</li> <li>독일 프스탈츠 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li> <li>영국프린스턴대학교 석사</li> <li>영국프린스턴대학교 석사</li> </ul>	
		교외인사⑧	김●●		조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운대학교 교양학부 (영화이론 및 문화이론)</li> <li>영국 셰필드 대학 박사</li> <li>0800대 교내교외 생활 전용</li> </ul>	
		교외인사⑨	정●●		조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영화이론 및 영화이론)</li> <li>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박사</li> </ul>	
전 공 심 사	영화이론	교내	박●●		영상원장		
		교내교수①	김●●			상동	
		교내교수②	심광현			상동	
		교내교수③	권●●			상동	
		교내교수④	이●●			상동	
		교내교수⑤	이●●			상동	
		교내교수⑥	김●●			상동	
		교외인사①	문●●			상동	
		교외인사②	임●●			상동	
		교외인사③	김●●			상동	
		교외인사④	이●●			상동	
		교외인사⑤	장●●			상동	
	교외인사⑥	임●●			상동		
	교외인사⑦	김●●			상동		
	교외인사⑧	김●●			상동		
	교외인사⑨	정●●			상동		

(2) 기초심사위원회 및 전공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

당시 한예종 총장 박종원은 2011. 5. 24. 기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위촉하였는데, 그중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관련 심사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sup>68)</sup>

심사 구분	구분 (교내/외)	성 명	현 직	주요 학경력	비 고
기 초	교내	김●●	교학처장	교수	위원장
		박●●	원장	영화연출	당연직
		김●●	영상이론과 교수	영상이론	
		권●●	영화과 교수	영화연출	
		이●●	영화과 교수	영상제작	
전 공 심 사	교외	김●●	세강대 부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하대 조소 학사, 홍익대 미학 석사, 뉴욕대 영화학 석사</li> <li>영화진흥위원, 영상기술학회장</li> </ul>	
		정●●	한양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양대 문학사, 경서대학교 석사</li> <li>한국영화학회, 한국리서어문화회</li> </ul>	
		어●●	청주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주대 문학사, 세종대 정치학석사, 일화박사</li> <li>폴리스틱 프리 감독, 한양대 한이영역로그 국영영화제 최우수영화상</li> </ul>	

68) 2011년 전임교원 공개채용 기초심사 일정 및 위촉위원

또, 당시 한예중 총장 박종원은 2011. 6. 15. 전공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위촉하였는데, 그중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관련 심사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sup>69)</sup>

□ 영상원(영화이론)

심사 구분	구분 (교내/외)	성 명	현 직	주요 화경력	비 고
전공심사	교내	박●●	원장	영화연출	위원장
		김●●	영상이론과 교수	영상이론	
		권●●	영화과 교수	영화연출	
		김●●	영화과 교수	시나리오	
	교외	김●●	서강대 부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희대 조소 학사, 홍익대 미학 석사, 뉴욕대 영화학 석사</li> <li>영화진흥위 위원, 영상기술학회장</li> </ul>	
		정●●	한양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양대 문학사, 건국대학교영화학 석박사</li> <li>한국영화학회, 한국러시아문학회</li> </ul>	
		어●●	청주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주대 문학사, 세종대 정치학박사, 문학박사</li> <li>폴란드인 프리 감독, 민항임 하이델베르크 국제영화제 최우수영화상</li> </ul>	

마. 규정 재·개정 및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관련자들의 입장

(1) 신청인의 주장<sup>70)</sup>

신청인은 2018. 1. 11.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신청인을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 전공일치 여부는 단순히 석사학위를 무엇으로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연구를 했는지, 어떤 강의를 했는지, 어떤 대외활동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영화이론’의 인접전공에 해당하는 ‘미학’ 석사 학위 취득, 박사 과정 수료한 후 1998년부터 당시까지 영상이론과의 전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영화이론’에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2004. 6.까지 한예중 영상원장직을 수행하기도 했고, 이전에는 영상원 신입교수 채용 시마다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므로 ‘영화이론’과 전공일치한다고 보아야 한다.

69) 2011년 전임교원 공개채용 전공심사 일정 및 위촉위원

70) 신청인에 대한 2018. 1. 11.자 진술조서

- 영상이론과 학과장이 추천한 외부 심사위원 후보 중 한 명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심사위원을 전부 총장의 의견에 입각하여 위촉한 것은 문제가 있다.
- 영상이론과는 영화만 아니라 뉴미디어를 포함한 영상매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교육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영하이론과’와는 차별점이 있다.
- 2010년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당학과 전임교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었고, 관행상으로도 이전에는 항상 해당학과 전임교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실무였다.
- 당시 심사위원에서 배제된 이유를 알 수 없어, 총장 박종원에게 물어보았는데, 박종원은 처음에는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신청인이 계속 이유를 캐묻자, “학교에 소송을 거는 교수라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아 심사위원으로 뽑을 수 없고, 제가 지원자의 전공과 동일한 전공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
- 당시 영상원장 박OO는 “당신은 명단에 없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영상원 원장이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이를 총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이 원하는 심사위원을 정해서 영상원장에게 “이런 사람을 추천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 박OO는 당시 여수국제박람회의 예술감독직을 맡고 있는데, 당시 총장의 추천으로 위 직위를 맡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신청인은 한예종에 관한 일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이 교수로 채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신청인을 아예 처음부터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마음먹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한예종 본부 관련자의 주장

### (가) 한예종 본부의 주장<sup>71)</sup>

한예종 본부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 2010. 11. 1. 개정된 관련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

71) 교수공채과정중단가처분 신청 관련 소송자료 등

- 심사위원 위촉에서 총장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전공일치’ 여부인데, 이는 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 제기된 교수들의 전공불일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함이며, 위 기준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 ‘전공일치’의 기준은 대학의 최종학위이고, 신청인의 전공은 ‘영상미학’이므로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모집분야인 ‘영화이론’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영상이론과 이외의 영상원 내부 타과 교수들 중에서 ‘영화이론’으로 석사 학위가 있는 교수를 내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 영상이론과 학과장이 추천한 외부 심사위원 후보도 대부분 ‘영화이론’과 전공일치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일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 외부 심사위원들은 학교 본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위촉하였다.
- ‘영화이론’ 전공교수는 영상이론과 뿐만 아니라 영화과 학생들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

#### (나) 참고인 박OO의 주장<sup>72)</sup>

당시 한예중 영상원 원장이었던 박OO는 2018. 2. 20.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에는 자신이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였고, 심사위원을 추천한 기억이 없다.
- 당시 영상이론과 교수인 김OO, 신청인이 OOO 교수를 내정하고 공채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있었다.
- 본인은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관련 원장회의가 있던 날 및 그 전날 “영상이론과 교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OOO을 뽑는 게 좋지 않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등 영상원 교수들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그런데 교수들 사이에 OOO에 대해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결국 원장회의에서 본인과 전통예술원장만 찬성투표를 하고 나머지 5명은 반대투표를 하게 되었다.
- 당시 총장 박종원은 신청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이유로 ‘전공불일치’를 내세웠는데 본인은 그 부분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72) 참고인 박OO에 대한 2018. 2. 20.자 진술조서

- 총장 박종원이 내세운 다른 이유는 ‘신청인이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정황이 있는 등 객관적 심사 진행에 우려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신청인과 김OO은 처음부터 OOO을 뽑기 위해 위 공채를 진행한 것이다. 본인은 위와 같이 불공정하게 공채를 진행하려고 했음에도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신청인이 심사위원으로 포함되면 신청인이 원하는 후보자가 교수로 임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신청인과 김OO이 들어가면 나머지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상황을 주도했을 것 같다.
- 당시 총장 박종원은 무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총장 박종원은 신청인, 김OO에 대해 상황을 살펴준 경우도 많다.

#### (다) 참고인 박종원의 진술<sup>73)</sup>

당시 한예종 총장이었던 박종원은 2018. 4. 19.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과 교수들의 의견에 차이가 다소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어떤 교수가 훌륭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채용해야 학교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위와 같은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 심사위원 풀을 넓힌 것이다.
- 문체부나 청와대에서 신청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바는 전혀 없고, 설사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지시에 따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 한예종 총장 마음대로 어떤 교수를 채용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제도나 구조가 아니다.
- 전공분야에 관해서 신청인은 문화이론인데, 채용분야는 영화이론이었다. 편OO과 이OO 교수는 실질적으로 영화이론도 전공인 사람이다. 김OO, 편OO, 이OO 교수는 전부 뉴욕대학에서 MA를 전공한 교수들이다. 특히 이OO 교수는 MFA도 한 교수이다. 그러나 당시 전공일치보다는 공정성 문제가 더 컸다.
- 당시 영상이론과 교수인 신청인과 김OO이 모두 OOO 교수를 노골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서, 신청인과 김OO이 모두 심사위원회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공채가 있기 바로 전에 OOO 교수를 특채로 채용하다고 주장했었던 교수들이다. 당시 두 교수는 OOO 교수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꼭 특채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특채 조건이 맞지 않아서 특채로

73) 참고인 박종원에 대한 2018. 4. 19.자 진술조서

채용할 수 없었다.

- 신청인과 김OO이 모두 심사위원으로 위촉된다고 하더라도 OOO 교수가 반드시 뽑힌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외부위원들은 전부 대학교수들이기 때문에 신청인과 김OO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채용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신청인과 김OO이 모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면 위 공채가 특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공채에 지원한 다른 후보자들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과 김OO이 둘 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다른 학과 신규교원 공채에서도 심사위원이 특정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제외된 적은 없었다.
- 신청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말라는 문체부, 청와대, 국정원의 지시도 없었다.

### (3) 관련자들의 주장

#### (가) 한예종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의 주장

교협은 2011. 6. 13.자 '한예종 전임교수 공채 기초심사위원회 구성 절차의 문제점과 그에 관한 교수협의회 입장', 2011. 7. 26.자 '한예종 전임교수 공채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의 문제점과 교학처 공고문에 관한 교수협의회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 관련규정 개정이 기존에 관행적으로 거쳐 오던 '학과장회의-원 교수회의-부원장회의' 등의 논의와 의결이라는 공론화 과정 없이 단지 온라인 공지와 원장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 교내 교수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 조건으로 명시된 "채용 분야 학과 또는 동일전공 분야"라는 심사지침 항목은 기초심사위원회와 전공심사위원회가 총장 또는 한예종 당국의 의지에 따라 채용분야 학과 교수 전원이 배제되는 형태로 왜곡되게 구성될 수도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 해당 학과 교수가 3인 미만일 경우 해당 학과 또는 동일 전공 분야 및 해당 원의 교수 3인을 반드시 충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학과 교수 전원 및 해당 원의 인접 영역 교수마저 배제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교수공채 지원자와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교수가 전공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채용분야 학과 또는 동일전공분야’에 재직중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는 영상이론과 교수인 김소영, 신청인뿐이므로 김소영과 신청인은 모두 심사위원에 자동으로 위촉되어야 한다.
- 한예종은 신청인의 전공이 ‘영상미학’이므로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전공분야로 명시된 ‘영화이론’과 전공불일치한다고 주장하는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 제4항은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상미학’은 ‘영화이론’과 명백히 관련이 있다.
- 한예종 교학처는 신청인이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정황이 있는 등 객관적 심사 진행에 우려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총장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선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장은 한예종 당국의 주관적인 짐작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학과 교수 모두를 배제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므로 매우 위험하다.

#### (나) 한예종 총학생회의 주장

총학생회는 2011. 6. 18.자 ‘전임교수 공채 기초심사위원회 구성 절차의 문제점과 관련한 총학생회의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주장하였다.

- 관련규정 개정이 충분한 협의 없이 개정되어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다.
- 관련규정을 악용할 경우 각 학과의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에 우려된다.

#### (다) 한예종 영상이론과 동문의 주장

영상이론과 동문은 2011. 7. 1.자 ‘영상이론과 동문 일동이 학교 당국에 드리는 말씀’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주장하였다.

- 2010. 11. 이후 개정된 학칙과 규정들은 총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제왕적 총장”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 한예종은 신청인의 전공이 '영상미학'이므로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전공분야로 명시된 '영화이론'과 전공불일치한다고 주장하는데, '영상미학'과 '영상이론'의 연관성은 명백하고, 영상이론과 특성상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 한예종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제4항과 관련규정을 자의적으로 편협하게 해석한 것이다.

#### (라) 한예종 영상이론과 학생들의 주장

영상이론과 학생들은 2011. 6. 29.자 '영상이론과 전임교수 공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련한 영상이론과 학생들의 입장', 2011. 7. 26.자 '파국적 교수 공채과정을 규탄하는 영상이론과 학생회 및 학생들의 2차 성명서'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주장하였다.

- 영상이론과 신입교원을 채용하는데, 영상이론과 학과장 김OO의 외부인사 추천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
- 한예종은 신청인의 전공이 '영상미학'이므로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전공분야로 명시된 '영화이론'과 전공불일치한다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영상미학'은 '영상이론'과 관련 있으므로, 신청인은 당연히 심사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 신청인이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심사위원회에서 제외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 학살 정책과 맞물린, 진보 성향 교수에 대한 악의적 정치탄압이다.

#### (마) 참고인 김OO의 주장<sup>74)</sup>

한예종 교수이자, 교협 회장인 김OO은 2018. 1. 30.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전공불일치라는 말은 모호한 말이라 당시에서 상당히 문제되었다. 예컨대, 영상이론의 한 분야가 영상미학인데, 또 미학은 상당히 많은 이론 분야를 포괄할 수 있다. 즉 두 분야 사이에 교집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상미학은 영상이론과 전공불일치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면 그 분야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미학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는 것만으로 영상이론과 교수를 뽑을 자질이 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실질적으로 해당 전공 교수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맞

74)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1. 30.자 진술조서

다. 전공불일치는 본건과 같은 상황에서 심사위원을 자의적으로 위촉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싶다.

- 한예종 교학처는 신청인이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정황이 있는 등 객관적 심사 진행에 우려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총장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선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각 위원들은 자기의 뜻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포함된다고 해도 반드시 신청인이 원하는 후보자가 교수로 임용되기는 힘들다.
- 신청인이 위 심사위원에서 배제된 이유에는 당시 정권의 지시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청인과의 감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인다.

#### (바) 참고인 김OO의 주장<sup>75)</sup>

당시 한예종 영상원 영상이론과 학과장이었던 김OO은 2018. 1. 24.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기초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린 당일 신청인이 참석하려고 하자, 영상원장 박OO가 굉장히 무례하게 “당신은 심사위원이 아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그와 같은 태도는 교수사회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무례한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뉴라이트가 득세한 상황이라 편승하지 않았나 싶다. 여러 이권들이 걸려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소신 있게 행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전공일치는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다. 같은 주제를 연구해도 전공의 이름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공일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신청인을 배제하기 위해 ‘전공불일치’라는 단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 한예종 교학처는 신청인이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정황이 있는 등 객관적 심사 진행에 우려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총장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선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신청인이 다른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분도 아니다.
- 당시 영상이론과에는 동아시아영화이론 전공 총장 박종원은 영상이론과에서 올린 동아시아영화이론 전공 대신 영상이론 전공으로 공채를 냈다. 그런 경우는 이전에는 전혀 없었다.

75)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1. 24.자 진술조서

#### (사) 한예종 영상원 교수들의 주장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영상원 교수들은 2011. 6. 9. 영상원 전체교수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점에서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한OO : 규정을 과하게 적용할 경우 과의 입장은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 주OO : ‘또는’에 대한 원의 해석과 본부의 해석이 상충하는 규정으로 보여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OO : 전공심사는 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교수 채용 상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제거해야 한다.

### 7. 2012학년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이하 ‘특별연수’) 지도교수 불승인 의혹

####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특별연수대상자인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김인규 교사가 연수기간 2012. 3. 4. ~ 2013. 2. 5., 위탁기관 한예종, 담당교수 신청인으로 하여 특별연수를 신청하였고, 충청남도 교육청이 위 특별연수에 관해 한예종에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한예종이 위 협조요청을 거절하였는데, 이 역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적용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나.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우수 교원에 대한 적정 보상기제 마련”<sup>76)</sup>을 목적으로, 교육공무원법<sup>77)</sup> 제40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sup>78)</sup> 제3장 특별연수(제12조 ~ 제17조) 및 제21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의 내용으로는 국내연수와 국외연수가 있는데, 국내연수의 경우 ‘국내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 및 연구 수행’을 한다. 연수기관은 연수 종료 후 1월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up>79)</sup> 2012학년도 특별

76) 충남교육청 ‘특별연수 운영 계획’ 제1쪽

77) 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78)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6호로 개정된 것

79) 충남교육청 ‘특별연수 운영 계획’ 제7쪽

연수의 교육기간은 12개월(2012. 3. 1.~2013. 2. 29.)이다.<sup>80)</sup>

#### 다.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지도교수 신청과정 및 결과

(1)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은 2012. 3. 13. 한예종 및 한예종 총장(영상원장)에게 ‘특별연수 대상자 기관 위탁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특별연수대상자인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김인규 교사가 연수기간 2012. 3. 4. ~ 2013. 2. 5., 위탁기관 한예종, 담당교수 신청인으로 하여 특별연수를 신청하였으므로 행정사항에 관해 협조해달라고 요청(이하 ‘이 사건 협조요청’)하였다.<sup>81)</sup>

교사 김OO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자기연구계획서를 작성하였다.<sup>82)</sup>

- 개인 연구 주제 :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미술과 시각문화영역 수업모형 개발
- 국내연수 위탁 기관 : 한예종 영상원 부설 트랜스아시아 영상문화연구소(담당 교수 신청인)
- 국외연수국가 : 독일, 프랑스
- 교과부 연구과제 : 수업모델 개발 참여
- 연구내용 :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부설 <트랜스 아시아 영상문화 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담당교수님의 지도 아래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연구한다.
  - ① 소셜네트워크의 원리와 미학적, 문화적 측면의 연구
  - ② 스마트폰(패드, 아이폰, 아이패드)의 메커니즘 연구
  - ③ 스마트폰(패드, 아이폰, 아이패드)을 기반으로 한 시각문화 콘텐츠 생산 및 소통 기법 연구
  - ④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시각문화 수업모형 개발
- 연구의 일정 : 지도교수의 강의 수강 및 연구 - 학기당 3강좌

(2) 그러나 한예종은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교에서 동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귀원의 협조사

80) 2012학년도 학습연구년제 우수교사 위탁특별연수 위탁기관 운영규정 제3조

81) ‘2012학년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대상자 기관 위탁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

82) 김인규 작성의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자기연구계획서’

항을 수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회신 공문을 보내 충청남도교육청의 협조 요청을 거절하였다.<sup>83)</sup>

## 라. 신청인의 특별연수 지도교수자격이 불허된 이유

### (1) 신청인의 진술<sup>84)</sup>

신청인은 2018. 1. 11.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영상원장이었던 장OO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 달 여간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 왜 결재가 계속 안 되고 있는냐고 이의제기를 했는데, 기존에 이렇게 지도교수 승인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협의를 해봐야 한다는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질질 시간을 끌었다. 그러다 보니 신청인을 지도교수로 신청한 교사도 사정이 곤란하게 되어, 결국 지도교수 승인을 포기하고 위 교사에게 다른 대학의 교수를 소개해주게 되었다.
- 특별연수 지도교수자격이 불허됨으로 인해, 시각문화에 대한 이론을 가르쳐서 해당 교사를 지도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피해를 입었고, 해당 교사도 원하는 지도교수로부터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피해가 있었다. 또한 지도교수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가 있었다.
- 2009년 이 사건 종합감사로 인한 정직 처분 사건과 2011년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심사위원 배제 사건을 통해 정말 “한예종에 찍혔다”고 생각했다.
-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소위 ‘좌성향 교수’으로 낙인 찍혀서 한예종에서 아무 것도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 당시 영상원장이었던 장OO는 총장 선거할 때 앞장서서 박종원을 지지하는 등 소위 ‘총장 라인’이었다. 그래서 특히 더 이런 블랙리스트 적용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83) ‘2012학년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협조조건에 대한 의견 회신’ 공문

84) 신청인에 대한 2018. 1. 11.자 진술조서

## (2) 한예종 관계자의 주장

### (가) 참고인 장OO의 진술<sup>85)</sup>

당시 한예종 영상원장이었던 장OO는 2018. 2. 26.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신청인 심광현이 연구년 교원으로 승인받아서 관련 규정상 위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거나, 관련 규정상 요건을 불비했기 때문에 위 자격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며, 본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참고인 김OO의 진술<sup>86)</sup>

당시 한예종 영상원 행정실장이었던 김OO은 2018. 2. 27.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사정은 6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며, 특히 신청인이 본건에 관해 당시 영상원장이었던 장OO에게 정식으로 결재를 신청했는지 여부도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한예종 영상원 행정실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영상원 교수들이 결재신청한 건에 관해 재량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본건에 관해 신청인이 요건을 불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3) 한예종 2012년 연구년제 연구교원 확정 통보 및 한예종 연구년제 연구교원 규정

신청인은 「인지과학과 이미지의 문화정치 “유비쿼터스 시대의 영상문화연구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연구주제로 한예종 2012년 2학기 연구년제 연구교원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협조요청(2012. 3. 13.)이 있기 전인 2011. 12. 2. 이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sup>87)</sup>

그런데 한예종 연구년제 연구교원 규정(2010. 8. 20. 규칙 제413호로 개정된 것)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 제9조(복무) ① 연구교원은 연구에만 전념하여야 한다. ③ 연구교원은 학술단체 등의 연구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타대학 출강은 할 수 없다.
-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85) 참고인 장OO에 대한 2018. 2. 26.자 전화통화결과보고

86)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2. 27.자 전화통화결과보고

87) 2012년 연구년제 연구교원 확정 통보 중 <연구년제 선발현황>

한편, 연구년제 연구교원 복무지침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 본교 교원으로서의 지위 등

- 연구교원은 본교 교원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나 강의 및 보직을 수행할 수 없음.
- 연구년제의 취지에 따라 연구 이외의 학교 행정과 관련된 활동, 대외겸직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래의 경우에 한해 사전 승인을 받아 가능.
  -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원장의 요청에 따라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입시 출제 및 교내 각종 위원회 활동은 가능함.
  - 연구 전념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원장의 요청에 따라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외 겸직활동 가능.

## 8. 2014년 서울자유시민대학 교육과정에서 한예종이 사업을 철회한 경위

### 가. 서울자유시민대학 사업 개요<sup>88)</sup>

서울자유시민대학은 2013년부터 시민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평생교육기관으로,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시민청, 은평·중랑·독섬학습장, 28개 대학 내 강의실 등 총 34개소 학습장에서 취업/자격증, 외국어, 가족/건강, 취미/교양,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그중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서울자유시민대학 사업은 ‘권역별 대학연계 시민대학’ 사업에 해당한다.

### 나. 2014년 권역별 대학연계 시민대학 사업<sup>89)</sup>

서울특별시는 권역별 대학연계 시민대학에 참여하는 대학수를 3개에서 10개로 확대하기 위해 2014. 7. 11.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예종 총 7개의 대학에 2014년 권역별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MOU 체결 협조요청을 하였다.<sup>90)</sup> 이후 서울특별시는 2014. 7. 21. MOU 체결식을 개최하였

88)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lms/simin\\_course/courseRequest/doSiminUnivMain.dunet](http://sll.seoul.go.kr/lms/simin_course/courseRequest/doSiminUnivMain.dunet))

89) 권역별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MOU 체결계획

90) '14년 권역별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MOU체결 협조요청

고, 위 체결식에는 건국대 부총장,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원장, 동국대 부총장, 서울대 부총장, 성균관대 부총장, 한예종 총장, 한양대 부총장이 참석하여 서울특별시와 MOU를 체결하였다. 그중 한예종의 인문학 특화과정은 ‘예술과 인문학’이었다.

**〈대학별 인문학 특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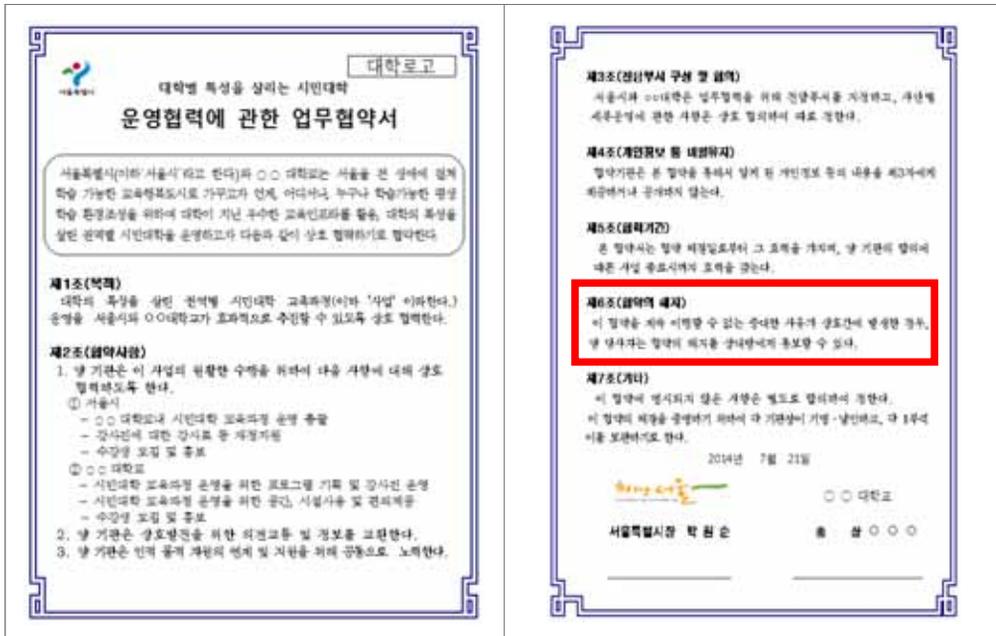
① 고려대-한국문화와 인문학	② 건국대-통일과 인문학	③ 동국대-불교와 인문학
④ 성균관대-동양사상과 인문학	⑤ 서울대-인문학 일반론	⑥ 한양대-건축과 인문학
⑦ 한국종합예술대-예술과 인문학		

※ 기존 :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인문학), 성공회대(인권과 인문학), 이화여대(여성과 인문학)

MOU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학 특성을 살린 권역별 시민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대학 간 상호 협력  
서울시는 수강생 모집 및 홍보, 강사료 등 재정지원, 대학은 교육과정 프로그램 구성운영, 강사지원 및 교육편의시설 제공

※강좌운영은 9월부터 진행(학기당 10,000천원 재정지원)



## 다. 2014년 한예종 서울자유시민대학 사업계획 수립 및 취소 과정<sup>91)</sup>

한예종 트랜스:아시아영상문화연구소는 “영상 분야만이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무용, 문학, 미학 등 모든 예술 장르를 넘나들며 인문학적 성찰과의 만남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강좌를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예술적 향유와 인문학적 성찰의 즐거움을 체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 2013. 9. 29. ~ 12. 12. <예술과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한예종은 “아시아 영화의 이해”, “예술과 신체의 감각 : 얼굴에서 타자, 기계에서 목소리까지”, “한국의 미와 현대미학 입문” 강좌를 정원 각 40명으로 하여 한예종 영상원에서 각 10회의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위 강좌의 강사는 한예종 교수인 김OO·유OO·신청인·김OO, 한예종 트랜스:아시아 영상문화연구소 소속 하OO·김OO, 미술평론가 김OO, 수OOOO 최OO, 문학평론가 이OO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예종은 2013. 9. 26. 서울특별시장(평생교육과장)에게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한예종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중 강좌운영이 어려워져 운영시기를 연기할 것’을 협조요청하였고<sup>92)</sup>, 결국 위 강좌는 개설되지 않고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 라. 2014년 한예종 서울시민대학이 취소된 경위

### (1) 신청인의 주장<sup>93)</sup>

신청인은 2018. 1. 11.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에 서울시장이 2014. 8.경 서울 시내 각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하려 했다. 그중 예술 쪽은 한예종과 하려고 해서 자신이 기획안을 작성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좋은 기획안이라고 해서 결제가 올라갔으며, 김봉렬 총장도 좋은 행사인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의견이었다.
- 시민대학 프로그램은 2014. 9. 20.경 시작해서 10강정도 진행되는 사업이었고, 한

91) 서울시 권역별 시민대학 사업계획안(한예종) 제2쪽

92)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 관련 협조요청 공문

93) 신청인에 대한 2018. 1. 11.자 진술조서

예종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구성이 좋아 빠르게 수강신청이 완료되었다.

- 그런데 시민대학 강좌가 시작되기 3~4일 전쯤에 김봉렬 총장이 급하게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김봉렬 총장과 저녁 시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윗선에서 갑자기 시민대학 강좌를 취소하라고 지시가 왔다”고 하며 “학교가 너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번 한 번만 봐 달라”고 사정을 했다. 윗선이 어디냐고 캐물었는데, 김봉렬 총장은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 당시 시민대학 강좌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중단이 되면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항의를 할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 크게 황당해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교가 예산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진행을 고집할 수는 없었다.
- 다른 학교들은 정상적으로 강좌를 진행했다고 들었다. 아마 당시에 박원순 서울 시장을 문체부가 도와주는 격이 되면 안 된다는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한예종 관계자의 주장

### (가) 참고인 김OO의 진술<sup>94)</sup>

한예종 교수이자 2014 한예종 시민대학에 강좌를 함께 개설하였던 참고인 김OO은 2018. 1. 24.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시민대학 강좌가 취소될 무렵, 즉 신청인이 김봉렬 총장을 만난 다음날 오전쯤, 김봉렬 총장이 김OO을 총장실로 불러 시민대학 강좌를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 사실 이 말을 듣고 황당하지 않았던 것이 더 황당하다. 당시 자신은 박근혜 정권에서 서울 시장인 박원순이 하는 사업을 문체부 산하인 한예종이 도와주는 게 문제가 되었나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여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김봉렬 총장은 김OO에게 신청인과 김OO을 윗선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방어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자신과 신청인이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서울시민대학 강좌가 취소된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 사실 한예종 교수 중 누군가가 국정원이나 청와대에 저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은 아닌 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자신은 한예종 시민대학 관련 건 외에는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94)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1. 24.자 진술조서

(나) 참고인 000의 진술<sup>95)</sup>

한예중 교수이자 2014 한예중 시민대학에 강좌를 함께 개설하였던 참고인 000은 2018. 1. 30.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자신이 아마 원칙주의자이며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좌파로 분류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소위 ‘한예중 사태’ 때 교협 의장으로서 학교를 방어하기 위해 정부에 맞서는 활동에 주력했기 때문에 정부비판적 인사로 분류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다.

(다) 참고인 김봉렬의 진술<sup>96)</sup>

한예중 총장인 참고인 김봉렬은 2018. 3. 19.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서울시민대학 MOU를 맺었는데, 이후 문체부 제1차관 김희범이 한예중 사무국장 김OO을 통해 “큰일 났다.” “못하게 해라.”라고 하면서 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꼬투리를 잡아 자꾸 뭔가를 바꾸라고 이야기했다.
- 그 과정에서 조금 고쳐서 서울시민대학 강좌를 진행하려고도 해보았는데, 문체부에 수정안을 보고하면 즉답을 해주지 않고 어딘가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대답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 김봉렬이 파악하기로는 위 프로그램에 신청인, 김소영, 김채현 등 소위 좌성향 교수들이 참가하므로 서울시민대학 강좌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 결국 김봉렬은 신청인을 불러 “이걸 바꾸는 게 말이 더 이상하고 압력은 압력인데,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싸운다면 제가 사표를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런 정도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걸 아예 그냥 없었던 걸로 갑시다.”라고 설득하여 서울시민대학 강좌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95) 참고인 000에 대한 2018. 1. 30.자 진술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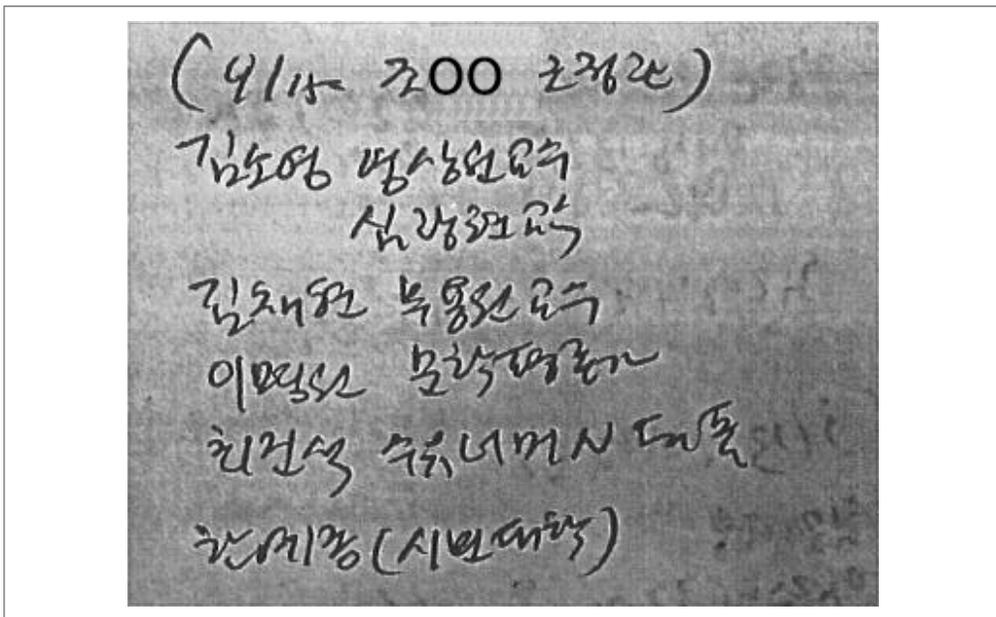
96) 참고인 김봉렬에 대한 2018. 3. 19.자 녹취록

(라) 참고인 이OO의 진술<sup>97)</sup>

2014. 9. 25. 당시 한예종 대외협력과장이었던 이OO는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희범이 한예종 총장 김봉렬에게 전화하여 위 강좌를 개설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 한예종 영상원에서 위 강좌 수강신청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3) 문체부 관계자의 주장

(가) 김희범(2014. 7. 27.경 ~ 2015. 2. 8.경 문체부 제1차관) 업무수첩 및 진술



위 내용은 2014. 9. 15. 김희범 업무수첩에 기재된 것이다. 김희범은 대법원 2018도 2236 재판기록에서 국정원 IO인 조OO 조정관이 2014. 9. 15. 前 문체부 제1차관인 김희범에게 전화를 하여 한예종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에 김OO 영상원 교수, 심광현 영상원 교수, 김OO(본명 김OO) 무용원 교수, 이OO 문학평론가, 최OO 수OOO 대표가

97) 참고인 이OO에 대한 2018. 3. 12.자 전화면담결과보고

참가하는데, 이들이 좌파라는 취지로 알려주었으나,<sup>98)</sup> 이에 대해 자신이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 12. 31.자 진술조서에서는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7. 5. 22. 증인신문과정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음).<sup>99)</sup>

#### (나) 참고인 김OO의 진술<sup>100)</sup>

당시 한예종 사무국장이었던 김OO은 2018. 3. 20.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워선에서 위 강좌를 취소하라고 했던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본인은 오히려 위 강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문체부 제1차관 김희범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한예종의 2014년 서울자유시민대학 ‘예술과 인문학’ 강좌를 취소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으며, 본인은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예종에 있었기 때문에 김희범을 자주 만나지 않았고, 만일 김희범이 위와 같은 지시를 했다면 보통 김희범과 한예종 총장 김봉렬과 직접 전화를 하곤 했으므로, 김희범이 김봉렬에게 직접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4) 서울특별시 관계자의 주장

#### (가) 참고인 최OO의 진술<sup>101)</sup>

2014. 9. 당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자유시민대학 담당 주무관이었던 최OO는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한예종 측으로부터 한예종에 보수 성향의 교수가 많아 “박원순 시장이 하는 서울시민대학에 왜 참여하냐”는 의견이 많았고, 김봉렬 한예종 총장 역시 보수 성향 교수들의 편을 들어주어 위 강좌가 갑작스럽게 개설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예종이 보낸 협조요청공문에는 ‘운영시기 연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강좌 개설취소된 것이고, 서울시 시민대학 강좌 개설 3일 전에 급하게 강좌 개설취소된 경우는 자신이 알기로는 본건 외에는 없을 정도로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8)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희범에 대한 2016. 12. 31.자 진술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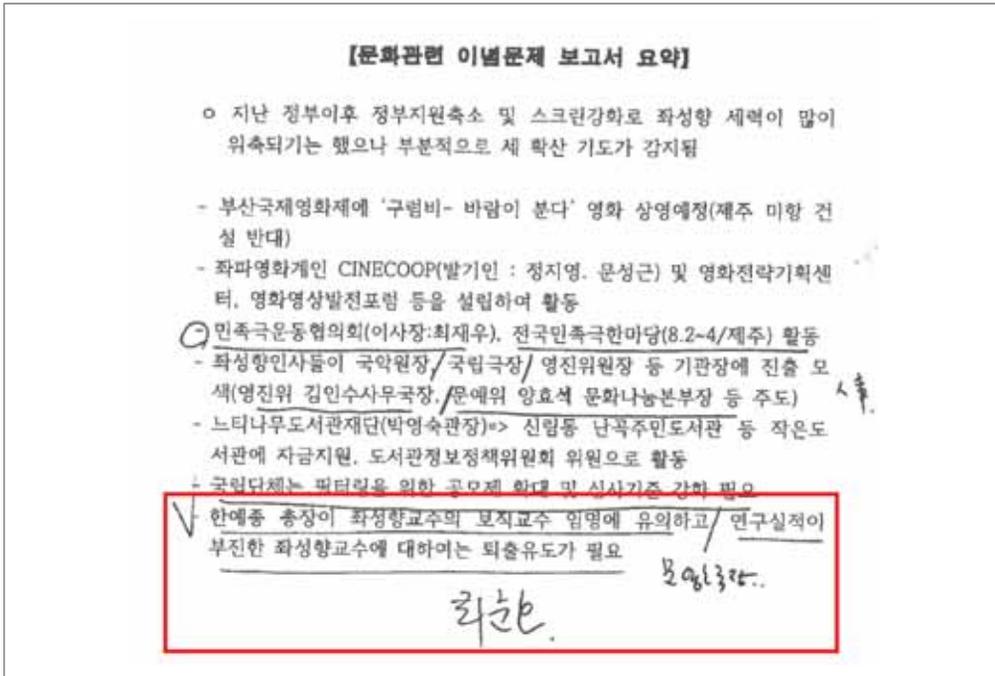
99)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희범에 대한 2017. 5. 22.자 녹취록

100)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3. 20.자 전화면담결과보고

101) 참고인 최OO에 대한 2018. 3. 15.자 전화면담결과보고

### 9. 한예종 일부 교수들에 대한 퇴출·보직에서 배제 시도

#### 가. 문화관련 이념문제 보고서 요약



위 문건은 2013. 10.경 청와대로부터 前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2013. 4. 22. ~ 2014. 11. 10.), 前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김OO을 통해 前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이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6. 8.경 후임인 C에게 인계한 자료이다. 국정원은 청와대에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고, 청와대 교문수석실은 문체부에 유선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불러주었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적었다가 타이핑한 것으로 보인다.<sup>102)</sup>

위 문건에는 '한예종 총장이 좌성향교수의 보직교수 임명에 유의하고 연구실적이 부진한 좌성향교수에 대하여는 퇴출유도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수기로 'OOO', '문OO국장'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102)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문건 보관 파일철 표지·김OO에 대한 2017. 1. 1.자 진술조사·오OO에 대한 2017. 4. 12.자 녹취서·C에 대한 2017. 4. 12.자 녹취서·모철민에 대한 2017. 5. 24.자 녹취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작성의 오OO에 대한 2017. 10. 10.자 진술조사

### 나.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2017. 10. 30. 작성한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14. 3. 19. 작성한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보고서에서 문예계의 좌성향 세력 근절 미흡 원인 중 하나로 ‘한예종 좌성향 교수들의 이념 편향적 교육’을 지적하면서, 그 대응전략으로 문체부가 ‘한예종의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에 연구실적 등이 부진한 교수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여 이념편향적 교수 퇴출방안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당시 국정원 지휘부도 동 업무를 보고받고 호평하였다.

48	문학	황지우	06.6 한예종 총장	B
85	연극	박근형	한예종 전임교원	B
124	음악	임진택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겸임교수	B
190	영화	심광현	한예종 영상원 교수	A
241	기타	김중원	한예종 무용원 교수	B
244	기타	이동연	한예종 교수	B
245	기타	이승엽	한예종 교수	B
246	기타	전규찬	한예종 영상원 교수	B

또한 신청인을 포함한 한예종 관련자 일부는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에 등재되어 있다.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문건은 국정원이 2014. 3. 19. 작성한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보고서에서 활동전력·영향력에 따라 열거·제시된 소위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 인물’ 리스트이다. 신청인은 위 리스트에 ‘A’ 등급 ‘한예종 영상원 교수’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한예종 제5대 총장인 황지우(2006. 3 ~ 2009. 5), 한예종 전임교원이었던 박근형, 한예종 전통예술원 겸임교수였던 임진택, 한예종 무용원 교수 김채현(본명 김중원), 한예종 전통예술원 교수 이동연, 한예종 연극원 교수 이승엽, 한예종 영상원 교수 전규찬 역시 위 리스트에 ‘B’ 등급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前 문체부 제1차관 김희범 업무수첩 및 관련 진술

일시	업무수첩	진술
2014. 9. 4.		<p>음악원이나 무용원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영상원과 연극원(공영원은 연극원의 오타로 생각됨)에는 좌파 교수가 있음. 그중에 교학처장은 민00 교수이니까 이 정도 눈여겨보라는 취지인 것으로 생각됨. 김봉렬과 최00에 대해 진영 논리와 개인비리를 엮으라는 취지로 생각됨.</p>
2014. 9. 16.		<p>前 문체부 장관 김종덕이 한예종 총장 김봉렬에 대해 좋게 평가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이념편향적 문제가 문제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몹시 걱정한 것으로 생각됨.<sup>103)</sup></p>

103)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희범에 대한 2016. 12. 31.자 진술조서

## 라. 한예종 관계자의 주장

### (1) 신청인의 진술<sup>104)</sup>

신청인은 2018. 1. 11.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총장 김봉렬이 청와대와 문체부 등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외압을 받았을 것인데 시민 대학 건을 제외하고는 그에 따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총장 김봉렬이 문체부 장관 김종덕에게 밉보였을 것이다. 당시 총장 김봉렬에 대하여 민OO, 최OO 등 소위 '좌파 교수'의 보직 교수 임명을 문제 삼거나, 예산을 가지고 압박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다.
- 「문화관련 이념문제 보고서 요약 문건」에 한예종 교수 최OO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최OO는 연우무대 쪽과 일을 많이 했고, 연극계의 진보적인 교수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OO가 한예종 기획처장 보직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정권에서 소위 '좌파'로 생각할만한 교수에게 보직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었을 것 같다.
- 문체부에서 당시 한예종 총장이었던 김봉렬에게 '좌성향 교수'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라는 식의 경고를 하거나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김봉렬은 청와대·문체부 등의 외압을 비교적 잘 막아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보직교수로 임명되지 못하거나 퇴출되는 경우는 없었다.
- 김봉렬 총장은 "이 정권에서는 신청인이 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뒷선으로부터 신청인을 자르라는 압박도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 (2) 참고인 김OO의 진술<sup>105)</sup>

한예종 교수인 참고인 김OO은 2018. 1. 24.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에 아마 좌파 교수들(특히 김봉렬 총장과 OOO 교수)을 실력이 없다든지 개인 비리가 있다든지 진영 논리를 펼쳐서 내보내라고 한 것 아닌가 싶다.

104) 신청인에 대한 2018. 1. 11.자 진술조서

105) 참고인 김OO에 대한 2018. 1. 24.자 진술조서

- 당시 박근혜 교수가 국정원의 관심을 받게 되었던 것 같다. 김봉렬 총장도 박근혜 교수를 방어해주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 당시 신청인은 한예종에서 학과장도 하지 못하게 했다. 자신이 당시 학과장을 너무 오래해서, 런던대학 초빙교수로 연구년을 가려고 신청인을 학과장으로 추천했다. 그런데 한예종에서 신청인을 학과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전화가 왔다. 그래서 런던대학 초빙교수로 가지도 못하고 다시 한예종으로 돌아왔다.
- 000 교수가 당시 기획처장이라 한예종에 대한 윗선의 압박이 있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 (3) 참고인 000의 진술<sup>106)</sup>

한예종 교수인 참고인 000는 2018. 1. 25.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아마 자신이 2013. 9.부터 한예종 기획처장 보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기재된 것 같다.
- 그때만 해도 문체부 등 소위 윗선이 학교 안에 있는 좌성향 교수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던 편이었다.
- 자신은 문화연대 창립 발기인이고 문화연대 정책위원직에 오래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파리문화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문화헌장 제정위원도 했었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좌성향 교수로 알려졌을 것 같다.
- 문화나 예술이라는 것이 세상이 마냥 아름답고 평화롭다고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걸 박근혜 정권에서는 소위 “좌성향”으로 분류했음에도 모르지만, 자신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 문화예술을 하는 지식인으로서 현실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비판을 했을 뿐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문화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인다.
- 신청인의 경우에는 보직을 맡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106) 참고인 최00에 대한 2018. 1. 25.자 진술조서

#### (4) 참고인 김봉렬의 진술<sup>107)</sup>

한예총 총장인 참고인 김봉렬은 2018. 3. 19.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14년 말경 김희범은 문체부 제1차관으로 부임하자마자 “좌파 교수들, 좌파의 온상이라고 한예총이 불리는 거를 자기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 이후 문체부 제1차관 김희범은 김봉렬을 찾아와 신청인, 김소영 등 소위 ‘좌성향’ 교수의 이름을 거명하며 “퇴출시킬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해서 김봉렬과 아주 크게 다투었다. 김봉렬은 김희범에게 “이건 탄압이다. 자르려면 직접 자르시던가. 나는 못 한다.”라고 대응했고, 김희범은 “이게 무슨 탄압이냐? 조언이지.”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김봉렬은 김희범의 이야기가 “탄압이지 무슨 조언이냐?”라고 느껴서 “이거는 교권 침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 당시 김봉렬은 문체부에서 생각하는 소위 ‘좌성향’ 교수가 누구인지 확인하였는데, 각 부서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신청인, 황지우, 김소영, 김채현 등이 들어가 있었다.
- 당시 영상이론과에 교수가 부족해 신청인이 영상이론과 학과장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체부가 신청인에게 영상이론과 학과장 보직을 주지 말라고 하여서, ‘야, 학과장까지 신경 쓰냐?’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신규교원을 채용하기 전까지는 영상이론과 학과장을 뽑지 않고 대행체제로 갔고, 신규교원을 채용하여 영상이론과 학과장 보직을 주게 되었다.
- 문체부 제1차관 김희범이 얼핏 “연구 규정까지 직접 바꾸라.”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교권 침해라고 대응했다.
- 당시 김희범은 소위 ‘좌성향’ 교수들을 퇴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길 원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 김봉렬은 김희범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대충 짐작을 하고 미리 헌법을 검토했는데, 헌법에 교육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고, 공무원의 임기보장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107) 참고인 김봉렬에 대한 2018. 3. 19.자 녹취록

- 당시 한예종 사무국장이었던 김OO은 “김희범 차관이 이리려고 그런다. 이거 기안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라고 학교에 대해서는 미리 연락을 다 해줬다. 그래서 김OO과 “필요한 게 보고서 아니냐? 보고서 몇 줄 써서 차관도 면피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가자.”라고 상의를 해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렇지 않고 김희범의 지시가 그냥 바로 왔으면 자신도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 결국은 한예종이 문체부 소속 학교이고, 예술국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고, 예술국에 제일 위에는 제1차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장관이 있다. 근데 그때 인상은 장관은 한예종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것 같았고, 제1차관이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할했던 것 같다.
- 김희범은 김봉렬과 한예종에 대한 문제로 한번 싸우고 나서는 직접 연락을 잘 하지 않았고, 한예종 사무국장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

## 10. 한예종 영상원 각 과 폐지 및 통합 시도

한예종 총장 김봉렬은 2018. 3. 19.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sup>108)</sup>

- 문체부 제1차관 김희범은 당시 한예종 사무국장 김OO을 통해 영상원의 모든 학과를 없애고 영상원을 다 통합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의도는 영상이론과를 없애고 싶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109)</sup>
- 그러나 위와 같은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김봉렬은 신청인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영상이론과 교수를 추가적으로 뽑아 신청인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역제안을 해서 영상원 각 과 폐지 및 통합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
- 아마 당시 문체부가 신청인을 포함한 한예종 좌파 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했다고 어딘가에 써야 할 텐데, “이렇게 학교가 노력을 하니 이 정도로 지나가자.”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것으로 생각된다.

108) 참고인 김봉렬에 대한 2018. 3. 19.자 녹취록

109) 이에 대해 당시 사무국장 김OO은 ‘몇몇 교수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영상원의 모든 교수가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동 내용 기술은 추측성으로 판단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18. 11. 5.).

## 11. 한예종 교원업적평가 개정 시도

### 가. 관련 규정

한예종 교원 업적평가 지침은 2015. 6. 30. 제정되어 2016. 3. 24. 규칙 제641호로 개정되었다. 교원 업적평가기준은 ‘학생지도’, ‘연구실적’, ‘봉사 및 기여도’ 항목이 있는데, 그중 외부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연구실적’과 ‘봉사 및 기여도’ 항목이다. ‘연구실적’은 저서, 편저, 연구논문, 발표, 전시, 입선, 연주 등으로 구성되며 질적 평가방식이다. ‘봉사 및 기여도’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개정 부분은 파란색 글씨).

#### - 음악원

- 국가, 지역사회, 국제사회 공헌(국가 및 자치단체 관련 위원회 활동, 사회봉사단체 임원, 국외봉사활동 등) 및 학회 활동 등(건당 1점)
  - 산학협력단을 통한 대외활동(건당 1점)
  - 논평, 학회 논문심사, 언론 기고 실적(건당 1점)
- \* 연구실적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실적 제외

#### - 연극원

- 논평, 학회 논문 게재·심사, 언론 기고 실적(건당 1점, 최대 5점)
- \* 연구실적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실적 제외
- 산학협력단을 통한 대외활동(건당 1점)
  - 국가, 지역사회, 국제사회 공헌(국가 및 자치단체 관련 위원회 활동, 사회봉사단체 임원, 국외봉사활동 등) 및 학회 활동 등을 통한 학교 이미지 제고 기여도(최대 5점)

#### - 영상원

- 산학협력단을 통한 대외활동(건당 1점)
- 국가, 지역사회, 국제사회 공헌(국가 및 자치단체 관련 위원회 활동, 사회봉사단체 임원, 국외봉사활동 등) 및 학회 활동 등을 통한 학교 이미지 제고 기여도

#### - 무용원

- 산학협력단을 통한 대외활동(건당 1점, 한 학기 최대1점)

- 국가, 지역사회, 국제사회 공헌(국가 및 자치단체 관련 위원회 활동, 사회봉사단체 임원, 국외봉사활동 등) 및 학회 활동 등을 통한 학교 이미지 제고 기여도

#### - 미술원

- 산학협력단을 통한 대외활동(건당 1점)
- 국가, 지역사회, 국제사회 공헌(국가 및 자치단체 관련 위원회 활동, 사회봉사단체 임원, 국외봉사활동 등) 및 학회 활동 등을 통한 학교 이미지 제고 기여도

#### - 전통예술원

- 산학협력단을 통한 대외활동(건당 1점, 최대10점)
- 택 1/최대 5점
  - ① 국·내외 경연대회 입상, 심사실적
    - 본인/학생지도 수상, 심사(국제 2점/국내 1점)
  - ② 논평, 학회 논문 게재(지도 학생 포함)·심사, 언론 기고 실적(건당 1점)
    - \* 연구실적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실적 제외
- 국가, 지역사회, 국제사회 공헌(국가 및 자치단체 관련 위원회 활동, 사회봉사단체 임원, 국외봉사활동 등) 및 학회 활동 등을 통한 학교 이미지 제고 기여도(최대 5점)

#### 나. 참고인 김소영 진술<sup>110)</sup>

한예종교수	한예종교수 및 교수업적평가 개선 필요성 제기	2016.상	김상률수석 (IO보고서)	김종덕장관 정관주차관 B 국장	
-------	-----------------------------	--------	------------------	------------------------	--

당시 청와대 문체비서관이었던 김소영은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6년 상반기에 국정원 정보보고서에서 한예종 교수들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서 한예종 교수들의 활동이 요주의 대상이었고, 한예종 진보성향 교수들이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데 교수평가에서 외부활동 부분의 가중치가 높아서 오히려 점수를 잘 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 평가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

110) 대법원 2018도2236 재판기록 중 김소영에 대한 2017. 1. 1.자 제2회 진술조서

기도 있어서 검토한 적이 있다.

- 이에 대한 문체부의 담당자는 장관 김종덕, 제1차관 정관주, 예술정책관 B였다.

#### 다. 신청인의 진술<sup>111)</sup>

신청인은 2018. 1. 11.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한예종 전임교원 외부강의 등 신고지침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공무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예종 교원 업적평가 지침도 외부활동 가중치가 높거나 한 것은 원래부터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IO가 정보를 다소 잘못 수집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김봉렬 교수가 총장이 되고 나서는 원장회의가 열리기 전 개정안 공람을 모든 교수들을 상대로 실시하고, 절차를 전부 준수하여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상한 지침이 만들어지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라. 참고인 000의 진술<sup>112)</sup>

한예종 교수인 참고인 000는 2018. 1. 25.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3년 상반기에 한예종 교수들이 외부활동을 한다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한예종 교수들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기 때문에 외부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감사원에서는 “교수가 왜 외부활동, 영리활동을 하느냐, 외부활동, 영리활동 하는 것을 신고했냐”고 캐물었다고 들었다. ‘외부활동’이라는 말의 정의도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한다. 한예종 교수들은 작품 활동을 하면 나중에 외부활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외부활동은 작품발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당시 감사원 감사관이 해당 교수들을 한 명씩 만났다고 들었다. 000 교수는 위 감사로 인해 모욕감을 느끼고 교수직에서 사임하게 되었다.

111) 신청인에 대한 2018. 1. 11.자 진술조서

112) 참고인 000에 대한 2018. 1. 25.자 진술조서

### 마. 참고인 박OO의 진술<sup>113)</sup>

참고인 박OO은 2018. 2. 7.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른 학교는 대개 논문으로 교원평가를 하는데, 한예종은 논문뿐 아니라 프로젝트 연구 등도 감안하여 교원평가를 해왔다. 그런데 프로젝트 연구 등은 일반적으로 외부활동을 많이 한 교수들이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한예종에서는 기존에 외부활동을 많이 할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외부활동 자체에 관해서는 봉사 활동 영역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MB 때 쯤 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가 강화되어 교수들이 평가에 대해 민감해졌다. 그러나 그로 인해 교육의 질이 높아지거나 실효성이 있어지는 않았다.

## 12. 한예종 동향파악에 관한 점

### 가. 참고인 김봉렬의 진술<sup>114)</sup>

참고인 김봉렬은 2018. 3. 19.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3년 자신이 총장 후보자 1위로 문체부에 올라갈 무렵 국정원 직원과 정보과 경찰을 만났다.
- 국정원 직원과 정보과 경찰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보고서를 쓰려는 목적으로 김봉렬을 찾아왔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담당 국정원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한예종 뿐만 아니라 아마 문체부의 각 기관을 공통으로 맡았을 것이다.
- 당시 국정원 직원에게 “내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자, 약간 안 좋게 분류되어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자신은 실용적인 사람이고, 정치와 무관한 사람이다. 좀 써 달라.” 얘기한 것 같다.
- 2014년 무렵 문체부에서 한예종 사무국장에게 동향보고를 매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이야기를 당시 총무과장 G에게 듣고 처음에는 화도 났지만, 나중에는 “야, 대충 써서 줘. 날씨가 써서 주든가.”라고 이야기했다.

113) 참고인 박OO에 대한 2018. 2. 7.자 진술조서

114) 참고인 김봉렬에 대한 2018. 3. 19.자 녹취록

- 경찰은 서울중앙지방경찰서 정보과에 담당 경찰이 있었는데, 총장을 만나진 않고 정보과장은 총무과장 선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봉렬은 서장을 한 번 만난 일이 있다.

#### 나. 참고인 최OO의 진술<sup>115)</sup>

한예종 교수 최OO는 2018. 1. 25.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원 IO인 조OO이 한예종 담당 직원으로 출입하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참고인 박OO의 진술<sup>116)</sup>

참고인 박OO은 2018. 2. 7.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기획처장하기 전부터 직무대리 끝날 때까지 가끔 찾아온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 특별하게 뭘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고, 이OO 사무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소개해주었다.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 제4절 | 조사 결과

본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등을 동원하여 한예종 내 블랙리스트 인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불법, 부당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진상규명하였다.

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명박 정권이 신청인을 비롯하여 한예종 내 블랙리스트 인사들에 대해 부당한 차별·배제 행위를 반복했다는 사실”, “한예종 내 블랙리스트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및 문체부 감사관실이 동원된 사실”,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교문수석실이 한예종 내 블랙리스트 인사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퇴출시키기 위해 한예종 총장 김봉렬을 압박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115) 참고인 최OO에 대한 2018. 1. 25.자 진술조서

116) 참고인 박OO에 대한 2018. 2. 7.자 진술조서

## 1. 진상규명 사실

### 가. 한예종에 대한 이명박 정권(2008. 2. 25. ~ 2013. 2. 24.)의 인식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2008. 8. 27.경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문건에는 ‘핵심기관 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을 소리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문화미래포럼의 활동이 미약하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문화미래포럼은 2008. 9.경 「문화예술계 현안과 과제」문건을 작성하여 한나라당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였다. 문화미래포럼은 위 문건에서 ‘한예종이 문화예술분야의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이므로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국내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아 현장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본래의 설립취지를 벗어나 한예종이 일반 대학의 편제를 따라가고 있으며 결국 정체성을 상실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예종 교수 김OO의 진술 및 관련 자료에 의하더라도 문화미래포럼은 2008. 9.초순 토론회에서 한예종의 6개월을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한예종의 구조개혁을 주장하였다.

문화미래포럼의 ‘한예종의 설립취지는 예술실기교육임에도 한예종은 설립취지에서 벗어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평가는 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고, ‘한예종이 문화예술분야의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이라는 평가는 이명박 정권 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다.

위와 같은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명박 정권은 한예종이 ‘한예종이 문화예술분야의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U-AT 사업은 좌파인 신청인, 황지우, 진OO 등이 주도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 나. 한예종 U-AT 사업 중단

前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은 2008. 3. 25. 한예종의 업무보고 당시 황지우에게 U-AT 사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구두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한예종은 기투입 예산 낭비와 콘텐츠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잃는 손해를 우려하여 문체부 기획재정담당관실에 2009년 U-AT 사업 예산을 신청하였다. 문체부는 유인촌의 지시에 의하여 2008. 10. 7. 경 2009년도 문체부 예산사업에서 U-AT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

산안에 U-AT 사업 예산을 최종적으로 미반영하였다. 그러자 前 한예종 총장 황지우는 U-AT 사업을 ‘AT 시범교육사업’으로 축소·재정비하여 한예종의 ‘기성회비 및 발전기금’ 재원으로 2009년에도 U-AT 사업을 운영하였다.

당시 한예종 총장직무대리였던 박OO, 前 한예종 총장 황지우 등의 진술 및 조사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유인촌이 U-AT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① ‘한예종이 문화예술분야의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인식 ② U-AT 사업을 추진한 신청인, 황지우, 진OO 등이 청와대·국정원이 ‘좌파’라고 인식한 인사들이었던 점, ③ 다른 예술대학과의 관계 문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다. 2009년 이 사건 종합감사 배경·목적

- (1) 신청인, 前 한예종 총장 황지우, 한예종 교수인 최OO, 김OO, 김OO, 김봉렬, 박OO, 2009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종합감사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이었던 박OO 등의 진술, 콘진원의 U-AT 사업 평가과정, 이 사건 종합감사 결과 및 이에 대한 한예종의 이의신청, 관련 판결, 관련 기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의 우려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 사건 종합감사의 목적 또는 배경은 당시 정권에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신청인, 황지우 등을 ‘좌편향적인 노(盧) 정권 코드인사’, 한예종을 ‘문화예술계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이라고 규정하고, ① 위 인물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기 위해, 그리고 ② 한예종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및 문체부 감사관실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문체부는 2009. 4. 15.경 콘진원에 U-AT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를 한예종 종합감사 및 U-AT 사업 중단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신청인, 前 콘진원 CT개발팀 팀장 백OO 등의 진술, 신청인 정직처분 취소에 관한 2011누13639 재판기록 등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콘진원의 평가과정은 평가위원들이 U-AT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제공받지도 못했고,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3) 2009. 3. 18. ~ 4. 24. 한예종에 대한 이 사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인원이 예년보다 2배가량 많았으며, 이 사건 종합감사 통보 당시 감사기간의 총기가 명

시되어 있지 않았고, 최종 감사기간이 예년보다 4배가량 길어 감사의 규모 및 내용이 예년 감사와 차이가 있었다. 감사는 U-AT 사업 등에 집중되었다. 신청인, 참고인 황지우, 김OO, 김봉렬, 박OO, 박종원, 한예종 교협 역시 이 사건 종합감사는 기존 한예종에 대한 종합감사와 달리 참여한 감사관 총 인원, 감사기간 등의 측면에서 “문체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이 사건 종합감사의 진행과정을 보면, 이 사건 종합감사가 ① 총장퇴진 압박, ② 한예종 구조개편 내지 리모델링을 겨냥한 전형적인 ‘표적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예술정책관이었던 박OO도 이 사건 종합감사의 목적이 前 한예종 총장 황지우 퇴진 압박이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 (4) 문체부 장관은 2009. 6. 16. 한예종에게 이 사건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최종 요구 조치 사항을 지시하였다. 그 중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었고, 한예종은 신청인에게 정직3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10. 5. 17. 정직 2월의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제3징계사유 하나뿐이고, 연구수당 지급경위, 재원이 된 기성회계 중 연구보조비 과목 성격, 신청인이 한 행위 내용,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에서 2011. 10. 26. 이 사건 정직 처분을 취소하였다.

황지우는 2009. 5. 19. 이 사건 종합감사가 “전형적인 표적감사”라고 비판하며 총장직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문체부는 2009. 5. 30. 황지우가 제출한 사퇴서를 수리하였다. 이후 한예종은 황지우가 한예종 총장으로서의 임기만료 전 사임하였으므로 종전 교수 등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황지우에 대한 교수직 퇴직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수가 총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총장직에서 사직한 경우에도,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 등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 등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고 판단하여, 황지우의 한예종 교수 직위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5) 관련 기사<sup>117)</sup> 및 청와대 문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집행 결과 분석을 보면 황지우 외에도 김정현 예술위 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문화예술기관장들이 표적감사를 당하거나, 사퇴 압박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 직권면직으로 교체된 점을 알 수 있다.
- (6)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은 조직신설 목적 중 하나로 “노(盧)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을 언급하고 있고, 당면과제로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제출 유도(9월, 공기업 임원 39명)”해야 한다는 점을 꼽으며, “필요시 각 부처 감사관실 동원”하라고 기재하고 있다.

한겨레는 2012. 12. 5.자 「진보판사 동향에 이견희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문어발 사찰’」 기사에서 민간인 사찰 사건 재수사 기록 중에 前 한예종 총장 황지우도 등장한다고 하면서, “2009년 4월 이영호(48)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하명으로 시작된 ‘한예종 공직기강 점검’의 조치 결과로 ‘문화부 통보(4. 28), 황지우 총장 사퇴(09. 5)’가 적혀 있다. 즉,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2009. 4.경 ‘한예종 공직기강점검’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9. 4. 23. 22:30~24:10 총장실을 심야수색하였으며, 총장실에서 북한 관련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문체부에 2009. 4. 28. 통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위와 같은 조치 결과로 황지우가 한예종 총장직에서 사퇴하였다는 점까지 보고하였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 노무현 정권 인사에게 사표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부처 감사관실을 동원하라고 기재된 사실을 고려하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 감사관실에서 노무현 정권 인사인 한예종 총장 황지우에게 사표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 사건 종합 감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라. 2014년 서울자유시민대학

- (1) 한예종은 2014. 7. 21.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서울특별시의 권역별 대학연계 시민 대학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3. 9. 29. ~ 12. 12. <예술과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117) 유인촌 “김윤수-김정현 등 5명 물러나라”, <뉴스앤뷰스>, 2008. 3. 17., 김윤수 “유인촌, 양심 없는 사람”, <미디어오늘>, 2010. 9. 10.

- (2) 그런데 국정원 IO인 조OO 조정관이 2014. 9. 15. 前 문체부 제1차관인 김희범에게 전화를 하여 한예종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에 김OO 영상원 교수, 심광현 영상원 교수, 김OO(본명 김OO) 무용원 교수, 이OO 문학평론가, 최OO 수OOOO 대표가 참가하는데, 이들이 좌파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다. 김희범은 이에 대해 자신이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신청인, 한예종 교수이자 2014 한예종 <예술과 인문학> 강좌를 함께 개설하였던 김OO, 김OO, 한예종 총장 김봉렬, 2014. 9. 25. 당시 한예종 대외협력과장이었던 이OO, 2014. 9. 당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자유시민대학 담당 주무관이었던 OOO, 당시 한예종 사무국장이었던 김OO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김희범은 한예종 사무국장 김OO을 통하거나 직접 2014년 예술과 인문학 강좌를 취소하도록 한예종 총장 김봉렬을 압박하였고, 결국 김봉렬은 신청인에게 “윗선에서 갑자기 시민대학 강좌를 취소하라고 지시가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이후 한예종은 개강일 3일 전인 2013. 9. 26. 서울특별시장(평생교육과장)에게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한예종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중 강좌운영이 어려워져 운영시기를 연기할 것’을 급하게 협조요청하여 2014년 예술과 인문학 강좌를 취소하였다.
- (4) 위와 같은 진술 및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진보적 인사인 서울시장 박원순이 추진하는 2014년 서울자유시민대학 사업에 한예종의 진보적 교수들·인사들이 참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후, 위 진보적 교수들·인사들, 그리고 서울시장 박원순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前 문체부 제1차관 김희범을 통해 2014년 예술과 인문학 강좌를 취소하도록 한예종 총장 김봉렬을 압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한예종 일부 교수들에 대한 퇴출·보직에서 배제 시도

- (1) 2013. 10.경 청와대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2013. 4. 22. ~ 2014. 11. 10.), 예술정책과장 김OO을 통해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이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6. 8.경 후임인 C에게 인계한 「문화관련 이념문제 보고서 요약」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정원으로부터 ‘한예종 총장이 좌성향교수의 보직교수 임명에 유의하고 연구실적이 부진한 좌성향교수에 대하여는 퇴출유도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문체부에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2017. 10. 30. 작성한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4. 3. 19.에도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보고서에서 문예계의 좌성향 세력 근절 미흡 원인 중 하나로 ‘한예종 좌성향 교수들의 이념 편향적 교육’을 지적하면서, 그 대응전략으로 문체부가 ‘한예종의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에 연구실적 등이 부진한 교수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여 이념편향적 교수 퇴출방안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고, 당시 국정원 지휘부도 동 업무를 보고받고 호평하였다. 위 보고서에 포함된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에는 신청인이 ‘A’ 등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예종 제5대 총장인 황지우(2006. 3 ~ 2009. 5), 한예종 전임교원이었던 박OO, 한예종 전통예술원 겸임교수였던 임OO, 한예종 무용원 교수 김OO, 한예종 전통예술원 교수 이OO, 한예종 연극원 교수 이OO, 한예종 영상원 교수 전OO이 ‘B’ 등급으로 등재되어 있다.
- (3) 한예종 총장 김봉렬은 ① 문체부 제1차관 김희범은 문체부 제1차관으로 부임하자마자 “좌파 교수들, 좌파의 온상이라고 한예종이 불리는 거를 자기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문제제기를 했고, ② 이후 김희범은 김봉렬을 찾아와 신청인, 김OO 등 소위 ‘좌성향’ 교수의 이름을 거명하며 “퇴출시킬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해서 김봉렬은 김희범에게 “이건 탄압이다. 자르려면 직접 자르시던가. 나는 못 한다.”라고 항의를 하였으며, ③ 당시 영상이론과에 교수가 부족해 신청인이 영상이론과 학과장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체부가 신청인에게 영상이론과 학과장 보직을 주지 말라고 하여 신규 교원을 채용하여 학과장 보직을 주었고, ④ 김희범은 소위 ‘좌성향’ 교수들을 퇴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길 원했다고 주장하였다.
- (4) 즉, 국정원은 2013. 10.경뿐만 아니라 2014. 3. 19.경에도 신청인을 포함한 위와 같은 한예종 교수들을 ‘좌성향’으로 판단하고, 연구실적 등이 부진한 이념편향적 교수 퇴출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와대 교문수석실은 2013. 10.경 문체부에 좌성향 교수들에게 보직을 주지 말고, 연구실적이 부진한 좌성향 교수는 퇴출 유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2014. 7. 27. 경 문체부 제1차관으로 취임한 김희범은 한예종 총장 김봉렬에게 위와 같은 청와대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김희범 취

임 후까지 같은 취지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위 지시를 들은 김봉렬은 신청인 김OO 등 소위 '좌성향' 교수를 퇴출하라는 이야기에는 크게 반발 하였으나, 신청인에게 영상이론과 학과장 보직은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5) 그 외에도 관련 증거들과 진술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① 청와대 교문수석실은 연극계에서 진보적인 한예종 교수로 알려진 OOO를 좌성향 교수로 인식하고, OOO에게 기획처장 보직을 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며, ② 前 문체부 장관 김종덕은 한예종 총장 김봉렬이 좌성향 교수를 퇴출 유도하라는 등 문체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김봉렬의 이념편향적 태도가 문제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몹시 걱정하며 김봉렬을 좋지 않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③ 또, 진보적 인사로 알려진 박근형, 민경찬 역시 문제 삼았고, ④ 좌성향 교수를 퇴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꾸라는 압박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한예종 영상원 각 과 폐지 및 통합 시도

한예종 총장 김봉렬의 진술에 의하면, 前 문체부 제1차관 김희범은 신청인이 소속된 한예종 영상이론과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당시 한예종 사무국장 김OO을 통해 김봉렬에게 영상원의 모든 학과를 없애고 영상원을 통합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 한예종 교원업적평가 개정 시도

- (1) 당시 청와대 문체비서관이었던 김소영의 진술 등에 의하면, 국정원은 2016년 상반기에 한예종 교수들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청와대에 한예종 진보성향 교수들이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데 교원업적평가에서 외부활동 부분의 가중치가 높아서 오히려 점수를 잘 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 평가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와대 교문수석실은 문체부(문체부 장관 김종덕, 문체부 제1차관 정관주, 문체부 예술정책관 B)를 통해 한예종 교원업적평가를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sup>118)</sup>
- (2) 그러나 실제로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 한예종 진보성향 교수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예종 교원업적평가가 개정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118) 이와 관련하여 예술정책관 B는 그러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이의제기하였다(18. 11. 6.).

## 아. 한예중 동향파악에 관한 점

관련 진술에 따르면, 한예중 총장 후보자가 문체부에 올라갈 때 서울중앙지방경찰서 정보과 경찰과 국정원 직원이 인사검증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박근혜 정부까지는 한예중 담당 국정원 직원 및 서울중앙지방경찰서 정보과 경찰이 한예중에 대한 동향파악을 했고, 문체부에서 한예중 사무국장에게 한예중에 대한 동향보고를 매일 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 가. 2009년 한예중 총장 선임 과정에 문체부가 개입한 정황

일부 한예중 교수들은 당시 박종원이 총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문체부가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박종원은 위와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사실은 진상규명할 수 없었다.

### 나. 2011년 한예중 영상원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 (1) 관련 규정 재·개정

2010. 11. 1. '전임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 등 관련 규정이 개정 및 제정되었는데, 그중 본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의 심사위원회가 '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 중에서 위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학과 또는 동일분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 중에서 위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위 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와 '동일분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 간에는 우열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가 반드시 심사위원으로 우선적 위촉되지 않아도 규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신청인과 일부 한예중 교수들, 교협, 한예중 총학생회, 한예중 영상이론과 동문은 위와 같은 규정 변경으로 인해 총장의 의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채용분야 학과 교수 전원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학과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 외에도 ① 총장은 필요시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과 ② 총장은 임용후보자가 최종 선정된 이후라도 임용일 전까지 교수임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심사의 방식이 점수제에서 적부판정으로 변경되었고, 외부위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 총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심사위원회 구성방식이 변경되었다. 즉, 관련 규정의 재·개정을 통해 총장의 권한 범위가 변경되었고, 한예종 교원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재개정 과정에서 신청인을 포함한 일부 한예종 교수에게 불이익을 가하라는 청와대 및 문체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 (2) 신청인이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심사위원회에서 제외된 경위

신청인은 당시 영상원장 박OO는 “당신은 명단에 없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영상원장이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이를 총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이 원하는 심사위원을 정해서 영상원장에게 “이런 사람을 추천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예종 영상원장인 박OO는 2011. 5. 16. 교무과장에게 신청인이 포함된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관련 기초심사위원회 및 전공심사위원회 후보자 목록을 제출하였으므로, 영상원장 박OO는 신청인이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심사위원회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예종 총장 박종원은 2011. 5. 24. 당시 영상원장 박OO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 기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위촉하였는데, 신청인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또, 박종원은 2011. 6. 15. 당시 영상원장 박OO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전공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위촉하였는데, 신청인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이 위 심사위원회 포함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한예종 본부 및 당시 한예종 총장 박종원은 ① 심사위원 위촉에서 총장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전공일치’ 여부인데, ‘전공일치’의 기준은 대학의 최종학위이고, 신청인의 전공은 ‘영상미학’이므로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모집분야인 ‘영화이론’과 불일치하며, ② 신청인이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정황이 있는 등 객관적 심사 진행에 우려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총장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선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영상이론과 교수인 신청인과 김OO이 모두 OOO 교수를 노골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서, 신청인과 김OO이 모두 심사위원회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한예종 본부 및 당시 한예종 총장 박종원의 주장에 대해 신청인, 교협, 한예종 영상이론과 학생들, 한예종 영상이론과 동문은 ① 전공일치 여부는 단순히 석사학위를 무엇으로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연구를 했는지, 어떤 강의를 했는지, 어떤 대외활동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② 신청인이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한예종 당국의 주관적인 짐작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학과 교수 모두를 배제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므로 매우 위험하고, ③ 신청인이 영상이론과 신규교원 채용 심사위원에서 제외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 학살 정책과 맞물린, 진보 성향 교수에 대한 악의적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인 김OO과 김OO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특히 각 위원들은 자기의 뜻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포함된다고 해도 반드시 신청인이 원하는 후보자가 교수로 임용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영상원장 박OO는 당시 영상이론과 교수인 김OO과 신청인이 OOO 교수를 내정하고 공채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있었고, 본인은 위와 같이 불공정하게 공채를 진행하려고 했음에도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우며, 신청인과 김OO이 들어가면 나머지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상황을 주도했을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공불일치에 관한 점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와 같은 진술들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① 전공불일치에 관한 점은 이 사건 종합감사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며, 기초심사 위원회 및 전공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들을 보더라도, 어OO은 문학사, 정치학석사, 문학박사 전공자에 해당하므로 前 한예종 총장 박종원과 한예종 본부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② 영상이론과 교수인 신청인과 김OO이 모두 OOO 교수를 노골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서, 신청인과 김OO이 모두 심사위원회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은, ㉞ 기초심사위원회가 위원장을 제외하고 총 7명, 전공심사위원회가 총 6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므로 그중 2명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더라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점, ㉟ 총장은 필요시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 있고, 임용후보자가 최종 선정된 이후라도 임용일 전까지 교수임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이 다른 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를 총장의 결정만으로 시정할 수 있는 점, ㊱ 심사위원 수의 절반에 가까운 3명이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신청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 것이 제·개정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 문체부, 국정원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 다. 2012학년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지도교수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은 2012. 3. 13. 한예종 및 한예종 총장(영상원장)에게 ‘특별연수 대상자 기관 위탁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특별연수대상자인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000 교사가 연수기간 2012. 3. 4. ~ 2013. 2. 5., 위탁기관 한예종, 담당교수 신청인으로 하여 특별연수를 신청하였으므로 행정사항에 관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예종은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교에서 동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귀원의 협조사항을 수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회신 공문을 보내 충청남도교육청의 협조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당시 영상원장이었던 장00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 달 여간 결제를 해주지 않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소위 ‘좌성향 교수’으로 낙인 찍혀서 한예종에서 아무 것도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당시 영상원장이었던 장00, 당시 한예종 영상원 행정실장이었던 김00은 위 협조 요청을 거절한 이유에 관하여, ① 신청인이 2012년 2학기 연구년제 연구교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거나, ② 신청인이 당시 신청 과정에서 요건을 불비했기 때문일 것이며, 신청인이 소위 ‘좌성향 교수’으로 낙인 찍혀서 한예종에서 아무 것도 해주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충청남도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오성고등학교 소속 교사 000가 작성하여 제출한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자기연구계획서에는 지도교수인 신청인의 강의를 학기당 3강좌 수강 및 연구한다는 연구 일정이 기재되어 있다. 2012학년도 특별연수의 교육기간은 12개월(2012. 3. 1.~2013. 2. 29.)이므로<sup>119)</sup>, 김인규는 신청인이 연구년 승인된 2012년 2학기에도 신청인의 강의를 3강좌 수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예종 연구년제 연구교원 규정(2010. 8. 20. 규칙 제413호로 개정된 것)과 연구년제 연구교원 복무지침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연구년제 연구교원은 연구에만 전념

119) 2012학년도 학습연구년제 우수교사 위탁특별연수 위탁기관 운영규정 제3조

하여야 하며, ② 강의 및 보직을 수행할 수 없고, ③ 원칙적으로 연구 이외의 학교 행정과 관련된 활동 및 대외겸직활동은 금지되지만, 원장의 요청에 따라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대외 겸직활동, 입시 출제, 교내 각종 위원회 활동은 가능하다. 즉, 신청인은 연구원이었던 2012년 2학기에는 한예종에서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신청인은 「인지과학과 이미지의 문화정치 “유비쿼터스 시대의 영상문화연구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연구주제로 한예종 2012년 2학기 연구년제 연구교원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협조 요청(2012. 3. 13.)이 있기 전인 2011. 12. 2. 이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그렇다면 한예종이 충청남도교육청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신청인이 2012년 2학기에 연구년이라 한예종에서 강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 문체부, 국정원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

# 4

## 박근혜 정권의 좌파문화예술계 배제 문화융성 정책 입안 및 실행방안에 관한 직권조사



# 4

## 박근혜 정권의 좌파문화예술계 배제 문화융성 정책 입안 및 실행방안에 관한 직권조사

###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특4 [박근혜 정권의 좌파문화예술계 배제 문화융성 정책 입안 및 실행방안에 관한 직권조사]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 가. 조사 취지

헌법이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문화기본법은 ‘개인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모든 국민은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문화를 향유 할 문화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권은 집권 초반부터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조성」(이하 ‘문건’)이라는 문화예술정책 기조를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보조금 신청과정에서 특정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이 문화예술계를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특정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배제’라는 기조를 가진 이유와 그 정책기조를 입안하

고 실행한 주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경위 등을 조사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으로부터 배제를 당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문화 창작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 1)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정원 작성의 「문건」, 그리고 이어진 국정원의 문화예술계에서 좌파배제대책과 관련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문화예술계에서 자신들의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부비판적인 예술인을 상시적으로 감시, 관리, 통제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서 차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동시켰다. 「문건」은 국정원에 의해 작성되어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1달이 되지 않은 시점인 2013. 3. 15. 일경에 청와대에 보고되었다. 「문건」은 “左성향 문화예술인들이 문화 예술계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문화를 수단삼아 국론을 분열시키고 편향된 가치관을 조장하고 있어 문화융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순수문화예술 활동을 할 건전세력의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 3. 15. 경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 이외에도 문화예술계 左성향 세력 활동 실태 보고 등 국정원의 정보보고 문건은 일관되게 左성향 문화예술계가 정부보조금으로 문화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정부보조금 지원 등에서 배제를 시키고 건전문화세력과 협조하여 좌성향 문화예술계에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국정원 「문건」이후에도 左성향 문화예술계 배제라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보고가 반복되었다. 「문건」과 김기춘·김종덕 등의 블랙리스트 관련 1·2심 재판과정에서 증거 채택된 「시·도문화재단의 左편향 이탈 행태 시정 필요」, 「문예계 내 左성향 세력 재확산 시도 차단 건의」, 「문예계 내 左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등 BH에 수시로 보고된 국정원 정보보고 및 정무수석 소통비서관실 작성 「문제단체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에 기재된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8년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 언급된 좌파예술계 배제 기초와도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2) 블랙리스트 실행은 대통령-김기춘 비서실장-문체부-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단계마다 국정원은 정보보고나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성향을 검증하고 배제대상을 선별하여 왔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정보보고 등에 근거하여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성향이 다른 특정문화예술인·단체에 정부보조금 지원배제를 위해 보조금 TF를 운영하였다. 이 보조금 TF는 각 부처별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배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문화예술계의 보조금지원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문체부에 지시하였다. 문체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예술위 등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문화예술계 인물·단체의 성향 검증을 하였다. 인사검증은 교문수석실을 거쳐 정무수석실과 국정원에서 담당하였다. 국정원은 청와대에 좌편향 문화예술계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문체부-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어져 실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적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인물이나 단체의 정치적 성향 등을 검증하여 배제대상을 선별하는 등 블랙리스트 실행과 작동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 3) 2013. 9. 3. 청와대의 지시로 문체부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좌편향 대응책을 보고한다. 그리고 2013. 9.9. 김기춘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중복 세력의 의도이다, 연극 ‘개구리’는 용서가 안 돼라는 발언을 실수비에서 하였다. 2013. 9. 9.일 김기춘의 천안함과 개구리에 대한 발언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하자, 당일 문체부에서는 문화예술점검 TF를 구성하였다. 이 TF는 이후 문체부의 ‘건전콘텐츠활성화TF’로 전환되어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이행, 검토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였다.

**붙임 : [박근혜 정권의 좌파문화예술계 배제 문화융성 정책 입안 및 실행방안에 관한 직권조사]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특4 박근혜 정권의 좌파문화예술계 배제 문화융성 정책 입안 및 실행방안에 관한 직권조사(이하 ‘직권조사’)**

## 제1절 | 조사 개요

### 1. 직권조사의 취지

헌법이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문화기본법은 ‘개인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sup>1)</sup>으로 하고, 모든 국민은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문화를 향유 할 문화권’<sup>2)</sup>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집권 초반부터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조성」이라는 문화예술정책 기조를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보조금 신청과정에서 특정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이 문화예술계를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특정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배제’라는 기조를 가진 이유와 그 정책기조를 입안하고 실행한 주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경위 등을 조사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으로부터 배제를 당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문화 창작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조사사항

#### 가. 조사개시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3호(직권조사)에 따라, 2017년 12월 1일 제17차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권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 1) 문화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2)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나. 조사 사항

- (1)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의 작성 주체·작성 경위 등
- (2) 블랙리스트 실행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의 역할 및 체계
- (3) 정부수석실 주도 민간단체 보조금 TF 실태
- (4) 「문체부 주요 간부 인사 세평」과 블랙리스트 작동과의 연관성

## 3. 기초사실

### 가. 특별검사<sup>3)</sup> 수사

#### (1) 수사 기간

2016. 12. 21. ~ 2017. 2. 28.(70일)

#### (2) 수사내역

[표-1] 특검 수사내역

사건 번호 (중앙지검)	피고인	죄 명	기소일자	비고	
2016-3, 2017-3,8 (중앙 17-11436, 11437, 11438)	1 김종덕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 30.	각 구속	
	2 신동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3 정관주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2. 7.	4 구속 5 구속 6 불구속 (판사기각) 7 불구속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관한법률위반			
	4 김기춘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5 조윤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6 김상률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7 김소영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3)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경과 및 결과

- 특검 김기춘 등의 기소 사유를 정리해 보면 표와 같다.

#### [표-2] 특검 기소 사유

- 이 사건은 노태강 前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강요 등 문체부 관련 의혹에 대해 검토 하던 중,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착수하게 됨
-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들의 문화·예술 분야 책무와 권한에 착안하여, 문체부 차원을 넘어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확인함
- 시장 원리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문화·예술의 다양성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문예기금 등 국가 문화 보조금을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공급하고,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여 예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을 잃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임
- 나아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 공무원제를 붕괴시키면서까지 문체부 공무원들을 최순실 등 비선실세와 일부 편파적인 정파성향을 갖는 정치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등 본 건은 대통령 비서실 주도의 권력형 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4) 김기춘 등의 공소 사실 요지

김기춘 前 비서실장은 조윤선 정무수석, 김상률 교문수석, 김소영 문체비서관, 김종덕 문체부장관, 신동철 정무비서관, 정관주 소통비서관, 대통령, 최순실 등과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들에 지지의사를 표명한 문화예술계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로 순차 공모하여<sup>4)</sup>, 2013.4 ~ 2014. 5경 말까지 정무수석 주관하에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sup>5)</sup>를 운영하면서 정무수석실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여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하달함과 아울러 문체부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취합하여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정무수석실에 보내 지원 가능한 신청 건과 지원 배제할 명단을 하달 받아 지원 배제 리스트를 계속 축적

4) 우리 위원회 입수 자료, [별첨 4] 「특검7\_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5) 정무수석 소통비서관실 박OO 前 행정관 작성, [별첨 4] 참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의 지원 심사 결정에 부당 개입함으로써 예술위 책임 심의위원 후보 19명을 위원 선정에서 배제하는 한편, 예술위에서 해당 예술가들에 대한 공모사업 등 325건의 지원이 배제되도록 하고, 영진위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과 관련하여 8건의 지원이 배제되도록 함과 동시에 출판진흥원에서 22개 도서가 세종도서에서 선정 배제되도록 함으로서,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강요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관련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5) 선고 결과

김기춘 외 6인의 1·2심 선고 결과를 표로 정리해보면

[표-3] 김기춘 외 선고 결과

순번	성명	1심	2심
1	김기춘 (前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3년	징역 4년
2	조윤선(前문체부장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3	김상률(前교육문화수석)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4	김소영(前문체비서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5	김종덕(前문체부장관)	징역 2년	징역 2년
6	신동철(前정무비서관)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7	정관주(前문체부1차관)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 제2절 | 조사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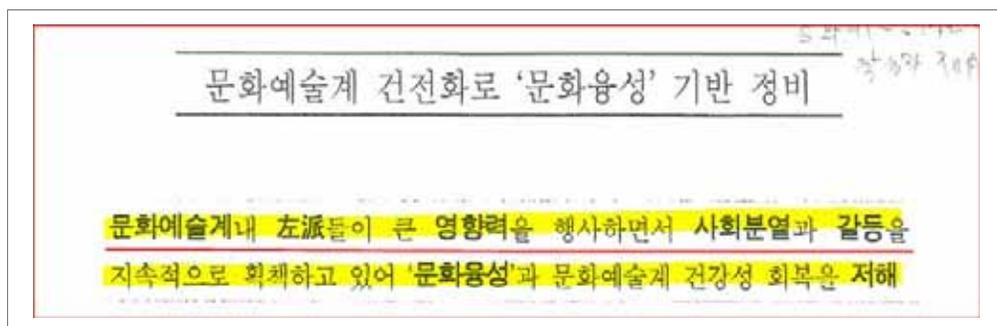
### 1. 자료 입수

#### 가. 참고 자료 입수

직권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기록관에서 입수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를 박근혜 정권의 특정 문화예술계 보조금 지원배제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조사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2017고합 공판기록 및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관 회의(이하 '실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대수비')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고 기초 자료로 활용 하였다. 또한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의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의 보도 자료를 입수 참고하고, 문체부 내부에서 발굴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관된 자료를 참고 하였다.

#### [그림-1]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동과정의 시발점으로 보이는 「문건」의 작성경위를 파악하고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동과 관련한 중요한 참고인들을 면담할 수 없어 입수된 자료를 분석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먼저 밝힌다. 조사와 관련하여 참고한 자료 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

[표-4] 주요 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입수처	입수일	비고 (생산일자)
1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대통령 기록관	2017. 9. 29.	국정원 작성 2013. 3. 15. VIP보고
2	문화융성 의미와 정책방향	문체부 기획행정담당관실	2017.12. 6.	문체부 작성 2013. 5. 28. 발표
3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국정원	2017. 11. 1.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
4	정호성 녹취록	형사소송기록	2017. 8. 17.	13.2.17. / 19.
5	문체단체조직 내역 및 관리방안	형사소송기록	2017. 8. 17.	2014. 5.경 국민소통 비서관실 박OO 작성

연번	자료명	입수처	입수일	비고 (생산일자)
6	이념 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 방안	문체부 예술과	2017. 9. 5.	2014. 2.경 조OO 前 예술정책과장 작성
7	시·도문화재단의 좌편향 일탈 행태 시정 필요	문체부 예술과	2017. 9. 5.	국정원 작성 정보보고
8	지자체 문예기금 실태조사 중간보고	문체부 예술과	2017. 9. 5.	문체부 예술국 2013. 12. 2.
9	2017노 2425/2424(병합) 형사소송 2심 증거 제출 실수비·대수비 회의자료 104매	김소영 前문체부비서관 변호인	2018. 1. 26.	국정기획비서관실
10	검찰 의견서	서울중앙지검		2017. 2. 7.
11	2017고합102, 2017고합77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2017. 8. 17.	2017. 7. 27.
12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문체부 감사관실	2017. 8. 30.	2017. 8. 24.
13	특검 김기춘외 3 공소장	특검	2017. 8. 17.	2017. 2. 7.
14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2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18. 1. 30.	2018. 1. 23.

## 2. 참고인 등 면담조사

### 가. 중요 참고인 면담

본 직권조사와 관련하여「문건」의 작성 경위 및 보고 문화예술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배제에 미친 영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진룡 前 장관 및 모철민 前 교문수석 등 15명을 면담 녹취 및 진술조서 작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문건」의 작성 경위와 작성 지시 관계에 중요한 국정원 직원을 파악하여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국정원원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면담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당시 청와대 근무 중요 참고인들도 면담을 할 수 없었다.

**[표-5] 주요 참고인 면담 내역**

연번	대상자	관계	일시 등
1	유진룡	前 문체부 장관 (2013. 3. 11 ~ 2014. 7. 16)	제1회 녹취록 (17. 11. 29.)
2	모철민	前 교문수석 (2013. 3. ~ 2014. 6. 12.)	제1회 녹취록 (17. 12. 27.)

연번	대상자	관계	일시 등
3	A	前 행정관 (2013. 3. ~ 2014. 10.) 담당 업무: 예술국	제1회 녹취록 (17. 12. 15.)
4	강OO	前 행정관 (2013. 3. ~ 2015. 12.) 담당 업무: 체육 및 기초실 (예산, 법률, 국회)	제1회 진술조서 (17. 12. 21.)
5	김OO	前 행정관 (2014. 3. ~ 2017. 1.) 담당 업무: 출판업무, 아시아문화추진단 등	제1회 진술조서 (18. 1. 3.)
6	B	前 예술정책관 (2015. 8 ~ 2016. 2)	제1회 진술조서 (18. 1. 5.)
7	김OO	前 예술정책관 (2013. 4. ~ 2014.11.)	제1회 녹취록 (18. 1. 11.)
8	박OO	前 예술국 사무관 (2014. 1. ~ 2015. 7.)	제1회 진술조서 (18. 1. 11.)
9	조OO	前 장관 보좌관 및 예술정책과장 (2013. 11. ~ 2014. 5.)	제1회 녹취록 (18. 1. 12.)
10	김OO	前 행정관 (예술정책과장 12. 3.~ 13. 5 / 정책기획관 13. 5. ~ 14. 10. / BH 행정관 14. 10. ~ 16. 1.)	제1회 녹취록 (18. 1. 12.)
11	황OO	前 창조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2014. 2. ~ 15. 1)	제1회 진술조서 (18. 1. 24.)
12	신OO	前 문체비서관실 행정관 (13. 3. ~ 17. 6.)	제1회 진술조서 (18. 1. 30.)
13	김OO	前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13. 5. ~ 11.), 예술정책관( 14. 11. ~ 15. 7)	제1회 진술조서 (18. 2. 9)
14	송수근	前 문체부 차관 (2014. 10. 기초실장, 2016. 12. 제1차관)	제1회 녹취록 (18. 2. 2.)
15	박준우	前 정무수석 (2013. 8. ~ 2014. 6.)	면담보고 (18. 2. 27.)
16	오OO	당시 예술국 사무관 (2012. 4. ~ 2016. 8.)	제 1회 녹취록 (2018. 4. 11.)

## 나. 주요 참고인 면담 확인 사실

- 1) 교문수석실 파견 문체부 직원들은 예술위, 출판 등 미디어, 기초실 등 분야별로 업무 분장을 하며 행정관끼리 수평적 업무 구조를 유지하여 문체비서관으로부터 본인의 업무 외에는 업무 관련 지시나 조언을 듣지 못한다고 하며, 또한 국정원 정보 보고도 본인의 업무 외에는 보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sup>6)</sup>
- 2) 모철민 교문수석은 국정원의 정보보고 중에 문체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영향을 미친

6) 우리 위원회, 「A, 강OO, 김OO, 김OO 면담 녹취록 및 진술조서」

사례로 2013. 9.경 정보 보고된 「시·도 문화재단 좌편향 일탈 행위 시정 필요」 문건을 거론하였다.7) 국정원의 정보 보고를 받은 김기춘은 문체부에 전국자치단체 문화재단 문예기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문체부와 예술위 직원들이 자치단체 문화재단 문예기금 부정사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여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8) 또한 9월경에 모철민은 김기춘으로부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어라’는 지시를 받아, 9. 30.경 대수비에 좌편향 문화예술계 대응방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9)

모철민 교문수석은 2013. 12.말경 수석회의 때에 김기춘이 “쏘부처 좌편향 지원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전부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또한 2014. 1.초에도 문화, 교육, 행안부, 복지 등 4개부처에 NGO들에 대해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2014. 3.말에도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4월초에도 정무수석 주도의 TF를 만들어서 전 부처 소관 정부보조금이 민간한테 지원된 것을 전수조사하고 그 중에 좌파단체에 지원된 것을 특별히 조사해서 대책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보조금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각 부처마다 과거 2년 동안 민간단체에 나간 보조금 전체 현황을 정무수석실로 제출했다고 진술하였다.10) 2014. 2.월에 국정원에서 온 보고서를 확인하고 “왜 이런 문제되는 단체에 자꾸만 돈이 나가게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다음에 영화 ‘변호인’ 관련해서 모태펀드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11)

모철민은 좌편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국정원이 가장 핵심이라고 하며, 국정원의 정보보고가 김기춘이 가진 소신과 국정에 대한 철학관이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12)

- 3) 김OO 예술국장은 “국정원의 정보보고가 있는 후 청와대의 지시로 예술국 직원들은 산하 예술위 직원들과 같이 전국 광역 자치단체 문화재단의 문예기금 관련 횡령 등의 실태를 전수 조사를 하여 2014. 2. 17.경 청와대에 「지역문화재단 예술지원 사

7) 우리 위원회, 「모철민 前 교문수석 통화결과 보고」 (2018. 1. 2.).

8) 우리 위원회 입수, 문체부 예술국 작성, 「문예6\_34\_지역문화예술지원 실태조사 보고서」

9) 우리 위원회, 「모철민 前 교문수석 면담 녹취록」 (2017. 12. 27.), 8쪽.

10) 우리 위원회, 「모철민 前 교문수석 녹취록」 (2017.12. 27.), 8~9쪽.

11) 상동, 10쪽.

12) 상동, 13쪽.

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였다.<sup>13)</sup> 2014. 5.월경 조현재 1차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리스트에 보수 인사인 하철경 한국예총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sup>14)</sup> 문체부의 ‘건전콘텐츠 활성화 TF’의 발족 계기는 ‘광주지역 좌파에게 뭘 줬다’는 국정원 보고서가 김기춘 실장을 거쳐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청와대로부터 받아 건전콘텐츠활성화 TF가 만들어졌다고 했다.<sup>15)</sup>

- 4) 문체부에서는 우수도서 선정 외에 김기춘이 연극 ‘개구리’, 영화 ‘변호인’ 등의 left향의 이념 논란을 거둬들이 지적하자, 조OO 당시 예술정책과장이 문체부 사업 전반에 걸쳐 이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이념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 방안」을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16)</sup> 참고인 김OO 또한 연극 ‘개구리’는 예술국에서 관리를 하던 것이었고, 조OO 당시 장관비서관이 회의 중에 “개구리 관련하여 어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장관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 하였다.<sup>17)</sup> 김기춘의 이념 논란 대책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로 건전콘텐츠 육성방안을 작성하여 보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sup>18)</sup> 또한 조현재 차관이 최OO 실장에게 ‘건전 콘텐츠 TF를 해라’ 라고 해서,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고 월요일 날 장관주재 주례회의를 하던 자리에서 관련된 실·국장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그것을 정리해 ‘이렇게 TF 활동했다’ 해서 보내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sup>19)</sup>
- 5) 김기춘 부임 이후 특정 문화예술계 보조금 지원 배제 등의 지시에 문체부에서는 건전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위한 TF 회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문수석실로 전달하였다. 김OO 당시 창조행정담당관은 이념논란의 계기가 된 연극 ‘개구리’에서 착안하여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개구리’라는 폴더를 만들었으며, ‘개구리’ 폴더에는 BH에 보고하기 위해 월 2~3번 TF 회의의 모든 자료 및 ‘건전문화 예술 육성 방안’ 과 ‘건전 문화예술계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등 문체부 내 문화예술계 이념 논란

13) 우리 위원회, 「김OO 前 예술국장 면담 녹취록」(2018 1.), 7쪽.

14) 상동, 34쪽.

15) 상동, 5쪽, 20~21쪽.

16) 우리 위원회, 「조OO 前 예술정책과장, 면담 녹취록」(2018. 1.12.), 4쪽, [별첨 4] 참조.

17) 우리 위원회, 「김OO, 前 정책기획관, 면담 녹취록」(2018. 1.), 5쪽.

18) 상동, 7쪽.

19) 상동, 8쪽.

- 사업의 대책방안 문서들을 작성하여 저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20)</sup>
- 6) BH 정무수석실 주도 민간보조금 TF에서 모든 정부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신청내역의 파악을 문체부에도 지시하였다. 이에 문체부 예술국에서는 OO 당시 사무관이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 전체를 표로 정리하고,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부서 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담당자 및 예산 프로그램 주무관은 디브레인(dBrain)<sup>21)</sup>에 등록된 문체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전체 현황을 정리해서 BH 교문수석실로 전달하였다고 하였다.<sup>22)</sup>
- 7) 김OO 前행정관은 출판계 관련 인물 검증을 ‘자신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특정 정치인 지지 혹은 성명서 발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23)</sup>
- 8) 박OO 당시 예술국 사무관은 조현재 문체부 1차관이 김소영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예술국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2014. 5. 29. 휴대폰으로 촬영 후 종이 리스트는 폐기하였으며, 기억하기로는 1매의 리스트였다고 진술하였다.<sup>24)</sup> 김OO 또한 최OO 실장을 통해, “이런 것 왔으니 앞으로 예산 심의 할 때, 지원할 때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당시에 조현재 차관으로부터 최OO 실장에게 지원 배제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지원배제 명단을 해당 실국장들한테 알려 주었는데, 조현재 1차관이 ‘그것 다 없애라’고 해서 다들 파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sup>25)</sup> 당시 교문수석실 A 행정관도 또한 조현재 차관에게 보냈다고 하는 리스트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sup>26)</sup>
- 9) 박OO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황OO 당시 창조행정담당관에게 보냈으며, 이를 받은 황OO 창조행정담당관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의 제목으로 종합 작성하여 보내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sup>27)</sup>

20) 우리 위원회, 「김OO 前 창조행정담당관 진술조서」(2018. 1. 18.), 4쪽.

21) 디지털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 정부 세입과 예산 편성·집행·평가 등 국가 재정 활동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분석할 때 쓴다. 44개 행정기관과 63개 외부 정보시스템에 연결돼 있다.

22) 우리 위원회, 「조OO 前 예술정책과장 면담 녹취록」, 17쪽. 「강OO 前 행정관 진술조서」, 7~8쪽.

23) 우리 위원회, 「김OO 前 행정관 진술조서」(2018. 1. 3.), 9~10쪽.

24) 우리 위원회, 「박OO 당시 예술국 사무관 진술조서」(2018. 1. 11.), 4쪽.

25) 우리 위원회, 「김OO 前 정책기획관, 면담 녹취록」(2018. 1. 12.), 19쪽.

26) 우리 위원회, 「A 前 교문수석실 행정관 면담 녹취록」(2017. 12. 15.) 65~66쪽.

27) 우리 위원회, 「박OO 당시 예술국 사무관 진술조서」(2018. 1. 11.), 7쪽.

- 10) 황OO 당시 창조행정담당관은 국장급이 참석하는 건전콘텐츠 활성화 TF가 구성 된 것은 2014. 5~6월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sup>28)</sup> 건전TF의 회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 등에 전달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2014. 10월경 문화예술 일반, 도서 및 문학, 영화, 해외문화원 분야별로 세부대응 방안으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이란 문서를 작성하여 교문수석실 전달하고, 기조실장을 거쳐 장관에게 보고되었다고 진술하였다.<sup>29)</sup> 참고인 송OO도 당시 건전 콘텐츠 TF 회의의 결과를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하였으며, 장관은 비서실장이 좋아하였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sup>30)</sup> 황OO은 자신이 장관 비서관을 한 시기에 장관실로 전달되는 국정원의 정보보고를 간혹 볼 기회가 있었는데 보고서의 내용을 사실 확인해서 보고를 해야 하기에 국정원의 정보보고가 문체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하였다.<sup>31)</sup>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해서는 연극 ‘개구리’가 시발점이며, 세월호 참사 이후 증폭 되었다고 진술하였다.<sup>32)</sup>
- 11) 2014. 2. 18.경 「미래한국」이란 잡지에서 ‘反미 반대한국 서적이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김기춘이 보고받고는 이념논란의 도서가 우수도서로 선정된 것에 관하여 대책방안과 담당 국·과장, 출판진흥원 이재호 원장 등의 파면과 징계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sup>33)</sup> 청와대가 左편향 우수도서 선정과 관련한 대책방안을 지시하자 문체부는 출판과 이OO 사무관에게 ‘우수도서 선정 개선 방향 보고’를 작성토록 하여 교문수석실을 거쳐 김기춘에게 보고하였다.
- 12) 당시 예술국 사무관인 오OO에 따르면, 예술위원회 2015년 사업 공모가 2014년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므로 11월경에 지원대상자 명단을 청와대에 보내면 청와대에서 ‘누구누구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다고 진술하였다.<sup>34)</sup> 오OO은 국정원에 인물 검증을 하게 된 것은 김OO 국장이 ‘국정원에 명단을 보내줘라’고 지시해서 명단을 보냈고, 그 이후로도 청와대에서도 ‘국정원에 확인해 보라’, ‘국정원을 거쳐서 오라.’라고 지시했다고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sup>35)</sup> 김OO 당시 행정

28) 우리 위원회, 「황OO 前 창조행정담당관 진술조서」 (2018. 1. 24.), 9쪽.

29) 상동, 5쪽.

30) 우리 위원회, 「송OO 前 기조실장, 면담 녹취록」, (18. 2. 2), 22쪽.

31) 상동, 15쪽.

32) 상동, 16쪽.

33) 우리 위원회, 「유진룡 前 문체부 장관 면담 녹취록」 (2017. 12. 6.), 11쪽.

34) 우리 위원회, 참고인 「오OO 당시 예술국 사무관, 면담 녹취록」 (2018. 4. 2.), 21쪽.

관은 검증과정 관련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예술위에서 신청을 받아 문체부에 보고를 하면 문체부에서 2주에 한번 올 때 갖고 오던지 이메일로 보내오든지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다시 김소영 비서관 통해서 정무수석실로 넘겨주면 거기서 넘어오면 또 다시 전달해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라고 하며,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문체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유선으로 통보하고 하는 일은 대부분 오OO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국정원 검증과 관련하여서는 ‘문체부에서 하는 것을 국정원에서도 한번 스크린해서 문제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회의를 하면서 전달했던 것 같다’고 하며, ‘앞으로 할 때 국정원에게 이런 데서 다른 소리, 이런 지적 나오지 않게 해라.’라는 취지로 문체비서관이 문체부에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36)</sup>

13) B는 위원회 면담에서, “블랙리스트 지원배제의 기준으로 문재인 지지·박원순 지지·세월호 서명 문화예술인 등을 일반적 기준으로 놓고 스크린하라는 지시를 위에서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sup>37)</sup>

14) 송OO은 위원회 면담에서, “국정원이 좌익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해 준다고 우리는 알고 있으며, 우리가 배제할 근거도 없다. 그걸 갖다가, 국정원에 명단을 주어 그쪽에서 왼쪽이나? 한번 걸러서 주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TF에서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실국에서는 오OO이 국정원의 조OO에게 주어 인물 검증의 의견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sup>38)</sup>

35) 상동, 33쪽.

36) 우리 위원회, 「김OO, 前 정책기획관, 면담 녹취록」(2018. 1. 12.), 35 ~ 36쪽.

37) 우리 위원회, 「B 前 예술정책관, 면담 녹취록」, (2018. 1. 5.), 3쪽.

38) 우리 위원회, 「송OO, 前 기초실장, 면담 녹취록」(2018. 2. 23.), 61쪽.

### 제3절 | 조사 내용

## 1.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의 작성 경위 및 주체

### 가. ‘문화융성’의 출처

박근혜 정권의 국정기조로 된 ‘문화융성’의 개념과 출처를 확인한 결과, 문화융성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3. 2. 17. / 2. 19.일자 정호성 녹취록이다.<sup>39)</sup>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기 위해 박근혜, 최순실, 정호성이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 하던 중 문화 부흥을 통해 문예부흥의 르네상스를 맞이하자는 등의 이야기 속에 ‘문화융성’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거론하였다. 박근혜는 자신의 대통령 취임사 준비 과정에 거론된 ‘문화융성’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취임사에서 아래 표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 [표-6] 2013. 2. 25. 박근혜 취임사 中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한류 문화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고, 국민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5천 년 유·무형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해 국민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 되는 문화, 인류평화 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 2013. 2. 25. <박근혜 취임사 중> -

39) 서울지방법원, 「2017고합102 형사소송 증거서류, [정호성 녹취서]」 (2013. 2. 17. / 2. 19.)

박근혜 前 대통령은 본인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국정기조의 하나로 삼은 ‘문화융성’에 대해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부임한 다음날 ‘문화융성이 어떤 뜻인지를 해석을 해서 국무위원 전원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유진룡 前 장관은 문체부 간부들과 같이 문화융성의 의미를 논의하여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만한 그러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정말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 문화예술의 번영을 넘어서서 문화의 가치가 우리 국가, 사회 기본 가치의 근간이 되고, 그것이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개인의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가치로 승화되는 것”이 ‘문화융성’의 개념이라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40)</sup> 이후 문체부에서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주무 부서로서 ‘문화예술의 번영을 넘어서서 문화의 가치가 우리 국가, 사회 기본 가치의 근간이 되고, 그것이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개인의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가치로 승화되는 것’으로서 ‘문화융성’의 의미를 정립하여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였다.<sup>41)</sup>

#### 나. 「문건」의 출처 및 작성경위

「문건」의 작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서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 모철민 前교문수석 등을 면담하였으나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문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좌편향’이란 단어 및 문화예술계와 관련한 단체 사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국정원에 의뢰한 결과, 「문건」의 작성경위는 알 수 없으나 국정원에서 작성하여 2013. 3. 15.에 박근혜 前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비서실장·민정·정무·교문수석에게 배포되었다’고 회신 하였다.<sup>42)</sup>

국정원에서 작성되어 2013. 3. 15.일 박근혜에게 보고되고 당시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교문수석에게 배포된 「문건」앞부분에는 [문화 예술계내 좌파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분열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어 ‘문화융성’과 문화예술계 건강성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문서의 요지는 박근혜 정권의 문화융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문화예술계 기반을 조성하여 좌파문화예술계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40) 우리 위원회, 「유진룡 前 문체부 장관 면담 녹취록」, (17. 11. 29.), 6쪽.

41) 우리 위원회 입수 자료, 문체부 발표, ‘문화융성’의 의미와 정책방향. 37매.

42) 국가정보원 회신공문, 2018. 1. 4.

또한 ‘문화 예술계내 좌파들이 그동안 정부보조금의 편중 지원과 각종 특혜를 받아 문화 권력을 형성하고, 이념 확산을 위해 문화를 수단 삼아 국론을 분열시키고 편향된 가치관을 조장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sup>43)</sup>

국정원의 회신 결과를 받아 1회 면담에서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모철민 前 교문수석에게 유선 통화하여 국정원의 회신결과를 알려주며 문서의 열람 및 정책 반영 등을 재차 확인한 결과, “문서 배포선이 그러하다면 자신이 보았을 것이나 기억에 없으며, 정권초기에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문건」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반영되었으면 기억을 할 텐데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하였다.<sup>44)</sup>

#### 다. 「문건」의 내용

「문건」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 예술계내에서 좌파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분열과 갈등을 획책하고 있어 박근혜 정권의 ‘문화융성’과 문화예술계 건강성 회복을 저해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좌파들은 김대중 정부이후 10년간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예술위·영진위·한예종 등 제도권 문화계를 장악하여 문화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문건에서는 문화계 좌파들은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장악하여 순수 창작활동 보다는 맹목적 정책비판 등 정치투쟁에 치중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좌파 문화예술인들은 기득권 유지 및 이념 확산으로 문화를 수단삼아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들 좌파들이 문화 권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어 박근혜 정권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에 걸림돌이 된다고 제언하고 있다.

문서의 3쪽을 보면, 문화예술계를 문화예술, 영화, 연예계 등으로 구분하고, 다시 민예총 등 9개 단체를 적시하며 이들 단체를 대표적인 좌성향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대표자와 단체의 구성인원 현황 및 평소 사찰을 통해서만 확인 할 수 있는 단체의 주요 활동 등을 적시하고 있으며, 또한 보고서에서는 이들 단체들이 정부 비판적인 활동으로 주로 하여 단체의 조직 단합을 꾀하고 있으며, 단체들이 반미·반정부 투쟁 등을 통해 반정부 사상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좌성향 인물들이 문화예술계의 헤게모니를

43) [별첨 1] 참조.

44) 우리 위원회, 「모철민 前 교문수석 전화통화 결과보고」, (2018. 1. 2.)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에 걸림돌이 되므로 정부 보조금 지원 등에서 **左성향 문화예술계를 배제**하고, 건전한 문화세력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계의 건전화를 도모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 라. 「문건」과 주요 문서와의 관련성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최초의 문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2013. 3. 15. 경 청와대에 보고된 이후에도 국정원은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계에 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들 문서와 「문건」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연관성 있는지 여부 및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국정원 개혁위의 적폐청산 TF의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sup>45)</sup> 발표된 문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2013. 8. 5.일 김기춘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부임한 후, 국정원에서는 2013. 8. 16. 「문화예술계 **左성향 세력 활동 실태**」<sup>46)</sup>라는 제목의 정보보고를 하였다. 이 문서에는 ‘MB 정부에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건전인사 보임·**左편향** 단체 보조금 지원 중단 등 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척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념의 온상인 되어온 문예계 정상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左성향** 단체·인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뿌리 뽑아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MB정부 시절에도 정권비판적 인사나 단체에 대하여 문체부 소관 기관장 선임이나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가 있었으나 척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2013. 8. 27.일 국정원에서는 「CJ의 **左편향** 문화사업 확장 및 인물 영입 여론」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였다. 이 문서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보면, CJ그룹 계열사 CJ E&M 제작한 영화를 나열 거론하며 이들 영화가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입하고 있으며, 중복세력을 친근한 이미지로 오도하고 있다거나,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사회저항을 부추긴다고 지적하거나, 좌파 영화감독이 대통령을 폄훼하거나 풍자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비판 시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CJ 좌경화의 가장 큰 원인은 親盧의 대모 역할을 해 온 이미경 부회장이 회사의 **左성향** 활동을 묵인·지원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 정체성 훼손 등 정부에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CJ측에 시정을 강력 경고하고, 과도한 사업 확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 하고 있다.<sup>47)</sup>

45) 국정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2017. 10. 30.).

46) 국정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2017. 10. 30.) 1쪽.

47) 상동, 8쪽.

2013. 9. 26.경 국정원에서는 「시·도문화재단의 좌편향 일탈 행태 시정 필요」<sup>48)</sup>라는 제목의 정보보고를 하였다. 이 문서의 서언에서는 ‘광역지자체 산하 문화재단(12)들이 △지자체장 정실 인사 △이념 편향적 사업 치중 △예산 졸속 집행 등 불공정 운영되고 있어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문서에서는 인사권 오남용을 지적하는 것 외에도 정치성향에 부합하거나 이념편향적인 인물들도 문화재단의 이사진을 구성하여 주요 사업들이 좌쥘림 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송영길 인천 시장 및 서울, 광주 등 야권 출신 광역단체장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문화재단에 임명한 이사들의 출신 및 사업에 대해서 좌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야권출신의 광역단체장이 임명하여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좌편향 사업과 운영은 지역사회에 이념의 오염은 물론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의 성공적인 추진에 걸림돌이 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서의 말미에는 건전 언론과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이념 편향 사업 및 인물에 대한 행태를 알려 국민 공분(公憤)을 조성하는 등의 경각심 고취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2013. 10. 2.경 국정원은 「문예계內 좌성향 再확산 시도 차단 건의」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제언은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로 구분하여 공공분야에는 철저한 신원검증으로 좌성향 인물의 침투 차단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첫째, 문체부 산하 예술위 등 공공기관장 성향 및 좌성향 문예인 지원여부 등을 점검, 임기만료 등 계기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체 인물 배제, 국립극단·발레단 등 국립단체가 먼저 이념·정치편향 작품 필터링을 위한 사전 공모제 확대 및 심사기준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좌성향 단체 자금줄 차단 등 ‘철저한 고립·枯死’ 유도를 제언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좌성향 단체·인물에 대해서는 정부 공동사업·공모작 선정 배제 등 보조금·운영자금 중간 원칙 기조를 확대, 자금줄 차단 -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회계감사 등을 통해 횡령·유용 등을 면밀 조사, 퇴출

둘째, 좌성향 문예인들의 이념·정치적 활동 실제 및 피해를 집중 부각, 문예계의 좌편향성에 무감각해진 국민의식 바로잡기 노력 배가,

셋째, 건전단체를 활용 젊고 활동력 있는 건전 문예인 양성을 위한 ‘문예 아카데미’ 운영 등 좌성향 세력 대응력 강화도 병행”을 제언하고 있다.

48) 문체부 예술국 입수 자료, 「문예6\_8\_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 일탈 행태 시정 필요」.

3) 2014. 1. 27. 국정원은 「문예기금 운용기관의 보조금 지원기준 보완 필요의견」라는 제목의 정보보고서를 청와대에 하였다. 이 문서가 제언하는 요지는 “좌파단체·인물이 문예진흥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문제”라고 거론하면서 구체적으로 ‘민족미학’ 대표(조성래)는 노무현 재단 고문 및 민변 소속 변호사로 각종시국선언에 참여하였으나 학술지 ‘민족미학’ 발간사업이 문화진흥기금의 계속사업에 포함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념 편향성 연극으로 물의를 빚은 극단 ‘해화동 일 번지’,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등이 문화진흥기금에 재선정된 것을 지적하고, ‘작가회의’ 소속으로 밀양 송전탑·해군기지 반대 등 정부를 비판해온 고명철·박몽구·신용목 등도 집필 활동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보보고서에서는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에서 좌파 문화예술단체 및 인물들이 계속 지원 사업을 받는 이유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모선정 심의회에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정원에서는 동년 하반기 심사부터는 이러한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건의하고 있다. 심의위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술계 공모심사 체계를 심의회 추천(1.2배수) 하고, 이사회승인(2차)으로 전환하여 이사회에서 작품을 최종 선정토록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심의위원 임명 시 과거 활동 경력은 물론 이념 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건전 예술인사 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4) 2014. 3. 19. 국정원은 「문예계內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이란 제목의 청와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문서를 보면, 좌성향 문화예술계 대표자 경력·활동(정부비판 작품 저술·시국선언·야권 인사지지 등) 등에 따라 소위 ‘문화예술계 주요 좌성향 문제 단체 15개, 인물 249명을 A·B·C 등급으로 열거·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근절 미흡 원인을 분석’하고, 문예 기금 선정기관에 좌성향 인물 배제, 정부보조금 지원중단을 통한 자금줄 차단 등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5) 문건과 이후 일련의 국정원 정보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와대 및 문체부가 제도 및 정책, 또는 소속기관 등을 이용하여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문화예술인을 차별 배제하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의 前 정부 특정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자료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그림과 같다.

## [그림-2]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보고서

<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現況 및 고려사항' 보고서(2014.3.19) 주요 내용 >

- 문예계의 좌성향 세력 근절 미흡 원인으로
  - √ 문예계의 근본적 사회 비판성
  - √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자금줄 마련
  - √ 보조금 확보 목적으로 단체명 변경 및 신규 단체 설립으로 좌 이미지 감추기 시도
  - √ 한예중 좌성향 교수들의 이념 편향적 교육 등을 지적하고
- 분야별 단체·인물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
  - √ 문체부는
    - 예술위 등 문예기금 지원기관을 포함한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주요보직에 좌성향 인물이 배치되지 않도록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며, 특히 예술위·영진위 등 자금지원 기관에 잔존하는 좌성향 실무진 청산 병행
    - 문제단체·인물에 대한 기사 등을 통해 비리·부조리 관련 증거를 확보해 자발적 사임을 유도하고, 임기만료시 연임 차단
    - 한예중의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에 연구실적 등이 부진한 교수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 이념 편향적 교수 퇴출방안 확보
  - √ 민간단체의 경우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대북언동을 일삼는 싸구려 좌파는 철저히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시켜 고립·고사시키고 중도성향 세력은 적극 포용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

언론·인터넷을 통한 좌성향 문예인들의 이념·정치적 활동에 대한 비판 여론을 집중 부각, 국민적 거부감 확산 및 순수예술 지향 풍토 조성

좌성향 문예계에 대항할 수 있는 건전문예단체(차세대 문화인연대 등) 중심으로 각종 자금을 배정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이 우파 전향 유도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결과에는, '당시 위 업무를 보고 받은 국정원 지휘부가 호평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49)</sup>

49) 국정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2017. 10. 30.), 5쪽.

## 2.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한 사항

### 가. 실수비·대수비에서의 블랙리스트 관련 발언사항

1) 블랙리스트 작동과 관련하여 본 직권조사에서는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사건 2017노2425, 2017노2429병합 사건(김기춘, 조윤선 등 직권남용 등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의 증거자료로 채택된 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비서실장주재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회의결과 자료를 입수하였다. 위원회에서 입수한 실수비·대수비 회의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청와대의 논의 사항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실수비등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박근혜와 김기춘의 지시·발언 내용을 요약 발췌·정리하여 보면 표와 같다.

[표-7] 위원회 입수 실수비·대수비 회의 주요 내용 발췌

일시	내용
2013. 8. 21.	(실수비) 김기춘, 중복세력이 15년간 문화계를 장악했다고 지적
2013. 9. 9.	(실수비) 김기춘, 천안함 메가박스 상영은 중복 세력의 의도이다 (대수비) 박근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 문제가 많다고 지적 ④ 좌편향 문화예술계 대응 • 국립극단의 일부 정치 편향적 작품 제작,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이념성 사업 지원과 부실 운영 등 지속적 논란 행태에 대한 대책 마련·실시
2013. 9. 30.	① 국공립단체는 국민고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작품을 우선제작 ② 간접지원 및 책임심의제도를 강화, 좌편향 작품은 지원 배제 ③ 9. 30일부터 문체부에 감사반을 구성, 지역문화재단 등에 대한 서면·현장 감사 (~11. 20) 실시 후 제도 개선 추진(12월) 등 ④ 민간지원 개선을 위해 민간 투자자 등에 협조당부 ⑤ 보수적 시민운동 단체 등 대안 단체 육성
2013. 12. 18.	김기춘, 문화계 권력을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 '변호인' 영화에 문체부가 투자한 것에 대해 질책, CJ 제재 방안 지시 (비서실장 지시사항)
2013. 12. 20.	각 부처가 반국가적, 반체제적 경향을 보이는 단체나 기관의 행사/사업에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이는 바, 이는 잘못된 것임 - 각 수석은 관련 부처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정토록 할 것 (비서실장 지시사항)
2014. 1. 3.	문체부, 안행부, 교육부, 고용부 등 산하에 많은 NGO를 지니고 있는 부처들은 그동안 재정지원 해 온 산하 NGO들에 대해 단체 성격, 단체대표 성향, 단체 수행사업 등에 대해 조심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 국고지원을 지속할지 여부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찾을 것

일시	내용
2014. 3. 27.	<p>(비서실장 지시사항)</p> <p>각 부처가 산하 단체·기관에 정부 보조금 지원시 해당 단체·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과거 불법집회나 시위에 가담 여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 여부, 이러한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 유무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한 지침(기재부)이 마련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가 이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조금 지원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함.</li> <li>- 검경은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처벌의 경중에 관계없이 기록으로 남겨 각 부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정무수석은 조속히 관련 수석실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li> </ul> <p>* (예시) 전 부처가 산하 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기관 명단 일체를 검경에 제공. 모든 단체 기관에 대한 사법조치 이력이 등재되어 있는 시스템 구축 등</p>
2014. 3. 28.	<p>(비서실장 지시사항)</p> <p>고위직을 포함한 전 공직자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향가치에 대해 철저하게 인식하고 무장되어 있어야 하며, 부처업무 수행에 이러한 국정철학과 지향 가치를 양보·포기하거나 훼손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됨. 또한 정치권 등과 주고받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예로 민간단체·기관에 국가보조금 절차를 담은 ‘2014년도 예산·기금 집행지침’의 경우 국가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대상에 종전에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로 서술되어 있었으나</li> <li>* 금년 지침에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한 단체’로 한정하고 ‘적극 참여한 단체’ 부분은 삭제되어 있는바, 이는 지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현재 경위 파악 중)</li> </ul>
2014. 6. 7.	<p>2014 우수도서(공감도서) 선정 방식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념 편향 도서 선정 방식을 위한 심사체계 개편, 학술분야(6월) 문학·교양 분야(12월) 도서 선정('14년 152억원)</li> <li>* ▲ (심사분과위원장) 위원 중 호선 → 문체부(출판문화진흥원장) 지정 ▲ (선정절차) 선정위원회를 신설(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에서 1.5배 추천한 도서 중 최종 우수 도서 선정</li> </ul>
2014. 8. 8.	<p>오늘부터 국민세금 37억 원(국비 21억 원과 시비 16억 원)을 지원하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 행사(8. 8 ~ 11. 9)와 관련하여, 광주시가 소위 걸개그림 작가 홍성담의 ‘세월오월’(VIP 풍자그림)이 전시하기에 부적절한 작품이라고 판단, 작품설치를 불허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도 국민혈세의 낭비를 방지하고 광주비엔날레 권위 유지를 위해서도 예술을 빙자한 저급한 정치성 작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동 작품이 전시 금지(광주시 조치)는 물론이고 문체부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국비지원을 재고 또는 축소하겠다는 뜻을 광주비엔날레 주최 측에 경고해 두어야 할 것임(교문수석)</li> </ul>
2014. 8. 22.	<p>③ 독립·예술영화 제작 및 유통 지원 체계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정책성 훼손 독립영화 제작 및 유통(전용상영관)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li> <li>• ▲ 지원심사위원 풀 개편(770여명→200여명 이하, 문제인사 배제하고 상업영화 인사</li> </ul>

일시	내용
	비중 확대) ▲ 문제 영화 상영 독립·예술영화관 지원배제(심사절차 강화: 영진위 2차 심사 도입) ▲ 독립예술영화 상영 지원 사업에 경쟁체제 도입(일반상영관까지 지원대상 확대) ▲ 건전애국영화 제작지원(영화발전기금 50억원, 연내)
2014. 8. 23.	(비서실장 지시사항) 각 부처마다 산하기관, 단체가 많이 있는데 일부기관, 단체의 경우 정부 철학과 배치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얼마 전 광주비엔날레 걸개그림 전시사례도 그렇고 최근 태권도 총재가 통일부의 사전 접촉 승인 없이 북측 인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도 같은 사례 - 이러한 기관 단체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수단은 정부가 행사 할 수 있는 인사권과 예산권이므로 앞으로 보조금 축소·중단 등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전 수석)
2014. 9. 10.	㉓ 오는 10월 부산국제영화제(10.2.-10.11) 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용관)가 지난 5월 팽목항에서 인명구조에 유용하다고 사기 치며 업무 방해한 “다이빙벨” 소유 회사 대표(이종인)와 이상호 기자, 이를 부추기며 잘못 보도한 JTBC 손석희 사장 등이 고발을 당하고 또한 지난 8월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JTBC 뉴스9의 다이빙벨 보도에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그 다이빙벨에 관한 다큐멘터리(다이빙벨, 이상호 공동제작)를 상영하여 한다고 함. - 동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문체부장관, 문화융성위 등에서 상영을 하지 말도록 부산시장과 조직위원회에 통보 하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것(정무수석, 교문수석)
2014. 9. 11.	□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㉑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총리 직속, 부처 산하로 수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지자체 밑에도 많은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위원회 위원의 선별과 선정에 문제점이 많음. - 예를 들어 다이빙벨 상영을 결정한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동 영화조직위원장(이용관)을 비롯하여 영화제 선정위원회 위원(총7명)중 홍효숙(DJ정부 때 임명, 조직위 사무차장 역임한 터줏대감, 2000년대 안티조선 선언 동참), 남동철 위원(전 시네21 편집장, 2008년 조직위 마켓실장) 등 이념 편향적 인물이 다수 포진하고 있음. - 이러한 이념 편향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만큼 각 위원회 現 위원들에 대한 재검증과 향후 위원 교체 시 및 신임위원 선정 시에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할 것(수수석)
2014. 10. 2.	㉓ 그동안 정무수석, 교문수석 및 관련부처에서 광주 비엔날레에서의 홍성담 그림 전시 차단, 파주북소리 축제에서의 월북작가 홍명희 문학제 개최 차단,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다이빙벨 영화 상영 차단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온 결과, 실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음 - 앞으로도 문화영화예술 분야에서의 이념 편향적인 행태를 방관·좌시해서는 안 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정무수석, 교문수석)
2014. 10. 31.	(비서실장 지시사항) 국회에서 15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12.2)되면 내년 초부터 각 부처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청-산정-보조금 지급 등) 각 부처로 하여금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급 시 타성적 관성적으로 전년에 준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급 대상자·기관의 성격, 보조금 용도 등을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일시	내용
	지원하도록 할 것 * 통념상 국민세금 지원이 부적절한 대상자·단체에 국고보조금이 함부로 지원되어서는 안 됨 - 특히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자 엄선, 국고보조금의 누수 없는 효율적 사용 문제에 대해 각 부처 장차관이 실무진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직접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독려할 것(각 수석들이 소관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유선 통화하여 강조해 줄 것)(전 수석)
2014. 12. 12.	③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지원체계 개선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문체부 지원 16개소)의 이념편향 영화 상영방지 및 사업 전환) 추진 - ▲ 영상물 상영 지원 사업 작품 선정 절차 개선(전국미디어 센터협회→정부선정), ▲ 센터 예산지원 사업(교육프로그램 및 장비구축)을 문제영화 상영 여부와 연계, ▲ 영상물 상영 지원 사업 폐지 → 영상미디어 교육(개인 영상 제작법) 중심으로 전환(16년) * 다이빙벨을 상영한 성남·고양미디어센터의 경우, 15년 지원배제
2014. 12. 28.	- 영화제작 지원을 위한 투자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건전 애국영화가 널리 제작, 상영되도록 투자자금 지원, 제작자 격려, 시사회 참여, 영화 관람 권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교문수석, 경제수석)
2015. 3. 25.	(비서실장 지시사항 중심) 현재 다양한 형태의 민간단체(NGO)에 많은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상당부분이 중복 좌파세력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고 하는 바, 민정수석, 정무수석, 교문수석은 실제 현 상황이 어떠한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문화관련 단체지원)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스크린해 볼 것. 다만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로키 차분히 진행할 것 (민정수석, 정무수석, 교문수석)
2015. 5. 15.	(비서실장 지시사항 중심) 지난 월요일 '중앙부처 산하단체 재정지원 등에 총 점검 지시의 점검 대상 범위와 관련 각 부처가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 민간단체(NGO)를 대상으로 점검해 줄 것(전 수석)
2015. 7. 27.	(비서실장 지시사항 중심) 금번 추경 예산 중 문체부 소관 예산으로 예술계 비판 단체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단체의 활동내용, 성향 등을 분석한 후 지원여부 결정토록 할 것(교문수석)

2) 실수비 회의결과에 나타난 블랙리스트 지적 외에도 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 등에서 드러나는 김기춘 등의 발언을 추가 보완하여 보면, 김기춘은 2013. 9.경 특정 성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마련 지시를 하였다. 2013. 12. 10.일 '문화예술, 미디어 부분에 左派가 많다. 공직 내부에도 문제가 있는 인물이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고 언급하는 등 문화예술계에 左편향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하였다. 2014. 2. 21.일에 문체부로부터 예술위 사업 '2014 문예진흥기금 지원 대상'을 보고 받으며, "문체부 예산과 기금이 좌파세력에 흘러들어가고 있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만큼 국정원과

협의해 정체성을 검증하라”고 지시를 하였다.<sup>50)</sup> 위원회 참고인 A는 블랙리스트 실행에서 김기춘과 관련하여, ‘좌파 진보쪽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이런류의 것을 굉장히 여러 번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기억 날 정도로 굉장히 여러 차례 여러 맥락으로 전달되어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sup>51)</sup>

## 나. 블랙리스트 계기 관련 주요 사건

### (1) 연극 ‘개구리’

당시 국립극단에서는 2013. 9. 3. ~ 9. 15.까지 연극 ‘개구리’를 기획 공연하였다. 연극 ‘개구리’의 줄거리는 ‘주인공(신부, 동자승)이 부조리한 현실을 구원할 그분을 찾기 위해 저승으로 떠나나, 그분은 본인 대신 저승에 있는 동자승의 어머니를 이승으로 보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내용상에서 풍자가 핵심인 그리스 희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현 세태를 풍자하는 과정에서 ‘그분(노무현 前대통령 상징)과 카멜레온(박정희 前대통령 상징)’의 대화를 통해 ‘그분’을 미화, ‘카멜레온’을 비하적으로 묘사하고,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기말고사 컨닝’으로 풍자하고, 윤창중 前대변인 스캔들을 풍자한 연극이었다. 연극 개구리를 관람한 당시 장관 보좌관인 조OO는 연극을 관람을 하던 중 ‘저거 분명히 문제 삼을 텐데, 누군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유진룡 장관에게 문자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52)</sup>

연극 ‘개구리’와 관련하여 모철민은, ‘언론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을 여기에 대비시켰다 했다. 그리고 또 박대통령 부녀를 상당히 폄하했다. 공연이 되고 나서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기사들이 계속 많이 나왔다. 그래서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확인을 해보라고 하였다’고 하며, 또한 ‘국립극장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희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국민소통이라든가 화합 이런 쪽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대수비 회의에 보고를 드렸다’고 진술하였다.<sup>53)</sup>

당시 예술국장인 김OO은 위원회 면담에서, “개구리가 공연되고 있는 시점에 중앙일보의 최OO 기자가, ‘정부예산으로 이렇게 하면 되나?’ 하였으며, 예술국 소속 과장이 와

50) 국정원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2017. 10. 30.), 4쪽.

51) 우리 위원회, 「A 前 교문수석실 행정관」(2017.12. 15.), 67쪽.

52) 우리 위원회, 참고인 「조OO 면담 녹취록」(2018. 1. 12.), 11쪽.

53) 우리 위원회, 모철민 前교문수석 면담 녹취록, (2017. 11. 29.) 44~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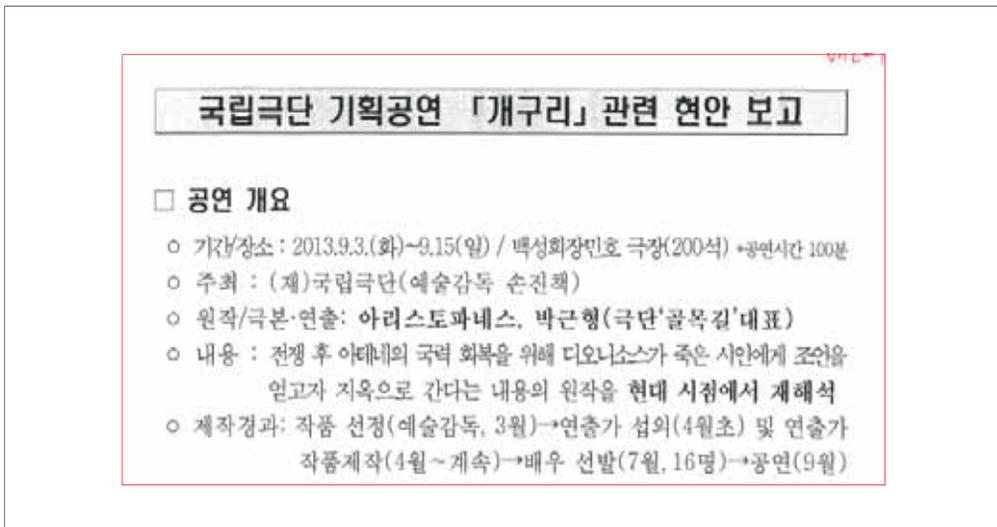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기리기리 합니다.’라고 하여, 자신은 연극을 보지 못했는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sup>54)</sup>

당시 공연전통예술과장인 김OO은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를 작성하여 김OO 예술국장, 조현재 차관, 유진룡 장관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를 하고 청와대 A 행정관에게도 직접 보냈다고 하였다.<sup>55)</sup>

당시 예술국 사무관 오OO도 연극 ‘개구리’가 블랙리스트의 제일 큰 시발점 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sup>56)</sup>

이 보고서에 기재된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현재 공연 중인 작품에 대한 추가 조치 요구(수정 등)는 창작의 자유 침해논란, 연극계 및 관객(예약자 등의 반발 등 불필요한 논란 초래 가능,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조치 - 아리스토파네스 시리즈 2차 작품(구름: 윤창중 前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추문 등 패러디 내용 포함. 9.24~10.5) 등 2013년 국립극단 후속작품에 정치적 소재의 내용은 배제토록 조치(국립극단) - 全 국립예술단체 주관 공연에는 정치편향의 내용은 배제토록 노력 협조요청 - 現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은 교체 추진(임기:2013. 11.8.)’이다.

### [그림-3]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54) 우리 위원회, 참고인 「김OO 면담 녹취록」(2018. 1. 12.), 4쪽.

55) 우리 위원회, 사건번호 2017직공5 「(재)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실행사건」, 참고인 김OO 진술조서 (2018. 1. 12.), 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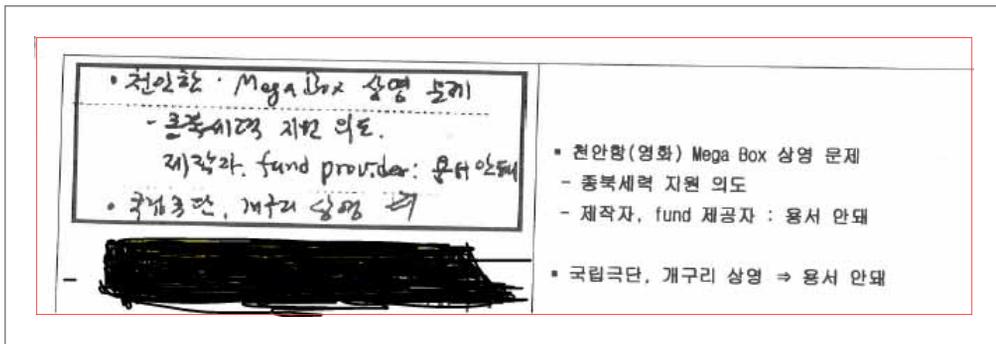
56) 우리 위원회, 참고인 「오OO 면담 녹취록」(2018. 4. 2.), 8쪽.

예술감독 손진책의 사임과 관련하여 참고인 김OO은 손진책 감독이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사임이라고 기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sup>57)</sup>

당시 예술정책국장인 김OO은 ‘손진책 감독의 임기가 12월인가 1월인데 자르지 않고 연임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사임이라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 등에 보고 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sup>58)</sup>

연극 ‘개구리’ 공연과 관련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을 보면 ‘개구리’의 내용 중에 박정희 前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있다는 청와대에서 알게 되고, 2013. 9. 9.에 김기춘은 실수비에서 ‘국립극단에서 공연한 개구리도 용서가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sup>59)</sup>

#### [그림-4] 박준우 업무수첩 中, 김기춘의 천안함·개구리 관련 발언



#### (2)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우리 위원회가 [사건번호 2017영10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방해 사건]으로 조사하였다.<sup>60)</sup>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감독 백승우, 2013년 제작)는 2010. 3. 26.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이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한 사건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문을 던지며,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려는 감독의 호기심을 약

57) 우리 위원회, 사건번호 2017직공5 「(재)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실행사건」, 참고인 김OO 진술조서 (2018. 1. 12.), 5쪽.

58) 우리 위원회, 참고인 「김OO 면담 녹취록」(2018. 1. 12.), 4쪽.

59) 서울지방법원, 「2017고합102 형사소송 증거서류, 증거기록 「수사보고[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사용한 수첩에서 협의 관련 내용 발췌].

60) 우리 위원회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방해사건」 진상규명결과보고서.

75분간 프롤로그(Prologue)와 8개의 소부분, 에필로그(Epilogue) 형식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 영화는 정치·사회적 이슈를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1985>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정지영이 제작·기획을 감당하였고, 정상민이 대표로 있는 아우라픽처스에서 제작하였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3. 9. 5.경에 메가박스를 포함한 전국 35개관에서 개봉하여 상영하였으나, 9. 7. 전국 메가박스 상영관에서 상영 중단 조치를 내려 개봉일과 그 이튿날까지 단 2일만 메가박스에서 상영한 뒤 중단되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입수한 실수비등의 자료를 참고로 하면 2013. 9. 9. 김기춘은 ‘천안함 메가박스 상영은 중복 세력 지원 의도이며, 제작자, fund 제공자 용서 안 돼’라고 발언을 하였다.<sup>61)</sup>

당시 교문수석실 근무 신OO 행정관은 ‘2013. 9. 9. 당시 정보보고서에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비서관으로부터 동향 파악의 지시를 받아 문체부를 통해 현황 파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sup>62)</sup> 또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OO 사무관은 신OO 행정관으로부터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3 9. 12.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현황을 작성하여 신OO 행정관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했다.<sup>63)</sup>

61) 서울지방법원, 2017고합102 형사소송 증거서류, 「수사보고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사용한 수첩에서 혐의 관련 내용 발췌].

6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사건번호 2017고합102, 공판기록, 신OO 증인신문 녹취서(2017. 5. 29.), 5797~5798쪽.

6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사건번호 2017고합102, 공판기록, 이OO 증인신문 녹취서(2017. 5. 29.), 2882쪽.

## [그림-5]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현황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현황**

**□ 영화 개요**

- 제작·배급사 / 감독 : 아우라픽처스(대표: 정상민) / 백승우
- 장르 / 상영시간 : 다큐멘터리 / 75분
- 상영등급 : 12세 관람가
- 개봉일 / 상영관 수 : '13. 9.5(목) / 33개 스크린(5개 극장)\*
  - \* 메가박스 22개 극장(25개 스크린), 인디스페이스, 아트나인, 아트하우스모모, 강릉 신영극장, 아트씨어터 씨앤씨, 대구동성아트홀

날짜	시사	9.5	9.6	9.7	9.8	9.9	9.10	9.11	9.12	계
관객 수	1,054	1,258	1,292	678	788	646	826	819	1,004	8,365

- 특이사항 : 인터넷을 통해 홍보비 961만원 모금(200여명 참여)

**□ 진행 경과**

**< 상영 이전 >**

-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2회 상영
- (8.7일) 해군, 천안함유가족협회 등에서 상영금지 가치분 신청
  -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 3부
- (9.4일) 상영금지 가치분 신청 기각

**< 상영(9.5) 이후 >**

## (3) 2013년 우수도서 선정 과정 논란

(가) 2014. 2. 18.경 주간지 미래한국은 2013년 문체부 우수도서로 선전된 '체계바라와 랄랄라 라틴아메리카' 등 7종의 도서가 반미·종북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배치된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우수도

서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지적사항이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체부에 전달되었다. 이에 문체부 이OO 사무관 등은 2014. 2. 28.경 유진룡 장관에게 「우수도서 선정도급 사업 개선 방안 보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교문수석실에도 송부하였다.

이 보고서의 개선방안을 보면[ ① 사업의 명칭, 주기, 방식 변경으로 우수도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문학도서는 ‘문학나눔’으로 표기하고, 교양 및 학술도서는 출판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반기별 사업을 연 1회 사업으로 전환하고, ② 도서 선정 시스템 강화를 위해 한국출판진흥원에 분야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는 도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선정위원회는 이념 편향 등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심사하며, ③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 강화로 이념편향 도서는 우수도서 선정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개선방안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 후 2014. 4.경 우수도서의 명칭이 ‘세종도서’로 변경되었고, 심사절차도 보고 내용과 같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3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유진룡 前문체부 장관은, “2014년 2월 달에 국정원 역시 그것도 무슨 인터넷 매체에서 책들, 문체부 선정도서 시비를 거는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정원 보고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갖고 김기춘이 노발대발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으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담당 국장, 과장, 그 다음에 출판진흥원 간부들, 이재호 원장 등등을 파면 또는 징계 조치를 하라는 그런 식으로 노발대발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그 직후 (현황과 대책을 담은)한 두 장짜리 보고서를 가지고 김기춘을 만났다”고 위원회에서 진술했다.<sup>64)</sup>

64) 우리 위원회, 「유진룡 前 문체부 장관 면담 녹취록」, (2017. 11. 29.), 12쪽.

[그림-6]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

##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

---

◆ 2013년 하반기 우수도서가 이념편향 논란이 있는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며 따라 개선책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드립니다

---

**1. 중점 검토**

- 우수도서 선정 과정·결과를 둘러싼 외부 영향 및 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방식 재점검
- 사업의 명칭·시행 주기, 도서선정 방법 재검토

**2. 개선 방향**

㉠ 사업의 명칭, 주기, 방식 변경

- (명칭) “우수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문학도서는 종전과 같이 문학나눔으로 표기, 교양 및 학술 도서는 출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서보급 전까지 결정(6월)

#### (4) 세월호 참사와 블랙리스트

(가)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모철민 前교문수석 등 참고인들은 블랙리스트가 증폭되는 계기로 2014. 4. 16.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문화예술인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시국선언에 참여 하거나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는 분위기여서 청와대에서는 세월호 관련 시국 선언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반정부적 활동으로 간주하고 블랙리스트를 촉발시켰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이후 문화예술인들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촉구 선언으로 594명이,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참여 754명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실행된 블랙리스트 사례를 보면 홍성담의 광주비엔날레 전시 작품 ‘세월오월’, ‘안산 순례길’ 등 세월호와 관련한 작품들이 전시 공간에서 철거되거나 지원 배제되었다.

(나) 세월호 참사 이후 블랙리스트 적용 사례 중에서 김기춘 등의 국정농단 관련 서울 지방법원 제30형사부의 판결문과 증거 기록에서 ‘다이빙벨’ 상영 논란을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65)</sup>

2014. 9. 2.경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이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2회 상영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하자, 2014. 9. 4. 김기춘은 실수비에서 ‘다이빙벨을 지칭하면 예술을 가장한 이념 및 정치 성향 지양되어야 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항의 조치 및 다이빙벨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를 한다. 또한 다이빙벨 선정 참여자·선정과정 자료 요구를 교문위원을 통해 하도록 하였다. 송광용 당시 교문수석은 위와 같은 지시를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문체부와 상의하여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은 국회 및 시민 단체를 통한 다이빙벨 상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성 등을 논의하고 교문수석실에 다이빙벨 상영현황 정보공유 등을 협조 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김기춘은 다이빙벨 상영 대관료 자금원을 추적토록 지시를 하였다.

다이빙벨 관련 특검에서 박준우 前정무수석, 강OO 前 행정관,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내용을 비교한 것을 정리 해 보면 표와 같다.<sup>66)</sup>

**[표-8] 박준우, 김영한, 강일원 업무 수첩에서 ‘다이빙벨’ 관련 발체**

작성일자	작성자	기재 내용
2014. 9. 3.	김영한	다이빙벨 손석희 피소사건(업무방해) - 정무, 교문
2014. 9. 4.	강OO	부산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감독 다이빙벨 다큐멘터리 실장님 지시사항
2014. 9. 5.	김영한	다이빙벨 - 교문위 - 국감장에서 성토당부 신성범 간사, 부산영화제 MBC 이종인 대표 이상호 출품
2014. 9. 5.	강OO	부산 국제영화제
2014. 9. 5.	강OO	다이빙벨 수사
2014. 9. 6.	강OO	다이빙벨 - 다큐 제작 - 방영 - 여타 죄책

65) 서울지방법원, 2017고합102 형사소송 증거기록, 수사보고 [강OO 전 행정관이 사용한 수첩에서 협의 관련 내용 발체].

66) 서울지방법원, 2017고합102 형사소송 증거기록, 수사보고 [박준우 정무수석, 강OO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 내용 비교].

작성일자	작성자	기재 내용
2014. 9. 10.	김영한	부산영화제 - 다이빙벨 - 이용관 집행위원장, 60억 예산 지원 손석희, 송옥순-이종인 부부 - 이상호 기자
2014. 9. 11.	김영한	정부 각종위원회, 지체 위원회 위원선정문제 多 부산위원장 (이용관) 이념편향적 인물, 중립적 공정 임무 수행에 애로 소관 위원회 재검증, 재검토
2014. 9. 11.	강OO	다이빙벨 (부산국제영화제) 485석 상영 선정 경위 프로그래머 → 좌파 장악
2014. 9. 20.	김영한	다이빙벨 상영할 것으로 예상됨 → 수사
2014. 9. 20.	강OO	부산국제 영화제 485석 (2회 관람) 대응방안
2014. 9. 23.	강OO	다이빙벨 → 일반 유가족 아픔 상기함에 따라 두 번 올리는 것임
2014. 9. 24.	김영한	다이빙벨(부산영화제)
2014. 9. 25.	강OO	수석님 지시사항 다이빙벨 → 부산 의원 항의 → 저명 문화인 기고
2014. 9. 26.	강OO	다이빙벨 (국제영화제) 문제점 → 차세대 연대 다이빙벨에 한하여 퍼포먼스
2014. 10. 2.	김영한	(長)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ex) 다이빙벨
2014. 10. 2.	강OO	부산국제 영화 '다이빙벨' (10. 2. ~3) 인천지방법원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
2014. 10. 3.	강OO	부산국제영화제 증인 채택 황선 영화, 다이빙벨 선정 과정
2014. 10. 7.	강OO	다이빙벨 대응 → 문체부 대응
2014. 10. 9.	강OO	다이빙벨 영상 해외공관 시민단체(정부)(지원)대응 논의 / 대응방안 준비
2014. 10. 22.	김영한	(長) 다이빙벨 상영 - 대관료 등 자금원 추적 - 실체 폭로
2014. 10. 23.	김영한	시네마달 내사 - 다이빙벨 관련
2014. 10. 24.	강OO	다이빙벨 영화 상영 소감 정리 보고, R 행정관, 문OO 행정관
2014. 11. 3.	강OO	다이빙벨 최종 결과 보고서 정리

(다) 다큐 '다이빙벨'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사건 2017고합102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67)</sup>

청와대와 문체부의 상영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이빙벨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되었고, 이후 2014. 10. 23.부터 일반상영관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었다. 김기춘은 2014. 10. 2. 22.경 실수비에서 다이빙벨 상영 자금원 추적 등 다이빙벨 상영에 대한 대응을 지

6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사건 2017고합102 판결문. 99~100쪽.

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교문수석실은 문체부에 다이빙벨의 일반 상영관 상영을 막을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와 함께 다이빙벨 상영 현황에 대한 일일보고를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문체부 윤OO 사무관의 요청으로 영진위 문OO 부장이 시네코드선재 김낙숙 대표에게 다이빙벨 상영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윤OO은 2014. 10. 19.부터 2015. 1. 초까지 교문수석실에 다이빙벨 상영 현황에 대한 일일보고를 하였다. 윤OO 이 교문수석실에 송부한 일일보고서에는 다이빙벨 상영 스크린 수, 상영일 등과 함께 정부지원 수혜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영 전 조치로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않도록 요청', 상영 후 조치로 '다이빙벨을 상영한 예술영화 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의 조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김소영은 정관주 소통비서관의 요청으로 위 일일보고서를 정관주와 공유하였고, 정관주는 이를 피고인 조윤선 정무수석에게도 전달하였다.

신OO 행정관은 2014. 12. 경 피고인 김상률, 김소영의 지시로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영 경과와 내년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 기재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방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김상률, 김소영에게 보고한 후 김기춘 비서실장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였다.

신OO 행정관으로부터 이러한 청와대의 전액 삭감 방침을 전달받은 문체부의 정OO 과장 등은 2015. 1. 경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전액 삭감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파국이나 논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한 후 교문수석실에 지원금 전액 삭감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5. 3. 경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 대비 50% 내외로 감축하기로 조정하였고, 피고인 김상률이 이를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후 신OO 행정관이 서면으로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였다. 이후 영진위는 위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2015. 4. 30. 경 '2015년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공모' 심사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8억 원으로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 [그림-7] 다큐 영화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 보고

**다큐 영화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 보고**

**□ 보고 개요**

- 10월 23일(목)부터 다큐 영화 ‘다이빙벨’ 이 영화상영관에서 개봉
  - 현재 9개 상영관에서 개봉예정이며, 이 중 5개가 영화발전기금(영진위)을 지원받고 있는 예술영화전용관\*
  - \* 작석규모 연동한 정액 보조금('14년 6억 원/1관당 평균 40백만원 내외)

**□ 상영 예정 영화관 현황(9개, 10.18<금> 기준)**

- 독립·예술영화전용관 7개 (KU시네마테크·영화공간주안·아트나인·시네코드선제·아트하우스모모(이상 영진위 지원 예술영화전용관) / KU시네마트랩, 인디스페이스)
- 일반 극장 2개 (메가박스 안산, 한동중앙시네마)

**□ 향후 대책**

- (상영 전 조치) 영화를 상영하지 않도록 요청
  - 영진위 지원 예술영화전용관 5개 중 대화가 가능한 1곳(씨네코드선제)에 요청(10.17)하였으나, 거절당함(연락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
  - \* 영진위(선임 부장)가 대표와 통화, 다만, 10.17일 이메일(맥스무비)에 등록되어 있던 해당 극장은 10.18 현재 삭제된 상태임(상영관 홈페이지는 여전히 개봉 예정 홍보 중)
  - 기타 상영관에 요청시 민간에 대한 검열 및 억압 논란 야기,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으로 다이빙벨 측에 상영의 당위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음
  - \* 나머지 상영관은 김성 운영자·프로그래머(아트나인, KU시네마, 아트하우스모모), 민주당 지역구(주안), 독립영화 전용관(인디스페이스), 단원고 소재지(메가박스 안산)로 요청 곤란
  - \*\* 특히, 메가박스 안산은 위탁상영관으로 본사 통제 미치기 어려움, 또한 메가박스는 50% 지분을 중앙일보가 보유하고 있으며, '13년 천안함프로젝트 상영 중단 경험으로 외부압력 민감
- (상영 후 조치) 영화를 상영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 다. 블랙리스트 실행과정에서의 주요 사실관계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지시, 국정원 정보보고, 문체부의 실행방안 마련 등 우리 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주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 1) 유진룡 前 문체부 장관은 위원회에서 “김기춘이 온 다음부터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그러한 지시들이 자꾸 전달이 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유 前장관은 간부들한테 “대통령이 나를 여기다 앉힌 것은 좌우를 안고 가겠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나는 대통령 말을 듣지 김기춘 말을 내가 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계속 무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68)</sup>

- 2)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2013. 8. 16.경 국정원에서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보고」를 하였다. 2013. 8. 21. 김기춘은 실수비에서 종북세력이 15년간 문화예를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그 직후인 2013. 8. 27. 국정원은 「CJ의 좌편향 문화사업 확장 및 인물 영입 여론」이란 정보보고를 하였다. 2013. 9. 경 김기춘은 ‘특정성향 예술지원 실태 및 대책 마련’ 지시를 문체부 등에 하였다. 김기춘이 특정성향 문화예술계에 대한 대응방안마련 지시를 하고, 연극 ‘개구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등이 언론 등에서 이념 논란을 일으키자 2013. 9. 9.일 김기춘은 실수비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문체부에 지시하였다. 당일 문체부에서는 조현재 1차관 주도의 ‘문화예술정책 점검 TF’를 구성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였다.<sup>69)</sup> 문화예술정책점검 TF는 최OO 기조실장 주재로 매주 월요일 관련 실·국장들이 모여 지난주 사업 일정과 다음 주 일정에 대해 통보하는 수준에서 5~6회 진행되었다. 당시 참석자들은 ‘우리 문체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TF를 운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 3) 김기춘이 「시도문화재단의 좌편향 일탈 행태 시정 필요」라는 국정원의 정보보고 문건을 모철민 수석에게 전달하자, 모철민 前 교문수석은 이 문건을 문체부에 전달하여 대책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청하였다. 김기춘으로부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어라’는 지시를 받은 교문수석실에서는 2013. 9. 30. 대수비에 ‘좌편향 문화예술계 대응 방안’을 보고한다. 교문수석실에서 마련한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대응방안으로는 ‘국립극단의 일부 정치 편향적 작품 제작,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이념성 사업 지원과 부실 운영 등 지속적 논란에 행태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간접지원 및 책임심의위원 제도 강화. 9. 30.일부터 문체부에 감사반을 구성 지역문화재단 등에 대한 서면·현장 감사를 실시. 보수적 시민운동 단체 등 대안 단체 육성 등’을 제언하고 있다.

68) 우리 위원회, 「유진룡 前 문체부 장관 면담 녹취록」, (2017. 11. 29.). 8쪽.

69)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 前 정부, 특정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2017. 10. 30.) 보고서에서는 당시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장관의 지시 사항 등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붙임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 문체부를 출입하던 국정원 직원은 조OO이다. 위원회에서는 국정원 조사결과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진룡 前 장관 등 중요 참고인들에게 국정원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확인한 결과 자료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그림-8] 교문수석실, 대수비 보고 '좌편향 문화예술계 대응'

**④ 좌편향 문화예술계 대응**

- 국립극단의 일부 정치 편향적 작품 제작,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이념성 사업 지원과 부실 운영 등 지속적 논란 행태에 대한 대책 마련·실시
  - 국공립단체는 국민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작품을 우선 제작
  - 간접지원 및 책임심의체도를 강화, 좌편향 작품은 지원 배제
  - 9.30일 부터 문체부에 감사반을 구성, 지역문화재단 등에 대한 서면·현장 감사(~11.29) 실시 후 제도개선 추진(12월) 등
  - 민간지원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자 등에 협조 당부
  - 보수적 시민운동 단체 등 대안단체 육성

4) 청와대의 좌편향 광역단체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감사를 지시받은 문체부에서는 16개 광역 시도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지자체 대상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실태조사계획' 작성하여 예술위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문체부는 예술위와 공동으로 지자체 문화예술진흥 기금사업 사업 실태조사를 하여 2013. 12. 23. 중간보고하며, 2014. 2. 17.경에 실태조사의 결과 및 대처방안인 담긴 최종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였다. 실태 조사 보고서의 조치 계획을 보면 '보조금(지원금) 집행 요령 등 제정, 기재부 집행지침에 보조금 사업 관리자들이 숙지토록 보조금 집행지침을 작성하며, 심의위원 구성 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제도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정원에서 정보 보고한 전국 시도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이념 편향적 사업 치중이라는 인해 문체부에서는 전국 광역문화재단에 교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실태를 13. 11. 11 ~ 12. 13.까지 실시하게 되었다. 모철민 前 교문수석은 우리 위원회 면담에서 광역단체 문화재단 실태조사는 국정원의 정보보고가 문체부의 문화예술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하고 진술하였다.

## [그림-9] 문체부, 지자체 대상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실태조사 계획

**지자체 대상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실태조사계획**

13.11.8  
내부인용

**□ 개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자체 대상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실태조사 추진
- 조사목적
  - 국회, 감사원 등 관계기관 지적 및 언론보도 지적
  - 문화융성 감당할 시스템 있나(중앙일보 노재현 칼럼, '13.9.11)/ 지자체들 국고보조금을 용돈 쓰듯(서울신문, '13.9.27)/ 문화부, 민간보조금 운영 주먹구구(국민일보, '13.10.4)/ 감사원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 감사결과 발표('13.9.26) 참고
- 문예기금 예산 증액에 따른 사업 점점 필요('14년 43억 중)
  - 지역의 자율성 부여 명분으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99년~ )에 대한 전반적인 현지점검 미 실시
  - 광역지자체 및 지역재단중심 사업 추진 후, 예술위는 결과만 보고받는 시스템으로, 새정부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부 차원에서 현장상황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

**□ 실태조사 계획**

- 대상사업: 문예진흥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2011~201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조사건수 : 시·도별 일정금액 이상 사업 중 표본 조사
- 조사내용 : 지자체 및 문화재단의 보조금사업 운영 전반
- 조사지역 및 기간 : 16개 시도(문화재단 포함)/'13.11.11~12.13

5) 광역단체 문화재단의 실태조사 외에도 문체부에서는 2013. 9. 3.경에 문화예술분야 左편향 대응책을 청와대에 보고한다. 대응책을 보면 '한국문예위 등 문화예술기관 주요 임원 교체 시 또는 문화예술 분야 사업 지원 시 특정한 정치적·사회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순수예술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방안'으로 설정하고 있다.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순수예술가치 기준 하에 책임심의위원을 선임,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하고 편향성이 배제된 순수작품 위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어 강한 반발을 야기했던 사례를 감안하여 특정 편향성이 강한 작품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파장·반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자연스럽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6) 2013. 12. 경 김기춘은 CJ에서 배급한 영화 ‘변호인’이 흥행에 성공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자, 2013. 12. 18. 실수비에서 모철민 前 교문수석에게 문체부가 영화 ‘변호인’에 투자 한 것과 반국가적, 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질책을 하면서 ‘CJ에 대한 제재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다. 김기춘의 지시를 받은 모철민은 이를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문체부와 영진위가 협의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모철민은 김기춘에게 ‘모태펀드 개선방안’ 과 ‘건전영화 육성방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sup>70)</sup>

CJ 문제와 관련해서 유진룡 前 장관은 우리 위원회 면담에서, “CJ가 수직 계열화를 하는데 뭐를 하고 하라는 등 고발을 하고 그걸 못하게 하라고 모철민을 통해 문체부로 연락이 왔으며, 우리는 못한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sup>71)</sup>

7) 2014. 1. 24. 경 문체부 유진룡 장관은 ‘문화예술분야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해 이념 시비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불법단체, 左편향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집행 수과정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균형적 심사위원 구성을 통해 심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라고 국정원 개혁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sup>72)</sup>

8) 2013. 11. 1. 경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저자: 신은미)라는 북한을 미화하는 서적이 우수도서로 선정 된 이후 언론에서 중복 관련 서적이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어 논란이 일자, 문체부 유진룡 장관은 ‘우수문학 도서 선정기관 및 주관부서를 변경·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였다.<sup>73)</sup> 이후 2014. 2. 18. 일경 주간지 미래한국에서 2013 문체부 우수도서로 ‘체계바라와 랄랄라 라틴 아메리카’ 등 반미·중북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들이 대한민국 서적이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고 보도한다. 주간지 미래한국의 기사를 보고 받은 김기춘은 우수도서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체부로 지시하였다. 2014. 2. 28. 에 문체부에서는 우수도서 선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명칭, 주기, 방식 변경의 개선안’을 담은 「우수도서 선정 개선 방향 보고」를 작성하여 김기춘에게 보고 한 것으로 확인된다.

70) 서울지방법원 제30형사부 사건 2017고합102, 증인 모철민 증인신문 녹취서(2017. 5. 24.), 21쪽.

71) 우리 위원회, 「유진룡 前 문체부 장관 면담 녹취록」, (2017. 11. 29.), 30쪽.

72)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 前 정부, 특정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7. 10. 30.), [붙임4], 2014. 1. 24. 문체부 장관 左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 강구 지시.

73) 상동, [붙임 1],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분야 左편향 대응책 보고’.

9) 2014. 2. 20.경 국정원은 「문예진흥기금 사업 심사체계 보완 필요 여론」이라는 문건에서 '좌파단체·인물이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좌파단체들이 선정되는 이유는 선정 위원회에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한다.

2014. 2. 21. 10:56경 팩스 송부된 '예술위(위원장: 권영빈)는 금년...'로 시작되는 국정원 작성의 문건이 김기춘에게 보고되고, 모철민을 통해 문체부로 전달되었다. 이 문건에는 상반기 문예진흥기금(78억 8천 8백만원) 지원 대상을 선정(7개 분과 448건: 단체 238개·개인 210명)하였는데 지원 대상에 좌파 단체인 민예총 산하 「민족미학연구소」(대표: 조성래)의 학술지 「민족미학」 발간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 인정받은 데다 이념 편향성으로 물의를 빚은 극단 '혜화동 1 번지',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등도 再선정 되었으며, 좌성향 작가회의 소속으로 밀양 송전탑 반대 등 정부를 비판해온 작가들이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10) 우수도서 선정과정에서 이념 편향성 도서의 우수도서 선정 논란과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 심사체계 보완 필요' 제목의 국정원의 정보보고로 인해 청와대에서는 '문체부 예산과 기금이 좌파세력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만큼 국정원과 협의해서 정체성을 검증하라'는 지시를 한다. 이에 문체부에서는 '문예 기금 지원 사업 관련' 보고서 및 '이념 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 방안'을 작성하여 교문수석실에 전달하여 비서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이념 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에는 우수도서와 관련해서 문제도서 선정 경위, 내용 검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여 관계자 징계 문제도 검토하며, 심사위원 구성 시 이념 편향적 인사배제, 도서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 강화 등의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을 개선안으로, 문예진흥기금 공모 사업에서 위원 구성에서 문체부와 사전 조율토록 하는 문화예술위의 책임심의위원 위촉 방식 개선과 이념 편향 반정부 행위자 배제 등 심의위원 선정기준 강화를 대책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그림-10] 이념 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1. 우수도서 심사·선정 문제**

**□ 논란 사항**

주간지 미래한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2013년 선정 우수도서 가운데 이념편향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책임 문제 거론

<미래한국 거론 서적 사례>

- ① 청소년에게 반미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체게바라와 팔랄라 리틴아메리카(서울대 최광열 작)
- ② 민주노총 김진숙 씨의 추천사를 받은 “비정규직 출근 하세요(어린이책 작가모임 작)”
- ③ 김일성 중심의 일제 항거를 담은 한국의 레지스탕스(조한성/친일반민족실상규명위원)
- ④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책( “고장난 거대기업” ,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 등” )

**□ 논란이 된 도서 선정 경위**

- 951개 출판사에서 총 5,437종 신청('13년 8월)
- 온라인 및 4회의 오프라인 심사 진행(9.13-1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학회·단체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77명으로 심사위원단 구성
- 최종(4차) 심의시, 이념편향 여부 검토 및 제외 작업을 거쳐, 420종 최종 선정 발표(11.14)
  - 총 10종의 도서에 대한 탈락 처리: 동네북 경제를 넘어(제정임), 10대와 통하는 한국전쟁이야기(이인화) 등
  - 이념 편향 여부 검증이 있었음에도, 검토 대상 도서가 많아, 일부 문제 도서가 걸리지 않은 측면이 존재

**□ 향후 조치 계획**

- 특별감사 시행 : 문제도서 선정 경위, 내용 검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11) 2014. 3. 17.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 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에 민족미술협의회, 한국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서울연극협회 등 좌성향 단체들이 대거 선정된 것과 관련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2014. 3. 19.경 국정원은 문예계의 근본적 사회 비판성이 좌성향 세력 근절 미흡 원인이라고 분석한 ‘문예계內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한다.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문예기금 선정기관에 左성향 인물 배제, 정보 보조금 지원중간을 통한 자금줄 차단 등의 ‘대응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문체부 등을 통해 시행된 특정문화예술인 지원배제의 기준점을 제시 했다고 하며, 당시 국정원 지휘부도 이 정보보고를 받고 호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12) 2014. 3. 21. 청와대로부터 左성향 문화예술인들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을 받은 문체부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이념성을 지영하고 불법시위 관련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이념 편향적 콘텐츠 지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인발, 도서 및 문학, 영화, 해외문화원 분야별 대응전략을 마련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을 작성하여 청와대 등에 보고 예정이라고 문체부 출입 국정원 IO가 정보보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보고 문서에는 문체부가 이념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左성향 인물 공직 진출 차단, 左성향 사업 지원 중단 등 인적 청산과 시스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아직도 막연하게 문체부가 이념문제에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 정관계 요로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문체부가 여하히 대처하고 있는지를 적극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겠다는 목표 하에 협조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확산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13) 「문체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체 정화시스템 가동」이란 제목의 국정원 정보보고서를 보면, ‘문체부는 유진룡 장관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서가 部 전반에 확산되어 각 국·과가 사업 추진시 자체적으로 이념 시비가 제기될 만한 사업을 걸러내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당시 블랙리스트 작동과 관련한 상황과 관련하여, 2014. 3. 월경 문체부 예술정책관실에서 문화체육비서관실로 ‘2014년도 문예위 분야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송부하였다. 이에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는 105명의 책임심의위원 중 황현산 등 19명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예술국에 전달하고, 이에 예술국은 문예위 사무처에 배제 명단을 통보한다. 또한 영진위의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심의가 진행 중이던 2014. 4. 24.경 문체부 영상콘텐츠과 이OO 사무관으로부터 ‘동성아트홀에 전년과 같이 정액지원금 65,700,000원을 지원해도 되겠느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문체비서관실 신OO 행정관은 이를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문체부 조현재 1차관에게 동성아트홀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것을 이유로 ‘동성아

트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 달라'고 연락을 하였으며, 순차 지시를 받은 이OO은 영진위 문OO에게 지원심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sup>74)</sup>

14) 2014. 4. 16.경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문화예술인들이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 선언 및 정부주도 시행령 폐기 선언과 세월호를 주제로 한 다양한 창작활동으로 세월호 참사를 표현하자 청와대에서는 세월호와 관련한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반정부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2014 8. 8.경 김기춘은 실수비에서 광주비엔날레에 전시 예정인 홍성담 작가의 걸개그림 '세월오월'을 전시 취소시킬 것을 지시한다. 또한 작품의 전시 취소뿐 만 아니라 문체부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광주비엔날레에 국고지원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주최 측에 경고해 둘 것을 지시도 하였다.<sup>75)</sup>

15) 2014. 3. 14.경 김기춘은 박준우 정무수석에게 '수석실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 관련 비서관들을 모아서 TF를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김기춘은 신동철 소통비서관에게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 중앙정부라도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정부의 민간지원 실태에 대하여 질책을 하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좌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비해 우파는 배고프다. 잘 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김기춘의 지시를 받은 정무수석실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관련 비서관들을 모아 민간단체보조금 TF를 구성하여 2014. 4. 4.경부터 5. 23.일까지 운영한다. 이 TF의 대책 결과물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란 제목의 문서를 박OO 행정관이 작성하고 신동철 소통비서관이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김기춘에게 보고하였다.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문체부와 예술위 등 산하기관이 정부예산, 기금 등을 지원한 개인·단체 중 고은(시인 문재인지지), 그린피그(연출가 윤한술, 연극인 1,000인 문재인지지) 등 야당 후보 지지자에 대한 지지선언, 정권 반대운동 참여 등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 등 80여명의 명단을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건네주면서 문체부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원되지 않도록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하였다. 신동철로부터 지원배제 명단을 건네받은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이를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후, 명단에 기재된 지원배제 사유는 삭제한 채 개인·단체명만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여 조현재 문체

7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사건 2017고합102, 판결문,(2017. 7. 27.) 20쪽.

75) 우리 위원회 입수, 2014. 8. 8.자, 실수비대수비 회의결과,

부 1차관을 불러 명단을 전달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저항과 비판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윗선의 지시다’라고 통보하였다. 또한 김소영은 조현재 1차관에게 ‘이 명단은 정부에서 만든 것인데 극비리에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정부의 자금지원이 가지 않게 하라’고 통보하였다.<sup>76)</sup> 2014. 5.경 정무수석실로부터 조현재 1차관을 거쳐 문체부 예술국으로 전달된 리스트를 예술국 사무관 박OO은 보관하고 있다가 2014. 5. 29.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 16) 2014. 5.경 이후 문체부에서는 청와대의 left 성향 문화예술계 대응 방침 마련 등을 위해 기초실장 주관으로,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문화기반정책관, 콘텐츠 정책관, 미디어정책관이 참석하는 ‘건전콘텐츠활성화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TF의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이 맡아 회의 내용을 ‘각 국 진행사항, 유의 사항, 향후 계획’ 등으로 정리하여 ‘개구리’란 폴더를 만들어서 내부 보관하며 회의결과를 청와대 등에 보고하였다. 문체부에서는 이념 논란 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박OO 당시 예술사무관이 「건전 문화예술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을 초안을 작성하여 황OO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전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건전 문화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구성·운영」방안 등을 작성하여 김종덕 장관 및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문체부의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회의는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예술위 업무를 담당하던 오OO 사무관으로 특정문화예술계 보조금 지원배제 관련 업무가 단일화 되면서 2015. 4.월경에 종료되었다. 문체부 여러 부서에서 국정원으로 인물 검증을 요청하면서 블랙리스트 관련한 민감한 사항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운 나머지 국정원에서는 보안 등의 이유로 오OO 사무관으로 블랙리스트 업무를 단일화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sup>77)</sup> 블랙리스트 업무가 오OO으로 단일화 되면서 교문수석실과 문체부, 문체부와 국정원간의 인물 검증이 오OO 사무관을 통해 우선으로 전달되고 확인되었다.

7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사건 2017고합102, 판결문,(2017. 7. 27.) 12쪽.

77) 우리 위원회, 「B 前예술정책국장 면담 녹취록」(2018. 1. 5.), 4쪽.

## 라. 민간단체 보조금 TF 구성경위

### (1) 참고인 진술

(가) 모철민 교문수석은 2013. 12.말경 영화 ‘변호인’이 개봉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자, 김기춘이 수석회의 때에 “쫄부처 좌편향 지원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전부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78)</sup> 그리고 2014. 1.초에도 문화, 교육, 안행부, 복지부 등 4개 부처에 NGO들에 대해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김기춘이 지시하였으며, 2014. 3.말에도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고, 4월초에도 정무수석 주도의 TF를 만들어서 전 부처 소관 정부보조금이 민간단체에 지원된 것을 전수조사하고, 그중에 좌파단체에 지원된 것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보조금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각 부처마다 과거 2년 동안 민간에 나간 보조금 전체 현황을 정무수석실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79)</sup>

(나) 박준우 정무수석은 ‘김기춘이 대통령을 풍자·비하하는 진보단체에 정부보조금이 많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정부 보조금 지원에서 진보단체를 배제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3년 말과 2014. 1. 3.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전수조사를 각 부처에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80)</sup>

A 행정관은 보조금 현황과 관련하여, ‘정무수석실에서 예술지원제도 현황을 요구하였으며, 어떤 지원제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는가 하는 3년 치 지원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문체부에 연락을 하여 정무수석실로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sup>81)</sup>

(다) 김기춘은 2013년 12월과 2014. 1. 3.경 좌편향 민간단체 보조금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에 이어, 2014. 3. 27. 실수비에서 정무수석에게 보조금과 관련하여 조속히 관련 수석실 및 부처와 협의하여 좌편향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기춘의 지시를 받은 정무수석실에서는 정치권 출신인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 주도로 교문수석실 등 관련 비서관들이 참석하여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구성 대책 방안을 논의 하였다.

78) 우리 위원회, 「모철민 前 교문수석 면담녹취록」 (2017.12. 27.), 49쪽.

79) 상동, 8~9쪽.

80) 「박준우 前 정무수석 면담 보고」, (2018. 2. 27).

81) 우리 위원회, 「A 前 교문수석실 행정관 면담 녹취록」, (2017. 12. 15.), 24쪽.

정무수석실 주도 민간단체 보조금 TF는 2014. 4. 4.에서 5.말까지 전 부처의 민간단체 보조금 실태 조사를 하여 보조금 지원관련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다. 보조금 관련 TF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쏘 부처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하여 민간단체 보조금 대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TF 회의의 결과로 박OO 행정관이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sup>82)</sup> 초안 작성하여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과 내용을 협의한 후 비서실장 등에게 보조금 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위원회 참고인으로 면담한 송OO은 블랙리스트 실행에서 신동철과 관련하여 “김OO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와 관련하여 도대체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니, 최OO 정책보좌관이 ‘정무에서 신동철이가 챙깁니다.’라고 하여<sup>83)</sup>, 장관에게,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전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와 관련하여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요. 신동철을 설득해야 됩니다.’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sup>84)</sup>

## (2) ‘문제단체 보조금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가) 민간보조금 TF에서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은 ‘중앙정부 보조금 차단, 좌판인사 확인·조치,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 관심조치가 필요한 분야’로 구분하고, 별첨 자료로 [첨부1]에는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예산이라고 소관 부처,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자 단체와 지원내용 지원액, 특이사항, 조치결과 등을 서술하고, [첨부2]에는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현황을, [첨부3]에는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을 기재하고 있다.

(나) 첫 번째로 서술하고 있는 중앙정부 보조금 차단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TF의 운영 추진 배경을 서술하고 있는데, 불법시위, 정권반대운동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실태파악 및 근본적 조치가 미흡하다며 민간단체 보조금 TF 운영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TF 구성으로 정무수석 주관으로 주요부서가 참여하여 △ 민간경상보조금, △주요 부처 공모사업 현황 등을 확보하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4. 4 ~ 5. 23.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TF에 참여하는 청와대 주

8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사건 2017고합102, 증거기록 제20권 10833-10849쪽.

83) 이와 관련하여 최OO은 송OO에게 이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18. 11. 6.).

84) 우리 위원회, 「송OO 前 기조실장 면담 녹취록」(2018. 2. 23.), 43쪽.

요 수석실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비서관실이였다. 중앙정부 보조금의 조치 결과로는 총 130건, 139억 원의 문제예산을 확인하며, 관련 조치사항을 [첨부 문서1]에 기재하고 있다.

[첨부1]의 조치 현황에는 총 130건의 부처별 보조금 지원현황을 분류하고 있으며, 문체부가 93건의 단체와 개인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첨부1]에 기재된 특이사항으로는 야당 정치인지지, 좌파성 언론사, 밀양 희망버스, 광우병 대책회의 등 정부 비판적이거나 불법시위 참여 및 좌편향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파악된 3천개의 문제단체와 8천명의 좌편향 인사의 DB를 구축·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조치 사항으로 하고 있다.

(다) 두 번째로 서술하고 있는 좌파인사 확인·조치를 살펴보면 좌편향 인사를 정부 공모사업에서 심사위원 및 정부위원회에서 배제 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좌편향 심사위원 수를 보면 문화체육이 12명, 보건복지 8명, 고용노동 6명으로 총 26명이다. 심사위원 조치 현황 비고를 보면 정권교체를 원하는 인사, 전교조를 지지하는 교수연수자 모임, 문재인지지 등 야권 지지자 내지 시국선언을 한 인사들을 좌편향 인사로 규정하여 정부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에서 배제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463개의 정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여 66개 위원회에서 70명의 좌편향 인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임기 만료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단계별로 해촉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덧붙여 좌편향 인사가 다수 포진한 정부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하지않도록 권고까지 하고 있다.

(라) 세 번째로 서술하고 있는 모태펀드 관리 대책 강구를 보면, 정부·민간이 함께 만든 모태펀드가 문화·영화 계정에 투자되고 있으나, 이 모태펀드가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 창구가 되는 사례가 빈번 하는 등 운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모태펀드에 대하여 靑盧계열과 대기업(CJ·롯데)이 문화펀드 운용을 독식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자함에도 운용사들의 독립성 보장을 내세워 창투자들의 행태를 정부부처에서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 펀드운용사들을 관리하는 기관인 (주)한국벤처투자는 투자관행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주)한국벤처투자의 임원진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 대폭 교체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마) 네 번째로 서술하고 있는 관심·조치가 필요한 분야를 보면, 서울시를 통한 좌파단체 활동 자금 지원 및 조치가 필요한 부처로 문체부 및 노동부, 교육부, 인권위 등

을 거론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박원순은 공개적으로 보수 단체에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며, 박원순을 공개 지지하거나 폭력시위에 참가한 좌파단체들에 대해서는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상황(2011년부터)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 국정감사나 서울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편향 지원 실태 및 시장과 단체 대표간 친분관계를 지속 부각시키는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조치가 필요한 부처로 문체부를 거론 하는 이유를 보면,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문제단체 지원을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어 간부 공무원들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의지와 개혁을 갖춘 장·차관 임명 후 주요부서 관리 강화 및 산하기관은 구조조정을 통한 통폐합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3)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블랙리스트 실행의 주 내용인 문화예술계 관련 보조금지원배제 실행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사건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의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판결문에서는 인정한 범죄사실<sup>85)</sup>은 다음과 같다.

[2013. 8. 초순경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기춘은, 2013. 8. 21경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중복세력들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김기춘은 2013. 9. 9.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메가박스에서 상영되는 것은 중복세력이 의도하는 것이다. 이 영화의 제작자와 펀드 제공자는 용서가 안 된다, 국립극단에서 공연한 연극 개구리도 용서가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한편 대통령은 2013. 9.30.경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의 회의에서 피고인 김기춘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김기춘은 2013. 12. 18.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반국가적·반체제적

85)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판결문」, (2018.1.23.), 283~288쪽.

단체에 대한 영향력 없는 대책이 문제이다. 한편에서는 지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다. 문화계 권력을 좌파가 잡고 있다. 영화 ‘변호인’과 천안함 프로젝트가 그렇다, 교육계 원로들이 울분을 토하더라, 하나하나 잡아 나가자. 모두 함께 고민하고 분발하라’고 지시하였다.

특히 2013년 하반기 연극 ‘개구리’ 등과 같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개봉된 상황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 일탈 행태 시정 필요’, ‘左성향 세력의 세 확산 기도 등 문화관련 이념 문제’ 정보보고 문건 등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되면서,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정부비판 여론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부적절하다는 기조가 청와대 내부에 확산되었다.

피고인 김기춘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소위 국론분열의 획책을 목표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정부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피고인 김기춘은 2013. 12. 20.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반국가적인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이 되어서 종북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기춘은 2014. 1. 3.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산하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라. 반드시 실사가 필요하고, 그 내용들은 중간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기춘은 2014. 1. 4.경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개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 지금 형국은 우파가 좌파 위에 떠있는 섬과 같다. 좌파정권 10년에 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 나가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좌파 척결의 진도가 잘 안 나간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산하 부처별로 좌파에 대한 지원현황을 전수 조사하도록 재차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기춘은 2014. 3. 14.경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장을 통해 과거의 실적을 심사하라. 좌파활동 단체에 대한 지

원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그 무렵 박준우 정무수석에게 '수석실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 관련 비서관들을 모아서 TF를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 김기춘은 그 무렵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신동철에게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 중앙정부라도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민간지원 실태에 대하여 질책하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좌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비해 우파는 배고프다. 잘 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기춘의 지시 등에 따라, 박준우 정무수석과 피고인 신동철 등은 2014. 4. 4. 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 부처별 공모사업 현황 등을 취합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박준우 정무수석과 피고인 신동철은 위와 같은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문제예산 차단]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부처의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그 중 총 130건(예산 합계 139억 원)의 문제예산(야당 후보자 지지선언, 정권반대운동 등에 참여하거나 좌파성향의 개인·단체 등에게 지원된 정부예산)을 선별하여 향후 이를 축소·배제, [DB운영으로 지속감시] 3,000여 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시위참여 등)와 8,000여 명의 좌편향인사(문재인 지지, 舊민노당 지지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배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주요부처 및 산하 기관의 심사위원을 파악하여 오성운 감독(노무현 지지선언, 문재인 후보 광고촬영) 등 총 26명의 좌편향인사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토록 조치,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 각 부처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을 전수 조사하여 조성재 대구대 교수(문체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등 좌편향인사 70명을 향후 임기 만료시 해촉 하도록 조치, [모태펀드 관리대책] 친노(親盧)계열과 대기업(CJ·롯데)이 문화·영화 분야 모태펀드의 운용을 독식하고 있으나 대규모 정부자금을 투입한 문체부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이를 용인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한국벤처투자의 임원의 교체를 통한 대책 강구, [조치가 필요한 부처] 문제단체에 대한 지원을 관행으로 인식하며 개선의지가 부족한 문체부 장관·차관의 경질과 산하기관 통폐합 등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총 130건),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현황(총 26명),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현황(총 70명) 등 일람표를 첨부하였다.

박준우 정무수석과 피고인 신동철은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중간진행 상황을 피고인 김기춘에게 보고하였고, 2014. 5. 하순경 위와 같이 작성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피고인 김기춘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마. 문체부 주요간부의 강제 사직과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 (1) 참고 자료 분석 및 참고인 면담 결과

(가) 2014. 3. 28. 국정기획수석실(기획비서관)에서 작성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보면 ‘고위 공직자들이 국가발전, 국가개혁, 국민행복을 위한 강인한 열정, 의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지향가치를 철저히 체화하고 있지 않으면 고위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임. 모든 공직자들은 이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함’ 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민간단체 보조금 TF 결과로 제출된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의 관심조치가 필요한 분야에서 ‘조치가 필요한 부처로 문체부를 거론 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문제단체 지원을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어 간부 공무원들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의지와 개혁을 갖춘 장·차관 임명 후 주요부서 관리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나) 2014. 9. 14.경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및 「문체부 실장급(1급) 보직 후보자」 등의 문건들을 보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서도 개입이 어렵다는 미온적 태도 만연, 실장급 보직은 총 7개인데 7명 중 영남권 인사가 한명도 없는 상황, 現 실장급 인사의 용퇴 범위에 따라 전체 인사 폭 결정’ 등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업무 수행 능력과는 무관한 개인이 지니는 정치·경제·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특정 정권의 국정철학에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추천하라는 등을 적시하고 있다. 「문화부 4대 기금 관리 집행부서 문제인사」에는 좌파단체에 기금이 많이 지원된 것을 언급하면서 좌파에 온정적이거나 좌파를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체부 간부들의 세평이 작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0. 4.경 김희범 차관이 청와대의 지시라고 밝히면서 실장급 3명에게 사직서를 받았다. 이는 문체부 실장급 3명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 (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을 인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sup>86)</sup>

[피고인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적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수용하지 않은 문체부 최OO 기획조정실장, 김OO 종무실장, 신OO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3명에 대하여 사직을 요구하고자 마음먹었다.

2014. 8. 21.경 피고인 김종덕이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그 직후인 2014. 9.경 대통령과 피고인 김기춘 비서실장 등의 지시를 받은 정진철 인사수석비서관은 김종덕 장관에게 연락하여 ‘최OO, 김OO, 신OO 등 1급 실장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김종덕 장관의 지시를 받은 김희범 차관은 2014. 9. 18.경 세종정부청사 내 문체부 제1차관실로 최OO, 김OO, 신OO 등 실장 3명을 불러 ‘상부 지시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사직을 요구받은 최OO, 김OO, 신OO 등 실장 3명은 각각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4. 10.경 모두 사직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김기춘, 김종덕은 대통령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최OO, 김OO, 신OO으로 하여금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제4절 | 조사 결과

### 1. 진상규명 사실

#### 가. 「문건」과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국정원은 2013. 3. 15.경에 보고 배포한 「문건」에서 박근혜가 취임사에서 거론한 문화융성의 의미를 좌파를 배제하여 건전생태계 조성을 하여야 한다고 것으로 해석하여 제

86)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문」, (2018. 1. 23.) 292~293쪽.

언하고 있다. 국정원은 김기춘이 2013. 8.경 비서실장 부임이후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에서 거론한 좌편향 문화예술계를 배제하고 건전문화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화예술계 左성향 세력 활동 실태’, ‘시·도문화재단의 左편향·일탈 형태 시정 필요’, ‘문예계 내 左성향 再확산 시도 차단 건의’, 2014. 1. 27. 「문예기금 운용기관의 보조금 지원 기준 보완 필요 의견」, 2. 20.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보완 필요 여론」 제목 등의 정보보고를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하였다. 국정원이 제출한 이들 정보보고서에는 이념의 온상이 되어온 ‘문예계 정상화’를 위하여 ‘左성향 단체·인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뿌리 뽑아 나갈’ 것과 정부보조금 지원 등에서 배제를 할 것과 건전 문화세력과 협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기춘은 비서실장으로 부임 직후 2013. 8. 21. 실수비에서 ‘좌파가 15년간 문화계를 장악했다’,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가 문제가 많다’, ‘단체의 활동 성향을 파악한 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등 박근혜 정권의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 좌파 문화예술계에 대한 보조금 지원배제 방안 마련을 퇴임직전까지 지시하였다.

「문건」은 국정원의 회신결과에 따르면 2013. 3. 15.에 박근혜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확인된다. 「문건」에 담긴 내용과 박근혜 및 김기춘이 실수비·대수비에서 한 발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좌파문화예술계 배제와 좌파 문화예술계 대응 세력을 조성하기 위해 건전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국정원이 작성하여 청와대에 배포한 「문건」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정 문화예술계 배제 및 건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등의 제언이 담긴 정보보고로 인하여 박근혜와 김기춘이 추구하는 ‘보수·애국’이라는 특정 국가관 등에 반하는 좌파 문화예술계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배제를 하고자 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 나. 블랙리스트 실행에 있어서 청와대·국정원·문체부의 역할 및 체계

### (1) 청와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시발점은 2013. 3. 15.일 국정원에서 청와대정보 보고 한 「문건」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기초속에 김기춘은 2013. 8. 5.일 비서실장 부임하였고, 그 직후인 8. 9. 실수비에서 ‘집단행동에 대처하고, 체제수호에 대한 신념을 확립하여야 하며, 헌법·체제에 대한 도전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후 ‘종북

세력이 문화예술계를 장악하고 좌편향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있다'는 등 특정 문화예술계를 거론하면서 정부 보조금의 지원배제와 관련한 지시를 실수비 등에서 수시로 하였다.

박근혜 또한 대수비에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 문제가 많다'는 발언을 하는 등 대수비 외에 당 최고위원 모임 등에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우파가 10년 만에 정권을 잡았지만 MB 정권 때는 좌파 척결에 있어서 한 일이 없다. 나라가 비정상이다.'라는 발언 등을 한 것을 확인하였다.<sup>87)</sup>

김기춘은 2013. 8. 21.경 실수비에서 '중복 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문화예술계에 좌파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분열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획책',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각종 특혜를 받으며 성장, 예술위·영진위·한예종 등 제도권을 장악하여 문화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문건」의 내용과 거의 동어반복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박근혜 또한 2013. 9. 30. 대수비에서 교문수석실로부터 좌편향 문화예술계 대응 방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sup>88)</sup> 「문건」에 기재된[○ 쇼박스·CJ E&M 등 대형 영화사들은 단순히 '홍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건전영화 투자를 외면하고, 좌파가 주류인 영화계의 눈치 보기에 급급]과 유사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은 박근혜가 9. 30. 대수비에서 CJ 등의 투자 문제를 지적하기 전 8. 27.경 「CJ의 좌편향 문화사업 확장 및 인물 영입 여론」이란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청와대에 보고된 국정원의 정보보고에는 'CJ 좌경화의 가장 큰 원인은 靑廬의 대모 역할을 해온 이미경 부회장이 회사의 좌성향 활동을 묵인·지원 한 것이라면서 국가정체성 훼손 등 정부에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CJ측에 시정을 강력 경고하고, 과도한 사업 확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sup>89)</sup>

2013. 12. 19.경 소속 당 최고위원 송년 만찬 모임에서도 박근혜는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우파가 10년 만에 권력을 잡았지만 MB정권 때는 좌파척결에 있어서 한 일이 없다. 나라가 비정상'이라는 내용의 발언<sup>90)</sup>을 하였다. 이는 「

87)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문(2018. 1. 23.), 51쪽.

88) 서울지방법원 제30형사부, 2017고합102. 판결문 (2017. 7. 27.), 6쪽.

89) 우리 위원회 입수,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 조사결과」(2017. 10. 30.), 8쪽.

90) 서울고등법원 2017고합102 형사소송 기록, 「박준우 前정무수석 녹취서」(2017. 5. 4.), 28쪽.

문건」에서 ‘좌파 문화예술계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가 문화예술계 관련하여 언급하는 ‘좌편향 된 문화예술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등의 지적은 수시로 보고되는 국정원 정보보고에 기인하고 있다.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작동 되었을 때는 청와대는 문체부에서 보조금 신청 지원자의 리스트를 전달받아 인물검증을 실시하고, 또한 문제영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전·애국 영화 제작 지원을 위해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건전가족 영화 제작에 지원하였다.

블랙리스트 실행과정을 보면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지원 배제 명단을 넘겨주거나, 예술 위 등에서 지원금을 신청한 명단을 문체부에서 교문수석실로 전달되고, 실제 검증은 교문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로 요청하여 정무적인 판단을 거쳐, 문체부로 하달되었다.

박근혜와 김기춘은 실수비 및 대수비 회의를 통해서 특정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배제 방안 마련을 해당 수석실 등에 지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블랙리스트가 실행되도록 승인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sup>91)</sup>

## (2) 국정원

「문건」과 이후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좌편향 문화예술계 실태 등의 문서, 국정원 개혁위의 적폐청산 TF에서 발표한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문예계 정상화’란 명분으로 특정 문화예술계에 정부보조금 지원배제에서 원인제공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2013. 3. 14. 「문건」 보고 이후 국정원은 청와대에 2013. 8. 16. 「문화예술계 左성향 세력 활동 실태」, 2013. 10. 2. 「문예계내 左성향 세력 재확산 시도 차단 건의」, 2014. 3. 19. 문화예술계 주요 左성향 문제단체 15개, 인물 249명의 성향을 분석하여 근절을 제안하는 「문예계내 左 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등 특정문화예술계의 지원배제를 제안하는 내용의 정보보고를 수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91) 우리 위원회 입수, 「실수비·대수비」 자료 [별첨 5] 참고.

[그림-11]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 보도자료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2017. 10. 30 (적폐청산 T/F)

**1** | 사건 경위 및 주요 의혹

- 국정원은 김기춘 비서실장 부임(2013.8.) 이후, ‘左성향 문예계 인물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조직체건의 好機로 보고 勢 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BH에 報告
- ☞ 2013.8.16. ‘문화예술계 左성향 세력 활동 실태’, 2013.10.2. ‘문예계내 左성향 세력 再확산 시도 차단 건의’ BH 보고
- MB 정부에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건전인사 보임·左편향 단체 보조금 지원 중단 등 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結局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 이념오염 온상이 되어온 ‘문예계 정상화’를 위하여 民·官이 협력하여 ‘左성향’ 단체·인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뿌리뽑아 나갈 것을 제안

또한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작동되면서 문체부에서 산하 기관에서 보조금 신청을 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인물 검증 요청이 오면 민간인 및 단체를 사찰한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지원배제 여부를 결정해 주는 성향 검증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sup>92)</sup> 또한 문체부 출입 국정원 IO는 문체부 및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국정원 지도부 및 청와대에 수시로 정보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인 송OO도 면담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서실장한테 보고하는 것까지 국정원 조OO IO가 계속 챙겼다”라고 진술하였다.<sup>93)</sup> 국정원 IO가 문체부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사항을 국정원 지휘부에 보고한 것들은 아래와 같다.

92) 국정원 개혁위 언론보도,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7. 10. 30.),

93) 우리 위원회, 「송OO 前 문체부 기초실장 면담 녹취록」, (2018. 2. 23.), 42쪽.

## [그림-12] 국정원 보고 좌편향 문화예술계 문체부 조치 사항

< 좌성향 문예 인물·단체 배제 관련 BH 지시 및 「문체부」 조치 >
<p>▲ 국정원 보고서·첩보에 나타난 BH 지시 및 「문체부」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9.3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li> <li>○ 2013.10.31 '문체부 장관, 우수문학도서 선정시 좌편향 배제 지시'</li> <li>○ 2013.12.5 '문체부, 좌파견제 문화예술정책점검T/F 지속 운영 방침'</li> <li>○ 2014.1.24 '문체부장관, 좌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 강구 지시'</li> <li>○ 2014.2.24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 추진'</li> <li>○ 2014.3.17 '문체부, 좌성향 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li> <li>○ 2014.3.21 '문체부, BH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 예정'</li> <li>○ 2014.4.21 '문체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체 정화시스템 가동'</li> <li>○ 2014.9.26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비판단체 지원 차단책 추진'</li> <li>○ 2014.10.27 '청와대, 세월호 다큐상영 논란 관련 문체부실무자 경고 지시'</li> <li>○ 2014.12.19 '문체부, 좌성향 전태일문학상장관상 지원 배제 조치'</li> <li>○ 2015.2.2 '문체부, 민간 예술단체 공연지원 심사시 문제단체 배제'</li> <li>○ 2015.3.6 '문체부 장관, 국립단체 공연작 선정시 좌성향 작품 배제 지시'</li> <li>○ 2015.9.11 '문체부 장관, 문예기금 지원사업 논란 관련 총력 대응'</li> </ul>

「국정원 개혁위의 블랙리스트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이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한 문예기금 등 선정기관에 좌성향 인물 배제와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한 좌편향 문화예술계의 자금줄 차단 건의 등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에 있어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 (3) 문체부

2013. 9. 3. 청와대의 지시로 문체부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좌편향 대응책을 보고한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문화예술분야 좌편향 대책보고가 있는 직후 2013. 9.9. 김기춘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중복 세력의 의도이다, 연극 '개구리'는 용서가 안 돼라는 발언을 실수비에서 하였다. 2013. 9. 9.일 김기춘의 천안함과 개구리에 대한 발언이 있는 당일 문체부에서는 문화예술점검 TF를 구성하여 예술, 영화, 출판 분야별로 이념 논란 사업의 대

책 방안과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점검회의를 하였다.<sup>94)</sup>

김기춘은 박정희 前 대통령을 풍자 비하한 국립극단 연극 ‘개구리’,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케 한 영화 ‘변호인’의 상영에 관해 보고를 받고 정부보조금으로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풍자한 문화예술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지시하였다.

김기춘의 이념 논란 사업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의 지시를 받은 교문수석실에서는 2013. 9. 30. 대수비에 ‘좌편향 문화예술계 대응’ 이란 제목으로 국립극단의 일부 정치 편향적 작품 제작,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이념성 사업 지원과 부실운영 등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하였다.<sup>95)</sup>

김기춘은 국정원의 「시도문화재단의 좌편향 일탈행태 시정필요」라는 정보보고를 받고 문체부 시도문화재단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을 지시한다. 이에 문체부에서는 예술위와 공동으로 문예기금 지원을 받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문화재단의 문예기금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또한 문체부에서는 청와대에서 반미 반대한민국 관련 서적의 우수도서 선정 논란으로 촉발된 출판 분야 및 문예 진흥기금 심사 체계과정의 보완 필요 등을 지적받자 2014. 2. 21.경 「이념 편향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 방안」 보고서를, 2014. 3. 5.에는 「이념논란의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sup>96)</sup>을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2014. 4.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시국선언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청와대에서는 좌성향 문화예술계를 반정부 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배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문체부에서는 청와대의 이런 조치에 호응하여 ‘건전 콘텐츠TF’를 매월 2~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 등을 풀더 명 ‘개구리’를 만들어 보관하였다. ‘건전 콘텐츠 TF’는 예술위, 영화, 출판 등의 분야별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등을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책임심의 위원 등 문화예술계 보조금 신청 사업 등을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내어 검증과정을 거쳐 예술위 등의 산하 기관에 통보하였다.

94) 우리 위원회, 「김OO 前 예술국장 면담 녹취록」(2018. 1. 12.), 6쪽.

95) 위원회 입수 대수비 자료 참조. [별첨 5] 2013. 9. 30. 회의자료.

96) 우리 위원회, 「조OO 前 예술정책과장 면담 녹취록」(2018. 1.12.), 4쪽.

#### (4) 소결

국정원은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배제를 제언하는 정보보고를 수시로 하였다. 평소 김기춘과 박근혜가 갖고 있는 국정에 대한 소신과 철학관이 국정원의 정보보고와 부합하여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동의 계기가 된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국정원의 정보보고를 받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배치되는 특정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배제를 위해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운영하여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배제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문체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산하기관인 예술위, 출판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문화예술계 인물·단체의 성향 검증을 교문수석실과 국정원에 요청하는 등 블랙리스트의 실행부처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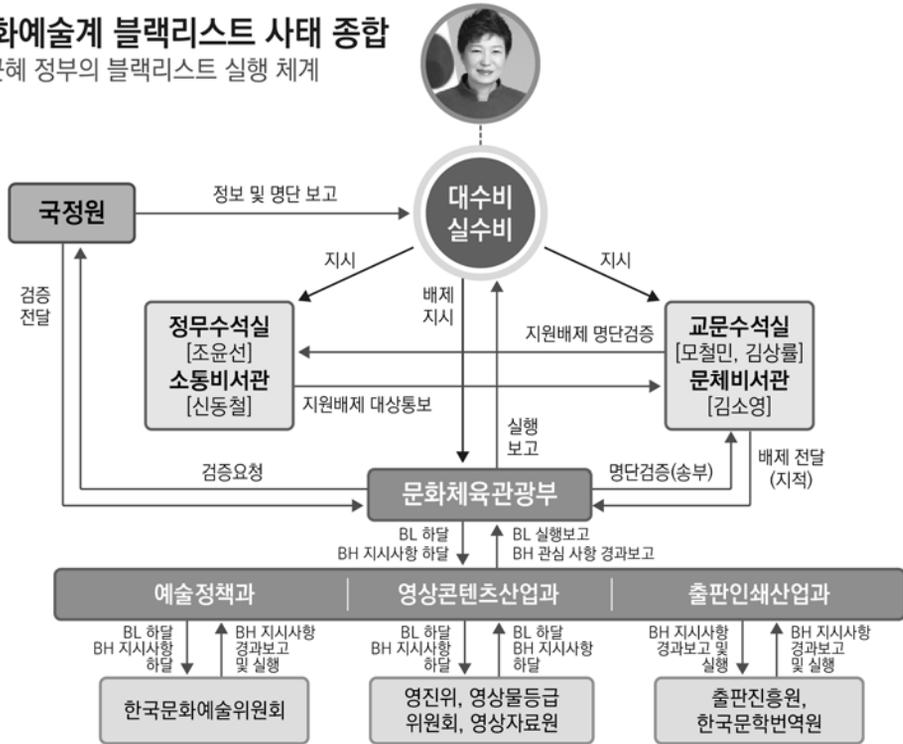
특히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연극 ‘개구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 ‘변호인’ 등을 시발로 특정 성향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배제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 4. 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문화예술인들이 시국선언과 정부 비판적 작품 활동 등이 활발해지자 블랙리스트 작동은 강화되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정부비판적인 영화 제작에 대응 및 건전 세력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5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건전가족영화 제작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김기춘은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좌편향 관련 정보보고 및 보수단체로부터 ‘진보단체 지원배제, 보수단체 지원 요청’을 받고, 실수비·대수비에서 특정 문화예술인 혹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배제를 지시하여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진보성향 인사들을 배제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 신청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물검증을 통해 보조금 지원배제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97)</sup> 특정 문화예술계 정부 보조 민간단체 지원배제를 위한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다.

97) 우리 위원회, 「박준우 前 정무수석 면담보고」 (2018. 2. 28).

[그림-13] 블랙리스트 실행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역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종합**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실행 체계



**다. 민간단체 보조금 TF**

박근혜와 김기춘은 ‘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을 풍자·비하 하거나 정권의 국정철학에 비판적인 연극과 영화를 제작하는 데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 부처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민간단체 실태를 조사하게 하였다. 또한 김기춘은 정무수석실에서 정부부처 민간단체 보조금 대응 및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관련 수석실과 함께 TF를 운영하도록 지시하였다. 정무수석실에서는 국민소통비서관 신동철이 주로 보조금 TF 회의를 수차례 주재하면서 좌편향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배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부처별 보조금 지원현황 전체를 받아 단체와 인물별 검증을 하는 등 2014년 4월 4일에서 5월 말까지 운영되었다. 보조금TF에서 박OO 행정관은 좌편향 단체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개선방안을 담은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을 작성하여 신동철 비서관과 협의한 후 김기춘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하였다.

보고서에 기재된 지원배제의 사유를 보면 대부분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와 같은 성격의

집회 등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대책 방안을 위한 ‘민간단체 보조금 TF활동’의 결과물로 제출된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은 좌성향 단체 및 인물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기 위한 기준과 계획 및 실행방안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 라. 문체부 주요 간부의 강제 사직과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병합) 판결문과 실수비·대수비 회의 결과를 보면 김기춘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 배치되는 공직자는 고위 공직자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14. 9. 12.경 민정수석실 고위 간부의 지시로 문체부 과장급 이상에 간부들에 대한 세평이 작성되었다. ‘세평’ 등의 문건이 유진룡 장관 사임이후 김종덕 장관 부임 직후인 2014. 10. 4.경 실장급 3명의 사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그러나 문체부 과장급 이상 주요 간부들에 대한 세평이 민정 수석실에 파견된 기재부 공무원이 상급 행정관인 파견 검사지시와 그 이상의 누군가의 지시로 문체부 간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였다고 하며, 작성된 문건이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등에게 보고된 후 직후인 10. 4.경 문체부 3명의 실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김희범 차관에게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문체부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한 강제사직은 이후 문체부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와대의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지시에도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 마. 결론

- 1)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정원 작성의 「문건」, 그리고 이어진 국정원의 문화예술계에서 좌파배제대책과 관련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문화예술계에서 자신들의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부비판적인 예술인을 상시적으로 감시, 관리, 통제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서 차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동시켰다.

「문건」은 국정원에 의해 작성되어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한달이 되지 않은 시점인 2013. 3. 15.일경에 청와대에 보고되었다. 「문건」은 “좌성향 문화예술인들이 문화 예술계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문화를 수단삼아 국론을 분열시키고 편향된 가치관을 조장하고 있어 문화융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순수문화예술 활동을 할 건전세력의 협

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 3. 15.경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 이외에도 문화예술계 左성향 세력 활동 실태 보고 등 국정원의 정보보고 문건은 일관되게 左성향 문화예술계가 정부보조금으로 문화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정부보조금 지원 등에서 배제를 시키고 건전문화 세력과 협조하여 좌성향 문화예술계에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국정원 「문건」 이후에도 左성향 문화예술계 배제라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보고가 반복되었다. 「문건」과 김기춘·김종덕 등의 블랙리스트 관련 1·2심 재판과정에서 증거 채택된 「시·도문화재단의 左편향 일탈 행태 시정 필요」, 「문예계 내 左성향 세력 再확산 시도 차단 건의」, 「문예계 내 左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등 BH에 수시로 보고된 국정원 정보보고 및 정무수석 소통비서관실 작성 「문예단체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에 기재된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8년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 언급된 좌파 예술계 배제 기조와도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블랙리스트 실행은 대통령-김기춘 비서실장-문체부-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단계마다 국정원은 정보보고나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성향을 검증하고 배제대상을 선별하여 왔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정보보고 등에 근거하여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성향이 다른 특정문화예술인·단체에 정부보조금 지원배제를 위해 보조금 TF를 운영하였다. 이 보조금 TF는 각 부처별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배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문화예술계의 보조금지원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문체부에 지시하였다. 문체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예술위 등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문화예술계 인물·단체의 성향 검증을 하였다. 인사검증은 교문수석실을 거쳐 정무수석실과 국정원에서 담당하였다. 국정원은 청와대에 좌편향 문화예술계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문체부-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어져 실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적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인물이나 단체의 정치적 성향 등을 검증하여 배제대상을 선별하는 등 블랙리스트 실행과 작동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3) 2013. 9. 3. 청와대의 지시로 문체부에서는 문화예술분야 左편향 대응책을 보고한다. 그리고 2013. 9.9. 김기춘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중복 세력의 의도이다, 연극 ‘개구리’는 용서가 안 돼라는 발언을 실수비에서 하였다. 2013. 9. 9. 김기춘의 천안함과 개구리에 대한 발언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하자, 당일 문체

부에서는 형식적으로 문화예술점검 TF를 구성하였다. 이 TF는 이후 문체부의 ‘건전콘텐츠활성화TF’로 전환되어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이행, 검토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였다.

[별첨 1]

2013. 02.  
문화예술계 진상조사위원회  
장학자 권영진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화예술계내 左派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분열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문화융성'과 문화예술계 건강성 회복을 저해

□ 문화예술계 左派들은 편중지원과 내부 결속력을 토대로 헤게모니를 장악

- 문화계 左派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각종 특혜를 받으며 성장, 예술위·영진위·한예중 등 제도권을 장악하여 '문화권력' 형성
  - 2003년 당시 「민예총」 지원은 보수성향인 예총의 92% → 2006년에는 191%로 급증, 문화예술계 주요 예산지원 창구인 예술위의 위원 11명중 예총 출신은 2명(2003년)에 불과
- 문학·미술·영화 등 분야별 조직을 바탕으로 문화계 新주류로 행세하고 있고, 순수 창작활동보다는 맹목적 정책비판 등 정치투쟁에 치중
  - 예술분야는 '민예총'·'작가회의'·'문화연대' 등 左派단체가 중심세력이고 영화계도 '영화제작가협회'·'영화감독조합' 등에 左派 영화인 포진
- 최근 문화투쟁 거점이 대중매체·인터넷 등으로 이동하자 左派 '풀리테이너' 및 '파워 트위터러'·'나꼼수' 등이 대중영향력을 지속 확대
  - '나꼼수' 김용민 등은 「국민TV」를 발족(3.3), 20~30대가 주대상이던 인터넷상 유언비어·막말 콘텐츠를 방송으로 전파, 중장년층 포섭 기도

□ 左派 문화예술인들은 기득권 유지 및 뒤뜰된 이념 확산을 위해 '文化'를 수단 삼아 國論을 분열시키고 편향된 가치관 조장에 몰두

- 공권력·정부는 '탄압의 주체'로, 대중은 '사회적 弱者'로 왜곡, 공권력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는 물론 그릇된 對北觀을 주입
  - 영화 '26년'·'남영동1985' 및 출판물 '닥치고 정치' 등 문화대체를 통해 정부 불신을 야기

- 쇼박스·CJ E&M 등 대형 영화사들은 단순히 '홍행상'이 떨어진다든 이유로 건전영화 투자를 외면하고, 左派가 주류인 영화계의 눈치보기에 급급
    - 제2 연평해전 영화 'NL'은 투자사 확보에 난항을 겪다 최근 국방부 지원으로 촬영 개시(1.10)
  - 민노총 투쟁현장 및 韓美 FTA·제주북침미항 반대 활동에 문화계·콘서트를 빙자한 집회 주도, '문화'를 활용한 선동대 역할을 수행
    - 선거정국마다 左派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 정치 오염
  - 최근 左派들이 정부 초기 국민대통합 분위기에 편승, 영향력 확대를 모색 중인 가운데 문화계 '左派썰림' 지속시 '문화융성' 구현에 차질 소지
    - 문화계 左派들은 금년 주요 사업으로 '문화 歸村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의식화를 통한 소외계층·중산층 주부 등 저변층 흡수에 부심
      - 문화연대는 마포구 임대 공동육아·교육·생활 등 사회주의적 공동체인 '성미산마을' 운영, '나꼼수' 정봉주는 경백 봉화로 귀촌, 유기농 농산물 판매 등 농촌살리기 빙자 의식화
    - 이와 관련, 건전 문화예술인들은 左派들이 '문화재정 2% 확대' 등 정부의 문화정책에 편승, 再起의 발판으로 악용할 소지를 우려
  - ① 문화예술계가 保守·左派 공히 정치색을 벗고 순수 문예활동에 매진하도록 '문화계 대통합'과 自省 분위기 조성
    -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예술인 취업지원 및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총 100億원) 대상자 선정시 예술 공헌자 위주로 선정
    - 민예총·문화연대 등 골수 左派조직들은 예술위·영진위 등의 정부지원 대상 선정시 철저 배제하는 등 점진적으로 격리 추진
  - ② 문화단체·기업간 협력 MOU 및 메세나협의 펀드 조성·교육사업 등 문화 지원을 적극 독려, 문화계 건전화 촉진
  - ③ 「藝總」·「自總」등 건전세력과 협조, 문화계 左派세력의 反국가·정치 투쟁 실체·폐해를 폭로하는 등 대응활동 강화 유도
- ※ 풀림 : 左派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

<붙임>

左派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

구분	단체	조직 현황 및 주요동향
문화 예술	<b>민예총</b> 이사장 : 권지향 영남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미협(미술)·민음협(음악)·민극협(연극) 등 10개 단체, 문화예술 종사자 3萬 5,000명으로 구성</li> <li>범민련·실천연대 등과 연대해 평택기지 이전·4大江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반대 활동, 反美·反정부 투쟁을 통한 문화선봉대 역할</li> </ul>
	<b>작가회의</b> 이사장 : 소설가 이시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경필·조광래·공자영 등 작가 1,700여명으로 구성</li> <li>민예총 산하 단체이자 사상적 토대를 담당하며 계기시 정부비판 시국선언·합형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왜곡된 입장 전파</li> <li>• 작가 137명은 정권교체 요구 광고 게재(광화, 2012.12.14)</li> </ul>
	<b>문화연대</b> 공동대표 : 강내희 중앙대 교수· 임경희 연세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 갈시기구'를 표방, 문화정책센터 등 9개 분과 문화예술계 교수 등 3,000명으로 구성</li> <li>1.16 용산사고 4년 추모콘서트 '꽃피는 용산' 주도</li> <li>지역사회 저소득·소외계층 대상 의식화 사업 전개</li> <li>• 마포 소재 '성미산 학교' 등 사회주의공동체 건설 추진</li> </ul>
영화	<b>영화제작가협회</b> 대표 : 이 은 영남대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성근·양계남 등 주도 아래 작년 총선·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주장하며 연대 활동 강화</li> <li>'강원래 프로젝트'(4대강)·'아란의 언론'(보수언론)·'두개의 문'(용산사고) 등 시대고발성 독립영화 제작·상영을 지원하며反정부 활동 전개</li> <li>최근 '영화정책 5년 평가' 포럼(1.22)을 개최하는 등 소통 부재·채재 강화 등 정부의 영화정책 비판 활동을 강화하며 조직 단합 모색</li> </ul>
	<b>영화감독조합</b> 대표 : 이준익 감독	
	<b>영화프로듀서조합</b> 대표 : 최관화 프로듀서	
	<b>독립영화협회</b> 회장 : 임창재 감독	
연예	<b>다음기획</b> 대표 : 김영준 (소속 : 김재동·양도현·김C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예총 출신 김영준과 오마이뉴스 출신 박현민 주도, '로크콘서트' 기획 등 젊은층 대상反정부 사상 전파</li> <li>김재동·김미화는 左派행사에서 사회를 맡으며 활동, SNS 등 개인 언동은 자제</li> <li>- 권해효는 조종연계 숙리학교 지원을 위한 콘서트 참여, 서울시장 선거·大選시 野黨후보 선대위 등 활동 활발</li> <li>- 김여진은 1.3 트위터에 자신이 "방송국 출연금지 블랙리스트"임을 알리려는 글 게재하며 이슈화 기도</li> </ul>
	<b>(주)P당</b> 대표 : 박현민	
	<b>기타 폴리테이너</b> 김미화·김여진·권해효 등	

[별첨 2]

매체 - 8

대 의 비  
2013. 9. 26 일 파기

**市·道 문화재단의 左편향·일탈 행태 是正 필요**

廣域지자체 傘下 문화재단(12개)들이 △ 지자체장 情實 인사 △ 이념 편향적 사업 치중 △ 예산 졸속집행 등 不公正 운영되고 있어 監督 강화 必要 여분

- 서울·부산 등 全國 12개 市·道는 지역 문화정책 개발·주민문화 사업 추진 및 문화시설 관리 등을 위해 각기 文化재단을 설립·운영中
  - 경기도가 최초 설립(97년), 17개 市道中 경북·울산·충남·전북·세종 등 5곳外 12곳 설치
  - 지역실정에 맞추어 각종 문화행사·문화예술인 양성·문화재 발굴 등에 年間 2,100億원의 예산을 집행
- 그러나 단체장의 인사권 오남용에다 간부·사업 左편향 등 문제점 다대
  - 단체장들이 선거 報恩차원에서 캠프 출신을 이사장에 임명해 비난 유발은 물론, 政治성향에 부합하거나 이념편향적 인물들로 이사진을 구성, '주요사업 左썸림이 지나치다'는 論難 초래

- ✓ 송명길 인천시장(민)은 2010년 지방선거시 야권연대 농공형상 차원에서 '인천문화재단' 이사장에 민예홍 인천지회장 출신 강 광(73세)을 임명, '대표적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 야기
- ✓ '서울문화재단'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2004.6)를 지낸 김정현이 이사장에 선임(2012.3)되고, 이사진 12명중 전교조·참여연대 출신 등 左성향 인물 5명이 포진
- ✓ '광주문화재단'은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월북 음악기 정율성 추모음악제 및 대통령님 모독 그림을 그린 홍성담이 회원으로 활동중인 광주민예홍 주관 각종 행사 지원
- ✓ '부산문화재단'은 최근 신·구세대간 '소름의 잠' 마련 명분 하에 부산대 앞에 '예술공연 지원센터'를 개설, 문화·예술행사를 빙자해 한대련 등 左편향 단체 후원 확대

KOR41417-2476-1145-0000-000017637000

대 의 비  
2013. 9. 26 일 과 기

○ 특정단체·개인에 대규모 사업 위탁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대두

- ✓ '강원문화재단'은 평창비엔날레(7.20~8.31) 주관을 민예총에 일임, 관람객 17萬명(200萬명 유치목표의 8.5%)에 그쳐 부실 개최 및 호편향적 지원이라는 非難 초래
- ✓ '충북문화재단'은 작년 민예총 소속 단체가 '지역협력형 사업'을 독식, '서울문화재단'은 금년 예술지원사업 대상으로 음한술(국보법 폐지 연극 연출가)을 2회 선정(6,000萬원 지급)

○ 또한, 친분단체와의 수의계약·작품구입 비용 과다 지출 등 방만·자의적 예산 운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

- ✓ '제주문화재단'은 2010.8~2012.10간 일체를 제작사업 105건(2億 8,000萬원)중 20건(1億 5,000萬원)을 직원 부인어 문명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
- ✓ 강원일보는 '강원문화재단'이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산친작가 출품작(64건) 구입에 4億원(작품당 평균 825萬원)을 지출했다며 작품 가격 적정성 및 리베이트 의혹 제기
  - 2012 예술현장장 최치광사 등 사영계약사이다 수의계약을 체결, 반리의혹도 대두

➡ 문화계 健全인사들은 문화재단의 호편향·독단적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이념 오염은 물론 '문화융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 ① 감사원·문체부에서 국비지원 사업 감사 등을 통해 문화재단 운영 실태를 면밀 점검, 보조금 삭감·불탈법 행위 依法 조치 등 정상화를 건언하고
  - 금년 12개 문화재단에 지역문제 특성화·공연장 육성 지원 등 총 523億원의 國費 지원
- ② 이사진 선임시 관련분야 근무경험 등 일정 자격요건 의무화 및 지방의회 등을 통한 검증 절차를 강화, 인사 부조리를 최소화하는 한편
- ③ 健全 언론·단체와 협조, 이념편향·예산낭비 및 과도한 제 몫 챙기기 행태를 알려 국민 公憤 조성 및 경각심 고취 필요성을 제언

2013. 9. 26

## [별첨 3]

##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 1. 우수도서 심사·선정 문제

#### □ 논란 사항

주간지 미래한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2013년 선정 우수도서 가운데 이념편향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책임 문제 거론

##### <미래한국 거론 서적 사례>

- ① 청소년에게 반이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채계바라와 말할라 라틴아메리카(서울대 최광열 작)
- ② 민주노총 김진숙 씨의 추천사를 받은 “비정규직 출근 하세요(어린이책 작가모임 작)”
- ③ 김일성 중심의 일제 항거를 담은 한국의 러지스담스(조한성/친일반민족실상규명위원)
- ④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책(“고장난 거대기업”,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 등”)

#### □ 논란이 된 도서 선정 경위

- 951개 출판사에서 총 5,437종 신청(13년 8월)
- 온라인 및 4회의 오프라인 심사 진행(9.13~1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학회·단체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77명으로 심사위원단 구성
- 최종(4차) 심의시, 이념편향 여부 검토 및 제외 작업을 거쳐, 420종 최종 선정 발표(11.14)
  - 총 10종의 도서에 대한 탈락 처리: 동네북 경제를 넘어(계정임), 10대와 통하는 한국전쟁이야기(이인화) 등
  - 이념 편향 여부 검증이 있었음에도, 검토 대상 도서가 많아, 일부 문제 도서가 걸러지지 않은 측면이 존재

#### □ 향후 조치 계획

- 특별감사 시행 : 문제도서 선정 경위, 내용 검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진상 조사 → 관계자 징계문제도 검토
  - 제발 방지 시스템 마련 : 심사위원 구성시 이념 편향적 인사 배제, 도서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 강화(이념편향 도서 제외 명시 등)
- ※ 논란도서 처리문제 : 배포된 책을 회수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커지며 등 책들이 세간의 주목을 더 받게 될 우려

## 2.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문제

### □ 논란 사항

지난해 12월 심사하고 금년에 발표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사업(448건: 단체 238개, 개인 210명)중 이념편향을 보인 단체나 개인이 포함되었음 지적

#### < 논란이 되는 사업 >

- ① 민예총 산하 민족미학연(대표 조성래)의 학술지 민족미학 발간사업(2011년부터 계속, 2011년 8백만원, 2012년 8백만원, 2013년 6백만원, 2014년 4백만원)
- ② 지난해 '봄페스티벌-국보법', '아이리스 PC방' 연극으로 물의를 빚은 극단 「해화동 1번지」·「서울프린지네트워크」를 재선정
  - 해화동1번지: 2014년 3천만원(2011~2013년은 지원실적 없음)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2010년부터 매년 5천만원
- ③ 민예총산하 작가회의 소속의 '고영철·박용구·신용욱'을 집필기금 대상에 포함(1인당 1천만원)

### □ 논란이 된 사업 선정경위

- 2013년 10월 10일 공고, 공연예술비평은 12월 18일 심사, 문학창작기금은 12월 13~14일 심사, 다원예술사업(서울프린지네트워크)은 12월 20일 심사
  - 지원사업 선정은 분야별로 책임심의위원 5명이 심사 → 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 □ 향후 조치 계획

- 문화예술위의 책임심의위원 위촉방식 개선, 사업관리
  - 위원구성에 있어 문체부와 사전 조율토록 조치(※ 2014년 책임심의위원 구성을 일단 보류토록 기 조치, 별도 협의로 진행)
  - 심의위원 선정기준 강화: 이념편향, 반정부행위 관여자 배제 등
  - 책임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문화예술위 직원 1명씩 포함시켜, 관리
  -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토록 관리
- ※ 위원회 전체회의에 지원사업 선정권을 넘기는 문제: 명망가 중심의 문화예술위 위원 구성상 외부 또는 정치적 요구에 더 취약할 우려

## [별첨 4]

##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 1. 중앙정부 보조금 차단

#### □ 민간단체보조금 TF 운영

- [추진배경] 불법시위, 정권반대운동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실태파악 및 근본적 조치 미흡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사업주체가 다양하고, 선정권한도 개별 부서에 위임되어 있어 총괄적 실태파악 어려움 발생
- [TF구성] 정무수석 주관 하 주요부서\* 참여, △민간경상보조금, △주요부처 공모사업현황 등을 확보해 전수조사 실시(4.4-5.23)
  - \*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 ※ 중앙부처가 직접 선정·교부하는 보조금 전체를 파악(기금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급사례는 미포함

#### □ 조치결과

- [문제예산차단] 총 130건, 139억원의 문제예산 확인·조치 (첨부#1)
  - [조치 미흡한 분야] 국가인권위는 부처에서 조치불가 입장 표명  
언론사지원 단계축소(홍보기획), 민주노총지원 단계축소(고용노동)

〈문제예산 확인·조치 결과(2013~2014.4)〉

구분	계	노동	공정위	교육	통일	농림	문화	복지	환경	인권위
문제예산건	130	20	3	1	3	2	93	4	1	3
금액(백만원)	13,924	3,640	120	150	55	102	8,063	1,743	28	23

\* 2013~2014 회계연도에 연속하여 선정된 건은 각각 1건으로 집계

- [DB운영으로 지속감시] 3천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시위참여 등)와 8천명의 좌편향인사(문제인·불민노당지지 등) DB 구축, 지속 보완
- [시스템구축] 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 결산공시양식 개정(14.3), 수입·지출신고 의무화(16년이후) 국세청자료로 보조금분석 가능(16년이후)
  - \* 종교시설 제외한 1만2천개 공익법인 중 1만개 단체 해당 (3억원 미만 자율공시)

## 2. 좌파인사 확인·조치

### □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배제

- 자체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주요부처\*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파악, 총 26명의 좌편향인사 확인·조치 (첨부#2)

\* (점검대상) 국무총리실, 안행부, 교육부, 문체부, 노동부, 복지부

<심사위원 조치 현황(2013~2014.4)>

구분	계	고용노동	문화체육	보건복지
심사위원(명)	26	6	12	8

### □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

- 각 부처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총 70명의 좌편향인사가 66개 위원회에서 활동(중복계외)중임을 확인

\* 대통령(16개), 국무총리(64개) 소속위원회를 제외한 중앙부처 위원회 전체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위원회 특성 상,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단계별로 해축할 예정 (첨부#3)

- 비서관실별로 해당부처 핵심인사(차관, 기획조정실장 등)를 통해 통보

<정부위원회 위원 확인 결과(2014.5)>

구분	계	기재	미래	교육	통일	법무	안행	문화	농림	산통
위원(명) (중복활동자 제외한 총70명)	79	3	1	3	1	1	7	5	8	3
		복지	환경	노동	여성	국토	해양	법체	보훈	수체
		7	9	12	2	11	1	1	2	2

- 좌편향인사가 다수 포진한 정부위원회는 회의개최를 지양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개최횟수가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 검토

### 3.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

#### □ 모태펀드 운용상의 문제점

- 정부-민간이 함께 만든 모태펀드가 문화·영화계정에 투자되고 있으나,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창구가 되는 사례**\* 빈번
  - \* Ex) 영화 <변호인>, <부러진화살>, <화려한휴가> 등 정치편향적 작품에 투자

〈2014년도 모태펀드 계정별 출자계획〉

계정명	계	중소기업진흥	엔젤	문화	특허	영화	미래	보건
출자규모(억원)	5,470	3,105	300	965	300	100	500	200
비중(%)	100.0	56.8	5.5	17.6	5.5	1.8	9.1	3.7

- [창업투자사] **親屬계열과 대기업(CJ·롯데)**이 문화펀드 운용을 독식
  - \* ㈜유니온투자파트너스(1,730억원), ㈜MVP창업투자(240억원), ㈜캐피탈원(120억원) 등이 참여정부의 후원으로 급성장했고 현재까지 대규모 문화펀드 운용 중
- [문체부] 대규모 정부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사들의 독립성 보장을 내세워 창투자사들의 행태를 용인
-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사들을 실질적으로 선정·관리하는 기관이나 편향적 투자관행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상황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8에 의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 추진계획

- 창투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한국벤처투자의 임원진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 대폭 교체 건의**
  - (대표이사) 전문성을 명분으로 금융권 출신에게 맡겨 왔으나 실제로 벤처창업투자 분야 경험이 없는 증권사 출신
  - (간부) 3명의 본부장급 간부에 의해 사실상 투자가 결정되는 상황으로 전원교체 필요 (기획조정실장, 투자운용본부장, 투자관리본부장)
  - (감사) 임기만료에 따라 내정인사에 대한 검증절차 진행 중

#### 4. 관심조치가 필요한 분야

##### □ 서울시를 통한 좌파단체 활동자금

- 박원순 시장은 보수단체 지원불가 이유로 △단체의 정파적 성격, △특정정파 지지 및 폭력행사 등을 주장\*
  - \*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글(13.6.14)을 통해 밝힌 내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을 공개지지하거나 폭력시위에 참가한 좌파단체들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상황(2011년-현재)
  - \* 민주노총한국노총 (박원순지지-폭력시위주도) : 67억 3,490원
  - \* 은평구 소재 진관사 (광우병 반정부시위-시국법회주도) : 30억 3,400원
  - \*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국가보안법 폐지주장-낙선운동주도) : 1억 5,544원
- ⇒ 국회 국정감사, 서울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편향지원 실태 및 시장-단체대표간의 친분관계를 지속 부각

##### □ 조치가 필요한 부처

- (문체부)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문제단체 지원을 관행으로 인식, 간부공무원들의 개선의지 부족
  - ⇒ 의지와 개혁역량을 갖춘 장차관 임명 후 주요부서 관리 강화, 산하기관은 구조조정을 통한 통폐합 검토 (33개 기관, 18개 위원회)
    - \* Ex) 좌파 성향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대거 이관
- (노동부) 민노총에 대한 관리 필요성 주장하나, 실효성 없는 상태
  - ⇒ 노동단체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장차관 필요
- (교육부) 내부의 적폐를 감추면서, 교육감-지자체 책임으로 전가
  - ⇒ 교육감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학으로의 순환보직제도 폐지
- (인권위·권익위) 좌편향 직원 대거 근무하면서 BH지지도 불이행
  - ⇒ 실무진들을 he부처로 순차적으로 이동시켜 분산조치 필요

[별첨 5]



## 대통령 서면 보고서

국정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실)      2013. 12.20

**□ 개 요**

<b>보고 제목</b>	비서실장 주제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 보고
<b>보고자</b>	국정기획수석(기획비서관)
<b>보고 내용</b>	<p><input type="checkbox"/> <b>금일(12.20일, 08:30) 비서실장 주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b> 첨부외 각 수석실별 안건이 보고·논의되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b>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위원, 각부 실국장 등 중 공직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함. 각 부처가 반국가적, 반체제적 경향을 보이는 단체나 기관의 행사/사업에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임</li> <li>- 각 수석은 관련부처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정토록 할 것</li> </ul>



## 대통령 서면 보고서

국정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실)      2014. 1.3

**□ 개 요**

<b>보고 제목</b>	비서실장 주제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 보고
<b>보고자</b>	국정기획수석(기획비서관)
<b>보고 내용</b>	<p><input type="checkbox"/> <b>금일(1.3일, 08:30) 비서실장 주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b> 첨부외 각 수석실별 안건이 보고·논의되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b>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dacted]</li> <li>● [Redacted]</li> <li>● 문체부, 안행부, 교육부, 고용부 등 산하에 많은 NGO를 지니고 있는 부처들은 그동안 재정지원 해온 산하 NGO들에 대해 단체 성격, 단체대표 성향, 단체 수행사업 등에 대해 조용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고 지원을 지속할지 여부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찾을 것</li> </ul>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 14.3.27. 국정기획수석 (기획비서관)

성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행보고	<input type="checkbox"/> 결심요망	<input type="checkbox"/> 지시사항조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급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긴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합당/합의/공유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유 (초수석)	

- 금일(3.27일, 08:30)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는 자료없이 구두로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 ① 각 부처가 산하 단체·기관에 정부 보조금 지원시 해당 단체·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과거 불법질서나 시위에의 가담 여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 여부, 이러한 범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 유무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한 지침(기재부)이 마련되어 있음.
    - 각 부처가 이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조금 지원결정에 예의를 겪고 있다고 함.
    - 점검은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처벌의 징중에 관계없이 기록으로 남겨 각 부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부수석은 조속히 관련 수석실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 \* (예시) 전 부처가 산하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기관 명단 일체를 검경에 제공, 모든 단체·기관에 대한 사법조치 이력이 등재되어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14.3.28. 국정기획수석 (기획비서관)

성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행보고	<input type="checkbox"/> 결심요망	<input type="checkbox"/> 지시사항조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급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긴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합당/합의/공유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유 (초수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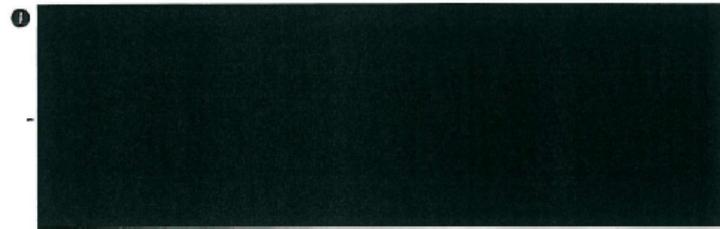
- 금일(3.28일, 08:30)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각 수석실별 안건이 보고·논의되었습니다.
-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 ① 고위직을 포함한 전 공직자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향가치에 대해 철저하게 인식하고 무장되어 있어야 하며, 부처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국정철학과 지향 가치를 양보·포기하거나 훼손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됨. 또한 정치권 등과 주고받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음.
    - 한 예로 민간단체·기관에 국가 보조금 지원절차를 담은 '2014년도 예산·기금집행 지침'의 경우 국가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대상에 종전에는 '불법시위를 주취·주도 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로 서술되어 있었으나
      - 금년 지침에는 '불법시위를 주취·주도한 단체'로 한정하고 '적극 참여한 단체' 부분은 삭제되어 있는 바, 이는 지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현재 경위 파악중)
    - 고위 공직자들이 국가발전, 국가개혁, 국민행복을 위한 강인한 열정, 의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 지향가치를 철저하게 체화하고 있지 않으면 고위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임. 모든 공직자들은 이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함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14.10.31 국정기획수석 (기획비서관)

성 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황보고	<input type="checkbox"/> 결심요망	<input type="checkbox"/> 지시사항조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 급 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긴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박협약공유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유 (속수석)

**급일(10.31 금, 10:00-11:15)**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별첨 안전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 ② 국회에서 15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12.2)되면 내년 초부터 각 부처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회계 - 선정 - 보조금 지급을 각 부처로 하여금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급시 타성적, 편성적으로 전년에 준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급 대상자·기관의 성격, 보조금 용도 등을 사실상 제로 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할 것
  - \* 통념상 국민세금 지원이 부적절한 대상자(단체)에 국고보조금이 협부도 지원되어서는 안됨
- 특히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자 엄선 국고 보조금의 누수없는 효율적 사용 문제에 대해 각 부처 정치권이 실무전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직접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독려 할 것(각 수석들이 소관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유신통화하여 강조해 줄 것) (전수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15. 7.27 정책조정수석 (기획비서관)

성 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황보고	<input type="checkbox"/> 결심요망	<input type="checkbox"/> 지시사항조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 급 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긴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박협약공유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유 (속수석)

**급일(7.27 월, 08:30~09:50)**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별도 안전 없이 국정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중심)**

- ③ 금번 추경예산중 문화부 소관 예산으로 예술계 비판단체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데, 과거에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단체의 활동내용, 성향 등을 분석한 후 지원여부 결정토록 할 것 (교문수석)

2013년 제207호

##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

'13. 9. 30 (월)

## ④ 좌편향 문화예술계 대응

- 국립극단의 일부 정치 편향적 작품 제작,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이념성 사업 지원과 부실 운영 등 지속적 논란 행태에 대한 대책 마련·실시
  - 국공립단체는 국민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작품을 우선 제작
  - 간접지원 및 책임심의제도를 강화, 좌편향 작품은 지원 배제
  - 9.30일 부터 문체부에 감사반을 구성, 지역문화재단 등에 대한 서면·현장 감사(~11.29) 실시 후 제도개선 추진(12월) 등
  - 민간지원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자 등에 협조 당부
  - 보수적 시민운동 단체 등 대안단체 육성

## 비서관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15. 325 정책조정수석  
(기획비서관)

성 격  상향보고  월선요망  지시사항조치  기탁  
 시 료 분 류  보충  긴급 (연기/연기)  해당 없음  공유 (문수석)

금일(25) 수, 08:30-09:15) 비서관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별도 안건없이 국정운영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비서관장 지시사항 중심)

- ③ 현재 다양한 형태의 민간단체(NCC)에 많은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상당부분이 공학 과외세탁에 의해 경유되어 있다고 하는 바, 민경수석 경부수석 보훈수석은 실제 현 상황이 어떠한지 어떻게 되고 있는 지점이 확인한 단체 지원 관례적으로 면담이 스크린해 볼 것 다만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모기회 차분히 진행할 것(민수석, 정부 수석, 교문수석 (각 1기 다))

2014년 제13차

##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

'14. 12. 1 (월)

### 교육문화수석실

#### ⑤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생태계 건전화 추진

- 예산지원 단계별 철저 검증<sup>1)</sup>으로 문제단체·작품 지원배제 및 건전단체·작품 지원강화
  - 사전(심사위원 엄선 선정 역량확대, 집행(문제)지 배제), 사후(조건위반 시 지원중단, 향후 지원 배제) 등

⇒ 문체부내 건전문화생태계 TF 운영으로 주권단위 철저한 검증시스템 운용 중

※(이) 서울연극협회 지원 배제(사전, 서울국립극단배제) 국외 원수 모독영화 배제(건정), 부산국제영화제 지원배제(사법

## [부록 :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일지]

연제	어디서	내용	출처
2013. 3. 15.	국정원	(국정원 작성 보고)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대통령기록관 (민정수석실)
2013. 8. 16.	국정원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활동 실태 보고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3. 8. 21	청와대	(실수비) 김기춘 총복세력이 15년간 문화계 장악 지적 발언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5쪽
2013. 8. 27	국정원	CJ의 좌편향 문화사업 확장 및 인물 영입 여론' 보고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3. 9. 3. ~ 9. 15. 국립극단 연극 「개구리」 공연, [카멜레온(박정희) 비하]	
2013. 9. 3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3. 9. 9.	청와대	(실수비) 김기춘이 '천안함 메가박스 상영은 총복 세력의 의도'다 발언 국립극단 개구리 용서 안 돼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5쪽
2013. 9. 9.		문화예술정책 점검 T/F 구성하는 등 기금 보조 사업에서 특정문예인에 대한 지원 배제책을 마련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3. 9. 9.	문체부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2013. 9. 9.	청와대	김기춘,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 일탈 행태 시정 필요'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 전달과 필요 조치 지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72쪽
2013. 9. 26.	국정원	시·도문화재단 좌편향 일탈행위 시정 필요	문체부 예술정책과 입수
2013. 9. 30.	청와대	(대수비) 박근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 문제가 많다고 지적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6쪽
		좌편향 문화예술계 대응	
13. 9. 30.	청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극단의 일부 정치편향적 작품 제작,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이념성 사업 지원과 부실 운영 등 지속적 논란 행태에 대책 마련 실시</li> <li>9. 30일부터 문체부에 감사반을 구성, 지역문화재단 등에 서면·현장 감사(~11. 29) 실시 후 제도 개선 추진(12월) 등</li> <li>보수적 시민운동 단체 등 대안 단체 육성</li> </ul>	대수비 교문수석실 보고 자료
2013. 10. 2.	국정원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재확산 시도 차단 건의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3. 10. 3.	문체부	문화관련 이념 문제 보고서	검찰 의견서 140쪽
2013. 10. 7.	문체부	문예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추진 실태조사' 관련 협조요청	

연제	어디서	내 용	출 처
2013.10.	청와대	교문수석실로 국정원 정보문건 '한예중 총장이 좌성향 교수의 퇴출 유도 필요' 전달, 문체부로 하달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73쪽
2013.10.31.		문체부장관, 우수문학도서 선정시 좌편향 배제 지시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3.12.5.		문체부, 좌파견제 문화예술정책점검 TF지속 운영 방침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3.12.13.		월간 '현대문학'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신을 부정적 묘사 이유로 이제하, 정찬, 서정인 소설 연재 중단	감찰 의견서
2013.12.18	청와대	(실수비) 김기춘 문화계 권력을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 지적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6쪽
2013.12.18.	청와대	김기춘 '변호인' 영화 문체부 투자 질책, CJ 제재 방안 지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73쪽
2013.12.19.		박근혜는 당 최고위원 송년만찬 모임에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 와야한다. 우파가 10년만에 정권을 잡아지만 MB 정권때는 좌파척결에 있어서 할 일이 없다. 나라가 비정상이다'라는 취지로 발언	감찰 의견서 263쪽
2013.12.20.	청와대	(실수비) 김기춘 좌파세력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 전수조사 지시	대통령 서면 보고서
2014. 1. 3.	청와대	(실수비) 김기춘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실태 전수조사 지시	대통령 서면 보고서
2014. 1. 4.	청와대	수석비서관 모임 김기춘 좌파 지원현황 전수조사 재차 지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7쪽
2014. 1.13.		문화교육 NGO 지원실태 마무리	박준우 수첩
2014. 1.24.		문체부 장관, 좌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 강구 지시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1.27.	국정원	문예기금 운용기관의 보조금 지원기준 보완 필요 의견' 보고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2.	청와대	김기춘은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에 좌파단체, 작가 포함 되었다고 지적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10쪽
2014. 2.17.	예술위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문체부를 통해 교문수석실에 보고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73쪽
2014. 2.18.	미래 한국	반미 '右대한민국' 서적이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고 기사 게재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10쪽
2014. 2.20.	국정원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보완 필요 여론 보고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2.21.	청와대	유진룡 장관 김기춘에게 '이념 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보고서 제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11쪽
2014. 2.21.	국정원	문체부, 김기춘에게 '2014년도 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보고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11쪽
2014. 2.21.	국정원	예술위(위원장 권영민)는 '문서 팩스 발송	문체부 예술국

연제	어디서	내용	출처
2014. 2.	문체부	예술정책과 조OO 과장과 오OO 사무관, 김소연 문체비서관에게 '문예기금 지원 사업 관련' 보고서 작성 보고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11쪽
2014. 2. 24.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 추진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2. 28.		*우수도서 선정 개선 방향 보고*	감찰 의견서 260쪽
2014. 3. 5.	문체부	이념 논란의 사업 선정 관련 대책 방안 (조현래 당시 예술정책과장 작성)	1심 소송 기록 발췌
2014. 3.	언론 보도	동성아트를 친안함 프로젝트 상영계획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0쪽
2014. 3. 14.	청와대	(실수비) 김기춘 수석실 별로 업무 관련 비서관들을 모아 TF 구성하여 내용 정리 지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7쪽
2014. 3. 17.		문체부, 좌성향 단체 참여 현장예술인 지원사업 폐지 방침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3. 19.	국정원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現況 및 고려사항' 보고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3. 21.		문체부, BH에 건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 예정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14. 3. 27.	청와대	(실수비) 각 부처가 산하단체 기관에 정부보조금 지원시 해당 단체,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과거 불법집회나 시위에의 가담 여부,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 여부, 이러한 범위로 처벌을 받은 사례 유무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한 지침(기재부)이 마련되어 있음 정무수석은 조속히 관련 수석실,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 (예시) 전 부처가 산하 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 기관 명단 일체를 검증에 제공 모든 단체, 기관에 대한 사범조치 이력이 등재되어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실수비 안건 및 결과
2014. 3. 28.	예술위	2014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배제 대상자 19명 확정	감시원 보고서 120쪽
2014. 3. 28.	청와대	금년 지침에는 '불법시위를 주축, 주도한 단체'로 한정하고 '적극 참여한 단체' 부분은 삭제되어 있는바, 이는 지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민간단체 보조금 효율화 방안 기금 운영자 - 기금 심사위원 교체 공모사업 시 자격기준 사업 위주로 평가하는 배점 기준 → 단체 기준에 대한 평가 → 불법 시위를 주축 또는 주도한 단체 • 기재부(책임자) 범위 명확하게 할 것	실수비 결과  강100 前 행정관 업무수첩  강100 前 행정관 업무수첩

## 출 처

## 언제 어디서 내 용

	인행부 등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편향 NGO 예산(기부금 포함) 사전 지원 차단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li> <li>• BLACKLIST 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 민간지원 (1조 1,669억원)</li> <li>- 공공기관 (7,006억원)</li> <li>- 배정단체 (1,713억원)</li> <li>- 민간단체 지원 (2,950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위원 교체</li> <li>• 한시적 TF 구성</li> <li>•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li> </ul>		
2014. 4. 4.	청와대	김기춘의 지시로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이 민간단체 보조금 TF 2014.5.말까지 운영. (전수조사 4.4 - 5.23)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8쪽
2014. 4. 4.	청와대	민간단체 보조금 TF 첫 회의 개최 (정무수석 박준우 주도, 모철민 교문수석 참석)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74쪽
2014. 4. 8.		문화단체(좌파) 현황 조사 → 공모사업 현황 자료 요청 → 4/9(수) 확인 무인가 지극 신통단체 확인 및 처벌 방안 여부	강00 前 행정관 업무수첩
2014. 4. 21.		문체부, 국가정책성 확립을 위한 자체 정화시스템 가동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4. 24.	문체부	영상콘텐츠과 이00 사무관 문체비서관실 신00에게 동성 아트를 지원 여부 문의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0쪽
2014. 4. 24.	청와대	문체비서관 김소연 문체부 1차관 조현재에게 동성아트를 지원 배제 연락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0쪽
2014. 4. 24.	문체부	문체부 이00 은 영진위 문00 영진위 국내진흥본장 지원심의 중단 요구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9쪽
2014. 5.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 비서관 김기춘과 박근혜에게 민간단체 보조금 TF의 중간 진행 상황 보고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13쪽
2014. 5.	청와대	소통비서관실 행정관 박00 '문체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 작성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74쪽
2014. 5.	청와대	소통비서관 신동철이 문체비서관 김소연에게 정관반대 운동 등 전력 80여명의 명단 전달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13쪽
2014. 5.	청와대	문체비서관 김소연이 교문수석 모철민에게 명단 보고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13쪽
2014. 5.	청와대	김소연이 문체부 1차관 조현재에게 명단 전달하며 문화예술계의 저항과 비판이 조직적이지 않다고 대응을 주문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13쪽

연제	내 용	어디서	내 용	출 처
14. 6. 7.	청와대	(교문수석실) 2014. 우수도서(공공도서) 선정 방식 개편 - 이념 편향 도서 선정 방식을 위한 심사체계 개편, 학술분야(6월) 문화, 학술분야(12월) 도서 선정. 실수비 자료 보급('14년 152억원)		실수비 자료
2014. 7. 16.		유진롱 장관 사퇴		
2014. 7. 25.		문화융성위 출범 및 첫 회의		
2014. 7. 30.	출판 진흥원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분 선정보급 사업 공고		김기준 외 1심 판결문 24쪽
2014. 8. 4.	문체부	2차관 전달사항 "세종도서 선정관련, 세종도서 명칭 및 선정 프로세스 등에 대하여 원점에서 검토하고 다시 보고(미디어 정책국)		문체부 실국장 간담회 (14. 8. 4.)
2014. 8. 8.	김영한 비망록	(실수비) 김기준이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 지시		김기준 외 1심 판결문 267쪽
2014. 8. 8.	청와대	광주시립 미술관 개최 광주비엔날레 행사 관련 작가 홍성담의 '세월오월(풍자그림)'이 전시하기에는 부적절한 작품이라고 판단, 작품 설치를 불허하는 입장을 밝힘 따라서 동 작품의 전시 금지(광주시 조차)는 물론이고 문체부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국고지원을 재고 또는 축소하겠다는 뜻을 광주비엔날레 주최 측에 경고해 두어야 할 것임		실수비 회의 결과
2014. 8. 20.		김종덕 장관 취임		
2014. 8. 22.	청와대	독립 예술 영화 제작 및 지원 유통 체계 개편 • 국가 정체성 훼손 독립영화 제작 및 유통(전용 상영관)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 지원심사위원 풀 개편(700여명→400여명 이하, 문체인사 배제하고 상업영화 인사 비중 확대) 문체영화 상영 독립영화 지원관 지원 배제(심사절차 강화: 영진위 2차 심사도입) 독립예술 영화 상영 지원 사업에 경쟁체제 도입(일반상영관까지 지원대상 확대) 건전 애국영화 제작 지원(영화발전기금 50억 원, 연내)		실수비 회의자료
2014. 8. 23.	청와대	각 부처마다 산하기관, 단체가 많이 있는데 일부 기관 단체의 경우 정부 철학과 배치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러한 기관 단체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수단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인사권과 예산권으로 앞으로 보조금 축소, 중단 등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전 수석)		실수비 회의 결과

연제	어디서	내 용	출 처
2014. 8. 25.	청와대	<p>독립예술영화 제작 및 유통지원 체계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정책성 훼손 독립영화 제작 및 유통(전용상영관)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li> <li>• 지원 심사위원 풀 개편(700→400여명 이하, 문제인사 배제하고 상업영화 비중 확대)</li> <li>문제 영화 상영 독립예술영화관 지원배제(심사절차 강화: 영진위 2차 심사도입)</li> <li>독립·예술영화 상영 지원 사업에 경쟁체제 도입 (일반상영관 지원대상 확대) 건전·애국영화 제작 지원(영화발전기금 50억원, 연내)</li> </ul>	실수비 회의자료
2014. 8. 25.	영진위	동성아트홀 포함 예술영화전용관 지원배제 심사결과 확정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0쪽
2014. 8. 경		문체부, BHO로 부터 문에게 左波 견제 강화 지시 (출판 유공자 선정 등 현안) [2014.9.3.제38회 국무회의 출판 유공]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9.	부산 국제 영화제 사무국	다이빙벨 상영 결정 발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1쪽
2014. 9. 10.	청와대	10월 부산 국제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다이빙벨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려 한다고 함. 동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문체부장관, 문화융성위 등에서 상영을 하지 말도록 부산시장과 조직위원회에 통보 하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것 (정무수석, 교문수석)	실수비 회의 결과
2014. 9. 11.	청와대	다이빙벨 상영을 결정한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동 영화제조직위원장(이용관)을 비롯하여 영화제 선정위원회(총 7명) 홍호숙 위원(DJ정부때 임명, 조직위 사무차장 역임한 터줏대감, 2000년대 안티조선선언 동참), 남동철 위원(前 시네21 편집장, 08년 조직위 마켓실장) 등 이념 편향적 인물이 다수 포진 되어 있음 이러한 이념 편향적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임무수행이 어려운 만큼 각 위원회 現 위원들에 대한 재검증과 함께 향후 위원 교체시 및 선임위원 선정시에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할 것(진 수석)	실수비 회의결과
2014. 9. 14.	청와대	문체부 부이사관급 주요 인사 세평 종합	대통령 기록관 (민정수석실)
2014. 9.	청와대	(실수비) 김기춘 다이빙벨 상영 금지 지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1쪽
2014. 9. 26.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비판단체 지원 차단책 추진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연제	어디서	내용	출처
2014. 9.26.		소통비서관실 허OO 다이빙벨 관람석 70% 확보했다고 보고 (강OO 진술) 70% 확보는 정무비서관실을 통해 부산의원들에게 부탁함 (오OO 진술)	감찰 의견서
2014.10. 2.	청와대	(실수비) 김기춘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성향은 지양.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지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1쪽
2014.10. 2.	청와대	정무비서관 신동철은 후임 정관주 소통비서관에게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문건 전달 및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 인계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16쪽
2014.10. 2.	김영한 비망록	김기춘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지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7쪽
2014. 10. 2.	청와대	그동안 정무수석, 교문수석 및 관료부처에서 광주비엔날레에서의 홍성담 그림전시 차단, 파주 북소리축제에서의 율목작가 홍명희 문학회 개최 차단, 부산영화제에서의 '다이빙벨' 영화 상영 차단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온 결과 실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음 - 앞으로는 문화·영화예술 분야에서의 이념 편향적인 행태를 방관. 좌시해서는 안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 (정무수석, 교문수석)	실수비 회의 결과
2014.10.	문체부	김종덕 장관 김기춘에게 이념 편향 사업에 세금 지원 바람직하지 않다 등 질책 받고, 송OO 기획실장에게 청와대 관심 사업 이행 점검 지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14쪽
2014.10.	문체부	김종덕 장관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금지 요구 김희범 1차관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상영금지 요구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1쪽
2014. 10.	문체부	건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작성 (창조행정담당관 황OO 작성)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2쪽
2014.10.17	영진위	문OO 씨네코드 선제에 다이빙벨 상영지제 요청, 거절당함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15쪽
2014.10.21.	문체부	김종덕 장관 김기춘에게 박OO 작성의 '건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방안' 보고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2쪽
2014.10.23.	청와대	(실수비) 김기춘 다이빙벨 상영 대관료 등 자금원을 추적하여 실체를 폭로하라고 지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2쪽
2014.10.27.		청와대, 세월호 다규상영 논란 관련 문체부 실무자 경고 지시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4. 10. 31.	청와대	국회에서 15년도 예산이 최종확정(12.2)되면 내년 초부터 각 부처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신상-산정-보조금지급 등) 각 부처로 하여금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급시 타성적 관성적으로 전년에 준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급 대상자, 기관의 성격, 보조금 용도 등을 사실상 제로 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할 것 -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자 엄선, 국고 보조금의 누수 없는 효율적 사용문제에 대해 각	실수비 회의 결과

연제	어디서	내용	출처
2014.11.4.	출판 진흥원	세종도서 763종 선정 심사 통과 세종도서 건전화 추진 동향 보고 / 0100 사무관 작성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4쪽
2014.11.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00은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 이00을 불러 흥성당 작가를 거론하며 정치적 논란 작가 유의 필요 전달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16쪽
2014.11.	문체부	사무관 이00은 출판진흥원 N 본부장, 유00 팀장에게 9종의 문체도서들이 세종도서에 선정되지 않도록 지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4쪽
2014.11.14.	출판 진흥원	세종도서 3차 심사과정에 청와대 허달 도서가 세종도서에 선정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에게 전달	
2014.11.17.	강00 업무수첩	좌파 생태계 대응방안 「TF 정부비서관실과 협업」 정부수석 지침 필요사항-작은 도서관 등을 통해 이념 전개.	검찰 의견서 202쪽, 245쪽
2014.11.21.	청와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사업 관리 강화 → 신청 사업에 대한 단계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체작품(작가) 배제	실수비 회의 자료
2014.11.24.	문체부	국고보조금 사업 종합대책 발표(12.3)	장관주재 실국장회의, 제51회 국무회의 참고자료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특별감사 실시현황 및 향후 계획」
2014.11.26.	청와대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그동안 지원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관성적으로 지원해오던 관행이 많이 개선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대상단체의 성격이나 특성을 감안하면서 지원해 오고 있음. 그러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언론매체에 공익광고나 시책광고를 주는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언론 매체의 성형이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집행해 오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차체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대외 광고 발주실태에 대해 상세히 파악·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광고발주 관행을 바로 잡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국정기획, 정부수석, 미래수석, 교문수석)	실수비 회의결과
2014.12.1.	청와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생태계 건전화 추진 • 예산지원 단계별 철저 검증으로 문제단체·작품배제 및 건전단체·작품지원강화	실수비 회의 자료

연제	어디서	내	용	출처
			<p>* 사천(상사위원 영선, 선정 재량권 확보), 집행(문제직 배제), 사후(조건 위반시 지원중단, 향후 지원배제) 등</p> <p>→ 문체부내 간선문화생태계 TF 운영으로 주간단위 철저한 검증시스템 운용 중</p> <p>* (예) 서울연구협회 지원배제(사전), 서울독립영화제 국가원수모독 배제(집행), 부산국제영화제 지원배제 (사후)</p>	
2014. 12.	청와대	문체부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영진위 지원금 전액 삭감 지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2쪽
14. 12.12.	청와대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지원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영상미디어(문체부지원 16개소)의 이념편향 영화 상영방지 및 사업전화 추진</li> <li>* 다이빙벨을 상영한 성남. 고양 영상미디어 센터의 경우. '15년 지원 배제</li> </ul>		실수비 회의 자료
2014.12.19.		문체부,左성향 진태일 문화상 장관상 지원 배제 조치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14. 12.28.	청와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상영되고 있는데, 영화 제작시 정부출자 펀드 투자지원을 포함 투자자들을 모으기 힘들었다고 함, 반면 종전 상영된 바 있는 '변호인'의 경우 국고 또는 기금이 출자한 6개 모태펀드로부터 35억원 투자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정부 투자기금 지원에 문제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영화제작 지원을 위한 투자자지급 지원제도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건전 애국영화가 널리 제작, 상영되도록 투자자금 지원, 제작자 격려, 시사회 참여, 영화 관람 권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교문수석, 경제수석)</li> </ul>		실수비 회의 결과
2014.12.30.	국무 회의	박근혜, 국가보안법 혐의자 우수문학 도서 선정 논란과 관련 개선 방안 지시		제56회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15. 1. 28.	청와대	건전 영화 보급 확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국·가족애 등을 그린 건전영화 보급 확산으로 통합적 가치 확산</li> </ul>		실수비 회의 자료
2014. 2. 4.	예술위	다원예술 창작 지원 배제 확정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등)		감사원 보고서 325쪽
2015. 1.21.	예술위	소외계층 문화순회(농산어촌)극단 산 등 지원배제 확정		
2014. 2. 2.		문체부, 민간 예술단체 공연지원 심사시 문제단체 배제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5. 2. 4.	예술위	시각예술창작 및 발표 공모 지원 배제 확정 (신선미술관 이지호)		감사원 보고서 325쪽
2015. 2.25.	문체부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논의		문체부 자료

연제	어디서	내 용	출 처
2015. 3. 3.		[대외주의] 국제영화제 지원 개선 ("150303 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 (대외주의)	검찰 의견서 259
2015. 3. 6.		문체부 장관, 국립단체 공연작 선정시 좌성향 작품 배제 지시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5. 3. 25.	청와대	다양한 형태의 민간단체(NGO)에 많은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상당부분이 중복좌파 세력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고 하는 바, 민정수석, 정무수석, 교문수석은 실제 현 상황이 어떠한지(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문화관련 단체지원) 전체적으로 면밀히 스크린해 볼 것, 다만,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차분히 진행할 것 (민정수석, 교문수석)	실수비 회의 결과
2015. 3. 31.	예술위	민간국제예술 교류지원 1차 지원 (국제교류증기기획 프로젝트 지원 하명세) 배제 확정	감사원 보고서 325쪽
2015. 3. 31.	예술위	민간국제예술 교류지원 1차 지원 (전통 연희당 진치미당 등) 배제 확정	감사원 보고서 325쪽
2015. 3. 31.	예술위	국제교류기반 강화지원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운한술) 배제 확정	감사원 보고서 325쪽
2015. 3. 31.	예술위	문학행사 및 연구지원 배제 확정	감사원 보고서 324쪽
2015. 3. 31.	예술위	공연예술 비평연구 활성화 지원 배제 (서울변방연극제 임인자)	감사원 보고서 325쪽
2015. 4. 30.	영진위	부산국제영화제 식감지원 결정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3쪽
2015. 5.	청와대	문체부 오OO 사무관 김OO 행정관으로부터 '세월호 시국선언' 등 관련자 장관보고 후 승부 지시받음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17쪽
2015. 5. 15.	청와대	지난 월요일 '중앙부처 산하단체 재정지원 등에 대한 총 점검 지시의 점검대상 범위와 관련, 각 부처가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는 민간단체(NGO)를 대상으로 점검해 줄 것 (송 수석)	실수비 회의결과
2015. 5. 21.		문화예술분야 지원 사업 관련 현안	문체부 예술정책과 임수
2015. 7.	예술위	청와대 하명 5명 심사과정 배제, 지원금 수혜자 99명에서 70명 발표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18쪽
2015. 7. 15.	청와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담긴 "불안한 외출"이라는 영화가 국립 충남대와 수원시립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상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문제가 심각함. 교육부와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교문수석)	실수비 회의 결과
2015. 7. 17.	예술위	문학작품 활동 지원(아르코문학 창작기금) 지원배제 확정	감사원 보고서 324쪽
2015. 7. 27.	청와대	금번 추경예산 중 문체부 소관 예산으로 예술계 비싼단체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단체의 활동내용, 성향 등을 분석한 후 지원여부 결정토록 할 것 (교문수석)	실수비 회의결과
2015. 7. 28.	출판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분 및 문학부분 선정보급 사업 공고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5쪽

언제 어디서 내 용 출처			
2016. 7.29.	예술위 진흥원	2016년도 심의위원 풀 선정 배제 명단 확정	감사원 보고서 322~323쪽
2015. 9.11.	문체부 장관	문예기금 지원사업 논란 관련 총력 대응	국정원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2015.10.	문체부	사무관 이승재는 출판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세종도서 2차 신청자 목록을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에게 전달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5쪽
2015.10.	청와대	행정관 김OO는 공지영 작가 등 15종의 도서를 선별, 김소연 문체비서관에게 보고 후 이OO 사무관에게 통보 함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5쪽
2015.10.	문체부	이OO는 출판진흥원 N 본부장, 유OO 팀장에게 문체도서 통보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5쪽
2015.10.	출판 진흥원	유 OO, N는 세종도서 선정위원회에 문체도서가 선정되지 않도록 의견 전달	김기춘 외 1심 판결문 26쪽
2015. 11.18.	청와대	문체부가 좌성향 단체에서의 무분별한 지원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는 데 (12월 확정) 이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이므로 차제에 등 개편작업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 (교문수석)	실수비 회의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

# 5

##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활성화TF 등의 구성 및 운영 사건



# 5

##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활성화TF 등의 구성 및 운영 사건



###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특5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활성화TF 등의 구성 및 운영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 가. 직권조사 취지

2013. 8.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부임 이후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지원배제가 구체적으로 실행되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 배제 지시가 구체화되었다.

문체부는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청와대에 제시해야 했고, 이에 따라 2013. 9. 9.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출범했다. 연극 개구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세월호 사건 등을 거치며 청와대의 압력은 점점 강도가 세졌고, 2014. 5. 청와대로부터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실질적으로 내려오면서 문체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존의 '문화예술정책점검TF'의 연속체로 명칭을 변경한 '건전콘텐츠활성화TF'를 구성,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건전콘텐츠활성화TF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활성화TF의 실체를 파악하고 시기별 특성을 확인하여 재발방지책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 문화예술행정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 1) 2013. 8. 김기춘 비서실장 부임 이후, 청와대 기조가 바뀌면서 문체부는 청와대의 질책에 시달렸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2013. 9. 9.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문화예술정책점검TF는 연극 개구리 논란에 대한 대응책 제시 과정에서 발족되었고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
- 2) 2014. 5. 문화예술정책점검TF는 건전콘텐츠활성화TF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계속 운영되었다.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문화예술정책점검TF의 연속체였다. 명칭 변경은 “제대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에서 “취지가 나쁜 콘텐츠는 죽이겠다”는 의미로 의 좀 더 강화된 모습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건전콘텐츠’라는 단어 또한 TF에서 만들었는데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가급적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선정한 단어였다. 건전콘텐츠활성화TF 또한 기초실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관련 담당 실장급이 회원이 되는 식으로 구성되어 한 달에 한 번 이상 진행되었다. 되도록 실장급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책임지고자 했다.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으나 현재 찾을 수는 없었다.
- 3) 2014. 10.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기존의 TF 시절보다 청와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종덕 장관 부임 이후, 이념편향적인 것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기춘의 지시에 따라 건전콘텐츠활성화TF가 구성되었고 TF를 통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등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김종덕을 거쳐 김기춘에게 보고되었고, 문체부 내에서 이념적으로 문제된 모든 내용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 3개 분야로 나누어 향후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 4) 2014. 10. 김종덕 장관 부임 이후에도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계속 운영되었다. 김기춘이 승인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이전 TF들과 다른 성격으로 구성 및 운영되었다. 일단 각 과의 과장, 사무관 등 실무진이 TF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참석자의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TF에서 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이 영진위, 예술위 등 소속기관으로 하달되어 실행계획대로 일부가 실행되면서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가 현실화되었다.
- 5)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2013. 9. 9.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시작으로 2014. 5. 건

전콘텐츠활성화TF로 명칭을 변경하여 계속 운영되다가 2015. 4. 20.자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문체부 내에서 2015. 2.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임과 예술국 오OO 사무관으로 지원배제 창구가 단일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건전콘텐츠활성화 TF 또한 해소되었다. 오OO으로 창구가 단일화 된 것은, 생태계 진흥세부 실행계획 등으로 심사위원제도나 심의절차 등 좌파배제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시스템 정착이 마무리되어 TF를 통한 정책적, 제도적 논의보다는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정치적 성향 검증 위주로 블랙리스트 실행 업무의 내용이 단순해진 것이 요인으로 보인다.

**붙임 :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활성화TF 등의 구성 및 운영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특5,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활성화TF 등의 구성 및 운영 사건**

## 제1절 | 조사 개요

### 1. 조사 취지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2013. 3.경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서를 작성, 문화계에서 정부비판적인 인사나 단체를 배제하는 이른 바 블랙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세웠다. 2013. 8. 김기춘 비서실장의 부임 이후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지원배제가 구체적으로 실행되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 배제 지시가 구체화되었다.

문체부는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청와대에 제시해야 했고, 이에 따라 2013. 9. 9.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출범했다.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체부는 “문화예술계내 좌편향 작품·행사·사업 등을 사전 스크린하고 보수지형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조현재 1차관을 단장으로 ‘문화예술정책점검TF’가 구성, 운영하였다. 연극 개구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세월호 사건 등을 거치며 청와대의 압력은 점점 강도가 세졌고, 2014. 5. 청와대로부터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실질적으로 내려오면서 문체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

련을 위해 기존의 ‘문화예술정책점검TF’의 연속체로 명칭을 변경한 ‘건전콘텐츠활성화 TF’를 구성, 운영하였다. 2014. 10. 김종덕 장관 부임 이후에도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계속 운영되었다. 김기춘은 지원 배제 지시에 대한 문체부의 세부 실행계획 보고서를 요구하였고 문체부는 건전콘텐츠활성화TF를 통해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김기춘은 이 보고서에 대해 만족해하며 실행을 승인하였다.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박근혜 정부 시기 그 명칭과 내용을 달리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물로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을 내놓았고 세부 실행계획은 문예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등 산하 기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건전콘텐츠활성화TF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활성화TF의 실체를 파악하고 시기별 특성을 확인하여 재발방지책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 문화예술행정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 가. 조사개시의 근거

본건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0호)』제3조 등에 근거하여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8. 1. 5.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의결되었다.<sup>1)</sup>

### 나. 조사의 목적(규명과제)

- (1)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활성화TF 등의 시기별 운영 내용 및 구성원
- (2) 건전콘텐츠활성화TF 등의 보고서인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의 시기별 내용 및 연관성
- (3)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활성화TF 결과 보고서가 문체부 산하 기관에 하달된 경로
- (4) 건전콘텐츠활성화TF 등이 박근혜 정부의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방침의 핵심 역할을 했는지 여부
- (5) 2015. 4. 이후 문체부 내 지원 배제 기구 및 실행 경위

1) 제21차 전원위원회 의결서(2018. 1. 5.)

## 제2절 | 조사 경과

## 1. 문건 등 자료조사

[표-1] 문건 등 자료 조사 목록

연번	서명	작성자	작성일	입수일
1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국정원	2013. 3. 15.	2017. 9. 29.
2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	2017. 10. 30.	2017. 11. 1.
3	문체단체조직 내역 및 관리방안	행정관 박OO	2014. 5.	2017. 8. 17.
4	이념 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 방안	문체부 예술과 조OO	2014. 2.	2017. 9. 5.
5	시·도문화재단의 좌편향 일탈 행태 시정 필요	국정원		2017. 9. 5.
6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체부 예술과 박OO	2014. 10. 22.	2017. 8. 17.
7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정책기획관 황OO	2014. 10. 22.	2017. 8. 17.
8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구성·운영	정책기획관 황OO	2014. 10. 22.	2017. 8. 17.
9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2.25.)	창조행정담당관 이OO	2015. 2. 25.	2017. 8. 17.
10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3.16.)	창조행정담당관 이OO	2015. 3. 16.	2017. 8. 17.
11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4.20.)	창조행정담당관 이OO	2015. 4. 20.	2017. 8. 17.
12	건전 콘텐츠 TF 추진경과 보고	창조행정담당관 D	2017. 2.	2018. 3. 6.
13	지자체 문예기금 실태조사 중간보고	문체부 예술과	문체부 예술국 2013. 12. 2.	2017. 9. 5.
14	2017노 2425/2424(병합) 형사소송 2심 증거 제출 실수비·대수비 회의자료 104매	김소영 前문체비서관 변호인		2018. 1. 26.
15	검찰 의견서	서울중앙지검	2017. 2. 7.	
16	2017고합102, 2017고합77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2017. 7. 27.	2017. 8. 17.

연번	서명	작성자	작성일	입수일
17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문체부 감사관실	2017. 8. 24.	2017. 8. 30.
18	특검 김기춘외 3 공소장	특검	2017. 2. 7.	2017. 8. 17.
19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2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18. 1. 23.	2018. 1. 30.

##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표-2] 신청인 등 대인조사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유진룡	前 장관 (2013. 3. 11 ~ 2014. 7. 16)	녹취록 (2017. 11. 29.)
2	A	前 행정관 (2013. 3. ~ 2014. 10.) 예술국 담당	녹취록 (2017. 12. 15.)
3	강OO	前 행정관 (2013. 3. ~ 2015. 12.) 체육 및 기조실(예산, 법률, 국회) 담당	진술조서 (2017. 12. 21.)
4	모철민	前 교문수석 (2013. 3. ~ 2014. 6. 12.)	진술조서 (2017. 12. 27.)
5	김OO	前 행정관 (2014. 3. 31. ~ 2017. 1.) 출판, 아시아문화추진단 등 담당	진술조서 (2018. 1. 3.)
6	B	前 예술정책관 (2015. 8. ~ 2016. 2.)	면담보고 (2018. 1. 5.)
7	김OO	前 예술정책관 (2013. 4. ~ 2014. 11.)	녹취록 (2018. 1. 11.)
8	박OO	前 예술국 사무관 (2014. 1. ~ 2015. 7.)	진술조서 (2018. 1. 11.)
9	조OO	前 예술정책과장 (2013. 11. ~ 2014. 5.)	녹취록 (2018. 1. 12.)
10	김OO	前 행정관 (예술정책과장 2012. 3. ~ 2013. 5. 정책기획관 2013. 5. ~ 2014. 10. 청와대 행정관 2014. 10. ~ 2016. 1.)	녹취록 (2018. 1. 18.)
11	황OO	前 창조행정관, 정책기획관 (2014. 2. ~ 2015. 1)	진술조서 (2018. 1. 24.)
12	신OO	前 문체부서관실 행정관 (2013. 3. ~ 2017. 6.)	진술조서 (2018. 1. 30.)
13	김OO	前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2011. 5. ~ 2013. 11.) 예술정책관 (2014. 11. ~ 2015. 7)	진술조서 (2018. 2. 9.)
14	이OO	前 창조행정담당관 (2014. 11. ~ 2015. 4.)	녹취록 (2018. 2. 17.)
15	이OO	前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2013. 초 ~ 2016. 2.)	면담보고 (2018. 2. 19.)
16	윤OO	前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2011. 2. ~ 2015. 1.)	면담보고 (2018. 2. 19.)
17	송수근	前 문체부 차관 (2014. 10. 기조실장, 2016. 12. 제1차관)	녹취록 (2018. 2. 23.)
18	이OO	前 예술정책과장 (2014. 5. ~ 2015. 12.)	면담보고 (2018. 2. 26.)
19	이OO	前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2013. 12. ~ 2016. 4.)	면담보고 (2018. 3. 5.)
20	정OO	前 영상콘텐츠산업과장 (2014. 10. ~ 2016. 6.)	면담보고 (2018. 3. 5.)
21	D	前 창조행정담당관 (2016. 2. ~ 2017. 4.)	면담보고 (2018. 3. 6.)
22	오OO	前 예술정책과 사무관 (2012. 4. ~ 2015. 5.)	녹취록 (2018. 4. 2.)

## 제3절 | 조사 내용

### 1. 기초사실

#### 가. 감사원 감사

감사원은 2016. 12. 30. 국회의 감사요구안에 따라 2017. 1. 19. ~ 3. 10.까지 실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중 건전콘텐츠활성화TF와 관련된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문체부는 정치편향적인 작품 등에 대한 지원배제 등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의 지시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2014. 5.경부터 건전콘텐츠활성화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4. 10.경 김종덕 문체부장관이 문체비서관실의 지시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예술·영화·출판 등 분야별 제도개선 사항 이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공유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전콘텐츠활성화TF를 재구성, 2015년 상반기까지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문체부 기관감사는 애초에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다루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특검 수사

특별검사는 2016. 12. 21.부터 2017. 2. 28.까지 수사를 실시하였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4. 6.경 건전콘텐츠활성화TF를 구성, 운영하였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 5.경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배제 방침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4. 5. 초순경 최초의 블랙리스트가 문체비서관 김소영으로부터 문체부 1차관 조현재에게 하달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건전콘텐츠활성화TF를 구성하였다. 첫 회의에는 조현재 1차관, 최OO 기획조정실장, 신OO 콘텐츠산업실장, 김OO 총무실장, 김OO 예술국장, 박OO 미디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청와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며 두 차례정도 회의를 진행했다.

2014. 10. “이념 편향적인 사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로 김종덕 장관이 송OO 기초실장에게 관련 사업의 이행 검토 후 청와대에 보고할

문건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 이에 따라 송OO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보고서는 문화정책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실 등 소속 국·과장을 통해 문예기금이 지원된 특정 개인·단체에 대하여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 확인과 함께 문화예술(문예기금 지원, 비엔날레 사업), 콘텐츠(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 미디어(우수도서 선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청와대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심사 강화, 의결 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 문제 작품의 사후 통제 강화, 심사위원 자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다.

특검 수사는 대통령, 문체부로 이어지는 국정농단의 연관을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활성화TF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실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다. 건전콘텐츠활성화TF 관련 판결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념편향적인 것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지 않게 하라는 김기춘 실장의 지시에 따라 김종덕 장관이 2014. 10.경 송OO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으로 보고받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은 문화예술분야, 콘텐츠, 미디어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각 분야는 이념 정치편향 단체·개인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심사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종덕 장관으로부터 받은 보고를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부당개입 범죄 사실의 실행방안에 관한 보고라고 판단하였다.

## 2.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사건

### 가. 연극 ‘개구리’

국립극단에서는 2013. 9. 3. ~ 9. 15.까지 연극 ‘개구리’를 기획 공연하였다. 연극 ‘개구리’의 줄거리는 ‘주인공(신부, 동자승)이 부조리한 현실을 구원할 그분을 찾기 위해 저승으로 떠나나, 그분은 본인 대신 저승에 있는 동자승의 어머니를 이승으로 보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분(노무현 前대통령 상징)과 카멜레온(박정희 前대통령 상징)’의 대

화를 통해 ‘그분’을 미화, ‘카멜레온’을 비하적으로 묘사,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기말고사 컨닝’으로 풍자하였다. 연극 개구리를 관람한 당시 장관 보좌관 조OO는 연극을 관람하던 중 ‘저거 분명히 문제 삼을 텐데, 누군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유진룡 장관에게 문자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2)</sup>

연극 ‘개구리’와 관련하여 교문수석 모철민은 ‘공연 이후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다. 그래서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확인을 해보라고 하였다. 국립극장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희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국민소통이라든가 화합 이런 쪽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것을 대수비 회의에서 보고 드렸다’고 진술하였다.<sup>3)</sup> 예술정책관 김OO은 “개구리가 공연되고 있는 시점에 중앙일보의 최OO 기자가 ‘정부예산으로 이렇게 하면 되나?’라는 말을 했고 예술국 소속 과장이 ‘큰일 났습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기리기리 합니다.’라고 했다. 연극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sup>4)</sup> 김OO의 지시에 따라 공연전통예술과장 김OO은 「국립극단 기획 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를 작성하여 김OO 예술국장, 조현재 차관, 유진룡 장관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하고 청와대 A 행정관에게도 직접 보냈다고 하였다.<sup>5)</sup> 예술국 사무관 오OO을 비롯한 다수 참고인들이 연극 ‘개구리’가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시발점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함으로<sup>6)</sup> 연극 개구리에 대한 청와대의 압력이 강했었고 문체부는 당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분주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연극 개구리를 시작으로 문체부는 청와대가 이념 편향에 대해 매우 민감함을 인지할 수 있었고 향후 그 이전 정부와는 다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조OO 녹취록(2018. 1. 12.) 11쪽.

3) 모철민 녹취록(2017. 11. 29.) 44~45쪽.

4) 김OO 녹취록(2018. 1. 11.) 4쪽.

5) 김OO 진술조서(2018. 1. 12.)

6) 오OO 녹취록(2018. 4. 2.) 8쪽.

## [그림-1]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 공연 개요**

- 기간/장소 : 2013.9.3.(화)~9.15(일) / 백성희장민호 극장(200석) \*공연시간 100분
- 주최 : (재)국립극단(예술감독 손진책)
- 원작/극본·연출: 아리스토파네스, 박근형(극단‘골목길’대표)
- 내용 : 전쟁 후 아테네의 국력 회복을 위해 디오니소스가 죽은 시인에게 조언을 얻고자 지옥으로 간다는 내용의 원작을 현대 시점에서 재해석
- 제작경과: 작품 선정(예술감독, 3월)→연출가 섭외(4월초) 및 연출가 작품제작(4월~계속)→배우 선발(7월, 16명)→공연(9월)

**□ 주요 내용 검토**

- (기본 줄거리) 주인공(신부, 동자승)이 부조리한 현실을 구원할 ‘그분’을 찾기 위해 저승으로 떠나나, ‘그분’은 본인 대신 저승에 있는 동자승의 어머니를 이승으로 보낸다는 내용
- (내용상 문제점) 풍자가 핵심인 그리스 희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현 세대 풍자는 불가피하나, 일부 정치 편향적\*이라 오해될 소지 존재
  - \* (구체적 사례) △‘그분(노무현 전 대통령 상징)’과 ‘카멜레온(박정희 전 대통령 상징)’의 대화를 통해 ‘그분’을 미화, ‘카멜레온’을 비하적으로 묘사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기말고사 컨닝’으로 풍자 △윤창중 전 대변인 스캔들 풍자 등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사항>

- 당초 극본 초안에는 ▲그분(노무현)을 지상으로 모시고 오는 결말이었고 ▲정치적 풍자 및 표현 등이 과도했던 바, 연출가로 하여금 결말을 수정토록 하고(어머니가 지상으로 오는 결말),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토록 지도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
- 수정된 현 내용의 정치적 풍자 수준은 국민들이 수용(이해)할 것이라고 분석(손진책)

**□ 향후 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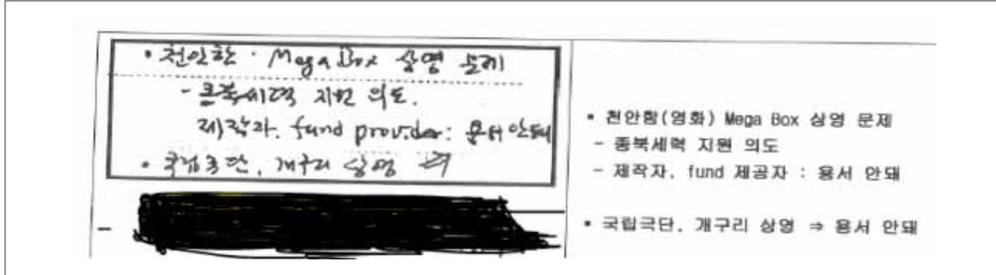
- 현재 공연 중인 작품에 대한 추가 조치 요구(수정 등)는 창작의 자유 침해 논란, 연극계 및 관객(예약자 등)의 반발 등 불필요한 논란 초래 가능
-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 조치
  - 아리스토파네스 시리즈 2차작품(구름1), 9.24~10.5) 등 2013년 국립극단 후속작품에 정치적 소재의 내용은 배제토록 조치(국립극단)
  - **‘全 국립예술단체 주관 공연에는 정치적 편향의 내용은 배제토록 협조 요청**
  - **現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교체 추진(임기: 2013.11.8.)**

1)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추문 등 페러디 내용 포함 예정

문체부는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조치”, “**‘全 국립예술단체 주관 공연에는 정치적 편향의 내용은 배제토록 협조 요청’** 등의 향후 조치계획을 내놓았다. 예술감독 손진책의 사임과 관련하여 예술정책과장 김OO은 손진책 감독이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사임이라고 기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sup>7)</sup>

7) 김OO 진술조서(2018. 1. 12.).

### [그림-2] 개구리 관련 김기춘의 실수비 발언



연극 개구리와 관련한 청와대의 인식은 비서실장주재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내용을 인지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3. 9. 9. 실수비에서 ‘국립극단에서 공연한 연극 개구리는 용서가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sup>8)</sup>

#### 나.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감독 백승우, 2013년 제작)는 2010. 3. 26.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인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한 사건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문을 던지며,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려는 감독의 호기심을 약 75분간 프롤로그(Prologue)와 8개의 소부분, 에필로그(Epilogue) 형식으로 구성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 영화는 정치·사회적 이슈를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1985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정지영이 제작·기획하였고, 정상민이 대표로 있는 아우라픽처스에서 제작하였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3. 9. 5. 메가박스를 포함한 전국 35개관에서 개봉하여 상영하였으나, 9. 7. 전국의 메가박스 상영관에서 상영 중단 조치를 내려 개봉 일과 그 이튿날까지 단 2일만 메가박스에서 상영한 뒤 중단되었다.

[그림2]와 같이 2013. 9. 9. 김기춘 비서실장은 실수비에서 ‘천안함 메가박스 상영은 종북 세력 지원 의도로 제작자, fund 제공자 용서 안 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sup>9)</sup> 당시 교문수석실 행정관 신OO은 ‘2013. 9. 9. 당시 정보보고서에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에

8) 서울지방법원, 「2017고합102 형사소송 증거서류, 증거기록 「수사보고[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사용한 수첩에서 협의 관련 내용 발췌].

9) 서울지방법원, 2017고합102 형사소송 증거서류, 「수사보고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사용한 수첩에서 협의 관련 내용 발췌].

대한 지적이 있었고, 비서관으로부터 동향 파악의 지시를 받아 문체부를 통해 현황 파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sup>10)</sup>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OO은 신OO 행정관으로부터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3 9. 12.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현황」을 작성하여 신OO 행정관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sup>11)</sup>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3]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현황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현황										
□ 영화 개요										
○ 제작·배급사 / 감독 : 아우라픽처스(대표: 정상민) / 백승우										
○ 장르 / 상영시간 : 다큐멘터리 / 75분										
○ 상영등급 : 12세 관람가										
○ 개봉일 / 상영관 수 : '13. 9.5(목) / 33개 스크린(5개 극장)*										
* 메가박스 22개 극장(25개 스크린), 인디스페이스, 아트나인, 아트하우스모모, 감동 신영극장, 아트씨어터 씨엔씨, 대구동성아트홀										
날짜	시사	9.5	9.6	9.7	9.8	9.9	9.10	9.11	9.12	계
관객 수	1,054	1,258	1,292	678	788	646	826	819	1,004	8,365
○ 특이사항 : 인터넷을 통해 홍보비 961만원 보급(200여명 참여)										
□ 진행 경과										
< 상영 이전 >										
○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2회 상영										
○ (8.7일) 해군, 천안함유가족협회 등에서 상영금지 가치분 신청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 3부										
○ (9.4일) 상영금지 가치분 신청 기각										
< 상영(9.5) 이후 >										

### 다. 2013년 우수도서 선정 과정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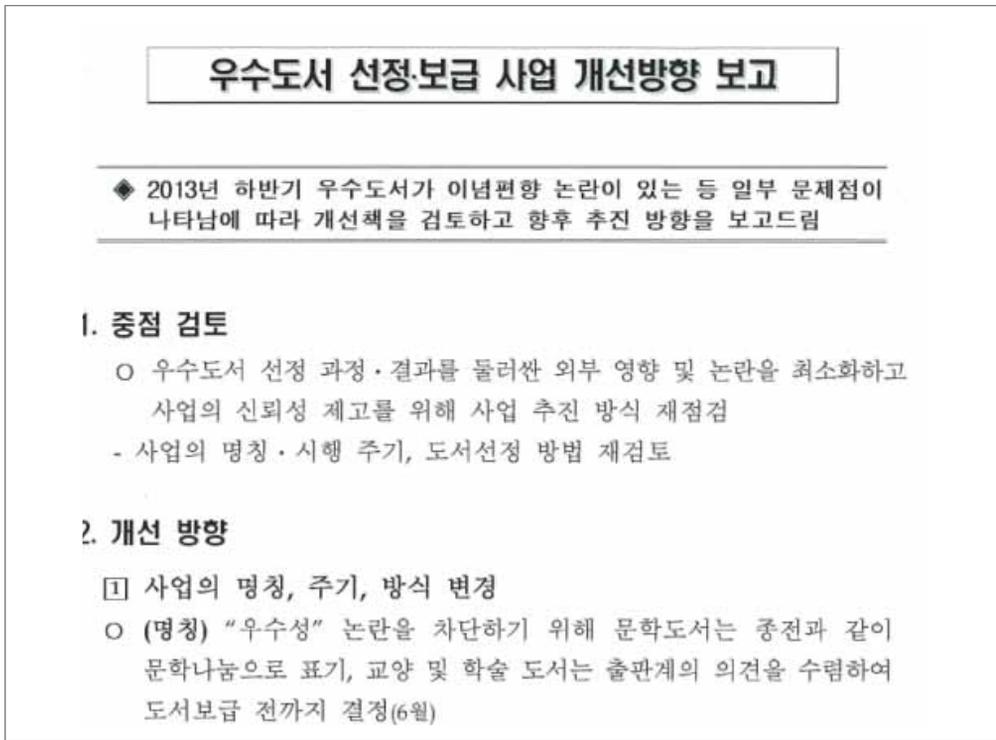
주간지 미래한국은 2014. 2. 18.자 기사에서 2013년 문체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체게바라와 랄랄라 라틴아메리카」 등 7종의 도서가 반미·종북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정치철학과 배치된다는 보도를 하였다. 청와대에서 우수도서 선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사건번호 2017고합102, 공판기록, 신OO 증인신문 녹취서(2017. 5. 29.) 5797~5798쪽.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사건번호 2017고합102, 공판기록, 이OO 증인신문 녹취서(2017. 5. 29.) 2882쪽.

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지적사항이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체부에 전달되었다. 이와 관련해 유진룡 장관은 ‘2014. 2.경 인터넷 매체에서 문체부 선정도서에 대해 시비를 거는 기사가 나오고, 관련 국정원 보고서가 나왔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정원 보고서를 보고 국장, 과장, 이재호 원장, 출판진흥원 간부들을 파면 또는 징계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한 두 장짜리 보고서를 가지고 김기춘을 만났다’고 하였다.<sup>12)</sup> 유진룡이 김기춘에게 보고한 보고서는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이○○ 등이 작성한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로 [그림4]와 같다.

[그림-4]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



이 보고서는 2014. 2. 28. 작성해 유진룡 장관에게 보고 후 교문수석실에 송부하였다. 보고서의 개선방안을 보면 ㉠ 사업의 명칭, 주기, 방식 변경으로 우수도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문학도서는 ‘문학나눔’으로 표기하고, 교양 및 학술도서는 출판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반기별 사업을 연 1회 사업으로 전환 ㉡ 도서 선정 시스템 강화를 위해 한국출판진

12) 유진룡 녹취록(2017. 11. 29.) 12쪽.

흥원에 분야별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위원회는 도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선정 위원회는 이념 편향 등 결격사유를 중심으로 심사 ③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 강화로 이념 편향 도서는 우수도서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그 후 2014. 4.경 우수도서의 명칭이 '세종도서'로 변경되었고, 심사절차도 보고 내용과 같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3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라. 세월호 참사

모철민 교문수석 등 다수 참고인들은 블랙리스트가 증폭되는 계기로 2014. 4. 16. 세월호 참사를 거론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문화예술인들이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는 분위기였다. 청와대에서는 세월호 관련 시국 선언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반정부적 활동으로 간주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명,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인 754명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실행된 블랙리스트 사례를 보면 홍성담의 광주비엔날레 전시 작품 '세월오월', '안산 순례길' 등 세월호와 관련한 작품들이 철거되거나 지원 배제되었다.<sup>13)</sup>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영화 다이빙벨이었다. 2014. 9. 2.경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이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2회 상영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하자, 2014. 9. 4. 김기춘은 실수비에서 예술을 가장한 이념 및 정치 성향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항의 조치 및 다이빙벨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교문위원을 통해 다이빙벨 선정 참여자 및 선정과정 자료를 요구하였다. 당시 교문수석 송광용은 위와 같은 지시를 문체비서관 김소영에게 전달하면서 문체부와 상의하여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정무수석 조윤선은 국회 및 시민 단체를 통한 다이빙벨 상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성 등을 논의하고 교문수석실에 다이빙벨 상영현황 정보공유 등의 협조를 구했다.

다이빙벨관 관련해 특검에서 드러난 강OO 前 행정관, 故 김영한 前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내용을 비교, 정리하면 [표3]과 같다.<sup>14)</sup>

13) 서울지방법원, 2017고합102 형사소송 증거기록, 수사보고 [강OO 전 행정관이 사용한 수첩에서 협의 관련 내용 발췌].

14) 서울지방법원, 2017고합102 형사소송 증거기록, 수사보고 [박준우 정무수석, 강OO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 내용 비교].

**[표-3] 다이빙벨 관련 강OO, 김영한 업무일지**

작성일자	작성자	기재 내용
2014. 9. 3.	김영한	다이빙벨 손석희 피소사건(업무방해) - 정무, 교문
2014. 9. 4.	강OO	부산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감독 다이빙벨 다규멘터리 실장님 지시사항
2014. 9. 5.	김영한	다이빙벨 - 교문위 - 국감장에서 성토당부 신성 간사, 부산영화제 MBC 이종인 대표 이상호 출품
2014. 9. 5.	강OO	부산 국제영화제
2014. 9. 5.	강OO	다이빙벨 수사
2014. 9. 6.	강OO	다이빙벨 - 다규 제작 - 방영 - 여타 죄책
2014. 9. 10.	김영한	부산영화제 - 다이빙벨 - 이용관 집행위원장, 60억 예산 지원 손석희, 송옥순-이종인 부부 - 이상호 기자
2014. 9. 11.	김영한	정부 각종위원회, 지체 위원회 위원선정문제 多 부산위원장 (이용관) 이념편향적 인물, 중립적 공정 임무 수행에 애로 소관 위원회 재검증, 재검토
2014. 9. 11.	강OO	다이빙벨 (부산국제영화제) 485석 상영 선정 경위 프로그램머 → 좌파 장악
2014. 9. 20.	김영한	다이빙벨 상영할 것으로 예상됨 → 수사
2014. 9. 20.	강OO	부산국제 영화제 485석 (2회 관람) 대응방안
2014. 9. 23.	강OO	다이빙벨 → 일반 유가족 아픔 상기함에 따라 두 번 올리는 것임
2014. 9. 24.	김영한	다이빙벨(부산영화제)
2014. 9. 25.	강OO	수석님 지시사항 다이빙벨 → 부산 의원 항의 → 저명 문화인 기고
2014. 9. 26.	강OO	다이빙벨(국제영화제) 문제점 → 차세대 연대 다이빙벨에 한하여 퍼포먼스 (長)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ex) 다이빙벨
2014. 10. 2.	김영한	
2014. 10. 2.	강OO	부산국제 영화 '다이빙벨' (10. 2. ~ 3) 인천지방법원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
2014. 10. 3.	강OO	부산국제영화제 증인 채택 황선 영화, 다이빙벨 선정 과정
2014. 10. 7.	강OO	다이빙벨 대응 → 문체부 대응
2014. 10. 9.	강OO	다이빙벨 영상 해외공관 시민단체(정부)(지원)대응 논의 / 대응방안 준비
2014. 10. 22.	김영한	(長) 다이빙벨 상영 - 대관료 등 자금원 추적 - 실제 폭로
2014. 10. 23.	김영한	시네마달 내사 - 다이빙벨 관련
2014. 10. 24.	강OO	다이빙벨 영화 상영 소감 정리 보고, R·문OO 행정관

작성일자	작성자	기재 내용
2014. 11. 3.	강OO	다이빙벨 최종 결과 보고서 정리

청와대와 문체부의 상영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이빙벨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되었고, 이후 2014. 10. 23.부터 일반상영관 예정이었는데 김기춘은 2014. 10. 22.경 실수비에서 다이빙벨 상영 자금원 추적 등 다이빙벨 상영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교문수석실은 문체부에 다이빙벨의 일반 상영관 상영을 막을 방안 강구 지시와 함께 다이빙벨 상영 현황에 대한 일일보고를 지시하였다. 영상콘텐츠산업관 사무관 윤OO의 요청으로 영화진흥위원회 문OO 부장이 시네코드선재 김낙숙 대표에게 다이빙벨 상영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윤OO은 2014. 10. 19.부터 2015. 1.초까지 교문수석실에 다이빙벨 상영 현황에 대한 일일보고를 하였다. 윤OO이 교문수석실에 송부한 일일보고서에는 다이빙벨 상영 스크린 수, 상영일 등과 함께 정부지원 수혜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영 전 조치로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않도록 요청’, 상영 후 조치로 ‘다이빙벨을 상영한 예술영화 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의 조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결국, 2015. 3.경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 대비 50% 내외로 감축하기로 조정하였고, 영진위는 이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2015. 4. 30.경 ‘2015년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공모’ 심사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8억 원으로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 [그림-5] 다큐 영화 ‘다이빙벨’ 현황 보고

### 다큐 영화 ‘다이빙벨’ 상영관 현황 보고

□ 보고 개요

- 10월 23일(목)부터 다큐 영화 ‘다이빙벨’ 이 영화상영관에서 개봉
  - 현재 9개 상영관에서 개봉예정이며, 이 중 5개가 영화발전기금(영진위)을 지원받고 있는 예술영화전용관\*
  - \* 착석규모 연동한 정액 보조금('14년 6억 원/1관당 평균 40백만원 내외)

□ 상영 예정 영화관 현황(9개, 10.18<금> 기준)

- 독립·예술영화전용관 7개 (KU시네마테크·영화공간주안·아트나인·시네코드선제·아트하우스모모(이상 영진위 지원 예술영화전용관) / KU시네마트랩, 인디스페이스)
- 일반 극장 2개 (메가박스 안산, 안동중앙시네마)

□ 향후 대책

- (상영 전 조치) 영화를 상영하지 않도록 요청
  - 영진위 지원 예술영화전용관 5개 중 대화가 가능한 1곳(씨네코드선제)에 요청(10.17)하였으나, 거절당함(연락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
  - \* 영진위(선임 부장)가 대표와 통화, 다만, 10.17일 예매사이트(맥스무비)에 등록되어있던 해당 극장은 10.18 현재 삭제된 상태임(상영관 홈페이지는 여전히 개봉 예정 홍보 중)
  - 기타 상영관에 요청시 민간에 대한 검열 및 억압 논란 야기,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으로 다이빙벨 측에 상영의 당위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음
  - \* 나머지 상영관은 김성 운영자·프로그래머(아트나인, KU시네마, 아트하우스모모), 민주당 지역구(주안), 독립영화 전용관(인디스페이스), 단원고 소재지(메가박스 안산)로 요청 곤란
  - \*\* 특히, 메가박스 안산은 위탁상영관으로 본사 통제 미치기 어려움, 또한 메가박스는 50% 지분을 중앙일보가 보유하고 있으며, '13년 천안합프로젝트 상영 중단 경험으로 외부인력 민감
- (상영 후 조치) 영화를 상영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 3. 문화예술정책점검TF

## 가. 문화예술정책점검TF 출범

문체부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부임 이후,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했다. 특히, 2013. 9. 연극 개구리 사건을 시작으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세월호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문체부 내부에서는 이념 편향 논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13. 9. 9.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발족하였다.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는 2017. 10. 30.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보고에서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정원 적폐청산TF의 결과에 따르면 문체부는 “문화예술계내 좌편향 작품·행사·사업 등을 사전 스크린하고 보수지형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3. 9. 9. 조현재 1차관을 단장으로 한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출범했다. 이 문건은 국정원 IO가 작성한 것으로 이념편향이 과도한 작품들의 창작·공연을 견제하기 위해 사전·사후 조치를 마련, 성과도 거두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실제로 당시 문화예술정책TF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에 대해 정책기획관 김OO은 개구리 등으로 청와대에서 질책을 받은 유진룡 장관이 좌편향에 대한 대응책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에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하여 보고했다고 했다. 김OO은 유진룡 장관이 “뭔가 우리도 대응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만들어보라”고 했다. 기조실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청와대 기조를 반영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유진룡 장관은 내용을 완화시키자며 ‘헌법 질서라든지, 누가 봐도 손댈 수 없는 문구로 수정하라’고 지시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했다.<sup>15)</sup>

좌편향에 대한 대응책 보고서는 국정원 정보보고에 따른 김기춘의 지시였다. 국정원 적폐청산TF 결과보고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3. 8. 16.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라는 제목의 정보보고를 작성해 김기춘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김기춘은 2013. 8. 21. 실수비에서 중복세력이 15년간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체부에 ‘특정 편향(左편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유진룡 장관의 지시로 기조실에서 작성한 2013. 9. 3.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는 이런 배경에서 작성, 보고됐다. 이후 국정원은 2013. 10. 2. ‘문예계내 左 성향 세력 재확산 시도 차단 건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관련 내용은 [그림6]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김OO 녹취록 7쪽.

## [그림-6] 국정원이 작성한 정보보고 일시 및 제목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2017. 10. 30 (적폐청산 T/F)

**1** | 사건 경위 및 주요 의혹

- 국정원은 김기춘 비서실장 부임(2013.8.) 이후, ‘左성향 문예계 인물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조직재건의 好機로 보고 勢 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BH에 報告
- ☞ 2013.8.16. ‘문화예술계 左성향 세력 활동 실태’, 2013.10.2. ‘문예계내 左성향 세력 再확산 시도 차단 건의’ BH 보고

문체부가 보고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에 따르면 김기춘의 지시에 따라 예술지원을 하는 예술위에 초점을 맞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교문수석실 행정관 A에게 인편으로 전달했다. 보고서는 문화예술 분야 내에 특정 편향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어 보수 가치 약화 현상이 우려된다고 적시하였다. 예술위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문예기금 지원 단체인 한국작가회의와 민예총 대구지부에 불법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수령한 후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으나 한국작가회의가 확인서 요구에 반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거부했다는 내용이다.

[그림-기] 청와대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2013. 9. 3

1. 문체부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특정 편향(左편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보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예술지원을 하는 예술위에 초점을 맞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근거를 남길 경우 잠음 발생 개연성에 대비 8.30 저녁 교문수석실 A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자료 전달

## 2. 보고 내용 요약

## 【 최근 동향 】

가. 문화예술분야내에 특정 편향적(左 편향적 \* 보고서에서는 ‘좌편향’ 용어 사용 지양) 가치가 아직 잔존하고 있어 보수가치 약화 현상 우려

## 1) 문예예술진흥기금 지원금 거부(2010년, 한국작가회의)

- 예술위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문예기금 지원 2개 단체(한국작가회의, 민예총 대구지부)에 대해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수령한 후 보조금을 지원기로 결정

- 한국작가회의는 확인서 요구에 강력 반발(기자회견 등 개최)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거부하였고 이후 공모 지원신청에 불참

## 2) 예술계 시국선언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관련)

- 한국작가회의(작가회의 명의, 2013.8.24), 연극계(최종원 등 12인, 2013.7.15)

문체부는 [그림8]과 같이 대응방안으로 문화예술기관 주요 임원 교체시 또는 문화예술 분야 사업 지원시 특정한 정치적·사회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순수예술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림-8] 청와대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중 대응 방안

## 【 대응 방안 】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기관 주요임원 교체시 또는 문화예술분야 사업 지원시 특정한 정치적·사회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순수예술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

1) 예술위 위원 등 문화예술기관 임원 임명시 특정 편향인사 배제

\* 예술위 위원 : 2013.11월 3명 임기만료 / 2014.12월 9명 임기만료

2) 문화예술 지원사업

- 순수예술가치 기준하에 '책임심의위원'을 선임,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하고 편향성이 배제된 순수예술작품 위주로 지원

\* 책임심의위원 : 8개 예술분야 총 40명, 임기 1년(2013.3~2014.2)

- 순수예술이 아닌 특정 편향성이 강한 작품에 대한 지원이 배제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금 관리규정 개정

문체부는 좌편향 대응책 보고서 작성과 동시에 문화예술정책점검TF도 출범하여 청와대의 바뀐 기조에 맞춰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부심하였다. 당시 예술정책관 김OO은 교문수석 모철민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좌파 청산이 제대로 안돼서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확실히 하려고 그런다.'고 했으며 김기춘 실장한테 세계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한 매주 청와대 A 행정관이 문체부 과장들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의 질책을 전달했다고 했다.<sup>16)</sup> 문체부 상황을 담은 국정원 정보보고 및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바뀌고 당시 청와대 기류가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해 문체부에서는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발족,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16) 김OO 녹취록(2018. 1. 11.) 2쪽, 23쪽.

## [그림-9] 문체부, 左派 견제 '문화예술정책점검TF' 지속 운영 방침

문체부, 左派 견제 '문화예술정책점검 TF' 지속 운영 방침

2013. 12. 5

1. 문체부는 문화예술계내 左편향 작품·행사·사업 등을 사전 스크린하고 보수지형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대응책을 논의키 위해 지난 9.9 출범시킨 '문화예술정책점검 TF'(단장:조현제 1차관)를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하되 사전적 문제해결 노력을 일층 강화할 계획

## 2. 關聯 動向

가. 문체부(장관:유진룡)에서는

- 1) 문화예술계 일각에서 이념편향이 과도한 작품들이 창작·공연되는 등 건전 이념지형 조성을 저해하는 행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해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구성하고
- 2) 창작의 자유, 이념적 편향 여부, 정치적 선동 의도, 대중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사후 조치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는 바

√ 사전 조치 : 국립문화예술기관 직접 제작, 정부지원을 받은 민간 제작, 정부지원 없는 민간 투자·제작 등으로 분류

- ① 국립기관 제작 : 이념갈등 유발소재 지양, 국민소통과 화합 중시
- ② 민간제작(정부지원) : 지원결정시 이념편향 여부를 신중 평가
- ③ 민간제작 : 창작의 자유는 인정하되 이념적 편향 및 대중선동의도가 과도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

√ 사후조치 : 문화예술행사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同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지원 또는 대응방안 강구

- 3) 문화예술기관 임원 임명시 특정 편향인사 배제, 국내외 영화제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사전 스크린시스템 구축, 영화·연극·문예·예술·도서관 등 각계와의 소통 및 정보 공유 등 소기 성과 거양

나. 이와 관련, 조현제 1차관은

- 1) 현재 정국 분위기로 보아 내년도에는 左派 문화예술인들의 勢 규합 움직임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시국 관여 등 준동이 예상되고 있어
- 2) 내년도에도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지속 운영(현재 매주 月)하여 문화예술 관련사업의 기획·집행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 3) 정부와 소통할 기회가 적어 정책이해도가 낮은 젊은 현장 문화 예술인들과의 소통 확대, 중도 진영 문화예술인 적극 포용, 극단적 정치편향 세력 배제에 보다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

\* 특히 출판·문학·영화·연극 등 부문에서는 이념문제로 무뎠힐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 전략 모색 계획

#### 4) 연장선상에서

- 확대기관장 회의(12.10), 실국별 업무보고(12.24-27), 산하단체 업무 계획 승인(2014.1), 공공기관장 회의(2014.1) 등을 통해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속에 左派 발호에 선제 대응토록 독려할 계획

※ TF 구성개요 및 운영실적

문화예술정책점검TF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입수한 문서는 국정원 적폐청산TF 결과보고가 현재로서는 전부이다. 국정원 적폐청산TF 결과보고를 살펴보면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일각에서 이념편향이 과도한 작품들이 창작·공연되는 등 건전 이념지형 조성을 저해하는 행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해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구성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창작의 자유, 이념적 편향 여부, 정치적 선동 의도, 대중의 평가 등을 고려한 사전·사후 조치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14년에도 좌파 문화예술인들의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문체부 참고인들의 조사 결과, 문화예술정책점검TF는 기조실장 최OO 주재로 매주 월요일 실국장 회의 이후에 진행되었다. 관련 실국장들이 모여 지난 주 사업 일정과 다음 주 일정에 대해 통보하는 수준의 회의로 5~6회 정도 진행되었다. 첫 회의 주재만 조현재 차관이 했고 다음 회의부터는 최OO 기조실장이 주재했다.

정책기획관 김OO에 따르면 참석자는 창조행정담당관 김OO, 예술국장 김OO, 콘텐츠국장 송OO, 미디어국장 박OO 등<sup>17)</sup>이었다. 그 외에도 예술정책과장 김OO 등이 참석했다. 국장들이 지난 주 사업과 다음 주 예정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면 창조행정담당관 김OO이 정리해 청와대 교문수석실과 국정원 조정관 조OO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당시 조현재 차관이 김OO에게 사무관들 시키지 말고 직접 정리하라고 지시해 문서를 직접 작성했고 생산한 관련 문서는 ‘개구리’라는 폴더를 만들어 보관했다. 김OO은 “2013년 하반기 만든 TF의 모든 자료를 개구리라는 폴더에 넣어 보관했다. 연극 개구리 사건에서 따와서 장난삼아 폴더명을 ‘개구리’라고 지었다.”라고 했고 후임인 황OO 또한 “김OO 과장이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개구리라는 폴더와 함께 ‘위에서 실적 요구가 있으니 회의를 하면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고 했고 개구리 폴더에 파일이 여러 개 있었다.”라고 진술했다.<sup>18)</sup> 황OO의 후임인 이OO은 황OO으로부터 개구리 폴더를 인수인계받긴 했으나 당시에는 이미 개구리 이슈 자체가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폴더를 열어보지는 않았다고 했다. 개구리 폴더가 현재 존재한다면 당시 문체부 상황과 대응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으나, 현재 개구리 폴더는 삭제되어 찾을 수 없었다.

문화예술정책점검TF 참석자들은 ‘우리 문체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TF를 운영했다고 했다. 예술국장 김OO은 “예술 쪽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겠구나 생각했는데 출판, 영화 쪽이 있어 기조실로 넘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또한 보고서에 제시된 사전 조치 중 “국립문화예술 기관 직접 제작”은 국립극단 개구리 같은 연극을 문체부가 직접 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민간제작 지원 결정시 이념편향 여부 신중 평가”는 겉으로는 세계 보이기 위해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신중 평가 형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으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두루뭉술하게 서술되어 있다고 했다.<sup>19)</sup> 국정원 적폐청산TF 결과보고에서 제

17) 김OO 녹취록(2018. 1. 18.) 4쪽. 송OO 당시 콘텐츠국장은 ‘구성원이긴 했으나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TF에 참석한 바는 없다. TF 같은 걸 구성해서 논의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했다. 송OO 녹취록(2018. 2. 23.) 5쪽.

18) 황OO 진술조서(2018. 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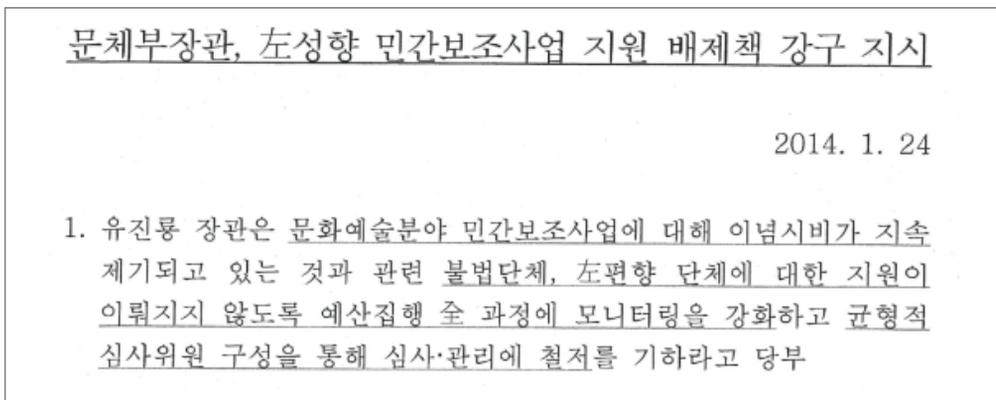
19) 김OO 녹취록(2018. 1. 11.) 27쪽.

시된 실행계획 대로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청와대의 기초를 반영해 문체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술국장 김OO은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했고<sup>20)</sup> 정책기획관 김OO 또한 “우리 문체부 안에서도 TF를 한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보고서를 보냈던 거죠. 면피용으로라도 TF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sup>21)</sup>라고 진술했다.

당시 문체부는 연극 개구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세월호 사건 등으로 불거지는 청와대 질책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발족, 운영하였고 TF에서 관련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까지는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내려오지 않은 시기로 청와대의 질책에 관련 보고서로 대응하는 수준에서 논란을 해소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후 문체부 활동에 대해서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 결과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를 통해 문체부 당시 상황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

#### [그림-10] 문체부장관, 좌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 강구 지시



2014. 1. 24. 국정원 정보보고서에는 문체부가 좌성향 민간 보조사업 지원 배제책 강구를 지시했다고 보고하였다. 그 즈음 김기춘은 2013. 12.말경 ‘쫓부처 좌편향 지원 문제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2014. 1.초에는 문체, 교육, 행안, 복지 등 특정 부처를 짚어 NGO에 지급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sup>22)</sup> 김기춘의

20) 위 녹취록 20쪽.

21) 김OO 녹취록(2018. 1. 18.) 12쪽.

지시에 따라 문체부는 2014. 1.말경 [그림10]과 같은 좌성향 민간 보조사업 지원 배제책을 제시해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내용은 문화예술분야 민간보조사업에 이념시비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단체, 좌편향 단체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산집행 전 과정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균형적인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는 방침이었다.

그 후 김기춘은 2014. 3.말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는 지시를, 2014. 4.초에는 정무수석 주도의 TF를 만들어 전 부처 소관 정부보조금이 민간단체에 지원된 것을 전수조사하고, 그 중에 좌파단체에 지원된 것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대책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sup>22)</sup> 이와 관련하여 정무수석 박준우는 ‘김기춘이 대통령을 풍자, 비하하는 진보단체에 정부보조금이 많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부 보조금 지원에서 진보단체를 배제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4. 1.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전수 조사를 각 부처에 지시하였다’고 진술했다.<sup>24)</sup> 교문수석실 행정관 A 또한 보조금 현황과 관련하여 ‘정무수석실에서 예술지원제도 현황을 요구하여 어떤 지원제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는지 등 3년 치 지원현황 자료를 문체부에서 받아 정무수석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sup>25)</sup> 2014. 3. 27. 실수비에서 김기춘은 정무수석에게 보조금과 관련하여 관련 수석실 및 부처가 협의하여 좌편향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고, 김기춘의 지시를 받은 국민소통비서관 신동철은 2014. 4. 4. 부터 5.말까지 관련 비서관들과 민간단체보조금TF를 구성하여 보조금 지원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TF는 결과물인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내놓고 김기춘과 대통령에게 보고 후 관련 부처에 하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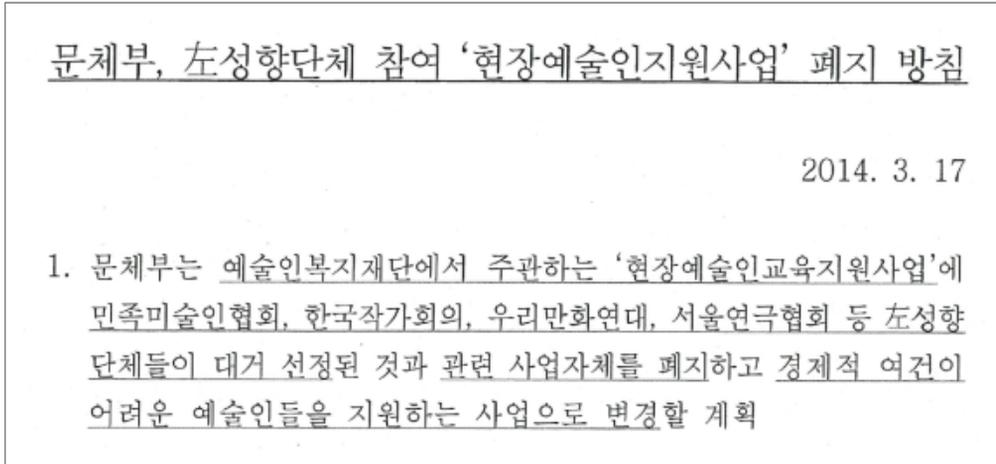
국정원 적폐청산TF 결과보고에 따르면 2014. 3. 17. 문체부는 좌성향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예술인 지원사업’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에 민족미술인협회, 한국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서울연극협회 등 좌성향 단체들이 대거 선정되어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실제로 문체부는 현장예술인 지원사업을 2014. 3. 21. 폐지 결정하고 폐지하였다.

22) 모철민 녹취록(2017. 12. 27.) 49쪽.

23) 위 녹취록 8~9쪽.

24) 박준우 면담보고(2018. 2. 27.).

25) A 녹취록(2017. 12. 15.) 24쪽.

[그림-11] 문체부, 左성향단체 참여 ‘현장예술인지원사업’ 폐지 방침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 결과보고서는 국정원 IO가 문체부의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문체부는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지시와 관련한 청와대의 질책과 지시에 대응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지원 사업의 축소 및 폐지의 방침으로 세우고 실제로 일부 지시는 이행하였다.

#### 나. 보고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국정원 적폐청산TF 결과보고서 2014. 3. 21.자에는 문체부가 청와대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유진룡 장관은 불법시위 관련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이념 편향적 콘텐츠 지원을 제한하는 안을 담고 있다.

## [그림-12] 문체부, BH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 예정

문체부, BH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 예정

2014. 3. 21

1. 문체부는 유진룡 장관 지시에 따라 문화예술계의 이념성을 지양하고 불법시위 관련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이념 편향적 콘텐츠 지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案을 마련, 청와대(교문수석실)에 보고할 예정

## 2. 關聯 內容

가. 문체부(장관:유진룡)에서는

- 1) 김기춘 비서실장이 2013.12.10 김 총 2차관에게 '문화예술, 미디어 부분에 左派가 많다. 심지어 공직 내부에도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 있으니 인사시 잘 살펴봐야 한다'는 요지로 언급을 한데 이어
- 2) 황우려 새누리당 대표도 2월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카지노 발표 연기 방침 설명차 국회를 방문한 조현재 1차관에게 '문화예술계에 左派가 여전히 많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 1차관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황우려 대표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식으로 언급

- 3) 문체부가 이념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左성향 인물 공직 진출 차단, 左성향 사업 지원 중단 등 인적청산과 시스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4) 외부에서는 아직도 막연하게 문체부가 이념문제에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제하 대응전략을 마련, 청와대에 보고하는 한편

- 5) 앞으로 정관계 요로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문체부가 여하히 대처하고 있는지를 적극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겠다는 목표하에 협조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확산에 노력할 방침

나. 이와 관련, 조현제 1차관은

- 1) 정부가 이념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대통령·정부 부담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아
- 2) 위의 대응전략 마련시에도 주무 과장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직계 라인만 보고서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同 대응 방안에 따라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이념문제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언급

※ 붙임 :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가. 기본 방향

1) 문화예술계 이념성 지양

-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경우 적극적 배제조치를 취하고 문화예술계 정치화를 최대한 억제, 문화융성의 기초 확산

2) 불법시위 관련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제한

- 기재부 민간보조금 지원 지침에 의한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개인 및 現 정부내 반정부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단체·개인 배제
- 또한, 주도 인사가 새롭게 구성된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 제한

또한 정보보고에는 “외부에서는 문체부가 이념 문제에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문체부에 대한 외부 평가를 담고 있다. 당시 상황은 참고인들의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정책기획관 김OO은 개구리 등을 시작으로 유진룡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질책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예술정책관 김OO은 2014. 봄 문체비서관 김소영이 ‘문예위 소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심사하면 어떻겠냐?’고<sup>26)</sup> 압력을 넣기도 했다고 해 당시 문체부 분위기를 짐작케했다.

26) 김OO 녹취록(2018. 1. 18.) 7쪽.

**[그림-13] 문체부, BH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 중 “예외인정”**

<p>3) 이념 편향적 콘텐츠 지원 제한 : <u>이념 편향적 내용, 반국가·반정부 행위와 연계된 콘텐츠 지원 차단</u></p> <p>*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보조금 지원 제한(기재부, 2014)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p> <p>4) 예외 인정 : <u>문체부내 별도 심의위원회(주제:기조실장) 운영</u></p> <p>- <u>現 정부에 대한 직접 비판이 아닌 과거의 단순 일회성 의사 표명, 남북문화교류 등 보수-진보 성향 공동참여 사업</u></p> <p>- <u>국회가 반영한 사업 및 예산, 광주 등 지역정서를 감안한 사업</u></p>
--

붙임 문서인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경우 적극적으로 배제조치한다는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반국가·반정부 행위와 연계된 콘텐츠 지원을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예술일반, 도서 및 문학, 영화, 해외 문화원으로 분야별 대응 전략이 제시되어 있는데 당시 기조실 중심의 TF에서 이렇게 세분화했고 실국에서 취합해 작성,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도 TF에서 협의해 만들었다.

TF 간사였던 창조행정담당관 황OO은 조현재 차관이 위로부터 문체부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질책을 들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과 유사한 문서를 몇 건 만들었다고 했다.<sup>27)</sup>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은 2014. 10. 경 김종덕 장관 시절에 최초로 작성되어 김기춘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처럼 2014. 3. 경 문화예술정책점검TF 때 작성되어, 추후 수정을 거쳐 김종덕, 김기춘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성된 보고서는 행정관 A, 국정원 조정관 조OO, 경찰정보관 배OO에게 전달, 기조실장 최OO에게 보고 했다. 예술정책관 김OO은 보고서 제목에 대해 ‘문화예술계의 90%가 전부 좌파, 진보니 보수 쪽을 키우라는 지시니까 아마 저희가 용어를 건전 문화예술생태계라고, 보수 쪽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진술했다.<sup>28)</sup> 황OO은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는 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주 의도는 좌편향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했다. 또한 [그림13]을 살펴보면 문체부내

27) 황OO 진술조서(2018. 1. 24.)

28) 김OO 녹취록(2018. 1. 11.) 47쪽.

별도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현 정부에 대한 직접 비판이 아닌 과거의 단순 일회성 의사 표명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을 두도록 했다고 결과 보고서에는 적시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TF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라고 했다.

이런 게 나가면 문제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외 사항을 직접 넣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예술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를 실제로 했었습니다. 이런 예외 사항을 두어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위로부터 계속 깨졌습니다.<sup>29)</sup>

보고서에는 문화예술 일반, 도서 및 문학, 영화, 해외문화원 등 분야별 대응 전략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OO은 “이념 갈등 유발 소재 지양, 이념 편향 및 대중 선동 의도가 과도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사후 국가 관련 행사지원 및 참여 제한” 등의 내용은 당시 문체부가 전반적으로 그런 기조로 정책 방향을 잡았던 것은 맞다고 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실제 해당 실국에 하달되어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sup>30)</sup>

#### 4. 2014. 5. 건전콘텐츠활성화TF

##### 가. 조현재 차관이 2014. 5. 경 받은 ‘블랙리스트’

청와대 소통비서관 신동철은 2015. 5.경 ‘민간단체보조금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문체부와 예술위 등 산하기관이 정부예산, 기금 등을 지원한 개인 단체 중 고은, 그린피그 등 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정권반대운동 참여 등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 약 80명의 명단을 문체비서관 김소영에게 건네주면서 ‘문체부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원되지 않도록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했다. 신동철로부터 이 명단을 건네받은 김소영은 이를 교문수석 모철민에게 보고 후, 조현재 제1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명단을 전달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저항과 비판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윗선의 지시이다. 이 명단은 정무에서 만든 것인데 극비리에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지 않게 하라’고 말했다.<sup>31)</sup>

29) 황OO 진술조서(2018. 1. 24.).

30) 김OO 녹취록(2018. 1. 11.) 52쪽, 황OO 진술조서(2018. 1. 24.).

31)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1심 판결문 13쪽.

조현재 또한 2014. 5. 초순경 김소영이 긴급한 일로 보자고 하여 청와대로 갔더니 A4 2장짜리 명단을 주었는데 거기에는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하철경 회장 등 100여명 정도의 이름과 직책이 엑셀로 정리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sup>32)</sup> 김소영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명단이고 밖으로 새나가면 큰일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현재는 이를 유진룡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유진룡 장관은 당시 조현재 차관으로부터 받은 리스트 형태가 수기로 작성된 2매의 형태였는데 추후 누군가가 타이핑을 했다고 했다.<sup>33)</sup> 김OO, 박OO 등은 타이핑된 1매의 리스트를 받거나 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추후 타이핑된 형태로 보인다. 2014. 5. 29. 예술국 사무관 박OO은 리스트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 전 촬영해뒀다.

“당시 블랙리스트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시다.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고, 받으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도 못 들었고 가지고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3주 후에 조현재 차관이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당장 폐기하라고 지시해 폐기 전, 휴대폰으로 촬영해뒀습니다.”<sup>34)</sup>

박OO이 촬영한 리스트에는 동그라미와 꺾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받을 때부터 표시되어 있었다고 했다. 김OO은 조현재 차관이 복사본을 만들지 않겠다며 보여준 리스트에 당시 보수 인사인 하철경 한국예총 회장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sup>35)</sup> 실제로 박OO이 촬영한 리스트에 하철경이 동그라미 표시되어 적시되어 있다. 조현재는 김소영이 전화해 왜 리스트가 밖으로 나가게 했냐며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다 파기하라고 지시해 문화정책관 나OO, 김OO 등이 가지고 있는 사본을 다 파쇄하였다.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은 “2014. 4~5.경 예술정책과 오OO으로부터 청와대에서 내려왔다는 리스트를 받았다. 약 100명 가량이었는데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의 문학과 연극 분야였다. 오사무관이 ‘청와대에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꼭 체크하라고 한다’고 했다.”<sup>36)</sup>라고 진술했고 공연전통예술과장 임OO는 공연과장으로 부임했던 2014. 10. 중순 경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들이 이미 블랙리스트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sup>37)</sup> 참고인들의 진술로 미뤄볼 때 김OO이 조현재로부터

32) 특검 조현재 진술조서(2016. 12. 18.).

33) 유진룡 녹취록(2017. 11. 29.) 13쪽.

34) 박OO 진술조서(2018. 1. 11.).

35) 김OO 녹취록(2018. 1. 11.) 34쪽.

36) 김OO 진술조서(2018. 3. 8.).

37) 임OO 진술조서(2018. 1. 23.).



## 나. 건전콘텐츠활성화TF의 구성 및 운영

블랙리스트가 내려온 뒤 2013. 9. 9. 발족된 문화예술정책점검TF는 2014. 5. 건전콘텐츠활성화TF로 명칭을 변경, 운영되었다. 장관 유진룡은 건전콘텐츠활성화TF의 발족 계기는 조현재 차관이 받은 블랙리스트 때문이라고 했다. ‘블랙리스트 첫 번째 버전을 받았을 때 이미 장관을 관두기로 해서 명단 처리에 대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책임 떠넘기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실장들을 소집해 명단까지 쥐가면서 강요하는데 하는 시늉이라도 하자’<sup>39)</sup>는 취지로 전달했고 블랙리스트의 적용 여부와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건전콘텐츠활성화TF가 구성되었다.

기조실장 최OO은 조현재 차관이 김소영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받아 온 뒤 건전콘텐츠활성화TF에서 논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최종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최OO은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청와대에서 원하는 대로 정부에 반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국·과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만한 사안을 TF에 부의하면 논의 후 탄력적으로 배제할 계획이었다.”라고 진술했다.<sup>40)</sup> 콘텐츠정책관 김OO 또한 최OO, 신OO 등 실장들은 당시 리스트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으니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했다.<sup>41)</sup>

예술정책관 김OO은 건전콘텐츠활성화TF 발족의 또 다른 계기는 국정원 IO 보고서 때문이라고 했다. ‘OO지역 좌파에게 보조금을 줬다’는 식의 국정원 보고서가 김기춘 비서실장을 거쳐 장관에게 전달되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교문수 석실 선임행정관 A로부터 내려와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전콘텐츠활성화TF를 만들었다고 했다.<sup>42)</sup>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라는 지시는 청와대에서 왔습니다. 유장관, 조현재 차관이 ‘일단 우리 하는 척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름이 건전TF로 된 거고요. 예술국 쪽이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기조실에서 주관, 창조행정담당관이 회의록 작성을 하고 정책기획관이 주간보고를 했습니다. 정리된 것은 국정원 조OO 조정관에게도 보냈습니다. 문체부가 청와대의 기조에 맞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조OO을 활용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정책점검TF로 약간 중립적으로 가다가 조금 더 세계 건전콘텐츠활성화

39) 유진룡 녹취록(2017. 11. 29.) 17쪽.

40) 특검 최OO 진술조서(2016. 12. 18.).

41) 특검 김OO 진술서(2017. 2. 1.).

42) 김OO 녹취록(2018. 1. 11.) 5쪽.

TF라고 한 것 같습니다.<sup>43)</sup>

건전콘텐츠활성화TF 간사였던 황OO 또한 국정원 IO 보고서가 대부분 부풀려진 내용이 많지만 보고서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확인을 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문체부 사업에 영향을 미쳐왔고 관련 내용은 주로 기조실에서 담당했다고 했다. 기조실장 송OO 또한 청와대 지적은 주로 국정원 정보보고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내려왔던 것 중에서 몇 가지 왜 거르지 못했냐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제 정보보고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윗분들이 보통 화를 냅니다.”<sup>44)</sup>

건전콘텐츠활성화TF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청와대에 보고되었다. 최OO은 청와대에 보고할 보고서를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하여 보고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최OO이 작성한 두 장짜리 당시 운영계획은 찾을 수는 없었다.

“블랙리스트가 온 직후 청와대에 보고할 보고서를 정리·작성하여 김소영 비서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두 장 정도의 운영계획으로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하나는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다른 하나는 문체부에서 사용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향후 건전콘텐츠활성화TF를 잘 운영하여 문제가 될 만한 예술인과 단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와대에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예외조항을 많이 넣어뒀습니다. 김소영도 TF를 잘 운영하라며 신경을 써달라고 했습니다.”<sup>45)</sup>

건전콘텐츠활성화TF 또한 월요일 실국장 회의 이후에 기조실장 방에서 진행, 첫회의는 차관 조현재가 주재하였고 그 이후에는 기조실장 최OO이 주재하였다. 최OO이 단장, 정책기획관 김OO이 부단장, 창조행정담당관 황OO이 간사, 총무실장 김OO, 콘텐츠산업실장 신OO, 예술국장 김OO, 미디어국장 박OO 등 관련 담당 실국장이 회원이 되는 식으로 구성되어 한 달에 한 번 이상 진행되었다. 유진룡은 ‘우리 국장들한테까지 부담 주지 말자. 실장선에서 해결하고 책임지자’는 취지였다고 했다.<sup>46)</sup> 그 명칭만 바뀌었을 뿐 2013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문화예술정책점검TF의 연속체였다.

43) 김OO 녹취록(2018. 1. 11.) 7쪽, 20쪽.

44) 황OO 진술조서(2018. 1. 24.), 송OO 녹취록(2018. 2. 23.) 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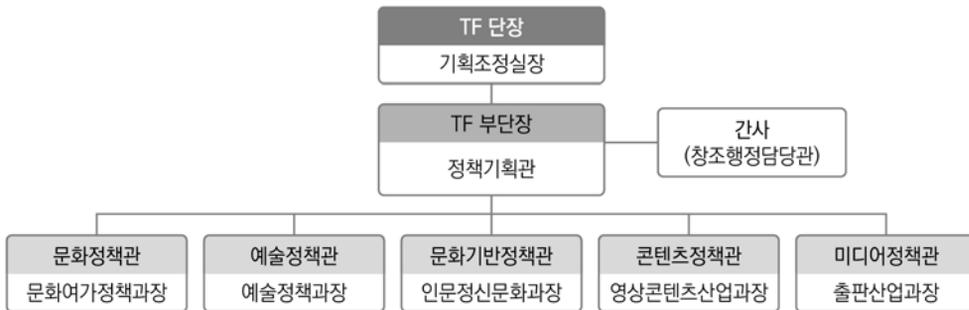
45) 유진룡 녹취록(2017. 11. 29.) 18쪽, 특검 최OO 진술조서(2016. 12. 18.).

46) 유진룡 녹취록(2017. 11. 29.) 18쪽.

## □ 「건전콘텐츠활성화」 TF 구성·운영

- (주요기능)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 분야별 제도개선 사항 이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공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유지 등
- (운영방식) 매주 1회 T/F 회의 개최 및 운영현황 점검 결과 공유

## [그림-15] 건전콘텐츠활성화TF 구성·운영



[그림15]는 김종덕 장관 시절 작성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에 포함되어 있던 자료인데, 당시 TF 간사였던 창조행정담당관 황OO에 따르면 2014. 5. TF 때 이미 위의 구성 및 운영표가 작성되어 활용되었다고 했다. 회의 내용은 ‘각 국 진행사항, 유의사항, 향후 계획’ 등이었다. 4페이지 전후의 서술형 결과보고서를 매 회의마다 창조행정담당관이 작성해 청와대, 국정원, 경찰에 전달 후 ‘개구리’ 폴더에 저장했다. 건전콘텐츠활성화TF에서는 주로 실국의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취합 보고가 주목적<sup>47)</sup>이었지만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업에 대한 논의 및 진행 사항 보고가 주제로 다뤄졌다.

예술정책관 김OO은 ‘건전콘텐츠’라는 단어는 진보, 좌파단체 지원을 배제하라는 의미인데 부정적인 내용을 긍정적인 단어로 순화하기 위해 ‘건전’을 넣어 ‘건전콘텐츠’라고 만든 것이라고 했다. 정책기획관 김OO은 ‘건전콘텐츠’라고 하면 굳이 누가 용어를 가지고 편파적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청와대의 뜻도 거스르지 않으면서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용어를 쓰려고 만든 것이라고 했다.<sup>48)</sup> 명칭 변경에 대해 김OO은 “제대로 점검하겠

47) 황OO 진술조서(2018. 1. 24.).

48) 김OO 녹취록(2018. 1. 18.) 14쪽.

다”는 취지로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구성했고 이후에는 “취지가 나쁜 콘텐츠를 죽이겠다”는 의미로 건전콘텐츠활성화TF로 회의에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보고서 양이 좀 더 많아지고 강화된 듯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sup>49)</sup> 총무실장 김OO은 좌파 성향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데 그 취지를 명칭에 직접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건전콘텐츠활성화TF라고 명명하였다고 했다.<sup>50)</sup>

요컨대, 연극 개구리, 영화 천안함프로젝트, 세월호 사건 등을 거치며 청와대의 압박은 점점 강도가 세졌고, 2014. 5. 청와대로부터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실질적으로 내려오면서 문체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존의 ‘문화예술정책점검TF’의 연속체로 명칭을 변경한 ‘건전콘텐츠활성화TF’를 운영하였다.

그 후 2014. 9.경 예술정책관 김OO은 예술국 직원들을 모아놓고 지원 배제 방침을 설명하고 리스트 적용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했다. 사무관 김OO은 “김OO 국장님이 지원해서는 안 되는 단체를 문체부가 지원했다는 이유로 청와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술국 사무관들은 리스트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리스트가 내려오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진술했다.<sup>51)</sup> 오OO 또한 김OO 국장이 사무관급 이상 예술국 직원들을 모아 놓고 청와대에서 문체부 직원들 때문에 문제 단체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문제 제기 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sup>52)</sup> 이를 통해 유진룡 장관의 사임 이후 하달된 블랙리스트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업이 가장 많은 예술국이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 5. 2014. 10. 건전콘텐츠활성화TF

### 가. TF 보고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유진룡 장관이 사임하고 김종덕 장관이 부임한 이후에도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TF가 재구성된 것이 아니고 이전 TF가 계속된 것이었다. 김종덕 장관 부임 이후, 장관 지시로 정책기획관 김OO이 유진룡 장관 시절 건전콘텐츠활성화

49) 김OO 녹취록(2018. 1. 11.) 48쪽.

50) 특검 김OO 진술조서(2016. 12. 18.).

51) 김OO 진술조서(2018. 3. 8.).

52) 오OO 진술조서(2018. 2. 7.).

TF에서 만든 3~4페이지 보고서를 윤색해 보고하였다. 그 후 2014. 10.경 김종덕 장관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이념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사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체부 사업 중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았다. 기조실장 송OO은 “김종덕 장관이 겁을 많이 냈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나고 와서 숨넘어가듯이 얘기를 하기에 ‘깨져도 엄청 깨진 모양이구나.’ 생각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53) 김종덕은 송OO에게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시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비서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문건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다.54) 송OO은 관련 내용을 이렇게 진술했다.

“김종덕 장관이 김기춘 실장에게 혼나고 나서 빨리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채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황OO에게 ‘우리가 얼마나 청와대에 찍혔길래 반정부적인 거, 정치적인 거, 너무 이념편향적인 거 이런 사업들은 무조건 국민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이걸 전수조사까지 하고 배제하란다.’고 말했더니, 황OO이 ‘건전TF라고... 문체부에서는 전부 건전콘텐츠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건전이나고 되물었고 그 때 건전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김종덕 장관에게 ‘건전콘텐츠라고 하는데 말이 좀 이상하다. 전혀 건전과 관계없다’고 말하니, 장관이 ‘아니다. 김기춘 실장이 좋아해서 이것으로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55)

송OO은 황OO으로부터 ‘이미 옛날에 다 되어 있으니 소집만 하면 된다. 장관의 지시를 실국에서 다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건전콘텐츠활성화TF를 소집했다. 첫 회의 때에는 황OO, 이OO, 김OO, 정OO, 김OO, 오OO, 박OO 등 십여 명이 참석했다. 송OO은 건전콘텐츠활성화TF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첫째, 문체부가 청와대에 ‘찍혀’ 유진룡 장관도 나갔고 새로 온 김종덕 장관도 깨졌다. 청와대에서 시킨 것조차 제대로 못 걸러냈단다. 청와대 행정관들에게 들은 것을 중심으로 계획서를 내라. 둘째, 이 일이 어려운 것이고, 할 수 없는 일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 TF 보고서를 통해 ‘할 수 없는 것, 건의할 것’을 구분해 자료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56)

청와대에 보고할 보고서는 해당 사업이 가장 많은 예술국에서 작성, 기조실에서 취합

53) 송OO 녹취록(2018. 2. 23.) 34쪽.

54)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1심 판결문 14쪽.

55) 송OO 녹취록(2018. 2. 23.) 22쪽.

56) 송OO 녹취록(2018. 2. 23.) 48쪽.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술정책과 사무관 박OO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해 창조행정담당관 황OO에게 전달, 황OO은 실행계획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건전콘텐츠활성화TF 구성·운영」을 추가해 2014. 10. 21. 최종본을 송OO 실장과 청와대 김OO, 국정원 조OO, 경찰청 배OO에게 전달했고, 이를 송OO 실장이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김종덕 장관은 황으로 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을 주요 보고서로, 나머지는 첨부하여 2014. 10. 21. 경 김기춘 공관을 찾아가 위 보고서 내용을 대면 보고하였고, 김기춘은 보고내용에 대해 만족해하며 ‘TF를 만들어, 보고 내용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sup>57)</sup> 또한 교육문화수석 김상률 부임 직후, 송OO과 황OO이 이 보고서를 김수석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했다.<sup>58)</sup> 이에 따라 김기춘은 김종덕으로부터 받은 보고를 승인하며 정부비판적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를 위한 실행방안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문체부 내에서 이념적으로 문제된 모든 내용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송OO은 이 보고서를 ‘청와대 지시에 문체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송OO 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과장·사무관이 참여하는 ‘건전콘텐츠활성화TF’ 회의를 개최하면서 장관 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이를 김종덕 장관과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다.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57)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1심 판결문 79쪽.

58) 황OO 진술조서(2018. 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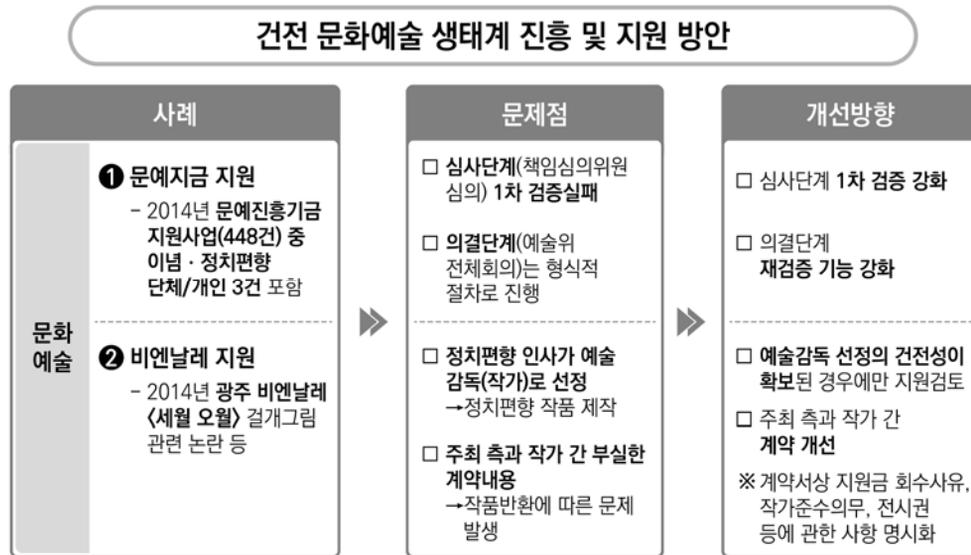
[그림-16]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분야/중점과제	총천	개선
<b>[1] 문화예술</b>		
<b>① 문화예술위원회</b> -문예기금 일반공모사업	공모(신청 및 접수)→ 심사(책임심의위원)→ 의결(예술위 전체회의)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관행적 지원 20~40% 축소</li> <li>○ 심사단계 1차 검증강화</li> <li>- 정치편향 작품/단체/예술가 선정 배제</li> <li>- 예술위 간부 간사 심사에 참여</li> <li>*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li> <li>○ <b>최종의결 전 재확인</b>(문제발생시 최종의결에서 배제)</li> </ul>
<b>② 문화예술위원회</b> -문예기금 지역문화 예술지원사업	지역배분기준 수립→ 지원금 지역배분+지방비 매칭→지역문화재단 재교부 및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과도한 정치편향 프로그램’ 지원 제한</b></li> <li>* 지원요건에 명시</li> <li>○ <b>심사위 구성시 정치편향 인사 배제</b></li> <li>- 타 시도 심의위원 비율 1/3 이상 포함, 예술위 지역문화                      협력관/책임심의위원/추천위원 참여 의무화 (1인 이상)</li> <li>○ <b>서울지역에 대한 배분비중 점진 축소</b></li> <li>○ <b>관련지침 불이행시 차년도 배분액 삭감</b></li> </ul>
<b>③ 비엔날레 지원사업</b>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도자를 편성사업	시·도 예산신청→ 문체부 검토의견 제출(적정/ 부적정)→기재부 예산 적정성 검토 * 국고 10억 이상, 기재부 국제 행사심사위원회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체부 사전검토 강화</b></li> <li>- 사업계획상 균형감 있는 인사가 예술감독(작가)로 선정될 수                      있는 체계가 아닌 경우 부정적 의견 제시 (문체부→기재부)</li> <li>○ <b>비엔날레 예산교부시 표준계약서 이행조건 명시</b></li> <li>- 전시취지에 반하는 작품제작시 지원금 회수 및 전시                      불가, 주최측에서 전기기간 중 전시권 보유 등 명시</li> <li>○ <b>비엔날레 평가결과를 예산반영과 연계</b></li> </ul>
<b>[2] 콘텐츠</b>		
<b>① 영화진흥위원회</b> -영화발전기금 영화 지원사업	공모→심사(소위원회)→ 의결(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심사위원 인력 개편 및 선임절차 강화</b></li> <li>- 영진위 심사인력을 개편(700명→400명)</li> <li>- 위원장 권한 강화</li> <li>○ <b>심사단계에서 정치편향 내용 배제</b></li> <li>*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li> </ul>
<b>② 영화제 지원</b>	공모→심사(예비심사위 원회)→의결(전체회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영화제 사후 평가시 정치 편향 작품 상영                      여부를 반영하여 관리 강화</b></li> <li>- 문제 작품 상영 영화제는 차년도 예산 대폭 삭감</li> <li>*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li> </ul>
<b>③ 정부출자펀드의                      영화투자</b>	'06년부터 모태펀드에 총 4,143억원 출자 →투자조합(투자심의위) 의사에 따라 투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전 모니터링 강화</b></li> <li>- 투자조합의 업무보고 정례화(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 등                      수시 상황보고, 투자심의위 참석 및 의견제시 등</li> <li>○ <b>투자심의위 결과 법령·규약 위배시 권고/재심의 요청</b></li> </ul>
<b>[3] 미디어</b>		
<b>① 한국출판진흥원</b> -세종도서 선정사업	접수→심사위원 위촉 (75명)→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심사와 선정을 분리</b></li> <li>- 심사위원회는 내용상 우수성을 심사</li> <li>- 선정위원회는 도서결정의 적합성 여부 심사</li> <li>* 선정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출판산업진흥원이 10명                      내외로 별도 지정</li> <li>○ <b>심사위원 자격 기준 강화</b></li> <li>- 심사위원을 건전성을 갖춘 인사로 제한</li> <li>○ <b>심사기준 강화</b></li> <li>- 정치편향, 역사왜곡 등 국민 권장 부적합 도서 제외</li> </ul>

예술정책과 사무관 박OO은 제목이 달린 표 양식을 각 과에 뿌려 작성을 요구하였다. 보고서는 ① 문화예술(문예기금 지원, 비엔날레 사업), ② 콘텐츠(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 ③ 미디어(세종도서 선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청와대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담았다. 김종덕 장관 부임 이후, 보고 받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요 사업을 뽑아 3개 분야로 나누었다. 박OO은 예술국, 콘텐츠국, 미디어국에서 관련 내용을 취합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 황OO에게 전달했다. 건

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을 황으로 편집한 것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고 「건전콘텐츠활성화TF 구성·운영」은 유진룡 장관 TF 때 이미 작성되어 있던 문서로 황OO이 작성했다.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은 아래 [그림17]과 같다.

[그림-17]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이 보고서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으로 추정해 TF에서 관련자를 최소화하는 결정을 했다. TF에서는 이 보고서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작성 당시 인지하고 있었다.

“과장 이상만 작성하게 했고 아니면 선임 사무관 정도만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회의 때 하면서 관련자를 최소화했습니다. 최초로 최OO 실장이 “내가 책임진다”고 하여 최소화해서 만든 TF였습니다. 기조실에서도 기조 실장, 국장, 과장만 알고 있었습니다.”<sup>59)</sup>

문화예술 분야는 예술위 담당자였던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이 작성했다. 기조실로부터 작성 요청을 받아 청와대 보고용으로 알고 썼다고 했다. 개구리 사건을 시발점으로 청와대의 지적이 들어왔고 이 보고서 작성 시기가 예술위 지원사업 정기 공모 시점이라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고 했다. 오OO은 2014. 4. ~ 9. 사이 예술위 직원 이OO, 장OO,

59) 황OO 진술조서(2018. 1. 24.).

류OO에게 문예진흥기금 심사제도 개편 관련한 자료나 의견을 구하고 직접 만나 답을 얻어 2014. 6. 27. ‘문예기금사업 개선 필요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했고 이 결과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였다고 했다.<sup>60)</sup> 또한 세부 실행계획에 적시된 개선 방향 “예술위 간부 간사 심사에 참여-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 내용과 관련해 당시 실제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했다. 예술위 간부가 심사에 참여해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의 전반을 관리했지만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원 배제 관련 청와대의 요구에 문체부가 의지가 약하다는 질책을 듣다보니 보고서를 강하게 쓴 측면이 있다고 진술했다.<sup>61)</sup>

콘텐츠 분야 중 ❶ 영화진흥위원회 부분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OO, ❷ 영화제 지원 부분은 사무관 윤OO, ❸ 영화출자펀드의 영화투자 부분은 문화산업정책과에서 각각 작성하였다. 콘텐츠 관련은 2013년 천안함 프로젝트와 2014년 다이빙벨 문제로 청와대의 지적이 있었고 두 이슈를 거치면서 그 이전과 다른 흐름이 전개되며 청와대의 지시의 구체화되었다. 주 기조는 ‘진보적인 사람을 잘 관리하라’였다.

이OO 사무관은 박OO 사무관이 당시 표 형태의 이 문건을 전달하며 관련 내용을 채워달라고 했다고 했다. 관련 내용은 콘텐츠국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념적 문제와 관련해 논의 중이었던 내용으로 새롭게 제시한 것은 없다고 했다. “심사위원 인력 개편 및 선임 절차 강화” 관련은 독립영화지원과 예술영화전용관 관련 사업을 정부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 청와대에서 제시한 안이었다.

교문수석실 신OO 행정관이 ‘영진위 심사위원이 한쪽으로 치우쳤으니 균형을 맞춰라. 700명 모두가 심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인원수를 줄여 보수적인 사람, 최소한 중립적인 사람, 친정부적인 사람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재편하라고 지시해 반영한 것이고 좌파나 정부 비판적인 사람은 심사위원 풀에서 최대한 배제하라고 했다. 영화 관련 지시는 주로 신OO를 통해 전달되었고 지시가 내려오면 영진위 문OO 부장에게 바로 전달했다. “위원장 권한 강화” 부분은 심사위원을 뽑을 때 기존 3배수 풀에서 5배수로 늘려 더 많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조금 더 정부 친화적인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하자는 의미였다. “심사단계에서 정치편향 내용 배제-비공식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관리”와 관련해서는 문체부와 영진위 사이에 구체적인 비공식 내부 가이드라인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항은 조

60) 오OO 진술조서(2018. 2. 7.).

61) 오OO 녹취록(2018. 4. 2.) 12쪽.

심하여 보고서가 의도하는 바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OO은 “청와대에서 이미 언지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면 청와대에서 만족할 것이라고 판단해 그렇게 작성했다.”고 진술했다.<sup>62)</sup>

이와 관련해 영진위 문OO은 진술서에서 이 중 심사인력 풀 개편과 관련하여 “2014년 경,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청와대의 지시라며 심사위원이 좌파 위주이니 심사위원의 수를 줄이라”고 지시해 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sup>63)</sup>

#### [그림-18]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중 콘텐츠 부분

- (현행 지원제도 건전화) 심사위원 인력개편 및 선임절차 강화를 통한 심사강화와 지원기준 균형성 확보를 통해 이념편향 배제
- (건전 영화제작 지원사업 신설) 한국적 정서를 지닌 건전한 영화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 지원
  - 2015년부터 신설하여 상업영화 1편(25억원 규모), 예술영화 2편(10억원 규모)

[그림18]의 내용 중 “건전영화 제작지원 사업 신설”과 관련해서 문OO은 “문체부 영상과에서 건전애국영화를 추경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여 영진위에서 정책적으로 12세 이상 관련가나 전체 관람가 영화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한 것이 가족영화제작 지원 사업이다. 애국건전영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명분도 안서고 보수 이미지가 강해서 가족영화라는 이름으로 순화시켰다. 이 제안이 가족영화제작사업 필요성의 근거로 작용했고 이 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기획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정책연구팀을 통해 진행하고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국내진흥부와 구체적인 사업의 틀을 만들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기획은 저와 이OO 사무관이 진행했다.”<sup>64)</sup>라고 진술했다.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의 영화 부분은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와 영진위가 논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진위 김OO은 이와 관련해 심사위원 제도가 개편되고 예술영화 유통배급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보서는 일부 적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2014년도에 독립영화전용과 사업과

62) 이OO 면담보고(2018. 2. 19.).

63) 문OO 진술서(2018. 1. 16.).

64) 문OO 진술서(2018. 1. 16.).

예술영화지원사업에 대해 대폭적인 개편안이 진행된 것으로 볼 때 문건의 실행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sup>65)</sup>

영화제 관련은 2014년 영화 다이빙벨이 문제가 되면서 영화제에 개입해 문제 영화를 배제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2014년 14.6억 원에서 2015년 8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정권 비판적인 영화를 상영할 경우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었다. 영화제 분야 작성자인 윤OO는 당시 다이빙벨 관련 논의가 있었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주로 영화제 평가 단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정치편향 작품 상영 여부 반영”과 관련해 이는 일종의 검열 및 배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진술했다.<sup>66)</sup>

모태펀드의 경우는 문체부의 모태펀드가 출자한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창투사인 ‘캐피탈원’의 경우, 영화 「변호인」에 투자하였는데 청와대에서 각종 정부의 모태펀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캐피탈원으로 하여금 향후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렇듯 정부 비판적인 영화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개별 투자조합들의 투자심의위원회에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sup>67)</sup>

미디어 분야 한국출판진흥원 부분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이OO가 작성하였다. 이 OO는 박OO이 분야별 대응 계획을 세운다며 보내온 양식을 채워서 재전달했다고 했다. 당시 누구에게 보고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종합계획인 것으로 볼 때 최소 장관 보고라고 추정하고 작성했다.

도서 접수 단계부터 접수된 도서의 특이사항, 즉 정치편향 도서가 접수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심사위원의 위촉과정에서 위원후보자들의 정치편향성 여부를 체크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 기존에는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2단계 심사 구조에서 선정위원회를 두는 방법으로 3단계 심사 구조로 개편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하였다.<sup>68)</sup> 위원장은 정치편향이 없는 사람으로 지정하고 심사 과정에서는 후보 도서를 2~3배로 선정하여 정치편향 도서를 제외하는데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65) 김OO 진술조서(2017. 12. 18.).

66) 윤OO 진술조서(2018. 2. 19.)

67) 특검 이OO 진술조서(2017. 1. 3.).

68) 특검 이OO 진술조서(2017. 1. 4.).

## [그림-19]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중 미디어 부분

[단계]	[주요 대응전략]
도서접수	(출판사) 온라인 신청 → (출판진흥원) 접수 및 도서 개요 정리, 특이사항 점검
심사위원 위촉(75명)	후보자 검토 강화(출판산업진흥원, 관계기관 공동)

[그림19]의 내용 중 “후보자 검토 강화(출판산업진흥원, 관계기관 공동)” 부분은 청와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여기에서 관계기관은 청와대를 의미한다. 청와대의 의견을 반영해 후보자를 선정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당시 세종도서 후보 선정과정 중 청와대에서 심사위원 추천위원 후보자 명단,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최종 확정 명단 등을 보내라는 지시가 있어 실행한 바 있다고 했다. “균형있는 시각의 인사 지정, 정치편향 도서는 선정되지 않도록 선정위원회에서 비공식 의견 제출”은 우수도서 선정과 관련한 미래한국 기사가 문제되면서 불거진 내용이었다.<sup>69)</sup> 이를 통해 김종덕 장관 부임 이후, 문체부는 그 이전과 달리 매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했고 해당 과들은 영진위 등 소속 기관과 상의하여 청와대, 특히 김기춘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내용을 작성, 보고하였다. 문체부 각 분야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2014. 12. 1. 제13차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sup>7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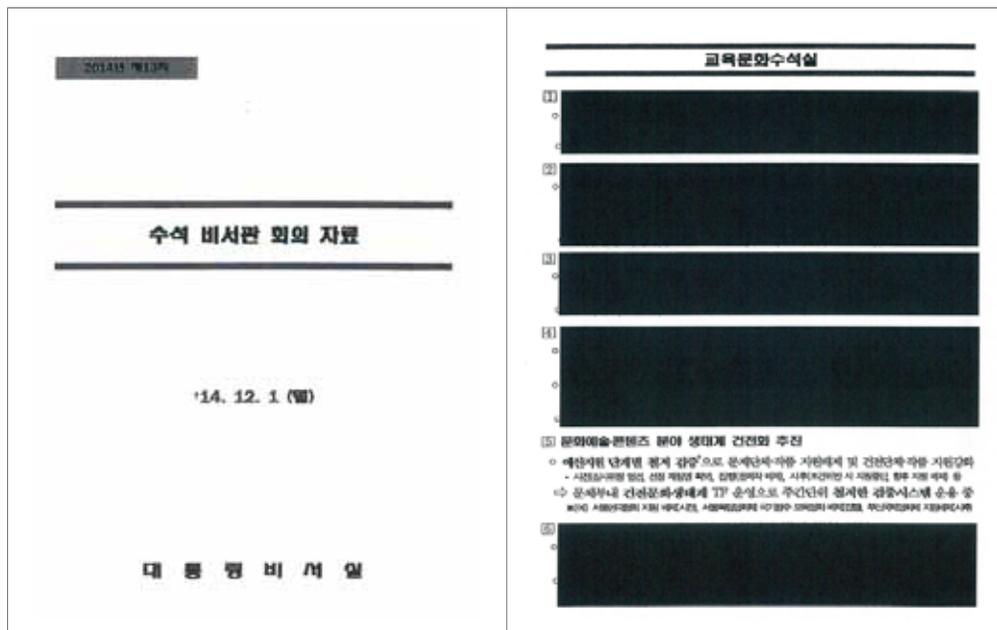
2014. 12. 1. 제13차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활성화TF 관련 내용이 보고되었다. 교문수석실에서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생태계 건전화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예산지원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을 거쳐 문제단체·작품 지원배제 및 건전단체·작품 지원강화를 목표로 사전 단계에서 심사위원을 엄선하고, 선정 재량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집행단계에서 문제작은 배제하고, 사후 단계에서 조건 위반 시 지원을 중단하고, 향후 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구체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방안은 문체부내 건전문화생태계TF 운영을 통해 검증시스템을 운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사례로는 사전에 배제 과정을 거친 서울연극협회 지원 배제, 집행 과정 중 배제를 거친 서울독

69) 이○○ 면담보고(2018. 3. 8.).

70) 2017노2425/2424(병합) 형사소송 2심 증거 제출 실수비·대수비 회의 자료.

립영화제 국가원수 모독영화 배제, 사후 사례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배제 건을 예로 들었다.

[그림-20] 2014. 12. 1. 실수비 회의 자료



#### 다. 건전 콘텐츠 활성화TF 주요 논의사항

김종덕 장관 부임 이후, 건전콘텐츠 활성화TF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진행되었다. 송OO은 ‘김기춘 실장이 언제 또 찾을지 모르니 일주일 간격으로 회의를 하자’고 했고 일주일 간격으로 5번 정도 진행, 관련 보고서를 매번 문체비서관실 행정관 김OO에게 보냈다. 피드백은 없었다. 그 이후 한 달에 한번 정도 느슨하게 진행했다. 기조실장 송OO이 회의를 소집하면 관련 과에서 과장·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담당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해야 사업에 대한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김종덕 장관 시절 TF에서는 참석자의 범위가 넓어졌다. 각 회의 때마다 결과보고를 했고 보고서 제목은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이었다.

송OO은 “이렇게 챙기고 있으니깐 혼내지 마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보냈다. 연말이 돼도 아무 지적이 없어 ‘이거 안 해도 되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 다음부터 2주에 한

번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했다가 끝났다.”라고 진술했다. 송OO 진술로 미뤄 볼 때 김종덕 장관 부임 이후, 2014. 11.에는 매주 진행되었고, 12.에는 2주에 한 번, 2015. 1.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되어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8~9 차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sup>71)</sup> 예술국에서는 주로 예술정책과장 이OO, 사무관 오OO이 돌아가며 참석했고, 콘텐츠국에서는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 사무관 이OO, 미디어국에서는 미디어정책과장 김OO, 출판인쇄산업과장 김OO, 인문정신문화과장 고OO 등이 참석했다. 제1차관 박민권도 TF 주요 논의사항을 1~2회 정도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sup>72)</sup> 관련 참고인들은 건전콘텐츠활성화TF의 보고서에 실질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 보고서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림21]의 2. 25.자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은 당시 창조행정담당관 이OO이 작성했다. 이OO은 송OO 기초실장이 회의를 소집하자고 하면 각 과장들이 모여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했고 각 과에서 이야기된 것을 각 과에서 정리해주면 취합해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OO에게 나루 메일로 송부했고 국정원, 경찰에는 보내지 않았다. 3개 정도 파일을 직접 만들었고 매번 청와대에 보냈지만 송부 메일에 대한 피드백이 온 적은 없었다.<sup>73)</sup>

71) 송OO 녹취록(2018. 2. 23.) 44쪽.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7호 박민권 증인신문조서.

73) 이OO 녹취록(2018. 2. 17.) 8쪽.

[그림-21]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2.25.)

###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2.25]

**□ 문화예술 분야**

- 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공모 지원사업 관련
  -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및 해외레지던스 사업의 경우, 지원제한 기간(2년 또는 3년)이 있어 쟁점 당사자는 대부분 미신청
  - 문학 및 연극 분야의 경우, 일부 사업이 선정되어 발표 일자를 무기 연기하여 재심 등 방안을 강구중
  - 문학분야 발표가 계속 지연될 경우, 기존의 세종도서 선정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음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보조사업 조정(안) 관련,
  - (단체조정)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의 '지역대표 독서프로그램 지원' 을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관
    - 지역 독서활성화를 위한 출판진흥원 '독서대전' 사업과 '지역대표 독서프로그램 지원' 을 연계 추진, 프로그램 질 제고와 참여 확대
  - (사업 및 예산 조정)

(단위 : 백만원)

보조단체명	사업명	'14예산	'15예산	비고
책읽는사회문화재단	○ 북스타트 지원	500	500	
	○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400	400	
	○ 지역대표 독서프로그램지원	170		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
	계		1,070	900

- (향후계획) 사업·예산 재조정안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예정(3월초)

**□ 콘텐츠 분야**

- B2E 지원 관련
  - 김재환감독의 '퀴비디스' 기획개발비로 4백만원 지급(2014년)
  - 동 작품은 '14.12.10일 개봉, 현재 상영 중. 차기 작품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15년에는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 지원'에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16년 신청 여부 지속 모니터링 예정

- 1 -

“문학 및 연극 분야의 경우, 일부 사업이 선정되어 발표 일자를 무기 연기하여 재심 등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작성자인 오OO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12월에 심사를 끝내고 익년 1월초에 발표를 해야 하는데 문학, 연극 등이 문제가 되어 한 달 정도 지체가 된 시점이었다고 진술했다.<sup>74)</sup>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및 해외 레지던스 사업의 경우, 지원제한 기간(2년 또는 3년)이 있어 쟁점 당사자는 대부분 미신청” 내용과 관련해 송OO은 ‘아르코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계속 문제 삼았는데 행정관

74) 특검 오OO 2회 진술조서(2016. 12. 27.)

들이 불러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했다.

2015. 2. 25.자 “콘텐츠 분야 B2E 지원 관련” 내용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이 작성하였는데, TF 간사인 창조행정담당관 이OO이 B2E 지원 내역과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해 영진위를 통해 확인해줬던 바 있다고 했다. 영화 제작사 B2E는 MB의 추억 연출자인 김재환 감독이 대표로 있는 회사이다. MB의 추억을 연출했던 김재환 감독에게 2014년 영화 ‘퀴바디스’ 기획개발비로 4백만원이 지급된 것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 2016년도까지 지원 신청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는 내용이 논의사항으로 담겨 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의 내역과 현황 파악을 건전콘텐츠활성화TF에서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22]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3.16.)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3.16]**

- 미디어(출판) 분야
  - 세종도서 학술 부문(320종) 선정
    - 공고(3.18), 접수(3.23~4.3), 심사(4~5월), 선정(6월)
    - ☞ (추진방향) 학술 분야로 이념성 등 문제 제기 가능성 낮음
  - 세종도서 교양(450종) 및 문학(510종) 부문 선정
    - 하반기에 진행(8월 공고, 11월 선정)
    - ☞ (추진방향)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예년 선정 기준을 유지하되, 심사 시 공공성을 고려해서 선정
  -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이하 책사회)’ 예산지원 방식 변경
    - ‘14년 10.7억원을 지정 보조사업으로 지원(북스타트 5억원,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4억원, 기타 지역대표 독서프로그램 지원 1.7억원)
    - ‘15년 국고보조금 지원방식 변경(모든 보조사업 공모사업 원칙)에 따라 책사회 지원예산도 공모 전환 추진
    - ☞ (추진방향)
      - 북스타트 사업은 영유아 대상 순수 독서진흥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책사회 재선정 가능)
      -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책사회가 한국일보사와 공동추진을 협의 중인 사업으로 이념편향성 등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공모 시 공공성을 보다 고려해서 사업자 재선정

다음 달인 2015. 3. 25.에도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열렸고 관련 보고서는 작성되었다. 3. 25.자 또한 창조행정담당관 이OO이 작성했다.

**[그림-23]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4.20.)**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4.20)**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5.4.20(월) 15:30 / 기초실장실
- 참석자 : 기초실장, 창조행정담당관, 예술/문화기반/콘텐츠/미디어 정책관실 담당 과장

**□ 주요 논의사항**

- (문화기반)
  - '길 위의 인문학 사업' 280개 도서관 선정 완료, 강사 리스트 점검 완료, 이상 없음
  - 책사회 '북스타트' 사업 공모 추진 중
- (예술)
  - 상시 공모 33건 진행 중
  - 각종 리스트 관리, 공유 중
  - 사전 스크리닝 부담에 따른 추진상 애로 가중
- (콘텐츠) 특이사항 없으나, 재난영화 '판도라' 예의주시 중
- (미디어) 특이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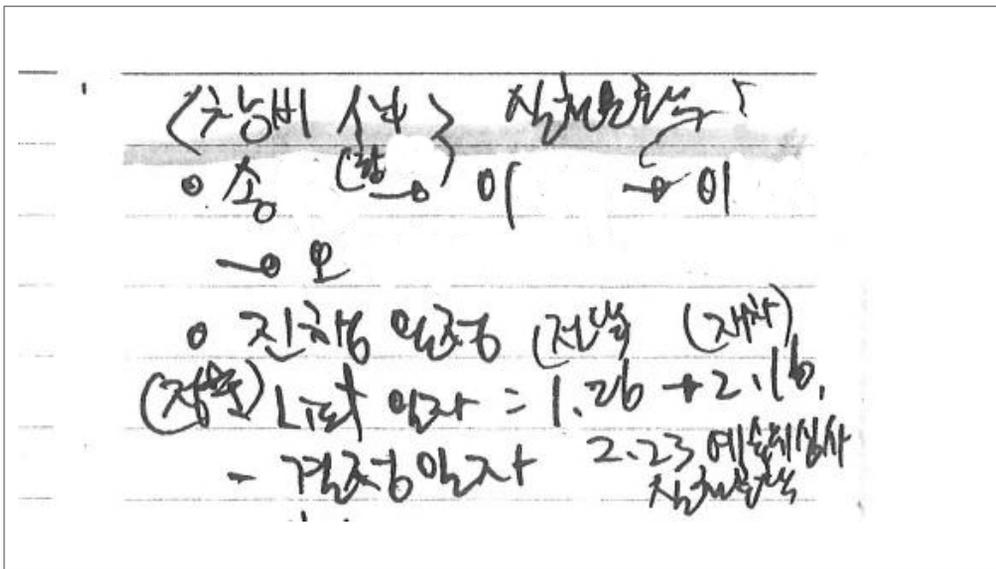
2015. 4. 20.자 주요 논의사항은 이OO의 후임인 이OO이 작성했다. 4. 20.자 보고서에는 □ 회의 개요에 일시/장소, 참석자 등이 적시되었다. 이전 보고서 양식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되었다. 기초실장 송OO, 창조행정담당관 이OO, 예술 이OO, 문화기반 고OO, 콘텐츠 김OO, 미디어 김OO 등이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OO은 4. 20.자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예술'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고 했다. 논의사항에 따르면 당시 공모 사업 33건이 진행 중이고 각종 리스트를 관리, 공유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즈음부터 오OO으로 지원 배제 업무가 단일화되어 오OO이 단독으로 각종 리스트를 작성, 관리해 갔다.

## 라. 창조행정담당관 이OO이 2015. 2. 경 받은 리스트

2015. 2. 초경 송OO은 정무수석실에서 2장짜리 리스트를 받아 창조행정담당관 이OO에게 전달하였고, 이OO은 건전콘텐츠활성화TF에서 이 리스트를 각 과에 배포했다. 한 달 후 김종덕 장관이 송OO에게 ‘그거 각 실국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는데 예술정책과장 이OO만 카피본을 받지 못해 경위 파악으로 논란이 됐다. 창조행정담당관 이OO은 이 명단을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송OO 또한 김소영에게 서류를 한 번 받았던 기억은 있지만 그것이 당시 리스트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제1차관 박민권이 작성한 업무수첩에는 당시 리스트 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 등이 적혀있었다.

### [그림-24] 박민권 수첩 중 블랙리스트 관련



#### <창비선> 실천문학

- 송OO(황OO) → 이OO → 이OO → 오OO
- 진행일정
  - List 일자 : 1.26-2.26
  - 결정일자 2.23. 예술위 심사 실천문학

이를 통해 당시 리스트를 받은 사람은 송OO으로 추정되고 이OO, 이OO를 거쳐 최종 오OO에게 전달되었고, 오OO은 예술위 직원들에게 관련 리스트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리스트는 단체와 대표 명단만 내열된 종으로 된 명단이었고 이OO은 배포하면서 배제 명단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문체비서관실에서 각 과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만 했다고 했다. 이OO이 이 명단을 예술국에 2주 후에 전달하면서 창비 건이 논란이 되었다. 예술정책과장 이OO는 당시 리스트는 송OO이 창조행정담당관 이OO에게 전달해 건전콘텐츠활성화TF에서 배포된 것이라고 했다.

“진보나 좌파가 아닌 명단도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비, 실천문학이 들어있었습니다. 실천문학은 원래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실천문학을 빼야하는 상황이었는데 평가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배제가 불가능하다고 김OO 국장이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해 청와대에 양해받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수문예지지원사업 심사 진행 중 이OO이 전달한 리스트에 창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술국에는 2주 후에 전달되었는데 이OO이 ‘참고만 하라’고만 하고 블랙리스트 명단이라고 하지 않아, 저 역시 오OO에게 참고만 하라고 했고 오OO 역시 장OO 부장에게 참고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경 우수문예지선정 결과에 창비가 포함되자, 김종덕 장관이 창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송OO 실장에게 지시해서 제가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sup>75)</sup>

당시 제1차관 박민권은 “관련 리스트가 2015. 1. 26.경 내려왔고, 2차로 2015. 2. 16.경 내려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리스트에 따르면 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지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무수석실에서 창비와 실천문학 모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하였으나 예술정책과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갈등이 있다는 보고를 김OO에게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했다.<sup>76)</sup>

이 때 받은 명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모든 명단은 블랙리스트가 되어 관리되었다. 이OO는 ‘당시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리스트를 넘겨줬는데 문체부 직원들이 장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 돌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열린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타이트하게 진행되었고 이후 청와대 명단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부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진술했다.<sup>77)</sup> 이를 통해서도 건전콘텐츠활성화TF가 청와대의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5) 이OO 진술조서(2018. 2. 1.).

76) 특검 박민권 진술조서(2016. 12. 18.).

77) 이OO 면담보고(2018. 2. 26.).

## 마. 건전콘텐츠활성화TF의 중단 및 지원배제 업무의 단일화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2013. 9. 9.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시작으로 2014. 5. 건전콘텐츠활성화TF로 명칭을 변경하여 계속 운영되다가 2015. 4.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2015. 2.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임과 예술국 오OO 사무관으로 지원배제 창구가 단일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건전콘텐츠활성화TF 또한 중단되었다.

TF 단장이었던 기초실장 송OO은 “김기춘 실장이 사임하고 이병기 실장 부임 이후, 한 차례 회의를 하고 창조행정담당관 이OO이 청와대에 보고서를 보냈는데 반응이 없어 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TF 안 해도 된다. 앞으로 혹시 이런 유사한 걸로 오면 창구를 단일화해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앞으로 지원 배제와 관련된 것은 오OO 사무관에게 넘겨줘라.’고 말한 후 종료하였다고 했다.<sup>78)</sup>

단일화 창구 역할을 했던 오OO은 단일화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다.

“국정원을 거치는 검증 절차는 김OO 국장이 ‘국정원에 명단 보내줘라’는 지시로 시작됐고 그 후로 청와대에서도 ‘국정원을 거쳐서 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2015년 공모사업을 할 때 3,000명을 몇 단계에 나눠서 국정원 조OO에게 보내면 그쪽에서 몇 명 확인해 주고.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후로도 계속 하라고 해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초기에는 조OO 전무님이 했고, 너무 많아지니까 김OO 전무님까지 보냈습니다. TF 이후에는 실국에서 국정원 문의가 많아지니 저를 거쳐서 보내라고 하면서 단일화되었습니다. 또한 청와대쪽에서 많은 사람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sup>79)</sup>

그 후 오OO은 국정원에서 검증을 거친 명단을 받아, 다시 실국에 넘겨주는 창구 역할을 했다. 김OO에게 최초 지시를 한 사람은 송OO이었다. 송OO은 TF에서 ‘명단이 내려오면 배제할 근거가 없으니 국정원에 보내 의견을 받아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고 했다.<sup>80)</sup> 이OO는 ‘예술국, 문정국, 문화기반국, 미디어국, 관광국, 체육국 등 각 과 실무자들이 국정원에 검토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국정원이나 청와대 쪽에서 국정원 관련 창구는 오OO으로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블랙리스트가 공개적으로 진행할 사안이 아닌데 많은 관계자가 국정원에 연락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진술했다.<sup>81)</sup>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은 “처음 리스트를 받고 공연과 사무관들은 각자 자

78) 송OO 녹취록(2018. 2. 23.) 19쪽.

79) 오OO 녹취록(2018. 4. 2.) 34쪽, 특검 오OO 2회 진술조서(2016. 12. 27.).

80) 송OO 녹취록(2018. 2. 23.) 61쪽.

81) 이OO 진술조서(2018. 2. 1.).

기 파트 담당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령, 한 사업에서 리스트에 추가되었는데 다른 담당자에게 업데이트된 리스트가 공유가 안 되어서 다른 사업에 지원이 되었다가 문제가 되기도 해 오OO 사무관으로 일원화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sup>82)</sup> 송OO의 지시로 국정원 검증이 시작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국정원 검증은 점점 증가해 오OO으로 창구가 단일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바. 건전콘텐츠활성화TF의 한계

김종덕 장관은 김기춘 실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도구로 건전콘텐츠활성화 TF를 운영하였다. 청와대 지시에 의한 지원 배제 업무는 TF에서 보고, 공유되었다. TF가 청와대의 부당한 블랙리스트 지시이행을 위한 조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문체부 관계자들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최대한 막기 위한 논의 역시 TF를 통해 이뤄진 점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위원회에 강조하고 있다.

기조실장 송OO은 TF와 관련해 이렇게 진술했다.

“장관이 ‘그거는 하고 있냐?’라고 물으면 ‘장관님, 제가 이걸 해보니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지원배제 업무를 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문예위 심사위원한테 빼달라고 하는 말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심사위원한테 접촉할 수가 없으니, 지원배제는 문예위 직원을 통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선정이 끝났는데 이것을 빼라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원배제 업무는 못한다고 장관님이 수석 만날 때도 얘기해 주시고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더니 장관이 ‘청와대에 잘 얘기해봐’라고... 본인이 적극성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위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들한테 그랬습니다. ‘장관한테 얘기해도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담당 국장들이 김소영 비서관에게 왜 안 되는지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sup>83)</sup>

각 과 실무자들도 건전콘텐츠활성화TF에서 관련 사업과 진행사항을 보고하며 지원 배제 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하면 기조실장을 통해 장관에게 전달되고, 이것이 청와대에 전달되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건전콘텐츠활성화TF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었다. 오OO은 TF의 한계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다.

82) 김OO 진술조서(2018. 3. 8.).

83) 송OO 녹취록(2018. 2. 23.) 38쪽.

“ 이OO 과장이 없을 때 한두 번 참석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면 송OO 실장은 ‘고생한다.’ 송OO 실장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장관도 해결을 못하는데... TF를 통해서 계속 애로점을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구조인 걸 아니까요. TF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sup>84)</sup>”

예술정책과장 이OO는 TF가 기초실장 주재 회의이니만큼 기초실장을 통해 지원배제 업무의 어려움을 장관에게 전달코자 했으나 송OO 기초실장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sup>85)</sup> 건전콘텐츠활성화TF에서 지원배제 업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 보고하고 있었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TF에서는 주로 각 과에서 지원 배제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면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해 주지 않았고 각 과에서 직접 문체비서관 김소영을 설득하라는 구조였다. 양해 논의 또한 TF에서 진행되었다. 각 과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절대 뺄 수 없다고 보고하면 일단 보고서에 답아 문체비서관실에 송부하고 ‘담당 국장이 가서 설명하도록 하라’는 알맹이 없는 지시만 반복했다.<sup>86)</sup> 양해 논의와 관련해 송OO은 “윗사람들이 그렇게 세세하게 다 알겠어라고 생각해 당시 김소영 비서관만 양해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소영 비서관이 처음에는 ‘당연히 해야지. 왜 자꾸 빠뜨리냐?’ 고 했고 후에는 자기도 못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고 행정관들은 ‘정무수석실에 직접 얘기하라’ 고 했다고 진술했다.<sup>87)</sup>

84) 오OO 녹취록(2019. 4. 2.) 24쪽.

85) 이OO 면담보고(2018. 2. 16.)

86) 송OO 녹취록(2018. 2. 23.) 40쪽.

87) 위 녹취록 57쪽.

## 6. 건전콘텐츠활성화TF 이후

### 가. 국감 관련 기초실 차원의 조사

#### [그림-25] 건전콘텐츠TF 추진 경과 보고(2017. 2.)

2017. 2.

## 건전 콘텐츠 TF 추진경과 보고

**1. 그간의 경과**

- 2013년말 부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관련 청와대 요청사항에 대한 이행 및 점검을 위한 비정기적 회의가 수차례 개최됨
  - 각 실국에서는 소관 지원 사업별로 청와대로부터 지시 또는 확인을 받았으며, 이러한 절차는 계속 유지됨
- 2014년 5월경 조현제 前 1차관은 청와대 교문수석실로부터 지원배제 명단(80명)을 전달 받음
- 문체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건전 콘텐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 6월경에는 동 보고서에 따라서 기초실장을 팀장으로 국장들이 참석하는 "건전 콘텐츠 TF팀"을 구성·운영함
  - 동 TF에는 다른 일정이 많았던 국장급 공무원 대신에 과장급 공무원들이 많이 참가했던 것으로 확인
- 2014년 10월경 김종덕 前장관은 청와대 지시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거론하며 송00 당시 기초실장에게 김기춘 前비서실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건을 준비해 줄 것을 지시함
  - 부임(14.10.8) 직후였던 기초실장은 이미 작성되어 있던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 보고
  - 장관은 2014년 10월21일경 동 문건을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후 보고내용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기초실장은 관련 실국회의를 소집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전달
- 동 TF는 초기에는 주간 단위로, 이후에는 부정기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주로 해당 실국이 진행하는 청와대 지시 관련 사업등의 추진 상황이나 특이사항, 애로점 등을 취합·정리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
  - TF에 대한 청와대 관심 소멸과 형식적 운영으로 인하여 2015년 상반기에 자연스럽게 중단

## 2. 구성 및 담당

### ○ (총괄) 기초실장

- 최 (‘13.3.19.~’14.10.7.), 송OO (‘14.10.8.~’16.12.29.)

※(간사: 정책기획관 김OO (‘13.5.15.~’14.10.19.), 황OO (‘14.2.17~’14.11.10/창조행정담당관, ‘14.11.11.~’15.2.22/정책기획관), 김OO (‘15.3.3~’15.7.30)

### ○ (참석) 국장급 참석 원칙

- 국장들의 서울 출장이 잦아 대부분 과장급이 참석

### ○ (역할) 실국별 각종 지원사업 진행현황, 애로사항 등 확인·취합

- 문예위 공모지원 사업, 영화 등 보조사업, 세종도서 사업 등

## 3. 관련자료 보유 여부

○ 동 회의는 사전 회의자료 없이 진행하였으며, 회의결과만 간략히 요약,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

- 다만, 동 자료는 별도 보관하지 않고 통상 보고 후 폐기한 것으로 추정

- 컴퓨터 정밀 검색 등을 통해 회의결과 자료 3건을 발견하였으나, 현 직원은 물론, 전임자들도 이러한 자료가 자신들의 컴퓨터에 있다는 사실을 최근까지 인지하지 못함

\* 「건전 콘텐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서도 확인하지 못함.

○ 특검이 압수수색(16.12.26.) 당시 컴퓨터 포렌식을 실시하고, 많은 서류와 일부 하드디스크도 전격 수거해 갔는 바, 특검이 포렌식을 통해 이들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은 있음.

<관련 참고> 소위 문화예술 지원배제 명단(약 600명)은 2014년 이후 청와대 지시로 지원이 배제된 케이스를 실무자가 그때 그때 일지형태로 추가해 온 결과자료이며, 언론에 보도된 9,473명 명단은 우리부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15년 4개 카테고리로 대상을 확대하라는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에 올라있는 명단들을 그대로 확인·출력한 자료인 바, 동명이인 여부 등 상세정보 부재로 실제 적용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함.

문체부 기획조정실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건전콘텐츠활성화TF의 구성, 활동 내용 등과 관련한 질의가 들어오자 한시적으로 운영한 조직이었다는 취지의 답변만 내놓는데 그쳤다. 이에 2017. 2. 당시 기초실장 김OO는 외부 질의에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답변 하는데 한계가 있고 김종덕 장관이 구속되어 밝힐 것은 밝히려는 인식으로 창조행정담당관 D에게 건전콘텐츠활성화TF의 경과를 조사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D는 특검 압수수색 이후 실제 자료를 확인할 길이 없어 당시 기초실장 송OO과 창조행정담당관 황OO에게 확인해 위 문서인 「건전 콘텐츠TF 추진 경과 보고」를 작성했다고 했다. 「건전 콘텐츠TF 추진 경과 보고」는 2쪽짜리로 국정조사와 임시국회 대비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 제4절 | 조사 결과

### 1. 진상규명 사실

#### 가.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활성화 TF 구성 경위

- 1) 2013. 8. 김기춘 비서실장 부임 이후, 청와대 기조가 바뀌면서 문체부는 청와대의 질책에 시달렸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2013. 9. 9.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문화예술정책점검TF는 연극 개구리 논란에 대한 대응책 제시 과정에서 발족되었고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 TF는 매주 월요일 실국장 회의 이후에 총 5~6회 정도 진행되었다. 단장은 조현재 차관이었지만 조차관은 첫 회의만 주재했고 이후는 기초실장 최OO이 주재했다. 정책기획관 김OO, 창조행정담당관 김OO, 예술정책관 김OO 등이 참석했다. 창조행정담당관 김OO이 TF에서 작성한 문서를 ‘개구리’라는 폴더에 넣어 보관하다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였다.
- 2) 2014. 5. 문화예술정책점검TF는 건전콘텐츠활성화TF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계속 운영되었다.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문화예술정책점검TF의 연속체였다. 명칭 변경은 “제대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에서 “취지가 나쁜 콘텐츠는 죽이겠다”는 의미로 의 좀 더 강화된 모습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건전콘텐츠’라는 단어 또한 TF에서 만들었는데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가급적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선정한 단어였다. 건전콘텐츠활성화TF 또한 기초실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기초실장 최OO이 단장, 정책기획관 김OO이 부단장, 창조행정담당관 황OO이 간사로 참여했고 중무실장 김OO, 콘텐츠산업실장 신OO, 예술국장 김OO, 미디어국장 박OO 등 관련 담당 실국장이 회원이 되는 식으로 구성되어 한 달에 한 번 이상 진행되었다. 되도록 실장급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책임지고자 했다.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으나 현재 찾을 수는 없었다.
- 3) 2014. 10.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기존의 TF 시절보다 청와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종덕 장관 부임 이후, 이념편향적인 것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기춘의 지시에 따라 건전콘텐츠활성화TF가

구성되었고 TF를 통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등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김종덕을 거쳐 김기춘에게 보고되었고, 문체부 내에서 이념적으로 문제된 모든 내용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 3개 분야로 나누어 향후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기조실장 송OO이 단장, 정책기획관 황OO이 부단장, 창조행정담당관 이OO이 간사로 참여했고 예술국에서는 주로 예술정책과장 이OO, 사무관 오OO이 돌아가며 참석했고, 콘텐츠국에서는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정OO, 사무관 이OO, 미디어국에서는 미디어정책과장 김OO, 출판인쇄산업과장 김OO, 인문정신문화과장 고OO 등이 참석했다.

#### 나.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활성화 TF 등의 역할

유진룡 장관 시절, 문화예술정책점검TF는 청와대 기조가 바뀌면서 문체부는 청와대의 질책에 시달렸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당시에는 블랙리스트가 내려오기 전으로 청와대의 지시 사항에 보고서로 대응했고 문체부 내에서도 정부 비판적 예술인 지원 배제 지시가 향후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시기였다. 기조실을 중심으로 5~6차례 운영되었을 뿐 실질적인 역할을 하던 TF는 아니었다.

그런 기조는 2014. 5. 청와대로부터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내려오면서 바뀌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의 적용 여부와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문화예술정책점검TF’의 명칭을 ‘건전콘텐츠활성화TF’로 변경, 운영하였다. 명칭이 변경되면서 ‘점검’에서 ‘취지가 나쁜 콘텐츠를 죽이겠다’는 좀 더 강화된 의미를 갖추었다. 건전콘텐츠활성화TF 논의를 거쳐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명단의 지원 배제 여부를 결정해 탄력적으로 배제할 계획이었다. 김기춘 부임 이후, 지원 배제와 관련한 부당한 지시는 있었지만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내려온 것은 2014. 5.경이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신OO은 “2014. 4. 16.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문화예술 인사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 인사들을 선별해서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sup>88)</sup>라고 진술했다.

2014. 10. 김종덕 장관 부임 이후에도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계속 운영되었다. 김기춘이 승인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이전 TF들과 다른 성격으로 구성 및 운영되었

88) 특검 신OO 진술조서(2016. 12. 17.).

다. 일단 각 과의 과장, 사무관 등 실무진이 TF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참석자의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TF에서 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이 영진위, 문예위 등 소속기관으로 하달되어 실행계획대로 일부가 실행되면서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가 현실화되었다.

#### 다. 건전콘텐츠활성화 TF의 해소 및 그 이후

1) 건전콘텐츠활성화TF는 2013. 9. 9. 문화예술정책점검TF를 시작으로 2014. 5. 건전콘텐츠활성화TF로 명칭을 변경하여 계속 운영되다가 2015. 4. 20.자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문체부 내에서 2015. 2.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임과 예술국 오OO 사무관으로 지원배제 창구가 단일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건전콘텐츠활성화 TF 또한 해소되었다.

오OO으로 창구가 단일화 된 것은, 생태계 진흥세부 실행계획 등으로 심사위원제도나 심의절차 등 좌파배제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시스템 정착이 마무리되어 TF를 통한 정책적 제도적 논의보다는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정치적 성향 검증 위주로 블랙리스트 실행 업무의 내용이 단순해진 것이 요인으로 판단된다.

2) 건전콘텐츠활성화TF 참석자이자, 지원 배제 업무 실무자들은 TF를 통해 지원 배제 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하면 기조실장을 통해 장관에게 전달되고, 장관이 청와대에도 전달하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TF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 2.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실과 쟁점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활성화TF 조사에서 문화예술정책점검TF와 2015. 5. 건전콘텐츠활성화TF의 결과보고서를 찾지 못하였다. 각각의 보고서는 당시 문체부의 상황과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는 찾을 수 없었다. 당시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했던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청와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 향후 김기춘, 김종덕, 김소영 등의 재판이 종료되면 추가 진술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

# 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



# 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



###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공7[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 가. 직권조사 취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4~2016년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 제도 및 심사 제도를 개편하였던 경위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2013. 9. 9. 문체부는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가 논란을 빚은 이후 대책을 마련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구성하였고, 2014. 2. 21.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좌성향 단체들이 지원받은 사실에 대한 청와대의 문제제기에 따라서 2014. 3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특정 인사들을 배제하였다. 한편 2015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에서 문제 단체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2014. 4.~10월 사이 심의제도

개편을 위한 준비를 하여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실행하였으나 일부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생겨나고 여론이 악화되자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을 개편하기로 하고 공모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기획사업을 확대하는 등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개편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붙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2017직공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 사건]**

## 제1절 | 조사 개요

### 1. 직권조사의 취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문예진흥기금사업에서 좌성향 예술인(단체)가 지원 받고 있는 실태를 시정하라는 청와대·국정원의 방침에 따라서 2014~2016년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예술위 지원 및 심사 제도를 개편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문체부와 예술위가 청와대·국정원의 배제 방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및 심사제도를 어떻게 개편하였는지 밝히고 그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 2. 조사개시의 근거 및 목적

### 가.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2017년 12월 22일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 나. 조사의 목적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1) 박근혜 정부 문체부 산하 예술위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배경을 밝히고, (2) 문체부와 예술위가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문예진흥기금 지원 및 심사 제도를 개편하였던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

## 제2절 | 조사 경과

### 1. 문건 등 자료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98건에 대하여 입수 및 검토함.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1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8.27.)	MB정부 청와대	2017. 8. 17.	
2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2013. 3. 15.)	국정원 작성, 청와대에 보고	2017. 9. 29.	
3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	2017. 8. 17.	
4	리스트-'16.9.27.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	2017. 8. 17.	
5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 현황 (2016. 1. 21.)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	2017. 8. 17.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사업 개편안 (2015. 12. 8.)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	2017. 8. 17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7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보고 (2018.1.8.)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	2017. 8. 17	
8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라)(2013. 9. 26.)	국정원	2017. 8. 17.	
9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추진실태 조사 협조계획 (2013.11.12.)	문체부	2017. 8. 17.	
10	지자체 문예기금사업 실태조사 중간보고 (2013 11. 25.)	문체부	2017. 8. 17.	
11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4. 2. 17.)	예술위	2017. 8. 17.	
12	팩송부문서(다)(2014. 2. 21.)	국정원	2017. 8. 17.	
13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2014. 2. 21.)	문체부	2017. 8. 17.	
14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2014. 10.)	문체부	2017. 8. 17.	
15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2014. 10.)	문체부	2017. 8. 17.	
16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 (2015. 2. 25.)	문체부	2017. 8. 17.	
17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 (2015. 3. 16.)	문체부	2017. 8. 17.	
18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 (2015. 4. 20.)	문체부	2017. 8. 17.	
19	건전콘텐츠 TF 추진경과보고(2017. 2.)	문체부	2017. 8. 17.	
20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현황 (2014. 12. 19.)	문체부	2017. 8. 17.	
21	수기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2015. 1. 9.)	문체부	2017. 8. 17.	
22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2015. 1. 15.)	문체부	2017. 8. 17.	
23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 보고(2015. 1. 27.)	문체부	2017. 8. 17.	
24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 (2015. 3. 9.)	문체부	2017. 8. 17.	
25	문화예술분야 지원 사업 관련 현안 (2015. 5. 11.)	문체부	2017. 8. 17.	
26	문화예술분야 지원 사업 관련 현안 (2015. 5. 21.)	문체부	2017. 8. 17.	
27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2016. 1. 21.)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28	(대외비)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 방안(2016. 9. 9.)	문체부	2017. 8. 17.	
29	블랙리스트 관련 기간 경과 및 현황 분석	문체부	2017. 8. 17.	
30	장관님 면담 참고자료(2015. 10. 2.)	예술위	2017. 10. 13.	
31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2017. 10. 30.)	국정원 적폐청산 T/F		
32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2013. 9. 3.)	국정원 적폐청산 T/F		
33	문체부, 좌파 견제 '문화예술정책점검 TF' 지속 운영 방침(2013. 12. 5.)	국정원 적폐청산 T/F		
34	문체부장관, 좌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배제책 강구 지시(2014. 1. 24.)	국정원 적폐청산 T/F		
35	문체부, BH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 예정(2014. 3. 21.)	국정원 적폐청산 T/F		
36	문체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체 정화시스템 가동(2014. 4. 21.)	국정원 적폐청산 T/F		
37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비판단체 지원 차단책 추진(2014. 9. 26.)	국정원 적폐청산 T/F		
38	문체부조치사항관련 출력물(2015. 9. 11.)	국정원 적폐청산 T/F		
39	극단 골목길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사업 포기서 및 사업 포기 처리 경위	예술위	2017. 10. 30.	
40	2014-2015년 검열 시행 사례-아르코 미술관(김OO 제출 진술서)	아르코미술관장 김OO	2018. 1. 10.	
41	이메일: 이OO→김OO 등 예술위 간부들 (2014. 8. 26.)	아르코미술관장 김OO	2018. 1. 10.	
42	이메일: 이OO→이OO, 김OO 미술을 위한 캐비닛 상영작품 '두 세계 사이'에 대한 보고	아르코미술관장 김OO	2018. 1. 10.	
43	아르코미술관 40주년 특별전 <미술을 위한 캐비닛, 아카이브로 읽는 아르코미술관 40년> 전시내용 보고(2014.10.31.)	아르코미술관장 김OO	2018. 1. 10.	이메일 첨부문서
44	문예기금사업 개선 필요사항(2014.6.27.)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	2018. 1. 10.	
45	2015년도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 대상 단체 결정의 건 (2015. 6. 25.)	예술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2018. 1. 19.	
46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 운영 계획(2015. 4. 21.)	예술위	2018. 1. 25.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47	2016년 심의위원 풀 후보안_ (총592명)(심임위원_추천_무용, 문화일반 추가)_20160719_문체부검토.xlsx	예술위 기획예산부장 강OO	2018. 1. 25.	
48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보고(2013. 12. 20.)	청와대	2018. 1. 26.	
49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보고(2014. 1. 3.)	청와대	2018. 1. 29.	
50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 (2014. 3. 12.)	청와대	2018. 1. 29.	
51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 (2014. 3. 27.)	청와대	2018. 1. 29.	
52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 (2014. 3. 28.)	청와대	2018. 1. 29.	
53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014. 4. 25.)	청와대	2018. 1. 29.	
54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2014. 9. 5.)	청와대	2018. 1. 29.	
55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2014. 10. 2.)	청와대	2018. 1. 29.	
56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2014. 10. 12.)	청와대	2018. 1. 29.	
57	수석 비서관 회의자료(2014. 11. 21.)	청와대	2018. 1. 29.	
58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2015. 5. 15.)	청와대	2018. 1. 29.	
59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2015. 11. 18.)	청와대	2018. 1. 29.	
60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2014. 5.)	청와대		
6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확인서 제출(2018. 2. 8.) (이OO 사실확인서)	예술위 사무처	2018. 2. 8.	아르코 미술관 40주년 전시 관련
62	인문예술콘서트 '오늘'(OOO 제출 진술서)	예술위 협력개발부	2018. 2. 9.	
63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출연자 후보 명단 (151210) (2015. 12. 10.)	예술위 협력개발부	2018. 2. 9.	엑셀파일 출력문서
64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출연자 섭외리스트 (151222)(2015. 12. 22.)	예술위 협력개발부	2018. 2. 9.	
65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출연자 명단 검토를 부탁드립니다.(이메일)	예술위 협력개발부	2018. 2. 9.	
66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공모 2차 심의(2016. 2. 16.)	예술위	2018. 3. 21.	
67	2016 의원실 민원관리 현황(2016. 4. 22.)	예술위	2018. 3. 21.	
68	탈북단체 지원현황(2016. 3. 22.)	예술위	2018. 3. 21.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69	탈북자로 구성된 북한예술단 현황자료 (2016. 3. 22.)	예술위	2018. 3. 21.	
70	[정읍 웃찾사] 보고(2016. 7. 20.)	예술위	2018. 3. 21.	
71	공연과-순회사업부 협의 안건(2016. 1. 7.)	예술위	2016. 1. 7.	
72	2017노2425/2017노2424(병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공판조서(양OO, 이OO 증인)(2017. 12. 7.)	예술위 창작지원부장 양OO	2018. 3. 30.	
73	2016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기본계획(안)(2016. 1.)	예술위	2018. 4. 6.	
74	2016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주관처 지원대상 결정의 건(2016. 3. 25.)	예술위	2018. 4. 6.	
75	공연과-순회사업부 협의 안건(2016. 1. 7.)	예술위	2018. 4. 6.	
76	예술국 요청사항 대응방안(2016. 1. 7.)	예술위	2018. 4. 6.	
77	사실확인서(USB 제출 관련)	예술위 순회사업부장 김OO	2018. 4. 6.	
78	공연예술창작지원사업 추진단 관련 입안 및 심의 요청(2014. 3. 6.)	예술위 창작지원부장 장OO	2018. 4. 12.	
79	공연예술창작지원사업추진단 조직 및 운영지침(2014.3.)	예술위 창작지원부장 장OO	2018. 4. 12.	
80	2015/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관련 정부의 외압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 (2018. 4. 현재)	예술위 자체조사 TF		
81	제161차 예술위원회 회의록(2015.5.29.)	예술위		
82	제162차 예술위원회 회의록(2015.6.25.)	예술위		
83	제165차 예술위원회 회의록(2015.7.31.)	예술위		
84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2015. 8. 5.)	예술위		
85	제173차 예술위원회 회의록(2015.11.6.)	예술위		
86	2016년도 사업별 업무계획(2015. 12.)	예술위		
87	조OO 진술서(2017. 2. 4.)	재판증거기록		
88	조현재 진술서(2016. 12. 18.)	재판증거기록		
89	R 진술조서(2016. 12. 27.)	재판증거기록		
90	R 2회 진술조서(2017. 1. 6.)	재판증거기록		
91	박준우 특검 2회 진술조서	재판증거기록		
92	A 진술서(2017. 1.)	재판증거기록		
93	박OO 진술조서(2017. 1. 1.)	재판증거기록		
94	오OO 진술서(2017. 1. 12.)	재판증거기록		
95	오OO 진술서(2017. 1. 24.)	재판증거기록		

연번	서명	진술자, 작성자 등	입수일	비고
96	강OO 진술서(2017. 1. 13.)	재판증거기록		
97	김OO 진술서(2017. 1. 19.)	재판증거기록		
98	피의자신문조서(김소영)(2016. 12. 26.)	재판증거기록		

##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아래와 같이 모두 46인에 대하여 58회에 걸쳐 조사함.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최OO	심사위원	1회 진술서(2017. 10. 12.)
2	차OO	예술위 극장운영부장	진술서(2017. 11. 4.)
3	정O	예술위 공연지원부장	1회 진술서(2018. 1. 30.)
4	정O	예술위 공연지원부장	진술서(2017. 11. 30.)
5	유진룡	문체부 장관	면담 녹취록(2017. 12. 6.)
6	B	문체부 예술국장	1회 진술서(2018. 1. 5.)
7	B	문체부 예술국장	2회 진술서(2018. 3. 23.)
8	이OO	예술위 문화복지부장	진술서(2018. 1. 18.)
9	김OO	아르코미술관 관장	1회 진술서(2018. 1. 10)
10	박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1회 진술서(2018. 1. 11.)
11	장OO	예술위 창작지원부장	1회 진술서(2018. 1. 11.)
12	장OO	예술위 창작지원부장	2회 진술서(2018. 4. 12.)
13	장OO	예술위 창작지원부장	진술서(2017. 11. 10.)(2018. 4. 12.)
14	조OO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면담녹취록(2018. 1. 12.)
15	김OO	문체부 예술정책과장(2016)	1회 진술서(2018. 1. 12.)
16	박OO	예술위 공연예술본부장	1회 진술서(2018. 1. 15.)
17	박OO	예술위 공연예술본부장	사실확인서(2018. 2. 9.)
18	강OO	예술위 극장운영부장	1회 진술서(2018. 1. 15)
19	이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1회 진술서(2018. 1. 17.)
20	김OO	문체부 기획행정담당관	1회 진술서(2018. 1. 18.)
21	김OO	청와대 선임행정관	면담녹취록(2018. 1. 18.)
24	양OO	예술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1회 진술서(2018. 1. 19.)
25	양OO	예술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경위서(2017. 3. 14.)(2018. 1. 19.)
26	양OO	예술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진술서(2017. 11. 10.)(2018. 1. 19.)
27	이OO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	1회 진술서(2018. 1. 24.)
28	이OO	예술위 공연운영부장	1회 진술서(2018. 1. 24.)
29	황OO	문체부 창조행정담당관	1회 진술서(2018. 1. 24.)
30	강OO	예술위 기획예산부장	1회 진술서(2018. 1. 25.)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31	양OO	예술위 창작지원부장	1회 진술조서(2018. 1. 25.)
32	양OO	예술위 창작지원부장	진술서(2017. 11. 10.)(2018. 1. 25.)
33	양OO	예술위 창작지원부장	2회 진술조서(2018. 3. 30.)
34	이OO	예술위 사무처장	1회 진술조서(2018. 1. 31.)
35	이OO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1회 진술조서(2018. 2. 1.)
36	오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1회 진술조서(2018. 2. 7.)
37	이OO	예술위 사무처장	1회 진술조서(2018. 2. 7.)
38	김OO	문체부 예술국장	진술조서(2018. 2. 9.)
39	OOO	예술위 협력개발부 직원	1회 진술조서(2018. 2. 9.)
40	정OO	예술위 연극분야 위원	1회 진술조서(2018. 2. 13.)
41	송OO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1회 진술조서(2018. 2. 23.)
42	안OO	심사위원	1회 진술조서(2018. 2. 27.)
43	정OO	예술위 시각예술부장	사실확인서(2018. 3. 8.)
44	김OO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1회 진술조서(2018. 3. 8.)
45	김OO	예술위 공연운영부장	1회 진술조서(2018. 3. 21.~22.)
46	김OO	예술위 공연운영부장	2회 진술조서(2018. 4. 6.)
47	김OO	예술위 공연운영부장	3회 진술조서(2018. 6. 3.)
48	B	문체부 예술국장	1회 진술조서(2018. 3. 23.)
49	박OO	심사위원	1회 진술조서(2018. 4. 13.)
50	류OO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	사실확인서(2018. 4. 18.)
51	김OO	심사위원	1회 진술조서(2018. 4. 19.)
52	권영빈	예술위 위원장	사실확인 진술서(2018. 4. 20.)
53	권영빈	예술위 위원장	면담녹취록(2018. 4. 20.)
54	전OO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1회 진술조서(2018. 4. 23.)
55	박명진	예술위 위원장(2015~2017)	사실확인 답변서(2018. 4. 25.)
56	최OO	심사위원	2회 진술조서(2018. 5. 13.)
57	유OO	예술위 공연예술센터장	3회 진술조서(2018. 5. 22.)
58	OOO	아르코미술관 대리	1회 진술조서(2018. 5. 28.)

## 제3절 | 조사 내용

### 1. 기초사실

####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전신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제2항<sup>1)</sup>과 제20조<sup>2)</sup>에 근거하여 2005년 출범하였으며, 문예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 2. 예술위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배경

#### 가. 문건 등 자료조사

##### (1)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08.8.27.)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2008. 8. 27.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서는 문화권력을 순수 예술활동보다는 문화를 수단으로 하여 일정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지향적 세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문화를 국민 의식개조 및 정권개조를 위한 선정·선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좌파에서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sup>3)</sup> 한편 이 문서는 '좌파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를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이 '주요대책'을 제언하고 있다.<sup>4)</sup>

1)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1쪽.

4)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4쪽.

(앞에 생략)

-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은 소리없이 지속 실시
  - 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기관의 내부에는 아직 많은 수의 좌파실무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청산 필요
  -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진두지휘하고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청산작업을 지속 감시·독려
  - ※ 급진적인 인적청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불필요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좌파 고사 유도

나. 건전 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

(이하 생략)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기획관리비서관실소)

**I. 문화권력은 이념지향적 정치세력**

- 문화권력이란 순수 예술활동보다는 문화를 수단으로 하여 일정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지향적 세력을 의미
- 문화를 국민 의식개조 및 정권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좌파에서 조직적으로 활용

**II. 좌파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

가. 우파와 좌파간 권력 차이

- 보수를 대표하는 예총은 규모확장, 정부지원금확보, 국회의원 진출 등 의형 및 자리다툼이 치열하여 중심점 기능 상실
- 의형상 회원수 120만명으로 좌파 민예총(10만명)을 압도하나 회원공감대 및 경제성 부족으로 지리멸렬한 상황
- 지난해 말 대안으로 미래문화포럼(대표: 정진수 교수)이 결성되었으나 역시 주목할 만한 활동은 미약한 실정
- 좌파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조직적 지원 하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중심으로 문화권력의 주도세력으로 부상
- '88년 설립 후 근근히 권력을 유지하던 민예총은 DJ집권후 문예 아카데미, 문화정책연구소 등을 설치하여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이념적 공감대 확산 및 현실 문화정책대안을 지속 제시
- 이후 '99년 문화연대 결성을 통해 예술가 뿐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 전문가 그룹을 포섭·육성하여 의연확장 추진

-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은 소리없이 지속 실시
  - 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기관의 내부에는 아직 많은 수의 좌파실무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청산 필요
  -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진두지휘하고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청산작업을 지속 감시·독려
  - ※ 급진적인 인적청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불필요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좌파 고사 유도

나. 건전 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

- ✓ ○ '문화산업 모금회' 설립
  - 문화권력의 균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재원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지원사업 추진 필요
  - 현재 예술위가 문예진흥기금으로 문화단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해관계 대립, 내부 좌파독재 등으로 인해 활용하기 곤란
  - 따라서 새로운 이념에 따라 새로운 재원의 발굴과 집행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 필요
  - 모금회에 대통령 및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게 하고, 모금회는 이를 재원으로 다양한 우파 지원사업 실시
- 대규모 문화자본과 정부간 새로운 문화펀드 조성 (0)
  -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며, 작품성과 상업성을 두루 갖춘 영화, 애니메이션, 연극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필요
  - 자금이 필요한 대기업의 수요와 반정부·좌파문화활동 방지라는 정부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정부도 상징적 투자
  - ※ 우선 영진위를 통해 영화분야에 천억원(15만 규모) 펀드 조성 추진

(2)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2013. 3. 경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서는 문화예술계내 좌파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분열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어 '문화융성'과 문화예술계 건강성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문화계 좌파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각종 특혜를 받으며 성장하여 예술위 등 제도권을 장악하여 '문화권력'을 형성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문서는 2003년 당시 「민예총」의 지원은 보수성향의 예총의 92%였는데 2006년에는 191%로 급증, 문화예술계 주요 예산지원 창구인 예술위의 위원 11명 중 예총 출신은 2명(2003)에 불과하다고도 분석하고, 민예총·문화연대 등 골수 좌파조직들은 예술위 등의 정부지원 대상 선정시 철저 배제하는 등 점진적으로 격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좌파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 문서를 첨부하고 민예총, 작가회의, 문화연대 등을 열거하고 있다.<sup>5)</sup>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p>문화예술계내 좌파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분열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어 '문화융성'과 문화예술계 건강성 회복을 저해</p> <p>□ 문화예술계 주요 예산지원 창구인 예술위를 보태로 획책모너를 장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계 좌파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각종 특혜를 받으며 성장, 예술위·영진위·민예총 등 제도권을 장악하여 '문화권력'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당시 「민예총」 지원은 보수성향의 예총의 92% → 2006년에는 191%로 급증, 문화예술계 주요 예산지원 창구인 예술위의 위원 11명 중 예총 출신은 2명(2003)에 불과</li> </ul> </li> <li>○ 문학·미술·영화 등 분야별 조직을 바탕으로 문학계 新주류로 성장하고 있고, 순수 창작활동보다는 영리목적 경제적 이익 등 정치투쟁에 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분야는 '민예총'·'작가회의'·'문화연대' 등 좌파연대가 중심세력이고 영화계도 '영화제작가협회'·'영화감독조합' 등이 좌파 영화인 모인</li> </ul> </li> <li>○ 최근 문화투쟁 거점이 대중예체·인터넷 등으로 이동하자 좌파 '롤리테이너' 및 '과워 브러러리안'·'나눔수' 등이 대중영향력을 지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눔수' 활동권 등은 「국민TV」를 발족(3.30) 20~30대가 주대상자인 인터넷방송 후원이어·역할 관전으로 방송으로 전파 중점년층 포섭 기도</li> </ul> </li> </ul> <p>□ 좌파 문화예술인들은 가독권 유지 및 뒷물인 이념 확산을 위해 '문화'를 수단 삼아 團體를 분열시키고 연합된 가치관 조장에 몰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연회·집무는 헌법의 수호에, 대중은 '사회적 團體'로 재조, 공권력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는 물론 그곳엔 對北觀을 주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총 75년·'남북한100년' 등 행사를 '서치고 성의' 등 對北觀을 통한 정부 불신발 도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쇼박스·CJ E&amp;M 등 대형 영화제작사는 단순한 '홍성성'이 필요한 이유로 건전화화 부지를 피번하고, 좌파가 주무인 영화계의 눈치보기에 급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연예인협회' 'MLI' 등 영화계 4대연예 단체 30년 2000년 2000년 2000년 2000년</li> </ul> </li> <li>○ 민노총 투쟁현장 및 해외 FTA·계주복합비행 반대 활동에 문화계·문서쓰를 영거한 집회 주도, '문화'를 활용한 선동대 역할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참국마다 좌파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 정치 오면</li> </ul> </li> </ul> <p>□ 최근 좌파들이 정부 초기 국민대통합 분위기에 편승, 영향력 확대를 도에 중인 가운데 문화계 '홍성성' 지속시 '문화융성' 구현에 차질 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계 주요들은 급변 주요 사업으로 '문화 轉村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 의식화를 통한 사회적중·중심층 주무 등 지원층 흡수에 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연대는 안무구 있다 김동욱(가)·고재·성환 등 시흥주무적 김동욱(가) '성인인' 문화 '나눔수' 활동주는 김재 봉희로 귀촌, 유거는 농심을 문화 등 농촌살기 발차 역사화</li> </ul> </li> <li>○ 이와 관련, 건립 문화예술인들은 2006년 '문화대청 2%' 확대 등 정부의 문화정책에 편승, 再次的 變환으로 變환할 소지를 주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계가 保存·좌파 문화 집지대를 받고 순수 문화활동에 편향하도록 '문화계 大통합과 自衛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취업지원 및 창작연의금 지원사업 (총 100억원) 대상자 선정시 예술 김한자 위주도 선정</li> <li>- 민예총·문화연대 등 골수 左派조직들은 예술위·영진위 등의 정부지원 대상 선정시 철저 배제하는 등 점진적으로 격리 추진</li> </ul> </li> <li>● 문화단체·기업간 협력 MOU 및 對北觀이 연드 조상·교육사업 등 문화 지원을 적극 독려 문화계 건전화 추진</li> <li>● 「藝誌」·「自誌」 등 건립세력과 협조 문화계 左派세력이 권력자·정치 무일 실재·계약을 폭력하는 등 大통합을 강화 유도</li> </ul> </li> </ul> <p>* 별첨 1: 左派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p>

5) 청와대 작성,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1-3쪽. 2013. 3.

문화 예술	작가회의 이시광 : 소설가 이시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경림·조정래·공지영 등 작가 1,700여명으로 구성</li> <li>○ 민예총 산하 단체이자 사상적 토대를 담당하며 계기시 정부비판 시국선언·칼럼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왜곡된 입장 전파</li> <li>★ 작가 137명은 정권교체 요구 광고 게재(경향, 2012.12.14)</li> </ul>

**(3)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17.10.30.)**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 8. 16.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 2013. 10. 2.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재확산 시도 차단 건의’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 보고서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건전 인사를 보임하고, 좌편향 단체 보조금 지원 중단 등 ‘건전화’ 노력을 하였지만 척결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념오염 온상이 되어온 ‘문예계 정상화’를 위한 민·관이 협력하여 ‘좌성향’ 단체와 인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뿌리뽑아나갈 것을 제언하였다.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2017. 10. 30 (적폐청산 TF)

**1 사안 관련 및 주요 의의**

- 국정원은 김기춘 비서실장 부임(2013.8) 이후, ‘좌성향 문예계 인물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조직세력인 강태오 보고 및 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번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1차에 보고
- 2013.8.16.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 2013.10.2. ‘문예계에 좌성향 세력 재확산 시도 차단 건의’ 1차 보고
- MB 정부에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건전인사 보임·조편향 단체 보조금 지원 중단 등 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척결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 이념오염 온상이 되어온 ‘**문예계 정상화**’를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좌성향**’ 단체·인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뿌리뽑아** 나갈 것을 제언

< 관련 내용 >

- ▲ **공직분야** : 불리한 신분경쟁으로 좌성향 인물에 불투 기회
  - 문체부 선출 위촉을 통해 공공기관장 선출 및 좌성향 문예인 지원(대부 등을 포함, 임기연료 등 계기시 불리한 과정을 통해 문예인물 배출)
  - 지역위원장·위원장 등 국립단체가 먼저 이념·정치편향 직종 불합격을 위한 사전 공모제 확대 및 실시(기조·김희)
- ▲ **문화계분야** : 좌성향 단체 자금줄 차단 등 ‘불리한 고립·배제’ 유도
  - 좌성향 단체·인물에 대해서는 정부 공동사업·공모제 선출 배제 등 보조금·문화자금 중단 원칙 기조를 확대, 자금줄 차단
  - 보조금 차질이 불가피한 경우 적대감이나 불응 등에 불응·유동 여부 등을 엄밀 조사, 위축
  - 좌성향 문예인물외 이념·정치적 활동실태 및 위태를 집중 파악, 문예계의 후원형상과 무관하게한 **공직연선·비호장외** 노력 배기
  - 건전단체를 활용, 불교·활동적 있는 건전 문예인 양성을 위한 ‘문예 마케터링’ 운영 등 **좌성향·세력·대응연·김희도** 병행

< 좌성향 문예 인물·단체 배제 관련 건의 이시 및 ‘문체부, 조치 >

- ▲ **국공립 보고사·홍보대 나타난 1차 지시 및 ‘문체부, 조치 지향**
  - 2013.8.3 ‘문체부, 1차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 2013.10.31 ‘문체부 장관, 우수문학도서 선정시 좌편향 배제 지시’
  - 2013.12.5 ‘문체부, 최고권력 문화예술정책조정TF 지속 운영 방침’
  - 2014.1.24 ‘문체부장관, 좌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 요구 지시’
  - 2014.2.24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 추진’
  - 2014.3.17 ‘문체부, 좌성향 단체 참여 원정예술인 지원사업 제외 방침’
  - 2014.3.21 ‘문체부, 644에 관한 문화예술 배제제 조정보안 보고 요청’
  - 2014.4.21 ‘문체부, 국가정책실 확립을 위한 자회 열화시스템 가용’
  - 2014.5.25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비영단체 지원 중단책 추진’
  - 2014.10.27 ‘문화대, 세월호 디뮤지엄 논란 관련 문화부실무자 경고 지시’
  - 2014.12.19 ‘문체부, 좌성향 경제문화정책조정TF 지원 배제 조치’
  - 2015.2.2 ‘문체부, 민간 예술단체 공연지원 심사시 문체부내 배제’
  - 2015.3.8 ‘문체부 장관, 국립단체 공연차 선정시 좌성향 차를 배제 지시’
  - 2015.3.31 ‘문체부 장관, 문예기금 지원사업 논란 관련 총회 대응’
- ▲ **관련 권유**
  - 청와대에서 예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할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 명단들이 (문체부)내외와 **공직연고·활동연고·인물연고·배제연고**는 지시가 있었으나 (2014.2. 문체부 담당 10 조 000이) 300 문화부 예술국장으로부터 확인
  - 이명박 비서실장이 ‘정무수석실은 스텝간 능력이 안되니 큰충돌, 권유대상명 명단으로 거진내고 지시했다’며 **배제** 협조를 지시, **요청서명명(2015.4. 문체부 담당 10 조 000이) 문화부 직 00 1차관-김00, 예술정책관으로부터 확인**

○ 2013.12.10 BH 지시는 비서실장은 ‘문화예술, 미디어 부문에 지원이 많다. 굳이 문화에도 문제가 있는 인물이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문화예술계 지원방향이 여권이라고 지적하였고,

○ 이에, 국정원은 2014.1.27 ‘문예기금 운용기관에 보조금 지원기준 보완 필요 의견’ 제하 문예기금 지원 기준 변경 방안을 1차에 보고하고

- 2014.2.20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보완필요 여권’ 제하 보고서를 통해 ‘문예기금 지원 사업에 대상인 인물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대응책 필요성을 1차에 중첩 보고.

<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보완 필요 의견’ 보고서(2014.2.20) 주요내용 >

- ▲ 후원단체·인물이 문화진흥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문제
- ‘한국문화재단, 대표(조성민)는 노무현재단 고문 및 일반 소책 변호사법 작품 시공 선반에 참여했으나 학술지 ‘한국문학’ 발간사업이 계속사업에 포함
- 이년 문화재단 한국으로 발표물 및본 국간 ‘해동명(연자), ‘서울문화지(연복자), 월드 조선술
- ‘작가협회, 소속으로 발행물연락·해당자(연자) 등 정부를 비롯한 온·오프라인·복합구·산동책 등도 집행활동 지원금을 받을 여권
- ▲ 이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모선정 심의회에 요청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
- ▲ 현행기 심사부터는 이러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 권유
- 예술계 공모심사 재가를 심의를 추천(1.2명수) → 심사회 승인(2)이므로 관변, 인사회에서 특별회 최종 선정기록 개선
- 심의위원 임명(2명)시 과거 활동경력은 물론 이년문화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등 통해 건전예술인사 참여 확대 필요

○ 2014.2.21 문화기금 비서실장은 ‘문체부, 김부주’ ‘문화예술위원회, 2014년도 문화진흥기금 지원대상’을 보고받으며, 국정원비 보고를 드래로 요청한 인물·단체가 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

- 문화기금은 심의하는 문체부 장관에게 ‘문화부 예산과 기금이 적절히 반영될지, 문화의 경우 지원, 지원 대상물 인정하는, 심사위원회도 문체부 같은 기관 국외기관, 해외계 문화예술 지원대상’과 지시(2014.2.24 ‘문체부,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 방안 마련’ 제하 보고서 내용)
- 이에, ‘문체부’는 2014.2.22 국정원에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년문화 지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국정원에 지사 검증을 요청
- ‘문체부, 장관은 “문화 여부는 검찰, 이해관계 개입 등 철저한 검증은 국정원에 최종 할 수 밖에 없다”며 진술검증을 요청
- 특히, 2014.3.19 국정원은 ‘문예계에 요청한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제하 1차 보고서를 통해
  - 대표자 경력·활동(성우미연 박용복순, 사적선변·활동 인사(이시 등) 문예 따라 소책 ‘문화예술계 주요 진상향 문제 단체 15개, 인물 249명 등 열거·제시되며, 이들에 대한 ‘근거 미흡 확인’을 분석하고.
  - 단체(대표자) : 한국문화예술진흥재단(장), 서울연극협회(회장), 전국예술인협회(회장), 한국영화감독조합(이종민), 서울연극협회(회장), 학원(연) 등 15개 (발달 15)
  - 인물 : 활동분야·영향력·역사 249명분 A급(24명), B급(79명), C급(146명)으로 분류 (문학 48, 미술 28, 연극 30, 음악 104, 방송 7, 기타 10) (발달 14)
- 문예기금 지원기관에 요청한 인물 배제, 정부 보조금 지원준단을 통한 지급을 차단 등 “대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문체부, 등을 통해 집행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해제의 기준점 제시

(4)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13.9.3.)

국정원이 2013. 9. 3. 작성한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문서는 문체부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특정 편향(좌편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보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예술지원을 하는 예술위에 초점을 맞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근거를 남길 경우 잡음 발생 개연성에 대비 8.30 저녁 교문수석실 A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자료를 전달하였다고 보고 하고 있다. 보고 내용을 요약하면 1) 문화예술분야 내에 특정 편향적(좌편향적) 가치가 아직 상존하고 있어 보수가치 약화 현상이 우려되고, 2) 현 예술위 위원 의 경우 2012년 말 인사검증 시 특정 성향 편향 인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특정 편향 인사가 예술위 위원 등 문화예술계 주요 기관이나 임원에 선임될 가능성과 문예 기금 지원사업 선정시 책임심의위원회에 의한 편향적 작품 지원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 대응방안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기관 주요임원 교체시 또는 문화예술분야 사업 지원시 특정한 정치적·사회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순수예술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① 예술위 위원 등 문화예술기관 임원 임명시 특정 편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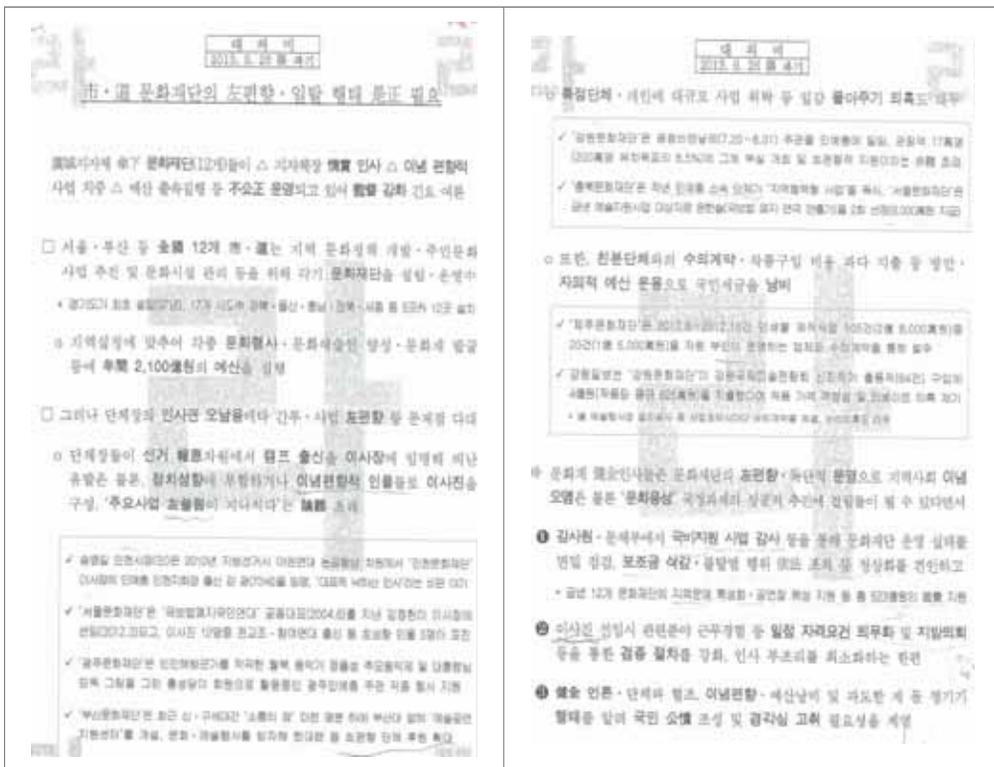
사 배제, ②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순수 예술이 아닌 특정 편향성이 강한 작품에 대한 지원이 배제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금 관리규정 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p>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p> <p style="text-align: right;">2013. 9. 3</p> <p>1. 문체부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특정 편향(左편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보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예술지원을 하는 예술위에 초점을 맞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근거를 남긴 경우 같은 발생 개연성에 대비 8.30 저녁 교문수석실 A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자료 전달</p> <p>2. 보고 내용 요약</p> <p><b>【 최근 동향 】</b></p> <p>가. 문화예술분야내에 특정 편향적(左 편향적 * 보고서에서는 '左편향' 용어 사용 지양) 가치가 아직 잔존하고 있어 보수가치 약화 현상 우려</p> <p>1) 문예예술진흥기금 지원금 거부(2010년, 한국작가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위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문예기금 지원 2개 단체 (한국작가회의, 민예총 대구지부)에 대해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수령한 후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li> <li>- 한국작가회의는 확인서 요구에 강력 반발(기자회견 등 개최)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거부하였고 이후 공모 지원신청에 불참</li> </ul> <p>2) 예술계 시국선언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판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작가회의(작가회의 명의, 2013.8.24), 연극계(최종원 등 12인, 2013.7.15)</li> </ul>	<p><b>【 문화예술분야 편향단체 정부지원 가능성 검토 】</b></p> <p>가. 문. 예술위 위원회 경우 2012년말 인사검문시 특정 성향 편향 인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특정 편향 인사가 예술위 위원 등 문화예술계 주요 기관 임원에 선임될 가능성은 상존</p> <p>나. 또한, 문예기금 지원사업 신청시 책임심의위원회에 의한 편향적 작품을 지원 가능성도 상존 (* 아직까지 특기할 만한 문예시에는 없음)</p> <p>* 사업절차 :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책임심의회원에 의한 심의·추진 → 지원대상 확정(비연회 지원) →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평가 평가</p> <p><b>【 대응 방안 】</b></p> <p>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기관 주요인원 교체시 또는 문화예술분야 사업 지원시 특정한 정치적·사회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순수예술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p> <p>1) 예술위 위원 등 문화예술기관 임원 임명시 특정 편향인사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위 위원 : 2013.11월 3명 임의안표 / 2014.12월 9명 임의안표</li> </ul> <p>2) 문화예술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수예술가치 기준하에 '책임심의위원회'를 선임,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하고 편향성이 배제된 순수예술작품 위주로 지원</li> <li>* 책임심의회원 : 8명 예술분야 총 40명, 임기 1년(2013.2-2014.2)</li> <li>- 순수예술이 아닌 특정 편향성의 강한 작품에 대한 지원이 배제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금 관리규정 개정</li> </ul>
---	--

**(5)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라)(‘13.9.26.)**

국정원이 ‘2013. 9. 26. 限 파기’라고 하면서 작성하였던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라)’ 문서는 광역지자체 산하 문화재단 12개에 대하여 열거하면서 충북문화재단에서 민예총 소속 단체가 ‘지역형 협력 사업’을 독식하였다거나, 서울문화재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연극을 연출하였던 연극 연출가 윤한솔이 2회 선정되어 6,00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 등을 지적하고 있다.<sup>6)</sup>

6) 국정원,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 1-2쪽. 2013. 9.



(6) 지자체 대상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실태조사

(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추진실태 조사 협조계획('13.11.12.)

문체부 내부결재 문서인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추진실태 조사 협조계획'은 문체부가 '새 정부 「문화융성」국정기조에 따라 국가재정(보조금) 투입 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국회·감사원 등 관계기관 지적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지역문화예술)의 사업추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로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확인된다.7)

7) 문체부 예술국 작성,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추진실태 조사 협조계획', 1-2쪽. 2013 11. 12.

### 지자체 대상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실태조사계획

13.11.25  
문체부

**□ 조사목적**

- 국회, 감사원 등 관계기관 및 언론보도 등 지적
  - 문화융성 감당할 시스템 있으나(중앙일보 노재현 칼럼, '13.9.11)
  - 지자체들 국고보조금을 활용 조망(서울신문, '13.9.27)
  - 문화부, 민간보조금 운영 주역구구(국민일보, '13.10.4)
  - 감사원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 감사결과 발표'(13.9.26)
- 문예기금 예산 집행에 따른 사업 점검 필요('14년 43억 중)
  - 지역의 자율성 부여 명분으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99년- )에 대한 전반적인 현지점검 마일시
  - 광역지자체 및 지역재단중심 사업 추진 후, 예술위는 결과만 보고받는 시스템으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

**□ 실태조사 계획**

- 대상사업 : 문예진흥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2011년- )  
(공민합성주인재육성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조사전수 : 시도별 집행금액 이상 사업 중 표본 조사
- 조사내용 : 지자체 및 문화재단의 보조금사업 운영 전반
- 조사대상 : 16개 광역시도(문화재단)
  - 권역별 조사 일정(11.11 -12.13)

구분	기 간	대 상 지 역				비고(인원)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1차	11.11(화)~11.15(금)	서울	충주	대구	광주	4명 4명
2차	11.18(월)~11.22(금)	인천	강원	경남	제주	문화재단 4명 문화재단 4명
3차	12.02(월)~12.06(금)	경기	대전	울산	전북	문화재단 4명 문화재단 4명
4차	12.09(월)~12.13(금)	경북	충남	부산	전남	문화재단 4명 문화재단 4명

- 향후일정 : 조사관계자 회피(11.8)/ 현지조사(11.11-12.13)/ 실태조사결과 정리(1차, 11.29)/ 조치방안 마련(13.12월중)

### 지자체 대상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실태조사계획

13.11.25  
문체부

**□ 개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자체 대상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실태조사 추진
- 조사목적
  - 국회, 감사원 등 관계기관 지적 및 언론보도 지적
  - 문화융성 감당할 시스템 있으나(중앙일보 노재현 칼럼, '13.9.11)' 지자체들 국고보조금을 활용 조망(서울신문, '13.9.27)' 문화부, 민간보조금 운영 주역구구(국민일보, '13.10.4)' 감사원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 감사결과 발표('13.9.26)' 참고
- 문예기금 예산 집행에 따른 사업 점검 필요('14년 43억 중)
  - 지역의 자율성 부여 명분으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99년- )에 대한 전반적인 현지점검 마일시
  - 광역지자체 및 지역재단중심 사업 추진 후, 예술위는 결과만 보고받는 시스템으로, 행정부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부 차원에서 현장상황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

**□ 실태조사 계획**

- 대상사업 : 문예진흥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2011-2013)  
(공민합성주인재육성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조사전수 : 시도별 집행금액 이상 사업 중 표본 조사
- 조사내용 : 지자체 및 문화재단의 보조금사업 운영 전반
- 조사지역 및 기간 : 16개 시도(문화재단 포함)/'13.11.11-12.13

구분	기 간	대 상 지 역				비고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1차	11.11(월)~11.15(금)	서울	충주	대구	광주	4명 4명
2차	11.18(월)~11.22(금)	인천	강원	경남	제주	문화재단 4명 문화재단 4명
3차	12.02(월)~12.06(금)	경기	대전	울산	전북	문화재단 4명 문화재단 4명
4차	12.09(월)~12.13(금)	경북	충남	부산	전남	문화재단 4명 문화재단 4명

- 조사 인력 : 문화체육관광부(5), 예술위원회(7명)

**□ 향후추진일정**

- 지역현장 및 조사관계자 회피(11.8)/ 현지조사(11.11-12.13)/ 실태조사결과 정리(1차, 11.29)/ 조치방안 마련(13.12월중)

(나) 지자체 문예기금사업 실태조사 중간보고('13.11.25.)

문체부가 2013. 11. 25. 작성한 ‘지자체 문예기금사업 실태조사 중간보고’ 문서는 2013. 11. 11.~11. 15. 기간 동안 4개 시도 및 문화재단(서울, 충북, 대구, 광주)에 대하여 총 20명(지역별 각 5명/문화부 8명, 예술위 12명)이 지역별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중간보고 하고 있다. 가령 서울문화재단에서 2회 지원을 받은 윤한솔 연출가의 학력 등이력을 열거하면서 다문화, 노동자에 관심이 있다거나 하는 사항도 기술하면서 윤한솔 연출가가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받은 세부 내역도 보고하고 있다.8)

8) 문체부 작성, ‘지자체 문예기금사업 실태조사 중간보고’, 1쪽. 2013. 11. 25.

**지자체 문화기금사업 실태조사 중간보고**

(2014.2.17)

**□ 조사개요**

- 기간 : '13.11. 11(월) ~ '14.11(월)
- 지역 : 4개 시도 및 문화재단(서울, 충북, 대구, 광주)
- 조사자 : 총 20명(지역별 각 5명/ 문화부 8명, 예술위 12명)
- 4개 시도 및 문화재단 조사용(11.18) 11.22일전, 강원, 경남, 제주

**□ 지역별 조사결과**

**서울: 지자체 및 문화재단**

- 「김정현 이사장 및 권교조, 황여연대 등 5명 이사 포진」 관련
  - 서울문화재단 임원 현황 : 김정현 이사장 등 총 8명 - 병대 병과
  - 조재 및 정관상 임원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자 중 서울시장이 임명보통 50% 있어, 시장의 영향이나 편애에 따라 임원권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음.
  - 사업공모식 매년 피루 실시된데 대해, 3차에 걸친 심사 등으로 특정인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음

구분	비율	구체명단	구성사유
연속취족	00%	전년도 임시위원 중 활동부수자	전년도 사업결과를 반영
신규취족	80%	임시위원 중에서 신규 위촉	해의 공신 사임 개입

- 「윤환술(국보법폐기 연구연출가) 2회 선정(6,000만원 지원), 관련
  - '윤환술' 이력사항(이후회, 노동부에 관심)
  - 1972년생, "국단 "그린리그"(2010년 출범) 대표, 연극연출가
  - 한양대(사학제), 이 광복비대대 대학원 연출학 석사
  - "사람은 사람에게 죽는다" 등 매년 작품 연출

**충북: 지자체 및 문화재단**

- 「지역협력형사업 민예총 독식」 관련
  - 충북문화재단의 민예총 지원 계획 논란은 '11.12월 세단 출범 초기 단계에서 지역예술인들의 소통과 단계별 정보부재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임
  - '12년 지역협력형 사업 실패결과에 대해 충북예총에서 반발
  - 지역예술인 예술가를 배제하고 타지역 인사도 구성(영종 8명 타지역 안배하다 보나 같은 사람이 없고, 기획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민예총 소속 단체가 많이 선정되었다는 지적

**지역재단 관련**

재단	문제 제기 내용
강원문화재단	민예총 출신 강관 임명 -> 낙하산
서울문화재단	≡ 김정현 이사장 및 권교조, 황여연대 등 5명 이사 포진 ≡ 윤환술(국보법 폐기 연구 연출가) 2회 선정(6,000만원 지원)
광주문화재단	불법 평가가 접점성 추모음악제 홍익당 활동 중인 광주민예총 지원
부산문화재단	예술감독 지원센터 개설하여 최문환 단체 후원 확대
강원문화재단	≡ 광창비연남과 주최를 민예총에 맡김하여 관람객 17만명(국보 200만명의 8.5%) ≡ 강원국채미술연합회 신진작가 출품제(64건) 구입대 4억원(약 통당 625만원/차출 가격 적정성 및 리베이트 의혹)
충북문화재단	지역협력형 사업 민예총 독식
제주문화재단	2010. 8월~2012.10월 민생물 제작사업 105건(280백만원) 중 20건(150백만원)을 제외한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수주계약

(다)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서('14.2.17.)

예술위 예술지원부는 2014. 2. 17.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최종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7) 문체부, 좌파 견제 ‘문화예술정책점검 TF’ 지속 운영 방침(13.12.5.)

<p><b>문체부, 좌파 견제 ‘문화예술정책점검 TF’ 지속 운영 방침</b></p> <p>2013. 12. 5</p> <p>1. 문체부는 문화예술계로 소관할 작품·행사·사업 등을 사전 스크린하고 보수지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시킨 ‘문화예술정책점검 TF’(단장: 조현재 1차관)를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하되 사전적 문제해결 노력을 일층 강화할 계획</p> <p>2. 編輯 動向</p> <p>가. 문체부(당판·출판물)에서는</p> <p>1) 문화예술계, 필자들이 어닝컨트리가 과도한 작품들이 몰려-공인되는 등 전면 어닝지형 조성을 꾀하는 행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해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구성하고</p> <p>2) 창작의 자유, 이념적 편향 여부, 정치적 선동 여부, 대중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사후 조치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신중하게 실시</p> <p>나. 사전 조치 : 국립문화예술기관 직접 제작, 정부지원 받은 민간 제작, 정부지원 없는 민간 투자-제작 등으로 분류</p> <p>① 국영기관 제작 : 이념선동, 음탕노골, 저열, 국민효율성, 화살, 윤리</p> <p>② 민간제작(민영화) : 저열음탕성, 이념선동, 여론몰, 선동, 헐뜯</p> <p>③ 민간제작 : 정치적 자유는 인정되나 이념적 편향 및 대중선동지도가 과도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p> <p>다. 사후조치 : 문화예술행사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저열작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 또는 대응발전 장구</p>	<p>3) 문화예술기관 직원, 임명직, 특고, 권향인사, 계약, 근태직, 영희제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사전 스크린시스템 구축, 영화·민간·문화·예술·도서관 등 자체관리 소관 및 정보 공유 등 소가 성과 거양</p> <p>나. 이와 관련, 조현재 1차관은</p> <p>1) 현재 전국 문화기교 분야 내년도에는 좌파 문화예술인들의 확산을 방지할 것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기로, 시군 관여 등 관공의 예산되고 있음</p> <p>2) 내년도에도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지속 운영(연차 예산 기하여 문화예술 관련사업의 기획-집행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p> <p>2) 정부와 소통할 기회가 적어 정책의례도가 낮은 것은 원상 문화예술인들의 소관 확대, 중도, 전면 문화예술인, 격각, 모용, 극단의 결의결합, 예외, 예외에 보다 책임을 두고 추진할 방침</p> <p>• 특히 출판·문화·영화·연극 등 국영문화로 국영할 경우 국영문화 사업과 있어 민영화 접근 강화 고려 계획</p> <p>4) 연감선상에서</p> <p>- 확대기관장, 2013. 12. 20. 일국영, 일국영(2013. 12. 20. 일국영, 일국영, 일국영, 일국영) 등을 통해 국영정책을 공유하고</p> <p>-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원상 관리, 건립한 소관속에 좌파, 말론에 대해 대응조치 하리할 계획</p> <p>※ TF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p>
---	--

국정원이 2013. 12. 5. 작성한 ‘문체부, 좌파 견제 ‘문화예술정책점검 TF’ 지속 운영 방침’ 문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내 좌편향 작품·행사·사업 등을 사전 스크린하고 보수지형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3. 9. 9. ‘문화예술정책점검 TF’(단장: 조현재 1차관)를 출범시켰는데, 2014년에도 계속하여 운영하되 사전적 문제해결 노력을 일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하고 있다.9)

(8)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전 및 결과보고(13.12.20.)

2013. 12. 20.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전 및 결과 보고’ 문서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각 부처에 반국가적, 반체제적 경향을 보이는 단체나 기관의 행사나 사업에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여 시정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국정원, ‘문체부, 좌파 견제 ‘문화예술정책점검 TF’ 지속 운영 방침’, 1쪽. 2013. 12. 5.

### □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 국무위원, 각부 실국장 등 전 공직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함. 각 부처가 반국가적, 반체제적 경향을 보이는 단체나 기관의 행사/사업에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임
  - 각 수석은 관련부처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정토록 할 것

 <b>대통령 서면 보고서</b> <small>국정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실) 2014. 1.3</small>	
<b>□ 개요</b> 보고 제목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 보고 보고자 국정기획수석(기획비서관)	
<input type="checkbox"/> 금일(12.30일, 08:30)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부처 각 수석실장 안건이 보고 - 논의되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위원, 각부 실국장 등 전 공직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함. 각 부처가 반국가적, 반체제적 경향을 보이는 단체나 기관의 행사사업에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임</li> <li>- 각 수석은 관련부처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정토록 할 것</li> </ul>	
<b>□ 개요</b> 보고 제목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 보고 보고자 국정기획수석(기획비서관)	
<input type="checkbox"/> 금일(1.3일, 08:30)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부처 각 수석실장 안건이 보고 - 논의되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div style="background-color: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ackground-color: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bottom: 5px;"></div>	
<b>보고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체부, 안행부, 교육부, 고용부 등 산하에 많은 NGO를 지니고 있는 부처들은 그동안 재정지원 해온 산하 NGO들에 대해 단체 성격, 단체대표 성향, 단체 수행사업 등에 대해 조용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 국고 지원을 지속할지 여부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찾을 것</li> </ul>	

### (9)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 보고('14.1.3.)

2014. 1. 3.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김기춘 비서실장은 문체부에 그동안 재정 지원을 해 왔던 NGO들에 대해 단체 대표의 성향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고지원을 지속할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문체부, 안행부, 교육부, 고용부 등 산하에 많은 NGO를 지니고 있는 부처들은 그동안 재정지원 해온 산하 NGO들에 대해 단체 성격, 단체대표 성향, 단체 수행사업 등에 대해 조용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 국고 지원을 지속할지 여부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찾을 것

**(10) 문체부장관, 좌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 강구 지시(14.1.24.)**

국정원이 2014. 1. 24. 작성한 ‘문체부장관, 좌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 강구 지시’ 문서는 유진룡 장관이 문화예술분야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이념시비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불법단체, 좌편향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산집행 전(全) 과정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균형적 심사위원 구성을 통해 심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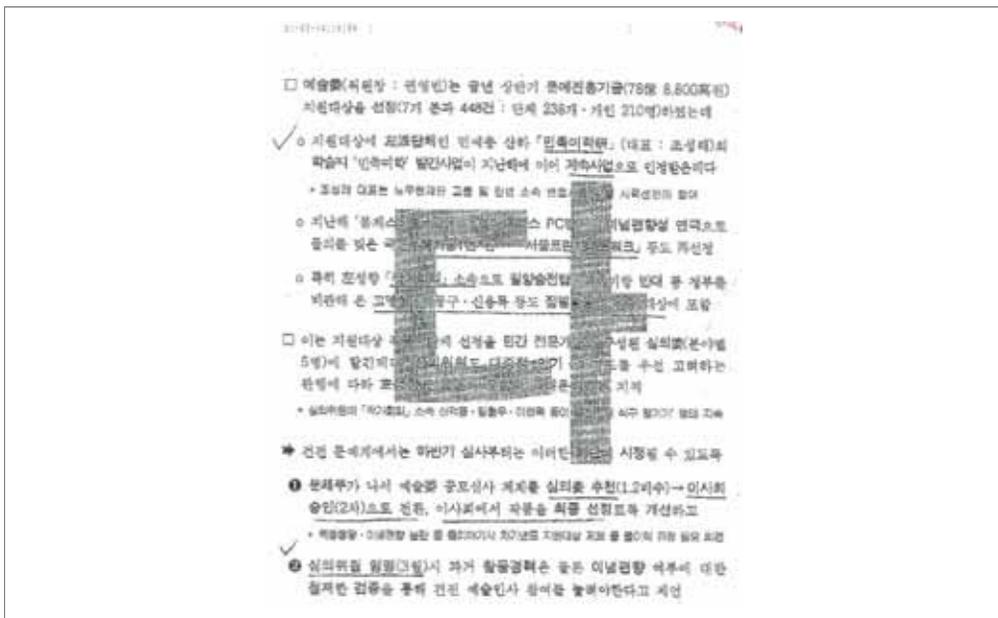
<p><b>문체부장관, 좌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 강구 지시</b></p> <p>2014. 1. 24</p> <p>1. 유진룡 장관은 문화예술분야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이념시비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불법단체, 좌편향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산집행 전 과정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균형적 심사위원 구성을 통해 심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p> <p>2. 鑒察 勸告</p> <p>가. 유진룡 장관은</p> <p>1) 예술-문화-도서관-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2011-2013년 총 2,630건 6,280백만원의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해 왔는 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443건 939억 / 2012년 847건 2,118억 / 2013년 1,240건 3,225억</li> </ul> <p>2) 일반회계(국고)에서는 예술-민예총에 대한 지원이 없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예술에 매년 평균 15건 내외로 지원하고 있으며(2011년 16건, 2012년 13건, 2013년 14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예총은 09년 보조금 청정사업(창작)에 4억 9,300만원, 이후 3,000만원만 받음 이후 지원 중단</li> </ul> <p>3) 지역별은 보조사업이 경우 문체부(예술)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자체에 교부하면, 지자체(지역문화재단)에서 작품분포를 통해 예술과 민예총 지원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예술 864만 298, 민예총 157만 898 / 2012년 예술 765만 538, 민예총 145만 898 / 2013년 예술 828만 528, 민예총 68만 480</li> </ul>	<p>4) 민예총에 대한 지원 건수 및 지원액이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계속 이념시비가 제기되고 있어 차제에 총 실·국 및 지자체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p> <p>5) 예산편성에서 청산단계에 이르기까지 후 단계별로 모니터링을 강화, 불법·좌편향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p> <p>6) 중앙단위 사업 및 지자체 보조사업 선정시 심사위원을 균형있게 구성(조직회의를 구성, 보수인사 참여 유도)하는 등 불법·좌편향 단체에 대한 심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각별 지시</p> <p>• 비공보사업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 시행</p> <p>나. 이와 관련, 실무전에서는</p> <p>1)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은 이적단체나 불법적인 시위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심사·관리를 강화하고</p> <p>2) 지자체 보조사업도 지자체·지역문화재단과 협의, 불법단체에 대한 지원을 차단토록 협조에 나설 예정이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소관) 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p> <p>참고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이행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지원 제한에 대한 심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립성취를 위해-국도하거나 현금 지원한 면해 및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중립성취에 현금 참여하여 '정치 및 지회' 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li> </ul> </li> <li>○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가능사유 교부조건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을 총 용도로 전용(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된 경우 포함), 등.</li> </ul> </li> </ul>
--	--

**(11) 팩스송부문서(다)(14.2.21.)**

2014. 2. 21.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팩스로 송부한 문서(다)’ 는 201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선정 결과 지원 대상에 좌파단체인 민예총 산하 「민족미학」의 학술지 ‘민족미학’ 발간사업, 2013년 봄페스티벌-국가보안법 등 이념편향적 연극으로 물의를 빚은 극단 「혜화동 1번지」·「서울프린지네트워크」·좌성향 「작가회의」소속으로 밀양송전탑·

10) 국정원, ‘문체부 장관, 좌편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 강구 지시’, 1쪽. 2014. 1. 24.

복합미항 반대 등 정부를 비판해 온 고명철·박몽구·신용목 등도 집필활동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지원대상 작품·단체 선정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분야별 5명)에 맡긴데다 심의위원도 대중적 인기·지명도를 우선 고려하는 관행에 따라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2014년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① 문체부가 나서서 예술위 공모심사 체계를 심의위원회 추천(1.2배수)→이사회 승인(2차)으로 전환, 이사회에서 작품을 최종 선정토록 개선하고, ② 심의위원 임명(3월)시 과거 활동경력은 물론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건전 예술인사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하였다.11)



**(12)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14.2.21.)**

문체부가 2014. 2. 21. 작성,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문서는 위 '팩스로 송부받은 문서(다)'가 지적하고 있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이 문예진흥기금사업에서 선정된 경위에 대하여 밝히고 향후 조치 계획을 밝히고 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문화예술위의 책임심의위원 위촉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을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 구성에서 문체부와 사전 조율하도록 조치하고, 심의위원 선정 기준을 강

11) 청와대, '팩스로 송부받은 문서(다)', 1쪽. 2014. 2. 21.

화하여 이념편향, 반정부행위 관여자를 배제하고, 책임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문화예술위 직원 1명씩을 포함시켜 관리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토록 관리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 1. 우수도서 심사·선정 문제

**□ 논란 사항**

주관지 비대한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2013년 선정 우수도서 가운데 이념편향 문제를 제기하여 심사위원의 자격 및 책임 문제 거론

「이념편향과 언론, 사회, 교육」

① 동시대적 현안문제를 파헤칠 수 있는 "정치·사회·문화"의 다양한 이슈(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예술인, 사회인, 교육인, 학생, 학부모, 교사)를 발굴하여 "비공공적 혹은 비윤리적·비합리적·비민주적·비공정적" 등 다양한 형태의 잘못 행위를 담은 "한국적 정치·사회·문화(정치·사회·문화) 및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책" "교양" "기독교" "인문학" "사회의 정황" 등

**□ 논란이 된 도서 선정 경위**

- 951개 출판사에서 총 3,437종 선정(13년 8월)
- 온라인 및 4회회 오프라인 심사 진행(13~1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학회·단체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77명으로 심사위원단 구성
- 최종(14년) 심사시, 이념편향 여부 검토 및 제외 작업을 거쳐, 420종 최종 선정 발표(11.14)
- 총 18종의 도서에 대한 탈락 처리: 동시대적 정세를 넘어(계정일), 10대와 통하는 한국전쟁이야기(미인화) 등
- 이념 편향 여부 검증이 있었음에도, 검토 대상 도서가 많아, 일부 문제 도서가 걸러지지 않은 측면이 존재

**□ 향후 조치 계획**

- 특별감사 사항 : 문제도서 선정 경위, 내용 검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진상 조사 → 관계자 징계문제도 검토
- 개별 탈락 저서별 타당 : 심사위원 구성시 이념 편향의 인사 배제, 도서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 강화(이념편향 도서 제외 명시 등)
- ※ 논란도서 제외문제 : 새로운 책을 필수할 경우 사회적 과장이 커지며 통 책들이 새간의 주목을 더 받게 될 우려

### 2.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문제

**□ 논란 사항**

지난해 12월 실시하고 금년에 발표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사업(448건: 단체 238개, 개인 210명)중 이념편향을 모인 단체나 개인이 포함되었음 지적

《문화진흥기금, 사업》

① 인문학 산학 협력사업(다산 프로젝트)의 학술지 인문학계 발간사업(2013년부터 계속, 2013년 8백만원, 2014년 8백만원, 2015년 8백만원, 2016년 4백만원)

② 유년용 "평화소통을-국립", "문화인수, PC전" 연극으로 물의를 빚은 극단 "문화통" 1백차, - "서울프린트내셔널", "출판문화진흥원" (2014년 3천만원)(2011~2013년 3천만원, 2014년 3천만원)

③ 서울문화재단(2014년 2천만원) 2013년부터 2014년 3천만원

④ 인문학산학 협력사업 소책자 "고령화·저출산·고령화" 등 지원대상 대상에 포함 (1천명 1천만원)

**□ 논란이 된 사업 선정경위**

- 2013년 10월 30일 공고, 문예진흥기금은 12월 18일 심사, 문화창작기금은 12월 13~14일 심사, 다원예술사업(서울프린트내셔널)은 12월 29일 심사
- 지원사업 선정은 분야별로 책임심의회를 3명이 심사 → 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 향후 조치 계획**

- 문화예술위의 책임심의회를 위촉해서 개인, 사업관리
- 위원구성에 있어 문제부파 사전 조출토록 조치(※ 2014년 책임심의회 위원 구성을 일단 보류토록 기 조치, 별도 협의도 진행)
- 심의회원 선정기준 강화: 이념편향, 반정부행위 관여자 배제 등
- 책임심의회에 분야별로 문화예술위 직원 1명씩 포함시켜, 관리
-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토록 관리
- ※ 위원회 전체회의에 지원사업 선정권을 넘기는 문제: 탈락거 중심의 문화예술위 위원 구성상 의무 또는 정치적 요구에 더 취약할 우려

### (13)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14.3.12.)

2014. 3. 12.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김기춘 비서실장은 다음과 같이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② 각 수석실에서 대통령님께 보고자료를 올리면서 향후 정책적 대응이나 조치계획을 함께 보고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일단 조치계획을 보고드렸다면 반드시 제대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며 결코 유야무야해서는 안됨.

- 각 수석실은(소관부처도 포함) 대통령님께 일단 조치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서라도 이행상황을 빠짐없이 자체 점검하도록 할 것

- 만약 당초 보고 드린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상황 변화가 있어 부득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고 방침을 받아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인건 및 결과** 14.3.12. 국정기획수석  
(기획비서관)

심 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합보고	<input type="checkbox"/> 절충요망	<input type="checkbox"/> 지시사항조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 급 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긴급	<input type="checkbox"/> 합참협의공유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유 (초수석)	

금일(3.12일, 08:30)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각 수석실별 안건이 보고·논의되었습니다.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①** 

**②** 각 수석실에서 대통령님께 보고자료를 올리면서 양우 성격적 대응이나 조치계획을  
 함께 보고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일단 조치계획을 보고드렸다면 반드시  
 세내도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며 결코 유야무야해서는 안됨.

- 각 수석실은(소관부처도 포함) 대통령님께 일단 조치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결건 리스트를 만들어서라도 이행상황을 타겟없이 자체 점검하도록  
 할 것
- 만약 당초 보고 느린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상황 변화가 있어 부득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고 방침을 받아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

#### (14) 문체부, BH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14.3.21.)

국정원이 2014. 3. 21. 작성한, ‘문체부, BH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  
 예정’ 문서는 문체부가 유진룡 장관 지시에 따라 문화예술계의 이념성을 지양하고 불법  
 시위 관련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이념 편향적 콘텐츠 지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안을 마련하여 청와대(교문수석실)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1)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경우 적극적 배제조치를 취하고 문화예술계 정치  
 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문화융성의 기초를 확산, 2) 기재부 민간보조금 지원 지침에 의한  
 불법폭력 시위 관련 단체·개인 및 현 정부 내 반정부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단체·개인 배

제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문화예술위 등 주요 기관 상임위원, 지원심의위원 등 선정·교체시 정치적 편향성 인사를 제외할 것 등을 대응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sup>12)</sup>

<p><u>문체부, BH에 건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 예정</u></p> <p>2014. 3. 21</p> <p>1. 문체부는 유진용 장관 지시에 따라 문화예술계의 이념성을 지양하고 불법시위 관련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이념 편향적 콘텐츠 지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건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안을 마련. 청와대(교문수석실)에 보고할 예정</p> <p>2. 關聯 內容</p> <p>가. 문체부(상관:유진용)에서는</p> <p>1) 김기춘 비서실장이 2013.12.10 김 총 2차관에게 '문화예술, 미디어 부분에 조사가 많다. 심지어 공직 내부에도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 있으니 인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요지로 언급을 한데 이어</p> <p>2) 왔우연 차노리달 대표도 2월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커치노 발표 인기 방송 실명자 국회를 방문한 조원재 1차관에게 '문화예술계에 조사가 여전히 많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p> <p>• 1차관이 국회인 사제를 제시하면 조처하겠다고 하였으나 차관과 대표는 '그런 여론이 없다'는 식으로 언급</p> <p>3) 문체부가 이념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실할 인물 공익 진출 차단, 도실할 사업 지원 중단 등 인적청산과 시스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p> <p>4) 외부에서는 아직도 막연하게 문체부가 이념문제에 대처할 것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건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제하 대응전략을 마련, 청와대에 보고하는 한편</p>	<p>5) 앞으로 정관계 요구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문체부가 여하히 대치하고 있는지를 적극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겠다는 목표하에 협조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확산에 노력할 방침</p> <p>나. 이와 관련, 조원재 1차관은</p> <p>1) 정부가 이념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안전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대북연·정부 부담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p> <p>2) 위의 대응전략 마련시에도 주무 과장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직계 라인만 보고서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同 대응 방안이 따라 지립하고 진취적으로 이념문제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언급</p> <p>※ 붙임 : 건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p> <p>가. 기본 방향</p> <p>1) 문화예술계 이념성 지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경우 적극적인 배제조치를 취하고 문화예술계 정지화를 최대한 억제, 문화융성의 기조 확산</li> </ul> <p>2) 불법시위 관련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제부 민간보조금 지원 지침에 의한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개인 및 現 정부내 반정부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단체·개인 배제</li> <li>- 또한, 주도 인사가 새정부 구성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제한</li> </ul>
<p>3) 이념 편향적 콘텐츠 지원 제한 : 이념 편향적 내용, 반국가·반정부 행위와 연계된 콘텐츠 지원 차단</p> <p>• 영상 및 저음용예적 집행시 영상 보조금 지원 제한(이재복, 2014) : 집행시 해당 주체 또는 주요한 단체</p> <p>4) 예외 인정 : 문체부내 별도 심의위원회(주제:기초실상)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該 정부에 대한 직접 비판이 아닌 과거의 단순 일회성 의사 표명, 남북문화교류 등 보수-진보 성향 공존하여 사업</li> <li>- 국회가 반영한 사업 및 예산, 광주 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사업</li> </ul> <p>나. 분야별 대응 전략</p> <p>&lt; 문화예술 일반 &gt;</p> <p>1) 제작 및 지원 주제별 대응</p> <p>① 국영기관 제작 : 이념 갈등 유발소재 지양, 국민소통과 화합 효과를 증시하는 작품이 제작되도록 지도</p> <p>② 민간제작(정부지원) : 지원 결정시, 정치적에는 이념편향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평가하여 논란소지 작품은 지원 배제</p> <p>③ 민간제작 : 이념적 편향 및 대응 선행의도가 과도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사후 국가 관련 행사지원 및 참여 제한</p> <p>2) 인적 구성 개편 및 절차 개선을 통한 질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장 임직된 및 문화예술위, 행정위 등 주요 기관 상임위원, 지원심의위원 등 선정·교체시 정치적 편향성 인사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지원 선정시 지원장여 등을 통해 정치적 편향성이 배제된 작품 선정 지원 유도</li> </ul> <p>&lt; 도서 및 문학 &gt;</p> <p>1) 정치활동 목적, 이념 강조, 역사 왜곡, 개금 갈등, 반국가·반사회·반인륜적 내용, 국문분할·이념갈등 조장 도서는 국고지원 배제, 특히 이념적 소재의 아동·청소년 대상 도서는 무조건 지원 배제</p> <p>&lt; 영화 &gt;</p> <p>1) 투자지원 영화 제작 : 투자조합 관계자 정기 간담회를 통해 문제성 작품 투자 자체 유도</p> <p>2) 정부지원 국제영화제 : 국가나 정부가 관여되어 사실과 다른 영화 상영 자격(약동 선정 이전 후보진도 단계에서 스크린)</p> <p>3) 독립영화진흥(3개) 지원 : 현지적 객관성을 잃거나 반사회적 영화상영 자격(영진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권고)</p> <p>4) 독립영화 제작 지원 : 심사위원 선정시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인사 배경(후보자 5배수 선정, 위원장이 우선순위를 결정)</p> <p>&lt; 해외 문화원 &gt;</p> <p>1) 문체성 단체 참여 및 이념갈등 유발 소재 행사 주화·후원 지양, 문화원 주화 및 후원영화 선정시 문제성 영화 배제 조치</p> <p>2) 영화 선정시 개별문화원에서 영진위에 의뢰 요청하지 않고 해외 문화홍보원에서 인관 점검토록 모니터링 체제 정비, 윤.</p>

12) 국정원 작성, '문체부, BH에 건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 예정', 1-3쪽, 2014. 3. 21.

(15)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14.3.27.)

2014. 3. 27.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비서실장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① 각 부처가 산하 단체·기관에 정부 보조금 지원시 해당 단체·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과거 불법집회나 시위 등의 가담 여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 여부, 이러한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 유무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한 지침(기재부)이 마련되어 있음.

- 각 부처가 이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조금 지원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함.
- 검경은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처벌의 경중에 관계없이 기록으로 남겨 각 부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무수석은 조속히 관련 수석실·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 (예시) 전 부처가 산하 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기관 명단 일체를 검경에 제공, 모든 단체·기관에 대한 사법조치 이력이 등재되어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 14.3.27, 국정기획수석 (기획비서관)

성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황보고	<input type="checkbox"/> 결심요망	<input type="checkbox"/> 지시사항조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급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긴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할당할예정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공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유 (호수네)

금일(3.27일, 08:30)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는 자료없이 구두로 현안은 보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① 각 부처가 산하 단체·기관에 정부 보조금 지원시 해당 단체·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과거 불법집회나 시위 등의 가담 여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 여부, 이러한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 유무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한 지침(기재부)이 마련되어 있음.

- 각 부처가 이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조금 지원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함.
- 검경은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처벌의 경중에 관계없이 기록으로 남겨 각 부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무수석은 조속히 관련 수석실·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 (예시) 전 부처가 산하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기관 명단 일체를 검경에 제공, 모든 단체·기관에 대한 사법조치 이력이 등재되어 있는 시스템 구축 등

## (16)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14.3.28.)

2014. 3. 28.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김기춘 비서실장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고위직을 포함한 전 공직자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향가치에 대해 철저하게 인식하고 무장되어 있어야 하며, 부처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국정철학과 지향 가치를 양보·포기하거나 훼손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됨. 또한 정치권 등과 주고받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음.
- 한 예로 민간단체·기관에 국가 보조금 지원절차를 담은 '2014년도 예산·기금집행 지침'의 경우 국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대상에 종전에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로 서술되어 있었으나
    - 금년 지침에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한 단체'로 한정하고 '적극 참여한 단체' 부분은 삭제되어 있는 바, 이는 지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현재 경위 파악중)
  - 고위 공직자들이 국가발전, 국가개혁, 국민행복을 위한 강인한 열정, 의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지향가치를 철저하게 체화하고 있지 않으면 고위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임. 모든 공직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함.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14.3.28 국정기획수석 (기획비서관)
성격	■ 상행보고	□ 결실요망	□ 지시사항조치	□ 기타	
시급성	■ 보통	□ 긴급	■ 해당 없음	■ 공유 (총수석)	

- 금일(3.28일, 08:30)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첨부의 각 수석실별 안건이 보고·논의되었습니다.
-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 ① 고위직을 포함한 전 공직자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향가치에 대해 철저하게 인식하고 무장되어 있어야 하며, 부처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국정철학과 지향 가치를 양보·포기하거나 훼손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됨. 또한 정치권 등과 주고받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음.
- 한 예로 민간단체·기관에 국가 보조금 지원절차를 담은 '2014년도 예산·기금집행 지침'의 경우 국가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대상에 종전에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로 서술되어 있었으나
    - 금년 지침에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한 단체'로 한정하고 '적극 참여한 단체' 부분은 삭제되어 있는 바, 이는 지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현재 경위 파악중)
  - 고위 공직자들이 국가발전, 국가개혁, 국민행복을 위한 강인한 열정, 의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지향가치를 철저하게 체화하고 있지 않으면 고위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임. 모든 공직자들은 이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함

### (17)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14.4.25.)

2014. 4. 25.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비서실장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SNS나 인터넷에 유언비어, 국론분열 발언, VIP 비방 등이 제기될 때는 일단 해당 사이트에서 즉각 내리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이를 응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정정보도 청구, 끝까지 추적 처벌 등) 판단하여 처리할 것
- 홍보수석실(對언론), 미래수석실(방송통신), 민정수석실(법무팀) 등이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이들로 팀을 짜서 즉각 즉각 대응하도록 할 것

- SNS나 인터넷에 유언비어, 국론분열 발언, VIP 비방 등이 제기될 때는 일단 해당 사이트에서 즉각 내리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이를 응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 지(정정보도 청구, 끝까지 추적 처벌 등) 판단하여 처리할 것
- 홍보수석실(對언론), 미래수석실(방송통신), 민정수석실(법무팀) 등이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이들로 팀을 짜서 즉각 즉각 대응하도록 할 것

### (18) 민간단체 보조금 TF 및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2014. 4. 4.경부터 2015. 5. 23.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회의 끝에 2014. 5. 하순경 그 결과를 종합하여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sup>13)</sup>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게된 추진배경은 불법시위, 정권반대운동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실태파악 및 근본적 조치가 미흡하여,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사업주체가 다양하고, 선정권한도 개별 부서에 위임되어 있어 총괄적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sup>14)</sup>

TF구성은 정무수석 주관 하에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주요 부서가 참여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주요 부처 공모사업현황 등 중앙부처가 직접 선정·교부하는 보조금 전체를 파악하여(기금 등

13) 김기춘 외 6인 2심 판결, 53쪽.

14)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1쪽.

포함) 2014. 4. 4~5. 23.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문제예산 총 130건, 139억 원을 확인하고 조치하였고, 3천 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시위참여 등)와 8천명의 좌편향인사(문재인·舊민노당지지 등) DB를 구축하고, 지속 보완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sup>15)</sup>

###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 1. 중앙정부 보조금 차단

민간단체보조금 TF 운영

- [추진계획] 불법시위, 정권반대운동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절대과한 및 근본적 조치 미흡
  - 정부-의차제-공공기관 등 사업주체가 다양하고, 선정권한도 개별 부처에 위임되어 있어 총괄적 실효과와 처리를 달성
- [TF구성] 정부수석 주관 하 '주요부처' 형어, 소민간정당보조금, 소수소부처 공보사업원장 등을 확보해 전수조사 실시(14~15)
  - 예산소통, 행정자치, 기획예산, 경제산업,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 ※ 중앙부처가 직접 선정보부하는 보조금 편제를 파악(가량) 후 보편, 공공기관 및 지자체 저감사라는 목표함

조치결과

- [문제예산차단] 총 130건, 139억원의 문제예산 확인조치 (정부40)
- [조치 적용한 분야] 국가인원회는 주처에서 조치결과 입찰 포명 언론사지원 단체축소(보조기회), 민주노동지원 단체축소(보조기회)

구분	개	노출	승인	교차	총합	총액	목적	분류	인원
문제예산차단	130	28	9	1	3	88	4	1	3
당해예산	13,314	3,647	126	10	152	3,883	1,762	28	23

※ 2013~2014 회계연도에 연4회에 상정된 기준 차의 1건으로 집계

- [DB운영으로 저감감시] 3천개의 문제단체·과외단체, 불법시위참여 단체 8천명의 좌편향인사(문재인·舊민노당지지 등) DB 구축, 지속 보완
- [시스템구축] 공익법인에 대한 국제불 정산문서양식 개정(14년 수입·지출신고 의무화)·국제정차로로 보조금문서 가산(14년)이후
  - 보조사업 제외한 1천건에 불과했던 총 1천개 단체 해당 단위에 대한 지원중지

#### 2. 좌편향인사 확인·조치

정부 공보사업 심사위원 교체

- 국제 공보사업용 심사자는 '주요부처'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파악, 총 26명의 좌편향인사 확인·조치 (정부40)
  - [검출대상] 국무총리실, 안전부, 교육부, 문화부, 노동부, 복지부

구분	개	교출노출	승리제출	교출목적
심사위원	26	6	12	9

정부위원회 위원 교체

- 각 부처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총 70명의 좌편향인사가 66개 위원회에서 활동(8644)을 확인
  - 대통령(15개), 국무총리(4개) 소속위원회를 제외한 중앙부처 위원회 전체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위원회 특성 상,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단계별로 해촉할 예정 (정부40)
  - 저차관실별로 해당부처 핵심인사(거주, 기획조정실장 등)를 통해 통보

구분	개	기회	기회	교출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위원회	463	3	3	3	1	1	7	5	8
위원	1,000	7	9	12	2	11	1	1	2

- 좌편향인사가 다수 포함된 정부위원회는 회의체회를 저당하고, 기능이 중독되거나 계획불수가 제2차 위원회는 폐지 검토

##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 (1) 참고인 이OO의 진술<sup>16)</sup>

참고인 예술위 사무처장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예술위에서 2013년 하반기부터 2014. 2월경까지 있었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 조사의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서교동 (문체부 사무실)에서 오OO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김OO 예술정책과장, 김OO 예술국장장이 회의를 하자고 하여서 1차로 자신이 혼자 갔던 것 같다.

(나) 김OO 예술정책과장이 지역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

15)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1쪽.

16) 이OO 1회 진술조서, 3-4쪽. 2018. 2. 7.

들이 있으니 예술위에서 감사를 해 달라고 하였지만 권한이 없어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다) 며칠 후 2차 회의에서 김OO 예술정책과장 등 문체부에서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연말이어서 바쁘고 전국에 가려면 시간도 없다고 예술위 입장에서 실행하기 어렵고, 예술위에서 지역문화재단을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 (라) 그래서 문체부에서 공문도 보내주고 문체부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정리됐고, 예술위에서 개별 사안이 아니라, 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했다.
- (마) 예술국장이나 예술정책과장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오랜 실랑이 끝에 지역실태 조사를 하는 흉내라도 내자는 식으로 정리됐고, 권역별로 조사 대상을 나누고 예술위-문체부가 팀을 이루어서 나눠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한 팀이 각 권역을 맡아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
- (바) 주로 무엇을 조사해야 했는지에 대하여는, 광주에 정율성 추모 음악제가 지원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위에서 문제 삼고 있다고 하였고, 지역문화재단의 기금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경우 위에서 문제를 삼을 만한 기금 집행 실태가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 (사) 소위 문제가 될만한 기금 집행 실태를 어떻게 모아서 보고를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위원회 조사에서 '13.11.25.자 실태조사 중간보고를 보고 나니)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될 만한 사업들을 따로 정리해둔 것이 맞는 것 같다.

## (2) 참고인 오OO의 진술<sup>17)</sup>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시·도 문화재단에서 좌성향 인물·단체들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이OO 예술위 사무처장이 “서교동에서 오OO 사무관, 김OO 과장, 김OO 국장이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1차로 제가 혼자 갔던 것 같습니다. 김OO 과장이 지역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 예술위에서 감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없어서 감사를

17) 오OO 1회 진술조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한 번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2차 회의에서 김OO 과장님 등 문체부에서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말이어서 바쁘고 전국에 가려면 시간도 없다고 예술위 입장에서 실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술위에서 지역문화재단을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공문도 보내주고 문체부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예술위에서 개별 사안이 아니라, 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국장이나 과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실랑이 끝에 지역실태 조사를 하는 흉내라도 내자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권역별로 조사 대상을 나누고 예술위-문체부가 팀을 이루어 나눠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한 팀이 각 권역을 맡아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3) 참고인 조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조OO<sup>18)</sup>는 위원회 조사에서 2013. 11. 14. 예술정책과장으로 발령 받았을 때 이미 지역문화재단 보조금 조사를 하는 TF팀이 있었고,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에게 청와대에서 요구를 하였는데 자료를 안 만들 수 없으니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제도 개선 등을 정리하여 2014. 2월 경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9)</sup>

조OO 예술정책과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개선 대책관련의 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20)</sup>

2014년 2월 말경(2014년 2월 21일 전후로 추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개선대책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시 장관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이 동 보고 사항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동 건은 2014년 2월 말경(인터넷매체에서 ‘반미, 반대한민국 내용 서적들,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돼 대량 유통’이라는 보도(2014.2.18.)가 나간 이후로 기억됨), 본인이 서울역 근처 사무실로 가는 중에 당시 유진룡 장관께서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예술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사건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자료를 만들라고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비서관실에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일(2014

18) 2013. 11. 14.~2014. 5. 8. 예술정책과장.

19) 조OO 면담녹취록, 1쪽. 2018. 1. 12.

20) 조OO 진술서, 2-3쪽. 2017. 2. 4. 재판증거기록.

년 2월 21일) 아침에 대통령실 문화비서관실에 연락하여(\*A 행정관을 찾았으나 연락되지 않아 대신 신 OO 행정관과 통화한 것으로 기억됨)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국정원 보고서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해화동 1번지'나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및 개인 작가 등 6건을 예로 들고, 이념편향적인 단체나 개인에 지원하고 있다면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성향 자체를 문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 보고서의 내용은 서계동 장관실 사무실 팩스로 직접 받았습니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예술위원회의 책임심의위원을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 예술위원회 실무자가 참석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하게 정치 편향된 사업들이 아니라 중립적인 사업들이 지원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 개선대책 보고서는 본인이 서울 서계동 사무소에서 세종시에 있는 당시 문화예술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OO 사무관과 통화 및 메일로 주고 받으면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자료는 OO 사무관에게 내부망으로 송부하고 문화비서관실 A 행정관에게도 주라고 하였습니다. 대책보고서 작성 이후 출판인쇄산업과의 우수 도서 지원사업 개선 건과 묶어서 '이념 편향 논란의 사업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방안(각각 1장, 합계 2장)'을 당일 오후에 서울 서계동 사무실에서 장관에게 보고하였고, 장관은 이를 가지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나서 본인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비서실장과 말씀 나눈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OO 사무관에게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되도록 하자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임기만료 되는 책임심의 위원 선정에 중립적인 인사가 되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동 개선대책 보고서는(당시 OO 사무관을 통해서 아니면 저가 직접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OO 사무관이 보내도록 한 것으로 생각됨) A 행정관에게 메일로 전달되도록 하고, 이에 대해 A 행정관이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개선대책 보고서 내용은 장관이 비서실장에게 이미 보고한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종료처리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서울프린지페스티벌과 같은 새로운 실험예술을 시행하는 단체마저 문제 삼으면 어떻게 문화융성을 이야기 하나면서 A 행정관과 함께 답답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4) 참고인 유진룡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장관 유진룡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21)</sup>

- (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취임[2013. 8. 5.]한 이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지시들이 전달되기 시작했지만 자신은 문체부 간부들에게 무시하라고 하였고,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문체부 실·국장들이(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상의를 하면 무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다만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을 뿐 예술위 등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를 하지는 말라고 하였다.
- (나) 2014년 1월 말경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고, 반대세력을 배척하는 것은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모철민 교문수석에게도 김기춘 비서실장이(배제) 지시를 하더

21) 유진룡 면담 녹취록, 1-18쪽. 2017. 12. 6.

- 라도 전달하여서 문체부 실·국장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다) 2014년 2월 경 인터넷 매체에서 문체부 선정(우수)도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기사가 나온 후 국정원 보고서가 나왔고, 이를 본 김기춘 실장이 노발대발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구체적으로 문체부 국장, 과장들, 출판진흥원 간부들 등을 파면 또는 징계하라는 식으로 노발대발 하였다고 하여서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 (라) 2014. 2. 20. 경<sup>22)</sup> 자신이 한두 장 짜리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찾아가서 “우리(문체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우리(문체부)한테 맡겨줘라. 더 이상 참견하지 마라.”고 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난 이후 문체부 관련 국·과장을 모아놓고 “야, 이제 끝냈다. 원래대로 해라.”라고 하였는데, 그 취지는 청와대에서 걱정을 하니까 중복좌파는 걸러내되 나머지는 원래대로 가야한다는 취지였다.
- (마) 세월호 사고 이후 2014년 5월 경 블랙리스트 최초 버전이 문체부에 전달 됐는데, 이는 조현재 문체부 1차관이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받은 ‘정무리스트’였고,
- (바) 이 정무리스트는 자신과 조현재 1차관만 보았지만, 문체부 실장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이리이러한 지시가 와서 구체적으로 이 명단까지 왔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였더니 실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말도 안 된다.”고 하였고, 청와대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하되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하는 시늉이라도 하기 위해서 ‘건전콘텐츠활성화 TF’를 만들고 운영계획도 하나 만들었으나 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 (사) ‘건전콘텐츠활성화 TF’는 국장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1급 공무원들로만 구성하여 당시 기획관리실장인 최OO 실장이 간사를 맡게 되었는데, 이 TF는 모양만 만들었을 뿐 자신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활동을 한 적은 없다.
- (아) 최OO 실장이 자료를 만들어서 한 부를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은밀히 전달하였는데, 운영계획은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서 문체부 내부에서 사용한 운영계획에는 배제에서 예외조항을 많이 넣어두었는데, 청와대에 전달한 운영계획에는 그러한 예외조항은 전달하지 않았고, 현재 그 서류들은 찾을 수가 없다.

22) 2014. 2. 21.로 보인다.

## (5) 조현재의 진술

문체부 1차관 조현재<sup>23)</sup>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sup>24)</sup>

2. 속칭 문화예술계인사 블랙리스트 관련하여 본인의 기억으로는 차관 재직 2년차 막바지 무렵인 2014년 5월 말경에서 6월 초순 경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인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면담요청을 받고 청와대를 방문하였을 때 김 비서관으로부터 A4 두 장 정도로 정리된 문화예술계 인사 명단을 건네 받았습니다.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하철경 회장 등 백여 명 정도의 이름과 직책만 써여 있는 영성한 명단이었습니다. 김 비서관은 제게 동 명단을 극비리에 잘 관리하고 당인들에게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본인이 김 비서관에게 문체비서관실에서 만든 명단 이냐고 물어봤더니 김 비서관은 우리 방에서 만든 건 아니고 정무(정무수석실을 뜻함)쪽에서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지원은 문체부 직접사업은 별로 없고 대부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심사위원들이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다면 완곡히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뒷선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비서관의 입장을 전달받고 장관께 보고하겠다고 하고 돌아온 바 있었습니다.
3. 청와대에서 돌아온 다음 날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문화예술계 지원제한 대상 인사 명단을 보고하였는바 장관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니 무시하자는 의견을 주었으며, 본인은 관련 실국장들과 상의해서 적의 처리하겠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 6월 초에서 중순경 본인은 관련 실국장(최OO 기조실장, 김OO 총무실장, 신OO 문화콘텐츠실장, 나OO 문화정책관, 김OO 예술정책관, F 국민소통실장 등)을 소집하여 동 리스트의 처리방안을 논의한 바 특정 인사에 대한 지원 제한 자체가 곤란하고 정치적 문제 소지가 크므로 청와대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조실장 주재로 이 문제에 대한 회의체를 운영하여 관심이 있는 정도로만 형식적으로 청와대 쪽으로 보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담당업무 관련국장인 나OO 문화정책관과 김OO 예술정책관에게 동 문건의 사본을 전달하여 보관만 하고 있으라고 한 바 있었고, 몇 주 후 문화체육비서관실의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동 명단을 파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6월 말 경 파기 한 바가 있습니다.

## (6) 박준우 진술조서<sup>25)</sup>

박준우 정무수석은 '민간단체보조금 TF'와 관련하여, 2013. 12.경부터 2014.초순경까지만 하더라도 비서실장이 각 수석들에게 산하 부처별로 좌파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현황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한 상황이었는데, 각 수석실별로 좌파 지원에 대한 실태파악과 방안 마련의 검토 진도가 더디자 2014. 4. 초순경 김기춘 비서실장

23) 2013. 3. 13. ~ 2014. 7. 15. 문체부 1차관.

24) 조현재 진술서, 2016. 12. 18. 재판증거자료.

25) 박준우 특검 2회 진술조서. 재판증거기록(수사기록 11087~11089.)

이 정무수석인 자신에게 “수석실별로 나뉘져 있는 업무 관련 비서관들을 모아서 TF를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봐라.”라고 지시하였고, 그 직후에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정무수석 사무실에서 각 수석실별로 담당 비서관들이 모여서 2014. 4. 4. 첫 TF회의를 진행하였고, 2014. 5월 말경 TF를 마무리하면서 작성된 최종 버전의 보고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버전의 보고서를 대통령 부속실로 이메일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7) 강OO 진술조서

청와대 행정관 강OO은 특검 2017. 1. 13. 진술조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26)</sup>

- (가) 2014. 1. 7.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신동철 비서관이 “비영리단체 지원 전수조사”를 지시하였다. 그 무렵에는 지원배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 (나) 2014. 1. 15. 국민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신동철 비서관이 “NGO 단체 관리 철저히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고, 이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사항을 신동철 비서관이 전달한 것으로 기억된다. 이때까지도 지원배제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
- (다) 정부비판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는 2014. 3월 말경 있었다. 2014. 3. 28. 좌편향 NGO에 대한 지원 배제 논의가 있었다. 리스트 관리하는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당시 어느 단체가 정부비판 단체인지 기준을 세울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난다.

### (8) A의 진술

청와대 교문수석실 A 선임행정관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27)</sup>

- (가) 2013. 3. 문체비서관실 내 행정관 배치가 마무리된 후 약 1년 동안은 나(문화정책, 예술)와 강OO(체육, 기초실·대통령지시사항·국정과제 등 총괄) 신OO(콘텐츠, 미디어, 문화재) 3명의 행정관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 (나) 2014. 4. 김OO 행정관이 추가 배치되어 나와 문화예술분야를 분담했다. 특히 초기부터 7월 무렵까지는 좌파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관련 업무 등 김

26) 강OO 진술조서, 8-12쪽. 2017. 1. 13. 재판증거기록. 강OO. 2013. 2. 25.~2015. 8. 31.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27) A 진술서, 2-8쪽. 2017. 1. 재판증거기록.

소영 문체비서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 (다) 2013년 여름 김기춘 비서실장 취임 이후 국정원 정보보고 자료에 문화예술계의 일반적인 현장 동향이나 여론 외에 특정 예술가나 예술단체 혹은 예술 프로그램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좌파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한 내용을 문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 (라) 지역문화재단들이 좌파 예술인들의 거점화하고 있다는 정보보고 자료의 지적에 대하여 모철민 교문수석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는데,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들었다. 김소영 문체비서관이 조현재 차관에게 협조 요청하여 결과적으로 지역문화재단 전반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 (마) 2013. 10~11월 경에 만들어진 또 다른 국정원 정보보고 자료는 박정희-박근혜 두 대통령을 풍자한 국립극단의 연극 <개구리>를 비롯하여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을 풍자한 연극 <아이리스 PC방> 등 일련의 정권 비판적인 작품에 문예진흥기금이 지원된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 모철민 수석의 대책 마련 지시가 있었는데,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바) 2014. 1.~2월 경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모철민 교문수석이 예술계에 대한 지원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 모철민 교문수석은 유진룡 장관에게, 김소영 문체비서관이 조현재 차관에게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좌파 예술계 지원에 따른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몇 차례 협조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사) 2014. 2. 27. 모철민 교문수석이 문체부 나OO 문화정책관, 김OO 예술정책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 등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주요 국장들을 소집하여 직접 회의를 하기도 했다. 당시 문화정책 관련 일반적인 당부 외에 좌파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원 문제에 대해 담당 국장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도 있었다. 나는 조OO 예술정책과장을 통해 이러한 비서실의 기조와 분위기를 문체부에 몇 차례 전달하여 공유한 바 있다.
- (아) 2014. 2~3. 경 국민소통비서관실 박OO 행정관으로부터 자료 협조 요청을 받았는데, 요청내용은 문체부와 예술위 등 여러 지원기관들의 지원 사업 현황 및 수혜 예술가/예술단체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것이었다. 이 내용을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하였더니 김소영 비서관은 그와 관련하여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으로

부터 협조요청을 받았다고 하면서 문체부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여 보내주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나는 문체부 조OO 예술정책과장에게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받아서 전달하였다. 이 자료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 (자) 2014. 4. 16.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2014. 6~8월 경 문화예술계 지원 개선 대책을 보고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김소영 문체비서관을 통해 재차 전달받았고, 이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졌다. 이에 그에 대한 내용을 문체부 조OO 예술정책과장으로부터 받아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한두 차례 보고한 바 있는데, 당시 주된 내용은 향후 예술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지원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 다. 소결

이상의 문서와 진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2008. 8. 27.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서가 ‘좌파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를 분석한 후 ‘주요대책’으로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을 소리없이 지속 실시’, ‘좌파고사 유도’, ‘좌파자금줄 차단’ 등의 조치를 계획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박근혜 정부도 2013. 3.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서를 통해서 문화예술계 좌파 단체들을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고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2013. 8. 김기춘은 비서실장 취임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13.8.16.),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재확산 시도 차단 건의’(13.10.2.) 등의 보고를 받고, 문체부에 ‘특정 편향(좌편향) 예술지원 실태 및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문체부는 이러한 지시에 대하여 예술위에 초점을 맞춰 보고서를 작성한 후 2013. 8. 30. 경 교문수석실 A 선임행정관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국정원이 작성한 2013. 9. 26. 까지 파기할 것을 지시하며 작성한,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라)’ 문서가 충북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등 지역문화재단에서 좌성향 단체 등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이후, 문체부와 예술위가 전국 지자체의 문예진흥기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한편 문체부는 2013. 9. 9. 조현재 1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구성하여 문화예술계내 좌편향 작품·행사·사업 등을 사전 스크린하고 보수지형을 확대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3. 12. 20. 정부 각 부처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 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였고, 2014. 1. 3.에는 문체부에 그동안 재정지원을 계속하였던 민간단체들에 대해 단체 대표 성향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고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2014. 1. 24. 문체부 유진룡 장관은 문화예술분야 민간보조사업에서 불법단체, 좌편향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산집행 전 과정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사위원을 '균형적으로' 구성하여 심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2014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이 끝난 후인 2014. 2. 21.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2014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민족미학」의 학술지 「민족미학」, 2013년 봄페스티벌 주제로 「국가보안법」 공연을 올렸던 「해화동 1번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 단체들과 「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사업 선정 결과가 심사위원회에 좌성향 인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2014년 3월 심의위원 임명시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체부는 청와대의 지적을 받았던 당일인 2014. 2. 21.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문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2014년 책임심의회 위원 구성을 보류하도록 조치하고, 심의회 위원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개인이나 단체들을 지원에서 제외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김기춘은 2014. 3. 12.에 각 수석실 및 소관 부처들에게 대통령에게 일단 조치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빠짐없이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서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체부는 유진룡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문화예술계의 이념성을 지양하고 불법시위 관련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고, 분야별 대응전략도 보고하였다. 2014. 3. 27. 김기춘 비서실장은 각 부처에 산하 단체·기관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때 해당 단체·기관 또는 그 대표자의 과거 불법집회나 시위에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보조금 지급 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면서 정무수석에게 체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무수석실은 2014. 4. 4.~2014. 5. 23. 각 수석실 비서관들과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구성하여 진행한 결과를 종합하여 2014. 5월 하순 경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는

‘문제예산’ 총 130건, 139억 원을 확인하여 조치하고, 3천 개의 문제단체와 8천 명의 좌편향 인사를 DB 구축하고 지속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3.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 가. 문건 등 자료조사

##### (1) 문체부, 좌파 견제 ‘문화예술정책점검 TF’ 지속 운영 방침(13.12.5.)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3. 9. 9.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구성하여 기금 보조 사업에서 특정 문예인에 대한 지원 배제책을 마련·실시하였다.

또한 문체부는 문화예술계내 좌편향 작품·행사·사업 등을 사전 스크린하고 보수지향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3. 9. 9. 출범시킨 ‘문화예술정책점검 TF’(단장: 조현재 1차관)를 2014년도에도 계속 운영하기로 하되 사전적 문제해결 노력을 일층 강화할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확인된다.<sup>28)</sup>

- 한편, 2013.9 「문체부」는 국정원과 별도로 BH 김기춘 실장의 ‘특정 성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마련 지시’에 대해 관련 대책을 작성·보고하고
- 2013.9.9에는 ‘문화예술정책 점검TF’를 구성하는 등 기금 보조 사업에서 특정 문예인에 대한 지원 배제책을 마련·실시

#### 문체부, 左派 견제 ‘문화예술정책점검 TF’ 지속 운영 방침

2013. 12. 5

1. 문체부는 문화예술계내 左편향 작품·행사·사업 등을 사전 스크린하고 보수지향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대응책을 논의키 위해 지난 9.9 출범시킨 ‘문화예술정책점검 TF’(단장:조현재 1차관)를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하되 사전적 문제해결 노력을 일층 강화할 계획

한편 ‘문체부, 좌파 견제 ‘문화예술정책점검 TF’ 지속 운영 방침’ 문서는 ‘관련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28) 국정원, ‘문체부, 좌파 견제 ‘문화예술정책점검 TF’ 지속 운영 방침’, 1쪽. 2013. 12. 5.

가. 문체부(장관: 유진룡)에서는

- 1) 문화예술계 일각에서 이념편향이 과도한 작품들이 창작·공연되는 등 건전 이념지형 조성을 저해하는 형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해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구성하고
- 2) 창작의 자유, 이념적 편향 여부, 정치적 선동 의도, 대중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사후 조치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는 바

√ 사전조치 : 국립문화예술기관 직접 제작, 정부지원을 받은 민간 제작, 정부지원 없는 민간 투자·제작 등으로 분류

- ① 국립기관 제작: 이념갈등 유발소재 지양, 국민소통과 화합 중시
- ② 민간제작(정부지원): 지원결정시 이념편향 여부를 신중 평가
- ③ 민간제작: 창작의 자유는 인정하되 이념적 편향 및 대중선동의도가 과도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

√ 사후조치: 문화예술행사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동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지원 또는 대응 방안 강구

- 3) 문화예술기관 임원 임명시 특정 편향 인사 배제, 국내외 영화제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사전 스크린시스템 구축, 영화·연극·문예·예술·도서관 등 각계와의 소통 및 정부 공유 등 소기 성과 거양

나. 이와 관련, 조현재 1차관은

- 1) 현재 정국 분위기로 보아 내년도에는 좌파 문화예술인들의 세 규합 움직임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시국 관여 등 준동이 예상되고 있어
- 2) 내년도에는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지속 운영(현재 매주 月)하여 문화예술 관련사업의 기획·집행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 3) 정부와 소통할 기회가 적어 정책 이해도가 낮은 젊은 현장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 확대, 중도 진영 문화 예술인 적극 포용, 극단적 정치편향 세력 배제에 보다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  
\* 특히 출판·문학·영화·연극 등 부문에서는 이념문제로 부딪힐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 전략 모색 계획

4) 연장선상에서

- 확대기관장 회의(12.10), 실국별 업무보고(12.24~27), 산하단체 업무 계획 승인(2014.1), 공공기관장 회의(2014.1) 등을 통해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속에 좌파 발호에 선제 대응토록 독려할 계획

※ TF 구성개요 및 운영실적<sup>29)</sup>

## (2) 문체부 장관, 좌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 강구 지시(‘14.1.24.)

국정원이 2014. 1. 24. 작성한 ‘문체부 장관, 좌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 강구 지시’ 문서는 문체부 유진룡 장관이 문화예술분야에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이념시비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불법단체, 좌편향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산집행 전 과정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균형적’ 심사위원 구성을 통해 심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sup>30)</sup>

## (3)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추진 경과

2017년 2월 문체부가 작성한 ‘건전 콘텐츠 TF 추진경과 보고’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1)</sup>

### 1. 그간의 경과

- 2013년 말부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관련 청와대 요청사항에 대한 이행 및 점검을 위한 비정기적 회의가 수차례 개최됨
  - 각 실국에서는 소관 지원 사업별로 청와대로부터 지시 또는 확인을 받았으며, 이러한 절차는 계속 유지됨
- 2014년 5월 경 조현태 전 1차관은 청와대 교문수석실로부터 지원배제 명단(80명)을 전달받음
- 문체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건전 콘텐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 6월 경에는 동 보고서에 따라서 기조실장을 팀장으로 국장들이 참석하는 “건전 콘텐츠 TF팀”을 구성·운영함
  - 동 TF에는 다른 일정이 많았던 국장급 공무원 대신에 과장급 공무원들이 많이 참가했던 것으로 확인
- 2014년 10월 경 김종덕 전 장관은 청와대 지시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거론하며 송OO 당시 기조실장에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건을 준비해 줄 것을 지시함
  - 부임(‘14.10.8)직후였던 기조실장은 이미 작성되어 있던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 보고
  - 장관은 2014년 10월 21일 경 동 문건을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후 보고내용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기조실장은 관련 실국회의를 소집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전달
- 동 TF는 초기에는 주간 단위로, 이후에는 부정기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주로 해당 실국이 진행하는 청와대 지시 관련 사업 등의 추진 상황이나 특이사항, 애로점 등을 취합·정리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
  - TF에 대한 청와대 관심 소멸과 형식적 운영으로 인하여 2015년 상반기에 자연스럽게 중단

29) 이 첨부 문서는 입수하지 못하여서 문화예술정책점검 TF의 구체적인 운영실적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30) 국정원, ‘문체부장관, 좌성향 민간보조사업 지원 배제책 강구 지시’, 1쪽. 2014. 1. 24.

31) 문체부, ‘건전 콘텐츠 TF 추진경과 보고’, 2017. 2.

## 2. 구성 및 담당

- (총괄) 기조실장
  - 최OO('13.3.19.~'14.10.7.), 송OO('14.10.8.~'16.12.29.)
  - ※ (간사: 정책기획관) 김OO('13.5.15.~'14.10.19.), 황OO('14.2.17.~'14.11.10./창조행정 담당관, '14.11.11.~'15.2.22./정책기획관), 김OO('15.3.3.~'15.7.30)
- (참석) 국장급 참석 원칙
  - 국장들의 서울 출장이 잦아 대부분 과장들이 참석
- (역할) 실국별 각종 지원사업 진행현황, 애로사항 등 확인·취합
  - 문예위 공모지원 사업, 영화 등 보조사업, 세종도서 사업 등

## 3. 관련자료 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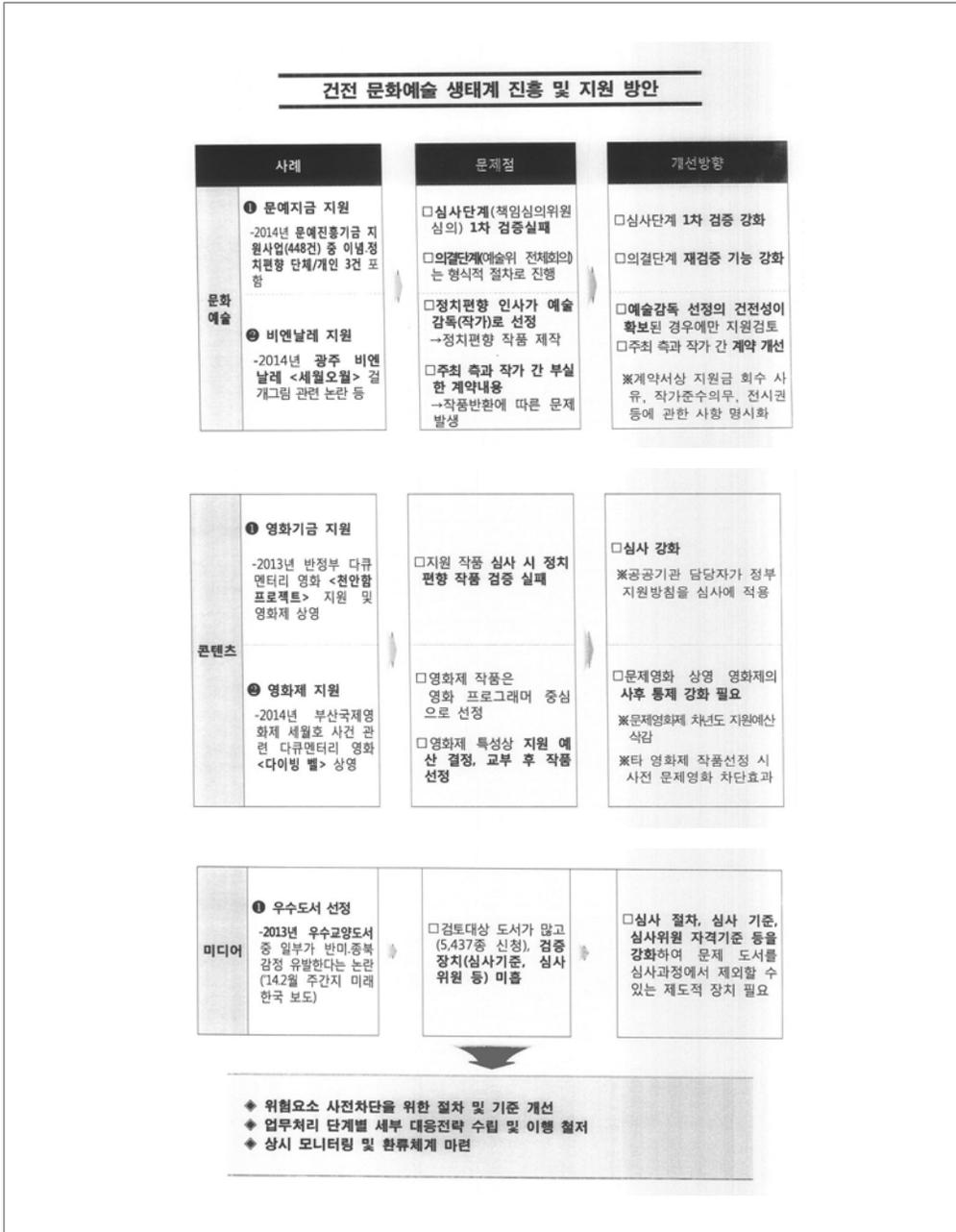
- 동 회의는 사전 회의자료 없이 진행하였으며, 회의결과만 간략히 요약,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
  - 다만, 동 자료는 별도 보관하지 않고 통상 보고 후 폐기한 것으로 추정
  - 컴퓨터 정밀 검색 등을 통해 회의결과 자료 3건을 발견하였으나, 현 직원은 물론, 전임자들도 이러한 자료가 자신들의 컴퓨터에 있다는 사실을 최근까지 인지하지 못함
  - \* '건전 콘텐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서도 확인하지 못함.
- 특검이 압수수색('16.12.26.) 당시 컴퓨터 포렌식을 실시하고, 많은 서류와 일부 하드디스크도 전격 수거해 갔는 바, 특검이 포렌식을 통해 이들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은 있음.

〈관련 참고〉 소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약 600명)은 2014년 이후 청와대 지시로 지원이 배제된 케이스를 실무자가 그때 그때 일지 형태로 추가해 온 결과자료이며, 언론에 보도된 9,473명 명단은 우리부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15년 4개 카테고리로 대상을 확대하라는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에 올라있는 명단들을 그대로 확인·출력한 자료인 바, 동명이인 여부 등 상세정보 부재로 실제 적용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함.

### (4)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14.3.~10.)

문체부가 2014. 10.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문서는 2014. 3월 경 '문화예술정책점검 TF' 당시 작성되었던 초안을 추후(2014. 10.) 보완을 거쳐 김종덕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분야별 사례와 '문제점', '개선방향' 및 '건전콘텐츠 활성화 TF'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도 보고하고 있다.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는 분야별 제도개선 사항 이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공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 유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매주 1회

TF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sup>32)</sup>



32) 문체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1-4쪽, 2014. 5.~10.



## (6)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15.2.~4.)

현재까지 입수한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 문서는 모두 3건이다.

- ① 이 중 2015. 2. 25.자 문서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sup>33)</sup> 문학 및 연극 분야의 경우, 일부 사업이 선정되어 발표 일자를 무기 연기하여 재심 등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하고 있어서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심의나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건전콘텐츠 활성화 TF에서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 문화예술 분야

#### • 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공모 지원사업 관련

-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및 해외레지던스 사업의 경우, 지원제한 기간(2년 또는 3년)이 있어 쟁점 당사자는 대부분 미신청
- 문학 및 연극 분야의 경우, 일부 사업이 선정되어 발표 일자를 무기 연기하여 재심 등 방안을 강구중  
→ 문학분야 발표가 계속 지연될 경우, 기존의 세종도서 선정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음

(생략)

- **(향후계획)** 사업·예산 재조정안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예정(3월초)

- ② 한편 2015. 3. 16.자 문서에는 예술위 관련 내용은 없다. 2015. 4. 20.자 회의 결과 중에서 예술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4)</sup> 예술위 공모 사업이 2015. 4. 20. 현재 33건이 진행중이고, 각종 (블랙)리스트를 관리·공유하고 있고, 사전 스크리닝에 대한 부담에 따르는 추진상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건전콘텐츠 활성화 TF에서 논의되었다는 확인된다.

###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5.4.20(월) 15:30 / 기조실장실
- 참석자 : 기조실장, 창조행정담당관, 예술/문화기반/콘텐츠/미디어 정책관실 담당 과장

### □ 주요 논의사항

- (예술)

33) 문체부,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2.25]’, 1쪽.

34) 문체부,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4.20)’, 1쪽. 2015. 4. 20.

- 상시 공모 33건 진행 중
- 각종 리스트 관리, 공유 중
- 사전 스크리닝 부담에 따른 추진상 애로 가중

## 나. 참고인 등 대인 조사

### (1) 참고인 황OO의 진술<sup>35)</sup>

참고인 문체부 창조행정담당관 황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가) 2014.2월부터 창조행정담당관으로 근무하였는데, 문화예술정책점검TF에 대하여는 들어보지 못하였다.
- (나) 전임자인 김OO으로부터 ‘개구리’라는 폴더를 인수인계 받았는데, 그 폴더는 청와대 보고용으로 회의 결과를 보관하였던 용도로 알고 있다.
- (다) 김OO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위에서 실적 요구가 있으니 회의를 하면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하였고, 개구리라는 폴더 안에는 파일이 여러 개가 있었고 자신도 그와 관련하여 보고용으로 몇 차례 만들었다.
- (라) 2014년 2월~5월까지는 한두 차례 회의를 하였고, 후임자인 이OO에게 그대로 넘겼다.
- (마) 2014. 3. 21.자 국정원 문서의 붙임 문서인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문서를 자신이 만든 바 있다.
- (바) (세월호 참사 전인지 후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문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적이 있는데, 이는 조현재 1차관이 위로부터 문체부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질책을 들어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던 것이다.
- (사) 문화예술 일반, 도서 및 문학, 영화, 해외문화원 등 분야별 대응 전략을 마련했던 것은, (건전콘텐츠활성화 TF) 회의 때 그렇게 세분화됐고, 관련 내용은 자신이 실국에서 취합한 것이었고, 세부사항이 실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 (아) 자신이 나루 메일<sup>36)</sup>로 청와대 문체비서관실(A 선임행정관, 강OO 행정관), 국정원(조OO), 경찰정보과(배OO)에게 보냈다.

35) 황OO 진술조서, 1-14쪽. 2018. 1. 24.

36) 문체부 내부 통신망.

- (자) 자신이 작성하여 최OO 기초실장에게 주면 기초실장이 장관에게 보고하였을 것이고, 위에 보여주기가 싫었기 때문에 실·국으로는 보내주지 않았다.
- (차)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문서의 제목은 최OO 기초실장과 자신이 상의하여 자신이 제목도 만들고 작성한 것이고, 자신이 부임하기 전부터 그러한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중이었고 그런 도중에 자신이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부임하였던 것이었다.
- (카) ‘건전 생태계’라는 말은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는 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주 의도는 좌쪽 편향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 (타) 문체부 내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는, 블랙리스트를 받은 이후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최OO 기초실장이 TF 단장, 김OO 정책기획관이 부단장, 창조행정담당관인 자신이 간사, 담당 국장이 회원이 되는 TF였는데, 자신의 후임인 이 OO 창조행정담당관이 그 이후 TF 간사로 활동하였다.
- (파) 주로 월요일 실국장 회의 이후 기초실장 방에서 한 적이 많은데 국장이 회원이긴 하였으나 국장이 바쁠 경우 과장이 오기도 하였다.
- (하) 국장까지가 회원이었고 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2014. 5-6월부터 운영한다고 보고를 하였고, 5-6월에 건전콘텐츠활성화 TF로 명명하였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회의를 하였는데 회의를 할 때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개구리’ 폴더에 보관했지만 기본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용이었고, 회의 내용도 ‘진행되는 것이 무엇인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등이었고, 건전문화, 건전콘텐츠활성화 계획 등 비슷한 제목으로 여러 번 보고서를 만들었다.
- (거) TF는 그 달에 무엇을 했는지 취합해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배제 결정을 하지는 않았고, 유진룡 장관도 이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따로 보고서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너) 2014. 10월 경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도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재구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유진룡 장관이 나가고 난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계속해오던 내용을 보고한 것이었다.
- (더) 2014. 10월 송OO 기초실장이 온 후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작성된 것이 있느냐고 하여서, ‘예전부터 해 오던 게 있다. 업데이트해서 드리겠다.’고 해서 문서를 만들었고, 이는 실제로 시행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에서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잘 시행이 안 된다고 하니 계획을 세워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문체부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이었다.

- (러) 예술정책과 박OO 사무관이 “2014년 10월 경 이OO 예술정책과장이 기조실 회의를 다녀와 예술국 분야가 많으니 예술국에서 자료를 취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한 진술과 관련하여, 박OO 사무관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황OO 창조행정담당관에게 물었더니, “이런 식으로 작성하라고 보여주셨고 분야는 다 있으니 각 과에 연락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락을 하니 각 과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하는 데까지 하고 달라고 하였을 것이고, 박OO 사무관이 그렇게 진술하였다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머)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TF를 하면서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 등) 분야를 나뉘었던 것 같다.
- (버)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 계획’, TF 구성·구성 운영 등은 박OO 사무관이 취합한 것을, 최종본은 자신이 작성한 것인데, (문화예술, 미디어, 콘텐츠)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은 김종덕 장관때부터였다.
- (서)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회의 때 하면서 관련자를 최소화 하고자 했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소한의 관련자만 참여하도록 하였고, 기조실에서도 기조실장, 국장, 과장만 알고 있었다.
- (어) 최종본은 자신이 2014. 10. 21. 송OO 기조실장과 박OO 사무관에게 전달했고, 송OO 실장이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를 하였고, 이 보고서를 관련 과에 보내지는 않았고, 청와대에는 김OO 선임행정관 혹은 강OO 행정관에게 나루 메일로 최종본을 보냈고,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2014. 9-10월쯤 김소영 문체비서관이 김상률 교문수석 부임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직접 보고하라고 하여서 송OO 기조실장과 자신이 직접 가서 김상률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조OO 국정원 IO에게도 보고했고, 경찰정보관에게도 전달하였다.
- (저) TF는 유진룡 장관 사임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진행되었고, 김종덕 장관 이후에는 대략 월 2-3회 정도 진행됐고, 자신의 후임인 이OO 담당관 때도 진행됐지만 이OO의 후임인 D 담당관 때는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 참고인 김OO의 진술<sup>37)</sup>

참고인 문체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 김OO<sup>38)</sup>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가) 2013. 9. 9. 문체부에서 구성한 ‘문화예술정책점검 TF’에 참석하여 회의결과를 요식행위로 정리했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였던 것이다.
- (나) 청와대의 특정 문화예술계 대책방안 마련 지시와 관련하여 컴퓨터 폴더명 ‘개구리’를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문화예술정책점검 TF’의 모든 회의자료를 ‘개구리’ 폴더에 넣었다.
- (다) TF의 구성원은 신OO, 김OO, 최OO 실장 등이었고 조현재 차관은 없었고, 조현재 차관이 사무관에게 시키지 말고 직접 정리하라고 하여서 직접 정리하였다.
- (라) TF 회의는 2~3차례 하였고, 1장 짜리 파일을 저장했는데 파일이 몇 개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 (3) 참고인 박OO의 진술<sup>39)</sup>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박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가) 2014년 5월 초경 예술국장 혹은 다른 사무관에게 블랙리스트 명단을 받았는데, 3주 후에 조현재 1차관이 폐기하라고 하여서 폐기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나중에야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그것이 블랙리스트인 줄 알았다.
- (나)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 계획’ 등 문서와 관련하여, 2014. 10월 경 예술국 회의 자리에서 이OO 예술정책과장이 기조실 회의에 다녀와서 “예술국이 분야가 많으니 예술국에서 취합해서 보내야 한다”고 하자, 김OO 국장이 이것을 왜 가지고 왔느냐고 짜증을 냈고, 이OO 과장은 “건전 생태계”에 대하여 자신도 자세히 모르니, 황OO 과장에게 물어보라고 하여서, 황OO 과장을 찾아가 작성 방법을 물었더니, “이런 식으로 작성하라고 보여주셨고 분야는 다 있으니 각 과에 연락하면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

37) 김OO 진술조서, 4-5쪽. 2018. 1. 18.

38) 2012~2014. 1~2.

39) 박OO 진술조서, 1-8쪽. 2018. 1. 11.

락을 하니 각 과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각 과에서 받아서 제가 취합을 했습니다. 제가 취합한 것을 기조실 황OO 담당관에게 보내고 기조실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하였다.

- (다) 자신이 만든 것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 계획’인데 이는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 분야 담당자가 자신에게 준 것이었고, 제목이나 현황 등은 황OO 담당관이 불러준 것이었고,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이나 TF 구성·운영은 황OO 담당관이 작성하였을 것이다.
- (라) 2014. 10. 14. 경 황OO 과장(담당관)에게 나루 메일로 취합본을 보냈고 다시 황과장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과 TF 구성·운영을 함께 붙여 자신에게 보냈는데, 자신은 황 과장에게 초안이라고 보냈고 이OO 예술정책과장에게도 보냈고, 황OO 과장이 대략 2014. 10. 20. 경 다시 최종본을 보내주었고, 오OO 사무관, 과장, 국장에게도 아마 자신이 보내주었을 것이다.
- (마) 문화예술위원회 분야는 오OO 사무관이, 영화 분야는 이OO 사무관 혹은 윤OO 사무관이, 미디어 분야는 이OO 사무관이 작성하였을 것이다.

#### (4) 참고인 송OO의 진술

참고인 송OO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40)</sup>

- (가) 2013. 9. 9. 구성된 문화예술정책점검 TF에 대하여 ‘TF 같은 걸 구성해서 이렇게는 의를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따로 기억나는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2014. 10월 말경 김종덕 장관이 김기춘 실장에게 질책을 받은 후 자신이 (건전콘텐츠활성화) TF를 소집하였다.
- (다) TF 소집과 관련해서는, 황OO 과장이 “이미 옛날에 다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장님이 소집만 하시면 됩니다.”,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걸 얘기하면 각 실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 (라) 처음 작성한 세로 방향 문서를 가로 방향으로 다시 작성하여 장관에게 주었고, 장관이 이 문서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
- (마) 이병기 비서실장이 온 후부터는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를 더 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앞으로는 (오OO 예술정책과 사무관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게 되어

40) 송OO 진술조서, 5-28쪽. 2018. 2. 23.

서 TF가 해소되었다.

(바) 문서 내용은 일종의 ‘실행계획’이었다.

(사) TF에서 지원 배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

##### (5)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김OO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41)</sup>

(가) 2013. 9. 9. 경 조OO 정책보좌관이 회의에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2013. 9. 3.~9. 15.)와 관련하여) “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장관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들었고, 유진룡 장관이 “대응책 보고 자료를 만들어라.”고 하여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유진룡 장관이 “좀 수정을 해라. 거기에 헌법 질서라든지 누가 봐도 손 못 대게 하는 그런 것들로 수정을 하라.”고 하여서 당시 청와대에 보고가 되었다.

(나) 조현재 1차관이 최규학 기조실장에게 “건전콘텐츠 TF를 해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여서 월요일에 장관 주재 주례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관련된 실국장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이렇게 TF 활동을 했다.’라고 하여서 (청와대로) 보내주고 하였다.

(다) 기획조정실은 직접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어서 실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담당 과장, 담당 사무관이 참석자 발언을 기록하여 보고서를 만들어서 ‘문체부 안에서도 TF한다,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뉘앙스로 (보고서를) 보냈고, 가령 ‘지난 주에 공연은 무슨 공연이 있었고 이번 주에 무슨 공연이 있다. 잘 보겠다.’ 하는 등의 뉘앙스로 실국에서 보고를 하고 정리해서 보고하였다.

(라) 2014년 5-6월 경 조현재 1차관이 청와대에서 받아온 블랙리스트 명단을 최규학 기조실장을 통해서 본 적이 있다.

(마) (시점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유진룡 장관이 보고서를 만들라고 해서 정책기획관으로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TF를 만들라고 해서 월요일 회의가 끝나고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회의) 했다.

41) 김OO 면담녹취록, 1-22쪽. 2018. 1. 18.

## (6) 참고인 박OO의 진술

박OO 문화예술정책실장<sup>42)</sup>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43)</sup>

- (가) 문화예술정책실은 2014년 10월에 생겼고, 전임자인 원OO 실장이 2016. 4. 10. 까지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고, 몇 가지 일만 컨트롤 하고 나머지 일은 크게 컨트롤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특히 김종덕 장관이 실장과 국장의 브랜드 과제를 가지라고 하여서 실장이 주력할 과제, 국장이 주력할 과제를 구분하여 주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 (나)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멤버였으나,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고, 과장을 대참시켰다. 문화산업정책과 김OO 과장과 영상콘텐츠산업과 정OO 과장 중 시간이 되는 사람이 번갈아 갔다. 참석하였던 과장에게 영화쪽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TF의 취지는 문예, 영상콘텐츠, 미디어 등 대상 업무가 있는 실국이 모여 논의를 해 가자는 것이었으나, 대개의 경우 과장급이 모였다.
- (다) 건전콘텐츠 관련해서 과거 각 실국에서 나누어서 하던 것을 예술정책과에서 한다고 들었다. ‘TF를 아직도 하니’라고 물어보니 안 한다고 하였다. 국정감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검열’ 이슈와 관련한 제도 개편(문예위의 심사 방식)을 했다고 들었다. 제도 개편은 공급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시장의 수요를 넓혀주는 방법으로 수요자(관객)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고, 결국 지원받던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기는 할 것이다.
- (라) 조운선 문체부 장관이 취임한 후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방안’ 보고서를 보여주며, ‘개구리’, ‘홍성담’ 등과 관련한 이야기들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말하며 그동안 고생하였던 실국장들의 이야기도 덧붙이고, 제도를 개편한 것도 설명하고 매카니즘의 변경을 설명했다.
- (마) 2016. 9. 27. 문체부 국감 전 언론에서 문예진흥기금과 관련된 검열 또는 블랙리스트 내용이 논란이 되어서 조운선 장관에게 ‘예술위에서 일어난 것으로 문체부는 알지 못한다’는 정도의 답변 기초를 써서 B 국장이 장·차관 보고하고, 검토를 했던 것 같다.

42) 2014. 10.~2015. 3. 31. 콘텐츠정책관, 2015. 3. 31.~2016. 4.10. 해외문화홍보원장, 2016. 4. 11.~2016. 11. 23. 문화예술정책실장.

43) 박OO 진술조서, 18-29쪽. 2017. 1. 1. 재판증거자료.

(바) 블랙리스트 문제가 터졌을 때 문체부 대변인이 이를 부인하였던 것은 결국 장·차관 협의 후 대책회의를 거쳐 그렇게 한 것으로 안다.

#### 다. 소결

이상의 문서와 진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문체부는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가 논란을 빚은 이후 대책 마련을 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2013. 9. 9.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TF의 참석 대상은 국장급 이상이었지만, 국장들이 다른 일정이 많아서 과장급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 5.부터는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2014. 10.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종덕 장관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 TF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예술위 공모지원 사업, 영화 등 보조사업, 세종도서 사업 등이었다.

2015. 2. 25. 자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 문서에서 ‘문학 및 연극 분야의 경우, 일부 사업이 선정되어 발표 일자를 무기 연기하여 재심 등 방안 강구중’이라는 대목이 발견되고, 2015. 4. 20. 자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 문서에서 ‘각종 리스트 관리, 공유 중’, ‘사전 스크리닝 부담에 따른 추진상 애로 가중’ 등의 표현이 보이는 점으로 보아, 2015. 2.~4. 사이에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는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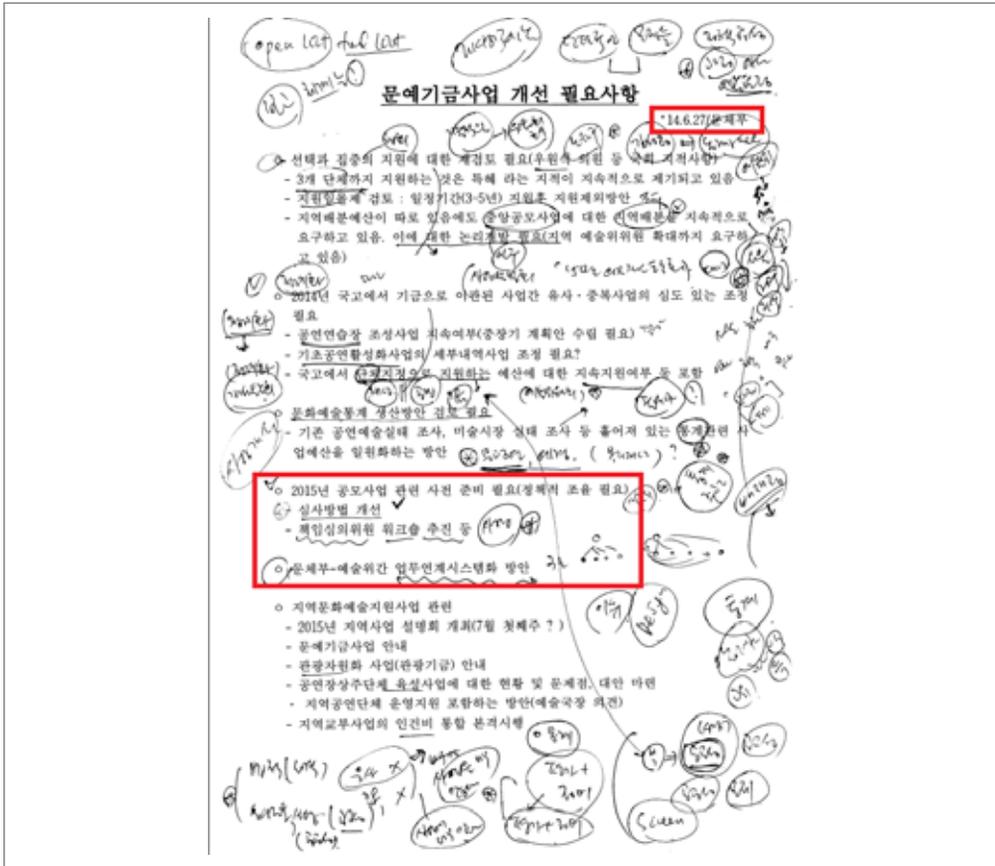
###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지원 개선 방안’ 작성 경위

#### 가. 문건 등 자료조사

##### (1) 문체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체 정화시스템 가동(‘14.4.21.)

국정원이 2014. 4. 21. 작성한 ‘문체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체 정화시스템 가동’ 문서는, 문체부가 유진룡 장관의 각별한 관심속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정서가 부(部) 전반에 확산되어 각 국·과가 사업 추진시 자체적으로 이념시비가 될만한 사업을 걸러내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2014. 2. 21. 문체부 유진룡 장관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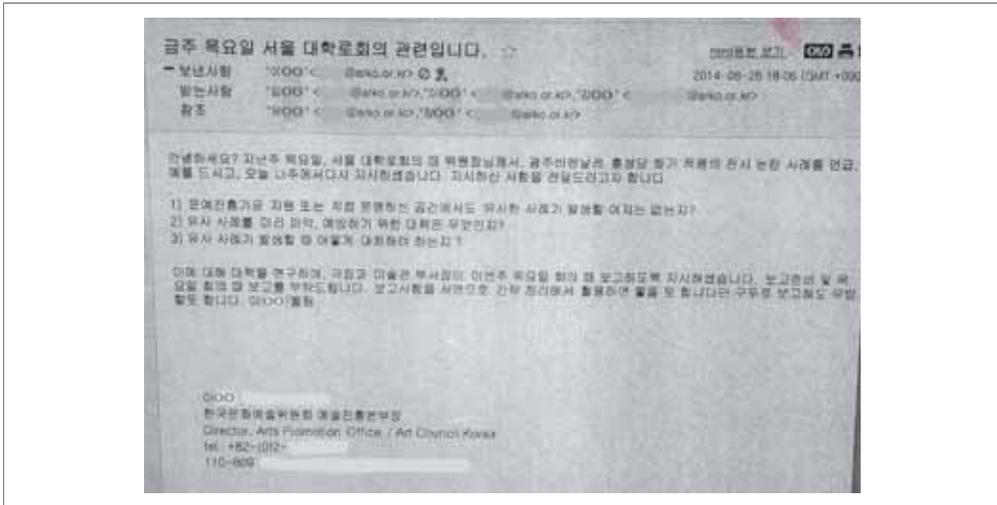


**(3) 예술위 이OO 예술진흥본부장이 예술위 간부들에게 보낸 이메일('14.8.26.)**

예술위 이OO 예술진흥본부장이 2014. 8. 26. 예술위 간부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 목요일, 서울 대학로 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광주비엔날레 흥성담 화가 작품의 전시 논란 사례를 언급, 예를 드시고, 오늘 나주에서 다시 지시하셨습니다. 지시하신 사항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 1) 문예진흥기금 지원 또는 직접 운영하는 공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 2) 유사 사례를 미리 파악,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3)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4)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14.9.5)**

2014. 9. 5.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비서실장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①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책집행과 인사관리를 통해서 노력중인데 일선기관의 행태를 보면 이른바 반체제세력들의 집요한 투쟁에 비해 매우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함.

- 강한 의지와 열정, 결기를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국가와 체제 수호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할 것(손수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14.9.5 국정기획수석**  
(기획비서관)

성 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행보고	<input type="checkbox"/> 결심요망	<input type="checkbox"/> 지시사항조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 급 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긴급	<input type="checkbox"/> 한시안외공유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유 (손수석)	

9월(9.5일, 08:40-09:35)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별첨안건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①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책집행과 인사관리를 통해서 노력중인데 일선기관의 행태를 보면 이른바 반체제세력들의 집요한 투쟁에 비해 매우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함.

- 강한 의지와 열정, 결기를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국가와 체제 수호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할 것(손수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14.10.2국정기획수석  
(기획비서관)

성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향보고	<input type="checkbox"/> 결심요망	<input type="checkbox"/> 지시사항조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급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긴급	<input type="checkbox"/> 함의의공유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유 (전수석)	

금일(10.2일, 08:30-09:55)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별첨 안전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 ①
- ②

③ 그동안 정무수석, 교문수석 및 관련부처에서 광주 비엔날레에서의 흥성답 그림 전시 차단 파주 북소리축제에서의 원복작가 홍명희문학제 개최 차단 부산영화제에서의 '다양벨 영화 상영 차단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온 결과, 실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음.

- 앞으로도 문화영화예술 분야에서의 이념 편향적인 행태를 방관·좌시해서는 안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제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 (정무수석, 교문수석)

**(7)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14.10.12.)**

2014. 10. 12. 비서실장 주재 회의 결과 비서실장 지시사항에 따르면, “국정운영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갖고 수행해 나가겠다는 업무열정이 가장 중요함. 그러나 최근 일부 부처에서 책임감이나 열정 없이 업무 추진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신상필벌을 엄하게 적용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없도록 할 것(전수석)”이라고 하면서 문체부의 경우, ‘이념 편향적 영화라는 논란이 있는 부산영화제 상영영화(“불안한 외출”)에 대한 대응 소홀’이라고 지적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③ 국정운영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갖고 수행해 나가겠다는 업무열정이 가장 중요함. 그러나 최근 일부 부처에서 책임감이나 열정 없이 업무 추진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신상필벌을 엄하게 적용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없도록 할 것 (전수석)

\* 누리과정 시행 명칭 및 새원문세와 관련 교육부 직원이 교육성 입장을 두루하는 뜻인 데도 (교육부) 이념 편향적 영화라는 논란이 있는 부산영화제 상영영화(“불안한 외출”)에 대한 대응 소홀 (문체부) 등

**(8)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47)**

문체부가 2014. 10.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 계획’ 은 예술위가 주관하는 일반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종전의 ‘공모(신청 및 접수)→심사(책임심의위원)→의결(예술위 전체회의)→집행’의 구조를 바꾸어서, ‘○ 기존 관행적 지원 20~40% 축소, ○ 심사단계 1차 검증강화-정치편향 작품/단체/예술서 선정 배제, - 예술위 간부 간사 심사에 참여(\*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 ○ 최종의결 전 재확인(문제 발생시 최종의결에서 배제)’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분야/중점과제	종전	개선
<b>Ⅲ 문화예술</b>		
● 문화예술위원회 - 문화기금 - 일반공모사업	공모(신청 및 접수)→심사(책임심의위원)→의결(예술위 전체회의)→집행	○ 기존 관행적 지원 20~40% 축소 ○ 심사단계 1차 검증강화 ○ 예술위 간부 간사 심사에 참여 ○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 ○ 최종의결 전 재확인(문제 발생시 최종의결에서 배제)
● 문화예술위원회 - 문화기금 지원사업 - 예술지원사업	지원대상기관 선정 - 지원금 지원(예술위 예산) - 집행(문화재단 등)	○ 지원대상 선정 강화 ○ 지원금 지원 강화 ○ 집행 강화 ○ 예술위 간부 간사 심사에 참여 ○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 ○ 최종의결 전 재확인(문제 발생시 최종의결에서 배제)
● 공연장계 지원사업 - 공연장계 지원사업 - 공연장계 지원사업	지원대상기관 선정 - 지원금 지원(예술위 예산) - 집행(문화재단 등)	○ 지원대상 선정 강화 ○ 지원금 지원 강화 ○ 집행 강화 ○ 예술위 간부 간사 심사에 참여 ○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 ○ 최종의결 전 재확인(문제 발생시 최종의결에서 배제)
<b>Ⅳ 콘텐츠</b>		
● 문화진흥위원회 - 문화진흥기금 -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신청 및 접수)→심사(책임심의위원)→의결(예술위 전체회의)→집행	○ 기존 관행적 지원 20~40% 축소 ○ 심사단계 1차 검증강화 ○ 예술위 간부 간사 심사에 참여 ○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 ○ 최종의결 전 재확인(문제 발생시 최종의결에서 배제)
● 문화진흥위원회 -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지원대상기관 선정 - 지원금 지원(문화진흥기금) - 집행(문화재단 등)	○ 지원대상 선정 강화 ○ 지원금 지원 강화 ○ 집행 강화 ○ 예술위 간부 간사 심사에 참여 ○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 ○ 최종의결 전 재확인(문제 발생시 최종의결에서 배제)
<b>Ⅴ 미디어</b>		
● 한국출판진흥원 - 출판진흥기금 - 출판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신청 및 접수)→심사(책임심의위원)→의결(예술위 전체회의)→집행	○ 기존 관행적 지원 20~40% 축소 ○ 심사단계 1차 검증강화 ○ 예술위 간부 간사 심사에 참여 ○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 ○ 최종의결 전 재확인(문제 발생시 최종의결에서 배제)

**문명 | 분야별 세부 대응전략**

《 문화예술 》

Ⅲ 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지원 개선방안

○ 문예기금 일반 공모 사업 \* 15년 정부예산안 기준 총 24억 5,000만 원

- 사전단계에서 지원심의 및 관리운영기관 강화(예술위 내부지침 개선)

- 공모 및 심사단계에서 철저한 검증 및 대응 (예술위, 문제부)

《 단계 》

○ 주요 대응전략

사정단계 (공모계획 수립)

공모단계 (신청 및 접수)

심사단계 (심사 및 선정)

시행관리 단계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지침심의 기본방침 개선(14년)

→ 신규사업 비율 20~40% 유지(문화진흥기금 지원 축소)

→ 우선배려기관 적용(사정확정후) 높은 단계, 표준 계약서 사용 단계, 경쟁도 일치된 단체 등 우선

지침사업 관리운영기관 강화

→ 회계관리 강화(회계팀 이상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직접심사 및 자기심사서 제출), 공연예술 통합 협조망 가열 검토, 지원금 분할지급 등

신청서 검토 및 사전협의(예술위, 문제부)

→ 통이사항 확인 및 심의자료 반영(예술위 사무처), 필요시 책임심의위원과 사전협의(예술위 사무처)

책임심의위원회(심사)

→ 정치권력 적용(단체)예술가 선정 배제, 예술위 간부 간사 심사에 참여 \*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

심사 후 결과공유 및 최종확인(예술위, 문제부)

→ 문제발생시 위원실 책임 하에 해결조치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최종의결과정에서 배제 조치

지침사업 관리운영기관 및 집행(예술위)

→ 관리운영기관 위원실과 자기지침 대상에서 배제

○ 문예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 15년 정부예산안 기준 24,000만 원

- (지원현황) 하반기(연간)에 2014년 20억 5,000만 원에 비해 17개 시도에 지원금 배분 + 지방비 배정 → 지역문화재단 계교부, 공모 지원

\* 15년 기준, 시도당 평균 14억원 규모 지원(전 총 33억원, 경기 22억원, 부산 17.5억원, 전북 15.5억원, 전남 14.8억원) / 세출 1.5억원, 계부 9.7억

이 중 예술위 문예진흥기금 지원 개선방안과 관련된 세부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47)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에 따르면, 이 문서는 2014. 10. 김종덕 장관이 송OO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으로 보고받은 것이다. 김종덕 장관은 이 보고서와 이를 가로 형태로 요약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를 함께 가지고 2014. 10. 21.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

《 문화예술 》

① 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지원 개선방안

• 문예기금 일반 공모 사업

- \* 15년 정부예산안 기준 총 24개 사업 53,302백만원
- 사전단계에서 지원심의 및 관리운영기준 강화(예술위 내부지침 개선)
- 공모 및 심사단계에서 철저한 검증 및 대응 (예술위, 문체부)

〈 단계 〉	〈 주요 대응전략 〉
<b>사전단계</b> (공모계획 수립)	<b>지원심의 기본방침 개선('14년~)</b> → 신규사업 비율 20~40% 까지 확대(관행적 지원 축소) → 우선배려기준 적용(사업확정수준 높은 단체, 표준계약서 사용 단체, 전년도 미지원 단체 등 우선) <b>지원사업 관리운영기준 강화</b> → 회계관리 강화(1억원 이상 회계검사보고서 제출, 미정산사업 차기심사시 제외),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가입 권고, 지원금 분할지급 등
↓	↓
<b>공모단계</b> (신청 및 접수)	<b>신청서 검토 및 사전협의(예술위, 문체부)</b> → 특이사항 확인 및 심의자료 반영(예술위 사무처) → 필요시 책임심의위원회와 사전협의(예술위 사무처)
↓	↓
<b>심사단계</b> (심의 및 선정)	<b>책임심의위원회(심사)</b> → 정치편향 작품/단체/예술가 선정 배제, 예술위 간부 간사 심사에 참여 *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 <b>심사 후 결과공유 및 최종확인(예술위, 문체부)</b> → 문제발생시 위원장 책임 하 해결조치 <b>위원회 전체회의(의결)</b> → 최종의결과정에서 배제 조치
↓	↓
<b>사후관리 단계</b> (보조금 교부 및 정산)	<b>지원사업 관리운영강화 및 환류(예술위)</b> → 관리운영기준 위반사업 차기지원 대상에서 배제

## (9) 2015/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관련 정부의 외압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 [2018.4.현재]

예술위 ‘블랙리스트 자체조사 TF’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2015/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관련 정부의 외압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2018.4.현재]’는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지원 배제를 위한 문체부의 ‘외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 2. 정부로부터 외압을 받은 시기와 경위

- 2015년도 지원사업 정기공모를 준비하던 2014년 7월경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술정책과로부터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규정과 추진 일정 등과 관련한 자료 요청을 많이 받기 시작함. 이때부터 문체부에서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의 진행과 관련, 사전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됨.
- 2014년 9월, 문체부 예술정책과로부터 사업의 공모 및 지원심의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 협의, 즉 회의 참석을 요청받음.
- 2014년 9월 문체부 청사에서 당시 예술정책관이 주재하는 회의가 개최됨. 문체부에서는 당시 문체부 측 참석자는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장, 예술위 업무 소관 사무관이었으며, 예술위에서는 사무처장과 경영전략본부장, 예술진흥본부장, 문화나눔본부장이 참석함.

### 〈당시 회의 주요 내용〉

#### • 문체부 주요 전달사항

- 2015년도 정기공모 진행 시 **사회적 논란을 가져올 예술가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
-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 수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 지원제한 조치가 가능한 상황(지원심의 제도 등 구조와 진행방식)인지 여부를 점검하여 심의 진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 예술위 참석자 입장 및 답변 주요 내용

-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하여 **지원심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가능하지도 않음**
- 지원사업의 심의는 오로지 예술가 등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권한이며, **심의에 개입할 명분과 방법이 없음**

#### • 예술위 답변에 대한 문체부 추가 요구사항

- 2015년도 정기공모 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정부의 지시를 반영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
- 2015년도 **정기공모 지원사업의 진행단계마다 문체부와 협의**하여야 함
- 심의 진행 전 일정, 지원신청 내역, 심의위원 구성 등의 내용을 문체부와 공유하고,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심의 진행 후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만 발표 및 지원이 가능함**

□ 회의를 마치고 예술위의 참석자들은 회사로 복귀한 후 회의 내용을 예술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했던 간부들은 아래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음

- 지원사업의 진행 단계마다 문체부와 협의요구에 대해서는 업무조율 차원에서 이전에도 계속된 일여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인식하지 않았음(관리감독기관인 문체부와의 업무협의 필요성)
- 지원심의를 대한 개입이나 지원배제 같은 조치는 불가능한 일이라 판단하고 있었으나 문체부의 요구가 확고하여 당혹스런 상태였음.
- 당시에는 2013년 박근형 연출 <개구리> 논란, 2014년 홍성담 작 <세월오월> 등으로 정치적, 사회적 논란거리에 대한 집권 정당과 정부의 거부감과 사전적인 예방 조치 차원의 지시로 인식함.

□ 위와 같은 인식의 바탕에서, 당시 위원회 내부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옳지 않은 일이지만, 미국 국립예술기금(NEA)과 안드레 세라노의 소송 및 이후 NEA의 막대한 예산 삭감 사례를 볼 때 정부 지시를 모두 거부할 경우 우리 문예진흥기금도 대폭 삭감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많은 예술인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직 구체적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정부의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지혜롭게 대처하자는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됨.

##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 (1) 참고인 오OO의 진술<sup>48)</sup>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4.4월 경~9월 사이 예술위 직원(이OO, 장OO, 류OO)들에게 문예진흥기금 심사제도 개편에 관련된 자료나 의견을 전화나 이메일로 구하기도 하고 직접 만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답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서에서 ‘문화예술’ 분야 ‘세부 대응전략’에 반영된 것이다.

(나) 이렇듯 심사제도 개편 및 세부 대응전략까지 마련한 까닭은 청와대에서 계속 지원심의 제도 개편을 요구하였고, 기존 심의제도로는 배제 방침을 실행하기가 어려웠

48) 오OO 1회 진술조서, 5-6쪽, 2018. 2. 7.

기 때문이었다.

- (다)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는, 본인은 이OO 예술정책과장으로부터 예술위 관련 부분에 대한 지시를 받고 예술위 직원들과 상의하여 만든 자료를 예술정책과 박OO 사무관에게 전달하였으나 그 뒤의 과정은 알지 못한다.
- (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이나, 요약 문서인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문서에 담긴 내용은 자신이 전달하였던 내용이다.
- (마)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 사업에서 배제 과정은 이 문서에 적힌 방침에 따라서 대체로 실행되었다.
- (바) 그러나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연극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사업의 경우에서 보듯 애초에 계획된 대로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생겼다. 예술위 간부들이나 예술위원들도 막상 자신들이 책임지고 블랙리스트 실행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자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예술위 직원들이 초기에 가장 많이 반발했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심사위원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지만, 심사위원 중에서도 반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2) 참고인 이OO의 진술<sup>49)</sup>

참고인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가) 2014. 7. 2. 자신이 예술위 주요 간부들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된 문서인 ‘문예기금사업 개선 필요사항’(14.6.27/문체부) 문서는 오OO 사무관이 작성하여 자신에게 보낸 것이다.
- (나) 2014.4~9월 사이에 오OO 사무관이 ‘서울에 와서 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자신이나 장OO 부장, 류OO 부장 등 예술진흥본부 간부들이 둘 혹은 셋, 넷이 함께 본 적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모인 것은 아니었고, 공식적인 협의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TF라고 보기는 어렵다.
- (다) 주로 의견을 나눴던 현안은 “전화로 요청받은 것들, 예를 들어 지원 심의 규정 등을 오OO 사무관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오OO 사무관이 서울에서 주로 물어본 것은 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

49) 이OO 1회 진술조서, 9-11쪽. 2018. 1. 24.

지 물어봤습니다. 아마 본인도 예술정책과에서 보고서를 써야하니까 물어봤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라고 하였다.

- (라) 주로 논의하였던 내용은 책임심의위원 제도가 타당한 것인지 등 지원심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것이었다.
- (마) 오OO 사무관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예술위 예술진흥본부 간부들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그렇게 논의된 내용들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서에 있는 ‘개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맞다.
- (바) 위 문서에서 ‘대응전략’ 부분에 대하여도, 고민은 주로 문체부가 했고 예술위 예술진흥본부 간부들은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대답하였다.
- (사) ‘문예기금사업 개선 필요사항’(14.6.27/문체부) 문서에서 ‘2015년 공모사업 관련 사전 준비 필요(정책적 조율 필요)’ 부분은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아) 정부에서 지원 심사 과정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2014.3월 이후에는 알고 있었지만, 문체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심의위원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들을 배제하려고 하였던 것인지 당시에는 정확하게 몰랐다고 하면서, 이는 오OO 사무관이 그런 것을 알려주면서 일을 진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 (3) 참고인 이OO의 진술<sup>50)</sup>

참고인 예술위 사무처장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가) “14.6.27/문체부 작성, ‘문예기금사업 개선 필요사항’ 문서를 본 것 같다.
- (나) 2014.4월 경~9월 사이 오OO 사무관이 예술위 직원(이OO, 장OO, 류OO)들에게 문예진흥기금 심사제도 개편에 관련된 자료나 의견을 전화나 이메일로 구하기도 하고 직접 만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답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서에서 ‘문화예술’분야 ‘세부 대응전략’에 반영된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예술위 직원들에게 들었는지 문체부 직원들과 협의과정에서 들었던 얘기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책임심의위원에 예술위 간부들이 간사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50) 이OO 1회 진술조서, 5-7쪽. 2018. 2. 7.

-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 ② 문체부와 예술위는 심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수시로 얘기를 나누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회의에서 나온 것인지 내부 보고를 받은 것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도 개선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권영빈 위원장에는 자신이나 본부장들이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 ③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서대로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이 진행되긴 했지만 막상 심사 진행 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배제가 뜻대로 되지 않았고,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위 지원배제와 관련된 진행 상황은 자신이 사무처장으로서 각 담당 부서장이나 본부장들에게 보고를 받고, 권영빈 위원장님에게 자신이 총괄 보고를 하였다.
- ④ 2014.9.월경 김OO 예술정책관이 예술위 사무처장과 본부장들을 세종시로 불러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정부가 지원하기 곤란한 단체들에 대한 배제 방침을 설명하는 자리에 자신도 참여하였다고 하면서, “(김OO 예술정책관은) 연극 개구리 이후 곤란한 상태라고 하면서 좀 세계 얘기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 사업들에 대한 배제 방침을 전달 받았습시다. 예술위 쪽에서는 현장 사정을 설명하면서 배제하는 것이 좀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에서는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원회는 너무 (청와대 쪽) 실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문체부는 장관까지 그만둘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로서도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권영빈 위원장에게는 그날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라고 하였다.

#### (4) 참고인 이OO의 진술<sup>51)</sup>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이OO는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가) 2014. 5. 예술정책과장으로 부임한 후 201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문제가 많으니 2015년 공모사업 이전에 심의제도 등의 개편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A 행정관이나 김소영 비서관에게 몇 번 받았다고 하였다.
- (나) 오OO 사무관이 청와대 지시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예술위 직원(이OO 처장, 이OO 본부장 등)들에게 그러한 방침을 설명하였을 것이다.

51) 이OO 1회 진술조서, 3-5쪽. 2018. 2. 1.

- (다) 권영빈 위원장에게 오OO 사무관 대신 예술위 직원들이 전달하였을 것이다.
- (라) 김OO 국장<sup>52)</sup>이 온 뒤로는 권영빈 위원장에게 직접 문체부 방침을 전달했다.
- (바) '14.6.27/문체부 작성, '문예기금사업 개선 필요사항' 문서는 오OO 사무관이 예술위 직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자신에게도 보여주었을 것이다.
- (사) 2014. 4.~9. 사이 오OO 사무관이 예술위 직원(이OO, 장OO, 류OO)들에게 문예진흥기금 심사제도 개편에 관련된 자료나 의견을 전화나 이메일로 구하기도 하고 직접 만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답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결과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서에서 '문화예술'분야 '세부 대응전략'에 반영되는 등 진행 경과에 대하여 자신은 오OO 사무관에게 보고 받았을 것이다.
- (아)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서가 작성된 경위는, "각 담당 과 사무관들이 각 산하기관 직원들과 상의해서 작성한 후 예술정책과 박OO 사무관에게 메일을 보냈고, 박OO 사무관이 취합하여 편집한 후 당시 정책기획관이었던 황OO 국장에게 전달하였고, 황OO 국장이 최종 작성한 것으로 압니다. 이 내용을 송OO 실장이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요약 문서도 같이 만들었다고 하였다.

##### (5) 참고인 권영빈의 진술

참고인 권영빈 예술위원장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 답변서에서, 2014.4-10월 사이에 문체부와 예술위 사무처 사이에서 문예진흥기금 심사제도를 개편 하였던 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와 관련하여, "2014년 한해 동안 초미의 관심사는 문예진흥기금 확보였다. 이미 기금이 바닥 난 상태였고 기금을 마련해 줘야 할 기재부나 문체부가 서로 공을 떠넘기고 있을 때였다. 기재부 직원에서부터 계장, 과장을 만나고 황병기 선생 등 여야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열어 손숙, 안숙선 등 예술인들의 호소를 경청케 했다. 이 자리엔 김종덕 장관도 참석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금 심사제도를 개편했다? 무엇을 개편했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기억에 없다."고 진술하였다.<sup>53)</sup>

52) 2014. 11. 11.~2015. 7. 30. 문체부 예술정책관.

53) 권영빈 사실확인 진술서, 2쪽. 2018. 4. 20.

## 다. 소결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청와대로부터 201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문제가 많았으니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이전에 심의제도 등의 개편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시를 몇 차례 받고, 예술위에 청와대 지시라는 말은 하지 않고 심의 제도 개편 방침을 전달하였다.

문체부 오OO 사무관은 2014.4월 경~9월 사이 예술위 예술진흥본부 이OO 본부장 등 직원들에게 문예진흥기금 심사제도 개편에 관련된 자료나 의견을 전화나 이메일로 구하기도 하고 직접 만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답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한 후, '문화예술분야' 대응방침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예술정책과 박OO 사무관에게 메일을 보냈고, 박OO 사무관은 마찬가지로 각 과에서 전달된 내용들을 취합하여 편집한 후 당시 정책기획관이었던 황OO 정책기획관에게 전달하였고, 황OO 정책기획관이 최종 작성한 문서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서였다. 이 문서의 내용은 건전콘텐츠 활성화 TF에도 보고되었고, 송OO 기획조정실장이 김종덕 장관과 청와대에도 보고하였다.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배제 과정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서에서 '개선', '문화예술' 분야 '세부 대응전략' 등에 적힌 방침에 따라서 대체로 실행되었으나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연극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사업의 경우에서 보듯이 애초에 계획하였던 대로는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5.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 가. 문건 등 자료조사

#### (1)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비판단체 지원 차단책 추진('14.9.26.)

문체부가 2014. 9.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좌성향 단체 지원을 배제하는 방침을 세우고, 2015년 사업 심의시 신규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배제 명분을 마련하고, 문예진흥기금 사업 심사를 담당하는 책임심 의위원들을 보수 인사로 선임한 후 책임심의위원들을 통해 문제 사업들을 제외시킬 계획을 세웠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sup>54)</sup>

#### (2)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14.11.21.)

2014. 11. 21. 개최된 대통령비서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문제작품(작가)을 배제하겠다고 하고 있다.<sup>55)</sup>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사업 관리 강화

- '15년 예술위 정기공모 5개부문(문학, 미술, 공연, 복합, 국제교류) 18개 사업에 1,990건 452억 지원신청 접수('15.1월 신청결과 발표 예정)
- 신청 사업에 대한 단계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작품(작가) 배제
- \* 신청서 특이사항 검토(11월, 문체부)→문제 작품 배제(12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회)→심사결과 확인(12월, 문체부·예술위)→최종 검토 후 의결('15.1월, 예술위 전체회의)

####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사업 관리 강화

- '15년 예술위 정기공모 5개부문(문학, 미술, 공연, 복합, 국제교류) 18개 사업에 1,990건 452억 지원신청 접수('15.1월 신청결과 발표예정)
- ⇒ 신청 사업에 대한 단계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작품(작가) 배제
- \* 신청서 특이사항 검토(11월, 문체부) → 문제 작품 배제(12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회) → 심사결과 확인(12월, 문체부·예술위) → 최종 검토 후 의결(15.1월, 예술위 전체회의)

54) 국정원, '문체부, 문예진흥기금 비판단체 지원 차단책 추진', 1-2쪽. 2014. 9. 26.

55) 2014. 11. 21.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3)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14.12.19.)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 총 신청건수 1,989건 중 특이사항 106건

### 1. 문학분야

종목	특이사항	방안
추 30건 - 시/시조창작가단 20건 - 우수창작가단 10 - 문학평론가단 10	추 10건 - 시/시조창작가단 7건 - 우수창작가단 5 - 문학평론가단 5	시조특기금 -1차창작가단(창작가) 총 20명(시조)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제작 -추진위원회, 평가위원 등 심사위원 배치

### 2. 시각예술분야

종목	특이사항	방안
추 30건 - 공예미술작품전시회 20 - 미술작품 10 - 미술연구 10	추 30건 - 미술작품전시회(창작) - 미술연구 10	인형의 모든 사물에 대해 제작가능을 촉진 (인형전시회) 후원하여 제작 -작업 지원 -작업 지원, 전시/연구를 편지제작 확인 후 출품 지원 예정

### 3. 공연예술분야

종목	특이사항	방안
공연예술분야(공연예술 20건)	1건	심사사 제외

### 4. 융복합·다원예술분야

종목	특이사항	방안
공예미술작품전시회 20 미술작품 10 미술연구 10	미술작품전시회 20 공예미술작품 10 미술연구 10	공예미술작품 전시회 지원 공예미술작품 전시회 지원 공예미술작품 전시회 지원

### 5. 국제교류분야

종목	특이사항	방안
추 30건 - 국제교류사업 20 - 국제교류사업 10	추 30건 - 국제교류사업 20 - 국제교류사업 10	국제교류사업 지원 국제교류사업 지원 국제교류사업 지원

5. 문학분야·다원예술분야

종목	특이사항	방안
추 30건 - 국제교류사업 20 - 국제교류사업 10	추 30건 - 국제교류사업 20 - 국제교류사업 10	국제교류사업 지원 국제교류사업 지원 국제교류사업 지원

문체부 예술정책과 000 사무관이 작성한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문서는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총 신청건수 1,989건 중 특이사항이 106건 있다고 하면서 문학분야, 시각예술분야, 공연예술분야, 국제교류분야, 융복합·다원예술분야 등으로 나누어 특이사항과 그에 대한 방안을 각각 기술하고 있다. 문체부 예

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이 문서를 자신이 작성하여 김OO 예술국장에게 주었고, 김OO 국장은 장관에게 보고한 후 문서 상단 수기 메모 "14.12.19. 8:50 장관보고필"을 하여서 다시 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56)</sup>

(4) 수기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15.1.9.)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이 문서는 김OO 예술국장이 청와대 혹은 국정원으로부터 (유선으로) 받아 적은 것을 자신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57)</sup>

56) 오OO 1회 진술조서, 24쪽. 2018. 2. 7.

57) 오OO 1회 진술조서, 24쪽. 2018. 2. 7.

(5)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15.1.15.)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문서에서는 2015. 1. 15. 현재 다원예술분야에서 프린지페스티벌 등 '특이사항' 11건을 전부 제외할 예정, 연극분야에서 '특이사항' 12건 제외예정, 문학분야에서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배제를 위한 '별도 방안 마련'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15.1.15(월)			
□ 심사 현황			
분야	진행상황	검토	발표시기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심사완료	특이사항 없음	'15.1월말
시각예술	심사완료	심사완료후 1건 발생(인운기)	'15.1월말
소의계승문화순회	심사완료	심사완료후 1건 발생(윤시중)	'15.1월말
다원예술	심사진행중	특이사항 총 11건 전부 제외예정 -프린지페스티벌 등	'15.1월말
연극분야	심사예정(1월3주)	특이사항 총 12건 전부 제외예정	'15.1월말
	공간,국제지원-완료	별도방안 모색 중(총 99건)	
문학분야	창작기금-심사중	-창작기금, 무기명 심사시 일부계의 예상	별도방안 마련
	문예지,행사지원-미경	-심사완료분야 4건추가 발생	
□ 특이사항 현황			
○ 1차: 연극 8건			
성명	단체	검토사항	
양정용 (연극)	베세토연극계	○B명단에 없으나 K명단에 존재 ○BH행사 참석 등 양호판단, 제외조치(B와 협의완료)	
윤시중 (연극)	하땅새	○B명단에 없으나 K명단에 존재 ○심사완료(소의계승)된 분야 1건 발생, 심사권(연극) 1건 해당 ○2012문제인후보지지 활동 등으로 심사제외조치 예정	
○ 2차 : 문학, 다원, 시각예술분야 총 29명			
성명	단체	검토사항	
김주영 (문학)	장날 (복지재단이사장)	○B명단에 없으나 K명단에 존재 ○문학공간지원 선정완료된 상황 ○BH행사 참석 등 양호판단, 제외조치(B와 협의완료) - 2003노무현대통령당선자 취임사 준비위원회 위원 등	
민운기 (시각예술)	스페이스팀	○B명단에 없으나 K명단에 존재 ○시각예술 공간지원 선정완료된 상황 ○2012아권연대 공동선대위, 시민사회 멘토단 등 ○B 판단유보, 제외판단 필요	
김언호 (문학)	파주북소리조직위	○B명단에 없으나 K명단에 존재 ○문학국제행사지원 선정완료된 상태 ○노무현대위, 시국선언 등 ○B, 부정적 ·파주북소리축제:출판인책산업과 후원명절사를 등 행정지원중	
김준식 한강 (문학)	개인 신청	○문학국제교류지원사업에 선정완료된 상태 ○문학분야 전체적으로 별도 조치방안 강구 필요 -사업중단, 상반기 연기방안 등	

(6)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15.1.27.)

문체부 예술정책과 000 사무관이 작성한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 보고' 문서에서는 2015. 1. 27. 현재 음악분야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에서 '문제사업' 1건, 문학분야에서 아르코문학창작기금 76건 등 4개 사업, 연극분야에서 비평연구활성화 지원사업 1건, 민간국제교류지원사업 10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다.

15. 1. 27(화) 17:40 장안보고됨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

'15.1.27(화)

지원심의 현황

분야	지원심의 현황(문제사업 건수)
심 의 선 행 중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사업</li> <li>- 문학창작기금지원사업 (76건) 문제지원사업 (11건)</li> <li>- 문학행사및업무지원 (6건) 민간국제교류지원(5건)</li> </ul>
	연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평연구활성화지원 (1건) 민간국제교류지원(연극) (10건)</li> </ul>
심 의 관 료	시각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사업 : 시각예술전시및발표공간운영지원 (1건)</li> </ul>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사업 : 공연예술행사지원음악분야 (1건)</li> </ul>
	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사업 없음</li> </ul>
	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사업 없음</li> </ul>
다원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사업 없음</li> </ul>	

향후계획

- 1차 확정외결 후 발표
  - : '15.1.30(금) 위원회 회의에서 확정 및 부분발표예정('15.2.2예정)
  - 1일: 무용, 전통, 다원, 시각예술, 음악분야(심의완료된 총 5개 분야) 확정
  - 2일: 무용, 전통, 다원분야,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사업 제외), 음악분야(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제외)

참고사항

- (시각예술)시각예술전시및발표공간운영지원 검토사업 1건 (스페이스팀)
  - 심의 후 재검토 요청이 있으나, 위원(2인)의 부정의견 채택
  - 평가결과: '14년 B등급 (36개중 8위)
- (음악)공연예술행사지원 검토사업 1건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 심의 후 재검토 요청이 있으나, 위원(1인)의 부정의견 채택
  - 평가결과: '14년 B등급(14년 A 3단계, B 8단계(상위 25% 내)/전체 44 단계)
  - 윤이상 관련 '15년 지원신청 2건 중 1건 탈락하고, 중 사업도 미전연도 대비 50% 감축 결정 (1억원 수준→5천만원)
  - 통영지역 이군현 위원(새누리당) 권구 류심 사업으로 반드시 선정 요구  
<이군현의원 관심사업>
- V① 통영국제음악제(통영국제음악재단): '15년 문예기금지원 미신청
- ②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통영국제음악재단): 50%감축 선정
- V③ 국제윤이상작곡상(윤이상재단): 문예기금지원, 탈락
- 문학, 연극분야: 2월중 해결방안 강구 예정

(7)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15.3.9.)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 문서에서 2015. 3. 9. 아르코문학창작기금에서 '문제사업' 16건, 연극에서 12건 등이 확인된다.

'15. 3. 17 14:50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

'15.3.9(월)

□ 심의보류사업 현황

분야	지원심의 현황(문제사업 건수)
문학(9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창작기금지원 (71건) → 18건으로 감소</li> <li>○ 우수문예지원 (11건)</li> <li>○ 문학행사및연구지원 (8건)</li> <li>○ 민간국제교류지원(5건)</li> </ul>
연극(1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평연구활성화지원 (1건) 민간국제교류지원(연극) (11건)</li> </ul>

※ 1차 확정피결 후 발표사업('15.1.30 의결 및 15.2.4 발표)  
- 무용, 전통, 다원, 시각예술, 음악분야(심의완료된 총 3개 분야) 확정

□ 문학분야 : 총 4건 ~~제정~~ **결정**

- 전체 총 100건중 현재 59건 폐쇄완료, 41건 진행 중
- 문학창작기금: 개인신청, 총 99명 지원 예정
  - 심사진행상황
  - 1차 심사: 958건중 198건, 20% 선정완료('14.2월)
  - 2차 심사: 198건중 120여건, 120% 선정 예정
  - 3차 심사: 99건, 100% 선정 예정
  - 특이사항: 자체발굴 (1차)75건 →(2차)16건으로 감소
  - 2차 심사대상자 198건에 대한 확인결과 추진 필요
- 우수문예지원간접지원사업
  - 특이사항 11건 중 2건 선정가능성 높음
  - '실천문학', '문학잡지: 2010년 통사업이 시작된 이래 매년 지원(평균 1,700만원내외)
  - 동 2건에 대해 인위적으로 배제하거나, 사업방식 변경 추진 시, (세종모씨 사업에서 촉발된) 문학잡지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의심에 대한 촉진이 되어 문학계의 조직적인 저항의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예술위원회 입장)
  - 국회 드루음 의원실에서는 세종도서 선정관련 합의를 담은 문학 표현의 자유 세미나('14.2.23(월))를 개최하고 1차 합의 피서 표현

(8)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은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 오OO 사무관 등은 예술위로부터 공모신청자 전체 목록을 받아 이를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김OO은 이를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이를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후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의 검토를 받은 배제 대상자 명단을 김OO을 통하여 문체부 김OO 국장, 이OO 과장, 오OO 사무관 등에게 개별 사업별로 전화로 불러주거

나, 2주마다 비서관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하달하였다. 오○○ 등은 위와 같이 공모신청 접수 후 공모신청자 목록을 청와대로 보내고 배제 대상자 명단을 받아 예술위에 하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배제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정리한 문예기금 등 공모사업의 신청현황,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김종덕 장관을 거쳐 교문수석실에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에는 각 사업별 신청현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의 내용(‘문재인지지’, ‘노무현지지’, ‘야권연대 공동선대위’ 등), 배제 사유 해당자를 선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심사 시 제외, 별도 사유의 제시, 사업 중단·연기), 배제가 부적절 또는 곤란하여 청와대의 양해가 필요한 사안 및 이유(청와대 행사 참석 등, 검열논란 이슈화, 예술계의 반발 등) 등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다.<sup>58)</sup>

#### (9) 2015/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관련 정부의 외압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 [2018.4.현재]

예술위 ‘블랙리스트 자체조사 TF’가 제출한 ‘2015/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관련 정부의 외압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2018.4.현재]’는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 이후, 2015년 정기공모 사업이 본격 진행된 2014년 12월경부터, 문체부가 지원심의 외압(지원배제 대상자의 지원 제외)이 시작되었으며 구체적인 전달방법과 예술위의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음.
- **(예술위)**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지원심의 일정, 지원신청 접수 내역, 심의위원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이메일로 전달)
- **(예술위)** 지원심의위원의 선임 현황과 차기 선임 일정 관련 내용 전달(당시 임기제 심의위원제도(책임 심의위원제도)가 운영 중이어서 2015년 정기공모 사업을 심의할 심의위원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고(임기 : 2014.3월~2015.2월) 다만, 심의가 지연되더라도 2015.2월 이전에 심의를 시작한 사업은 해당 심의위원회 즉, 2014년도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맡는다는 점을 전달
- **(문체부)** 이후 전달된 지원신청 접수 내역 중 문체부(예술정책과)에서 ‘지원이 곤란한 배제 대상’ 명단을 유선전화 또는 직접 만나 옮겨 적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보
- 문체부의 요구 전달처(창구)는 초기엔 예술정책과 외에도 공연전통예술과 등과 같이 여러 부서로 분산된 경우도 있었으나, 2015년도 후반부터 점차 예술정책과로 일원화되었다가 2016년도에는 다시 여러 소관 부서에서 직접 의견을 보내는 경우도 일부 발생함.

58)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80-81쪽, 2017. 7. 27.

## 나. 참고인 등 대인 조사

### (1)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59)</sup>

- (가) 자신이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최초로 받은 것은 2014. 4-5월 경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으로부터 청와대에서 내려왔다는 리스트를 받은 것이었다.
- (나) 이 리스트는 한글 파일 문서였는데 약 100명 가량 되었고, 분야별로 나뉘져 있지는 않았지만 문학과 연극 분야가 대부분이었고, 오OO 사무관은 파일을 복사하여 주지 않고 필사하도록 하면서 ‘청와대에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꼭 체크하라고 한다’고 하였다.
- (다) 2014. 9월 경 김OO 예술정책관이 예술국 직원들을 모아놓고 차기 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지원 배제 방침을 설명하고 리스트를 잘 적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라) 그 무렵 김OO 예술정책관이 지원해서는 안 되는 단체를 문체부가 지원했다는 이유로 청와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들었다.
- (마) 그때까지만 해도 예술국 사무관들은 리스트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2014. 9월 김OO 예술정책관이 예술국 사무관급 이상 직원들 (약 20명)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주의를 주면서 앞으로는 리스트가 내려오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 김OO 예술정책관은 그 뒤로 예술위 사무처장, 본부장들을 따로 불러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정부의 문제단체 배제 방침을 설명했다고 오OO 사무관으로부터 들었다.
- (사) 자신은 예술위에서 신규사업들(공연연습장 조성, 대관지원사업)이나 순회사업(방방곡곡,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을 담당하였고, 그밖에 국립극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의전당을 담당하였다.
- (아) 예술의전당의 경우 예술의전당 기획전략부(윤OO 부장, 송OO 과장)을 통해서 소통하였는데, 2015년 초반 예술의전당이나 국립극장에서도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59) 김OO 1회 진술조서, 3-6쪽. 2018. 3. 8.

이 공연을 하는지 체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다.

(자) 2015년 여름쯤 블랙리스트 문제가 심각하였는데 9,473명 명단이 내려오고 나서 자신이 예술의전당 경영평가 자리에서 예술의전당 본부장들(U, 박OO 본부장 등)에게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청와대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한 후 앞으로 조심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 (2) 참고인 장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창작지원부장 장OO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문예진흥기금 심사과정에서, 계속되는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였던 과정과 관련하여, “(권영빈, 박명진 두 위원장에게) 문체부로부터 내려온 배제 지시를 이행하였던 전체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OO 본부장에게는 당연히 보고 했을 것입니다. 이OO, 이OO 사무처장에게는 대략의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권영빈 위원장에게는 전체 상황을 직접 보고했습니다. 이OO 본부장도 아마 별도로 보고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박명진 위원장이 부임하였을 때는 연극 창작산실과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두 건만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 두 사업의 경우는 박명진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sup>60)</sup>

## (3)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61)</sup>

(가) 2014년 9월 경 문체부 김OO 예술정책관이 예술위 이OO 사무처장과 본부장들(이OO 예술진흥본부장, 이OO 경영전략본부장, 양OO 문화나눔본부장)을 세종시로 문체부 본부로 불러 2015년 예술위 정기공모사업에서 정부가 지원하기 곤란한 예술인(단체)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였다.

(나) 장OO 창작지원부장이 담당하였던 문예진흥기금 공모 사업과 관련하여서 있었던 지원배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승인하였다.

(다) 계속되는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OO 사무처장, 이OO 사무처장, 권영빈, 박명진 예술위원장에게 어떻게 보고하였는지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원신청자 목록을 이메일로 문체부 오OO 사무관에게 송부하면 얼마간 시간이

60) 장OO 1회 진술조서, 7-8쪽. 2018. 1. 11.

61) 이OO 1회 진술조서, 12-13쪽. 2018. 1. 24.

흐르고 난 뒤에 배제 명단이 유선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사무처장, 위원장 등에게 보고한 후 배제를 실행한 후 그 결과도 (이OO) 사무처장, (권영빈) 위원장, 오OO 사무관 등에게 보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4)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이OO 사무처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62)</sup>

- (가) 2014. 9월 경 김OO 정책관이 예술위 사무처장과 본부장들을 세종시로 불러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정부가 지원하기 곤란한 단체들에 대한 배제 방침을 설명하는 자리에 진술인도 참여하였다고 하면서, 김OO 예술정책관은 연극 <개구리> 이후 곤란한 상태라고 하면서 좀 세계 얘기 하면서, 전반적으로 문체 사업들에 대한 배제 방침을 전달하였고, 예술위 쪽에서는 현장 사정을 설명하면서 배제하는 것이 좀 힘들다고 얘기를 했지만, 문체부에서는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원회는 너무 (청와대 쪽) 실정을 모른다.’고 하여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이날 있었던 문체부의 정부 비판 단체 지원 배제 방침에 대하여는 권영빈 위원장에게 그날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다.
- (나)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위 지원배제와 관련된 상황은 자신이 사무처장으로서 각 담당 부서장이나 본부장들에게 보고를 받았고, 권영빈 위원장에게도 자신이 총괄 보고를 하였다.

#### (5) 참고인 권영빈의 진술

참고인 권영빈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 답변서에서 “리스트에 대해 처음 들은 게 창작기금지원 사업 관련 보고를 받은 후부터 일게다. 다수의 지원 확정자를 탈락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명단 대부분이 세월호 진상조사 서명자들이라고 했다. 명단엔 얼토당토 않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당시로선 세월호 사건에 누구나 울분을 토할 때인데 서명했다고 제외할 수 있는가. 또 이미 심의위원들이 확정된 사안을 돌이킬 수 없다는 이유로 문체부 관련자들에게 소상히 얘기하고 그냥 밀고 가라고 지시했다. 또 초기엔 명단 내용도 영성하고 조잡해서 일과성에 그칠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뒤이어 창작산실 우수작품 공연 확정자를 배제하라는 지시나 창작과비평, 작가회의, 문학과지성 등 계간지

62) 이OO 1회 진술조서, 6-7쪽. 2018. 2. 7.

지원을 중단하라는 구체적 지시가 내려오면서 사태의 위중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창작기금이나 창작산실 우수작품은 이미 확정 통보된 것이니 만큼 예술위로선 대책이 나올 게 없었다. 해서 된다, 안된다로 문체부와 많은 줄다리기가 있었기에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고 내가 퇴임하기 전까지 이 사안은 미제로 남아있었다. 계간지 지원중단 자체는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후폭풍이 매우 크다고 보고 문체부 김종덕 장관을 면담해 그런 지시를 철회하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내가 퇴임하던 날에도 인사차 김 장관을 만나 계간지 지원 중단의 철회를 거듭 당부했다. 물론 장관은 아무런 확답을 주진 않았지만 계간지 지원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sup>63)</sup>

#### (6) 참고인 오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sup>64)</sup>

- (가) 2014년 9월경 김OO 예술정책과장이 예술위 사무처장과 본부장들을 세종시로 불러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정부가 지원하기 곤란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 배제 방침을 설명하는 자리에 자신도 함께 있었다.
- (나) 김OO 예술정책관은 문체부 예술국 사무관급 이상을 모아놓고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문체부 직원들이 문제여서 문제 단체들이 지원 받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면서 잘 하자는 취지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다.
- (다)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배제 과정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등 문서에 적힌 방침에 따라서 대체로 실행되었지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연극 창작산실 우수작품 제작지원사업의 경우처럼 (예술위 간부들이나 예술위원들도 막상 자신들이 책임지고 블랙리스트를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심사위원 중에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는 등) 애초 계획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생겼다.
- (라) 2015. 1. 15, 1. 27, 3. 12. 자 ‘2015년 문예진흥 공모사업 추진 상황’ 문서들은 자신이 작성하여 김OO 예술국장에게 전달하고, 김OO 국장이 장관에게 보고한 날짜를 메모하여서 자신에게 다시 전달한 것이다.<sup>65)</sup>

63) 권영빈 사실확인 답변서, 3-4쪽. 2018. 4. 20.

64) 오OO 1회 진술조서, 6-7쪽. 2018. 2. 7.

## (7)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이OO는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65)</sup>

(가) 문체부 작성,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수기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 ’15.1.15자, ’15.1.27.자, ’15.3.8.자,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 현황’ 문서들과 관련하여,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문서 상단 수기 메모 “14.12.19. 8:50 장관보고필”은, 김OO 예술국장이 장관 보고한 후 오OO 사무관에게 전달한 문서이고, “15.1.27(화) 17:40 장관보고필”도 김OO 국장 메모로 장관에게 보고되었다는 의미로 보이고, “15.3.12 14:50”도 김OO 국장 메모로 장관에게 보고되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나) ‘리스트-’16.2.1.현재’ 등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 등 블랙리스트가 내려오고 실행된 후 보고되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지시는 청와대 김OO 선임행정관이 예술국 국장, 과장, 사무관, 주무관 중 1인에게 그때그때 보내어 주면 배제 지시를 받은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배제 지시가 내려왔다고 공유하였습니다. 2014년 말까지는 김OO 국장이 김OO 행정관에게 배제 리스트를 받아서 장르 별 담당 과 과장이나 사무관에게 전달했습니다.”, “2014년 하반기 공모사업 신청이 끝난 뒤 오OO 사무관이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OO 국장의 요청으로 신청자 목록을 보냈습니다. 김OO 행정관은 구두로 김OO 국장에게 배제 명단을 전달하고 김OO 국장은 오OO 사무관에게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김OO 국장이 다른 과 사무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가령 공연과에서 국고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예술위 담당인 오OO 사무관을 거칠 필요 없이 국장이 곧바로 해당 담당과 사무관에게 보낸 것으로 압니다.”<sup>67)</sup>, “오OO (예술정책과 사무관)으로 창구가 단일화된 것은 처음에는 국정원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술국, 문정국, 문화기반국, 미디어국, 관광국, 체육국 등 각 해당 과에서 사무관이나 주무관들이 국정원에 검토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국정원이나 청와대 쪽에서 국정원 관련 창구는 오OO 사무관으로 단일화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

65) 오OO 1회 진술조서, 13쪽. 2018. 2. 7.

66) 이OO 1회 진술조서, 20-22쪽. 2018. 2. 1.

67) 이에 대해 김OO 국장은 본인은 2014.11.11. 부임했으며 처음으로 받은 것이 2015.1.9.임. 오OO 외에는 다른과 사무관에게 전달한 적 없음. ‘본인은 문서로 된 보고서 이외에 청와대의 배제지시를 오OO 사무관 혹은 이OO 과장 등으로부터 개별 건에 대하여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이의제기함(18. 11. 5.).

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진행할 사안이 아닌데 너무 많은 문체부 관계자가 국정원에 연락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연락은 오OO 사무관으로 단일화되었지만 여전히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각 해당 과에서 담당 사무관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가령 김OO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공연 담당 사무관에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 국장이 전화를 안 받으면 과장이나 사무관에게 전화를 하고, 사무관이 안 받으면 주무관에게도 전화가 갑니다. 처음에는 김OO 국장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나중에는 실무를 잘 알고 있는 담당 사무관과 김OO 행정관과 직접 통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8)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국장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1월 청와대 김OO 선임행정관으로부터 받은 배제 리스트를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에게 전달하였고, 예술위 이OO 예술진흥본부장 등이 사유를 들며 배제 하기 어렵다고 하는 명단에 대하여는 자신이 장·차관 보고후 청와대 교문수석실로 보내 교문수석실과 장관에게 비서실장에게 직접 양해를 얻도록 해서 100명 가량 양해를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68)</sup>

#### (9)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청와대 교문수석실 선임행정관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 오OO 사무관에게 받은 공모 신청자 목록을 정무수석실에 보낸 후, 정무수석실에서 보통 봉투에 넣어서 다시 보내준 신청작 목록에는 ‘마크’가 표시되어 있거나 유선으로 배제 명단을 불러주었고, 문체부 예술국에서 양해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김소영 문체비서관이 (정무수석실에) 들고가서 양해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69)</sup>

한편 김OO은 또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sup>70)</sup>

68) 김OO 진술조서, 10-11쪽. 2018. 2. 9.

69) 김OO 진술조서, 39-42쪽. 2018. 1. 18.

70) 김OO 진술서, 2017. 1. 19. 재판증거기록.

#### 다. 문화예술위 지원 사업관련

(전략)

문체부의 각 실국장은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문체비서관에게 소관분야 업무진행 등을 보고하는데, '14.11월 경 문화예술위가 2015년 사업을 공모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제가 문체부 담당자에게 신청 자료들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술위 사업들은 분야별로 신청날짜가 달라 분야별로 자료가 온 걸로 기억하고 있으며, 자료가 오면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면 김 비서관은 국민소통비서관실로 보내 의견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왜 국민소통비서관실로 보내는지 김 비서관이 설명한 바는 없으나, 이미 청와대 안에서는 이렇게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의견을 만나 보다, 그림을 잡아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심사과정을 통해 거르나 보다하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 비서관도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을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고, 저 또한 별로 탐탁치 않은 업무였기에 국민소통비서관실로 보내 처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문체부에서 온 자료는 통상 봉해서 문체비서관실 여직원을 통해 국민소통비서관(당시 정관주) 앞으로 보냈고 그러면 며칠 후 김소영 비서관 앞으로 통상 자료에 ○, ×로 표기한 형식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사업명, 이름, 소속단체 등을 표기한 밀봉된 서면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김 비서관이 그 자료를 저에게 주면 제가 문체부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16.12.31 저의 당초 진술에는 제가 주로 오OO 서기관에게 전화로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의견을 알려줬다고 하였으나, 기억을 되살려보니 김OO 국장 재직시(-'15.7월 경)에는 2주에 한 번 있는 회의 때 오면 자료를 보고 알려주거나 전화를 통해 김 국장에게 주로 알려줬고 김 국장이 바뀐 후에는 오 서기관을 통해 알려준 것으로 기억됩니다. 아마 제가 자료를 오 서기관에게 받아 보니 검토의견도 오 서기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검토의견을 문체부에 알려주면 이를 문체부에서 예술위 직원에게 설명하고, 예술위 직원들이 심의위원들에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만약 문체부나 예술위에서 도저히 안된다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를 하면 김 비서관이 국민소통비서관과 직접 연락하여 해결해주었습니다. 만약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문체부 장차관이 국민소통비서관이나 비서실장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될 경우, 김소영 비서관이 먼저 알게 되면 저에게 알려줬고, 제가 문체부 직원을 통해 먼저 알게 되면 김 비서관에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9,500여명 명단과 관련하여, 저는 예술위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온 개별 사업에 대한 명단을 문체부에 알려주었으나, 차츰 건수가 많아지면서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의견을 알려올 때 비교란에 사유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제가 오 서기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 사유에는 문제인지, 세월호 비판 등등이 있었는데 그 카테고리를 다 합하면 약 9,500여명이 된다고 하나, 국민소통비서관실 명단을 받아서 전달하는 제 입장에서는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 (10) 참고인 김소영의 진술조서

청와대 교문수석실 문체비서관 김소영<sup>71)</sup>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sup>72)</sup>

- (가) 2014년 상반기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에게 문체부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명단이 있는 문건[리스트]을 받고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후 사람 이름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여 조현재 문체부 1차관에게 전달하였다.
- (나) 조현재 1차관이 “이 명단이 교문수석실에서 만든 것이냐”라고 물었고, “교문수석실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 (다) 그 이후 문체부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건전콘텐츠 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지원사업 같은 것도 개선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건전 콘텐츠를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다.
- (라) 문체부에 전달한 명단 자체에는 (배제)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조현재 차관에게 설명하면서 세월호 관련 비판적 의견,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 시국선언 같은 것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문체부가 지원하는 것에 청와대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나중에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이 전화를 하여서 (리스트가) 문체부 국장들에게 돌아다니는 말을 듣고 조현재 차관에게 전화를 했고, 조현재 차관이 (리스트를) 국장들에게 줬다고 하여서, ‘차관님께 참고를 하라고 드렸는데, 그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말하였다.
- (마) 조현재 차관에게 신동철 비서관이 주었던 문건을 전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신동철 비서관 문건 이후 문체부에서 개선 방안 보고서를 올려 보내줬고, 그걸 문체비서관 내부에서 검토를 거치면서 ‘문예위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서 같이 논의하고 모철민 교문수석에게도 보고하였다. 문체부 보고서를 정리하여 요약한 내용을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보고하였고, 교문수석이 보완하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문체부에 요청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교문수석의 검토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던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심사방법을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120%를 선발하여 20%를 빼는 방법 등 논의된 내용이였다.

71) 2013. 11. 22.~2016. 9. 2. 청와대 교문수석실 문체비서관으로 재직.

72) 피의자신문조서(김소영), 12-44쪽. 재판증거기록. 2016. 12. 26.

- (아) 배제 대상자 106건이 언급되어 있는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같은 문서들이 문체부에서 장관 보고 후 청와대 문체비서관실로 왔는데, 서울연극협회 박장렬, 베세토연극제 양정웅을 검토하였던 기억이 나고, 베세토연극제의 경우 문체부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반발이 예상되어 지원을 해야한다고 하여서 정관주(국민소통)비서관과 협의하여 결국 지원하였다.
- (자) 사실상 지원을 해줄지 배제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실에서 다 정하는 것이고, 2014년 상반기에 최초로 문체부로 내려간 명단이 시작이 되어서, 그 명단에서 점차 정무수석실에서 검토과정을 거쳐 배제대상자들이 누적되어 추가된 것 같고, 문체부에서 문예기금 등을 운영하면서 그 ‘기준’에 맞추어 정하였다.
- (차) 문체부에서 지원사업 단위로 지원 예비 명단을 만들어온 목록을 가지고 소통비서관실에서 문체부에서 올린 예비 명단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해주는 구조였다.
- (카)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시스템은 교문수석에게 보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통상 매일 매일 교문수석과 회의를 하고, 교문수석이 수석비서관회의에 다녀오면 전달회의를 하였다.

### (11) 우OO의 진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sup>73)</sup> 행정관 우OO은 2016. 12. 26 특검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74)</sup>

- (가) 보좌진 출신 중 그동안 ‘우리 쪽’을 지지했던 예술인분들은 쉽게 말해서 손가락 빨고 있고, 왜 반대쪽에는 지원이 물리냐는 식의 피해의식이 전반적으로 지배되어 있었다.
- (나) 청와대에 근무하기 시작(2014. 8.)하면서도 문예계 중 보수인사를 만나면 지원이 진보 쪽에 치중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인식이었다고 분위기를 느꼈다.
- (다) 소통비서관실에는 공통문서함에 인물별 성향 등을 정리한 자료가 있었는데, A 스위트에는 진보성향, B 스위트에는 보수성향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성명, 단체명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 (라) 정관주 정무비서관이 나에게 문예계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엑셀 형태로 준 적이

73) 2014. 8.~2016. 3.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비서관 행정관.

74) 우OO 진술조서, 6-12쪽. 2016. 12. 27. 재판증거기록.

- 있다. 그래서 내가 경찰 정보보고에 나오는 단체나 인물, 그리고 시위 참석, 시국 선언, 문재인 지지선언, 야권 지지선언 같은 것을 한 인물을 뽑아서 올린 것이다. 갈등이 많았지만 정관주 비서관이 요청하여서 그런 작업을 해서 준 적이 있다.
- (마) 경찰보고의 경우 비서관에게도 전달이 되고 비서관 주재 내부회의에서 자주 전파가 되기 때문에 보지만, 국정원 보고서는 수석급에게만 전달이 되었다.
- (바) 문체비서관실에서 접수현황이 엑셀표로 정리되어서 오는데, 문체비서관실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배제대상을 표시해서 오면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 경찰보고나 평소 알고 있던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하여 해당 인물이나 단체를 파악하여 배제 대상자를 파악하였다. 그것을 심의에 적용할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다.
- (사) 문예위 심사는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정관주 비서관은 2014년 및 2015년 모두 R에게 (배제 대상자 선별) 작업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내가 한 것이 맞을 것이다. 2015년 기억은 명확히 나고, 2014년에는 비슷한 기준으로 하였을 것인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시키려고 하고, 그러다보니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일을 미루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하게 된 것뿐이다.
- (아) 교문수석실에서 받은 명단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경찰 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나왔다. 검색을 하여서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두고, 정부비판적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한 사람으로 확인되면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한편 우OO 행정관은 2017. 1. 6. 2차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75)</sup>
- (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정관주 비서관이 수시로 지원사업명, 지원자 이름, 단체명 등이 기재된 문서를 가져왔고, 그 문서에는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명단과 없는 명단이 있었다. 정관주 비서관은 나에게 '명단 중에 음영으로 된 부분은 교문수석실 문체비서관 쪽에서 한 번 거른 것인데, 음영 표시가 안 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국선언이나, 문재인 지지선언, 민노당 지지선언, 통진당 지지선언 등을 점검해 보라고 하였다.
- (나) 해당 문구를 이름과 함께 (검색어로) 넣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 (다) 치안비서관으로부터 매일 오는 정보보고서를 활용하여, 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75) 우OO 2회 진술조서, 2-10쪽. 2017. 1. 6. 재판증거기록.

을 토대로 배제할 사람들을 카테고리화 하는데 사용하였다.

- (라) 문체부에서는 각종 지지선언으로 블랙리스트로 거명되는 사람들 중에 일부에 대하여 문예진흥기금이 지원된 사례도 여럿 있다고 사례를 들기도 하지만, 블랙리스트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지원을 배제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별을 해서 거르지 않았고, 그중에서 일부는 실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 (마) 배제 대상자에 대한 선별이 끝나면 정관주 비서관이 검토한 다음 그대로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밀봉하여 가져다주라고 하기도 하였고, 정관주 비서관이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빼라고 하는 등 조정을 하라고 하면 내가 다시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후 문체비서관실에 가져다 주었다.
- (바) 문서를 보낼 때는 봉투에 밀봉해서 내가 직접 가기도 했고, 여직원을 시켜서 보내기도 했는데, 항상 김소영 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책상에 두고왔다. 내가 행정관으로 근무한 초기에는 정관주 비서관이 직접 문체비서관 쪽에 전달하기도 했다.
- (사) 이런 기준으로 작성한 문건이 문체부로 내려가 지원사업 배제 명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짐작했다. 사업명이 주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이었고, 정부에 반대되는 선언 등을 한 사람들을 주로 표시하여 정관주 비서관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
- (아)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업무는 개별 비서관 산하의 업무가 아니라 복수의 비서실이 관여하는 것이며, 업무 성격상 비서관 선에서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비서실장이 직접 양쪽 비서관에게 지시를 하였거나, 비서실장이 정무수석에게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런 업무 흐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타 수석실 업무를 가져와서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을 비서관 혼자서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청와대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12) 오OO의 진술<sup>76)</sup>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소통비서관실 오OO 행정관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가) 2014. 10.~11. 경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이 나에게 반국가단체, 반정부인사들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활개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문체부비서관실에서 명단이 넘어오면 검색을 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을 코멘트를 해줘야 하지

76) 오OO 진술서. 2017. 1. 12. 2013. 3.~2016. 3. 27. 정무수석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2016. 3. 28.~ 국민소통비서관.

않겠느냐, 그 일을 맡아달라고 하여서 거절하였다.

(나) 그런데 2014. 말 내지 2015. 1월 초 우OO 행정관이 나에게 문체비서관실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코멘트를 달아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괴로워 했고, 사직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여서 정관주 비서관이 나에게 지시하였던 일을 우OO 행정관에게 맡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오OO 행정관은 2017. 1. 24. 진술조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77)</sup>

(가) 2014. 6. 경 신동철 비서관이 정부비서관으로 가자마자 박OO 행정관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들었다. 박OO 행정관이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의 지시로 문체비서관실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정부를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해 검색을 하고 코멘트를 달아 문체비서관실로 넘기는 일을 하였는데, 신동철 비서관이 국민소통비서관에서 정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도 김소영 문체비서관이 신동철 비서관을 찾아와 명단 문제를 상의하려 하였고, 신동철 비서관이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당신들 일을 왜 자꾸 우리에게 가져와 결부시키려고 하느냐고 한 적이 있다고 정부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긴 박OO 행정관이 나에게 2016. 6. 경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 다. 소결

이상의 문서와 진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은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정부 비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2014. 9. 경 문체부 예술국 사무관급 이상 직원들을 모아놓고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문제 단체 지원 차단 방침을 설명한 후 예술위 사무처장 및 본부장들을 세종시 문체부 사무실로 별도로 불러 위 지원 배제 방침을 설명하였다.

예술위 사무처장 및 본부장들은 예술위로 돌아와 문체부의 방침을 권영빈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서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일정, 지원신청 접수 내역, 심의 위원 명단 등을 문체부로 송부하였다. 문체부는 예술위로부터 송부받은 목록을 청와대 교문수석실로 송부하였다.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선임행정관은 소통비서관실로부터 검토를 받은 배제 명단

77) 오OO 진술조서, 8-9쪽. 2017. 1. 24. 재판증거기록.



## □ 개요

-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주재로 예술위원회 기관운영과 전체 사업 및 주요 행사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현안 점검회의 개최
- 운영 내용
  - 시기: 매월 격주(1.3주) 목요일 15:00~17:00  
→ 매주 개최 예정, 요일, 시간은 별도 협의해서 결정
  - 장소: 세종시 문체부 예술정책관 회의실
  - 참석자:
    -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주재, 각과 관련 담당 사무관
    - (예술위) 3본부장, 기획예산부장, 현안 관련 부서장 등
    - \* 본부장이나 부서장 참석 불가피 시 선임부서장, 선임직원 대참

## □ 1차 회의 개최

- 일시: 4.21(화) 15:00~17:00
- 참석자 : 3본부장, 기획예산부장, 감사부장, 문화예술후원센터장, 창작지원부장, 예술인력개발원장(OOO 전문위원 대참)
- 논의 사항
  - 문예기금 공모사업 추진 현황
  - 문예기금 미정산사업 건 조치 진행상황
  - 모금미납금 관련 문체부 과태료 불납처리 조치
  - 기금 재원확충 추진 현황 및 실행 방안
  - 기타

한편 이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문예기금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는 ‘특이사항’으로 연극 창작산실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사업 3건’ 등과 관련하여 문체부(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와 협의진행중이라거나,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제 현안’이라고 하고 있는 등 블랙리스트 현안에 대하여도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구들이 확인된다.

##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 (1) 참고인 강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기획예산부장 강OO는 위 현안점검 TF회의와 관련하여, 자신도 참석하였는데 처음에는 이OO 예술정책과장이 주재하였고, (2015. 12월 예술정책과장이 되었던) 김OO 과장도 회의를 주재하였고, 회의 참석자는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오OO 사무관, (필요시) 각과 사무관, 예술위 본부장들, 각 지원사업의 담당 부서장들이었고, 자신은 기획예산부장으로 있을 때는 매번 참석하였고 문학지원부장으로 옮기고 나서는 참석하지 않았고, 현안점검 회의는 명목상으로는 공모사업들의 현황들을 파악하는 것이었지만 주된 목적은 블랙리스트 실행 여부를 다루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현안 점검 회의 때마다 앞으로 진행될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 문건을 항상 첨부하였는데 자신이 관련 부서들로부터 제출받은 회의자료를 총괄하여 만들었고, 자신이 회의의 간사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78)</sup>

### (2)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이OO 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4월 21일부터 자신이 주재하여 예술위 사업현안점검을 위한 회의가 세종시 문체부 본부에서 매주 1회 가량 정기적으로 열렸고, 블랙리스트 문제 때문에만 만든 회의는 아니지만, 공모사업 진행 등도 점검했기에 블랙리스트 문제와 무관하지는 않았고, 이 회의는 처음에는 정기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점차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서 부정기적으로 바뀌었고, 공모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였고, 기관 별 업무 중복이나 문화예술재원 마련 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79)</sup>

### (3)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이OO 예술위 사무처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와 관련하여, “2015.4월 경 세종시 문체부 본부에서 이OO 예술정책과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OO 과장이 문예진흥기금 추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78) 강OO 1회 진술조서, 6-7쪽. 2018. 1. 25.

79) 이OO 1회 진술조서, 16-17쪽. 2018. 2. 1.

현안 점검을 위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세종시 문체부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현안점검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술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느꼈습니다. 나주에 있는 예술위 본부장, 현안 관련 부서장들을 매주 세종시까지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균기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예술위 봉고차에 7~8명의 예술위 간부들이 같이 타고 3시간 가량 걸려서 세종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문체부에 도착하면 문체부 관련 각과 사무관들이 나와서 각 사업별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다녀오면 하루가 다 지나 있었고, 예술위 직원들은 무력감, 자괴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본부장들은 서로의 마음을 아니까 힘들었습니다. 이OO, 장OO 두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장OO 부장이 오OO 사무관에게 전화를 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시키는 것이냐 물어보면서 자신이 직접 전화해서 설득해 보겠다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문체부에서 사업 자체를 없애 버리겠다고 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회의 자리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고 하였고, “현안점검 회의 초반에는 매주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일정 때문에 빠지는 일들이 생겨서 점차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고,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 운영 계획’ 문서에서 ‘※ 문체부 예술정책과 협의 완료’라고 기재된 것은 ‘예술정책과로부터 배제리스트를 전달받았고, 배제 방법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그에 따라 심의일정을 확정했다’는 의미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80)</sup>

#### (4) 참고인 오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는 1주일에 한 번 가량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서, 이 회의는 블랙리스트 뿐만 아니라 예술위의 전반적인 문제(재정확충 등)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81)</sup>

#### 다. 소결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2015. 4. 21.부터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주재로 문체부 관련 각과 사무관 예술위 사무처장, 본부장,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예술위원회 현안 점검

80) 이OO 1회 진술조서, 7-9쪽. 2018. 1. 31.

81) 오OO 1회 진술조서, 28쪽. 2018. 2. 1.

회의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었고,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임) 이OO 예술정책과장에서 2015. 12. 임명된 김OO 예술정책과장 시기까지 회의가 이어졌고, 이 회의는 명목상 예술위 공모사업을 점검하는 것이었지만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건전콘텐츠활성화 TF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는 마지막 날짜가 2015. 4. 20.이고,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가 최초로 시작된 날짜가 2015. 4. 21이었다는 사실,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회의에도 점차 과장급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건전콘텐츠활성화 TF’가 2015. 4. 21.부터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 7. 2015~2016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구체적 사례

### 가.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 (1)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지원 배제 개요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에서 2015년 문예기금 등 사업에서 지원 배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82)</sup>

2014. 10. 경 예술위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작가가 문학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시·시조·소설·희곡·아동문학·수필·평론 등 문학 분야 작가에게 문예기금에서 1인당 1,000만 원씩 총 99명에게 합계 9억 9,0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지원 신청을 공고하였고, 2014. 11. 중순경까지 총 959명이 지원신청을 하였다.

문체부 김OO 예술정책관은 그 무렵 예술위 이OO 예술진흥본부장 등 문예기금 공모심사 업무 담당 직원들을 세종 정부청사로 불러, 걸개그림으로 논란이 된 홍성담 작가를 예로 들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작가나 작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는 뜻을 전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김소영 문체부서관은 문체부 김OO 예술정책관, 이OO 예술정책과장에게 예술위 심사 이전에 지원신청자 명단을 청와대로 송부하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과장·국장·차관 등을 거쳐 김종덕 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예술위로부터 2014. 11. 경 지원신청자 전체 명단 및 2015. 1. 경 1차 무기명 심사를 통과한 지원신청자 약 198명의 명단을 각 건네받아 문체부서관실 김OO 선임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82)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15-19쪽.

신동철은 소통비서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4. 10. 2. 경 정관주가 후임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하자 정관주에게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인계하면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업무를 인계하였고, 피고인 김소영 문체비서관으로 하여금 정관주에게 지원배제 대상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소영은 문체부로부터 지원신청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다음 이를 정관주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하며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선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정관주는 소통비서관실 우OO 행정관을 통하여 김성장 등 정부정책을 비판한 전력이 있거나 야권인사지지, 시국선언자 등 총 17명을 선별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통보하였다.

김OO은 정무수석실에서 통보받은 17명의 명단을 전화로 문체부 오OO 사무관에게 알려주었고, 오OO은 이를 김종덕 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예술위 이OO 예술진흥본부장, 장OO 창작지원부장 등 임직원들에게 고지하며 이들이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경로를 통해 예술위에 배제 대상자 명단을 수차례 추가 하달하였다.

예술위 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는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지원심의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심사 및 최종 선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위 위원들과 책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하면 뒷선에서 아예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도 한다. 그건 결국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도와 달라’고 하면서 하달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지원배제를 위해 심사 일정을 연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그 과정에서 오OO 사무관은 2015. 5.경 김OO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등 범주에 포함된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문체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한 후 송부하라는 지시를 받아 총 9,473명의 명단을 작성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송부하였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의심이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되는 과정에서 문체부와 예술위는 문예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파장내지 심각한 논란의 우려가 있거나 정부정책에 동조한 경력, 여권 인물에 대한 지지 경력도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관련 설명자료를 작성해 청와대에 양해를 요청하였고 이를 청와대에서 수용함으로써, 예술위는 2015. 7. 중순경 청와대에서 하달된 5명을 심사과정에서 배제하고 지원금 수혜자를 당초 예정한 99명에서 70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2014. 10.경부터 2016.1. 경까지 사이에 예술위가 주관하는 2015년 문예기금 사업 등인 아르코대학교예술극장 정기대관 사업,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사업,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 문학 행사 및 연구지원사업,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 우수문예지 발간지원사업, 교정시설·군부대·농산어촌·사회복지시설·임대주택 순회사업,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공연예술 창작산실(연극-시범공연)사업,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대학로예술극장 3관 대관, 공연예술 창작산실(연극-대본공모)사업,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주목할만한 작가상 선정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화예술계 지원·선정 배제 대상자 명단이 수시로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에 순차 하달되어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되었고,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

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과 같이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김기춘, 김상률, 김소영은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문체부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비서실장,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15년 사업' 중 '직권남용' 란에 '유죄'로 기재된 부분에 기재된 사업들에서 같은 일람표에 기재된 대상들을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인 이OO·장OO·이OO·이OO·양OO·강OO 등으로 하여금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 심의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2) 문예진흥기금 지원배제 대상자 검토 및 하달 과정 개요

한편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은 문예기금 지원배제 대상자의 검토 및 하달 과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83)</sup>

### 마) 문예기금 지원배제 대상자의 검토 및 하달

앞서 본 것과 같이 문체비서관실은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 당시 정문수석실의 소통비서관실과 협조하였고,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피고인 김소영은 모철민 교문수석의 지시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당시 신동철 소통비서관으로부터 배제 대상자 검토를 받았다. 피고인 김소영은 그 후에도 신동철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2014. 10. 2. 경 정관주가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 김소영이 배제 대상자 선별을 요청하기 위해 신동철을 찾아오자 신동철은 피고인 김소영을 정관주에게 안내하면서 앞으로 정관주에게 검토를 요청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김소영은 정관주를 찾아가 명단을 건네면서 배제대상자 선별을 요청하였다.

정관주는 소통비서관실 R 행정관에게 명단 검토업무를 맡겼는데, R은 정관주가 보여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지침삼아 그 첨부 일람표의 '특이사항', '비고'란에 기재된 지원배제 등의 사유를 반영하여 명단을 검토하고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문체부 OO 사무관 등은 예술위로부터 공모신청자 전체 목록을 받아 이를 교문수석실 김OO 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김OO은 이를 피고인 김소영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김소영은 피고인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정관주 소통비서관의 검토를 받은 배제 대상자 명단을 김OO을 통하여 문체부 김OO 국장, 이OO 과장, OO 사무관 등에게 개별 사업별로 전화로 불러주거나, 2주마다 비서관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하달하였다.

OO 등은 위와 같이 공모신청 접수 후 공모신청자 목록을 청와대로 보내고 배제 대상자 명단을 받아 예술위에 하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배제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정리한 문예기금 등

83)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80-81쪽.

공모사업의 신청현황,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김종덕 장관을 거쳐 교문수석실에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에는 각 사업별 신청현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의 내용(‘문재인 지지’, ‘노무현지지’, ‘야권 연대 공동선대위 등’), 배제 사유 해당자를 선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심사 시 제외, 별도 사유의 제시, 사업 중단·연기) 배제가 부적절 또는 곤란하여 청와대의 양해가 필요한 사안 및 이유(청와대 행사 참석 등, 검열 논란 이슈화, 예술계의 반발 등) 등이 있었다.

그 후 정관주는 2016. 2. 초경 문체부 제1차관으로 부임하였고, 교문수석실 행정관도 김OO에서 오OO로 변경되자, 오OO 행정관은 오OO 사무관에게 “정관주 차관에게 리스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어 보고 의견을 달라.”고 하였고, B 국장과 오OO이 정관주를 찾아가 리스트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묻자 정관주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청와대에서 안 된다면 보고를 해 달라.”고 하여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배제 업무가 계속 진행되었다.

한편 문체부는 청와대를 통하여 지원신청자 목록을 검토 받는 것과 별도로 국정원 연락관을 통하여 국정원에도 지원신청자 목록을 보내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따로 받기도 하였다.

## 나. 구체적 사업별 지원 배제 및 검열 경위

### (1) 2014. 3. 예술위 책임심의위원회 19명에 대한 배제 경위

#### (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회 제도 개요

책임심의위원회 제도는 예술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2014년 책임심의위원회 제도 개요는 아래와 같다.

#### □ 구성

- 구성 분야 및 인원 : 7개 분야, 총 35명

분야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계
인원수(명)	5	5	5	5	5	5	5	35

#### □ 구성 방법

- 위원장 3배수 추천 → 위원회 의결 → 위원장 위촉

□ 임기(위촉 기간) : 2014.3.1. ~ 2015.2.28.(1년 간)

□ 자격기준(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운영규정 제7조 1항)

-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비평·연구·기획·교육·언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
- 문화일반·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
-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인사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인사

## (나) 문건 등 자료조사

### ①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에서 밝혀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 관련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sup>84)</sup>

#### □ 청와대, 문예기금 운영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문체부에 지시

피고인 김기춘이 2014.2.경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좌파단체, 좌성향 작가 등이 포함되었다. 그 원인은 심의위원회에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하반기 심사부터 이러한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나서서 공모심사 체계를 개선하고 심의위원 임명시 과거 활동경력은 물론 이념 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을 전달하면서, 같은 취지로 문예기금 운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모철민은 그 무렵 유진룡 문체부 장관에게 위 국정원 문건 등을 전달하면서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2014. 2. 18. 경 인터넷 매체 미래한국에 ‘반미(反美), 반(反)대한민국 내용 서적들,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돼 대량 유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수도서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실수비에서의 지적이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체부에 전달되었다.

#### □ 유진룡,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김기춘에 보고

유진룡 장관은 2014.2.21.경 피고인 김기춘의 집무실로 찾아가, 우수도서로 선정된 도서 중 논란이 된 도서의 심사·선정 경위 및 특별감사를 통한 진상조사, 관계자 징계 검토, 심사위원 구성 시 이념 편향적인 사배제 조치 등 조치계획, 문예기금 지원대상 사업 중 논란이 된 사업의 심사·선정 경위 및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위촉방식 개선, 선정기준 강화,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단체·개인에 대한 지원 제외 등 조치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피고인 김기춘에게 건네면서 그와 같은 취지의 대면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김기춘은 이러한 유진룡의 보고에 대하여 ‘잘 하라’고 지시하였다.

84)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10-12쪽.

#### □ 문체부, '예술위 분야별 책임심의위원회 후보자 105명 명단' 교문수석실에 보고

문체부 예술정책과 조OO 과장과 오OO 사무관은 유진룡 장관의 위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경위와 심의기준 등과 함께 2014.3.경으로 예정된 예술위 분야별 책임심의위원회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첨부한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김소영 문체비서관을 통해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모철민은 그 보고서의 내용을 대통령과 피고인 김기춘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김소영은 모철민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에 첨부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회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신동철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 □ 청와대, '총 19명의 예술위 책임심의위원회 후보자 배제 명단' 문체부에 하달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책임심의위원회는 예술위 위원장이 해당 분야 또는 사업별 3배수를 후보자로 선정하여 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책임심의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철은 그 무렵 교문수석실로부터 건네받은 105명의 후보자 가운데 문학 분야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된 황현산, 방민호, 신덕룡, 김사인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분야 책임심의위원회 후보자 총 19명에 대하여 제주해군기지반대, 촛불시위참여, 노무현시민학교강좌 등의 사유를 들어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교문수석실에 전하였고, 피고인 김소영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A 선임행정관은 문체부 오OO 사무관에게 19명의 후보자를 책임심의위원회 선정 대상에서 배제 하라고 지시하였다.** 오OO은 예술위 이OO 예술진흥본부장과 장OO 창작지원부장에게 19명의 후보자가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 □ 예술위, 문체부를 통해 하달 받은 배제 지시 실행

문체부의 산하기관으로서 문체부장관이 위원장을 위촉하고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성과에 대하여 문체부의 평가를 받는 등 문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인 위 이OO·장OO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위원장의 책임심의위원회 후보자 선정 내지 위원회의 책임심의위원회 선정 의결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문체부를 통하여 위와 같은 청와대의 배제지시를 하달 받게 되자,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윗선의 뜻이니 하달 받은 후보자 19명이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결국 이들 후보자 19명은 2014년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김기춘, 김소영은 신동철,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비서실장, 문체비서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인 이OO·장OO으로 하여금 예술위의 책임심의위원회 선정에 부당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② 문체부 기관운영감사(‘17.6.)

감사원「감사보고서 - 문체부 기관운영감사(2017.6.)」에 기술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회 선정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sup>85)</sup>

“문체부(예술정책관실)는 2014년 3월 문화체육비서관실에 2014년도 문예위 분야별 책임심의위원회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송부한 후 문화체육비서관실로부터 105명 중 황현산 등 19명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 문체부(예술정책관실)는 2014년 3월 문예위(사무처)에 2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sup>86)</sup> 위 19명을 문학·시각·연극 등 분야별 책임심의위원회에 선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예위(사무처)는 2014.3.28.문예위가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책임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2015. 8. 5.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 규정」으로 개정하기 전의 것, 문예위 규정 등)<sup>87)</sup>과 달리 문체부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문예위 위원장과 전체회의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문학 분야 황현산 등 위 19명을 2014년도 문예위 책임심의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등 [별표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부당 선정 배제 명세”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66명(책임심의위원 19명, 심의위원<sup>88)</sup> 47명)을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문예위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배제하였다.”

## ③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문서인「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에서 2014년 3월 경 예술위 책임심의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문학 분야 황현산, 시각 분야 김장언 등 19명을 배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sup>89)</sup>

85) 「감사보고서 -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감사원, 2017.6. 121-122쪽.

86) 「감사보고서 -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감사원, 2017.6. 문예위는 정권이 불편해 하는 인사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추정함

87)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5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위원장은 해당 분야 또는 사업별 3배수를 책임심의위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임심의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원주)

88) 문예위는 2015년 8월 기존 책임심의위원 제도를 심의위원 풀 제도로 변경함

89) 오OO,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4쪽.



### ③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사무처장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위 장OO 창작지원부장이 2014.3. 각 장르별 예술위원 등으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받아서 이를 문체부로 송부한 후 문체부 오OO 사무관으로부터 수차례 배제 지시를 받았고, 이를 권영빈 예술위원장과 배제 지시가 내려온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예술위원들에게 문체부의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설명을 한 후 해당 후보자를 배제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 전체 회의(2014.3.28)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황현산 등 19명을 배제하였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책임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 장OO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92)</sup>

### ④ 참고인 정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정OO 연극분야 위원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4.3. 경 자신으로부터 책임심의위원 후보를 추천 받아서 문체부로 송부한 후, 수차례 배제 지시를 받은 바 있다는 취지의 위 장OO 창작지원부장의 진술에 대하여 추천했던 후보자가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장OO 창작지원부장이 진술하였던 과정을 거친 것은 맞다고 하면서 자신이 추천한 후보에 대하여 '위'에서 곤란해 한다는 뜻을 장OO이 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sup>93)</sup>

### ⑤ 참고인 오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4년 3월 경 황현산 등 19명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에서 배제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A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부터 받고 이러한 지시를 조OO 예술정책과장과 김OO 예술국장에게 보고한 바 있으며, 장·차관 보고는 조OO 예술정책과장이나 김OO 예술국장이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94)</sup>

91) 이OO 1회 진술조서, 3쪽. 2018. 1. 24.

92) 이OO 1회 진술조서, 4쪽. 2018. 2. 7.

93) 정OO 1회 진술조서, 3쪽. 2018. 2. 13.

94) 오OO 1회 진술조서, 4쪽. 2018. 2. 7.

## (라) 소결

이상의 문서와 진술을 통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청와대는 201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선정 결과 지원 대상에 좌파단체인 민예총 산하 「민족미학」의 학술지 ‘민족미학’ 발간사업, 2013년 봄페스티벌-국가보안법 등 이념편향적 연극으로 물의를 빚은 극단 「해화동 1번지」·「서울프린지네트워크」·좌성향 「작가회의」소속으로 밀양송전탑·복합미항 반대 등 정부를 비판해 온 고명철·박몽구·신용목 등도 집필활동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자, 이는 지원대상 작품·단체 선정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분야별 5명)에 맡긴데다 심의위원에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문체부에 문제제기 하면서 2014년 하반기 부터는 이러한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① 문체부가 나서서 예술위 공모심사 체계를 심의위원회 추천(1.2배수)→이사회 승인(2차)으로 전환, 이사회에서 작품을 최종 선정토록 개선하고, ② 심의위원 임명(3월)시 과거 활동경력은 물론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건전 예술인사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4.2.21.경 문체부 유진룡 장관이 김기춘에게 심사위원 구성 시 이념편향적 인사 배제 조치 등 조치계획 등을 담은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이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대면 보고를 하였고, 문체부 예술정책과 조OO 과장과 오OO 사무관은 위 보고의 후속 조치로 ‘예술위 분야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청와대에 보고하였고, 이 명단은 국민소통비서관실 신동철 비서관에게 전달되었다.

신동철은 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중 황현산 등 19명에 대하여 ‘제주해군기지반대, 촛불시위참여, 노무현시민학교 강좌’ 등의 사유로 배제 의사를 교문수석실에 전달하였고, 김소영 문체비서관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A 선임행정관은 문체부 오OO 사무관에게 19명의 후보자를 책임심의위원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오OO은 예술위 이OO 예술진흥본부장과 장OO 창작지원부장에게 19명의 후보자가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문체부를 통하여 위와 같은 청와대의 배제지시를 하달 받은 예술위 사무처의 이OO과 장OO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윗선의 뜻이니 하달 받은 후보자 19명이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결국 이들 후보자 19명은 2014년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 (2)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 공모사업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은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 공모사업에서 서울연극협회 등 19개 단체가 지원배제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sup>95)</sup>

예술위 산하의 한국공연예술센터는 2014. 8. 28.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소극장에 대한 2015년 정기대관 공모를 하여 2014. 10. 8.까지 대관신청 접수를 받았다. 문체부는 2014. 10. 31.경 청와대로부터 대관신청 단체들 중 서울연극협회, 극단 백수광부, 극단 그린피그 등 19개 단체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예술위에 하달하였다.

한국공연예술센터의 극장대관은 공연예술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예술위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4. 11. 14. 대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극단 백수광부의 ‘굿바이’가 A등급, 극단 그린피그의 ‘트로이아의 여인들’이 B등급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배제지시에 따라 서울연극협회와 극단 백수광부, 극단 그린피그 등을 선정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다.

2014. 11. 14. 서울연극협회의 심의 탈락이 발표되자, 연극계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연극탄압성명서 발표 등 거세게 반발하였다. 이에 예술위 권영빈 위원장의 중재로 2015. 1.경 서울연극제의 작품 중 일부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5.4.경 공연장 고장사고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4. 11.부터 5.17.까지 휴관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연극제의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공연은 무산되었다.

김기춘 외 1심 판결에서 ‘2015.4.경 공연장 고장사고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4.11부터 5.17.까지 휴관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연극제의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공연은 무산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위원회 조사 결과, 서울연극제 재대관 합의 이후 서울연극제를 다시 배제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문체부와 예술위가 ‘구동부 장치’ 고장을 명분으로 하여 서울연극제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동안 안전점검을 이유로 아르코대극장을 폐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예술위 공연예술센터장이었던 유OO는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sup>96)</sup> 결국 아르코대극장을 폐쇄하라는 권영빈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OO 공연운영부장이 서울연극협회 측으로 안전점검을 명분으로 극장 폐쇄를 알리고 이OO 무대예술부장이 아르코 대극장을 폐쇄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95)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82쪽.

96) 유OO 3회 진술조서, 4-10쪽. 2018. 5. 22.

2015. 3. 16. 서울연극협회가 고소를 취하한 후 서울연극제를 다시 배제하라는 문체부 지시를 이OO 본부장에게 전달받았다. 당초 합의대로라면 서울연극협회의 고소 취하 후에는 아르코 대극장을 서울연극제에 대관해주어야 했다. 합의대로 서울연극제를 대관해 주기 위해서 무용단체들에게 극장 일정 조정까지 부탁해 두었다. 권영빈 예술위 위원장, 이OO 본부장, 이OO 공연운영부장, 이OO 무대예술부장 등이 모여서 서울연극제를 다시 배제하라는 문체부의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아르코 대극장에서 있었던 모터 고장 얘기가 나왔다. 3.30.~31. 기간 동안 OOOOO에 안전점검을 의뢰한 후 전문가인 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안전점검 결과를 명분으로 필요하다면 아르코 대극장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자 하였다. 그것 이외에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그 당시에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방법도 너무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술위 차원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없어서, 권영빈 위원장이 김종덕 장관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기로 하였다. 문체부 김OO 예술국장과는 2015. 3. 31. 저녁에 만나 권영빈 위원장-김종덕 장관 면담 결과를 지켜본 후 논의하자고 하였다. 권영빈 위원장이 (2015. 4. 2. 김종덕 장관, 청와대 면담 후) 2015. 4. 3. 예술위 직원들에게 아르코 대극장을 폐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는 ‘2017직공1 [2015 서울연극제 대관배제 및 아르코대극장 폐쇄 사건]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사건은 당초 문체부가 계획하였던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에 따르면 ‘문제 발생시 위원장 책임 하 해결조치’하도록 하였던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서, 문체부 장관·청와대 교문수석실까지 ‘문제 해결’ 과정에 개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은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sup>97)</sup>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은 2014. 11. 11. 경 공모신청을 마감, 2015. 2. 까지 3차에 걸친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위 공모신청에서는 총 8개 분야에서 959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다.

공모신청을 받은 예술위 장OO 부장은 당초 예년과 같이 지원신청자에 대한 간단한 통계 보고를 문체부에 보냈지만, 문체부는 지원신청자 전원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작품분석까지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장OO이 이를 포함한 지원신청자 명단을 보내자 문체부는 그 중 76명의 배제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였다.

예술위는 2015. 1. 21. 및 1. 22. 무기명 심사인 1차 심사를 진행하였는데, 1차 심사에서는 문체부로부터

97)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82-83쪽.

터 통보받은 배제대상자 명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심사 결과 198명이 1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장OO이 1차 심사 통과자 명단을 문체부 오OO 사무관에게 보내자 오OO이 이를 청와대로 송부하여 정무수석실 정관주의 검토를 거쳐 16명의 배제대상자 명단이 하달되었다.

예술위는 2015. 3. 31.부터 2015. 4. 1.까지 2차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장OO은 2차 심사 통과자 94명과 예비 8명을 포함한 102명의 명단을 오OO에게 송부하였다. 위 102명에는 배제대상자로 통보된 16명 중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체부는 청와대의 검토를 거쳐 그 중 이윤택을 포함한 6명을 배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에도 문체부를 통하여 청와대에서 배제 대상자 명단이 추가로 하달되었다.

예술위의 장OO 등은 2015. 5. 경 하OO 책임심의위원을 찾아가 '상부의 배제지시로 사업이 어렵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업이 중단되게 생겼으니, 2심에서 선정된 102명 중 배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하OO은 이를 거절하였다.

2015. 6. 5. 열린 3차 심의에서도 장OO은 책임심의위원들에게 '배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심의위원들의 거부로 심의가 연기되었고, 다시 열린 2015. 6. 27. 3차 심의에서는 장OO이 '도저히 할 수 없는 8명만 빼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책임심의위원들이 거부하여 결국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예술위 박명진 신임 위원장의 요청으로 문체부와 청와대의 협의로 당초 청와대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한 대상자 중 5명(박석근, 이윤택, 김병곤, 이성목, 전석순)을 지원배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책임심의위원의 심의 없이 2015. 7. 17. 예술위 164차 회의에서 서면결의로 위 5명을 배제하고 70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은 문체부가 '건전문화 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에 있는 '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한 최종의결과정에서 배제 조치'에 따라서 지원 배제가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공모접수에서 결과발표까지 약 11개월이 걸릴 만큼 배제 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경위는 위원회 '2017직문1[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파행 사건]'을 참고하기 바란다.

#### (4)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은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sup>98)</sup>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등 다른 문예기금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술위는 2014. 11. 11. 경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사업 접수를 마감하고 지원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고,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거쳐 11개

98)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84쪽.

문예지가 배제대상으로 하달되었다.

예술위는 배제대상으로 하달된 문예지 중 '실천문학', '문학동네'를 배제하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문체부도 2015. 3.경 '문학검열에 대한 현장의 우려', '문학계의 조직적인 저항의 단초 우려(예술위의 입장)' 등을 이유로 같은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여, 청와대의 양해를 받아 2015. 3. 31. 9개 문예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실천문학', '문학동네'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 우수문예지발간 지원 사업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위 사업 선정 결과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2015. 4.경 고등학교 은사인 000이 보낸 편지를 피고인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전달하면서 '창비', '문학동네'와 같은 문예지는 예산이 지원되거나 증액되었는데 보수문예지는 오히려 예산이 축소되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축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 예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2015 문예지 우수콘텐츠 아카이빙 사업', '2016 기간문학단체활동 지원 사업'이 후속사업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2015년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2017직문2 [2015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 파행 사건]을 참고하기 바란다.

### (5) 심의위원 풀 선정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은 심의위원 풀 선정과정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sup>99)</sup>

예술위는 문체부와의 협의에 따라 2015. 8. 5.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책임심의위원 제도에서 심의위원 풀(심의위원 후보단) 제도로 변경하여 위원장이 개별 심사마다 심의위원 풀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처 직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의위원 풀은 예술위 위원회가 구성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 풀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며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7조 제3항).

2016년 예술위 심의위원 풀은 2016. 1.경부터 선정 작업에 들어갔는데, 청와대, 국정원 등의 지원배제명단이 문체부를 통하여 예술위로 내려왔으며,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 후보자의 인원이 너무 많아 2016. 7월 경에야 심의위원 풀이 최종 확정될 수 있었다.

99)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85쪽.

예술위에서 심의위원 풀 구성을 담당하였던 문학지원부장 강OO는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00)</sup>

문체부에 심의위원 풀 구성과 관련하여 후보군을 송부하자 총 54명에 대해서 배제지시가 하달되었다. 그러자 류OO 본부장이 심의위원 풀 구성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받기 위한 안건 자료를 작성할 때 배제지시가 내려왔던 해당 인사들을 빼고 안건을 만들어 상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심의위원 풀 구성은 2016. 7. 말에 확정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이미 심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중에 심의위원 풀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류OO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자인 OOO 사원으로 하여금 OOO 서기관이 통보해 준 심의에서 배제해야 할 인사들 중 5명(정미경, 김종욱, 송전, 한상일, 강윤주)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빼고 안건 자료를 작성하게 하여 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논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추가로 전문 인사를 추천하거나 작고한 분을 풀 명단에서 제외하는 보완 조치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 및 확정되었다. 심의에서 배제해야 할 인사들 중 안건 자료에 포함된 5명은 심의위원 풀 제도가 시행된 2015. 8. 1. 이후에 추진된 각 사업의 지원심의에 이미 심의위원으로 한 번 이상 참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전체 풀에서도 제외할 수 없었던 인사들이었다.

이 사건은 검토 과정이 정말 오래 걸렸다. OOO 서기관에게 (2015. 8.에) 바뀐 규정대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니 빨리 검토해달라고 몇 번 독촉을 하였다. 2015. 12. 1차 검토를 받았는데, 당시에 몇몇 비상임 위원들의 교체가 있어서 이 위원들이 또 새롭게 추가하거나 보완을 한 명단은 2016. 6. 초에 확정되었다. 위원회 의결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이 나오고 이를 소위원회의 비상임위원들에게 검토를 받고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2016. 7.에 확정된 것이다.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면 한 달 정도면 마무리되었을 작업이었다.

한편 예술위 문학지원부장 강OO는 문체부에서 배제 지시를 받은 심의위원들에 대하여는 엑셀파일에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었다.<sup>101)</sup> 예시를 하나만 들면 다음과 같다.

0								
7	5	기획, 시	안정미		여	서울	시인,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자장	서울산업대 문예창작학과 총 2001년 《문학동네》로 데뷔 전 안희문학창작촌 팀장

심의위원 풀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한 구체적인 배제 경위는 ‘2017문11 [김형중 예술위 심의위원 풀 부당배제 사건]’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100) 강OO 진술조서, 14-15쪽. 2018. 1. 25.

101) 2018. 1. 29. 강OO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2016년 심의위원 풀 후보안 (총592명)(신임위원 추천\_무용, 문화일반 추가)\_20160719\_문체부검토.xlsx’ 중에서 문학분야 심의위원 후보 안, 1쪽.

## (6) 기타 사업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김기춘 외 1심 판결은 간략한 지원배제 경위만을 요약하고 있다. 먼저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은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다원예술창작지원, 문학행사 및 연구지원,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사업, 공연예술행사지원 일반공모,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대본공모)(범죄일람표 2 순번 26, 28 내지 39, 48, 88 내지 99, 159 내지 16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예술위 담당직원 장OO 등은 배제 대상으로 하달된 신청자들 중 앞 순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탈락이 어려운 신청자들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여 심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탈락이 되도록 하였다.

개별사업별로 지원배제가 있었던 구체적인 경위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장OO 창작지원부장이 담당하였던 사업

#### ① 2015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이 사업에서 지원배제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2017공35[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등 ‘서울변방연극제(임인자)’ 선정 배제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 ② 2015 다원예술창작지원

이 사업에서 지원배제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해서는 ‘2017공31[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선정 배제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③ 문학행사및연구지원·공연예술행사지원 일반공모·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연극-대본공모)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모두 예술위 장OO 창작지원부장이 담당자였고, 구체적인 지원배제 경위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심사결과 탈락한 것, 혹은 인사이동으로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02)</sup>

102) 장OO 1회 진술조서, 6-7쪽.

## (나) 순회사업, 장애인문화예술향유지원사업(범죄일람표 2 순번 60 내지 85, 99)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은 2015 순회사업 및 2015 장애인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sup>103)</sup>

예술위 담당직원 양OO, 이OO 등은 배제 대상으로 하달된 신청자들 중 선정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들에게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부적격 요인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지원하기 힘들 것 같다는 언급을 하면서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위 이OO 순회사업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104)</sup>

당시 문화복지부에서는 복권기금을 전입받아서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일람표 순번 60-85번 해당)’을 추진했고 국고를 교부받아 장애인사업(일람표 순번 99번 해당, 문체부로부터 어떤 지시도 없었고, 심의과정 중 자동으로 탈락된 단체)을 추진했다. 당시 본부장은 양OO본부장이었고 여러 직원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했으며 2015년 지원심의를 준비하는 과정 중 2014년 11월 말경에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 예술과 김OO 사무관이 전화로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에 지원 신청한 신청자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2015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14.11.07부터 11.27.까지 총 1,373건 신청접수 마감)에 지원 신청한 예술단체 신청내역을 김OO 사무관 코리아메일로 송부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초경 지원심의를 지원할 수 없는 단체들의 명단을 전화로 불러주면서 “지원심의 과정에서 선정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지원할 수 없는 단체들에 대한 기준이 뭐냐, 꼭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았으나 김OO 사무관이 위에서 시킨다는 뉘앙스로 “본인도 기준을 잘 모르겠다, 정치적인 이유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으며 “문체부도 힘들다. 우리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현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지원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가 위와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산하기관으로서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당시 문화 나눔본부 양OO 본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양OO 본부장이 당시 이OO 사무처장, 권영빈 위원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OO 사무관이 2014년 12월 초경 지원배제 단체들을 알려주면서 지원심의위원 구성시 국공립기관에 소속된 인사(기관장, 예술감독)들을 포함시켜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문체부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공립 기관 소속 인사를 포함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오고 있었다. 1차 및 2·3차 위원 후보안을 구성하여 이를 김OO 사무관에게 메일로 전달하였으며 특별히 이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어 섭의를 진행하여 1차로 장르별(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예술일반) 심의 담당 3명씩 총 15명, 2차 유형별 통합심의 및 3차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7명을 구성하였다.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은 세부적으로 5가지 유형(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임대주택, 교정시설, 군부대 순회사업)별로 예술단체를 선정하는데, 1차 장르별 심의회의에서는 지원 신청한 예술단체를 장르별로 무

103)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85쪽.

104) 이OO 진술서, 1-3쪽. 2018. 1. 18.

어, 유형별 최종 선정단체(사업을 공모할 때 5가지 유형별 선정예술 단체수 공지)를 고려하여 2배수 내외를 선정하였고, 2차 유형별 통합심의회에서는 1차 장르별 심의회에서 선정되어 올라온 예술단체들을 5가지 유형별로 최종적으로 199개 단체(사회복지 78개, 농산어촌 74개, 임대주택 22개, 군부대 16개, 교정시설 9개)를 선정하였다. 3차로 진행한 예산심의회는 2차 통합심의회에서 선정된 199개 단체들에 대해 1회당 예술프로그램 추진 비용을 책정하는 심의를 진행하였다.

\* 1차 장르별 심의 연극, 무용, 다원예술·예술일반('14.12.18.) 음악, 전통('14.12.19)

2차 통합심의회('14.12.22), 3차 예산심의회('14.12.29)

문체부 지시사항인 지원할 수 없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1차 장르별 심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탈락한 단체들이 있었다. 그리고 2차 통합심의회 시 나와 양OO 본부장은 문체부가 지시한 지원배제 명단을 가지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위원들이 지원배제 명단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선정가능성이 높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그 단체는 지금 상황에서 지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곤란하다”라고 하는 등 심의위원들에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거나, 올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심의위원들은 이미 분위기를 알고 있는 듯하였고, 의아해하는 심의위원들도 있었는데, 올해 여러 상황적인 부분이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거듭 말씀드려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심의가 완료된 후 2015년 1월경 김OO 사무관과 동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일정 협의를 하면서 “지원제외하라고 한 부분이 모두 반영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은 다른 지원사업과 달리 지원대상인 예술단체가 선정되고 난 후 다시 사회복지시설, 학교, 교정시설 등 순회대상처에서 선정된 예술단체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본 후 프로그램 선호도를 조사하여 매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술단체 선정 발표를 미루는 것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다. 김OO 사무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지원심의 선정결과는 예술위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하여 예술위 홈페이지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발표('15.1.21)하였다.

#### (다) 2016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범죄일람표 2 순번 216 내지 218)

이 사업에 대하여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sup>105)</sup> 이 사업에서 지원배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7공6[‘극단 하땅세(윤시중)’ 배제 사건]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예술위 담당 직원 이OO은 배제 대상으로 하달된 신청자들을 탈락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 과거 정산보고 불이행 여부, 중복 지원 전력 등 절차적 사유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다른 결격 사유를 찾지 못한 경우 심의위원들에게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사업을 못하게 되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105)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85쪽.

(라) 대학로 예술극장 3관 대관, 2015 공연기획전문인력 및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음악·오페라창작산실-음악(오작교 프로젝트), 원로예술인공연지원사업

이 사업들에 대하여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sup>106)</sup> 이 사건에서 지원배제에 대한 자세한 경위는 2017공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극단 연우무대’ 선정 배제 사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예술위 담당 직원 차OO, 이OO 등은 문체부로부터 배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숨긴 채 해당 신청자에게 지원하기 힘든 부분을 언급하거나 심의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 다른 단체와 비교 의견을 제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유도하였다.

대학로예술극장 3관 대관 사업을 담당하였던 이OO 공연운영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이OO 사무관이 유선으로 배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sup>107)</sup> 이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업 신청자 목록을 청와대 김OO 선임행정관에게 송부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공연전통예술과에 근무한 기간은 2015. 6. 30.까지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OO 공연운영부장에게 배제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자신의 후임으로 C 사무관이 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08)</sup>

2015 공연기획전문인력 및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을 담당하였던 예술위 아르코 인력개발원장 양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임의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109)</sup>

**□ 대상자 선별을 위해 지원신청자 명단을 보내라는 지시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로부터 받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 상기 2개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한 신규사업으로 시행 첫해에는 공모마감 후 문체부에 신청 접수내역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고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등 일련의 공모절차를 위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으나,
- 2015년에는 문체부 예술정책과 담당 사무관(오OO 사무관)으로부터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사전에 문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연락이 와서, 4월 중순 신청접수내역을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사무관(김OO 사무관)에게 전자메일(e-mail)로 전달하였다.

106)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86쪽.

107) 이OO 1회 진술조서, 9쪽. 2018. 1. 24.

108) 이OO 1회 진술조서, 10-11쪽. 2018. 1. 17.

109) 양OO 진술서, 4-5쪽. 2018. 1. 19.

□ (이후)누구로부터 누구를 (어떤 사업)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 2015년 4월 중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김OO 전 사무관)에 지원신청접수내역을 보낸 후 약 1개월이 경과된 5월 중순이 되어야 문체부 지원배제 리스트가 유선전화를 통해 해당 배제 단체를 개별 호명하는 방법으로 장OO 전 전문위원에게 통보되었으며 본인과 지원배제 리스트를 공유하였다.
- 지원배제명단은 매우 민감한 자료이므로 당시에 김OO 사무관으로부터 업무노트 메모나 별도 전자 파일 입력 등 어떠한 근거도 보관하지 말아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 본인과 담당자(당시 OOO 전문위원, 현 극장운영부장) 모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원배제 리스트 관련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다시 (부하직원 등에게) 지시를 하였다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지시를 하였는지

- 지원배제 리스트에 포함된 단체들이 모두 지원가능 후보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사업수행능력이나 전년도 사업모니터링 평가결과, 객관적인 서류 미비 등을 검토하여 지원 가능 후보에 포함될 수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라고 OOO 전문위원에게 지시했다.

□ 배제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각 사업, 항목별로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 지원심의 시(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2015. 5. 22, 기획경영전문인력지원사업: 2015. 6. 11.) 본인은 간사로 참석하였으며, 문체부 지시사항 이행과 관련, 유선전화로 통보된 지원배제 대상이 모두 지원 가능 군에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지원심의 과정에서 자연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 지원배제 대상이 지원가능 후보로 거론될 경우에는 “해당 단체는 정부 방침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단체입니다. 만일 지원배제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전부가 폐지되어 모든 단체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등 정부의 지원배제 방침 등을 그대로 설명(위 단체들은 사업수행능력이나 전년도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 심의위원들에게 정부의 지원배제 방침을 설명하지 않고는 배제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임)하여 지원심의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심의위원들은 정부 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015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였던 OOO는 위원회 조사에서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양OO이 심의위원들에게 제시한 지원심의 대상자 중에서 배제 대상자 명단이 블록형태로 표시되어 있었고, 블록처리된 단체들을 제외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서 더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였고, 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모든 단체가 지원을 못 받는 것 보다는 일부라도 일부 단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심의결정서에) 사인을 하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10)</sup>

심사위원 최OO는 2016년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에도 심사에 참여하였는데,

110) 최OO 1회 진술조서, 5-6쪽, 2017. 10. 12.

2016. 6. 심의가 시작되자 이OO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이 2015년과 비슷하게 지원 제외 대상자가 블록 처리된 서류를 꺼내서 돌리면서, 블록 처리된 단체들을 선정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이 사업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면서 사인을 해 달라고 하여서, ‘아무리 그래도 지원을 제외하는 극장들에 대하여 지원을 제외하는 근거는 있어야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 협회가 운영하는 극장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치자. 그러나 혜화동 1번지 같은 경우처럼 개인들이 운영하면서 열심히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극장들을 어떻게 지원해주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더니, 이OO 원장이 누군가와 통화 후 혜화동 1번지는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날 심사에서는 심사위원 최OO도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11)</sup> 이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최OO는 위원회 조사에서 2016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심사의 경우 음영 처리된 단체 명단을 받고, 음영 처리된 단체 수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고 당시 배제 대상이었던 혜화동 1번지는 선정해야 한다고 이OO 원장에게 강력하게 주장하여 선정해준 기억이 난다고 하였고, 2016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사업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 자체가 아예 기억이 나지 않고 명단을 받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12)</sup>

음악·오페라창작산실-음악(오작교 프로젝트), 원로예술인공연지원사업을 담당하였던 예술위 차OO 공연지원부장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113)</sup>

□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일람표에 제시된 사업인 음악.오페라창작산실-음악(오작교프로젝트)(3건), 원로예술인 공연지원(1건):

- 원로예술인 공연지원(1건)은 예술위원회가 문예기금을 사단법인 지역문화재단연합회로 재교부하여 사업운영과 관리 전반을 위탁한 사업으로 (사)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사업공모와 심의, 사업관리 등을 주관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6년도 심의결과 그간 지원배제명단에 포함된 대표적 단체인 연희단거리패(황혼),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연희판놀음 인천아라리), 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양로원 탈출기) 등이 선정되어 문화부 담당사무관으로부터 유선상의 질책과 박명진 前예술위원회 위원장의 대면호통을 장시간 동안 경험한 바 있다. 음악(오작교프로젝트)지원(3건)의 경우 본인이 부서장으로 재직시 공연지원부에서 담당한 사업으로 당시 상사는 이OO 공연예술본부장, 부하직원은 OOO 대리였다.
- 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 지원신청자 명단은 공모사업 접수 후 지난 10년 이상을 관행처럼 문화부 담당자에게 보내왔는데, 음악(오작교프로젝트)지원사업의 경우 문화부 소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인 공연전

111) 최OO 1회 진술조서, 7-9쪽. 2017. 10. 12.

112) 최OO 2회 진술조서, 3-4쪽. 2018. 5. 13.

113) 차OO 진술조서, 1-3쪽. 2017. 11. 4.

통예술과 C 사무관으로부터 신청한 단체명단을 요청받아 예술지원종합시스템에서 관련 엑셀파일 추출을 통해 이메일로 송부했다. 이후 심의일 직전에 C 사무관으로부터 지원배제단체에 대한 연번(엑셀 파일상의 지원신청순서)을 유선통화를 통해 전달받았다. 동 사업의 심의시기인 2016년 8월은 2015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이후였고 예술현장에서도 따가운 시선과 의견들이 분분하여 공연지원부 부서원이나 본인 스스로도 심리적 불안과 동요가 큰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전체 신청사업들을 대상으로 문예기금 지원심의 규정상의 결격사유(전년도 지원사업 미정산 등)나 필수서류 미비 등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심의를 준비하고 심의회의를 진행했다. (실제 당시 동 사업의 심의위원회는 지원배제단체로 언급된 성남시의 산하예술단체인 성남시립국악단의 前상임지휘자이자 음악감독인 한OO 지휘자가 포함되어 있다.) 심의결과 음악(오작교프로젝트)지원사업에서 지원배제명단에 포함된 안산시청(안산시립교향악단)이 선정되었고 심의결과를 문화부 C 사무관에게 전달했고 예술위원회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문체부 담당자에게 지원신청자 명단 제출 시 신청사업명, 단체명, 대표자명, 신청액, 사업장소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제출했다.

#### (마) (체육)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범죄일람표 2 순번 173 내지 188)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은 이 사업에 지원배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sup>114)</sup> 이 사업에서 지원배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7공8[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극단 허리’ 선정배제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예술위 담당 직원 양OO 등은 심의 시 검토되는 주요사항을 분석하여 핵심적 흥결사항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임의로 만들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심의위원들에게 코멘트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한편 이 사업을 담당하였던 양OO 창작지원부장은 위원회 2018. 1. 25. 1차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115)</sup>

공연발표공간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사업 심사 발표가 연기되었던 이유는 문체부 오OO 사무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 검증 결과 도착이 늦어졌기 때문이었다. 류OO 본부장이 심사가 열린 날 한 두 시간 전에 자신에게 다른 일을 보고 있으라고 하고, 연극분야 안OO, 전통분야 김OO 심의위원을 사전에 만나 문체부에서 내려온 배제 명단을 공유하고 배제 방법도 협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친정부 성향이며 심의에서 협조가 가능한 분들로 심사위원후보를 구성하여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진을 구성한다. 다만 모든 위원을 사전 접촉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중 리더 역할이 가능한 심사위원 한 두 사람만 사전접촉

114)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86쪽.

115) 양OO 1회 진술조서, 3-4쪽. 2018. 1. 25.

하여 부탁하게 된다. 이 건의 경우는 그 것이 000, 000 심사위원이었다. 이 사업은 심사가 늦어져서 오OO 사무관에게 연락을 하면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다. 그래서 세종시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한 적도 있다. 문체부에서 받은 리스트를 두 부 출력해서 9월 말 10월 초경 세종시 문체부를 방문해서 오OO 사무관과 대조를 해서 최종 확인했다. 그때도 최종 승인을 해 주지 않았다. 심사위원 후보를 문체부로 올려보낸 것은 장OO 부장이었다. 자신이 장OO 부장의 뒤를 이어서 창작지원부장이 되고 나서 문체부로부터 최종적인 심사위원 명단 승인을 받았다.

예술위 창작지원부장 양OO은 위원회 2018. 3. 30. 2차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116)</sup>

제가 위원회 진술 이후 안OO 심사위원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본인은 류OO 본부장을 심사 전에 만나거나 배제 리스트를 공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래서 제가 파리에 있는 류OO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여 보니 류OO 본부장은 자신도 이 사업 심사 전에 안OO 심사위원에게 배제 명단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제가 지난 번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위원회에서 하였던 진술이나,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하였던 진술은 모두 위증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이고, 류OO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의심없이 그렇게 진술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시 확인하여 보니 류OO 본부장은 안OO 위원에게 배제 명단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하여서 이 부분의 사실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여야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진술을 하기로 하였다. 제가 류OO 본부장의 말을 의심없이 믿었던 것은 전통예술분야의 경우에는 전통예술 분야 심사에서, 아마 류OO 본부장이 실무자인 000 전문위원에게 배제 리스트를 전달하고 이OO 전문위원이 000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리스트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아무튼 그러한 배제 요청을 전제로 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배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제가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연극분야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배제가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연극분야 실무자라도 000 전문위원도 배척하였다.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에서 배제조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심의 과정에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의 자리에 참석하였던 류OO 본부장에게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류OO 예술진흥본부장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117)</sup>

2015. 8. 24. 예술진흥본부장을 기존 국제교류부장과 겸직하게 된 후 동 사업 담당자인 000 대리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현황 보고를 받은 결과, 지원 대상에 전년도 지원단체 중 수월성이 높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심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담당자에게 신청사업별로 보다 자세히 정리

116) 양OO 2회 진술조서, 2-3쪽. 2018. 3. 30.

117) 류OO 사실확인서, 1-2쪽. 2018. 4. 18.

분석을 해보라고 지시하였고, 검토 결과 다 사업 대비 수월성이 높아 지원심의위원회의 논의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신청사업의 경우 문체부 예술정책과 ○○○ 서기관에게 배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당시 연극 발표공간사업의 경우 본인이 지원심의를 ○○○ 대리하고 주로 협의 및 준비를 하였다.

담당자와 신청내역사업을 보완 검토한 결과, 2014년도에 지원을 받은 극장이 선돌극장, 학전블루, 게릴라 극장, 산울림소극장, 공간소극장, 페아트르고도, 세이레 극장 등 7개 극장이었는데 이중 배제 대상에 포함된 선돌극장, 학전블루, 게릴라극장을 배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문체부에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사업 요강에 포함된 문화소외지역으로의 공연장 이전 사례에 해당되는 충북 만종리극장도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개월 여에 걸쳐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이중 선돌극장, 학전블루, 만종리 극장은 양해를 받았지만 게릴라 극장은 결국 제외를 받지 못했다.

전년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극장이 신규 신청한 경우, 사업요강에 포함된 지역 공연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을 감안하여 서울보다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극장의 규모, 극장의 설립 연도 및 운영 기간, 지자체의 기금 지원 여부, 지원금액 정산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배제 대상 사업 중 논의가 될 경우 상기의 미비점 등을 언급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심의 방향과 함께 지원 대상 공연장은 가급적 100석 규모 이상을 갖춘 공연장으로 하자고 심의회의시 이야기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 동의하였다. 심의위원회 논의시 배제대상이었던 173번은 개관연도, 176번은 폐관 위기 상황, 175번, 177번 181번, 182번은 작은 공간 규모, 183번은 공연장 미비 및 신청서 기재 내용 오류, 174번은 역대 많은 수혜를 받아온 점 등의 사유로 지원심의회의에서 탈락하였다.

양○○ 부장의 진술 관련, 심의회의 관련하여 전년도(14년도) 지원 극장에 대한 엄격 심의, 신규 극장에 대한 지원 기준 등 심의 방향에 대해 심의위원회 연장자로 좌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 극장장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말을 오해하였던 것 같다.

○○○ 극장장은 당일 심의시간이 되어 가장 늦게 도착하여 위의 사항을 설명드릴 수 없었고, 심의가 바로 진행되었다. 전통예술분야 심의의 경우 본인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심의위원 안○○은 위원회 조사에서, 학전과 산울림이 오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빠자는 발언을 어떤 심의위원이 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지방 공연장과 서울 공연장을 왜 같이 심의하느냐에 대해서 의의제기를 했던 기억은 있는데, 예술위 직원들을 사전에 만나서 부탁을 받은 사실도 실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18)</sup>

한편 이 사업에서 전통분야 심사위원이었던 김○○은 위원회 조사에서, 지역별 안배나,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단체인지, 해당 지역구에서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등을 고려해 심의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지만, 사전에 예술위 직원을 별도로 만나거나 한 일은 전혀 없고, 이○○ 전문위원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

118) 안○○ 1회 진술조서, 9쪽. 2018. 2. 27.

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강심장이 아니고,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의 대표는 친분이 있는 사이라, 오히려 특혜를 줬다면 모를까 탈락시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19)</sup>

(바) 주목할 만한 작가상(범죄일람표 2 순번 266 내지 277)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은 이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sup>120)</sup> 이 사건에서 지원배제에 대한 자세한 경위는 2017문3[김성규 등에 대한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부당 배제 사건]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예술위 담당직원 강OO 등은 예술위 김OO 등과 협의하여 7개의 기준을 만들어 예비심사에서 적용하여 배제 대상자가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사) 2016년 (복권) 순회사업(범죄일람표 2 순번 196 내지 215)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은 이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sup>121)</sup> 2017공6 [‘극단 하땅세(윤시중)’ 배제 사건]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예술위 담당 직원 김OO 등은 심사위원들에게 배제지시를 받은 사실은 숨긴 채 선정 단체를 각각 추천하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배제 대상자가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이 사업을 담당하였던 예술위 순회사업부장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122)</sup>

최OO 서기관의 연락을 받고 신청자 명단 송부하였고 그 사실은 박OO 공연예술본부장, 사무처장, 위원장님께도 보고되었다. 그런데 당시 최OO 서기관님이 신년음악회 건으로 바쁘기도 하였고, 전체 신청자 수가 너무 많아서 전체 검토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최OO 서기관에게 1차 심의가 끝난 다음에 1차 선정자 명단을 보낼 테니 그 명단으로 배제 대상자 명단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회신이 오래 걸릴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1차 심의와 2차 심의 사이의 기간을 넉넉히 두었다. 2016. 1. 22.에 1차 선정자 명단을 메일로 보냈고, 이후 배제 대상자를 최OO 서기관으로부터 전화로 명

119) 김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8. 4. 19.

120)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86쪽.

121)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86쪽.

122) 김OO 1회 진술조서, 13-14쪽. 2018. 3. 21.~22.

단 통보를 받았다.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배제 지시는 없었으나 정OO 심의위원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은 있었고 그 사유는 듣지 못했다. 심의 계획을 세운 후 최OO 서기관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2016. 2. 16.에 「2016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공모 2차 심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2016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공모 2차 심의' 문건은 2차 심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민원사항'은 선정 청탁이 들어온 단체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개별적으로 받은 민원도 있고 기획조정부에서 전달받은 민원도 있는데, 개별적으로 받은 민원이라 하더라도 기획조정부에 내용 공유는 하게 된다. '특이사항'은 배제 지시를 받은 단체 중에 양해를 얻지 못한 단체, 즉 최종적으로 배제 실행이 이루어질 단체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민원사항'과 '특이사항'을 문건에 함께 기재한 이유는, '민원사항'에 기재되어있는 청탁 내용을 수용할 테니 배제 지시가 내려온 단체들 중 '특이사항'에 기재된 일부 단체만 배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달라는 의도가 있었다. 실제로 '특이사항'에 적혀있는 단체들은 다 배제가 되었다.

심의는 심의위원이 각각 추천을 하고 추천이 많이 나온 단체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채점제로 진행되면 간사로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지만, 추천제는 심의위원간의 토론을 통해 선정단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배제를 적용하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다. 제가 심사장에 간사로 배석하여, 선정 대상으로 논의되는 블랙리스트 단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 사유를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탈락을 유도하였다. 예를 들면 2016년에 예술위 전체회의에서 '한 단체가 1년에 네 건 이상의 사업 또는 3억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침을 새로 만들었는데, 연희단거리패의 경우, 지역대표예술축제에서 1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으니 이 사업에서도 선정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견과 위 지침을 함께 제시하였고, 창작21작가회는 문학순회사업이 있으니 거기서 뽑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청탁 민원이 들어온 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배제보다는 오히려 민원 단체들을 붙이는 것이 더 힘들었다. 청탁을 받은 단체들이 심의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지역예술단체가 많았기 때문에, 심의에서 심의위원에게 '지역 안배를 좀 해달라'는 식으로 부탁하여 가급적 1차와 2차 심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배제 이행은 2차 심의부터 이뤄진 것이지만, 청탁을 받은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1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의견 제시를 하기는 했다.

이 사업 뿐만이 아니라, 당시 문체부로부터 배제 명단을 받으면 사업별 배제 명단은 본부장과 사무처장과 위원장에게도 공유되었다. 그리고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들이 함께 모여서 배제 명단을 놓고 논의하였는데, 배제 대상이 겹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양해를 받을 것인지 서로 협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아) 2016년 공연예술행사지원(일반공모), 연극 창작산실(일반)-시범공연, 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시범공연, 연극 창작산실(일반 및 어린이청소년)-우수재공연, 창작뮤지컬육성(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23 내지 231, 239 내지 243)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은 이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sup>123)</sup>

123)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87쪽.

예술위 담당 직원 정O 등은 제작기획서나 지원 이후 지속 무대화의 현실화 능력과 가능성으로 판단하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심의위원에게 작품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배제 대상자가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이 사업을 담당하였던 예술위 공연지원부장 정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124)</sup>

- 2016.1.15.공모마감하고 2016.2.25.결과 발표된 공연예술행사지원(일반공모) 사업에서 (사)밀양연극촌의 '제16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하당세의 '서울 숲 국제 어린이 텐트 극장 페스티벌', 서울국제음악제조직위원회의 '2016 서울국제음악제', (사)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의 '전북도민과 문화관광객(농민)을 위한 방송사 특집공연', 임실필봉농악보존회의 '제21회 필봉마을굿축제' 등에 대하여: 위 사업 당시 저는 예술위 공연지원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상급자로는 박명진 예술위원장, 사무처장이OO, 박OO 공연예술본부장이었고, 공연예술행사지원 심의 선임은 정OO 차장 및 김OO 차장이었다. 위 사업 당시 지원사업 공모 마감 후 공연전통예술과 C 사무관으로부터 위 사업의 지원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신청자 목록을 보내주었다. 그로부터 약 2~3주 후에 C 사무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위 지원배제 대상자들의 신청번호를 불러주었다. 번호, 신청 단체명, 대표 이름을 불러주었다. 2016년 당시는 이미 예술위 안에서는 그것이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은 문체부와 예술위 사이에 묵시적인 약속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배제 지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받은 후, 내부 심의 진행을 위해 배제명단을 상급자인 박OO 공연예술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 그 이후 박OO 본부장은 이를 이OO 사무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들었다. 그런 후 사업 담당 심의 선임인 정OO 차장, 김OO 차장에게 제가 공유를 해 드렸다. 박명진 위원장에게는 이OO 사무처장이 보고하였을 것이다. 이 당시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예술위 내부 관행상 박OO 본부장과 공연지원부장인 제가 소위 '총대'를 매는 것이 당연했다. 그것이 이른바 당시 제가 말아야 했던 '직무'였다. 제가 심사과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분야별 심의위원 중 일부 친정부적인 심의위원들에게 문체부에서 불러준 번호를 제가 말로 전달했다. 그렇게 번호만 불러주면 그 분들도 그것이 소위 배제해야 하는 명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어떤 심의위원은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지냐?' 등의 말을 하기도 했지만 심의위원들은 결국 지원배제 명단에 있는 단체들을 점수를 낮게 주는 방법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었다. 위 공연예술행사지원 사업에서 '연극/뮤지컬 분야'의 경우 1차 심의 직전에만 위 배제 대상자 명단을 심의위원들에게 알려주었다. 심사가 끝난 후 사업 선정 결과를 C 사무관에게 제가 이메일로 보냈고, 이OO 사무처장님 등 예술위 상급자들에게는 박OO 본부장님이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 2016.1.29.공모마감하고 2016.3.31.결과발표된 연극 창작산실(일반)-시범공연 공연 사업에서 극단 백수광부의 '에어콘 없는 방', 연희단거리패의 '이윽고 신작(꽃을 바치는 시간)' 등의 작품을 지원 배제한 경위에 대하여: 위 사업 당시 저는 예술위 공연지원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상급자로는 박명진

124) 정O 회 진술조서, 3-6쪽. 2018. 1. 30.

예술위원장, 사무처장 이OO, 박OO 공연예술본부장이었고, 공연예술행사지원 심의 선임은 홍OO 차장이었다. 위 사업 당시 지원사업 공모 마감 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으로부터 위 사업의 지원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신청자 목록을 보내 주었다. 그로부터 약 2~3주 후에 오OO 사무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위 지원배제 대상자들의 신청번호를 불러주었다. 번호, 신청 단체명, 대표 이름을 불러주었다. 2016년 당시는 이미 예술위 안에서는 그것이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은 문체부와 예술위 사이에 묵시적인 약속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배제 지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받은 후, 내부심의 진행을 위해 배제명단을 상급자인 박OO 공연예술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 그 이후 박OO 본부장은 이를 이OO 사무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들었다. 그런 후 사업 담당 심의 선임인 홍OO 차장에게 제가 공유를 해 드렸다. 박명진 위원장에게는 이OO 사무처장이 보고하였을 것이다. 이 당시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예술위 내부 관행상 박OO 본부장과 공연지원부장인 제가 소위 '총대'를 매는 것이 당연했다. 그것이 이른바 당시 제가 말아야 했던 '직무'였다. 제가 심사과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분야별 심의위원 중 일부 친정부적인 심의위원들에게 문체부에서 불러준 번호를 제가 말로 전달했다. 그렇게 번호만 불러주면 그 분들도 그것이 소위 배제해야 하는 명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저의 부탁을 받은 심의위원들이 위 배제 대상자들에 대하여 점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배제하였다.

- 2016.2.19.공모마감하고 2016.5.4.결과발표된 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시범공연 사업에서 극단 백수광부의 '대개 여한은 없다', 하명세의 '슈가 캔디 마운틴(동물농장)'이 배제된 경위에 대하여: 위 연극 창작산실(일반)-시범공연 사업에서 진행된 방법과 같다. 심사위원만 달랐고, 그 외 내용은 같다.
- 2016.3.18.공모마감하고 2016.5.24.결과발표된 연극창작산실(일반및어린이청소년)-우수재공연 사업에서 (주)문화아이콘의 '연극 <도둑맞은 책>', 극단 백수광부의 '극단백수광부 창단20주년+배우 오현경 80세 기념공연 <봄날>', 하명세의 '붓바람', 같은 시기 공모마감·결과 발표된 창작뮤지컬육성(우수재공연) 사업에서 (사)밀양연극촌의 '약산아리랑', 주식회사 뮤지컬구름빵의 '두리몽실 뭉개공항'이 지원 배제된 경위에 대하여: 위 연극 창작산실(일반)-시범공연 공연 사업에서와 같다. 다만 심의위원과 실무자가 누구인가하는 차이가 있다. 그 외 내용은 같다.
- 위와 같이 예술위 지원사업 심의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배제 지시를 받았을 때 본부장, 사무처장 등에게 '그런 것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런 배제를 하는 것은 심의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무처장이나 본부장도 제 의견에는 동의를 했다. 하지만 당시 예술위로서는 상급 기관인 문체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상황이었고, 그런 문체부의 지시가 청와대의 지시라는 것 또한 저는 알고 있었고 다른 예술위 직원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가 문체부 C, 오OO 사무관 등에게 이런 배제 지시를 납득할 수 없고, 이런 심의는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도대체 누구의 지시냐? 라고 물어봤다. C 사무관이나 오OO 사무관은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B(청와대)나 K(국정원)다."라고 말해주었다. 문체부 사무관들 또한 대단히 곤혹스러워하면서 "이 일을 관두고 싶다"며, 어려운 심경을 토로하였다. 저는 그것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예술위 사무처장이나 본부장 또한 배제 방법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제를 해야하는 상황을 몹시 힘겨워 했다.

### (자) 2016 아르코예술극장·대학로 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예술위 극장운영부장 강OO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 아르코예술극장·대학로 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사업에서 특정 예술단체에 대한 대관 배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125)</sup> 이 사건에서 지원배제에 대한 자세한 경위는 2017공8[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극단 허리’ 선정 배제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 범죄 일람표 연번 [219~222](2016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공모)에 대하여, 문체부 C 사무관이 지원신청자 명단을 보내달라고 유선상 요청하였고, 이를 보내준 후 다시 C 사무관으로부터 배제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았다. 차OO 차장이 원래는 실무 담당을 해야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가게 되어서 유OO 과장이 일을 하게 되었다. 유OO 과장은 각 신청 단체들의 과거 이력사항 등을 체크하여 참고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정리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위 참고사항은 배제 대상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 작성했다. 배제 대상자가 최종 탈락되었는지 여부는 문체부 C 사무관에게 전화를 알려준 다음 나중에 선정 및 탈락 단체 명단을 보내서 확인시켜주었다. 위 정기공모사업에서 문체부의 배제 지시는 박OO 공연예술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박OO 본부장은 배제 지시를 이행하라고 했다. 내가 유OO 과장이 정리한 심사 참고사항을 배제 대상자 명단과 함께 박OO 본부장에게 전달하였다(박OO 본부장이 심사위원들과 사전 접촉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박OO 본부장이 직접 심사 과정에 들어갔고 위 특이사항에 관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배제했다.<sup>126)</sup>). 다만 배제 대상자를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알려주지는 않았다. 다만 경합 형태로 진행되는 정기대관공모 심사의 특성상 경합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별도로 특이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배제 대상자가 경합 과정에서 선정될 가능성은 없었다.

위 정기대관공모 심사가 진행될 무렵은 이미 문체부 배제 지시를 실행하는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었다. 그래서 심사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미 어느 단체가 배제 대상자인지는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단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이 무렵 배제 대상 중에서 배제하기가 곤란한 단체들에 대해서 별도로 양해조치를 받기 위해서 양해 대상자 목록과 양해 사유를 만들어서 문체부로 보낸 적이 있다. 최소 두 번 이상 문체부 C 사무관과 피드백을 받은 후 목록을 최종 확정하는 바 있다. 문체부와 피드백 과정에서 C 사무관은 예술위(본부장과 해당 사업 부장 협의)가 요청한 양해 대상자를 모두 받아줄 수는 없다고 했다. 그 결과를 정리하여 문체부로 보낸 적이 있다.

한편 이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안OO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에 서울연극제에 대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는 논의가 있었던 기억이 나고, 심의위원들은 주로 예술위 직원에게 일정 조정을 해서 최대한 선정하도록 주문했던 것 같고, 특별히 직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다거나, 직원의 태도가 이상하

125) 강OO 1회 진술조서, 4-6쪽. 2018. 1. 15.

126) 이와 관련하여 강OO은 위 내용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의제기함(18. 11. 9.).

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27)</sup>

#### (차) 2016(국고)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

이 사업을 담당하였던 예술위 창작지원부장 양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128)</sup>

당시 예술위 고OO 전문위원이 이 사업 담당자여서, 제가 고OO 전문위원에게 심사위원을 미리 만나서 배제 명단을 드리라고 지시했다. 고OO 전문위원이 연극 분야 박OO, 문화일반 분야 이OO 위원과 심사 전에 미리 만나 배제 명단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안다. 이 사업 역시 문체부에 심사위원 후보를 미리 송부한 후 문체부가 최종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었다. 역시 협조가 가능한 심사위원을 미리 구성하는 방식이었다.

2015년 하반기 경 이후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은 심사에 들어갈 경우 블랙리스트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알고들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사업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맡았던 사업에서는 그랬다.

심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경우는 그냥 넘어가고 배제 명단에 있는 단체들이 선정될 수 있는 후보로 거론되면 사전에 만났던 심사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소위 '결격사유'를 내세워 강하게 반대하면서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배제 명단을 제외했다.

한편 양OO 부장이 이 사업에서 사전에 배제 명단을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하였던 연극 분야 심의위원 박OO는 위원회 조사에서 예술위 직원에게 특정 예술인(단체)를 배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29)</sup>

#### (카) 2016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1차 사업

예술위 시각예술부장 정OO은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2016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1차 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 시각예술과 OOO 주무관으로부터 정형탁, 지앤갤러리(김근숙)에 대한 배제 지시를 받고, 이를 직상급자인 류OO 문학시각예술본부장에게 구두로 보고하였으나 위 두 단체는 지원 요건을 미충족하여 특별한 배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30)</sup>

127) 안OO 1회 진술조서, 12쪽. 2018. 2. 27.

128) 양OO 1회 진술조서, 4쪽. 2018. 1. 25.

129) 박OO 1회 진술조서, 2018. 4. 13.

(타)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참고인 예술위 협력개발부 파견직 직원 000<sup>131)</sup>이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sup>132)</sup>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사업에서도 배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① 예술위 입사 이후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사업을 담당하였고, 이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섭외 대상자 명단을 문체부로 올려 보내주면 문체부는 2-3주 후에 배제 대상자를 전화로 불러주었다.
- ② 사업 진행을 위해서 독촉을 하면 문체부 인문정신문화과 김OO 사무관은 ‘국정원 검증을 거치고 있다.’며, 섭외 대상자 명단이 너무 많아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면서 예술위 자체적으로 구글 검색 등을 통해서 배제 대상자를 제외한 후 문체부로 섭외 후보자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③ 김OO 사무관뿐만 아니라 000 주무관과도 같은 방식으로 소통을 많이 하였다. 김OO 사무관에게 배제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이 잘못되었다면 전임자인 김OO 사무관에게 배제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 ④ 문체부로부터 받은 배제 대상자 명단 중에서 2015. 12. 10.자에 받은 명단 중에서 배제 대상자는 ‘검은색’으로 표시하여 보관하였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sup>133)</sup>
- ⑤ 문체부로부터 받은 배제 대상자 명단은 예술위 정OO 과장, 김OO 팀장에게 보고하였다.

No	성명	직업	성별	생년	소속	장학	비고
1	최대현 (주요제작진)	작가	남	1989	-	최근 5년간 2000여 명의 배우, 가수, 시인, 영화감독, TV/라디오를 위한 광고 촬영 기사 진행	
2	문재환 (주요제작진)	감독/제작	남	1989	-	최근 5년간 2000여 명의 배우, 가수, 시인, 영화감독, TV/라디오를 위한 광고 촬영 기사 진행	
3	박정민	홍사팀장/디자이너	남	-	-	최근 5년간 2000여 명의 배우, 가수, 시인, 영화감독, TV/라디오를 위한 광고 촬영 기사 진행	이탈작업 시작
4	서지영	가수, 작가	남	1972	-	최근 5년간 2000여 명의 배우, 가수, 시인, 영화감독, TV/라디오를 위한 광고 촬영 기사 진행	marbdran@naver.com
5	이병훈	시인/제작	남	1967	-	최근 5년간 2000여 명의 배우, 가수, 시인, 영화감독, TV/라디오를 위한 광고 촬영 기사 진행	
6	정영희	제작/제작	남	1982	-	최근 5년간 2000여 명의 배우, 가수, 시인, 영화감독, TV/라디오를 위한 광고 촬영 기사 진행	duylo@naver.com
7	최정민	제작/제작	남	1990	-	최근 5년간 2000여 명의 배우, 가수, 시인, 영화감독, TV/라디오를 위한 광고 촬영 기사 진행	
8	최정민	배우	남	1989	-	최근 5년간 2000여 명의 배우, 가수, 시인, 영화감독, TV/라디오를 위한 광고 촬영 기사 진행	
9	김영민	제작/제작	남	1988	-	최근 5년간 2000여 명의 배우, 가수, 시인, 영화감독, TV/라디오를 위한 광고 촬영 기사 진행	
10	김재민	제작/제작	남	1989	-	최근 5년간 2000여 명의 배우, 가수, 시인, 영화감독, TV/라디오를 위한 광고 촬영 기사 진행	
11	이병훈	제작/제작	남	1978	-	최근 5년간 2000여 명의 배우, 가수, 시인, 영화감독, TV/라디오를 위한 광고 촬영 기사 진행	
12	정영희	제작/제작	남	1982	-	최근 5년간 2000여 명의 배우, 가수, 시인, 영화감독, TV/라디오를 위한 광고 촬영 기사 진행	
13	이병훈	제작/제작	남	-	-	최근 5년간 2000여 명의 배우, 가수, 시인, 영화감독, TV/라디오를 위한 광고 촬영 기사 진행	
14	김재민	제작/제작	남	1978	-	최근 5년간 2000여 명의 배우, 가수, 시인, 영화감독, TV/라디오를 위한 광고 촬영 기사 진행	
15	이병훈	제작/제작	남	-	-	최근 5년간 2000여 명의 배우, 가수, 시인, 영화감독, TV/라디오를 위한 광고 촬영 기사 진행	

130) 예술위 제출 사실확인서, 2쪽. 2018. 3. 8.

131) 2015.9.~2017.9 근무.

132) 000 1회 진술조서, 3-4쪽. 2018. 2. 9.

133) 000이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출연자 후보명단(151210)’ 파일 출력 문서 중에서.

- ⑥ 한편 000은 문체부 예술정책과 000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문서 26쪽에서 ‘김학원’을 확인하고 김학원이 이 사업에서 배제된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34)</sup>

인문예술콘서트 오늘 ( '15.11.15) - 1명		김학원-K( '15.12.7)
---------------------------------	--	------------------

## 8. 아르코 미술관

### 가. 아르코미술관 40주년 기념 ‘미술을 위한 캐비닛’ 전에서 ‘두 세계 사이’ 검열

####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이00 → 이00·김00 (이메일)(’14.10.31.)

아르코 미술관 000 대리가 이00 예술진흥본부장과 김00 아르코 미술관장에게 2014. 10. 31. 보낸 ‘미술을 위한 캐비닛 상영작품 ‘두 세계 사이’에 대한 보고’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특별전\_보고용\_아르코미술관’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134) 000 1회 진술조서, 3쪽. 2018. 2. 9.

## (나) 특별전\_보고용\_아르코미술관

‘특별전\_보고용\_아르코미술관’에 첨부된 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르코미술관 40주년 특별전

〈미술을 위한 캐비닛, 아카이브로 읽는 아르코미술관 40년〉 전시내용 보고

2014.10.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 □ 전시개요

- 1) 전시명 : 미술을 위한 캐비닛, 아카이브로 읽는 아르코미술관 40년
- 2) 전시기간 : 2014.10.23~11.30
- 3) 전시장소 : 아르코미술관 1F 스페이스필룩스, 2F 아르코아카이브
- 4) 자료제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국가기록원 등
- 5) 협력작가 : 백현주, 안정주, 유혜미, 전소정, 정영돈
- 6) 전시내용 : 아르코미술관 개관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으로 미술관 40년 전시의 역사를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 영상작품 ‘두 세계 사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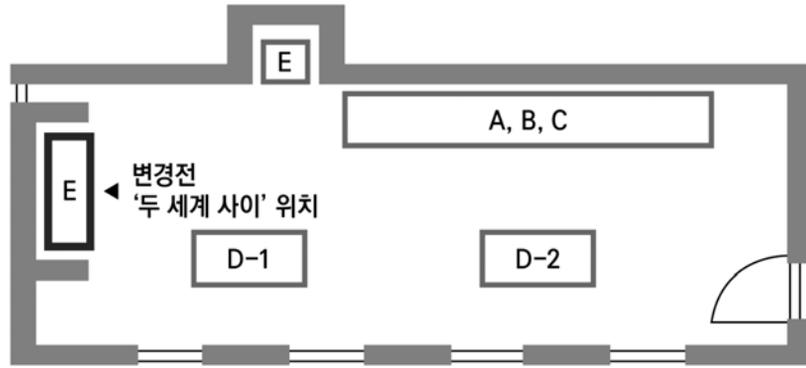
- 1) 작가 : 전소정 (1982년생)
- 2) 형식 : 싱글채널비디오, 00:15:53, 2014
- 3) 제작배경
  - ‘미술을 위한 캐비닛’은 아르코미술관 40년 전시의 역사를 시기별(1970년대~2000년대까지) 전시 행위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함
  - 섹션 1은 미술회관(아르코미술관의 전신)의 전시 역사 가운데 1970-80년대 소그룹 작가군의 활동을 재조명하고 있음. 이 중 1980년대 소그룹 중 ‘현실과 발언’, ‘3월의 서울’, ‘메타박스’, ‘82 현대 회화’ 등에 대한 당시 작가들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여 전시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음
- 4) 작품내용 : 1980년대 활동했던 소그룹으로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동인 모임 ‘현실과 발언’의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창립 멤버였던 김정현, 민정기, 윤범모 3인이 당시 활동을 회고하고 있음. ‘현실과 발언’ 모임을 결성하게 된 계기, 작업 활동, 후배 미술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등을 라운드토크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음

## □ 기초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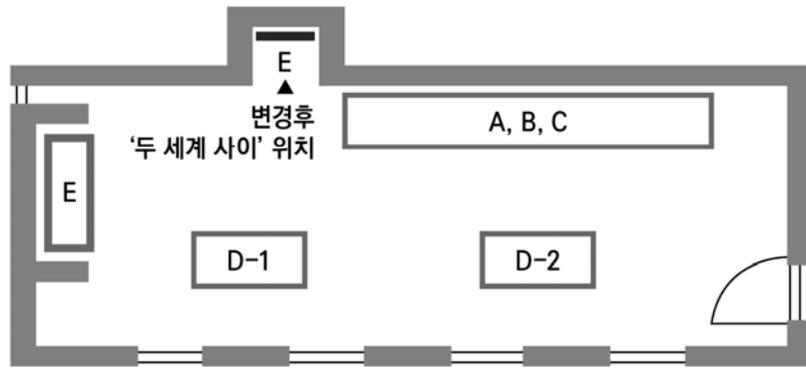
- 1) 52인치 모니터에서 40인치 모니터로 변경하여 상영함

- 2) 작품의 위치를 전시장 전면에서 안쪽 구석진 공간으로 변경함
- 3) 헤드셋을 연결하여 전시장에 사운드가 나오지 않도록 함
- 4) 변경된 전시장 도면 (아래)

1F: Section. 1 스페이스필룩스



1F: Section. 1 스페이스필룩스



□ 향후 추가 조치 계획

: 다큐멘터리, 작가 인터뷰 등 영상 추가 제작으로 노출을 최소화

##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가)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아르코미술관 관장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① 1980년대에 있었던 ‘현실과 발언(민중미술 그룹)’ 창립전에서 있었던 검열의 예를 김정현, 민정기, 윤범모 등 당시 참여 작가가 참여하는 회고 좌담 형식을 비디오 작업[전소정 작 <두 세계 사이>]으로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 ② 그런데 이 작업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아르코미술관을 방문하여 그 대담 비디오를 전시에서 빼거나 관객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에게 주문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오OO 사무관에게 도리어 문체부 내부를 잘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다.
- ③ 오OO 사무관이 돌아간 후 OOO 전시 큐레이터에게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오OO 사무관의 지시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
- ④ 그 이후 OOO 과장(큐레이터)이 이OO 예술본부장에게 2014.10.31.이메일을 보내면서 나에게도 함께 ‘참조’를 걸어서 보냈다. 그 이메일의 첨부문서에 ‘아르코미술관 40주년 특별전 <미술을 위한 캐비닛, 아카이브로 읽는 아르코미술관 40년> 전시내용 보고’가 있었다.
- ⑤ 그런데 문서의 제목은 전시 내용 보고라고 되어 있었지만, ‘□기조치사항’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우선 모니터 크기를 줄이고, 작품의 위치를 전시장 전면에서 안쪽 구석진 공간으로 변경하고, 헤드셋을 연결하여 사운드가 전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보여주는 도면까지 첨부하고 있었다.
- ⑥ 게다가 ‘□향후 추가 조치 계획’으로는 ‘다큐멘터리, 작가 인터뷰 등 영상 추가 제작으로 노출을 최소화’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 ⑦ 이메일을 보고, 당시 아르코미술관(부속 인사미술공간)에 내부 감사가 들어오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조치를 하기는 어려웠다.
- ⑧ 전시는 위 문서에서 보고한 대로 변경되어서 진행되었다. 지시를 어긴 이OO 큐레이터에 대하여 관장으로서나 현장 전문가로서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 ⑨ OOO 큐레이터는 이OO본부장이나 오OO 사무관으로부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별도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sup>135)</sup>

## (나) 참고인 000의 진술

참고인 아르코미술관 000 대리는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135)</sup>

- ① ‘미술을 위한 캐비닛’ 전시가 개막한 후 이00 사무처장에게 전화가 와서 <두 세계 사이> 전시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문체부 오00 사무관이 방문한다고 하니 만나보라고 하였다.
- ② 며칠 후 오00 사무관이 아르코미술관으로 찾아와서, 전시관으로 갔더니 오00 사무관이 <두 세계 사이> 영상을 보고 있었다. 오00 사무관은 자신에게 <두 세계 사이> 영상을 삭제하라고 하여서 삭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오00 사무관은 영상 속의 사운드를 삭제하고 틀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인터뷰 아카이브인테 어떻게 말소리를 삭제하고 영상을 틀 수 있느냐 말하였다. 그러자 오00 사무관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영상 파일 안에 <두 세계 사이> 영상과 다른 전시 영상들을 다 섞어서 틀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다른 작품들과 섞이는 것도 곤란하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김00 관장이 중간에 들어와서 오00 사무관과 인사를 나누었고, 김00 관장은 <두 세계 사이> 영상은 80년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영상이라고 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였고, 얼마 안 있어 김00 관장은 사무실로 올라가셨습니다.
- ③ 그 뒤로 오00 사무관은 <두 세계 사이> 영상을 빼라거나 다른 영상과 사운드를 섞으라는 등 한동안 계속해서 지시를 했고, 자신은 계속 앉아서 그럴 수 없다고 하였고, 오00 사무관은 돌아갔다.
- ④ 오00 사무관이 영상을 빼라고 하였던 것을 전시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아카이브 전시는 참여작가의 개념이 아니라 미술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품의 위치를 조정하더라도 전시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오00 사무관 지시 사항 중에서 말소리를 빼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작품에 헤드셋을 끼우게 되면 이 작품도 온전하게 사운드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작품에도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헤드셋을 끼우게 됐다.
- ⑤ 문체부에서 <두 세계 사이> 작품에 나오는, 1980년 ‘현실과 발언’ 창립전의 무산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된 이 전시 관련 신문 기사 중에서 동아일보 기사 ‘전시회를 전시하다’에는 김

135) 김00 1회 진술조서, 5-6쪽. 2018. 1. 18.

136) 이00 1회 진술조서, 3-7쪽. 2018. 5. 28.

정현 전 위원장, 민정기, 윤범모 등이 언급되었다. 권영빈 위원장이 기획단계에서부터 ‘현 정권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이니 안전하게 이행하라’는 사전 주의를 주었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행하고자 하였던 전시였고, 또한 위원회 직원으로서 조직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고민을 안고 진행했던 전시이기도 했다.

- ⑥ 오OO 사무관을 만났던 전시관에서는 ‘간섭’ 정도로 인식했고, 오OO 사무관이 다녀간 직후에는 당연히 ‘검열’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 ⑦ 김OO 관장에게 오OO 사무관의 지시 사항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간략하게 보고를 하였다. 김OO 관장이 어떻게 하기로 하였느냐고 질문을 하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인터뷰 영상과 두 세계 사이 영상을 바꿔서 전시를 계속하겠다고 하였고, 그러면 김OO 관장이 이OO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OO 본부장, 김OO 관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그 뒤로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갔다.
- ⑧ 김OO 관장으로부터 오OO 사무관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는 지시를 들은 사실은 전혀 없다.
- ⑨ ‘기 조치 사항’을 보고하기 전에 전OO 작가나 김정현 위원장 등에게 문체부에서 검열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전시가 끝난 후 전OO 작가에게만 문체부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전OO 작가는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다.
- ⑩ ‘기 조치 사항’ 부분이 포함된 이메일 첨부 문서는 문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이고, 문체부 보고용이라서 ‘기 조치 사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향후 추가 조치 계획’의 경우 이행하지 않았다.
- ⑪ 직원으로서 전시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 (다)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이OO 큐레이터에게 이메일 보고를 받았고, 오OO 사무관이 다녀갔다는 정도만 들었을 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37)</sup>

137) 이OO 1회 진술조서, 4-6쪽. 2018. 1. 24.

## (라)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사무처장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이OO 본부장에게 보고 받았고, 권영빈 위원장에게 보고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38)</sup>

## (마) 참고인 오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그 당시 예술국장, 예술정책과장과 함께 전시관으로 찾아가서, 전시를 보고 전시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용하게 조치하기로 하였고, 이OO 담당 큐레이터의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예술국 내부에서만 공유하고 청와대 김OO 선임행정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39)</sup>

## (바)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이OO 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140)</sup>

- ① 당시 시각과(김OO 당시 과장, 사무관은 기억안남)에서 자체 판단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OO 사무관이 같이 가보자고 해서 같이 가서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다.
- ② 나중에, 오OO 사무관 지시에 따라서 아르코미술관에서 우선 모니터 크기를 줄이고, 작품의 위치를 전시장 전면에서 안쪽 구석진 공간으로 변경하고, 헤드셋을 연결하여 사운드가 전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오OO 사무관에게 보고를 받고 이러한 내용을 김OO 국장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안의 경우 김OO 행정관에게도 보고하였을 것이다. 당시 주변에서 누군가가 국정원이나 경찰 쪽에서 이 전시 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고 해서 급하게 전시장을 찾아갔던 기억이 난다.

138) 이OO 1회 진술조서, 8쪽. 2018. 2. 7.

139) 오OO 1회 진술조서, 8쪽. 2018. 2. 7.

140) 이OO 1회 진술조서, 6-7쪽. 2018. 2. 1.

**(3) 소결**

이상의 문서와 진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2014.10.23.-11.30 기간 동안 아르코미술관에서 전시된 ‘미술을 위한 캐비닛, 아카이브로 읽는 아르코미술관 40년’에 대한 기사가 나간 후 문체부 예술정책과 이OO 과장, 오OO 사무관 등이 아르코 미술관에 찾아와 전시 내용을 살펴보았다. 오OO 사무관은 김OO 관장과 OOO 담당 큐레이터에게 별도로 각각 1980년대에 있었던 ‘현실과 발언(민중미술 그룹)’ 창립전에서 있었던 검열의 예를 김정현, 민정기, 윤범모 등 당시 참여 작가가 참여하는 회고 좌담 형식을 비디오 작업을 하였던 OOO 작 <두 세계 사이> 작품에 대하여 대담 비디오를 전시에서 빼거나 관객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OOO 담당 큐레이터는 문체부로부터 검열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담당 큐레이터로서 전시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OOO 작가에게는 문체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전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이러한 조치 사항을 이OO 예술진흥본부장, 김OO 관장 등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조치 내용은 문체부 예술국에도 보고되었다.

**나.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본 전시에서 <위로공단 Factory Complex>에 대한 검열**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11쪽에서 임흥순 작가의 2015 베니스비엔날레참가에 대하여 ‘제외’ 조치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시각예술분야(2015 공모사업) - 3명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내용(일) 검토내용	진행상황	
시각예술의 영역구획상 파괴행	스페이스 비움기	임흥순	거동문인문당 2013년 11월 연구사업	2013	제외	
			2015 스페이스 팀 공간 운영 및 활용	20133 아문연대 공동연대회, 시민사회 연포단, 20135 8.24 양심기행아문연대후포, 인문거북 중심 인포의 활동가 심의 연포후 포포활동, 제2년도 초정렬트나, 권위(2년)의 운영 예산 계획 (영인결과, * 21년 10월말 05(세종 88))	20133 아문연대 공동연대회, 시민사회 연포단, 20135 8.24 양심기행아문연대후포, 인문거북 중심 인포의 활동가 심의 연포후 포포활동, 제2년도 초정렬트나, 권위(2년)의 운영 예산 계획 (영인결과, * 21년 10월말 05(세종 88))	진행중 종료
			2011 국제 비영남의 참가 <한일외교당연>	2012에이전시(연말) 운영시 제기로 요청받은 양 국제적 지원 도 없음 - 정기공보에서는 제외하고, 베니스비엔날레 예산에서 지원 예정일부	2012에이전시(연말) 운영시 제기로 요청받은 양 국제적 지원 도 없음 - 정기공보에서는 제외하고, 베니스비엔날레 예산에서 지원 예정일부	제외

##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 (가) 참고인 김OO의 진술

아르코미술관장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①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본 전시에서 임흥순 작가의 다큐멘터리 필름 〈위로공단 Factory Complex〉에 대하여, 작품 안에 “박근혜 물러가라”고 쓴 플래카드와 시위대 장면이 있는데, 이 대목을 빼라는 권영빈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류OO 국제 교류부장이 작가에게 여러차례 요청했다고 임흥순 작가에게 베니스비엔날레 전시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
- ② 베니스비엔날레 본 전시에서 위 작품에서 엔딩 크레딧에서 아르코 로고를 삭제해 줄 것을 (아르코 쪽으로부터) 요청받았다고 임흥순 작가에게 들었다.

### (나) 참고인 오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① 임흥순 작가가 ‘기존 리스트’에 있었고, 작품 내용을 사전에 본 것은 예술위 차원이었을 것이고, 자신은 작품을 언제 처음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 ② 자신과 예술위 류OO 본부장이 이 작품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예술위 로고를 빼는 문제는 류OO 본부장이 작가에게 요청하여서 빠진 것으로 안다. 예술위 로고를 빼는 것은 기억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 ③ 전체적으로 임흥순 작가의 위 작품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과장, 국장, 장차관, 청와대 등에 보고하고 진행했다.
- ④ 당초 자신은 임흥순 작가가 리스트고, 감시 체계가 심해서 지원금을 줄 경우 문제가 될 것이 뻔해서, 지원금도 주면 안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예술위 쪽에서 베니스비엔날레에 공식 초청 받을 정도로 좋은 작품인데 지원금을 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여서 지원금 주는 내용은 보고하지 않고, 위원장 권한으로 지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 (다)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이OO는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① 오OO 사무관이 임흥순 작가가 선정될 경우 일반적이라면 대통령 축전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선정될까봐 걱정이라는 말을 하였다.
- ② 수상이 결정된 후 자신이나 오OO 사무관이 김OO 선임행정관과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하였더니, 장관이 대통령 축전으로 추천할 경우 블랙리스트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질책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장관 축전으로 하자고 하여서 장관 축전을 보냈다.

### (3) 소결

이상의 문서와 진술을 통하여 2015 베니스비엔날레 본 전시에서 임흥순 작가의 <위로 공단 Factory Complex> 작품에서 작품 안에 “박근혜 물러가라”고 쓴 플랭카드와 시위대 장면이 있는데, 이 대목을 빼라는 권영빈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류OO 국제교류부장이 작가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고, 엔딩크레디트에서는 아르코 로고를 빼달라고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은사자상을 수상한 이후에는 질책을 우려하여 대통령 축전 대신 문체부 장관 축전을 보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 다. 아르코미술관 관장 계약 해지

### (1)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아르코미술관장 김OO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2015년 1월 말 재계약을 앞두고 예술위 경영인사부장 김OO가 찾아와 권영빈 위원장이 1년간의 업무실적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반성문을 써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전달하여서 권영빈 위원장을 직접 면담하니 ‘반성적 어조’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반성적 어조’로 써야 간부들이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OO 경영인사부장이 2년이 넘으면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나중에야 6년까지 계약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업무 성과 보고서와 함께 사의를 표하였지만, 전시 공백과 예정된 작가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상호 협의하에 비상근으로 5개월간 근무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OO 관장은 또 아르코 미술관이 독립부서가 아니라, 행정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이나 관리를 맡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41)</sup>

## (2) 참고인 권영빈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위원장 권영빈은 위원회 조사에서 전문성이 있는 관장이 아르코미술관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관장으로 섭외하게 되었고, 직원들과 조화가 잘 안된다고 하여서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냥 내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김OO 경영인사부장이 계약기간이 취소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서 김OO 관장을 내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42)</sup>

## (3) 소결

이상의 진술을 통하여 권영빈 위원장이 전문성이 있는 관장으로 김OO 관장을 아르코미술관 관장으로 섭외하였으나, 직원들과 조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권영빈 위원장이 김OO 관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9. 2016년 문예진흥기금사업 개편 추진 경위

### 가. 문건 등 자료조사

#### (1)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15.5.11.)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2015년 5월 11일 작성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문서는 문체부가 문예진흥기금 지원 및 심사제도를 개편하게 된 배경을 보여준다. 이 문서는 먼저 2014. 6월부터 2015. 5. 11. 현재까지 공모사업에서 총 213건에 대한 배제 조치가 있었다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술위 지원사업에서 3,360건 중에서 총 133건 배제하였다.

(나) 예술인복지분야에서 사업폐지 1건 및 15건 배제하였다.

(다) 공연예술분야에서 1,604건 신청 중에서 82건 배제하였다.

(라) 미술분야에서 100건 신청 중에서 총 20건 배제하였다.

(마) 기타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 상 등에서 167건 신청에 75건 배제 등을 ‘주요 조치 실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141) 김OO, 2014-2015년 검열 시행 사례-아르코 미술관, 3쪽. 2018. 1. 10.

142) 권영빈 면담녹취록, 27-28쪽. 2018. 4. 20.

(바) 한편 ‘주요 조치 실적’ 중에는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DB관리(15.4월 현재 9,473건)라고 하면서,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선언(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문학인 754인), 문재인후보 지지선언(6,517인/문화예술인, 경남·전북·부산예술인, 서울연극협회),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1,608인/문화예술인, 여성예술인) 등을 열거하고 있다.

(사) 한편 이 문서에는 ‘주요 조치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서울프린지페스티벌(다원예술), 극단 해화동 1번지, 극단 그린피그(연극), 천년의 시작, 발견(문학잡지) 등 편향적인 문학 및 연극단체에 대한 배제.
- ② 서울연극협회 등 편향단체가 관행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지원 차단 조치.
- ③ ‘문화예술분야 사업구조조정 및 개선’으로 문체부 본부, 국립극장 등 국공립예술기관, 예술위원회 등 산하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중복지원사업 배제, 유사사업 통합 등 조치(가능한 1단체 1지원 기준 권장).
- ④ 일부 사업에 대한 양해 조치로 예술현장의 특정 편향 의심 불식 및 문제 제기 명분 상실 효과 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검토의견’을 제시.

먼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공모사업이 2015년 하반기까지 계속 진행됨에 따라 특이사항 확인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건수 증가→확인대상 지속 증가→확인과정 부하·지연→심사절차 지연→사업추진 지연→단체 불만 누적, 부정적 여론화 추세.

(나) 문학 및 연극분야의 경우 특이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사회이슈와 연계된 특이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점점 줄어들어 현재의 공모시스템에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a)창작산실사업의 경우 연극계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지만 선정된 핵심사업(3건)이 특이사항에 해당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b)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연극 분야 10건 중 8건이 특이사항에 해당되어 사업을 폐지하고 기획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c) 문학 및 연극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비판적 작품이 많고, 수요자층도 두터워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반응이 예민한 편이라고 하면서, 우수문예지지원사업 등에서 특이사항 배제를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축소한 결과 보수단체의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 ‘향후 조치방안’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추진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 공유 및 사업구조조정 지속추진.
- (나) 지역 편향단체의 관행적 공적자금 지원 제한 강화.
- (다) 문예기금사업 공모제를 기획사업으로 전환.
- (라) 문예기금 심사제도 개선개선 추진.
- (마) 문학·연극 분야 등 문제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등. 특히 문예기금사업 공모제를 기획사업으로 전환의 경우 불특정다수 대상 공모제 지원방식을 점차 축소하고 기획사업 위주의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2016년 전체 공모 건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고 있다. 문예기금사업 심사제도 개선으로는, 책임심의위원회(1년 임기제/15.2월 임기종료)는 임명되면 1년 동안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제재가 곤란함에 따라 심사위원을 풀(pool)제로 전환함으로써 사업별로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작품의 선정논란을 차단하고, 특히 심사위원에 국립예술기관장, 사무처 간부진을 포함하기로 하고, 심의위원의 단심제 선정(100%)으로 심사 후 문제 발생시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심의단계를 사업특성에 따라 1~3차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선정 비율 사전 배분을 통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문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에서 연극분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연극제」를 도입하여 서울연극제 등 지역편향의 연극제를 대체하고, 전국을 아우르는 연극제를 결집할 수 있는 사업 유도 및 인센티브 부여, 창작산실 사업 등 연극계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함으로써 연극계에 대한 지원 강화 명분을 부여하고, 문학분야의 경우에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역 이양에 따라, 중앙과 지방에서 중복지원하고 있는 창작기금, 우수문예지 등 소액다건의 지원사업은 지역으로 일원화 하고, 작가 중심의 원고료 직접 지원 방식, 예술위 직접 기획발굴 사업 등 문학창작의 선택과 집중, 건전화 방향으로 전환 및 정부의 정책의지 반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143)</sup>

143) 문체부 예술정책과,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4-8쪽. 2015. 5. 11.

<div data-bbox="313 347 626 387" style="text-align: center;"><b>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b></div> <div data-bbox="531 387 633 407" style="text-align: right;">'15.11(월)/ 예술정책과</div> <p><b>□ 주요 조치 실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모사업 총 213건 배제 조치 (146건 - 현재)</li> <li>문화예술위원회: 3,360건 선정/ 448건 선정/ 133건 배제</li> <li>예술인복지분야: 사업계획 1건/ 15건 배제</li> <li>공연예술분야: 1,604건 선정/ 362건 선정/ 82건 배제</li> <li>미술분야: 100건 선정/ 50건 선정/ 20건 배제</li> <li>기타: 예술가의 장난 어버니상 등 167건 선정/ 77건 선정/ 75건 배제</li> <li>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계 개인 DB 권역(154명 현재 9,473건)</li> <li>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선언(문화예술인 594인)</li> <li>세월호 시국선언(문학인 754인)</li> <li>문화인후보 지지선언(8,517인/ 문화예술인, 경남-전북-부산예술인, 서울연극협회)</li> <li>바림순후보 지지선언(1,608인/ 문화예술인, 여성예술인)</li> </ul> <p><b>□ 주요 조치에 대한 평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분야 영향력 있는 주요 정책적 방향단계 배제</li> <li>문화재단지배권(다원예술), 극단 폐쇄동1단지, 극단그린페그(연극), 천년의 시작, 발전(문학잡지) 등 영향력 있는 문학 및 연극단체 배제</li> <li>연방단체의 관행적 공개자금 지원에 대한 경각심 제고</li> <li>서울연극협회 등 연방단체가 관행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에 대한 정치적 입사를 통해 지원 차단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사업 총선 선정우수 대목 축소: 문예지지원('14년 502~'15년 142), 문학평화지원('14년 202~'15년 80) 등</li> <li>예산충족조치(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계획에 따른 불응, 국제교류지원 등 세부사업 및 선정우수 축소 등 전체 불응 예정</li> <li>예술원 자체 기획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추진도 확보(문학지지원, 문학평화지원,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 등)</li> </ul> <p><b>○ 문화예술분야 사업구조조정 및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예부 본부, 국립극장 등 국공립예술기관, 예술위원회 등 산하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중복지원사업 배제, 유사사업 통합 등 조치 (가능한 1단계 1차원 기준 권장)</li> <li>연출가 이문배(국립중앙극단 공연지원/ 문예기금지원 배제) 실연문학(문예지 지원/ 문학평화지원 배제), 우윤복(국가장립(우윤복지원/ 열린발전단지원 배제)</li> </ul> <p><b>○ 일부 사업 양해조치로 예술현장의 특정 현황 파악 불능 및 문제제기 명분 상실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학(실천문학, 문학동네 등), 연극(허영세, 한국연극연출가협회 등) 분야 필수사업 7건 양해조치로 통해 특정단체에 대한 사전검열 및 불이익에 대한 파악 불능</li> <li>친목회식 예술가회 금지특정 행위 및 집단행동 권유는 없음, 다만 탈퇴사유 등에 대해 개별행동 제기(행선 및 우유 안함 1332)</li> </ul> <p><b>□ 문제점 및 검토의견</b></p> <p><b>[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모사업이 15년 하반기까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적시사업 확인절차 지연</li> <li>선정우수 증가→확인대상 지속 증가→ 확인과정 부하 지연→심사결과 지연→사업추진</li> </ul>
<p>온라인-단체 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론화 추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학 및 연극분야의 경우 특이사항 증가에 따라 사업추진 곤란한 상황</li> <li>사회이슈와 연계된 특이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점점 줄어들어 현재의 공모시스템에 한계</li> <li>문학인실사실: 전국에서 공문이 많은 사업이나, 선정된 핵심사업(2020)의 특이사항에 해당하여 사업추진 불가(내:심사위원 대상 불특정 공문)</li> <li>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전국분야 10건 중 8건이 특이사항에 해당하여 사업계획 및 기획사업 전면 재검</li> <li>상대적으로 사회비판적 작품들이 많고, 수요자수도 두터워 지원실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반응이 예민한 편</li> <li>특이사항 배제를 위해 무리한 사업축소 및 보수단체 민원제기</li> <li>우수문화재단지원사업: 한국문화재단, 한국소설가협회, PEN한국문, 한국희곡작가협회, 공연예술지원사업: 한국음악협회</li> <li>연극교육진흥지원사업: 한국연극교육협회 등</li> <li>다문화도 일대도 상응에 따른 소극장 폐업 현황과 연계, 부정적 여론화</li> </ul> <p><b>[검토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정치적 과정이 난해 개인적 경우 별도 고려 필요</li> <li>공적의 명칭 및 국제행사 초청시(에니스 비엔날레 초청 등) 권별 별도 검토 필요</li> <li>특이사항 확인절차가 늘어감에 따라 심사추진시 자체보유 DB 확인후 추가로 확인되는 특이사항은 차기사업에 계획하는 방안 모색 필요</li> </ul> <p><b>□ 향후 조치방안</b></p> <p><b>1. 사업추진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 공유 및 사업구조조정 지속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DB를 상호 공유-관리하고, 사업추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 확보</li> <li>'15년 연이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도 및 조별, 중복배치, 예산결합 등 사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li> <li>개선절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확인 등 추진상황 관리 철저</li> </ul> <p><b>2. 지역 연합단체의 관행적 공적자금 지원 제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에 제한하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지역특별회계로 이양 검토</li> <li>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한 관행적 지원 요청을 제지하기 위해 현재 배분방식을 지역특별회계로 전환 이양하여 지역의 자율성 부여 명분</li> <li>지역별 상황에 맞게 자율추진으로 예술위 개입 배제 및 문예기금 재원으로 강제한 필요 검토</li> <li>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등 지역문화예술진흥지원('15년 154억)</li> <li>필요시 예술원에서 공모 또는 기획사업은 지원하여 지역단체를 지원 선정, 지원하는 등 지역에 대한 주도권 확보</li> </ul> <p><b>3. 문예기금사업 공모제를 기획사업으로 전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록당다수 대상 공모제 지원방식을 점차 축소하고 기획사업 위주의 선대의 집중방식으로 전환</li> <li>'15년 연이 공모제 지원으로 줄이는 방안 마련 중('15년 3,000억 원(2014년 1,500억 원) 대비 200%, 국제교류지원 500억 원(2014년 200억 원) 대비 2.5배 증가)</li> </ul> <p><b>4. 문예기금사업 심사제도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임지원위원회(1년 임기제/15.2월 임기유지)는 임명되면 1년동안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재계가 곤란함에 따라 심사위원을 풀(pool)제로 전환함</li> </ul>
<p>로써 사업별로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작품의 선정 논란 차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위원에 국영예술기관장, 사무처 간부진 포함</li> <li>심의위원의 단상계 선정(100%)으로 심사 후 문제 발생시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심의단체를 사업특성에 따라 1-3차로 구분,심사하고 선정비를 사전 배분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li> <li>사업별 특성: 1차(150%), 2차(120%), 최종(100%) 선정 제도 도입</li> </ul> <p><b>5. 문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b></p> <p><b>○ 연극분야 제도개선 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민국 연극계" 도입으로 서울연극계 등 지역연극의 연극계를 대체하고, 전국을 아우르는 연극계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 출도 및 인센티브 부여</li> <li>서울연극협회 등 문제단체는 향후 모든 사업에 배제조치</li> <li>장관실사실 등 연극계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격차 지원함으로써 연극계에 대한 지원강화 명분</li> </ul> <p><b>○ 문학분야 제도개선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역 이양에 따라, 중앙과 지방에서 중복지원하고 있는 창작기금, 우수작에서 등 소재다문화 지원사업은 지역으로 전환</li> <li>작가 중심의 필요로 직접 지원방식, 예술의 직접 기획사업 발굴 등 문학정책의 선택과 집중, 전권화 방향으로 전환 및 정부의 정책과지 반영</li> </ul> <p><b>□ 추진 일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분야 사업구조조정 지속 추진('15년 상반기/ 기관별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 종합 제도개선 추진('15년 상반기/ '16년 시행)</li> <li>사업추진네트워크 구축 및 DB구축('15년 상반기)</li> <li>공모제를 기획사업으로 전환('15년 상반기/ 예술단체 사전 협의)</li> <li>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지역특별회계로 이양('15년 상반기, 기재부 협의)</li> <li>심사제도 개선('15년 상반기/ 예술위 규정 개정)</li> </ul> <p><b>○ 문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극분야 제도개선 추진('15년 상반기/ 연극계 협의 및 의견수렴)</li> <li>문학분야 제도개선 추진('15년 상반기/ 문학계 협의 및 의견수렴)</li> </ul>

## (2)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15.5.15.)

2015. 5. 15.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⑦ 지난 월요일 '중앙부처 산하단체 재정지원 등에 대한 총점검' 지시의 점검대상 범위와 관련, 각부처가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 민간단체(NGO)를 대상으로 점검해 줄 것 (전수석)

⑦ 지난 월요일 '중앙부처 산하단체 재정지원 등에 대한 총점검' 지시의 점검대상 범위와 관련, 각 부처가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 민간단체(NGO)를 대상으로 점검해 줄 것 (전수석)

## (3)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15.5.21.)

이 문서는 같은 제목의 2015. 5. 11. 자 문서를 증보한 것으로 첨부 문서를 제외하면 본문은 위 문서와 대동소이하다.

## (4) 예술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자료

### (가) 제161차 회의록('15.5.29.)

2015. 5. 29. 개최된 제161차 예술위원회 회의에서는 예술위가 예술위원들에게 문화예술킨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책임심의위원'을 '심의위원'으로 바꾸고자 경위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주요 발언 중 지원 및 심의 제도 개편과 관련이 있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sup>144)</sup>

- 장OO 창작지원부장-저희 책임심의위원회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2014년 작년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큰 규모의 사업, 예를 들어 창작산실, 창작뮤지컬 사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략) 그런데 1단계 사업의 심의위원과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의 심의위원들이 같을 경우에는 1단계 사업의 심의결과가 계속 유지되는 관계로 심의의 공정성 면에서 심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심의위원들을 매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관계로 누군가 5명이 1년 내내 책임지고 심의할 수 있는 심의형태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작년 1년 동안 확인되었습니다. (중략) 작년 책임심의위원이 올해 2월까지 마감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책임심의위원을 임명해도 이 분들의 역할이 별로 없다보니 매년 할 때마다 저희가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면에서 낮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심의위원 제도보다는 그냥 일반심의위원제도로 바뀌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9쪽).

144) 제161차 예술위원회 회의록. 2015. 5. 29.

- 김OO 위원-「위원회 직무상 독립 등 29조 1항, 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이런 내용이 있는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장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내용도 지난 번에 책임심의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했을 때 류 부장님이 “된다, 안 된다. 1명만 넣어라.” 이것은 나한테 월권을 한 거라고요. 부장님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때 위원한테 담당부장이 책임심사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한 겁니다.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해 줬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 의하면 부장님이 위원한테 “된다, 안 된다”고 할 수가 있나요? 나는 안 된다고 봐요(10쪽).
- 권영빈 위원장-지금까지는 **우리 예술위원들이 추천해서 책임심의위원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파악 등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김OO 위원님이 추천을 하셨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이 사람은 곤란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책임심의제도를 폐지한 이유 중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연말연초에 얘기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액다건의 공모제 방식에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선정 방식으로 지원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임심의위원회제도가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 그래서 바꿀 수밖에 없다.” 소액다건주의의 공모제를 폐지할 때는 이분들이 많은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는 소액다건의 공모방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심의보다는 선정하는 건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략) **또 하나는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심사제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책임심의제도를 바꾼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일하는 사람들, 집행부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심사위원들을 선정할 때 적극 참여하시는 방식으로, (10-11쪽)
- 권영빈 위원장-또 하나는 **심의상의 문제..... 참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데요,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럼 점에서 자율적인 심의가 원만하지 않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는.... 제가 김OO 위원님께 직·간접적으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는 책임심의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고 계신지 알고 있었는데요. 소위원회를 술하게 하고 계시던데 왜 그것이 공유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죠? (12쪽)

#### (나) 제162차 회의록('15.6.25.)

2015. 6. 25. 개최된 예술위원회 회의에서 지원 및 심의 제도와 관련된 논의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예술위 양OO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이 예술위 위원들에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체부의 배제 지시에 따라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프더레코드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sup>145)</sup> 회의록 중 이와 관련하여 연극

분야 정OO 위원과 예술위 아코인력개발원장 양OO이 주고받은 주요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17쪽). 김OO 위원과 박명진 위원장의 발언도 이어진다(19쪽).

- 정OO 위원-예, 저는 답변은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셨는데요.** 첫 해는 이런 사업 자체가 홍보가 되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 신청한 사람들은 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지원이었죠. 1년 동안 인력개발원에서 열심히 하셔서 이 사업도 많이 알려지게 됐고 올해도 많은 단체가 수혜를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배제된 단체, 이 단체들이** 지난번에.... 제가 이 사업을 같이 진행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인력개발원 뿐만 아니라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서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 양OO 아코예술인력개발원장-예, 물론입니다.
- 정OO 위원-굉장히 난감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양OO 아코예술인력개발원장-지금 위원님들께는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단체들이 저희들한테 “왜 탈락했나?”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다 해냈습니다. 행정적으로 작년도 평가부분이나 상대적으로 신청한 단체들.....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가 되고 나면 컴플레인이 있겠습니까만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OO 위원-몇 군데는 잘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17쪽)

- 김OO 위원-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정부와 협의과정에서”라고 얘기하면서 오프더레코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극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대처하고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왜 기록하면 안 되는 건가요?
- 박명진 위원장-저도 최근에 부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쪽)

## (다) 제162차 회의자료('15.6.25.)

예술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양OO이 제162차 회의에 제출한 회의자료에는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업무 협의: '15. 4.15(수)~5.12(화)' 라는 대목이 보인다.

## 5. 진행 경과

가. 국회 사업 예산 승인 : '14. 12. 2

나. 2015년도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 사업 설명회  
: '15. 3. 2(월) 15:00~18:00

다. 2015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15. 3. 17

라. 지원신청공고 : '15 3. 16(월) ~ 3. 31(화) \* 16일간

마.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업무 협의 : '15. 4.15(수) ~ 5.12(화)

## (라) 제165차 회의록('15.7.31.)

한편 제162차 예술위원회 회의에서는 제450호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운영규정 개정(안)은 보류되었고,<sup>146)</sup> 제165차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제165차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 심의 운영 규정(안)과 지원제도 개편과 관련된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sup>147)</sup>

- 장OO 창작지원부장-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두 차례 위원회 회의 때 올라왔었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장 핵심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 개정(안)이 성안되기까지 ○○○위원님과 ○○○위원님께서 많은 시간을 내주셔서 어렵게 성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4쪽 하단부입니다. 기왕에 책임심의위원 제도는 1년 단위의 임기제인 관계로 저희가 탄력적인 운영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심의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냥 심의위원제도를 운영한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35쪽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위원 풀을 구성합니다. 현재는 분야별 또는 사업별로 책임심의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분야별 20~30명으로 심의위원 풀을 구성한 다음에 매번 심의가 있을 때 심의위원 풀에서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지역문화, 문화복지 등 8개 분야의 심의위원 후보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구성하고 구성이 되면 분야별·사업별 심의 시 위원장께서 심의위원 풀에서 적정수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심의위원 위촉결과를 위원회에 보**

146) 제162차 예술위원회 회의록, 30쪽. 2015. 6. 25.

147) 제165차 예술위원회 회의록. 2015. 7. 31.

**고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직원 심의위원 건입니다. 일부 수정인데요. 최근 3년.... 이 제도는 기존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는데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필요시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의위원 임기는 1년입니다. 전체 심의위원 풀이 1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구성 인원은 기존에는 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었던 것을 분야별 또는 사업별 4인~10인으로 구성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심의위원 내 지역인사 포함 건입니다. 기존에는 지역 인사가 최소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했었는데, ※표시를 보시면 이미 7조2항 3호에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구성인원을 안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규정은 폐지를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앞의 개정 내용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신에 37쪽을 봐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설명을 한 것인데요. 7조 3항을 봐 주십시오. 「외부 인사인 심사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1.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분야별 심의위원 후보단을 구성한다. 구성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지역문화, 문화복지로 하며 분야별로 20인 내지 30인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위원장은 지원심의 필요시 상기 1호에 따라 구성된 전체 심의위원 풀에 속한 인사 중 심의의 목적과 성격을 감안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하며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위원회 회의 때까지 올라왔던 안의 경우에는 전체 풀을 구성하고, 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굳이 해당 문구를 넣지 않아도 협의하고 반영하는 것은 기본규정안에 관련 행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구에서는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0쪽을 봐 주십시오. 별표인데요. 기왕에 별표 제1호는 책임심의위원 직무수행계약서입니다. 1년 단위의 심의위원제도가 운영될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엄중하게 직무수행계약서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희가 매년 심의할 때 외에는 단발성 심의이기 때문에 공정심의 서약서로 간소하게 변경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심의 서약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진 것을 말씀드리면 경과규정이 빠졌는데요. 만약 오늘 의결이 되면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이상 17-18쪽).

- ○○○위원-기타 사항에서 말씀드릴 사항이었는데 **대관료지원사업 같은 것은 예산이 전액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부의 계획으로는요.** 그렇다면 창작산실을 제외하고는 현장에서는 대관료지원사업 같은 성격의 지원 사업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32쪽).

#### (마) 심의위원 풀 제도 도입-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15.8.5.)

예술위는 2015. 8. 5.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위원장 결정으로 사무처 직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의위원 풀제도를 도입하여, 1년 단위로 분야별 심사위원후보단(심의위원 풀)을 구성하도록하였다.<sup>148)</sup>

148)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지원심의 운영규정, 1-2쪽.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173차)	
<p>제1조 (목적)</p> <p>이 규정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지원에 관한 제4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에 적용할 운영규칙 중 제173차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지원심의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적용범위)</p> <p>이 규정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다음 중 문화 예술사업의 운영에 위하여 적용한다.</p> <p>제3조 (기금의 목적)</p> <p>당국에서는 문화 예술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의 특성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목적을 위하여 또는 문화 예술의 진흥,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우에 지원하여야 한다.</p> <p>제4조 (지원대상사업의 범위)</p> <p>지원대상 사업은 문화 예술사업의 종류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p>제5조 (지원제한 사항)</p> <p>다음의 지원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p>1. 지원대상 사업의 목적,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p>2. 지원대상 사업의 목적,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p>3. 지원대상 사업의 목적,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p>4. 지원대상 사업의 목적,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p>5. 지원대상 사업의 목적,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p>6. 지원대상 사업의 목적,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p>7. 지원대상 사업의 목적,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p>8. 지원대상 사업의 목적,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p>9. 지원대상 사업의 목적,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p>10. 지원대상 사업의 목적,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p>제7조 (심의회 설치)</p> <p>① 심의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0.1.1&gt;&lt;개정 2011.2.25&gt;&lt;개정 2011.3.7&gt; &lt;개정 2015.8.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테dio 포함) 비영리 민간 교육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lt;개정 2010.1.1&gt;&lt;개정 2015.8.5&gt;</li> <li>2.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lt;개정 2010.1.1&gt;&lt;개정 2015.8.5&gt;</li> <li>3.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인사&lt;개정 2010.1.1&gt;</li> <li>4. 상기 1~3호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문화 예술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인사&lt;개정 2010.1.1&gt;&lt;개정 2015.8.5&gt;</li> <li>5.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이 있는 인사&lt;개정 2015.8.5&gt;</li> <li>6.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능력에 균형을 갖춘 인사&lt;개정 2015.8.5&gt;</li> <li>7. 자신의 견해를 다른 위원들과 합리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인사&lt;개정 2015.8.5&gt;</li> <li>8. 지원신청자 및 신청사업과 상당한 관련성이 없는 인사&lt;개정 2015.8.5&gt;</li> <li>9. 심의 결정 중 지원신청사업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인사&lt;개정 2015.8.5&gt;</li> <li>10. 부패방지 전력이 없으며 청렴성을 갖춘 인사 &lt;신설 2011.2.25&gt;&lt;개정 2011.3.7&gt;&lt;개정 2015.8.5&gt;</li> </ol> <p>② 위원회는 심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lt;개정 2010.1.1&gt;&lt;개정 2011.3.7&gt;&lt;개정 2015.8.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부 영구 및 활동 장려를 고려하되 겸직을 허용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것</li> <li>2. 삭제 &lt;개정 2010.1.1&gt;</li> <li>3. 양명 연합회 사적비 구성은 분야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절히 반영하여 구성할 것</li> </ol> <p>③ 외부인사인 심의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lt;개정 2010.1.1&gt;&lt;개정 2011.2.25&gt;&lt;개정 2011.3.7&gt;&lt;개정 2015.8.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회는 1년 임기로 분야별 심의위원으로(이하 "심의위원"이라 함)를 구성한다. 구성분수는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지역문화, 문화복지 등으로 하며 분야별로 20인내지 30인으로 구성한다. &lt;신설 2015.8.5&gt;</li> <li>2. 위원장은 지원심의 필요시 상기 1호에 따라 구성된 현재 심의위원들에 속한 인사 중 심의의 목적과 성격에 관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lt;신설 2015.8.5&gt;</li> </ol> <p>④ 위원장은 사후적 지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시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lt;신설 2011.2.25&gt;&lt;개정 2011.3.7&gt;&lt;개정 2015.8.5&gt;</p>

(바) 제173차 예술위원회 회의록('15.11.6.)

2015년 11월 6일 개최된 예술위원회 회의에서 문예진흥기금 지원 및 심사 제도 개편과 관련된 주요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sup>149)</sup>

• 이OO 경영전략본부장-그러면 사무기구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잘 아시겠지만 문화융성이 정부의 주요한 기조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회가 해야 할 일로써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위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위원회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고려가 있었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이번 개편방안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창작지원프로세스형 사업으로 재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장르의 위원님들도 계시고, 문체부로 장르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를 장르별로 함으로써 창작지원의 시너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조경제 국민의 행복원천에서 문화융성시대에 있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미래사업본부 내에 협력개발부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극장을 통합했지만 아직 통합에 대한 시너지 부분이 약해서 창작지원과 공연연장 간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공연예술본부를 마련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순회사업이 주로 공연 예술분야로 귀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작사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순회사업을 공연예술본부에 포함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원으로 되어 있는 인력양성사업을 창의예술인력센터라는 이름으로 보다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처장 직속의 국제교류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49) 제173차 예술위원회 회의록. 2015. 11. 6.

- 박명진 위원장-사실은 오늘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까지 가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는 개편이 정관의 변경과 같이 맞물려 있는데, 문화예술위원회 정관은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인 프로세스가 늦어지고 있어서 오늘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 규정(안)이 문체부의 승인이 나게 되면 서면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36쪽)

- 김OO 위원-(생략) 제가 여기에 와서 또 하나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류OO 부장이 저한테 공문을 준 게 뭐냐 하면 심사위원 추천권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안 받아졌습니다. 평론가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안 받아졌습니다. 그 중에 제가 얼굴을 붉히고 우겨서 1명을 넣은 분이 대전에 있는 이응노미술관의 관장이셨는데 **결국 그분도 심사에서 청와대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로 해서 심사에서 빠졌습니다(38쪽).**

#### (5) 문체부조치사항관련 출력물('15.9.11.)

국정원의 '문체부 조치 사항 관련 출력물'(2015.9.11.)에 따르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2015. 9. 11. 경 문예기금 지원 사업 논란과 관련하여 박민권 1차관, B 예술정책관을 불러 문체부 국정감사(9.11.) 및 예술위 국정감사(9.18.)에서 총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2015. 9. 11.-문체부 장관, 문예기금 지원사업 논란 관련 총력 대응

□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문예기금 지원사업과 관련, 좌파진영에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시 사전에 명단을 제출받아 외부 기관에 의뢰, 검증용 하고 부적격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 대상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연극창작산실 지원사업'(4월), '문학창작 지원사업'(7월) 관련 심사위원 및 탈락자를 취재하여, "청와대 정치적 검열" 의혹을 제기하자, 파장 확산을 우려 \*JTBC는 '무대뒤의 손, 정치검열 의혹' 제하로 한국문화예술위측에서 원이 심사위원에게 특정인물을 배제토록 설득하는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9.9. 21:10 뉴스룸), 한겨레신문도 9.11자에서 '정부 문학창작 심사 개입 유신검열 되살아나나'(1면) 제하로 의혹제기 보도 □이와 관련, 김종덕 장관은 ◦9.9 박민권 1차관, B 예술정책관을 불러 문체부 국정감(9.11.) 및 문화예술위 국정감(9.18.)시 파장이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 및 대응논리 마련 등 대책을 지시하고\*

**문체부 조치 사항 관련 출력물**

2015.9.11	<p>문체부 장관, 문예기금 지원사업 논란 관련 총력 대응 □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박명진)의 문예기금 지원사업과 관련, 좌파진영에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 지난해 8월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사전에 명단을 제출받아 외부 기관에 의뢰, 검증할 하고 부적격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 대상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는데 ○ 최근 일부 언론에서 ‘연극창작산실 지원사업’(4월), ‘문학창작 지원사업’(7월) 관련 심사위원 및 탈락자를 취재하여, “청와대 정치적 검열” 의혹을 제기하자, 파장 확산을 우려</p> <p>* JTBC는‘무대뒤의 손, 정치검열 의혹’제하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원이 심사위원에게 특정인물을 배제토록 설득하는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9.9 21:10 뉴스룸), 한겨레신문도 9.11자에서‘정부, 문학창작 심사 개입 유신검열 되살아나나’(1면)제하로 의혹제기 보도 □ 이와 관련, 김종덕 장관은 ○ 9.9 박민권 1차관, B 예술정책관을 불러 문체부 국감(9.11) 및 문화예술위 국감(9.18)시 파장이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 및 대응논리 마련 등 대책을 지시하고 *</p>
-----------	---

(6) 장관님 면담 참고자료(‘15.10.2.)

2015년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2015년 10월 2일 경<sup>150)</sup> 박명진 위원장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제출하였던 ‘장관님 면담 참고자료’(‘15.10.2.)는 모두 3쪽

150) 이와 관련하여 박명진 위원장은 문서에 적혀 있는 2015. 10. 2. 은 문서 작성이 시작된 날짜로 보인다 하고 하면서, 실제 면담이 이뤄진 것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2015. 10. 13.로 보인다고 하면서, 예술위 공용차량 운행일지와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함(하지만 2015. 9. 30. 오OO 사무관이 문체부 내부망인 ‘나루’에 등록한 2015. 10. 2. 문체부 장관 상황관리 장관 일정에는 문체부 장관이 서계동 문체부 사무실에서 박명진 예술위원장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박명진 위원장은 면담이 있었던 날짜는 2015. 10. 2. 이 아니라 2015. 10. 13.라는 취지에서, 장관 일정이란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변화가 잦기 때문에 “만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지” 보다 “예정대로 만났는지”를 확인하여주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됨. 본인이 제출한 자료는 예정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이루어진 증거 자료였다는 점을 상기 해 주시기 바람. 장관 일정 문건에 10월 2일로 면담 날짜가 잡혀 있던 것이 사실이라면 왜 확감도 끝나지 않은 때 그런 일정을 잡았을까 스스로도 의문이 생김, 긴급사항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임. 가능한 추정은 국회에서 확감이 연기되면서 연쇄적으로 장관 면담도 연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됨, 당시 국감은 9월 18일, 확감은 10월 7일로 국감과 확감 사이의 간격이 19일로 예년보다 이례적으로 길었음(2016년에는 10월 10일/10월 13일로 3일의 간격이었음). 국회 일정은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 다반사이므로 연기의 개연성이 큼. 그런 이유로 장관 면담이 애초에는 10월 2일로 예정 되었다가 확감이 연기 되면서 세종시에서 몇몇 기관장 회의가 있었던 13일로 연기 변경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됨. 이라고 이익제기함(2019. 1. 28.).

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1-2쪽은 예술위 직원이 작성한 것이고, 3쪽은 박명진 위원장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sup>151)</sup> 이 문서에 대하여 박명진 위원장이 직접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관님 면담 참고자료’는 취임 후 3개월 만에 있었던 국정감사(2015년 9월)에서 블랙리스트 언급을 처음 듣고 난 후 자체적으로 상황파악을 해서 장관 면담을 신청, 10월 중순경 장관 면담자리에서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를 한 내용으로 1, 2페이지는 직원들이, 3페이지는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특검 압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자료로 제가 특검조사를 받았을 때 담당 검사님이 제시해준 것입니다.

1, 2페이지는 당시 어느 직원이 작성했는지 기억이 없으나 직원들이 답답한 상황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건의 사항을 정리해 준 것입니다.

3페이지는 장관 면담을 위해 제가 작성한 메모 자료이며,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작성하였습니다.

- 1) 정치적 지원 배제 시도는 예술현장에서 보수, 중도로부터도 전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 새누리당 내에서도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음
- 2) 지난 1년 간 비밀스럽게 진행해 온 듯 하지만 문예위 안팎에서는 아는 사람이 많고 위원회 위원 일부와 심의위원 일부에서도 정부의 외압을 의심하여 불만과 저항이 커지고 있음
- 3) 기울어진 운동장(문화예술계의 보수/진보 분포에 대한 당시 정부의 인식)은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점진적으로 바로 잡아야 함
- 4) 문예위에 자율성을 달라
- 5) 문제 사업을 10% 정도라도 바로 줄여 달라
- 6) 순혈주의는 안된다(문화예술은 색깔이 다양해야지 한 가지 정치적 색깔만으로는 안된다)

당시 장관님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관께서는 제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의 한다고 하시고, 본인 생각에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내용 말고는 다 허용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장관과의 면담은 5-10분 정도의 짧은 면담이라 장관께서 말씀하신 ‘왜들’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장관 의견이 그렇다면 상황이 개선되리라 기대했습니다.<sup>152)</sup> 면담 후 위원회로 돌아와 사무처장에게 면담 결과를 전해주자 사무처장도 무척 고무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무것도 달라지지는 않았고, 그 때 비로소 이 문제는 장관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요청 자료에 대한 2차 답변서, 1쪽. 2017. 10.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문체부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지원 배제 관련) 어필해서 예술가/단체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한계가 있는데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전망도 보이지 않아 위원회 간부들은 사업 개편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문학 및 공연 예술 분야에서 순회사업부의 협조 하에 예산을 도움 받아(2016년 순회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은 큰 힘이 됨) 기획사업 방식의 사업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사업 예산의 전용이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기획사업은 문체부에 사업 주관처만 보고하고, 지원 예술가나 단체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도록 설계한 사업으로 정부의 외압을 막고, 지원배제 압력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당시 담당 부장, 본부장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나 결과는 고무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관님 면담 참고자료’는 먼저 2015년 10월 2일 예술위가 파악하고 있었던 예술계 현장 동향을 보여준다.<sup>153)</sup>

#### □ 현장 동향

- 문학, 연극계 등 예술현장의 비판 분위기 확대 우려
  - 좌편향 예술가들 중심에서 중도, 보수층 예술가들도 서명 참여 증가 (현재 800 여명이 참여했다는 주장)
  - 예술인연대포럼 ‘검열과 파행’ 개최 예정: 10. 5(월) 18:00, 대학로 SH아트홀
  - 확감일에 국회 앞에서 관련 단체 시위 계획 중
  - 작가회의가 관련 심포지움 개최 예정: 11.3, 광주
- 예술위의 향후 지원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현장의 집중 주목
  - 무리한 심의 진행시 제2의 심의사태 발생 위험
  - 심의위원 탈퇴 혹은 수락 거부 움직임 가능성(예. 최OO 문예지 심의위원 발언, 박OO 이사장 의견)
- 예술위 위원들의 동요
  - 부역자라는 현장의 비판(정OO 위원),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회의(김OO, 오OO 위원)

한편 이 문서에서 김종덕 장관에 대한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5년 10월 2일 현재 예술위가 블랙리스트 문제로 심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걸리면서 심의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검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

15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요청 자료에 대한 2차 답변서, 1-2쪽. 2017. 10.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3) 예술위, ‘장관님 면담 참고자료’ 1쪽. 2015. 10. 2.

하면서, 향후 심의시 문제사업의 일부 수용을 검토하여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 문서 2쪽에서 <지원심의 진행사업>에서 ‘발송일’은 예술위에서 지원사업 신청자 목록을 문체부로 발송한 날짜를, 접수일은 문체부로부터 배제 지시를 전달받은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블랙리스트 검증 과정이 적게는 29일에서 길게는 50일이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 건의 사항

- 심의 현안사항 해소
  - 문예지 콘텐츠 아카이빙사업에서 <시작>, <오늘의 문예비평>
  - 공연발표 공간지원 사업에서 <선돌극장>(전년도 사업 평가 A)
- 문제 사업의 피드백 시간 단축과 심의 완료 후 추가 통보 지양 절실
  - 심의 대응 전략 마련 시간이 더해지면서 발표 지연으로 의혹 증폭.
- 향후 심의시 문제사업의 일부 수용 검토 필요
  - 문제사업 전체를 관철시키려다보니 예술 현장의 스크리닝 의혹 확산  
심의 불공정 이슈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예술계의 반발 확산 우려

이 문서는 ‘향후 계획’으로 위원회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을 ‘관객, 독자, 향유자와의 소통 중시 지향의 창작지원’, 예술생태계가 공공기금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무성의한 작업 남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선정 및 심의 방식을 다양화’, ‘과다한 집중 지원 해소’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향후 계획

- 위원회 지원사업 패러다임 전환
  - 관객, 독자, 향유자와의 소통 중시 지향의 창작지원  
공공 기금 지원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무성의한 작업 남발 방지  
예술생태계 보존을 공공 지원금에만 의존케 하지 말고 →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한 예술 시장 육성으로
  - 규모가 큰 지원의 경우, 지원금 외 콘텐츠 분야의 펀드 방식 도입
  - 소규모 지원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확대 등
- 선정 및 심의 방식 다양화
  - 단순 공모 → 기획발굴, 추천제 등 혼용
  - 외부 전문가 심사 → 내부 직원 심사 포함
  - 장르별 심사 위원제 → 장르 혼합형으로 (예: 미술 분야에 시인 참여 등)
- 지원 휴지기 도입, 문체부 산하기관 간 정보 교류 등

한편 박명진 위원장이 직접 작성한 이 문서 3쪽에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구사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점진적으로 바로잡을 것”을 장관에게 건의 하면서,<sup>154)</sup> 문제사업 중 10% 정도라도 허용하여 달라고 하는 등 운신의 폭을 조금이라고 허용해 주기바란다고 하여서, 2015년 10월 2일 경 예술위가 블랙리스트 배제 업무에서 운신의 폭이 거의 없을 만큼 배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이 문서에는 당시에 블랙리스트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폭넓고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명진 위원장이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비밀리에 진행 불가능: 현재의 문제 폭넓게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음  
(박OO 지적)  
위원회 위원들 - 오OO 위원 등 심의위원들에게도 물론. 담당 책임자들 상세히 설명한 듯-  
하급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실제 사업 담당자들이므로)
3. 검열이라고 프레이밍을 해 놓았기 때문에 중도, 보수도 동조 거부 명분 상실-박OO 이사장, 주로 예술대 교수들이 앞장서 있으므로 학생들 동원 염려
4. 점진적 접근 필요. 다양한 지원방식 구사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것. 단 운신의 폭을 조금이라도 허용해 주기 바람. 예. 문제 사업중 10% 정도 허용 등. 순혈주의에서 벗어날 필요.

154) 박명진 예술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추가 설명하였음(2019. 1. 28.). “p. 3 페이지는 정식 문건이 아니라 대면시 참고하기 위해 키워드 중심으로 만든 메모이며, “점진적 접근 필요.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바로 잡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당시 정부가 인식한 기울어진 운동장은), BL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말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문체부에 대한 권고였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산하기관에 지나지 않는 문예위가 그런 거시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을 리 만무한데 그런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임.



### (7)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15.11.18.)

2015. 11. 18. 있었던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예술위 지원시스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문체부가 좌성향 단체에의 무분별한 지원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12월 확정) 이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못지 않게 중요한 작업이므로 차제에 동 개편작업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교문수석)”이라고 되어 있다.<sup>156)</sup>

- 문체부가 좌성향 단체에의 무분별한 지원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데(12월 확정) 이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못지 않게 중요한 작업이므로 차제에 동 개편작업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교문수석)

###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사업 개편안('15.12.8.)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2015. 12. 8. 작성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사업 개편안 문서는, 2016년 문예기금 개편안 개요로 (가) 단순공모·일회성 지원에서 성과위주의 사업체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심의제도의 경우에는 심의위원 풀 제도를 도입하고 예술성·대중성·국제진출가능성 등 다원심사를 도입하고, 사업방식의 경우에는 소액다건 직접 지원의 비중을 줄이고 장르별 기획사업을 발굴·강화하며, 평가방식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위주에서 고용실적·관객수·수익창출효과 등 계량 평가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차년도 심의에 평가결과 반영·환류를 강화하기로 하고, (나) 장르별·기능별 사업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장르별로는 문학 및 미술, 공연예술분야별 특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능별로는 국제교류, 예술인력 육성,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156)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15.11.18.)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사업 개편안</b></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15. 12. 29. 문화체육관광부</p> <p><b>□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공모-양적확장 지원에서 성과위주 사업체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제도) 심리위원 풀 도입, 다원심사(예술장대우상당국계산출가능성 등)</li> <li>- (사업발생) 소액다건 직접지원 비중↑, 장르별 기획사업 발굴·강화</li> <li>- (평가방식)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위주 → 계약 평가지표(고유성, 작가수, 수익창출효과 등) 비중 확대(지난도 심리제 평가결과 반영 비중 강화)</li> </ul> </li> <li>○ 장르별·기능별 사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르별) 문학 및 미술, 공연예술분야별 특화된 지원방안 마련</li> <li>- (기능별) 국제교류, 예술인력 육성,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개편</li> </ul> </li> </ul> <p><b>□ 장르별 사업 개선안</b></p> <p>○ 문학분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15년(37,800)</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16년(39,800)</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과 중심의 문명현안 기금지원</li> <li>○ 아로프로젝트기금 (20%)</li> <li>○ 우수문학지원기금 (10%)</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자 유망 발굴</li> <li>○ 국내외 활동지원 (10%) (문학주간, 도서제)</li> <li>○ 우수 작품 지속 생산 유류 지원</li> <li>○ 위촉조성(가)사업(20%)</li> <li>○ 차세대문학인육성 (10%)</li> </ul> </td> </tr> </table> <p>- 집중지원 형식으로의 아로프로젝트기금 개편(추진 후반기 상향 조정)</p> <p>- 문예서 지원을 받던 지원에서 기획사업 지원으로 전환(10억 단위, 3,000건/년)</p> <p>○ 시기예술분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15년(48,320)</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16년(46,120)</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 간 연계성 부족</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인실 지원 방식 도입</li> <li>○ 지원사업 간 연계성 제고</li> </ul> </td> </tr> </table> <p>- 차세대인력육성, 전시지원 등을 창작인실 제개로 개편(20억)</p> <p>- 창작인실 사업과 연계한 아로프로젝트 관련 운영(10억)</p>	'15년(37,800)	'16년(39,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과 중심의 문명현안 기금지원</li> <li>○ 아로프로젝트기금 (20%)</li> <li>○ 우수문학지원기금 (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자 유망 발굴</li> <li>○ 국내외 활동지원 (10%) (문학주간, 도서제)</li> <li>○ 우수 작품 지속 생산 유류 지원</li> <li>○ 위촉조성(가)사업(20%)</li> <li>○ 차세대문학인육성 (10%)</li> </ul>	'15년(48,320)	'16년(46,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 간 연계성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인실 지원 방식 도입</li> <li>○ 지원사업 간 연계성 제고</li> </ul>	<p>○ 공연예술분야</p> <p>▶ <b>장르별심사사업</b>(유치형·연기무용·음악·영상) 분야(안동·여주, 양재류지형(37,200))</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15년(112억)</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16년(113.50억)</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 인 과정별 단계별 지원</li> <li>○ 대본→시놉스→무수공연→재공연</li> <li>○ 작품제작 지원 중심</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공연, 축제, 창작아카데미 신설</li> <li>○ 관객개발·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설</li> <li>○ 관객발달창작기반 구축 중심</li> </ul> </td> </tr> </table> <p>▶ <b>예술위원회 공연장 운영</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15년(100억)</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16년(50억)</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 및 대안외 위주 공연장</li> <li>- 대안외 지원 (34.2%)</li> <li>- 공연장 대안외 (23.5%)</li> <li>- 위촉사업 운영의 위안외 (22.8%)</li> <li>- 공연장(연출)내 운영 (20.5%)</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제작 중심 공연장</li> <li>- 대안공연장(공연 5%)</li> <li>- 기획공연 확대 (80%)</li> </ul> </td> </tr> </table> <p>- 관객친화형 극장 운영을 위한 자체기획 확대('15년 20% → '16년 60%)</p> <p>▶ <b>소지예술 문화순회사업</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15년(300억)</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16년(200억)</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모 100%(100억) +후공 200억</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모 50%(100억)·기획 50%(100억)</li> </ul> </td> </tr> </table> <p>- 문화계 취약계층 확대 및 문화향유 사각지대 보완(2,000여명)</p> <p>- 창작인실 등 문예기금사업 우수 작품의 순회사업 참여 활성화</p> <p>▶ <b>공연예술행사지원·대표계 공연예술제 관장지원회</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15년(291,800)</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16년(329,130)</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위원 등 평가결과 반영여부 없이</li> <li>○ 단일 평가방식</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위원 등 평가결과 반영 일원화</li> <li>○ 목적별, 예술제, 공연제별로 평가방식 세분화 및 평가항목 등 조정</li> </ul> </td> </tr> </table> <p>- 공연예술행사지원(72,600), 공연예술제관장지원회(256,530)</p> <p>- 사업성평가 유무간 두 사업을 동일한 심사위원회 통해 심사하여 사업간 차별화 및 평가 결과 연계 적용 ▲ D등급: 1회 (예산내외) 연액 2회 지원(연도) ▲ F등급: 지원제한(총</p>	'15년(112억)	'16년(113.5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 인 과정별 단계별 지원</li> <li>○ 대본→시놉스→무수공연→재공연</li> <li>○ 작품제작 지원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공연, 축제, 창작아카데미 신설</li> <li>○ 관객개발·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설</li> <li>○ 관객발달창작기반 구축 중심</li> </ul>	'15년(100억)	'16년(5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 및 대안외 위주 공연장</li> <li>- 대안외 지원 (34.2%)</li> <li>- 공연장 대안외 (23.5%)</li> <li>- 위촉사업 운영의 위안외 (22.8%)</li> <li>- 공연장(연출)내 운영 (2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제작 중심 공연장</li> <li>- 대안공연장(공연 5%)</li> <li>- 기획공연 확대 (80%)</li> </ul>	'15년(300억)	'16년(20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모 100%(100억) +후공 200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모 50%(100억)·기획 50%(100억)</li> </ul>	'15년(291,800)	'16년(329,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위원 등 평가결과 반영여부 없이</li> <li>○ 단일 평가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위원 등 평가결과 반영 일원화</li> <li>○ 목적별, 예술제, 공연제별로 평가방식 세분화 및 평가항목 등 조정</li> </ul>
'15년(37,800)	'16년(39,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과 중심의 문명현안 기금지원</li> <li>○ 아로프로젝트기금 (20%)</li> <li>○ 우수문학지원기금 (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자 유망 발굴</li> <li>○ 국내외 활동지원 (10%) (문학주간, 도서제)</li> <li>○ 우수 작품 지속 생산 유류 지원</li> <li>○ 위촉조성(가)사업(20%)</li> <li>○ 차세대문학인육성 (10%)</li> </ul>																								
'15년(48,320)	'16년(46,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 간 연계성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인실 지원 방식 도입</li> <li>○ 지원사업 간 연계성 제고</li> </ul>																								
'15년(112억)	'16년(113.5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 인 과정별 단계별 지원</li> <li>○ 대본→시놉스→무수공연→재공연</li> <li>○ 작품제작 지원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공연, 축제, 창작아카데미 신설</li> <li>○ 관객개발·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설</li> <li>○ 관객발달창작기반 구축 중심</li> </ul>																								
'15년(100억)	'16년(5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 및 대안외 위주 공연장</li> <li>- 대안외 지원 (34.2%)</li> <li>- 공연장 대안외 (23.5%)</li> <li>- 위촉사업 운영의 위안외 (22.8%)</li> <li>- 공연장(연출)내 운영 (2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제작 중심 공연장</li> <li>- 대안공연장(공연 5%)</li> <li>- 기획공연 확대 (80%)</li> </ul>																								
'15년(300억)	'16년(20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모 100%(100억) +후공 200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모 50%(100억)·기획 50%(100억)</li> </ul>																								
'15년(291,800)	'16년(329,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위원 등 평가결과 반영여부 없이</li> <li>○ 단일 평가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위원 등 평가결과 반영 일원화</li> <li>○ 목적별, 예술제, 공연제별로 평가방식 세분화 및 평가항목 등 조정</li> </ul>																								
<p><b>□ 기능별 사업 개선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교류) 기획형 교류사업 강화 및 사업 통합 운영 (66.2억 → 69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단계 심리) 장르별 심리(1단계) → 2단계(장르별+통합심리) (35%)</li> <li>- (사업 통합) 레지던스사업 통합 및 신규창작기회 발굴, 소개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문화기금협회(3억) 및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8억) 강화</li> </ul> </li> </ul> </li> <li>○ (예술전문인력육성) 창작기후무대기술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86.18억 → 111.8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육성기능 강화) 사업총괄 및 사업간 연계기능 강화(4.96억)</li> <li>- (역량개발·협력리창출) 창작인실 연계, 일자리창출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기금연수단지원(45,600억), 무대예술교육센터, 무용수련터지원(13억), 공연예술수업 지원(42.17억)</li> </ul> </li> </ul> </li> <li>○ (후원확대) 예술제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재원조성 지원 (36.12억 → 52.2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금다양화) 지원대상사업과 크라우드펀딩 연계 및 기부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216.3억), 기부 활성화(16억), 기업과 예술의 만남(20억)</li> </ul> </li> <li>- (기회기부) 민간협력 기획형 기부-유치로 예술제 유입 채널 확대</li> </ul> </li> <li>○ (지역문화예술) 문화예술정책 협력체계 구축 (248.2억 → 248.2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161.90) '17년 이관 예정 (행정비용·평가 2.30)</li> <li>- 민간협력세넨인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중시사업인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84억)을 예개로 지역협력 확대</li> </ul> </li> </ul> </li> </ul> <p><b>□ 기타사업</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15년(721.180)</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16년(797.040)</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연)3.27억</li> <li>○ 법인국회 문화재단(300억)</li> <li>○ 장가·비영리문화재단(120억)</li> <li>○ 문화재단(100억)</li> <li>○ 문화재단(100억)</li> <li>○ 예술경영지원센터(20.57억)</li> <li>○ 예술정책지원센터(212.30억)</li> <li>○ 기타(144억)</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연)3.19억</li> <li>○ 법인국회 문화재단(300억)</li> <li>○ 장가·비영리문화재단(100억)</li> <li>○ 문화재단(100억)</li> <li>○ 문화재단(100억)</li> <li>○ 예술경영지원센터(20.57억)</li> <li>○ 예술정책지원센터(212.30억)</li> <li>○ 문화재단(100억)</li> </ul> </td> </tr> </table> <p>&lt;'15 문예기금 총사업비: 1,968.18억&gt; (관장기금286.60, 일반기금 100, 후 1,280.98)</p> <p>&lt;'16 문예기금 총사업비: 2,195.90억&gt; (관장기금286.60, 일반기금 100, 후 1,280.98)</p>		'15년(721.180)	'16년(797.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연)3.27억</li> <li>○ 법인국회 문화재단(300억)</li> <li>○ 장가·비영리문화재단(120억)</li> <li>○ 문화재단(100억)</li> <li>○ 문화재단(100억)</li> <li>○ 예술경영지원센터(20.57억)</li> <li>○ 예술정책지원센터(212.30억)</li> <li>○ 기타(144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연)3.19억</li> <li>○ 법인국회 문화재단(300억)</li> <li>○ 장가·비영리문화재단(100억)</li> <li>○ 문화재단(100억)</li> <li>○ 문화재단(100억)</li> <li>○ 예술경영지원센터(20.57억)</li> <li>○ 예술정책지원센터(212.30억)</li> <li>○ 문화재단(100억)</li> </ul>																				
'15년(721.180)	'16년(797.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연)3.27억</li> <li>○ 법인국회 문화재단(300억)</li> <li>○ 장가·비영리문화재단(120억)</li> <li>○ 문화재단(100억)</li> <li>○ 문화재단(100억)</li> <li>○ 예술경영지원센터(20.57억)</li> <li>○ 예술정책지원센터(212.30억)</li> <li>○ 기타(144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연)3.19억</li> <li>○ 법인국회 문화재단(300억)</li> <li>○ 장가·비영리문화재단(100억)</li> <li>○ 문화재단(100억)</li> <li>○ 문화재단(100억)</li> <li>○ 예술경영지원센터(20.57억)</li> <li>○ 예술정책지원센터(212.30억)</li> <li>○ 문화재단(100억)</li> </ul>																								

## (9) 예술위 2016년도 사업별 업무계획

### (가) 2015년 주요 성과 및 한계

예술위원회 제177차 보고안건 자료인 '2016년도 사업별 업무계획2015년 주요 성과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사업 추진의 한계로 '단순 공모·지원의 한계', '예술성 중심 심의기준의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sup>157)</sup>

#### 1. 2015년 주요 성과 및 한계

##### 1 2015년 주요 성과

- 기초공연 활성화 중점 추진 및 예술창작여건 개선
  - 대관료 지원, 공연창작 전문단체 소속 스텝지원, 무대기술 스텝뱅크 지원 등으로 예술분야의 자생력 제고 노력
    - \* 대관료지원사업(430단체), 공연단체스텝지원(136명), 무대기술스텝뱅크 지원(99명) 등
  -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연예술 종합연습장 조성
    - \* 기존 5개소에서 '15년도 4개소 추가 조성(부천, 인천, 전주, 대전)
-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15.7월 추경예산을 통한 사업확대로 공연예술계 활성화에 기여
    - \* 공연티켓1+1(300억), 통합문화이용권 추가(105억), 문화순회사업(200억) 편성
- 한국문화예술 세계적 위상 제고
  - 세계 최대 현대미술축제 베니스 비엔날레 2년 연속 수상
    - \* 2015년 미술전 본전시 은사자상 수상(임흥순 '위로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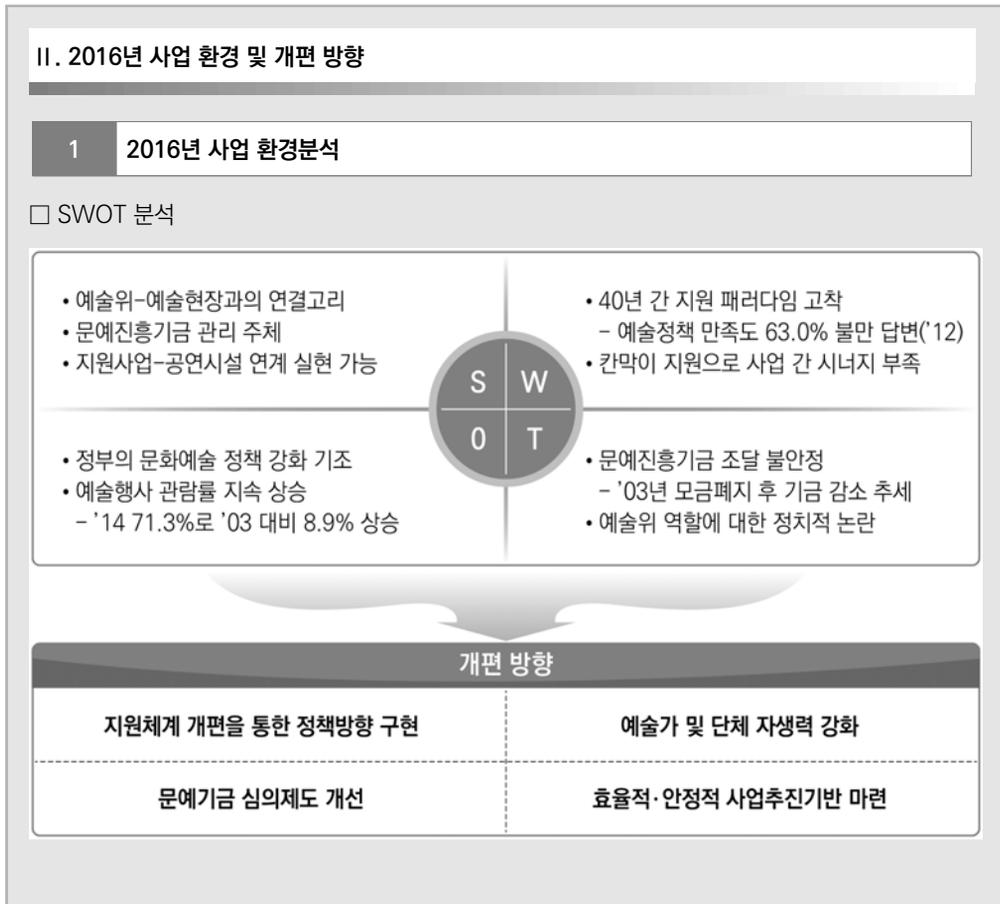
##### 2 사업 추진의 한계

- 단순 공모·지원의 한계
  - 예술가 및 단체의 신청에 의한 단순공모 지원으로 정책 방향 달성 및 예술현장에 대한 근본적 변화 선도 어려움
- 예술성 중심 심의기준의 한계
  - 장르별 전문가 의존도 심화, 예술계에 편중된 심의제도로 국민 체감형 지원사업 개발 미흡
- 지원받지 못하면 창작하지 않는 풍토
  - 공연단체 수입 중 공공자금 비중 54.9%, 자체수입 42% \* 2013공연예술실태조사

157) 예술위, 2016년도 사업별 업무계획, 2쪽.

(나) 2016년 사업 환경 및 개편 방향

한편 이 보고 문서에서 '2016년 사업 환경 및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다. '단순공모·일회성 지원 탈피, 장르별 기획사업 발굴·강화', 책임심의위원회 폐지, 심의위원 풀제 도입('15.9월 완료) 등이 확인된다. '장르별 지원사업 재편 운영, 지원사업 수요-공급 연계해 현장성 강화' 등도 확인된다. 문학의 경우 단순공모, 소액다건식 방식 지원 대신 경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대규모 기획형 캠페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창작 전 과정을 단계별 지원, 작품제작 지원 중심, 대관 및 대관지원 위주 공연장 운영에서 대본 공모 폐지, 창작아카데미 신설, 관객개발·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설, 기획·제작 중심 공연장 운영 등을 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sup>158)</sup>



158) 예술위, 2016년도 사업별 업무계획, 3-4쪽.

**2 2016년 사업 개편방향**

- 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정책방향 구현
  - 단순공모·일회성 지원 탈피, 장르별 기획사업 발굴·강화, 지원사업 간 연계성 제고 및 우수 기획사업 타 장르 벤치마킹 등
  - 예술현장-정부정책 간 매개역할 강화
    - \* ‘문화가 있는 날’ 연계한 장르별 주간행사 개발 등
    - \* 중앙정부, 지자체 및 타 공공기관 협력사업 개발 등 새로운 공공서비스 개발
- 예술가 및 단체 자생력 강화
  - (크라우드펀딩) 문예기금 지원사업 중 일부를 크라우드펀딩에 등록, 단체의 모금 역량을 돕고 재원 확충에 기여
  - (모태펀드) 영화·콘텐츠분야 모태펀드 일부를 순수예술 투자 유도
- 문예기금 심의제도 개선
  - 책임심의위원회 폐지. 심의위원 풀제 도입(‘15.9월 완료)
    - \* 장르별 5명, 총 40명 → 장르 및 기능별 1,000명으로 확대(예정)
  - 예술의 질적 평가 외 사업의 공공성 등 평가비중 강화
    - \* 타 장르 및 문화·사회일반 전문가 심의위원에 포함, 국공립공연장 전문가·전문성 있는 예술위 직원 등 심사 참여
- 문예기금 사업의 효율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장르별 지원사업 재편 운영, 지원사업 수요-공급 연계해 현장성 강화
  - 문예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 마련
    - \* ‘16년 관광기금(500억)·체육기금(500억) 전입, 관련사업 문예기금으로 이관

**3 2016년 장르 및 기능별 주요 개편사항**

□ 장르별 주요 개편사항

장르	현황 및 한계	주요 개편사항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자 중심 관성적 기금지원</li> <li>• 단순공모, 소액다건 방식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li> <li>• 대규모 기획형 캠페인 프로그램</li> </ul>
시각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서면심의만으로 선정</li> <li>• 창작/확산 지원간 연계성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뷰 심사 도입, 최대 3차 심의</li> <li>• 시각예술 창작산실 지원체계</li> </ul>
공연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 전 과정을 단계별 지원</li> <li>• 작품제작 지원 중심</li> <li>• 대관 및 대관지원 위주 공연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본공모 폐지, 창작아카데미 신설</li> <li>• 관객개발·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설</li> <li>• 기획·제작 중심 공연장</li> </ul>

## □ 기능별 주요 개편사항

장르	현황 및 한계	주요 개편사항
국제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 중심사업</li> <li>• 타 사업과 연계 없이 개별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기획사업으로 다각화</li> <li>• 내외부 자원 연계</li> </ul>
인력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기획·무대기술 분야별 전문 인력 육성</li> </ul>
후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에 대한 낮은 인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펀딩사이트 협력</li> <li>• 지원사업과 공동모금 프로젝트</li> </ul>
지역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관성적 지원방식 고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상주단체 협력수준 강화</li> <li>• 선 배정 폐지, 공동 배분기준 적용</li> </ul>
통합문화 이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대상 직접 홍보 한계</li> <li>• 문화소외지역 가맹점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기관 확대 및 협력수준 강화</li> <li>• 문화누리카드 이용여건 개선</li> </ul>

## (다) 추진계획

## ① 문학분야

한편 이 보고 문서에서 ‘추진계획’ 중 문학분야의 경우는 ‘문학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공급자 중심의 관성적인 기금지원 방식을 탈피하고, 독자 수요를 창출하고 우수 작품이 지속적으로 생산-유통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청소년문학영재 발굴’, ‘차세대신진작가 육성’, ‘유망작가 지원’ 등 작가 발굴·육성 지원 사업 등을 계획하고, 기간문학단체 지원, 문예지 지원, 창작공간 지원 등 ‘매체 및 공간 지원’ 사업을 계획하였다. 또 ‘위축된 문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학주간 행사 운영 등을 계획하였다.<sup>159)</sup>

## ② 시각예술분야

이 보고 문서 ‘추진계획’ 중 시각예술분야에서 특이한 것은 ‘창작에서 확산까지 시각예술 지원 패러다임 전환’ 제하에 2015년 차세대예술인력육성(3억), 시각예술비평및연구지원(1억),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10억), 시각예술행사지원(5억)을 2016년에는 시각예술창작산실로 사업 개편하면서 시각예술행사지원은 폐지하고 시각예술전시지원(신규/7억), 차세대예술인력육성(개선/2억), 시각예술비평지원(1억), 시각예술공간지원(10억) 등으로 변경하는 등 창작산실 체계를 구축한 점이다. 또 ‘전시지원을 신설’하

159) 예술위, 2016년도 사업별 업무계획, 8-10쪽.

여 우수 기획전 생산으로 지원방향을 전환하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 심의제도도 ‘개선’하여 ‘차수별 심의제’를 도입하여 2015년에는 서면심의(1차)만 하던 것을 2016년에는 인터뷰 심사를 도입하고, 최대 3차까지 심의(전시지원사업)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sup>160)</sup>

### ③ 공연예술분야

이 보고 문서 ‘추진계획’ 중 공연예술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공모방식을 ‘개선’하여 기존 대본공모에서 기획공모로 전환하였고, 심사위원 구성을 ‘다변화’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창작산실 사업의 경우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창작산실 대표 브랜드 창출’을 위하여 사업체계를 ‘개선’하여, 유통 및 예술시장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 방식 ‘개선’을 통하여 연극, 무용, 음악, 오페라, 전통(\*신설), 뮤지컬 등 6개 장르 총 136편을 지원하고 제작기간도 점증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sup>161)</sup>

## 3. 공연예술분야

### 3-1 공연예술 창작산실

#### ◇ 시장 가능성 중심의 공연예술 창작산실 심의제도 개선

#### ◇ 유통 및 예술시장 진출 지원 강화

##### □ 시장 안착 가능성 중심으로 심의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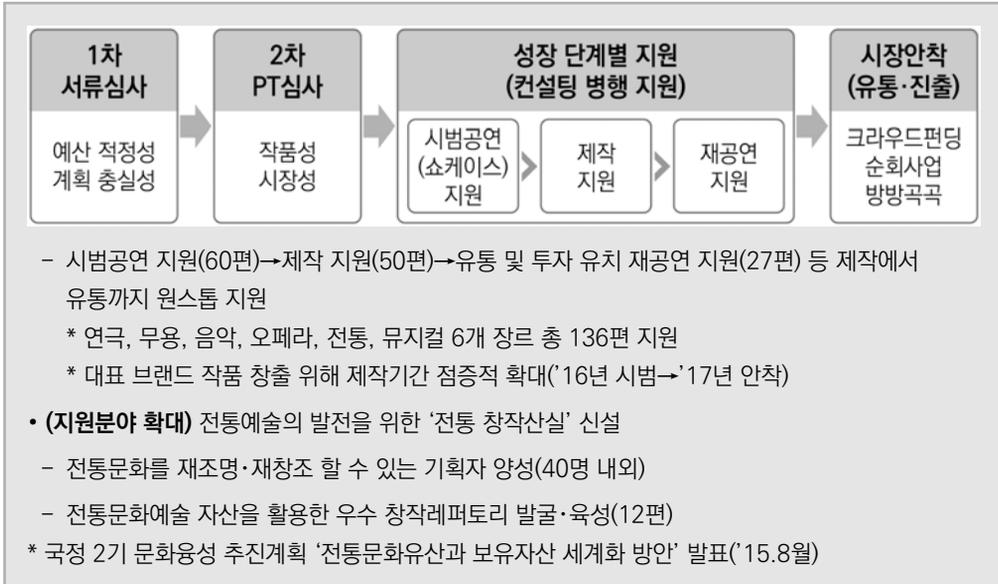
- **(공모방식 개선)** 기존 대본공모에서 기획공모로 개선
- **(심의위원 구성 다변화)** 작품제작 및 시장 안착 가능성을 반영한 심의위원 구성의 다변화 추진(제작자, 공연장 기획자 등 참여)

##### □ 창작산실 대표 브랜드 창출을 위한 사업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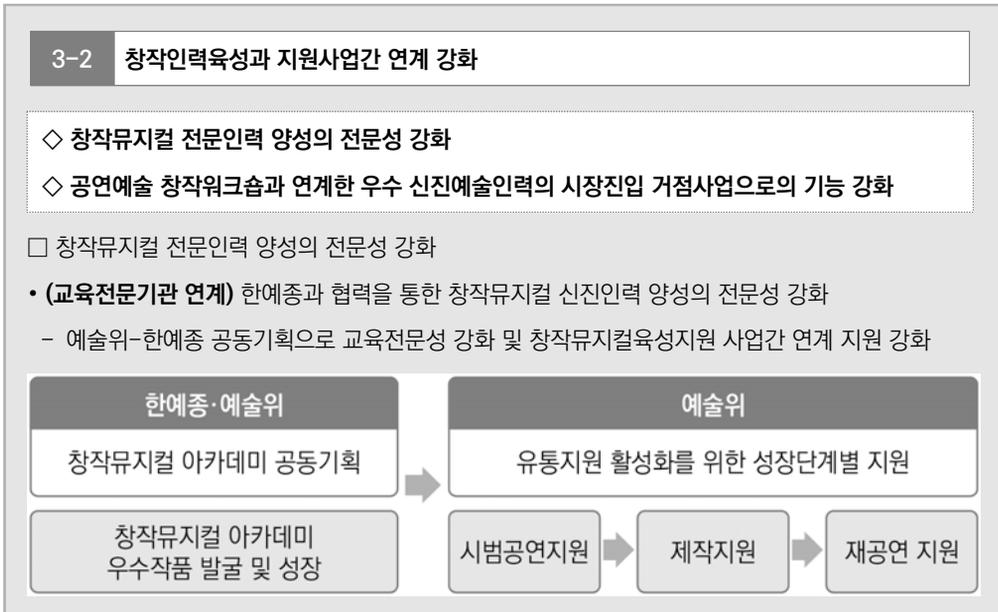
- **(지원방식 개선)** 유통 및 예술시장 진출 지원 강화
  - PT(피칭) 및 쇼케이스를 통한 검증 후 선택과 집중형 제작 지원(공연장 지원, 공연기간 확대 등)
  - 시장진입과 유통 기회 확대(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등)를 통해 대표 브랜드 창출

160) 예술위, 2016년도 사업별 업무계획, 13-14쪽.

161) 예술위, 2016년도 사업별 업무계획, 17쪽.



한편 이 보고 문서는 '창작인력육성과 지원사업간 연계 강화' 제하에 한예종과 연계하여 창작뮤지컬 전문인력 양성의 전문성 강화, 공연예술창작산실아카데미를 통한 '신진예술인력의 공연예술시장 진입 거점사업으로 기능확대' 등도 보고하고 있다.162)



162) 예술위, 2016년도 사업별 업무계획, 18쪽.

\* 한예중 보유 인프라(교수 및 강사진, 시설 등)를 활용한 교육 효과성 제고

□ 신진예술인력의 공연예술시장 진입 거점사업으로 기능 확대

- **(공연예술창작아카데미)** 우수 창작역량 갖춘 분야별 신진 공연예술가를 기획안 및 심층인터뷰 심사를 통해 선발, 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 만 35세 이하 연극, 무용, 오페라, 음악, 전통 등 장르와 경계를 허무는 탈 장르적 공연예술 창작인력 양성(15억원, 총 50명 선발)
  - 신진 예술인력 인큐베이팅 기능 및 심층인터뷰 심사를 통해 우수 작품 발굴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 창작산실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연예술시장 진입 거점사업으로 기능 확대
    - \* 창의예술인력센터의 공연예술창작아카데미와 연계 운영(세부계획은 21p의 인력육성분야에서 상술)
    - \* 공연예술창작아카데미 공동 프로젝트 우수작품→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진출 지원 (연극, 무용, 오페라 등 각 장르별 1건, 20백만원~35백만원 지원 예정)

## (10) 예술정책과 2016년 업무계획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6년 업무계획 ‘창작과 향유가 선순환하는 예술 생태계 조성’(16.3.)에서도 심의위원 구성과 심의기준 다원화, 유형별, 장르별 평가로 체계화하고 계량지표 비중 확대, 차년도 지원심의 반영 강화 등 심의·평가방식 개편<sup>163)</sup>은 확인된다. 예술소비·유통 진작, 예술산업 증장기 과제 발굴 등 예술‘시장’ 활성화 방침도 확인된다.<sup>164)</sup>

## (11) 공연과-순회사업부 협의 안건(16.1.7.)

예술위가 2016. 1. 7. 작성한 ‘공연과-순회사업부 협의 안건’ 문서는 문체부 공연전통 예술과와 예술위 순회사업부 사이에서 협의된 사항을 보여주는데, 먼저 문체부 예술국장의 검토 및 지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63) 예술정책과 2016년 업무계획, 3쪽. 2016. 3.

164) 예술정책과 2016년 업무계획, 10쪽. 2016. 3.

## 공연과 - 순회사업부 협의 안건

'16.1.7(목) / 예술위, 순회사업부

-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 관련 (국장님 검토지시사항)
  - (기획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 - 기획사업 유형 정리
    - 유형별 분류를 사업추진방향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재정리 하였음 (첨부자료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계획안)
  - (순회사업전반) 순회작품의 전반적인 예술성 제고
    - 작품료 차등지원(회당 최대 700만원), 상반기 평가 후 순회 횟수 조정 등
  - (사랑티켓) 전면검토 또는 사업폐지
    - 2016년 사업 주관처 일원화 등 개선 (2017년 폐지 추진)
  - (방방곡곡문화나눔) 민간, 국립단체간 지원상한액 개선
    - 한문연에 내용 전달
- 예술국 요청사항 대응방안
  - (전시순회) 프랑스 장식미술관 전시 한국특별전 순회전
    - 문화소외 기획사업 중 '예술 확산 프로그램'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민간보조금 지원 가능 (10억, 서울, 광주, 부산 전시예정)
  - (분당갑 순회공연 유치) 2월 중 중규모이상의 추진
    - 기획사업의 주관처공모로 진행하기 일정상 불가능하여 직접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함.
    - 전년도에 기획사업 추진단을 유지하여 상반기 내 7-8회 순회공연 내 포함
    - 안전한 순회사업 당분 필요
  - 북한이탈 예술가 및 단체 지원
    - 공모사업 신청단체(5개단체 지원신청)를 우선 선정, 순회차 배차시 해당성사를 높임.
    -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획사업 예청, (인디밴드, 지역, 원로, 북한이탈예술가 등)

- 1 -

### □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 관련 (국장님 검토지시사항)

- (기획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 - 기획사업 유형 정리
  - 유형별 분류를 사업추진방향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재정리 하였음 (첨부자료 2016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계획안)
- (순회사업전반) 순회작품의 전반적인 예술성 제고
  - 작품료 차등지원(회당 최대 700만원), 상반기 평가 후 순회 횟수 조정 등
- (사랑티켓) 전면검토 또는 사업폐지
  - 2016 사업 주관처 일원화 등 개선 (2017년 폐지 추진)
- (방방곡곡문화나눔) 민간, 국립단체간 지원상한액 개선
  - 한문연에 내용 전달



<p><b>2. 심의제도 및 사업추진방식</b></p> <p>□ <b>심의제도: 개방적·다원적 심의제도</b></p> <table border="1"> <tr> <td>2015년</td> <td>2016년</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수 예술인지원 우수 제도실시제</li> <li>· 위촉 수·중요성(연대, 장르·과 구분)</li> <li>· 위촉 예산제외로 구입제인 중 30만</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회위탁 20대제외작가 중 50만</li> <li>· 위촉 예산제, 위촉의 위촉식, 위촉 기금, 위탁제작 등 차별화</li> </ul>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당초에 협의(30만)인 경우 50만(위촉)</li> <li>· 계약일시까지 → 1회적 위촉제외</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일회위탁 20대 단면제 도입(위촉) (일회위탁) 17, 중면제(위촉)</li> <li>· (위촉, 위촉) 지원제도, 임시직 위촉</li> <li>· 위촉 위촉제외로 20대(위촉) 필요도</li> <li>· 위촉 (위촉제외로 위촉) 위촉</li> </ul> </td> </tr> </table> <p>□ <b>사업추진방식: 기획공모사업 비중 강화로 자생력 강화 유도</b></p> <table border="1"> <tr> <td>2015년</td> <td>2016년</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년 대비사업 예산증가 8%, 기획 18%</li> <li>· 기획사업 예산증가 20.2%, 기획 20%</li> <li>(100억 원 중 기획 77억 원)</li> <li>· 당초사업 예산증가 10% (200억 원)</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획공모 위주로 편성(기획 37.3%)</li> <li>· 기획비율 전년승조 36.2%, 기획 44.7%</li> <li>(200억 원 중 기획 200억 원)</li> <li>· 당초사업 예산증가 48.4%, 기획 54%</li> <li>(200억 원 중 기획 180억 원)</li> <li>· 2017년 이후에는 200%이상 조율 조율</li> </ul>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소액지원의 지원</li> <li>· 지원사업 수 2015년 평균 2000건</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연계제 지원 확대(2015-2017)</li> <li>· 2015년 230건, 평균 400만 원 지원</li> <li>→ 2017년 1,500건, 평균 300만 원</li> </ul> </td> </tr> </table> <p>□ <b>평가방식: (창작적 평가 및 현상)를 통해 공공성·책임성 확보</b></p> <table border="1"> <tr> <td>2015년</td> <td>2016년</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문가, 문화계 평가</li> <li>·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제 실시, 200여</li> <li>· 수백 명에 달하는 예술계 관련 평가는 전문</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예술계·문화계 평가 도입(2016)</li> <li>· 제도, 교육정책, 정책 등, 문화계 관련</li> <li>· 예술계, 문화계 관련 사업제외</li> <li>· 2016년 문화계(200명), 문화계(200명)</li> <li>(200명) 문화계(200명) 등 전문성</li> <li>· 2016년 사업제외 지원제외로 일부 제외</li> <li>· 평가기준은 재가년도 실시제 반영</li> </ul> </td> </tr> </table>	2015년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수 예술인지원 우수 제도실시제</li> <li>· 위촉 수·중요성(연대, 장르·과 구분)</li> <li>· 위촉 예산제외로 구입제인 중 30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회위탁 20대제외작가 중 50만</li> <li>· 위촉 예산제, 위촉의 위촉식, 위촉 기금, 위탁제작 등 차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당초에 협의(30만)인 경우 50만(위촉)</li> <li>· 계약일시까지 → 1회적 위촉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일회위탁 20대 단면제 도입(위촉) (일회위탁) 17, 중면제(위촉)</li> <li>· (위촉, 위촉) 지원제도, 임시직 위촉</li> <li>· 위촉 위촉제외로 20대(위촉) 필요도</li> <li>· 위촉 (위촉제외로 위촉) 위촉</li> </ul>	2015년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년 대비사업 예산증가 8%, 기획 18%</li> <li>· 기획사업 예산증가 20.2%, 기획 20%</li> <li>(100억 원 중 기획 77억 원)</li> <li>· 당초사업 예산증가 10% (200억 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획공모 위주로 편성(기획 37.3%)</li> <li>· 기획비율 전년승조 36.2%, 기획 44.7%</li> <li>(200억 원 중 기획 200억 원)</li> <li>· 당초사업 예산증가 48.4%, 기획 54%</li> <li>(200억 원 중 기획 180억 원)</li> <li>· 2017년 이후에는 200%이상 조율 조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소액지원의 지원</li> <li>· 지원사업 수 2015년 평균 2000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연계제 지원 확대(2015-2017)</li> <li>· 2015년 230건, 평균 400만 원 지원</li> <li>→ 2017년 1,500건, 평균 300만 원</li> </ul>	2015년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문가, 문화계 평가</li> <li>·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제 실시, 200여</li> <li>· 수백 명에 달하는 예술계 관련 평가는 전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예술계·문화계 평가 도입(2016)</li> <li>· 제도, 교육정책, 정책 등, 문화계 관련</li> <li>· 예술계, 문화계 관련 사업제외</li> <li>· 2016년 문화계(200명), 문화계(200명)</li> <li>(200명) 문화계(200명) 등 전문성</li> <li>· 2016년 사업제외 지원제외로 일부 제외</li> <li>· 평가기준은 재가년도 실시제 반영</li> </ul>	<p><b>3. 핵심장르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사업개산</b></p> <p>□ <b>문학 분야</b></p> <table border="1"> <tr> <td>2015년 (27.8억 원)</td> <td>2016년 (30.4억 원)</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td> </tr> </table> <p>□ <b>공예 예술 (전문 모임)</b></p> <table border="1"> <tr> <td>2015년(가산 429억 원, 예산 400, 운영 100)</td> <td>2016년(가산 429억 원, 예산 700)</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r> </table> <p>□ <b>시각예술</b></p> <table border="1"> <tr> <td>2015년(48억 원)</td> <td>2016년(48억 원)</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r> </table>	2015년 (27.8억 원)	2016년 (30.4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2015년(가산 429억 원, 예산 400, 운영 100)	2016년(가산 429억 원, 예산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2015년(48억 원)	2016년(48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2015년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수 예술인지원 우수 제도실시제</li> <li>· 위촉 수·중요성(연대, 장르·과 구분)</li> <li>· 위촉 예산제외로 구입제인 중 30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회위탁 20대제외작가 중 50만</li> <li>· 위촉 예산제, 위촉의 위촉식, 위촉 기금, 위탁제작 등 차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당초에 협의(30만)인 경우 50만(위촉)</li> <li>· 계약일시까지 → 1회적 위촉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일회위탁 20대 단면제 도입(위촉) (일회위탁) 17, 중면제(위촉)</li> <li>· (위촉, 위촉) 지원제도, 임시직 위촉</li> <li>· 위촉 위촉제외로 20대(위촉) 필요도</li> <li>· 위촉 (위촉제외로 위촉) 위촉</li> </ul>																																		
2015년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년 대비사업 예산증가 8%, 기획 18%</li> <li>· 기획사업 예산증가 20.2%, 기획 20%</li> <li>(100억 원 중 기획 77억 원)</li> <li>· 당초사업 예산증가 10% (200억 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획공모 위주로 편성(기획 37.3%)</li> <li>· 기획비율 전년승조 36.2%, 기획 44.7%</li> <li>(200억 원 중 기획 200억 원)</li> <li>· 당초사업 예산증가 48.4%, 기획 54%</li> <li>(200억 원 중 기획 180억 원)</li> <li>· 2017년 이후에는 200%이상 조율 조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소액지원의 지원</li> <li>· 지원사업 수 2015년 평균 2000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연계제 지원 확대(2015-2017)</li> <li>· 2015년 230건, 평균 400만 원 지원</li> <li>→ 2017년 1,500건, 평균 300만 원</li> </ul>																																		
2015년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문가, 문화계 평가</li> <li>·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제 실시, 200여</li> <li>· 수백 명에 달하는 예술계 관련 평가는 전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예술계·문화계 평가 도입(2016)</li> <li>· 제도, 교육정책, 정책 등, 문화계 관련</li> <li>· 예술계, 문화계 관련 사업제외</li> <li>· 2016년 문화계(200명), 문화계(200명)</li> <li>(200명) 문화계(200명) 등 전문성</li> <li>· 2016년 사업제외 지원제외로 일부 제외</li> <li>· 평가기준은 재가년도 실시제 반영</li> </ul>																																		
2015년 (27.8억 원)	2016년 (30.4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2015년(가산 429억 원, 예산 400, 운영 100)	2016년(가산 429억 원, 예산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2015년(48억 원)	2016년(48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p>□ <b>공연 예술 (전문 모임)</b></p> <table border="1"> <tr> <td>2015년(가산 429억 원, 예산 400, 운영 100)</td> <td>2016년(가산 429억 원, 예산 700)</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r> </table> <p>□ <b>시각예술</b></p> <table border="1"> <tr> <td>2015년(48억 원)</td> <td>2016년(48억 원)</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r> </table> <p>&lt;문제점 및 대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대조) 전체의 집중 원칙에 따라 정책적 지원은 단계적 집중 지원</li> <li>○ (예술 공예) 대안으로 지원사업(2017) 제외로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 전문성</li> <li>○ (대외) 사업추진방식(2017) 지원사업(2017) 지원, 전문성</li> </ul>	2015년(가산 429억 원, 예산 400, 운영 100)	2016년(가산 429억 원, 예산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2015년(48억 원)	2016년(48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p>□ <b>문학 분야</b></p> <table border="1"> <tr> <td>2015년 (27.8억 원)</td> <td>2016년 (30.4억 원)</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td> </tr> </table> <p>□ <b>공예 예술 (전문 모임)</b></p> <table border="1"> <tr> <td>2015년(가산 429억 원, 예산 400, 운영 100)</td> <td>2016년(가산 429억 원, 예산 700)</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r> </table> <p>□ <b>시각예술</b></p> <table border="1"> <tr> <td>2015년(48억 원)</td> <td>2016년(48억 원)</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td> </tr> </table> <p>&lt;문제점 및 대책&gt; 예술사업 집중</p>	2015년 (27.8억 원)	2016년 (30.4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2015년(가산 429억 원, 예산 400, 운영 100)	2016년(가산 429억 원, 예산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2015년(48억 원)	2016년(48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2015년(가산 429억 원, 예산 400, 운영 100)	2016년(가산 429억 원, 예산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2015년(48억 원)	2016년(48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2015년 (27.8억 원)	2016년 (30.4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내일주거' 공모사업 (100만 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li>· 100만 원(100만 원) 지원</li> </ul>																																		
2015년(가산 429억 원, 예산 400, 운영 100)	2016년(가산 429억 원, 예산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예 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2015년(48억 원)	2016년(48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시각예술' 지원사업(2017)</li> <li>· 예술 공예의 중요성 인식제외로 전문</li> <li>· 전문성</li> <li>· 전문성</li> </ul>																																		

한편 2016. 1. 8. 예술정책과 작성,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 보고' 문서는 먼저 시장과 괴리된 '손수레 밀기' 식 답습지원을 지양하고, 자생력 강화를 유도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방식) 창작위주 직접제작 지원/단순 공모 → 간접지원/기획사업 강화
- (심사) 폐쇄적 심의제(소수의 책임심의제) → 개방적·다원적 심의제(pool)
- (평가) 정량평가·환류 부재, 답습적 지원 → 정량·객관적 지표 도입/환류

한편 이 문서가 제시하는 ‘중점 추진과제’ 및 ‘향후 조치계획’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점 추진 과제 \*세부 내용: 별첨

- (사업방식) 소액·다건식 단순공모 축소, **기획공모사업 비중 강화**
  - 창작지원사업: 단순공모(15년 79%→16년 38%) < 기획공모(15년 21% → 16년 62%)
  - 규모: 2,870건(15년, 평균 2,900만원) → 2,000건(16년, 평균 4천만원) → 1,500건(17년, 6천만원)
  - ※ (장르별 중점 개선 사항):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갖춘 단체 육성

<b>문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눠주기식 소액다건 공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창작공모 대폭축소(10억→3억)</li> <li>• 신진/차세대 작가 발굴, 문학주간, 문학 대중화 등 기획사업 중점 추진</li> </ul>
<b>공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성위주 심의(대본공모 등)</li> <li>• 일반 단순공모(순회 사업 등)</li> <li>• 묻지마식 일반 대관 상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역량(기획·마케팅·해외진출) 우선고려</li> <li>• 맞춤형 기획사업 신설(순회사업 100억 등)</li> <li>• 검증된 기획대관 강화(기획: 26%→55%)</li> </ul>
<b>시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 다건 행사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기획전시, 미술주간 등 기획 지원</li> <li>• 아티스트 피 제도 시범도입</li> </ul>

\* 일부 효과가 낮은 사업은 단계적 폐지 추진(뮤지컬 직접제작지원, 사랑티켓 등)

- (심의제) 소수 예술전문가 중심 심의제 폐지, 개방적·다원적 심의제 도입
  - 심의위원풀(Pool) 마련(8개 분야 500여명), 기획 사업별 맞춤형 심의운영
  - 예술성 뿐만 아니라 대중성, 해외진출가능성 등 다원적 시각에서 심사
  - ※ 사업자 선정의 공공성·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무기명심사(아르코 창작기금사업) 대본심사(창작 산실) 등도 폐지→추천제, 기획공모 등 도입
- (평가, 환류) 객관적·정량적 평가 도입으로, 예술단체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 계량평가지표(고용, 관객 수, 수익창출)를 시범도입(2016년, 4개 대표사업)

- ※ 대표 시범사업: ①시각예술창작산실(20억) ②창작뮤지컬육성(58억) ③공연예술창작산실(60억)  
④순회사업 기획공연(100억) 중 핵심사업 → 차년도 반영

□ 향후 조치계획

- 2016년도 사업 설명회(의견수렴) 개최(예술위주관, 1.12) → 확정, 승인(1월 중순)
- ※ 예술계 자생력강화 TF 구성, 사업 전면혁신안 지속도출(1/4분기, 2017예산 정부안 반영)

한편 이 문서는 문학분야 심사 개선 특이사항으로 무기명 원고공모 심사를 폐지하고 인터뷰 심의 등 신규도입을 제시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 문학분야의 문제점 및 대책(4쪽)은 다음과 같다.

- (기대효과) 나눠먹기식 지원 문제 최소화. 실적없는 작가·단체에 대한 책임성 확보
- (예상문제점) 연례적 지원을 기대한 문학계 및 문예지의 반발 예상
- (대책) 개별지원보다는 문학계 전체의 활성화(대중화) 등 명분 전파(간담회)  
문학진흥법 제정 등을 계기로, 중장기계획 수립 등 선제적 여론주도(1월~TF 구성 운영)
- ※ 문학계 최소화를 위해 작가회의 등 일부 문예지에 대한 예외 병행 검토(단계적 축소)

또 이 문서는 공연예술분야 심사 개선 특이사항으로 극장 대관 심사를 2단계로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작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기대효과)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경쟁력있는 단체에 집중 지원
- (예상 문제점) 대관료 지원사업(도입 2년째) 폐지에 따른 기존 수혜자 반발, 상징성있는 행사(서울연극제 등) 대관 탈락에 대한 일부 연극계 반발 등
- (대책) **사업부작용(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민간공연장 대관료 상승 등) 등에 대해 설득(간담회 등), 전국단위 행사에 대한 지원원칙 강조 및 홍보**

### (13) (대외비)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16.9.9.)

2016. 9. 12.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박OO이 조운선 문체부 장관에게 업무보고에서 예술정책과 김OO 과장과 C 사무관이 작성한 '(대외비)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3.9월~11월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





### (15) 2015/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관련정부의 외압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 (2018. 4. 현재)

예술위가 위원회에 2018. 4. 25. 제출한 ‘2015/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관련정부의 외압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2018. 4. 현재)’는 예술위가 자체 진상조사 TF를 통하여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2016년 예술위 지원 사업 개편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167)</sup>

#### 3. 정부의 외압에 대한 예술위의 대응

□ 정부의 지원심의를 대한 외압에 대해 2015년도의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았음.

##### □ 1단계 : 부당성과 실행 불가능 및 곤란 상황 전달 및 건의

- 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원리에 비추어 이유 없는 특정 예술가 및 단체 지원 배제 불가 설명
- 지원심의를 대한 외압은 향후 정부에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과 문화융성 국정기조에 정면 배치됨을 호소

##### □ 2단계 : 지원 배제 요구 예술가 및 단체에 대한 적용 최소화 건의

- 부당함과 실행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지시 이행의 최소화로 대응
- 지원 배제 요구를 받은 예술가 및 단체 중 지원이 필요한 예술가 및 단체에 대해 지원 필요성을 정리 및 작성하여 보고서 형태로 수시로 전달하고 설득함
- 지원 배제 요구를 받은 예술가 및 단체 중 예술적 성과, 예술계에 대한 기여, 사업의 기대효과, 지원 배제 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조사하여 서면으로 정리하여 문체부에 전달
- 이러한 적용 최소화 노력의 결과, 일부 성과가 있었음

\* 상세내용 : 후술 개별적인 외압 최소화 노력과 결과(사업별 주요사례) 참조

##### □ 3단계 : 지원 배제 요구 예술가 및 단체에 대한 우회 지원

- 지원 배제 요구의 철회를 이뤄내지 못한 사업 중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사업 (정책적 중요성)의 경우 정부의 눈을 피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
- 우회지원 대표 사례 : 작가회의 40주년 기념사업 지원, 한강 작가 해외레지던스 파견 지원 등

\* 상세내용 : 후술 개별적인 외압 최소화 노력과 결과(사업별 주요사례) 참조

167) 예술위, ‘2015/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관련정부의 외압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 (2018. 4. 현재)’, 5-7쪽. 2018. 4. 25.

□ 4단계 : 정부에서 절대로 양해하지 않은 지원배제 요구의 이행

- 지원 신청 공모 시 제시한 형식적인 결격 사항이나 지자체 등 타 재원의 중복 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에 전달(이러한 파악은 통상적으로 모든 지원신청 건에 대해 진행하는 업무임)
-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들에게 정부의 요구가 있었고 불가피한 상황임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감안해 줄 것을 요청
- 이때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절대로 양해하지 않은 지원배제 건에 대해서는, 지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지원심의를 진행 및 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는 문체부의 지시사항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음(이는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설명)

□ 2016년도의 경우, 기본적인 대응 기초 면에서 2015년도와 유사한 방식과 단계로 대응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새로운 대응 양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짐

- 문학분야 지원사업 전체, 문화예술단체 연수단원지원사업의 일부 등 지원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배제 요구를 무시하고 정상적으로 지원심의를 진행, 사업을 추진함.
- 아울러, 문학 및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기획사업 방식의 사업을 신설하여 정부의 외압을 막고 지원배제 압력의 피해를 대폭 줄이고자 시도하였음.
  - 문학분야 기획사업 : 문체부에 사업 주관처만 보고하고 지원 예술가나 단체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5억원에 불과하여 지원금 액수는 적지만 200명 넘는 작가들을 지원함(문학주간 70여건, 문학 순회사업 300여건, 기획형 공연순회사업 일부 30여건 등)

## 나. 참고인 등 대인 조사

### (1) 참고인 양OO의 진술<sup>168)</sup>

참고인 예술위 양OO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제162차 예술위원회 회의록 15쪽에서 2015년도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 대상 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타 분야는 선정률이 60% 이상 되었지만 연극분야는 40% 밖에 안 되어서 연극 분야 선정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고, 문체부의 지원 배제 조치로 이미 탈락한 단체들에게 다시 한 번 탈락 사유까지 '단체의 수행 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싶지는 않았다.

168) 양OO 1회 진술조서, 3-4쪽, 2018. 1. 19.

- (나) 회의록 17쪽과 19쪽에서 예술위원들에게 ‘오프더 레코드’로 설명하면서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과 관련하여서는, 연극과 문학 분야에 주로 블랙리스트가 많았는데, 아르코인력개발원은 연극 분야 등 공연예술분야를 관장하고 있었고, 연극 분야에서 탈락한 분들이 탈락 사유를 물어볼 것이고 설명을 해야하는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 (다)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블랙리스트 문제가 공론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당시 심의위원들도 폭 넓게 알고 있었고 예술계에도 많이 알려져 있었기에 그날은 자신이 예술위원들에게 ‘오프더레코드’로 하고, 당시 예술위 지원심의회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상황을 폭넓게 설명하였고, 향후 예술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하여 정식 대응을 예술위 조직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뜻에서 예술위원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였다.
- (라) 당시 (제162차 예술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가령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업무 협의: 15.4.15(수)~5.12(화)’이라는 표현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사항을 예술위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넣었던 것이다.
- (마) 회의록 17쪽에서 연극분야 정OO 예술위원이 ‘굉장히 난감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블랙리스트로 배제된 단체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자신이 “예, 물론입니다.”라고 답하였던 것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은 연극 분야에서 문체부로부터 내려온 블랙리스트에 대하여 정OO 연극분야 예술위원에게는 사전에 설명을 하였고, 정OO 위원은 걱정을 하면서 배제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 (2) 참고인 정OO의 진술<sup>169)</sup>

참고인 예술위 연극분야 예술위원 정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가) 제162차 예술위원회 회의록 15쪽에서 양OO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이 예술위원들에게 ‘오프더 레코드’로 설명하면서 당시 예술위 지원심의회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상황을 폭넓게 설명하였던 사실과 관련하여, 애초에 정치적 의도가 없이 만든 사업이었던 기획 및 스태프 인력 지원 사업 등에서 블랙리스트가 적용되자 탈락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항의를 해 왔을 때 설명할 수 있

169) 정OO 1회 진술조서, 9-11쪽. 2018. 2. 13.

는 방법이 없었다.

- (나) 블랙리스트를 다 막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막아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예술위원에서 중도 사퇴하고자 했지만, 연극 분야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이 가장 극심한 상황에서 자신이라도 남아서 블랙리스트를 최대한 막아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사람들이) 말려서 사퇴 의사를 철회했던 것이고, 그때는 박근혜 정부나 보수 정권이 계속해서 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국정농단 사태로 보수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라도 남아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최대한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3) 참고인 이OO의 진술<sup>170)</sup>

참고인 예술위 이OO 예술진흥본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가) 문체부는 2016년부터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에서 공모 방식을 축소하고 기획사업을 확대하는 등 문예기금 지원 및 심사제도를 개편하였다.
- (나) 2016년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서 다원예술지원, 우수문예지 지원사업, 공연 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사업 등이 폐지 또는 축소된 것은 블랙리스트가 해당 사업에서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 (4) 참고인 이OO의 진술<sup>171)</sup>

참고인 예술위 사무처장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가) 2016년 문예진흥기금사업과 관련하여 1)책임심의위원 제도를 심의위원 풀제로로 개편 2) 정기공모를 축소하고 연중 수시 공모 확대 3)공모사업을 줄이고 기획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블랙리스트로 인한 심의 지연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 (나) 이러한 취지에서 새로 기획됐던 사업 중에는, ① 2015년에 문예지사업을 축소 집행한 결과 남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2015년 말경 문예지아카이빙사업을 하였고, ② 유망작가지원사업, 문학주간행사 등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신설된 사업이었고, ③ 우수문예지지원사업,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창작산실 대본 공모사

170) 이OO 1회 진술조서, 18쪽. 2018. 1. 24.

171) 이OO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1. 31.

업, 대관료 지원사업,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등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폐지한 사업이라고 하였고, ④ 원로연극제 사업의 경우는 본래 문체부에서 하던 사업을 이관 받고 예산이 추가된 사업이다.

##### (5) 참고인 김OO의 진술<sup>172)</sup>

참고인 예술위 순회사업부장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문체부 예술국과 예술위 공연예술본부가 사업계획 방향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자신은 순회사업부 담당 부서장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계동 문체부 회의실, 문화역서울284 회의실 등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였고,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예술정책과 사무관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B 예술국장이 문예진흥기금 혁신안을 강조하곤 하였다.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기금사업 개편안(15.12.8/예술정책과) 문서가, 그러한 문체부와 예술위 사이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문서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업 분야가 2쪽에 있는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항목이 맞다.

(라) 예술위 순회사업의 경우 이 문서의 계획대로 실행되었다.

(마)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 보고(2016.1.8.)’ 문서의 경우, 2015년 12월 8일 개편안 문서 이후 2016년 1월 8일 개편안 문서가 나오기까지 계속적인 수정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바) 2015. 12. 8.에서 2016. 1. 8. 사이에 문체부 예술국과 예술위 각 지원본부(공연예술본부, 문학시각지원본부)가 각각 논의를 진행하였을 것인데 순회사업부의 경우는 공연예술본부에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예술정책과와 함께 문예기금 사업 개편안을 논의하였다.

##### (6) 참고인 오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문제로 심사가 지연되거나 결과 발표가 미뤄지는 등 문제가 많아서 공모제를 기획사업으로 전환하고, 책임심의위원제도를 심의위원 풀

172) 김OO 2회 진술조서, 3-6쪽. 2018. 4. 6.

(pool)제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문예진흥기금 지원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하였던 것이라고 하면서 블랙리스트가 많이 응모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 중에서는 폐지한 사업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73)</sup>

#### (7) 참고인 이OO의 진술<sup>174)</sup>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이OO는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가) 2015. 11. 18.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로 볼 때 결국 문체부가 ‘좌성향 단체’에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개편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블랙리스트를 배제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고, 순수한 의미에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측면도 있었다.
- (나) 이러한 문화예술지원시스템 개편에 대하여는 2014년에는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A에게 지시를 받은 바 있고, 2015년 하반기에는 김OO 선임행정관에게 다시 지시를 받았다.
- (다) 2015. 12. 8. 자 예술정책과 작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기금사업 개편안’ 문서는 김OO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지시를 구체화한 문서이다.
- (라) 2016. 1.8. 자.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 보고’ 문서는 2015. 12. 8. 자 문서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 (8) 참고인 김OO의 진술<sup>175)</sup>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가) 2016. 1. 8.(금) 문체부 예술정책과 작성,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보고’ 문서는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초안을 만들고 자신이 B 예술국장, 김종덕 장관에게도 보고하였던 문서다.
- (나) 자신이 예술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뒤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으로부터 “제가 예술위 이OO 예술진흥본부장, 장OO 창작지원부장, 류OO 국제교류부장 등에게 주로 리스트를 유선으로 불러주거나 명단 숫자가 좀 많은 경우에는 대학로 예

173) 오OO 1회 진술조서, 30-31쪽. 2018. 2. 7.

174) 이OO 1회 진술조서, 19-20쪽. 2018. 2. 1.

175) 김OO 1회 진술조서, 8-11쪽. 2018. 1. 12.

술가의 집에서 만나 신청자 명단을 보고 배제자 명단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고, 자연 탈락이 되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순위 안에 들어가더라도 정산이 안 되었다거나 민원이 있다거나 등 탈락 시킬 명분을 찾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친분 있는 책임심의위원들에게 배제를 부탁하기도 한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사업으로 분류하여 저에게 보고를 해왔고, 과장, 국장, 차관, 장관 등 보고 절차를 거쳐 청와대와 협의하여 양해를 구하였고, 그래도 양해가 안 되면 예술위에서 무조건 탈락시키거나 아예 사업을 축소 또는 차기년도에 폐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 (다) 예술위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경우 2015년까지는 90% 정도는 연초에 선정하는 정기 공모사업이었고, 나머지가 연중 공모하는 사업이었는데, 대상자가 많아서 청와대에 공모 현황을 보내고 배제 리스트를 받고, 양해·지원 불가 대상 확정 등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2015년의 경우 7월에 가서야 최종 확정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2016년 부터는 (다른 이유로 있기는 하였지만 주로) 위 블랙리스트 확인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정기공모사업 비중을 줄이고 연중 공모사업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던 것이다.
- (라) 실제 2016년 정기공모사업 비중을 줄이고, 공모사업 중 일부는 문체부 기획사업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 (마) 공모사업을 기획사업으로 전환한 이유는 공모사업의 경우 심의위원들의 영향력이 커서 문체부와 예술위가 선정에 관여하기 힘들지만, 기획사업의 경우 청와대에서 배제하라고 하는 인물이나 단체를 손쉽게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측면이 많았다.
- (바) 2016년부터는 예술위 공모사업에서 책임심의위원제도 대신 심의위원 pool제로 하여 사업별 심사 때마다 심의위원 pool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장르별 책임심의위원 1차 심사과정에서 심사가 다 끝난 후 배제 명단이 내려오는 경우 이를 배제하기가 어려웠고,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알려지거나, 심의절차가 늦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 (사) 이러한 제도개선(안)은 2016.1월 말~2월 초 장차관 보고 후 김소영 청와대 문체비서관에게 자신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직접 자료를 주었고, 이후 몇 차례 전화 협의 후 최종 확정되어 시행하게 된 것이다.
- (아) 결국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정기 공모 사업 축소 2)공모사업

의 기획사업으로 전환 3)심의위원 pool제 등 예술위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을 하게 되었던 측면이 많았다.

- (자) 다만 당시 B 예술국장은 시스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예술지원정책을 고민하고 있던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손쉽게 하기 위한 의도도 함께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 (차) 김소영 청와대 문체비서관이 (문예진흥기금 지원) 시스템을 바꾸라는 지시를 계속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 (9) 참고인 B의 진술<sup>176)</sup>

참고인 문체부 예술국장 B는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가) 2015. 8월 문체부 예술국장이 된 후 이OO 예술정책과장, 오OO 예술정책과 사무관으로부터 김OO 예술국장 재직 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전반적 경위 및 실행 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자신이 예술국장으로 재직된 후에도 청와대 지시로 블랙리스트 실행되고 있다는 것은 보고 받았지만 개별 배지 지시를 따로따로 보고 받지는 않았다.
- (나) 2015. 9. 11. 경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jtbc보도(9.9.), 한겨레신문보도(9.11.) 등 예술검열과 관련된 언론에서의 논란과 관련하여 박민권 문체부 1차관과 자신을 불러 문체부 국정감사(9.11.), 예술위 국정감사(9.18.) 시 파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다) 2015. 10. 2. 박명진 위원장이 김종덕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 자신도 배석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 면담 참고자료’ 문서에 적힌 내용들은 자신도 들었을 것이다.
- (라) 2016. 1. 8.(금) 예술정책과 작성,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보고’ 문서는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초안을 만들고 김OO 예술정책과장이 자신에게도 보고하고 김종덕 장관에게도 보고하였다.
- (마) 2015년 가을 경 구 서울역사 지하에서 자신이 주재하고 문체부 예술국과 예술위가 참여하는 예술위 심의 제도 개편과 관련된 워크숍이 개최된 바 있고,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위 ①항에서 언급된 문서들에 일부 반영된 것이 맞다.

176) B 1회 진술조서, 5-6쪽. 2018. 3. 23.

- (바) 이러한 제도개선(안)은 2016. 1월 말~2월 초 장차관 보고 후 김소영 청와대 문체비서관에게 김OO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직접 자료를 주었고, 이후 몇 차례 전화 협의 후 최종 확정되어 시행하게 된 것이 맞고, 김종덕 장관에게는 자신이 보고를 하였다.
- (아) 결국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 정기 공모 사업 축소 2)공모사업의 기획사업으로 전환 3) 심의위원 pool제 등 예술위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을 하게 되었던 것이 맞다.
- (자) 1-2주에 한 번 가량 청와대에 들어가서 김소영 비서관에게 주례 보고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김소영 문체비서관이 문예기금 지원 시스템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 (차) 청와대로부터 받은 배제 지시나 위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예술위 지원 및 심사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박명진 예술위 위원장이나 이OO 예술위 사무처장, 류OO 예술진흥본부장 등과 자신이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고, 주로 담당 사무관을 통해서 소통하였다.

## (10) 참고인 박명진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박명진 위원장은 위원회에 2018. 4. 25.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답변서에서 “○ 2016년 당시 지원사업 개편은, 문예위가 지원배제 지시 이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문체부 측에서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돌파 할 것을 종용해서 추진된 것으로 보고받았음. ○ 그러나 기획사업의 신설 같은 것은 지원체계 개편의 애초 목적과 다른 결과도 초래했음. 문체부에 사업 주관처만 보고하고 지원 예술가나 단체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가 가능해서 문학 분야 기획사업 같은 것을 통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블랙 리스트의 영향을 받지 않고 200명 넘는 작가들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음. 공연 예술 분야도 기획형 순회사업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진술하였다.<sup>177)</sup>

박명진 위원장은 2018. 4. 26. 추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 2016년 당시 지원사업 개편은, 문예위가 지원배제 지시 이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문체부 측에서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돌파 할 것을 종용해서 추진된

177) 박명진 사실확인답변서, 3-4쪽. 2018. 4. 25.

것으로 보고 받았음. 그러나 위원회 간부들은 지원체계 개편 내용이 지원배제를 위한 방안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하지는 않았음. ○ 정기공모사업의 축소는 2014년 지원 사업을 평가한 경영평가에서 “백화점식 직접 지원사업들은 지양하고 하위기관의 지원과 조정 역할에 기관역량을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도 있었다고 보고 받음. ○ 또한 정기공모 사업 축소는 전임 위원장 시절부터 위원회 안팎에서 민간 재단이나 지방 문화재단에서 따라하고 있는 소액다건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전국기관답게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반영한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고 받았음. ○ 책임심사위원제의 폐지는 소수의 심의위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므로 심사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미 있었고 2015년 사업 심의(2015년 초 까지 진행되는)까지만 그대로 하고 Pool제로 바꾼다는 방침을 이미 정해 놓았었다고 보고 받은 바 있음. ○ 기획사업의 신설의 경우는, 예술시장 육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모가 큰 지원사업을 만들어 기획 발굴사업을 시도해야 한다는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했던 정책 방향을 접목 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고 받았음. ○ 그러나 기획사업의 신설 같은 것은 지원체계 개편의 애초 목적과 다른 결과도 초래했음. 문체부에 사업 주관처만 보고하고 지원 예술가나 단체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가 가능해서 문학 분야 기획사업 같은 것을 통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블랙 리스트의 영향을 받지 않고 200명 넘는 작가들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음. 공연 예술분야도 기획형 순회사업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추가 진술하였다.<sup>178)</sup>

#### 다. 소결

이상의 문서와 사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배제 하기 위하여 확인 과정이 지연 되면서 심사 및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여론이 악화되거나, 사회적 이슈와 연계된 블랙리스트 단체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당시의 공모시스템으로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여서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는 공모사업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생겼고, 청와대는 문체부에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개편을 지시하였다. 이렇나 배경 하에서 2016년 하반기 문체부 예술극장 주제로 문체부와 예술위가 워크숍을 개최

178) 박명진 사실확인답변서, 3-4쪽. 2018. 4. 26.

하는 등 문예진흥기금 사업 개편에 관한 논의 과정을 거쳐 2016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개편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공모제 사업을 축소하고 기획사업을 확대하고, ② 소수 전문가의 책임심의제 대신 심의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였고, ③ 정기공모사업을 축소하고 연중 수시공모를 확대하는 것 등이었고, 이는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공모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 혹은 변경되기도 하였고, 새로운 사업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 10. 2016년 문예진흥기금 추진 과정에서 일부 양해 조치가 있었던 경위

#### 가. 문건 등 자료조사

##### (1)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16.1.21.)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문서는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문체부가 예술위의 요청을 수용하여 청와대에 양해 요청을 받기 위해서 신청단체명, 신청사업명, 신청액, 기금사업명, 검토의견 등을 작성한 문서이다.

신청사업명 (공모제)	신청사업명	신청액 (총소액)	기금사업명	검토의견
경남남도 수원문화 발전기금 지원사업 (지원액)	<경남문화재단> - 지역 영도축제 - 60억 원의 예산	60억	기금지원사업 공공예술사업(지원)	* 사업에 대해 "지원"이 지원은 주안 * 예산에서 신청한 사업의 예산액 명분으로 * 지역 영도축제 예산의 정서로서 "2016년 연 속 지원" 및 "지원"이 지원으로 "지원"이 지원 * 지원 지원 및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연희문화 재단사업	<연희문화재단> - 연희 문화 예술의 발달 지원 사업	10억 2천 (연간 2천)	소외계층문화사업 사업	* 사업에 대해 "지원"이 지원은 주안 *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국립중앙 도서관 사업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60억	기금지원사업 (지원)	* 사업에 대해 "지원"이 지원은 주안 *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기초연극 지원사업 (지원액) *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지원	<국립연극단> -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지원	10억 2천 (연간 2천)	기금지원사업 (지원)	*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기초연극 지원사업 (지원액) *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지원	<국립연극단> -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지원	10억 2천 (연간 2천)	소외계층문화사업 사업	* 사업에 대해 "지원"이 지원은 주안 *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기초연극 지원사업 (지원액) *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지원	<국립연극단> -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지원	10억 2천 (연간 2천)	소외계층문화사업 사업	* 사업에 대해 "지원"이 지원은 주안 *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 (1)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김OO 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문서는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문서이고, 자신이 B 예술국장과 함께 2016. 1. 21. 경 청와대로 가서 김소영 문체비서관과 담당 행정관에게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중 양해를 받아야 하는 부분을 1장짜리로 만들어서 양해를 구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79)</sup>

### (2) 참고인 오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①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문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서울연극제의 경우 예술위 강OO 부장이 5개 정도 단체를 박OO 예술위 본부장,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C 사무관을 통해서 양해 요청을 하였고, ② ‘연극협회 이사장 선거와 연계(정OO 위원 협조요청)’ 부분은 정OO 연극분야 예술위원이 보수 쪽에서 연극협회 선거에 나간다고 들었고, 정OO 위원이 선거를 좀 도와달라고 했다는 말을 문체부나 예술위 직원 중 여러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양해를 받아줄 목적으로 연극협회 서건와 연계라는 사유를 활용하였고, 보수 진영에 대한 지원은 청와대에서도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양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서 양해 목록에 포함시켰고,

문체부 B 예술국장, 김OO 예술정책과장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부 양해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80)</sup>

### (3) 참고인 B의 진술

참고인 B는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문서와 관련하여, 김OO 과장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마 청와대 주례보고 자리에서 김OO 예술정책과장 혹은 오OO 사무관이 보고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81)</sup>

179) 김OO 1회 진술조서, 8쪽. 2018. 1. 12.

180) 오OO 1회 진술조서, 20쪽. 2018. 2. 7.

181) B 1회 진술조서, 4쪽. 2018. 3. 23.

#### 다. 소결

이상의 문서와 진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술위로부터 양해 요청을 받은 목록을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이라는 문서로 작성하였다. 문체부 예술국장 B와 예술정책과장 김OO은 이 문서를 가지고 청와대 교문수석실로 찾아가 일부 단체에 대한 양해 조치를 얻었다.

### 11.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폐지·축소·변경·신설된 사업

#### 가.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예술위 사무처장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이 2016년부터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폐지된 사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82)</sup>

#### 나. 우수문예지지원사업

예술위 사무처장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우수문예지지원사업이 2016년부터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폐지된 사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83)</sup>

#### 다. 대관료지원사업

예술위 사무처장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대관료지원사업이 2016년부터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폐지된 사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84)</sup>

#### 라.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예술위 사무처장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이 2016년부터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폐지된 사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85)</sup>

182) 이OO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1. 31.

183) 이OO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1. 31.

184) 이OO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1. 31.

185) 이OO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1. 31.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2015. 5. 11. 작성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6쪽에는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폐지 및 기획사업 전환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연극분야 10건중 8건이 특이사항에 해당되어 사업폐지 및 기획사업 전환 예정

#### 마. 문예지우수콘텐츠아카이빙사업

예술위 사무처장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문예지우수콘텐츠아카이빙사업이 2015년 우수문예지지원사업(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 때문에) 축소 집행한 결과 남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2015년 말경 신설된 사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86)</sup>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187)</sup>

- (1) 2015년 3월 경 우수문예지사업 선정 결과 창비가 포함되자 김종덕 장관이 창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송OO 기초실장에게 지시해서 자신이 경위서를 작성했던 적이 있는데, 우수문예지지원사업에서 탈락한 단체들이 창비와 실천문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친필 편지를 보냈고, 대통령이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전달하였고, 교문수석이 김종덕 장관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였고, 김종덕 장관은 송OO 실장을 질책했던 것이라고 들었다.
- (2) 김OO 선임행정관이 우수문예지지원사업에서 탈락한 보수 성향 단체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자신에게 지시하여서, 우수문예지 아카이빙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예술위에서 검토한 후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수 쪽만 지원할 수는 없다, 일부 진보단체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김OO 선임행정관에게 전달했다.
- (3) 그 결과 김OO 선임행정관은 청와대 양해를 받아서 오OO 사무관에게 전달하였고, 자신은 그러한 양해조치를 오OO 사무관에게 보고 받고 김OO 예술국장에게 보고 하였을 것이다.

186) 이OO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1. 31.

187) 이OO 1회 진술조서, 23-24쪽. 2018. 2. 1.

## 바. 2016년 유망작가지원사업

예술위 사무처장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유망작가지원사업이 2015년 우수문예지지원사업을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 때문에) 축소 집행한 결과 남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2015년 말경 신설된 사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88)</sup>

2016년 유망작가지원사업 안내문은 아래와 같다.

### 2016년 유망작가지원사업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우리 문학 작가 중 현재까지의 창작 성과가 뛰어나고, 앞으로의 문학적 성취가 예견되는 전도유망한 작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작가 및 평론가분들께 지원 대상 후보자를 공개 추천받고자 합니다.

#### □ 사업 개요

##### • 사업내용

- 문학 작가 중 현재까지의 문학적 성취가 탁월하고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우수한 작가를 선정
- 201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학 분야 지원 사업(문학창작공간지원, 문학활성화프로그램, 국제교류사업 등) 연계 후속지원
- 선정 작가는 지원금 수령 후 2년 이내 작품 발표 등 활동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 • 지원대상

- 시·시조, 소설, 아동문학 분야의 문학 작가로 등단 5년 이상 작가 또는 등단 5년 미만의 작가 중 만 36세 이상의 작가
  -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 분야 지원대상과의 중복성 배제를 위해 등단 5년 이상 작가 혹은 등단 5년 미만 작가 중 만 36세 이상의 작가로 대상 한정
- 2년 이내 작품집을 발간하였거나, 문예지를 통해 작품을 발표한 경력이 있는 작가
  - ※ 추천 제외 대상 : 소수 작가에 대한 공공지원 편중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작가들이 공공지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자 및 2015년도 주목할 만한 작가 지원 수혜자, 기타 문화예술 유관기관(서울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 등)에서 2014년~2016년 유사사업을 통해 창작지원금을 받은 작가는 추천 및 선정에서 제외

188) 이OO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1. 31.

- 지원규모 : 선정 시 개인당 창작지원금 1,500만원 지원
  - ※ 총 20여명 선정 예정으로, 최종 선정규모 및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절차
  - (추천제) 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추천인단의 추천 및 ②등단한 작가와 평론가의 공개 추천 병행 추진으로 지원 후보자 선정
  - (2단계 심사) ①공개 추천된 작가에 대해서는 추천인단이 1차 검토하여 2차 심의대상자 선발 ⇒ ②추천인단이 추천한 작가(공개 추천된 작가 중 추천인단이 1차 검토 후 선발한 작가 포함)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2차 및 종합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 결정
- 고려사항
  - 작가의 창작역량과 예술적 기량은 충분한가?
  - 작가의 최근 발표작품은 우수하고 독창적인가?
  -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창작활동이 예상되며 향후 2년 내 신작 발표 가능성이 있는가?
  - 선정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17년 문학창작산실사업 연계활동, 레지던스 참여 등이 가능한가?
  - 해당 작가의 창작활동은 독자나 다른 작가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 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 2016 문학주간 사업

예술위 사무처장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문학주간 행사 사업이 2015년 우수문예지지원사업을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 때문에) 축소 집행한 결과 남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2016년 신설된 사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89)</sup>

### 아. 창작산실 대본 공모사업

예술위 사무처장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창작산실 대본 공모 사업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2016년 폐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90)</sup>

189) 이OO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1. 31.

190) 이OO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1. 31.

**자. 원로연극제**

**(1) 문건 등 자료조사**

(가)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16.1.8.)

문체부 예술정책과가 2018. 1. 8. 작성한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보고’ 문서에서는 2016년에는 원로예술인 기획공연을 확대[10억→16억]하기로 방침을 세운 사실이 확인된다.

<p>④ 기타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티켓(13억)</li> <li>- 방방곡곡 문화공감(80억)</li> <li>- 원로예술인 공연(10억)</li> <li>- 공연예술 행사지원(358억, 지자체공모)</li> </ul>	<p>④ 기타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티켓(11억) 전면폐지 검토</li> <li>- 방방곡곡 문화공감(150억): 지원상한금 확대(0.8억→2억)내지 폐지 검토</li> <li>- 원로예술인 기획공연 확대(16억)</li> <li>- 공연예술 행사지원(329억, 지자체공모)</li> </ul>
---	--

(나) 리스트-’16.9.27.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9.27.현재’ 4쪽에서 원로연극제사업에서 2016. 3. 4. 천승세 작가가 블랙리스트로 문제가 되었다가 청와대에서 2016. 3. 7. 양해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p>원로연극제사업(3.4)</p>	<p>○K-천승세/ B-천승세 양해됨(3.7)</p>
---------------------	-------------------------------

**(2) 참고인 등 대인조사**

(가) 참고인 강OO의 진술

예술위 극장운영부장 강OO(191)은 위원회 조사에서 제1회 원로연극제의 경우 원로연극인 기획공연 확대방침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특히 원로연극인들을 위한 기획사업을 추진하였던 이유는, 젊은연극인들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원로연극인들을 우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라고 문체부나 예술위

191) 2015. 11. 23.~2106. 12. 18. 극장운영부 부장.

직원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예술위 극장 인력만으로는 사업 진행을 하기 어려워 주관처를 공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술위 자체 기획사업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92)</sup>

#### (나)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세부 사업 실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지만,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보고' 문서를 확인한 후 제1회 원로연극제는 '원로연극인 기획공연 확대' 방침에 따라서 기획된 사업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93)</sup>

#### (다) 참고인 박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박OO 공연예술본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제1회 원로연극제는 문체부의 의도와는 별도로 박명진 위원장이 관심이 많았던 사업이고, 정OO 위원이 제안한 사업으로 아는데, 젊은 연극인들이 블랙리스트가 많아서 원로 우대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는 추진 배경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94)</sup>

한편 박OO 공연예술본부장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2016. 2. 3. 경 문체부 오OO 사무관에게 '원로연극제에 김정옥 전 예술원 회장을 위원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공연과에서 극단 OO 최OO 대표 때문에 안된답니다. 전국 국장님과 논의시 극단 자유에 대한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극단 OO가 이번에 양해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자, 오OO 사무관이 '극단 OO가 그때 자료에 없어서 보고가 안 됐어요. 지금은 안 돼요. 다른 방법 강구해 보시구요.'라고 대답하였던 것은, 극단 OO 최OO 대표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하OO 사무관이 문제제기를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원로연극제 담당자였던 강OO 부장에게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95)</sup>

192) 강OO 1회 진술조서, 8-9쪽. 2018. 1. 15.

193) 김OO 1회 진술조서, 11쪽. 2018. 1. 12.

194) 박OO 1회 진술조서, 11-12쪽. 2018. 1. 15.

195) 박OO 사실확인서, 1쪽. 2018. 2. 9.

### (3)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경영전략본부장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원로연극제는 처음에는 블랙리스트 문제로 악화된 연극계 여론을 우호적으로 달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원로연극제가 굳이 예술위 극장에서 공연하게 된 것에는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심의가 지연되는데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모제를 줄이고 기획공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획된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sup>196)</sup>

### (4) 소결

이상의 문서와 진술을 통하여 2016년 신설된 제1회 원로연극제가 2016년 문예진흥 기금사업을 개편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2016년 예술위 기획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설되었고, 젊은 연극인들이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였던 상황에서 원로연극인들에 대한 우대 조치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원로연극제 추진 과정에서 천승세 작가, 김정옥 전 예술원 회원 등이 문제가 되었으나 양해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 12. 국회의원실 또는 문체부 예술국을 통하여 들어온 ‘민원’에 대한 처리

### 가. 문건 등 자료조사

#### (1) 2016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공모 2차 심의

예술위 순회사업부가 2016. 2. 16. 작성한 ‘2016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공모 2차 심의’ 자료에는 국회의원실이나 문화부 등에서 들어온 ‘민원사항’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이 자료에는 ‘특이사항’으로 연극에서 극단 연희단거리패, 북새통, MJ플래닛, 벽수골, 무용에서 리을무용단, 문학에서 창작21작가회 등 블랙리스트 단체들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sup>196)</sup> 이OO 1회 진술조서, 11-12쪽. 2018. 1. 24.

「2016소외계층 문화소외사업」 공모 2차 심의

2016.2.18(제) / 문화사업부

□ 사업 개요

- 내 용 :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 \* 사회복지 및 다문화 관련 시설, 농산어촌, 학교농산어촌 및 전국 특수학교, 노인요양시설, 군부대, 전국 임대아파트 단지 등
- 사업추진일시 : 민간경상프로그램(일제지원, 100억원)
- 공모신청일수 : 총 2,011건 지원(일수 : 23.11.29~12.23)
- 2차 통합심의
  - 심의일시 : '16. 02. 22(월) 10:00
  - 심의장소 : 대학교예술극장 지하1층 리딩룸
  - ※ 1차 심의기간 : '16.01.29~02.04(일)
  - 심의위원

구분	성명	관 직	비고
2차 통합심의	000	서울대 국문과 교수	
	000	무용평론가, 3~4기 학생	
	000	영화감독 겸 연출, 기획자	
	000	현장대 열광 자라노 교수	
	000	한국문화재단장관협회 부회장, 4기 학생	
	000	서울특별시 의서장	
	000	사립미술관 이사장	

□ 2차 심의

○ 유형·양식별 신청(예외)

사업유형	구분	신청	사외	연차	복합	총계	지원	지원	지원	총계
사회복지사업	1차신청	10	10	1000	40	1447	143	100	50	293
	2차신청	2	2	20	2	27	20	10	2	32
농산어촌	1차신청	11	6	54	2	73	66	30	17	254
	2차신청	1	1	12	2	16	12	7	4	48
학교	1차신청	1	1	1	1	4	1	1	1	30
	2차신청	1	1	1	1	4	1	1	1	30
임대주택	1차신청	108	17	200	24	349	141	65	49	255
	2차신청	2	2	20	2	26	14	6	2	22
교정시설	1차신청	0	0	0	0	0	0	0	0	0
	2차신청	1	1	1	1	4	1	1	1	14
군부대	1차신청	0	0	0	0	0	0	0	0	0
	2차신청	1	1	1	1	4	1	1	1	14
합 계	1차신청	47	40	516	110	633	424	200	144	2,211
	2차신청	47	44	361	11	543	70	48	26	389

□ 향후계획

- 심의결과 위원회 결정 : '16.2.26(일)
- 심의결과 발표(예정) : '16.3월 초
- 순회대상지 일수 및 예산 : '16.3월 중
- 사업 시행(예정) : '16.3월 말

□ 민원사항

- 원유칠 의원실(2건, 소리사위예술단, 비엔이필하모니오케스트라)
- 이우현 의원실(1건, 뉴뮤직컴퍼니)
- 신상범 의원실(1건, 정영수전통무용단)
- 박주선 의원실(3건, 디원브라스, 라운클럽 앙상블, 사)함중분교교류회)
- 장병완 의원실(2건, 꿈꾸는 예술, 노래사랑 나누는 사람들)
- 박재철 의원실(1건, (사)단법인 현장)
- 이상원 의원실(1건, (사)단법인 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
- 문화부

- 정미르발레단, 21예노, 렉제가아뮤연주단, 평택민요보존회, 노블아트 오케라, 한국청소녀어문진흥회

○ 예술위 의

- 디하우스 콘서트, (사)문화예술진흥회, 21하늘다래예술단, (사)사회복지공동체실현위원회사랑의음악회, 강숙지오케라리인, 충청오케라리인, 강릉 농악보존회, 극단가슴, 박안지 연희 컴퍼니, 신채동용겨문고산조보존회

□ 특이사항

- 연극 (연희단거리패, 북새통, MJ플레닛, 빅수꾼)
- 무용 (리울무용단)
- 문학 (창작21작가회)

(2) 2016년 국회의원실 민원 관리 현황

예술위 기획조정부가 2016. 4. 22. 작성한 '2016 의원실 민원관리 현황' 문서는 국회 의원실에서 예술위로 들어온 민원 관리 현황을 보여준다.



행번호	종목명	요청한행위	비밀명	행수명	비밀명당부서	종류	신청연도	신청사명명	신청내용	결심행위	비고
16	경제부		양정국	양정국		공익	2008-09-30	순천 지역	순천지역의 000 도시권	공익	
17	경제부		양정국	양정국		공익	2010-09-30	순천 지역	순천지역의 000 도시권	공익	
18	경제부		양정국	양정국		공익	2010-09-30	순천 지역	순천지역의 000 도시권	공익	
19	경제부		양정국	양정국		공익	2010-09-30	순천 지역	순천지역의 000 도시권	공익	
20	경제부		양정국	양정국		공익	2010-09-30	순천 지역	순천지역의 000 도시권	공익	
21	경제부		양정국	양정국		공익	2010-09-30	순천 지역	순천지역의 000 도시권	공익	
22	경제부		양정국	양정국		공익	2010-09-30	순천 지역	순천지역의 000 도시권	공익	
23	경제부		양정국	양정국		공익	2010-09-30	순천 지역	순천지역의 000 도시권	공익	
4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양정국	양정국	문화체육관광부	공익	2014.1.14(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4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양정국	양정국	문화체육관광부	공익	2014.1.14(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3) 탈북단체 지원현황 및 탈북자로 구성된 북한예술단 현황자료

예술위가 2016. 3. 22. 작성한 ‘탈북단체 지원현황’ 문서에는 예술위 지원사업에서 탈북단체들의 지원 현황, 기획사업시 지원예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탈북자로 구성된 북한예술단 현황자료’에는 탈북자로 구성된 북한예술단의 현황을 개괄하고 있다.

### (4) [정읍 옷찾사] 보고

2016. 7. 20. 예술위 기획조정부가 작성한 ‘[정읍 옷찾사] 보고’ 문서는 사단법인 옷찾사라는 공연단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주요 사업도 소개하고 있다.

**[정읍 옷찾사] 보고**

2016.07.20(수) / 기획조정부

□ **단체 개요**

- 단 재 명 : 사단법인 옷찾사(희망 박람회)
- 담당 : 문정숙(희망 박람회), 2015년 5월 설립, 2015년 11월
- 소 개 지 : 전라북도 정읍시 조곡면 2길 116
- 단체소개 : 지역사회 화합과 소외탈고 시키는 문화를 찾아가기 위한 공연으로 잊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어, 보다 나은 삶을 주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활동
- 주요사업
  - 사회적기업(요양원,노인병원,장애인시설) 문화공연
  - 전라북도 노인대학 문화공연
  - 정읍시 관내 경로당 순회 문화공연
  - 설비개요, 시민을 위한 노래 교실 운영
  - 소외계층 어르신 나눔이 관할 등
    - 예술 노인요양원, 노인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경로당을 찾아 위로하여 총 1,215회 공연 추진

(5) C 사무관의 pc에서 발견된 ‘민원리스트’

한편 이와 같은 민원리스트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C 사무관의 pc에서 압수수색 결과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특검은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등은 본 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지원 배제에 대하여, 정치적 이념이 편향되거나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편중되었다는 사유를 내세우며 건전문화육성, 예술계 균형 지원 등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본 건 압수물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상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반대 세력을 배제하고, 그 결과 소진되지 않은 잉여 정부 지원 예산을 유력 정치인이나 공위공직자 등의 청탁에 따라 임의로 배정하여 사용하게 한 것으로, 이념 편향성 완화라는 명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실제 자행된 행태는 공익과는 거리가 먼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또한, 압수물을 통해 일부 드러난 것 외에도 대규모 정부예산, 기금 등이 투입되는 각종 정부지원행사, 문화콘텐츠 사업 등에 있어 공평한 심사기준에 따른 지원 시스템을 붕괴하고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전횡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함.”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197)

C 사무관의 pc에서 발견된 ‘민원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신청사유	신청대상(신청인)	신청일자	처리결과
국세교육	박학파 재즈의 하모니 그리프의 만우주론(송악문화)	이지혜	확정신청불허
순회사업	관악구 지역 공연		요청한 지원
*	신남지의 공연		이종훈 위원( B 국장)
	전주지역의 공연		백대송 위원( B 국장)
*	신나는 예술여행 -행복하살(KW)사회복지재단 -힐링뮤지컬박장(학고문화)	백노유지(송미선)	1차관
*	월우우리춤우리가래	소리사위예술단	원유철 위원(OO 보좌관)
*	아름다운 레코리아기 SWAN LAKE	청미래재단	B 국장
방향작곡	솔은 거문	2016-053-56	국회위원장( OO 조서관)
*		코리아필로케스트라	김OO국장(아민실 관장관)
*	아주 멋진 콘서트	백노유지(송미선)	1차관
*	동음원에 역할가사	주)메노로	1차관
*	제비시김상옥과함께하는 발레콘서트	피연에이필라모니	원유철 위원(OO 보좌관)
*	아이 디너 워드 노벨라	플레이스플레이+노벨라드	조OO 국장
	헤럴드 필하모닉과 함께하는 날라리콘서트	헤럴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김상동)	B 국장
*	아빠가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청미래재단	B 국장
지역대표공연예술제	호남예술제		박학파 위원실
*	힐링음악축제		박학파 위원실
*		보령오래재단(김희)	최 OO 전 실장
*	부산아름작게음악제	부산아름작게음악제조직위	고자관
*	문화재단 이노비그라운드	이노비그라운드문화재단	이일민 위원( OO 보좌관)

*	동영국제음악제	경남/동영국제음악재단	이근연위원( B 국장)
*	천안문화당 음악제 2016	천안문화재단	B 국장
*	백신년마산탄날제	마산예술중	이주영위원( B 국장)
*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B 국장
*	서울시 국제레오나르 페스티벌	한국화모니키교육협회	전병환 위원( OO 보좌관)
뮤지컬	고향의 봄지킴	도도 기획사	김OO 전부
오페라	환-을 오빠다 왔어	뉴시클오페라(홍지원)	김OO 전부
공연예술제	청소년공연예술제페스티벌	고양문화재단	유은혜 위원
*	춘이살국제음악콩쿠르	동영국제음악재단	이근연위원( B 국장)
뮤지컬	송파구청 뮤지컬사업		박인숙 위원(송OO 실장)
연수단원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김나현(90.1.2생)	1차관(최고부차관)
*	소리사위예술단		원유철 위원( OO 조서관)

197) 블랙리스트를 배제하고 특정인의 청탁에 따라 문화예술사업 지원금을 몰라 준 ‘민원리스트’ 자료 첨부. 2016. 12. 30. 수사기록.

##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 (1) 참고인 김OO의 진술<sup>198)</sup>

예술위 순회사업부장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① 2015년 말부터 예술위 기획조정부에서 보내주는 민원리스트를 받기 시작했다.
- ② 문체부는 예술위 관리기관이었기 때문에 문체부를 통해서 온 민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을 하라’는 뉘앙스였기 때문에 문체부가 강력하게 챙기는 민원의 경우에는 방법을 찾아서 거의 다 다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 ③ 민원리스트를 받아서 민원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원리스트에 없는 단체들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술위 지원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④ 예술위 기획조정부에서 전달받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민원은 기획조정부에 결과를 회신하였고, 의원실이나 문체부, 위원장 등으로부터 직접 받은 민원의 경우에는 이행 결과를 민원을 준 곳에 답변하고 그 과정은 모두 기획조정부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 참고인 박명진의 진술

참고인 박명진 예술위 위원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민원리스트’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 답변서에서 “○그런 민원 리스트는 주로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요청이 들어와 국회담당업무부서인 기획조정부에서 일괄 취합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재임기간 보고 받은 민원의 사례는 특별히 민원이 많았던 의원들의 경우거나 탈북 단체 지원 같이 민간 기부금에 의존해야 했던 경우로 기억함.”이라고 답변하였다.<sup>199)</sup>

## 다. 소결

이상의 문서와 진술을 통하여 국회의원실 또는 문체부 예술국을 통하여 예술위에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 예술위 기획조정부가 이를 취합하여 해당 부서에 보내주고 해당 부서는 해당 ‘민원’이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98) 김OO 1회 진술조서, 28-29쪽. 2018. 3. 21.

199) 박명진 사실확인 답변서, 5쪽. 2018. 4. 25.

## 13. 기초공연예술활성화추진사업단

### 가. 문건 등 자료조사

#### (1) 공연예술창작지원사업 추진 관련 입안 및 심의 요청

예술위 장OO 창작지원부장이 2014. 1. 27. 작성한 ‘공연예술창작지원사업 추진단 관련 입안 및 심의 요청’ 문서는 ‘2014년 신규 사업 중 공연예술창작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연예술창작지원사업 추진단 조직 및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자’하는 제정이유와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 직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공연예술창작지원사업 추진단 입안(제정) 이유서를 첨부하고 있다.

#### (2) 공연예술창작지원사업추진단 조직 및 운영지침

예술위 장OO 창작지원부장이 작성한 ‘공연예술창작지원사업추진단 조직 및 운영지침’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구성원)

- ① 추진단에는 단장 1인과 각 사업별 사무국장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② 추진단의 사업별 사무국장은 위원회 사무처의 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 제4조 (추진단장 및 사무국장)

- ① 추진단장은 위원회 사무처에서 추천한 후보장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추진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추진단장은 위원장의 감독을 받아 추진단의 대표자로서 대외활동을 수행하며, 비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업별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 (조직)

- ① 위원회는 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인적,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사업추진을 위한 하부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사무처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③ 추진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 경영인사부의 지침에 따른다.
- ④ 추진단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을 따른다.

##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 (1) 참고인 정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연극분야 예술위원 정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sup>200)</sup>

(가) 2015. 6. 25. 예술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이 ‘오프더 레코드’로 예술위 지원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상황을 폭넓게 설명하였던 일에 대하여는, 당초 자신이 박OO 극단 신시 대표의 제안으로 박근혜 캠프에 참여한 뒤 청와대 A 행정관을 2013. 3월 경 만나 대관료 지원 사업, 기획 및 스태프 인력 지원사업, 연습 공간(춘천, 청주, 대구 등) 조성 사업 등을 요청해서 약 210억 가량의 예산이 특별 교부됐고, 기초공연예술활성화 추진사업단(이OO 단장)을 만들어서 추진했다.

(나) 김기춘 비서실장이 온 뒤로 위 기획 및 스태프 인력 지원 사업 등에서 블랙리스트가 적용된 것이고, (사업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항의를 해 왔을 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162차 회의록에서 자신이 ‘굉장히 난감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블랙리스트로 배제된 단체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던 것<sup>201)</sup>은 블랙리스트를 다 막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막아내고자 생각했고,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다) 김OO 의원이 중도 사퇴한 이후 후임 위원을 뽑지 않았는데, 자신도 중도 사퇴하고자 하였으나 연극 분야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이 가장 극심한 상황에서 다른 위원들이 사진이라도 남아서 블랙리스트를 최대한 막아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려서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 그때는 박근혜 정부나 보수 정권이 계속해서 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국정농단 사태로 보수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도 남아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최대한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라) 기초공연예술활성화추진단은 처음에는 소극장 협회 사무실 공간을 확장해서 같이 썼다. 소극장 협회 직원 2~3명을 기초공연추진단 직원으로 채용해서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했다. 당시 OOO 부장이 실무 담당자로 같이 근무했다. 기초공연추진단 사업으로는 인력 교육(기획, 스태프 인력을 전국에서 모집하여 운영) 등을 했다.

200) 정OO 1회 진술조서, 10-12쪽. 2018. 2. 13.

201) 제162차 예술위원회 회의록, 17쪽-19쪽.

- (마) 대관료지원사업을 폐지될 예정이라는 것은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으로부터 들었고, 아트원씨어터 등을 대관하여 임대료를 싸게 지급하면 사실상 대관료지원 사업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아트원, 동승홀 극장을 임대했다고 안다.
- (바) 기초공연예술활성화추진단은 1년 후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직원들도 (새로) 채용했고 사업들도 가져갔다.

## (2) 참고인 장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창작지원부장 장OO은 위원회 조사에서 기초공연예술활성화추진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202)</sup>

- (가) 통상적이었다면 2013. 3월 경부터 시작해서 예술위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5월 경 문체부에 예산을 상정하고 문체부 심의를 거쳐 기재부로 넘어간 후 국회의결을 거쳐 세목까지 최종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듬해인 2014. 2월 경 집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2013년 하반기에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생긴 예산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을 받아보니 전체 예산 66억의 항목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예술위가 전체를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거나 별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위탁기관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문체부가 이미 큰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였고, 구체적으로는 장르별 창작산실지원사업,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기획·경영전문인력지원사업 등이 있었고, 추진인력이 부족하여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 (나) 기초공연예술활성화추진단 운영은 근거가 없이 설치되고 운영되었고, 2015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된 바 있다. 2014. 3. 6. '공연예술창작지원사업 추진단 관련 입안 및 심의 요청' 문서를 작성하여 예술위 기획예산부로 보냈는데, 이OO 사무처장이 굳이 근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하여서 결국 근거 규정을 만들지 않았고, 근거 규정 없이 운영하게 되었다.
- (다) 기초공연예술활성화추진단은 법률상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단장을 예술위가 임명하는 구조는 아니었으나 예술위가 실질적으로 이OO 연출가를 단장으로 섭외하여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202) 장OO 2회 진술조서, 3-8쪽.

- (라) 누군가는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예술위 직원인 이OO 차장과 장 OO 부장을 겸직 발령 내는 형태로 하여서 사실상 예술위가 운영하였다.
- (마) 이렇듯 편법적인 방식으로 추진단을 운영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이 문체부가 내려 보낸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전액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 집행을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었던 것이다.
- (바) 기초공연예술활성화추진단이 하던 사업 중에서 대관료지원사업이 있었는데 2014년에 생각보다 예산 집행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미등록 공연장을 포함한 거의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대관료 예산을 산출하였는데 추진과정에서 많은 공연장을 제외(미등록 공연장, 자체 기획 공연, 자기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등)하게 되어서 예산 집행이 당초 예측보다 적어지게 되었다.
- (사) 그 결과 2014년 12월 경 동송홀 3개관, 아트원 3개관을 추진단에서 대관하게 되었다.
- (아) 2014년 말 아트원, 동송홀 등 극장 대관 계약 이후 2015년 상반기에 동송홀(아트원은 기억 안남) 극장 재대관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고, 공실되기도 했던 것은 재대관사업 지원 단체 중에서 블랙리스트 단체가 많았기 때문으로 들었다.
- (자) 문체부 예술정책과가 2015. 12. 8. 작성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사업 개편안’ 문서에서 2016년 대관공연장운영(5억) 부분은 아트원, 동송홀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차) 동송홀·아트원 극장 대관 계약서에서 아트원 2·3관의 경우 추진단과 아트원씨어터 건물주(최성준), ㈜이다엔터테인먼트가 3자간 계약을 하고 추진단이 아트원에 대관료를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아트원 2, 3관은 계약 당시 이미 ㈜이다엔터테인먼트가 이미 임대하여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카) 아트원·동송홀 극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 절차 없이 수의 계약 형태로 진행하였던 까닭은 대학로에서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추진단 입장에서 공공극장으로 임대할 만한 극장은 사실상 동송홀·아트원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키) 동송홀·아트원 극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타당성 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없었고, 내부 결재로 진행됐다.
- (타) 아트원 2, 3관 극장의 경우 ㈜이다엔터테인먼트가 추진단과 맺은 계약 금액과 이전에 아트원과 맺었던 계약 금액의 차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부, 사전에 점검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 (3)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김OO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203)</sup>

(가) 예술위 공연운영부장을 할 당시에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에서 대관료지원사업을 담당하였던 창작지원부장 장OO이 대관료지원사업 예산 중 남은 금액인 대략 50억 가량을 공연장을 장기 임대하여 단체들에게 대관하는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느냐고 하여서 검토하여 ‘공연장 재대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획하여 추진한 사실이 있다. 대략 2014년 여름부터 준비해서 2014년 하반기에 결정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동승아트센터 동승홀 등 3개관, 아트원씨어터 3개관 등 총 6개관을 장기 임대 계약했다. 계약주체는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이었고, 업무 분장에 따라서 대관과 기획운영은 공연예술센터가 맡아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5년 3월부터 재대관 사업 진행이 가능하였다.

(나) 2015년 상반기에는 섭외해서 제작 기획공연으로 진행하기로 해서 관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공연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극단 이와삼, 엠제이플레닛, 문화아이콘, 연극열전, 극단 노니, 마방진, 극단 여행자 등을 섭외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섭외 중 유OO 공연예술센터장에게 보고를 하며 진행하였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일정을 보고하였을 때는 사업을 보류하라는 방침을 유OO 센터장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특히 단체 중에 극단 여행자와 극단 이와삼의 경우는 섭외가 이미 완료되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극단 측에서 항의를 하면서 사업이 보류된 이유를 알고자 하기도 하였다.

(다) 2015년 2월 경 재대관지원사업에서 공연단체 업무를 이OO 공연운영부장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라) 그 당시에는 그것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배제 과정이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2015년 8월 경 문체부 김OO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에게 전달 받은 배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마) 아트원 극장 등이 3개월 가량 공실이 계속됐던 원인은 섭외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블랙리스트 단체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바) 2015년 초 무렵 문체부 서계동 회의실에서 김OO 과장, 임OO 공연과장, 김OO 공연과 사무관, C 사무관 등이 유OO 센터장, 이OO 경영전략본부장, 이OO 부장

203) 김OO 2회 진술조서, 8-10쪽.

등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김OO 과장이 재대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질책을 하였다.

(사)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이 만들어진 배경은 자세히 모르지만,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을 쉽게 추진하려고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위탁 사업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의 경우는 공모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기초공연추진단을 공모 없이 임의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나중에 국회 등에서 지적이 있었다.

#### 다. 소결

이상의 문서와 진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 캠프에 참여하였던 정OO 연극분야 예술위원이 청와대 A 선임행정관에게 요청하여 대관료지원사업, 기획·경영인력전문사업, 연습공간조성 사업 등의 명목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고, 2013년 하반기 국회에서 66억의 항목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문체부를 통해 예술위로 내려왔다.

예술위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려온 66억원을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는 대신 기초공연예술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장을 섭외하고, 예술위 직원들을 추진단의 사무국 직원들로 겸직 발령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된 후 운영 근거 규정도 만들지 않은 채 사업추진단을 운영하였다.

기초공연예술활성화 추진단은 대관료지원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동승홀·아트원 씨어터 등을 임대하여 재대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모과정을 거치거나 외부에 타당성 평가 과정을 거치는 일도 없었다. 재대관 사업지원 단체 중에서 블랙리스트 단체가 많아서 극장이 3개월 가량 공실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 제4절 | 조사 결과

### 1. 진상규명 사실

#### 가. 예술위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2008. 8. 27.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서가 ‘좌파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를 분석한 후 ‘주요대책’으로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을 소리없이 지속 실시’, ‘좌파고사 유도’, ‘좌파자금줄 차단’ 등의 조치를 계획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박근혜 정부도 2013. 3.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서를 통해서 문화예술계 좌파 단체들을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고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2013. 8. 김기춘은 비서실장 취임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13.8.16.),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재확산 시도 차단 건의’(13.10.2.) 등의 보고를 받고, 문체부에 ‘특정 편향(좌편향) 예술지원 실태 및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문체부는 이러한 지시에 대하여 예술위에 초점을 맞춰 보고서를 작성한 후 2013. 8. 30. 경 교문수석실 A 선임행정관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국정원이 작성한 2013. 9. 26. 까지 파기할 것을 지시하며 작성한,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라)’ 문서가 충북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등 지역문화재단에서 좌성향 단체 등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이후, 문체부와 예술위가 전국 지자체의 문예진흥기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한편 문체부는 2013. 9. 9. 조현재 1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구성하여 문화예술계내 좌편향 작품·행사·사업 등을 사전 스크린하고 보수지형을 확대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3. 12. 20. 정부 각 부처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 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였고, 2014. 1. 3.에는 문체부에 그동안 재정지원을 계속하였던 민간단체들에 대해 단체 대표 성향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고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2014. 1. 24. 문체부 유진룡 장관은 문화예술분야 민간보조사업에서 불법단체, 좌편향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산집행 전 과정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사위원을 ‘균형적으로’ 구성하여 심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201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이 끝난 후인 2014. 2. 21.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2014년 문예진흥기금공

모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민족미학」의 학술지 ‘민족미학’, 2013년 봄페스티벌 주제로 ‘국가보안법’ 공연을 올렸던 「혜화동 1번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 단체들과 「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사업 선정 결과가 심사위원회에 좌성향 인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2014년 3월 심의위원 임명시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체부는 청와대의 지적을 받았던 당일인 2014. 2. 21.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문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2014년 책임심의위원 구성을 보류하도록 조치하고, 심의위원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개인이나 단체들을 지원에서 제외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김기춘은 2014. 3. 12.에 각 수석실 및 소관 부처들에게 대통령에게 일단 조치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빠짐없이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서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체부는 유진룡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문화예술계의 이념성을 지양하고 불법시위 관련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고, 분야별 대응전략도 보고하였다. 2014. 3. 27. 김기춘 비서실장은 각 부처에 산하 단체·기관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때 해당 단체·기관 또는 그 대표자의 과거 불법집회나 시위에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보조금 지급 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면서 정무수석에게 체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무수석실은 2014. 4. 4.~2014. 5. 23. 각 수석실 비서관들과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구성하여 진행한 결과를 종합하여 2014. 5월 하순 경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는 ‘문제예산’ 총 130건, 139억 원을 확인하여 조치하고, 3천 개의 문제단체와 8천 명의 좌편향 인사를 DB 구축하고 지속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나.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문체부는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가 논란을 빚은 이후 대책 마련을 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2013. 9. 9.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TF의 참석 대상은 국장급 이상이었지만, 국장들이 다른 일정이 많아서 과장급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

였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 5.부터는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2014. 10.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종덕 장관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 TF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예술위 공모지원 사업, 영화 등 보조사업, 세종도서 사업 등이었다.

2015. 2. 25. 자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 문서에서 '문학 및 연극 분야의 경우, 일부 사업이 선정되어 발표 일자를 무기 연기하여 재심 등 방안 강구중'이라는 대목이 발견되고, 2015. 4. 20. 자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 문서에서 '각종 리스트 관리, 공유 중', '사전 스크리닝 부담에 따른 추진상 애로 가중' 등의 표현이 보이는 점으로 보아, 2014.2.~4. 사이에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는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지원 개선 방안' 작성 경위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청와대로부터 201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문제가 많았으니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이전에 심의제도 등의 개편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시를 몇 차례 받고, 예술위에 청와대 지시라는 말은 하지 않고 심의 제도 개편 방침을 전달하였다.

문체부 오OO 사무관은 2014.4월 경~9월 사이 예술위 예술진흥본부 이OO 본부장 등 직원들에게 문예진흥기금 심사제도 개편에 관련된 자료나 의견을 전화나 이메일로 구하기도 하고 직접 만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답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한 후, '문화예술분야' 대응방침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예술정책과 박OO 사무관에게 메일을 보냈고, 박OO 사무관은 마찬가지로 각 과에서 전달된 내용들을 취합하여 편집한 후 당시 정책기획관이었던 황OO 정책기획관에게 전달하였고, 황OO 정책기획관이 최종 작성한 문서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서였다. 이 문서의 내용은 건전콘텐츠 활성화 TF에도 보고되었고, 송OO 기획조정실장이 김종덕 장관과 청와대에도 보고하였다.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배제 과정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서에서 '개선', '문화예술' 분야 '세부 대응전략' 등에 적힌 방침에 따라서 대체로 실행되었으나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연극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사업의 경우에서 보듯이 애초에 계획하였던 대로는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라.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경위

문체부 예술정책관 김OO은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정부 비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2014. 9. 경 문체부 예술국 사무관급 이상 직원들을 모아놓고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문제 단체 지원 차단 방침을 설명한 후 예술위 사무처장 및 본부장들을 세종시 문체부 사무실로 별도로 불러 위 지원 배제 방침을 설명하였다.

예술위 사무처장 및 본부장들은 예술위로 돌아와 문체부의 방침을 권영빈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서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일정, 지원신청 접수 내역, 심의 위원 명단 등을 문체부로 송부하였다. 문체부는 예술위로부터 송부받은 목록을 청와대 교문수석실로 송부하였다.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OO 선임행정관은 소통비서관실로부터 검토를 받은 배제 명단을 문체부 김OO 예술국장에게 전달하였고, 김OO 예술국장은 이 명단을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에게 전달하였다. 오OO 사무관 등은 이 배제 명단을 예술위 장OO 창작지원부장 등 각 담당 부서장에게 유선으로 전달하였다.

## 마.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

2015. 4. 21.부터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주재로 문체부 관련 각 과 사무관 예술위 사무처장, 본부장,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예술위원회 현안 점검 회의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었고,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임) 이OO 예술정책과장에서 김OO 예술정책과장 시기까지 회의가 이어졌고, 이 회의는 명목상 예술위 공모사업을 점검하는 것이었지만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건전콘텐츠활성화 TF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는 마지막 날짜가 2015. 4. 20.이고,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가 최초로 시작된 날짜가 2015. 4. 21이었다는 사실, 건전콘텐츠활성화 TF 회의에도 점차 과장급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건전콘텐츠활성화 TF’가 2015. 4. 21.부터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 바. 2015~2016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구체적 사례

각 해당 사업의 ‘소결’ 및 사건별 결과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 사. 2016년 문예진흥기금사업 개편 추진 경위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배제 하기 위하여 확인 과정이 지연 되면서 심사 및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여론이 악화되거나, 사회적 이슈와 연계된 블랙리스트 단체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당시의 공모시스템으로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여서 2016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서는 공모사업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생겼고, 청와대는 문체부에 2016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개편을 지시하였다. 이렇나 배경 하에서 2016년 하반기 문체부 예술국장 주재로 문체부와 예술위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문예진흥기금 사업 개편에 관한 논의 과정을 거쳐 2016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개편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공모제 사업을 축소하고 기획사업을 확대하고, ② 소수 전문가의 책임심의제 대신 심의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였고, ③ 정기공모사업을 축소하고 연중 수시공모를 확대하는 것 등이었고, 이는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공모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 혹은 변경되기도 하였고, 새로운 사업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 아. 2016년 문예진흥기금 추진 과정에서 일부 양해 조치가 있었던 경위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은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술위로부터 양해 요청을 받은 목록을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이라는 문서로 작성하였다. 문체부 예술국장 B와 예술정책과장 김OO은 이 문서를 가지고 청와대 교문수석실로 찾아가 일부 단체에 대한 양해 조치를 얻었다.

### 자.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폐지·축소·변경·신설된 사업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우수문예지지원사업, 대관료지원사업, 공연예술발표공간지원사업, 창작산실 대본 공모사업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폐지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문예지우수콘텐츠아카이빙사업, 2016년 유망작가지원사업, 2016 문학주간 사업은 우수문예지지원사업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축소되면서 남은 예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1회 원로연극제의 경우 젊은 연극인들이 블랙리스트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원로연극인들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 신설 기획된 사업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 차. 국회의원실 또는 문체부 예술국을 통하여 들어온 ‘민원’에 대한 처리

국회의원실 또는 문체부 예술국을 통하여 예술위에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 예술위 기획조정부가 이를 취합하여 해당 부서에 보내주고 해당 부서는 해당 ‘민원’이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카. 기초공연예술활성화추진사업단

박근혜 후보의 대선 캠프에 참여하였던 정OO 연극분야 예술위원이 청와대 A 선임행정관에게 요청하여 대관료지원사업, 기획·경영인력전문사업, 연습공간조성 사업 등의 명목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고, 2013년 하반기 국회에서 66억의 항목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문체부를 통해 예술위로 내려왔다.

예술위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려온 66억원을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는 대신 기초공연예술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장을 섭외하고, 예술위 직원들을 추진단의 사무국 직원들로 겸직 발령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된 후 운영 근거 규정도 만들지 않은 채 사업추진단을 운영하였다.

기초공연예술활성화 추진단은 대관료지원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동승홀·아트원 씨어터 등을 임대하여 재대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모과정을 거치거나 외부에 타당성 평가 과정을 거치는 일도 없었다. 재대관 사업지원 단체 중에서 블랙리스트 단체가 많아서 극장이 3개월 가량 공실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

# 7

## 재외 한국문화원 블랙리스트 사건

# 7

## 재외 한국문화원 블랙리스트 사건

### 1.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특2(2017직영2 병합)[재외 한국문화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 2.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 가. 직권조사의 취지

- (1) 2016년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을 위하여 정부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은 관광, 음악, 문학, 미술, 연극, 전시,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 개최였다. 본 위원회에 제보된 내용은 2015년 당시 프랑스 측 디렉터가 초청한 블랙리스트 대상 한국 공연팀에 대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배제 압력 있었으며 프랑스와의 외교갈등을 이유로 최소 경비(항공비)만 지원하고,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공연 홍보를 하지 않는 등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보에 근거하여 재외 한국문화원 전반에 걸쳐 블랙리스트 실행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 (2) 2017년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박경미 의원은 '뉴욕과 파리 문화원장 임용과정에 차은택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노태강 제2차관은 '지적 사항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소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으로 답변<sup>1)</sup>하였고,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뉴욕·프랑스 문화원장 선발

경과'를 제출하며 의혹 규명을 문의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다.

- (3) 본 위원회에 참고인<sup>2)</sup> “우리가 해외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하는데 예를 들면 송강호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는 틀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사관이나 해외문화원 등 재외공관에서 여는 한국영화제가 많았는데 당시 변호인이 가장 문제가 많았고”, “광해도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라는 진술 등을 토대로 ‘해외 한국영화제’에서 유사한 상영 방해 행위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 나. 진상규명한 사실의 요지

- (1)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2018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가 입수한 <9,473인 블랙리스트> 60쪽 문서는 ①2015년 5월 6~7일 경 제작된 문서로 ②해외 문화홍보원로의 입수 과정과 보고 및 ③실행과정과 ④문서 출처 등이 확인되었으며 ⑤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 단체 배제에 이용되었다는 것이 인정된다.
- (2) ‘한-불 상호교류의 해’ 관련하여 <9,473인 블랙리스트>를 대조하여 배제 리스트를 작성하였는데 공식인증 사업이 399건에 이르고 그 중 173여건의 사업에 예산지원이 된 점을 고려하면 배제 리스트 적용(참조: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실행 일람표)을 위해 광범위 하게 대조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 (3) 과거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관련 그간 경과 및 현황 분석’ 문서 등을 통해 ‘9,473인 블랙리스트 적용을 축소 부인’하고, 김OO이 2017고합102, 2017. 5. 31.에서 김기춘 변호인의 질문에 동의하며 해프닝으로 취급한 부분, OOO이 “실제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짐이 확인된다.
- (4)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실행에 ①청와대 ②국정원의 개입이 확인되며 문체부 소속 기관중 ③예술정책과 ④출판인쇄산업과 ⑤국제문화과 ⑥해외문화홍보원 ⑦주프랑스한국문화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 (5)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실행 일람표 24건의 문화예술인, 단체에 대한 피해 사례가 확인된다.
- (6) A의 뉴욕한국문화원장 부임 철회는 김기춘의 인사권 남용임이 확인된다.

1) 2017년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77~78쪽, 2017. 10. 30.

2)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사건번호 : 2017직영1)>, OOO참고인 진술조서 7쪽

- (7) 김종덕 장관이 청와대 지시로 뉴욕·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선발 제도를 변경과정 특혜를 제공하여 오OO는 ‘역량 평가 면제’, 박OO은 ‘민간인 스카웃제’로 특정 광고 업계 인맥의 인사들이 임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 (8)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된 재외 한국문화원장은 현황은 LA한국문화원장 김OO, 러시아 한국문화원장 김OO, 워싱턴 한국문화원장 박OO, 독일 한국문화원장 권OO, 영국 한국문화원장 A, 벨기에 유럽연합 한국문화원장 최OO 등으로 확인된다.
- (9) 2014년 말 파리 한국영화제 ‘변호인’ 상영 배제 사실이 인정된다.
- (10) 2013년 런던 한국영화제에서 ‘설국열차’ 배제 사실이 인정된다.
- (11) ‘남영동1985(2012)’, ‘26년(2012)’ 및 ‘다이빙벨(2014)’, ‘자가당착(2015)’, ‘상계동 올림픽(1988)’,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1981)’ 등은 2008년 이후 해외 한국영화제 등에서 상영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영화임이 확인된다.
- (12) ‘그때 그 사람들(2005)’, ‘화려한 휴가(2007)’, ‘도가니(2011)’는 2013년 이전에는 상영된 적이 있으나 박근혜 정부 이후는 상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붙임 : [재외 한국문화원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사 건] 사건번호 2017직특2 재외 한국문화원 블랙리스트 사건**

**[해외한국영화제 특정영화 배제 사건](사건번호 2017직영2 병합)**

## 제1절 | 조사 개요

### 1. 직권 조사 취지

- (1) 2016년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을 위하여 정부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을 진행했었다. 사업은 관광, 음악, 문학, 미술, 연극, 전시,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 개최였다. 본 위원회에 제보된 내용은 2015년 당시 프랑스 측 디렉터가 초청한 블랙리스트 대상 한국 공연팀에 대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배제 압력 있었으며 프랑스와의 외교갈등을 이유로 최소 경비(항공비)만 지원하고,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공연 홍보를 하지 않는 등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보에 근거하여 재외 한국문화원 전반에 걸쳐 블랙리스트 실행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 (2) 2017년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박경미 의원은 ‘뉴욕과 파리 문화원장 임용과정에 차은택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노태강 제2차관은 ‘지적 사항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소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으로 답변<sup>3)</sup>하였고,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뉴욕·프랑스 문화원장 선발 경과’를 제출하며 의혹 규명을 문의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다.
- (3) 본 위원회에 참고인 진술자<sup>4)</sup>의 진술 중에 “우리가 해외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하는데 예를 들면 송강호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는 틀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사관이나 해외문화원 등 재외공관에서 여는 한국영화제가 많았는데 당시 변호인이 가장 문제가 많았고”, “광해도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을 통해서 다른 해외 한국영화제에서도 유사한 압력과 상영 방해 행위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 2. 조사개시의 근거와 목적

### 가. 조사개시의 근거

2017직특2[재외 한국문화원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7년 10월 13일 「10차 전원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에 따라, 조사를 결정하였다.

### 나. 조사 목적

- (1)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관련 블랙리스트 실행 전모를 밝힌다.
- (2) 뉴욕과 파리 문화원장 임용과정에 차은택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힌다.
- (3) 해외 한국영화제에서의 특정 영화 배제 의혹은 규명한다.

3) 2017년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77~78쪽 2017. 10. 30.

4)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사건번호 :2017직영1)> 201790, 000참고인 진술조서 7쪽

## 제2절 | 조사 경과

## 1. 문건 등 자료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49건의 문건 및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표-1] 입수자료 목록

연번	제목	출처	입수일	비고
1	제10회 런던한국영화제 상영작 확정보고 2015. 9. 25. 문체부	문체부	2018.9.18.	
2	샌디에고한국영화제 지원취소 확정 회시 2015. 9. 11. 문체부	문체부	2018.9.18.	
3	2013 한국영화의밤 4인 4색전 기획안	문체부	2018.9.18.	
4	제8회 런던한국영화제 기획안 2013. 1.	문체부	2018.9.18.	
5	제8회 런던한국영화제 기획안 2013. 9.	문체부	2018.9.18.	
6	제9회 런던한국영화제 계획	문체부	2018.9.18.	
7	제9회 런던한국영화제 결과보고서 2014. 12.	문체부	2018.9.18.	
8	2014년 한국영화의밤 결과보고서 2014. 12.	문체부	2018.9.18.	
9	2015-2016한-불 상호교류의해 제1차공식인증사업공모 결과보고 2015. 3. 12.	해외문화홍보원	2018.9.28.	
10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계획서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10.24	
11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1차) 공모 심사결과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10.24	
12	2015-2016 한불상호교류의해1차 공식인증사업 지원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10.24	
13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2차공동회의 라벨 부여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10.24	
14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2차공동회의 공식회의록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10.24	
15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제2차 공모 심사결과 보고 및 결과발표계획안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10.24	
16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3차공모 예비심사 결과보고 2015. 12. 9.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10.24	
17	15-16 한불 상호교류의해 사업지침 2015. 11.	해외문화홍보원	2017.10.24	
18	2016년 한불상호교류의해 사무국 운영계획안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10.24	
19	2016년 한불상호교류의해 지원 실행계획안 2016.2.23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10.24	

연번	제목	출처	입수일	비고
20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해 실무회의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해외문화홍보원	2017.10.24	
21	프랑스 내 한국의해 폐막식 공무출장결과보고서	해외문화홍보원	2017.10.24	
22	뉴욕·프랑스 문화원장 선발 경과	해외문화홍보원	2017.10.30	
23	재외 문화원장 등 선발제도 개선방안 등	해외문화홍보원	2017.11.16	
24	업무인수인계서 2015. 10. 6.	국제문화과	2017.11.16	
25	업무인수인계서 2014. 10. 23.	국제문화과	2017.11.16	
26	제출자료 2017. 11. 08.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11.16	별책
27	한-불 상호교류의 해 파리도서전 결과보고 2016. 4. 12.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2017.11.16	
28	주 뉴욕,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문화원 답변자료 및 특검 관련자료	각 문화원	2017.11.22	
29	2013-16, 재외공관 한국영화상영목록 및 국정원, 청와대 문서	영진위, 특검, 국정원,	2017.11.25	
30	한-불 상호교류의 해 예술감독 계약, 주불 사무국장 계약, 공무출장 관련 문서	해외문화홍보원	2018.1.5.	별책
31	9,473인 블랙리스트 2015. 5. 7.	OOO	2018.1.31	
32	한불 관련 예경 자료, (조직위 시기별 명단, 아르테TV, 공동규칙)	예술경영지원센터	2018.2.2	
33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하OO, OOO 등 문자메세지, 해홍의 예산심사결과승인문서	예경 김OO 문체부	2018.2.7	
34	릴 3000 노순택 작가 전시작 교체 관련 자료 5건	노순택	2018.3.7	
35	뉴욕한국문화원전시행사관련 (차은택 특혜 관련)	해외문화홍보원	2018.3.8	
36	2015-2016 한불상호교류의해 추진현황 2014. 2. 경	해외문화홍보원	2018.3.12	
37	2015-2016 한불상호교류의해 실무회의 결과 2014. 11.	해외문화홍보원	2018.3.12	
38	2008-2017 해외한국영화상영목록	영진위	2018.4.25	
39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폐막식 예결산 내역	해외문화홍보원	2018.5.1	
40	2017직특2, 직영2 병합 보고	조사3팀	2018.5.3	
41	고위공무원 인사규칙 2014. 11. 19.	인사혁신처	2018.5.14	
42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105. 7. 13.	법제처	2018.5.14	
43	한불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공모 보도자료 2014. 11. 17.	문체부	2018.5.14	
44	한불상호교류의 해 제2차 공식인증사업 공모 보도자료 2015. 3. 13.	문체부	2018.5.14	

연번	제목	출처	입수일	비고
45	2017국정감사 교문위의의록 2017. 10. 30.	국회사무처	2018.5.14	
46	재외공관 한국문화원장 처우 현황	외교부	2018.5.17	
47	2015-2016 한불상호교류의해 관련 보고 2015. 11-12경	최OO	2018.5.17	
48	한불상호교류의해 보완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	2018.5.24	
49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출자료	제천국제음악영화 제사무국	2018.5.29	

## 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42인에 대하여 53회에 걸쳐 대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2] 대인 조사자 목록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1	김OO	영진위 전사무국장	(진술조서)2017.9.20
2	윤OO	전 영상콘텐츠과 사무관	(진술조서)2017. 9. 22.
3	김OO	영진위 전 국제사업팀	(진술조서)2017. 10. 11.
4	안OO	전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진술조서)2017. 11. 3.
5	김민정	연출가	(진술조서)2017. 11. 9.
6	고OO	당시 한국문화번역원 교육정보본부장	(진술조서)2017. 11. 14.
7	김OO	당시 한국문화번역원 사업본부장	(진술조서)2017. 11. 14.
8	채OO	해외문화원보원 사무관	(진술조서) 2017. 11. 16.
9	박OO	전 국제문화과장	(진술조서)2017. 12. 5.
10	박OO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진술서)2017. 12. 12.
11	A	주 영국 한국문화원장	(진술서)2017. 12. 14.
12	오OO	주 뉴욕 한국문화원장	(진술서)2017. 12. 14.
13	A	주 영국 한국문화원장	(녹취록)2017. 12. 15.
14	박OO	주 프랑스한국문화원장	(녹취록) 2018. 12. 18.
15	이OO	주 프랑스한국문화원 팀장	(녹취록)2018. 12. 18.
16	권OO	주 독일 한국문화원장	(녹취록)2017. 12. 19.
17	김OO	전 출판인쇄산업과장	(진술조서) 2017. 12. 21
18	정OO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	(진술조서) 2018. 1. 7.
19	OOO	전 프랑스한국문화원 직원	(진술조서) 2018. 1. 10.
20	김OO	전 운영지원과장	(진술조서)2018. 1. 12.
21	OOO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직원	(서면 진술)2018. 1. 14.

연번	대상자	관계	제목
22	오OO	뉴욕 한국문화원장	(진술조서) 2018. 1. 16.
23	l	전 해외문화홍보원 사무관	(진술조서) 2018. 1. 18.
24	김OO	전 청와대 행정관	(녹취록) 2018. 1. 18.
25	v	예술경영지원센터 전 한불 사무국 팀장	(진술서) 2018. 1. 22.
26	최OO	전 한불 조직위 예술감독	(진술조서) 2018. 1. 25.
27	OOO	전 해외문화홍보원 주무관	(진술조서)2018. 1. 29.
28	정OO	한국문학번역원 전 팀장	(진술청취) 2018. 1. 30.
29	OOO	한국영상자료원 직원	(진술조서)2018.1.31.
30	임OO	전 국제문화과장	(진술조서) 2018. 2. 1.
31	노OO	전 프랑스한국문화원장 직무대리	(진술조서)2018. 2.. 2.
32	박OO	전 해외문화홍보원 사무관	(진술조서)2018. 2. 7.
33	하OO	전 해외문화홍보원 홍보사업과장	(진술조서)2018. 2. 9.
34	이OO	전 프랑스문화원장	(진술서) 2018. 2. 11.
35	모OO	전 영상자료원 프로그래머	(진술조서)2018. 2. 12.
36	조OO	전 해외문화홍보원 사무관	(진술조서)2018. 2. 13.
37	OOO	뉴욕한국문화원직원	(진술서) 2018. 2. 23.
38	박OO	전 해외문화홍보원 기획관	(진술서) 2018. 3. 5.
39	김OO	전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녹취록) 2018. 3. 13.
40	박OO	전 해외문화홍보원 사무관	(진술청취) 2018. 4. 5.
41	김OO	전 해외문화홍보원장	(사실확인서) 2018. 4. 9.
42	박OO	영진위 전 국제사업팀장	(진술조서) 2018. 4. 13.
43	박OO	전 해외문화홍보원장	(진술조서) 2018. 4. 19
44	박OO	성균관대 프랑스어권연구소	(진술청취)2018. 4.27
45	조OO, 한OO	전 해홍 사무관, 주무관 당시 인사혁신처 서기관	(진술청취)2018. 4. 30
46	OOO	전 영상콘텐츠산업과	(진술청취) 2018. 5. 14.
47	박OO	전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진술청취)2018. 5. 16.
48	김OO	전 한불 조직위 예술감독	(진술청취) 2018. 5. 16.
49	최OO	전 한불 조직위 예술감독	(제2회진술조서)2018. 5. 17.
50	최OO	전 한불 조직위 예술감독	(진술서)2018. 5. 17.
51	OOO	전 해외문화홍보원 주무관	(진술서)2018. 5. 16
52	박민희	예술인	(진술청취)2018. 5. 24.
53	정OO	전 영상콘텐츠과장	(녹취록)2018.5.23

## 제3절 | 조사 내용

### 1. 기초 사실

#### 가.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홍' 또는 해외문화홍보원)은 2008년 2월 이전 국정홍보처 소속 해외홍보원을 전신으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 '해홍'으로 개편되었으며 2013~4년까지는 국제문화과 소속 기관으로 인사와 예산은 국제문화과, 사업은 해외문화홍보원으로 분리된 후 2015년 경 부터는 재외문화원 관련 업무 일체가 '해홍'으로 이관되었다.

직제는 원장, 기획관, 기획운영과, 해외문화홍보사업과,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외신협력과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7개국 32개소 재외 한국문화원과 문화홍보관 8개국 9명을 파견 및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나. 재외 한국문화원 현황

2014년 말 이후<sup>5)</sup>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해외 한국문화원은 27개국 32개소가 있다. 문화원장은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외교관 신분을 갖고 있으며 '공사참사관' 등의 직책을 부여 받고 형식상, 대사와 총영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만 문화원은 문체부 예산을 사용하며 예산, 채용, 사업 운용 등에서 100% 전결권을 갖고 있다. 다만 매주 회의에 참석하여 대사, 총영사에게 현황을 보고 하는 관계이다.

국정감사는 외교통일위원회(현지 공관 및 문화원 중심)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해외문화홍보원 중심) 두 곳에서 진행한다. 문화원 예산은 해외문화홍보원 1407억에 포함(2017년 기준)되며 외교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화원장 중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뉴욕, LA, 러시아 문화원장은 고위 공직자 직위를 갖고 있다.

5) 이전에는 문체부 국제문화과가 담당 부서였다.

## 다. 해외 한국영화제

해외에서 진행되는 재외 공관 주최 혹은 후원 한국영화제를 지칭한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영진기금 8억원 규모로 전체 공관 대상 수요조사 이후, 계획서 평가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2년째를 맞이하는 ‘파리 한국영화제’, ‘런던 한국영화제’ 등의 역사가 오래된 한국영화제부터, 부정기적인 한국 영화주간, 수교 기념 한국영화 상영 행사, 한국 영화의 밤 등 다양한 한국영화제가 2009년의 경우 전 세계 27곳에서, 2016년도의 경우 46개국 주재 재외 공관 등 55개 한국 영화제 및 행사가 진행되었다.

## 라.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 (1) 개요

2010년 11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은 한-불 수교 130주년(2016. 6. 4.)을 계기로 ‘2015-2016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이하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공식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 11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과 한불 정상회담을 통해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간 동안 문화, 무역, 투자, 과학, 기술, 관광, 체육, 교육, 청소년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대규모 교류 행사를 개최할 것을 선언하였다. 2014년 1월 15~17일 양국의 실무회담이 진행되어 프로그램 등이 논의 되었고 국내에서는 2014년 3월 18일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 전문위원회<sup>6)</sup>가 구성되고 사업 수행기관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를 선정하였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문화예술 분야의 대규모 국제교류행사였으며, 문화유산·디자인·패션·디지털·사진·미술·연극·서커스·거리극·무용·건축·다원예술·클래식음악·전통음악·현대음악·영화·문학 분야의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2014년 1월 조직위원회 구성 이후 2017년 2월까지 3년여에 걸쳐 준비 진행되는 동안 한국 34개 도시, 프랑스 76개 도시에서 행사가 열렸다.

6) 전문위원 명단: 예술감독 김OO(전 예술의전당 전시 프로그램 디렉터), 클래식 분야 양OO(연대교수), 전통음악분야 김OO(저스트뮤직 대표), 현대음악분야 인OO(자라섬제즈페스티벌 예술감독), 무용분야 김OO(한예종 교수) 문화정책분야 김OO(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손OO(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 문학분야 정OO(한국문학번역원 교류홍보팀장), 영화애니분야 이OO(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만화분야 박OO(청강 문화산업대 교수)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은 『프랑스내 한국의 해』 2015. 9. ~ 2016. 8. 『한국내 프랑스의 해』는 2016. 1. ~ 2016. 12. 까지 진행되었다. 사업 기간 중 공식인증된 사업에서 예산이 지원된 사업은 총 173건<sup>7)</sup>이다. 공식인증 사업은 399건(한국의 해 227건, 프랑스의 해 172 건)이었다.

## (2) 공식인증 사업

한-불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과제 구축에 기여하고 문화적,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사업<sup>8)</sup>을 공모를 통하여 1차로 문화예술전문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심의를 진행하였다.

### (가) 심사 기준

심사 고려 사항은 ▷우수 국제예술 교류사업 ▷ 우수 해외 기관·단체 등과의 공동제작 및 발표 사업 ▷ 지방 간의 교류, 보호 육성이 필요한 비주류 장르의 교류, 양국에 덜 알려진 젊은 예술가, 작품 교류를 우선시함 ▷ 양국 순회 혹은 교차교류를 할 기관 및 단체 중점 지원 ▷ 초청 주체의 전문성 및 지명도, 파급 효과에 가산점 등이었다.

### 1) 유의사항

보도자료로 배포된 공식인증사업 공모 요강<sup>9)</sup>, 유의 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안내가 명기되어 있다. 특히, 프랑스 협력 상대와의 구체적인 협력 내용(장소, 시기, 예산 공동부담 등)이 없는 신청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 유의사항

- 프랑스 협력 상대와의 구체적인 협력 내용(장소, 시기, 예산 공동부담 등)이 없는 신청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식인증사업 신청서>는 프랑스 측 협력 상대와 협력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한국 측 행사주관자는 한**

7)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종합보고서 예술경영지원센터 (별책)

8)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사업결과 보고서 43쪽,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1.

9)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공모 보도자료, 해외문화홍보원 2014. 11. 17.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2차 공모 보도자료, 해외문화홍보원 2015. 3. 13.

**국어로 coree-france@korea.kr 에 접수하고, 한국 측 행사주관자와 협력하는 프랑스 측 상대는 프랑스 행사 주관기관인 앙스티튀 프랑세(Institut Français)에 불어로 접수하여야 함**

-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사업으로 인정되나, 이에 재정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님
-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작품의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2) 심사기준<sup>10)</sup>

심사기준	세부평가내용	예산심사 가중치
사업계획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와 한국 간의 상호교류 사업인가?</li> <li>• 초청자(단체) 또는 초청대상자가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전체 목적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li> <li>• 지속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가?</li> </ul>	10
사업의 우수성 및 예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내용은 예술적으로 우수하며 독창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가?</li> <li>- 프랑스 관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인가?</li> </ul> </li> <li>• 일반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흥미로우며 좋은 작품이라 느낄만한 작품성을 가졌는가?</li> </ul>	30
사업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의 장소 및 시기가 확정되어 있으며 규모나 스태프 및 출연진의 구성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가?</li> <li>•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 및 연계 프로그램, 홍보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인가?</li> <li>• 사업에 대한 자원 마련/유치 방안 및 예산 사용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 조직위원회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지는 않은가?</li> <li>- 개인, 기업 등 민간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였는가?</li> </ul> </li> <li>• 지원신청주체와 프랑스의 초청 주체 간 예산 및 업무는 적정하게 분담되어 있는가?</li> </ul>	30
사업의 국제적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사업의 실현 시 작가/단체의 성장이나 차기작 제작 등 기대되는 계량적/비계량적 사업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가?</li> <li>• 단체(개인)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우리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확대 또는 프랑스 예술계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li> <li>• 프랑스에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계획은 구체적이며</li> </ul>	30

10)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제1차 공식인증사업 공모 결과 보고 해외문화홍보사업과 2015. 3. 12.

심사기준	세부평가내용	예산심사 가중치
	관객 및 언론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가? • 양국 단체(개인)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총합		100

### (나) 제1차 공식인증사업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한-불 양국 조직위원회는 2014. 11. 17.~2014. 12. 31. 까지 1차 사업 공모를 진행하여 ‘제2차 공동회의’(15. 2. 11.~13) 결과 공식인증사업 117건을 선정하였고 이중 2015. 3. 2. 예산지원 심사 결과 기획사업 12건 등 총 53건에 4,393,175천원을 지원하였다(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 41건 4,027,645천원,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행사 12건 365,530천원, ).<sup>11)</sup>

2015년 3월 13일 해외문화홍보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공모 선정결과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에는 분야, 시청기관 및 지원행사명, 예산 지원 항목 등을 포함되어 있으며 첨부 문서로 심사위원 및 ‘공식인증사업 이행사항’ 및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 및 재정에 관한 공동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 1) 공식인증사업 이행사항

- 공식인증사업의 예산 지원 관련 사항

종류	지원 내용
유형 1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로고 사용 + 총괄 홍보지원
유형 2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 총괄 홍보지원 + 예산지원

- 예산 지원 항목 우선순위

- 1) 한국 측 참가자(기관)의 국제선 항공비, 수하물운송비 및 홍보비
  - 공연예술: 항공비, 작품운송비
  - 현대미술: 항공료, 작품운송비, 도록제작비
  - 문학: 항공료, 출판비 지원

11)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종합보고서,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항공료, 영화프린트 운송비, 저작권사용비 등</li> <li>· 학술: 항공비, 출판물</li> <li>· 관광: 스포츠 등 기타의 경우 제작비 일부 지원</li> </ul> <p>2) 한불 공동제작사업의 경우 제작비 일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불 양국 주관기관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위한 기본재원은 행사를 주관하는 양측 주관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조달하며 민간 기업 후원을 장려</li> </ul> </li> </ul>	
파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견국 측 전문가 및 행사 주관자의 사전답사 제반비용, 보험, 작품의 최초 제작비용, 작품운송비, 아티스트 항공비</li> <li>· 시각예술· 문화유산은 카탈로그(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은 텍스트와 자료)제작을 위한 자료 확보 및 운송비용 포함</li> <li>· 영화의 경우 스크리닝 비용(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상영료)까지 파견국에서 부담</li> </ul>
접수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국 측 전문가 및 행사 주관자의 사전답사비용, 여행 시 국내교통 등 현지 이동비, 파견국의 행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접수국 측 행사 주관자 물색비용</li> <li>· 행사 주관자가 부담하는 접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티스트 사례비· 일식비 및 체재비, 장소 대관, 무대 설치 비용, 시청각 자료, 홍보비용</li> </ul> </li> </ul>

2)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 및 재정에 관한 공동규칙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 및 재정에 관한 공동규칙**

**서 문**

대한민국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외문화홍보원과 프랑스 외교 국제개발부 및 문화홍보부는 한-불 양국 대통령이 2010년 11월 정상회담에서 2016년 양국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이하 '한-불 상호교류의 해')행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년 11월 정상회담에서는 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하였음을 재확인한다. 동 행사는 한-불 양국간 교류 확대와 양국 국민간 보다 나은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동 행사는 양국의 여러 지역에서 문화, 무역, 투자, 과학, 기술, 관광, 체육, 교육 및 청소년 교류를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준비될 것이며, 특히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현대적인 창의성과 젊은 세대의 참여에 중점을 둔다.

다음 기관(이하 '주무기관')이 양국의 관계부처 및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행사를 조직한다 :

- 한국측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 프랑스측 : 외교 국제개발부 산하 프랑스 해외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앙스티튜 프랑세(Institut Français)

위 공동규칙은 2014년 4월 경 1차 공동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추진 된 것으로 한국의 외교부를 대표하여 외교부 김OO 문화외교국장, 한국의 해외문화홍보원을 대표하여 기획관 이OO, 프랑스의 에스티튜 프랑세를 대표하여 앙스티튜 프랑세 사무총장 OOOOOOO가 서명하였다. 주 핵심 내용은 앞서 언급한 ‘예산 지원 항목’ 등의 재정원칙, 조직위 구성, 행사 유형 등 행사 진행을 위한 공동의 원칙 등이다.

## II. 조직위원회, 준비기획단 및 사무국

양측의 한-불 상호교류의 해 준비기획단장과 사무총장은 양측 조직위원장과 긴밀한 협력하에 행사 구성 및 협력자 물색을 책임진다. 이들은 공동으로 수립한 행사 기본 방향에 일치하도록 양측 행사의 조화와 일관성을 함께 모색한다.

양측 준비기획단장과 사무총장은 상호 협력하여 행사를 선정하고, 협력 관계를 물색하며, 양측 조직위원장과 함께 언론 및 대중에게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대표한다.

## III. 조직구성

공동회의체는 양측 주무기관, 재외공관, 양측 준비기획단장과 사무총장 및 양측 주무기관이 참여를 허용하는 관계기관등으로 구성되며, 한국과 프랑스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행사, 홍보계획, 주요 재정원칙 및 기타 행사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양측의 동의 및 승인을 통해 공식 문서화 한다.

## IV. 행사유형

행사는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1: 양측 중 일방에서만 관심을 보이고, 타방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행사로 관심있는 일방에서 행사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개최 및 자원 조달 방식과 이행조건을 보장한다. 이에 대해 사례별로 검토하며 공동회의 의사록에 별도로 기록한다. 유형 1에 해당하는 행사도 양측의 공식인증 대상이 된다.

유형2: 양측의 합의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자원분담은 자원분담은 본 공동규칙 5항에 명시된 원칙을 따른다. 유형 2에 해당하는 행사는 양측의 공식인증 대상이 된다.

유형3: 공동회의체의 구성원이 아닌 여타 기관·단체·조직에 의해 자율적으로 기획된 행사로서 양측은 본 공동규칙 7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공식인증을 결정한다. 양측은 각각 유형 3 행사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 V. 재정원칙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위한 기본재원은 본 공동규칙의 체결당사자인 양측 주무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조달한다.

동 재원에 추가하여 양측은 자국의 관계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민관 문화조직, 미디어, 기업, 사립재단)도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 재원조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행사 비용은 아래와 같이 분담한다.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 **파견국 한국 부담 부분:**

- 한국측 전문가 및 실무자의 프랑스 답사활동 비용
- 한국 예술인, 행정 및 기술인력의 프랑스까지의 항공료 및 보험료
- 프랑스 내 첫 전시 혹은 공연 장소까지 작품 및 화물 왕복운송료
- 전시회를 위한 보험
- 작품의 최초제작비용
- 시각예술작품 및 문화재의 경우, 홍보물 제작(저작권 유효)을 위한 기술적 자료 송부 및 영화(저작권 유효)의 불어자막 비용.

#### **접수국 프랑스 부담부분**

- 프랑스측 전문가 및 실무자의 한국 답사활동 비용
- 프랑스 지방순회 일정시 국내 이동비용
- 한국측 제안 행사 진행 담당자 물색 비용
- 접수비용: 해당 기관간 협상을 통해 정한 사례비, 일비, 숙박비, 장소대여료, 현지제작비용, 무대장식 및 설치비, 시청각 자재비, 카탈로그 제작비, 홍보비, 경비 비용

### **한국 내 프랑스의 해**

#### **파견국 프랑스 부담부분**

- 프랑스측 전문가 및 실무자의 프랑스 답사활동 비용
- 프랑스 예술인, 행정 및 기술인력의 프랑스까지의 항공료 및 보험료
- 한국 내 첫 전시 혹은 공연 장소까지 작품 및 화물 왕복운송료
- 전시회를 위한 보험
- 작품의 최초제작비용
- 시각예술작품 및 문화재의 경우, 홍보물 제작(저작권 유효)을 위한 기술적 자료 송부 및 영화(저작권 유효)의 한국자막 비용.

**접수국 프랑스 부담부분**

- 한국측 전문가 및 실무자의 한국 답사활동 비용
  - 한국 지방순회 일정시 국내 이동비용
  - 프랑스측 제안 행사 진행 담당자 물색 비용
  - 접수비용: 해당 기관간 협상을 통해 정한 사례비, 일비, 숙박비, 장소대여료, 현지제작비용, 무대장식 및 설치비, 시청각 자재비, 카탈로그 제작비, 홍보비, 경비 비용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 및 재정에 관한 공동규칙 중 조직 및 재정 원칙 부분

**(다) 제2차 공식인증사업**

2015. 4. 24., 4. 27., 4. 29., 6. 5.에 2차 사업 공모 심사를 진행하여 ‘제3차 공동회의 (‘15. 6. 16.~19.)에서 선정하여 총 83건의 공식인증 사업에 3,051,426천원을 지원하였다(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 53건 2,193,454천원, 한국내 프랑스의 해 행사 29건 737,57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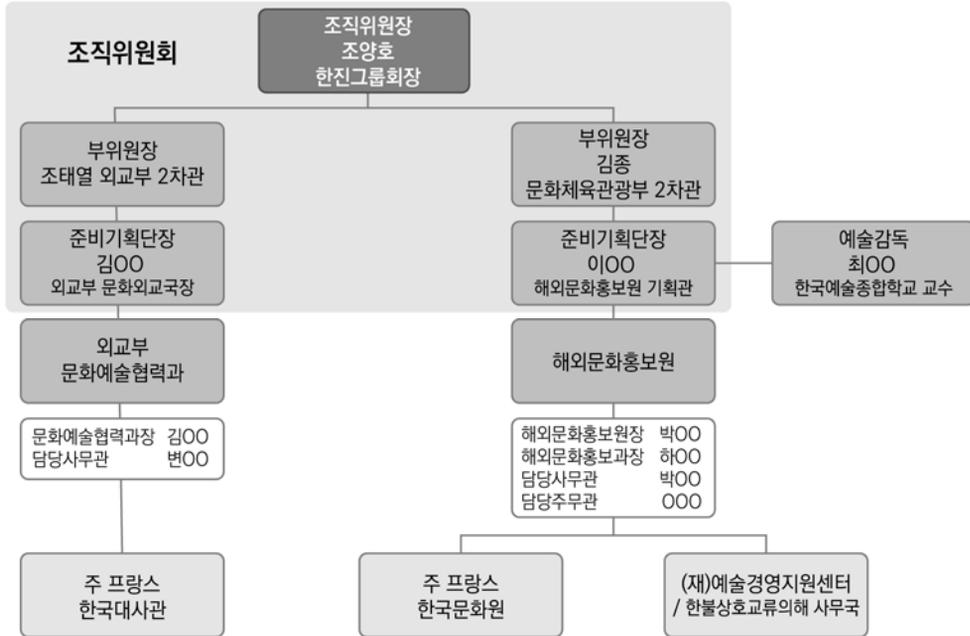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제2차 공식인증사업 공모 선정결과 공고문은 2015년 7월 9일 ‘예경’ 홈페이지 등에 1차 발표와 동일한 형식으로 게재되었다.

**(라) 제3차 공식인증사업**

2015. 12. 9.에 3차 사업 공모 심사를 진행하여 86건을 선정하고 ‘제4차 공동회의 (‘15. 12.10.~11.)에서 논의를 거쳐 37건의 행사에 1,625,390천원을 지원하였다(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 20건 1,344,860천원,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행사 16건 307,530천원). 2016년 1월 8일 ‘예경’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공고문이 발표되었는데, 앞서 첨부되었던 ‘이행사항’, ‘공동규칙’ 문서는 첨부되지 않았으며 공고 내용도 예산 지원 유무가 생략되었다.

(3)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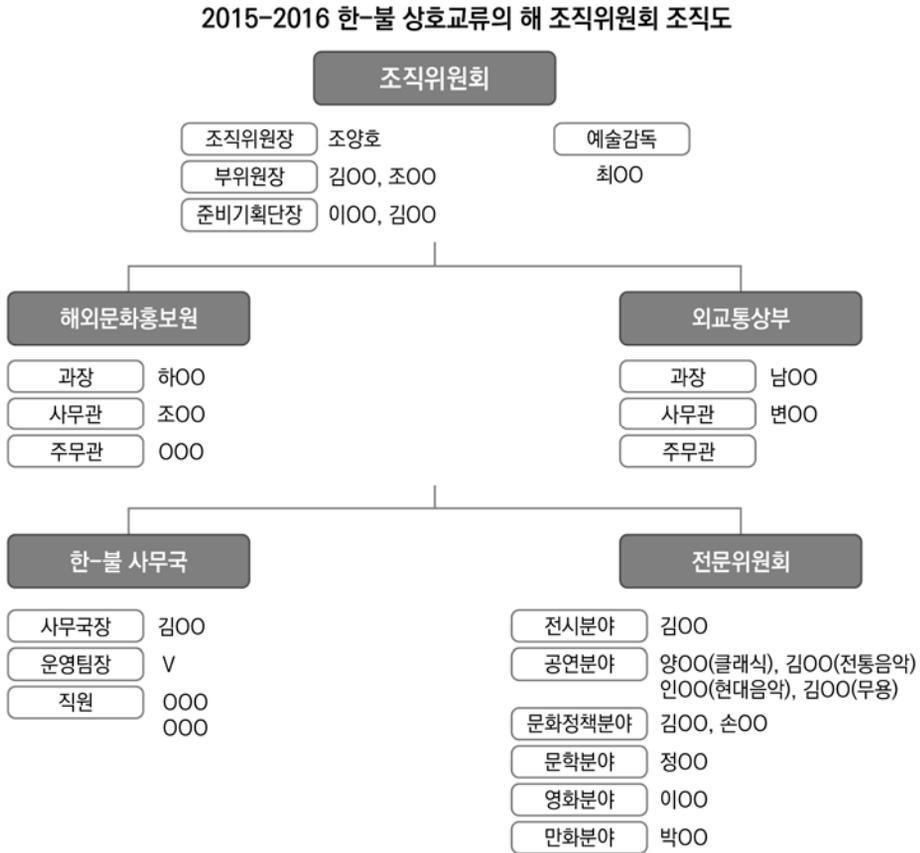
[그림-1] 한불상호교류의 해 2016년 추진체계 12)



위 그림 기준으로 2015년 1월 경, 조직위 부위원장은 김희범 제1차관, 준비기획단장은 이OO 해외문화홍보기획관 이었으며 2015년 3월 초, 준비기획단장 박OO, 6월 경 준비기획단장 B, 8월부터는 공석, 이후 2016년 경 이OO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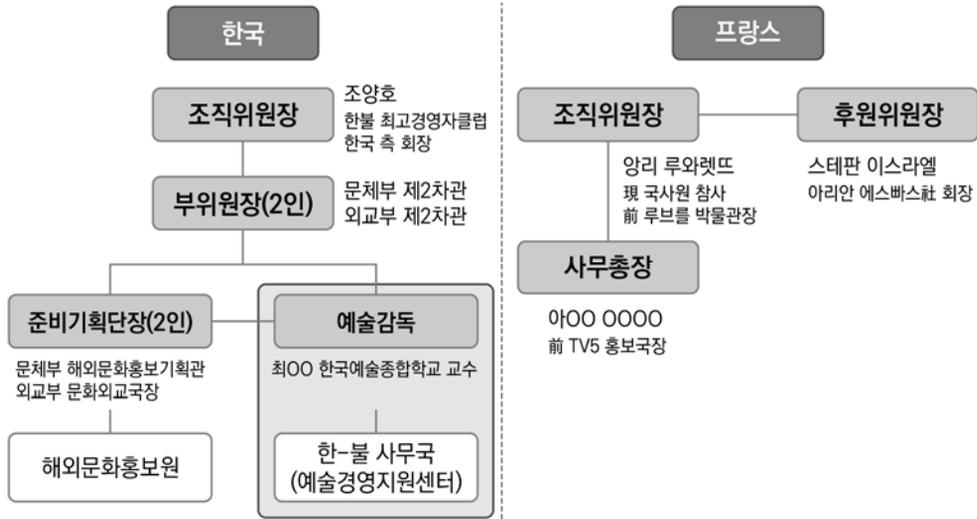
12) 2016년 한불 상호교류의해 사무국 운영계획안, 예술경영지원센터 2016. 2

[그림-2] 한불상호교류의 해 2015년 1월 추진체계<sup>13)</sup>



13)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사업결과보고서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1.

[그림-3] 한불상호교류의 해 2015년 추진체계<sup>14)</sup>



(4) 기관별 역할<sup>15)</sup>

기관	역할
해외문화홍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li> <li>공동회의체 운영</li> <li>공식인증사업 내부 심사 결과, 단체 예산심사 결과 승인</li> <li>이메일 라벨링 서한문 발송</li> </ul>
한-불사무국 (예술경영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총괄) 세부계획수립, 사업운영 총괄 및 점검·평가</li> <li>(예산총괄) 사무국 운영, 공식인증사업 단체 지원금 교부 및 정산</li> <li>(지원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식인증사업 대상 공모, 내부심사 및 예산 심사 실시</li> <li>공식인증사업 주관단체 사전 설명회 개최 및 교육</li> <li>양국 주관기관 섭외 지원</li> <li>한-불 공동회의체 운영 및 협의(불측)</li> </ul> </li> <li>(홍보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론 홍보, 홈페이지, SNS 관리 등 홍보 총괄 시행</li> </ul> </li> </ul>
예술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원) 양국 협력 하에 행사 구성 및 주관단체 섭외 등 사업 지원</li> <li>프랑스내 한국의 해 및 한국내 프랑스의 해 사업 주관단체 섭외</li> <li>사업 추진관련 프랑스측 협의 지원</li> <li>(사무국 관리) 사업 주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li> </ul>
사업 주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부)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교부신청,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li> </ul>

14) 15-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지침, 해외문화홍보원, 2015. 11.

15) 15-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지침, 해외문화홍보원, 4쪽, 2015. 11.

기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 불측 주관기관 협의, 작품 제작 및 설치 등 사업 시행</li> <li>• (정산) 사업정산실적보고서 제출(회계감사 사전 실시)</li> </ul>
IF 및 주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인증사업 선정, 협의 및 홍보 등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총괄 수행</li> <li>- 공동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li> <li>• 프랑스내 한국의 해 사업 지원</li> </ul>
안진회계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실시 및 수수료 청구</li> </ul>

※ 외교부 : 양국 공동회의 개최 및 일반분야 공식인증사업 추진

### 마.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 또는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06년 1월 12일 설립되었고 현재 조직 구성은 이사회, 감사, 대표, 경영기획실(전략기획팀, 경영관리팀), 예술산업기반실(정보분석팀, 인력양성팀, 판로지원팀), 예술산업진흥실(공연유통팀, 시각지원팀, 시각유통팀, 교류협력팀)로 되어있다. '예경'의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의 산업적 기반 조성(예술산업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전문화 및 분업화 지원), 예술의 유통 활성화 추진(예술의 유통 플랫폼 확대, 예술상품의 유통채널 다각화), 한국예술의 해외진출 확대(공연분야 해외진출 지원, 시각예술분야 해외진출 지원) 등이 있다.<sup>16)</sup>

'예경'은 2014년 2월 14일 한-불 상호 교류의 해 유관기관 회의<sup>17)</sup>에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과 함께 참여한 바 있다.

'예경'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수행 주관 기관이 되어 사무국을 2014. 3. ~2017. 2 까지 운영하였다. 2016년도 사무국 업무분장<sup>18)</sup> 중 김OO의 업무 분장 내용은 '한불사무국 업무 총괄, 최OO 예술감독 관련 보좌' 등으로 기재되어있다.

16)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17) 2015-2016 한불 상호 교류의 해 '추진현황, 해외문화홍보원, 2014. 2.

18) 2016년 한불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운영계획안 예술경영지원센터 2016. 2.

## 바. 예술 감독 수행 임무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 해외문화홍보원



수신 (재)예술경영지원센터(한-불 사무국)  
(경유)

제목 한-불 상호교류의 해 예술감독 계약 관련 검토결과 알림

---

한-불 상호교류의 해 예술감독 재계약 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계약 체결 및 본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최OO 예술감독 계약서상 불합리한 사항 문제제기 및 재계약 요청(8.12, e-메일)
- 검토결과 : 기존 계약 해지( '15.3~12월) 및 재계약 체결
  - 계약기간 : '15. 9월 ~ 사업종료 시
  - 계약금액 : 80백만원
  - 수행임무
    -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분야 사업 지원
    - 개막식, 공동회의 등 조직위원회 업무 지원
    - 프랑스 사무국, 관련 기관 등 업무 협의 및 자문
    - 한-불 사무국 사업관리 등 총괄
  - ※ 계약체결시 수행임무 범위는 추가, 삭제 등 조정 가능
- 행정사항 :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 필요. 끝.

## 2. 조사내용

### 가.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 관련 역할에 대하여

#### (가) 당시 해외문화홍보원장 박OO의 진술

박OO은 2015년 3월 31일(화)부임 후 한불수교 행사 사업 보고를 받은 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청와대에 인사를 갔는데, “김소영 비서관이 ‘한불수교 사업에 대해 잘 좀 챙겨 달라’고 했습니다. 다이빙벨 때도 ‘잘 챙겨달라고 한바’ 있었죠.”라며 “업무 관련하여 핸들링을 잘못해서 위기에 몰린 직원들을 본적이 있어서”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들을 점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15년 6월 경 박OO은 직원(조OO 사무관 등)들에게 ‘모르면 몰라도 알면서도 하면 다친다’라고 말하며 청와대에 양해를 받으러 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 OO 예술 감독과 일종의 설득방안 등을 협의하여 청와대 김소영 비서관에게 보고 하였는데, 김소영 비서관이 나중에 확인해준다 하였고 이후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지침은 세르누치의 항공료 제외 등등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추진 현황 보고<sup>19)</sup>』관련하여 최OO 예술감독과 협의의 부분에 대하여 “감독은 사업을 진행시키고 싶어 했었고 사업을 거의 주관 했었습니다. 문서에 적시된 내용은 최 감독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최감독은 아르테 TV등과 관련하여 제 3차 공동회의에 가서 프랑스 측과 만나 볼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박OO은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와 관련하여 “아르테 TV 부분은 제 의지이지만 이 응노 관련은 청와대 지시였고 나머지 사업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진술조서 2018. 4. 19.).

#### (나) 당시 해외홍보사업과장 하OO의 진술

하OO은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추진 현황 보고』관련하여 “당시, 청와대의 요구가 있어서 최OO 예술감독과 상의하여 문제를 최소화해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와대 보고 때 박OO 원장과 함께 갔는지, 혼자 갔는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위 보고 때문에 당시 김소영비서관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리스트에 들어 있다면, 지원을 배제해야 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위와 같은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진술조서 2018. 2. 9.).

#### (다) 해외홍보사업과 한-불 상호교류의 해 담당 주무관 OOO 진술

OOO는 한불 상호교류 행사지원 관련하여 결재 라인에 대하여 “언제나 원장님 결재가 필요했습니다. 소소한 결재업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원장 결재였습니다. 기획관의 공식도 있었고, 한불 행사가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규정상 원장 결재가 필요했습니다.” 라고 하며 “해외문화홍보원장의 결재가 나야 사무국에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기획관 결재로 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 측에 서신을 보내는 정도의 권한이었습니다. 최종 책임자가 해외문화홍보원장입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는 지시를 받아 집행하는 것입니다

19) 해외문화홍보사업과 2015. 6. 10(수)

다.” 라고 하고 “이OO 단장 때가 2015년 초 예산이 확정 되었을 무렵입니다. 조OO 사무관이 보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박OO 단장 시기에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조OO 사무관은 청와대 김OO 행정관과 종종 연락을 하는 편이었고, 박OO 원장은 김소영 비서관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하OO 과장은 당시 방관하는 느낌이었는데, 조OO 사무관이 어떻게 보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했다(진술조서 2018. 2. 13.).

한편 OOO는 제3차 공동회의(2015. 6. 16. ~19.)에 관하여 “공동회의 당시 최감독과 어떠한 것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인상을 쓰고 있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는 불측과의 회의 자리에 모두 동행했지만 최감독이 불측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지 않고 고의로 귀를 닫았습니다.” 라고 하고 최OO 예술감독이 블랙리스트 실행 저지를 위해 노력했던 사례에 대하여 “제가 직접 목도한 바 없습니다. 최감독은 항상 쉴 틈 없이 이야기를 하며 특히 자기 공치사가 많은 성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가 과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들을 모두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최OO 예술감독이 9,473 리스트 대조 작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최감독은 저에게 명령권자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약 만명의 리스트가 예술정책과로부터 내려왔고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라는 해외문화홍보기획관(박OO)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감독에게 전화로 알리자 “OO씨, 하지마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 하지마세요.”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OOO 주무관이 2016년 경,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하여 외부에 알리고자 했고, 최OO 예술감독이 만류했는지에 대하여 “이것을 최감독과 상의한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막 출범하였을 때 최감독에게 자진 조사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물은 적은 있습니다. 최감독은 처음에는 블랙리스트 실행을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였는데 무엇을 밝히겠다는 것이냐고 물었으나 나중에는 O주무관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고 협조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예경 김OO 사무국장도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중 ‘예산지원 제외’ 사업들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듯한데, 아는 바 있나는 질문에 “김OO 국장도 예산 배제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수행에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기재 하였다(진술서 2018. 5. 20.).

## (라) 당시 한-불 상호교류의 해 예술감독 최OO의 진술

최OO는 예술 감독의 역할에 대하여 “총감독이죠. 초청 사업 코디네이션입니다. 프랑스가 원하는 공연, 전시, 단체를 소개하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고 ‘업무 체계로 보면 초기 2014년에는 준비기획단장 오OO(해외문화홍보원장), 최OO(외교부 문화외교국장)와 상의하고 지시를 받은 것이 맞나요. 원OO와 최OO 누가 더 관여를 많이 했나요.’하는 질문에 “그 분들은 문서상에 있지만 역할은 크게 없습니다. 프랑스에 비해 우리 쪽은 준비기관이 없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사무국 역할을 맡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5년 준비기획단장에 대하여 “이OO 단장은 3개월, 박OO 국장이 3개월, 박OO 원장이 직접 했었습니다.” 라고 하고 ‘2015-2016 한불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 사무국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두고 단장은 이OO, 박OO, 박OO, 그리고 해외문화홍보원 직원 2명이 지원하였던 것이 맞나요.’라는 물음에 “2016년도 단장은 잘 기억은 안나는데, 해운 담당과장도 한 3명 정도 바뀌었습니다. 과장은 하OO, 사무관은 조OO, 박OO, 주무관은 OOO 등으로 기억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조직위원회 체계상 해외문화홍보원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예술감독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겠지요”라고 하고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이OO, 노OO, 배OO의 역할에 대하여 “현지 코디네이팅하는 일이죠. 이OO 원장 일은 제가 전문위원들과 많이 일을 진행해서 업무가 줄어들어서, 개막행사 등에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신경을 써야 했겠지요. 그리고 노OO, 박OO 원장은 아마 큰 역할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해외문화홍보원 내부 역할에 대하여 “해외홍보문화원장은 조직도에 안 나오지만 2015년 기획관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는 단장 역할을 했고 기획관이 들어 와서는 기획관이 단장 역할을 했고 행정적 책임자는 하OO이었습니다. 과장 지시를 박OO이 수행했고 OOO 주무관이 실무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OO 주무관은 내켜 하지 않았지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하OO와 박OO을 교체 요구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두 공무원이 일을 극단적으로 처리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처리 부분에서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는데, 예를 들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사업을 2016년도에 하게 되는데 2015년 12월 초에 이미 공모를 진행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행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고 예술감독 기간에 한예종은 휴

직을 했었냐는 질문에 “휴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비상근 구조였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는 안식년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진술조서 2018. 1. 25.).

한편 최OO는 2018. 5. 16. 진술서를 제출하며 “정부가 배제시키려는 예술가들을 지키고, 온전히 활동하게 투쟁한 본인에게 블랙리스트 집행의 실행자, 검열과 배제의 주역으로 낙인찍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라고 하며 예술감독의 역할에 대하여 “일체의 검열과 배제를 결정하거나, 수행(집행)할 권한 없고, 결정된 사업도 모든 예산 집행은 해홍승인을 거쳐야 가능하며 모든 회의 소집도 마찬가지로였다며 예술감독은 프로그램 총괄 코디네이터였다” 라며 “예술감독은 현장 전문가로서 프랑스와 의 관계에서 핵심으로 양측의 매개자 역할과 만약 어려움이 생길 경우 중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사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또한 “자신은 청와대로부터 단 한건도 직접 지시 받은 적 없으며, 문체부로 하달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2015. 5. 본격화된 정부의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공동조직위에서 결정한 프랑스 주관 사업과 행사의 진행에 많은 걸림돌이 발생하고 한불공동사업자들이 항의하여 이를 풀어내기 위해 개입하기 시작했고, 내 결정 사항이 아니라고 손을 놓았다면 시도했던 수많은 사업들이 무산되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진술서 2018. 5. 16.).

또한 최OO는 2회 진술조서(2018. 5. 17.)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 책임이 있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부터는 사업자들과 재정파트의 일이지, 모든 것들이 제 책임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원배제가 아니라 비예산 공식인증 사업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실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블랙리스트 자체와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 (마) 당시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OO의 진술

예술감독과 ‘예경’ 관계에 대하여 “예술감독직이 다 있기 때문에 이분이 거의 컨트롤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도 참 이게 애매했던 게 그렇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조직으로 따지면 제가 여러 가지를 관여를 해야 되지만 그럴 입장도 아니었다”라고 하고 한불 교류 행사 관련하여 특정 예술인, 단체에 관하여 “V팀장이 몇 번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가령 ‘무슨 단체를 좀 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몇 번 한두 번 정도...” 들었다고 하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어차피

프로그래밍은 최OO 감독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라며 자세한 부분은 모른다고 하였다 (녹취록 2018. 3. 8.).

#### (바) 당시 ‘예경’ 한불 사무국 팀장 V의 진술

2015. 6. 10.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추진 현황 보고』문서 관련하여 “최OO 감독은 해외홍보원 원장과 논의, 감독과 원장은 청와대 보고를 하고 있었음.” 이라고 기재하고, “대부분 지원 예정돼 있던 예산을 안주는 형식으로 문제사업들을 걸러냈다”라고 하고 “리스트 자체는 직접 내려온 적은 없었고(센터 내 모든 사업들이 공통적임), 문체부 공무원들끼리만 공유했는데 예경이 공모를 해서 심사 후 선정리스트가 나오면, 그 리스트를 문체부에 보내고, 담당 공무원이 걸러서 다시 예경에 보내면 그 내용대로 발표하는 형식이었음.” 이라고 하며 “내용에 일관성이 없어서(동일인물이 문화부 다른 과에서는 제외되고, 어떤 과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사업 진행) 여태 자기들 스스로 문제인사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알아서 개인적 감정 혹은 자체적으로 걸러 리스트의 변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추측” 하였다고 하고 “’15. 7. 최OO 감독(과 김OO 국장)이 한불팀에서 V 팀장 빼달라고 김선영 대표에게 요청 이후 한불 사무국 팀장 직위 해제되어 김OO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되었고, 일 못한다고 빼달렸다고 하는데 사사건건 감독과 대립하던 것이 이유라고 본인은 생각한다며, 감독과 대립했던 이유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산지원, 너무도 친프랑스 측, 사대주의적 입장이 과도하게 많았었음.” 이라고 기재하였다(V 진술서 2018 1. 22.).

#### (사) 당시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이OO의 진술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추진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아르떼 경우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르떼의 경우 다큐멘터리 기획단계부터 많이 도와준 인연이 있었기에 한국조직위의 최OO 감독과 함께 다큐 감독을 만나 한국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며 “문화원장으로서 제가 역할은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2-3년전부터 프랑스 문화기관 대표들을 만나 큰 틀에서의 대략적으로 논의하며 일정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양국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조직위의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파트너 위원들과 접촉해서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별 구체적 진행 상황은 잘 몰랐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진술서 2018. 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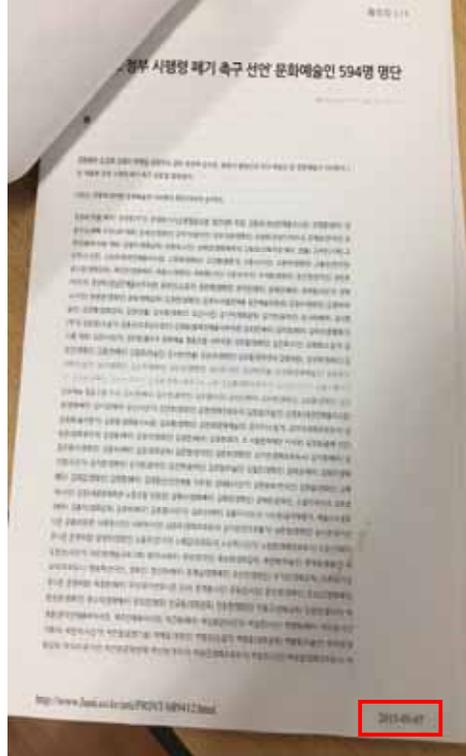
### (아) 당시 프랑스 한국문화원 직원 000의 진술

000은 ‘이00 원장이 검열 또는 소위 블랙리스트 관련하여 말했던 것에 대하여 “‘절대 밖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라거나 ‘죽을 때 까지 가져가야 한다’ 거나 ‘말도 안되는 일을 시켜서 미안하다’ 등의 말이 기억합니다. 주로 모철민 대사가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았던 것 같은데, 모대사가 의전 문제라든지,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 방문할 때 마다 뭐라도 행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애초 기획이 없었어도 행사를 만들어야 했고, 예산도 한국에서 즉각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철민 대사가 의전을 중시해서 대통령이 타는 자동차에 물을 어떻게 갖다 놓으라든지, 등등 디테일하게 업무지시를 했었고, 아마 한국과 시차 때문인 듯 한데 바로 연락 받으면 새벽에도 이00 원장에게 일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K팝에 신경 쓰라는 지시도 많았습니다. 2015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공식 방문은 아니고 다른 나라 방문 후에 오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하며 “한불 행사 관련 영화 분야 전문위원이셨는데 한국에서 결정되어 통보만 왔었는데, 전문위원회가 없어졌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영화 사건 계기로 부산 국제영화제 사람들은 빼라라는 지시가 있었나 하는 추측이 프랑스 한국문화원내에 있었습니다. 이00 위원 한명만 빼면 보복처럼 비추어지니 그래서 영화 전문위원회를 없애 버린 것이라고 이00원장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진술조서 2018.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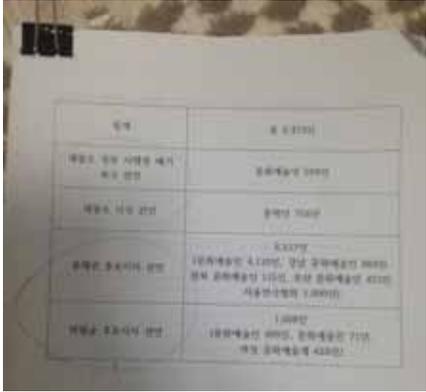
나.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1) 9,473인 블랙리스트

[그림-4, 5] 표지, 9,473인 블랙리스트

 <table border="1"> <tr> <td>합계</td> <td>총 9,473인</td> </tr> <tr> <td>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td> <td>문화예술인 594명</td> </tr> <tr> <td>재일호-서극 선언</td> <td>문화인 794명</td> </tr> <tr> <td>문재인 후보지지 선언</td> <td>6,517명 (문화예술인 4,130명, 경남 문화예술인 809명, 전북 문화예술인 319명, 부산 문화예술인 429명, 서울연극협회 1,000명)</td> </tr> <tr> <td>박원순 후보지지 선언</td> <td>1,000명 (문화예술인 900명, 문화예술인 71명, 제정 문화예술계 1028명)</td> </tr> </table>	합계	총 9,473인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명	재일호-서극 선언	문화인 794명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명 (문화예술인 4,130명, 경남 문화예술인 809명, 전북 문화예술인 319명, 부산 문화예술인 429명, 서울연극협회 1,000명)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1,000명 (문화예술인 900명, 문화예술인 71명, 제정 문화예술계 1028명)	
합계	총 9,473인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명										
재일호-서극 선언	문화인 794명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명 (문화예술인 4,130명, 경남 문화예술인 809명, 전북 문화예술인 319명, 부산 문화예술인 429명, 서울연극협회 1,000명)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1,000명 (문화예술인 900명, 문화예술인 71명, 제정 문화예술계 1028명)										
<p>OOO 제출 표지 사진과 V가 제출 9,473인 블랙리스트 표지 사진의 '동그라미' 표시 부분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표지'로 확인된다. &lt;OOO 제출 9,473인 블랙리스트&gt;</p>	<p>9,473명 명단 원본 중 첫 페이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명이 기재된 한겨레 2015년 5월 1일 기사 자료. 우측 하단에 2015년 5월 7일 출력 날짜 표기됨</p>										

[그림-6] 9,473인 블랙리스트 표지 사진



분계	총 인원
대중교, 문화 사업장 폐기 후의 결산	문화예술인 594인
대중교, 문화 사업장	문화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명 (문화예술인 4,127명, 장년 문화예술인 889명, 문화 문화예술인 115명, 문화 문화예술인 412명, 자유민주정의 1,084명)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1,608명 (문화예술인 499명, 문화예술인 715명, 문화 문화예술인 412명)

V 제출 9,473인 블랙리스트 표지 사진(2015. 6. ~ 7. 경 사진)<sup>20)</sup>

## (2) 9,473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배포 과정

(가) 당시 예술정책과 사무관 오OO(특검 오OO 2회 진술조서 2016. 12. 27.)은 “2015. 5 경 당시 김OO 청와대 행정관이 저에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박원순 후보지지선언’ 등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알려주며, 인터넷 이 사람들 명단을 확인해서 장관한테 보고하고 교문수석실로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더니 이 표(한국일보 보도 내용<sup>21)</sup>)에 있는 것처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지지선언 1,608인 등 총 9,473인으로 확인되어 이표로 작성했습니다.”라고 하며 “제가 김OO 국장에게 ‘전국에 등록된 문화예술인이 16,000명 정도인데, 9,500명 정도를 빼면 사업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자, 김OO 국장도 웃으면서 ‘말도 안되는 얘긴데 어떻게 하겠냐 장관께 보고하고 보내자’고 했고, 김OO 국장이 ‘장관 보고 났으니까 보내라’고 해서 내부 메일에 앞 표와 사이트 주소창(URL)을 붙여서 메일로 보냈습니다.”라고 하였다.

20) 이 표지 사진은 아래 2016년 한국일보 보도(2016. 10. 12.)로 공개된 바 있다.

21)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기사에 수록된 ‘리스트 표지 사진’ 한국일보 2016. 10. 12.

- (나) 오OO(진술조서 2018. 2. 7.)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사업별로 저에게 명단을 요청한 기억은 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영상콘텐츠산업과, 국제문화과, 지역전통문화과,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산업정책과, 출판인쇄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과에도 위 리스트를 전달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오OO은 “각 과에서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저에게 받아갔습니다. 전달 시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했다.
- (다) 당시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OO(진술조서 2018. 3. 8.)은 “2015년 여름 쯤에 블랙리스트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김OO 국장이 전보 조치될 무렵이었습니다. 그 무렵인가에 문재인 지지 명단 등 9,473명의 명단이 내려왔는데 제가 예술의전당 경영 평가 자리에서 예술의전당 본부장들(U 본부장, 박OO 본부장 등)에게 청와대에서 내려 보낸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청와대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한 후 앞으로 조심하자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 (라) 당시 출판인쇄산업과장 김OO(진술조서 2017. 12. 21.)은 “세월호 시국선언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터넷에서 직접 출력하여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7,8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나, 도서를 선정하게 되면 저쪽, BH 등에서 문제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에게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여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을 출력하여 사업에 활용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 (마) 현 LA한국문화원장 김OO은 문체부서관실 행정관(‘14. 10.~’16. 1.)에 있으면서 9,473인 리스트 적용 및 각종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한 바 있다는(특검 오OO 2회 진술조서 2016. 12. 27.) 오OO의 진술에 대하여 ‘2017고합102, 2017. 5. 31. 녹취록’에서 9,473인 리스트 작성 지시에 관한 검사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검찰 측의 ‘9,473명 명단에 대해 오OO 서기관도 그렇고 김OO 국장도 그렇고 김종덕 장관도 그렇고 모두 일치된 진술이고, 증인이 장관에게 명단을 보고하라고 해서 장관에게까지 명단을 보고했고, 그다음에 증인이 다시 명단을 확인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사후에 들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OO 서기관의 말이 맞지 않은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만약 필요 했다면 그렇게 주문을 하고 나중에 적용했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라고 하였다(동 녹취록 105/107).

한편 김기춘의 변호인이 김OO에게 증거기록 5748쪽(김OO 피의자 신문조서 2016. 12. 31.)을 제시하며 ‘증인은 합계 9,473인으로 시작되는 문건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지요’라고 묻자 “제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카테고리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문체부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들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시 변호인은 ‘이 사건 대다수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9,473인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는 너무 방대하여 실질적으로 적용된 적도 없고 일종의 해프닝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떤가요’라고 묻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김OO은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 2016. 12. 31’에서도 동일하게 부인하고 있다. 다만, 신문조서 검사의 마지막 질문 ‘결국 피의자(김OO)는 단순히 지원명단을 문체부에 알려준 잘못이 아니라, 피의자를 비롯하여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문체부와 산하 기관의 업무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무적이라는 명목하에 입맛에 안맞거나 정부 정책비판, 야당 후보지지 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지요’에 대하여 김OO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한 바 있다.

김OO에 대한 특검 진술서(2017. 1. 14.)에는 사무관 김OO, 예술위 김OO, 예술정책과 오OO 등과의 문자메세지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김OO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오OO과의 문자 메세지에서는 1+1 사업<sup>22)</sup>과 관련하여 ‘심사연기 했구요 OO국장님은 오히려 리스트가 늘어날 수 있다고 은근 협박하네요’(오OO 수신 2015. 8. 21 19:18:15 발신자 김OO)라고도 하였다.

### (3) 9,473인 블랙리스트 내용

(가) 위 문서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문화예술인 4,110인, 경남 문화예술인 869인, 전북 문화예술인 115인, 부산 문화예술인 423인, 서울연극협회 1,000인),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1,608인(문화예술인 909인, 문화예술인 71인, 여성 문화예술계 628인)에 대한 언론 보도, 블로그 스크랩 목록으로 60쪽 분량이며 총 합계 9,473인으로 되어 있으며 60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서 출력일이 표시 되어 있는데, 2015. 5. 6. ~ 5. 7.로 나타나 있다. 출력물 문서의 제목과 출처는 다음과 같다.

22) 공연티켓 1+1 사업(2016년 3월 경 까지 진행)

**[표-3] 9,473인 블랙리스트 수록 명단 등**

연번	수록 순서 별 기사 제목 및 명단	출처 및 날짜
1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594명 명단	한겨레 2015. 5. 1.
2	황석영 세월호, 박정희 근대화 적폐이자 박근혜 업보, 문학인 754명 시국선언	미디어오늘 2014. 6. 2.
3	문화재인 1219 - 문화예술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문 및 명단 4111명	한두메 (블로그) 2012. 11. 20.
4	문화예술인 1만인, 문재인지지 선언	세상돌아가는소리(블로그) 2012. 12. 12.
5	경남 문화예술인 869인 문재인 후보지지	고성인터넷뉴스 2012. 12. 10.
6	전북지역 문화예술인 115명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데일리전북 2012. 11. 1.
7	부산 문화예술계 인사 423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2012. 12. 13.
8	서울연극협회 문재인 후보지지 연극인 1000인 선언	서울포스트 2012. 12. 7.
9	문화예술인 900여명 박원순 지지선언문 전문	폴리뉴스 2014. 6. 3.
10	연극인들 박원순 서울시장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지지 선언	월드스타 2014. 6. 2.
11	도종환 등 문화예술인 71명 박원순 지지선언	조은뉴스 2011. 10. 20.
12	628명 여성 문화예술계 박원순 지지 성명	매일일보 2011. 10. 19.

(나) 한국일보에서 특종 보도한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2016.10.12.)’ 기사로 블랙리스트 문서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바 있는데, 당시 보도는 ‘문서 표지’로 내용을 검색하여 기사화 했으며, 블랙리스트 문서 분량을 100 쪽 등으로 기술되어 사실과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홈페이지가 폐쇄되어 부산 문화예술인 423인 명단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위 문서 입수로 확인되었다.

#### (4) 해외문화홍보원의 9,473인 블랙리스트 문서 활용 경위

(가) 당시 해외문화홍보원 원장 박OO(진술조서 2018. 4. 19.)은 위 블랙리스트에 대하여 2015년 3월 31일 원장 부임후 청와대 문체비서관 김소영으로부터 ‘한불수교 사업에 대해 잘 좀 챙겨 달라’는 지시를 받고 “문제가 될 만한 사업들을 챙겨 본 것”이라며 “상황을 파악해 보자는 것이었고 박OO 국장이 외교안보연구원교육(국장급 직무훈련 교육)을 받고 부임한지 얼마 안되는 때라 본부 분위기를 박OO 국장에게 말해 주었고,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문서에 대하여 “위 문서가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실무자들로 부터 배제될 수 있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들은 바 있고, 그 그룹은 신문에서 보았다라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당시 해외문화홍보원 기획관 박OO(진술서 2018. 3. 5.)은 “본인이 2015년 3월 초 기획관으로 부임한 후,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으로 부터 한불상호교류의 해 사업이 추진 중인데 외부 인사들이 선정한 사업중 당시 박근혜정부에서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곧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해외문화홍보원에도 말로만 듣던 당시 정부가 꺼려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에 난감했습니다.” 라고 하며 “본인의 기획관 부임 당시에는 박근혜정부가 특정 인사들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꺼려한다는 것과 무심코 모르고 지원을 했다가 승진탈락, 좌천 등 뒤서리를 맞았다는 등의 이야기가 부처 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장, 문화예술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 등 부내외 인사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거나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단 이 사업이 예술의 자율성을 특히 중요시하는 프랑스라는 상대국가가 있는 국제 교류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청와대의 양해를 최대한 먼저 구하고 청와대에서도 양해한 사항이라는 것을 토대로 장차관을 설득하여 최대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오OO 사무관은 먼저 청와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시 정부에서 꺼려하는 인사 등을 특정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해야, 관련 사항이 추후에 알려지게 되어 사업이 급박하게 취소압력을 받는 사태 등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하지만 여러 개의 한불교류의 해 사업 중 어떤 사업을 또 어떤 인사를 당시 정부에서 꺼려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청와대 협

의자료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청와대 협의 자료 작성을 위해 실무자에게 당시 예술정책과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오OO 사무관의 의견을 구해볼 것을 권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이는 당시 상황에서 청와대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외부 인사들이 선정한 사업을 최대한 그대로 추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며, 애초에 배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고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청와대 협의자료 작성을 위해 오사무관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은 블랙리스트가 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시 실무자가 오사무관에게서 어떤 자료를 받아왔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다) 당시 해외홍보사업과 과장 하OO(진술조서 2018. 2. 9.)은 “저는 (위 리스트를) 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 조OO, OOO 주무관이 말하기를 문재인, 세월호 시국 선언, 박원순 관련 인물 신문기사를 모아 놓은 것으로 리스트를 체크 한다고 보고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하면 힘든거 아니냐’며 ‘엑셀 문서는 없더냐’ 하니 실무자들이 ‘없다’고 한 바는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당시 한불행사 담당 사무관 조OO(진술조서 2018. 2. 16.)는 “2015년 4월 경, 박OO 기획관이 ‘예술정책과 오OO 서기관이 뭔가를 줄테니까 받아오라’ 해서 받아온바가 있습니다. 그때, 적혀 있었던 것이 세월호 관련 명단, 박원순, 문재인 지지자 명단 등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명단이나’ 물으니, ‘이런 사람들이 정부 지원 명단에 있으면 안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오OO 서기관이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명단이 1만명이고 이름만 나와 있어서 리스트가 부실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박OO 기획관에게 받아 온 후 보고 드리니 ‘그것을 김종덕 장관이 이것에 민감하게 생각한다. 본부에서도 그런 명단을 보고 있으니 살펴보라 했습니다’. ‘동명이인이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라고 하며 “받아온 날짜는 5월 초 무렵이었습니다.”라고 하고 위 문서를 통해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OOO 주무관과 함께 찾았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식인증 사업을 선정한 이후 여서 선정된 사람을 어떻게 빼느냐며 원장께 ‘못 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박OO 기획관은 이미 선정된 사업이라고 해도 리스트 대상자를 빼라고 지시 한 바도 있습니다.” 라고 하며 “박OO 원장께 ‘이런 것을 왜 하나’, ‘이름만 나와 있는 리스트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배제하기 어렵고 예술인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니 박OO원장은 ‘정부 반대 예술을 한다면 자기 돈으로 하라는 것인데 뭐가 배제냐’, ‘예술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반대 예술이라면 정부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찾으려면 다른 것을 하지 왜 공무원이 되었냐’라고 야단을 맞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박OO 원장이 2-3주후 빠지라고 해서 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한편, 위 문서를 누구에게 보여주었느냐고 묻자 “하OO 과장, OOO 주무관, 박OO 기획관, 박OO 원장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라) 당시 한불행사 사무국 예술경영지원센터 팀장 V(진술서 2018. 1. 22.)는 위 리스트 사진 이미지를 임의 제출하며 “한불 팀장 직위 해제 전(2015년 5~7월 사이)에 사무국 팀원들과 세종시에 회의를 갖었는데 그 때 OOO 주무관이 청와대에서 내려 보냈으며, 아래 리스트를 보여주었음. 두께는 2~3cm 정도 되었고, 저렇게 프린트 상태에서 본인들도 전달을 받았다고 함. 사람이 많았음에도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꼭 찍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급히 찍어두었던 문건임.”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당시 한불행사 담당 주무관 OOO(진술조서 2018. 1. 29.)는 위 문서에 대해 아느냐라는 질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2018. 1. 3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OOO는 “조OO 사무관이 리스트를 가지고 왔을 무렵 이OO 원장과 전화 한 적은 있습니다. ‘자그마치 1만명을 배제, 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청와대 지시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리스트가 워낙 허술 해서, 저는 문체부내에서 알아서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서, 최OO 예술감독이나 이OO 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이 막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두 분의 반응을 보고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OO 원장은 제가 ‘이 리스트 적용을 안 한다고 해도 누가 알겠냐’라고 하자 이OO 원장은 ‘이곳(프랑스 현지)에도 국정원 직원 있어’라고 했고 최OO 예술감독은 ‘하는 척만 해’라고 한바 있습니다. 이후 문체부가 알아서 복종하는 것은 아닌듯하다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5) 블랙리스트 관련 그간 경과 및 현황 분석 (2017. 초. 문체부 예술정책과)

**블랙리스트 관련 그간 경과 및 현황 분석**

※ 동 자료는 특감 이후, 전·현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구성한 내용 인 바, 현재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음.

## □ 개 요

- 청와대(교문수석실)는 예술, 콘텐츠, 출판분야 등의 지원사업 추진 시 좌편향 인사 등 특정 인사들을 배제토록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시해 음.
- 이에 문체부는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해당기관들에 전달하여 관련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해 온 바 있음.(2013년~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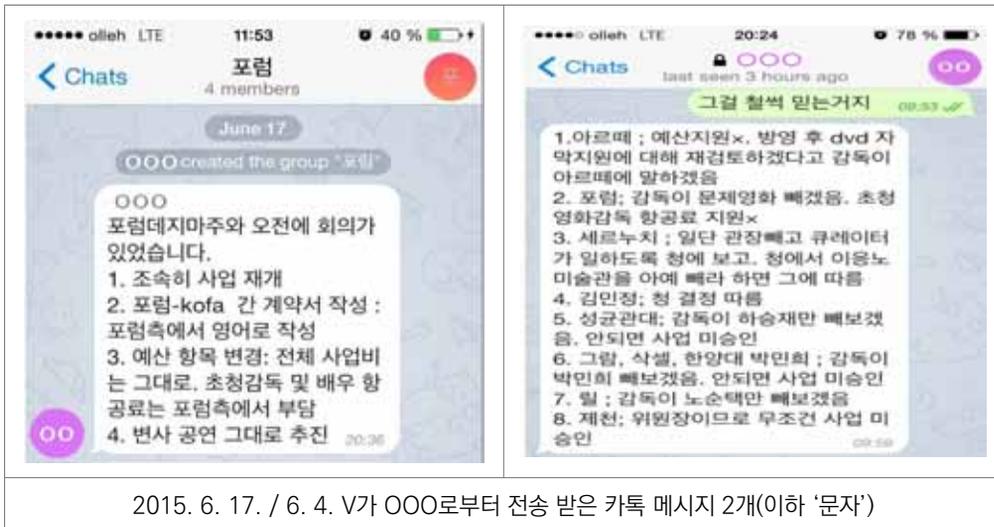
- 중 략 -

## □ 리스트 관리 체제

- ①청와대가 문체부 간부들을 통해 별도 전달한 경우(예: 정부리스트 등) ②청와대에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면, 배제해야 할 명단을 유선으로 불러주는 경우 등 → 오○○ 서기관이 세부사업별로 <일지 형식>으로 자세히 정리(2013.10월~2016.9월)  
※ 2013년말~2016년 배제지시에 따른 총 점검(확인) 인원: 600여명
- 한국일보에 보도(1012.)된 9,473명 블랙리스트
  - 2015년 5월경, 실제 청와대(교문수석실)에서 4개 카테고리(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지지선언 등)를 유선으로 불러주며,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정리해 보고할 것을 지시
  - 1쪽 표만 정리하여(첨부는 인터넷 자료 스캔) 청와대에 보고한 결과, 교문수석실에서는 동 인원 전체를 모든 사업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 그러나, 동 명단은 과도하게 많은 명단인데다, 세부인적사항도 없는 등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 → 실제 지원사업에서는 참고하는 수준에 불과(실제 적용 곤란)

1) 오○○은 특감 2회 진술조서(2016. 12. 27.)에서 청와대로 보낸 위 9,473명 명단은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에서는 적용해서 배제하라고 하였지만 동명 이인도 많고, 적용하기에는 명단이 너무 방대해 청와대에서 ‘적용했느냐’고 물으면, ‘확인했다’고 적당히 둘러댔고, 따로 확인을 안 하길래 실제 활용하지는 않았습니 다.”라고 한바 있는데, 문체부가 정리한 내용과 유사한 면이 있다.

(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추진 현황 보고'(2015. 6. 10(수)/해외문화홍보사업과)



2015. 6. 17. / 6. 4. V가 OOO로부터 전송 받은 카톡 메시지 2개(이하 '문자')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추진 현황 보고**

2015. 6. 10(수) / 해외문화홍보사업과

□ 조치계획

[제1차 공모 사업(결과 발표)]

사업명	조치계획	조치결과
3. "이용노, 이우환 외 프랑스의 한국화가들" 주관 : 프랑스 세르누치 박물관	관장 1인에 대한 출장비 지원 철회, 큐레이터 1인 출장비 및 작품 운송비 그대로 교부	○ 관장에 대한 출장비 지원 철회 ○ 동 사업관련 모든 보도자료 및 홍보 자료는 "이용노미술관"이 아닌 조직위의 이름으로 배포되어야 함
7. "아르떼 TV 다큐멘터리" 주관 : 프랑스 아르떼 TV	방영 이후 문제가 없을시 예산 교부	해당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15.9월 혹은 '16. 3월)의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서울과 부산의 초상(영화)" 주관 : 프랑스 포럼데이마주	영화 제외, 감독 및 게스트 초청 항공료를 기타항목으로 지원	해당 내용을 제외토록 프랑스 측과 협의해 볼 여지가 있음
5. "프랑스에서 본 한국 영화" 주관 : 성공관대 프랑스어권연구소	당초 결정에 따라 진행	사업 참가자
"GRAME 콘서트 한국 음악의 밤" 주관 : 한양대 전자음악연구소		
6. "현대음악극 공동 창작" 주관 : 프랑스 국립장작음악연구소		
4. "넥스트 축제 외 프랑스 투어" 주관 : 한국 무브먼트 팀		
"콘크리트 오페라" 주관 : 한국 컴필렐러리		주목도가 낮은 사업인데 반해 철회시 주관기관의 반발이 우려됨 예산 교부가 완료됨('15.5.6)

[제2차 공모 사업(진행 중)]

주관기관	조치계획	조치이유
♣. “시네마콘서트” 주관 : 제천국제영화음악제 “현대음악엑스포 참가” 주관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과 함께하는 불꽃축제” 주관 : 하이서울페스티벌	예산지원에서 제외	축제의 예술감독 혹은 집행위원장
♣. “서울 빨리빨리” 주관 : 프랑스 원 3000 조직위원회 “한국 전통음악회” 주관 : 코리아나매니지먼트	해당 예술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협의완료 이후 예산 지원	사업 참가자 사업 참가자

(가) V(진술서 2018. 1. 22.)는 위 문서 사진촬영 본을 임의 제출 하며 ‘2015. 6. 당시 한불 2차 공모 발표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프랑스측과 3차 공동회의를 앞두고, 서로 양국측 선정 사업 리스트를 공유하는 중에 급작스럽게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연락 음. (조OO 메일 별도 송부) 공모 선정리스트에서 프랑스측에 보내면 안되는 사업을 체크해서 다시 사무국에 내려 보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OO 주무관이 아래 서류를 문자로 보내 공유해줌.’ 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대부분 지원 예정돼 있던 예산을 안주는 형식으로 문제사업들을 걸러냈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사업(포럼데지마주-영화, 릴3000-전시, 아르떼다큐-강정마을 등)을 프랑스측에 얘기는 못하고, 사업진행을 막느라 한동안 커뮤니케이션이 블록이 돼 있었음. 아래 문자는 OO 주무관이 포럼데지마주(Forum des images, 파리극장) 관련 포럼측과 회의(최OO 감독, 이OO 영화 전문위원, 조OO 사무관, OO 주무관 참석) 후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문자임.’ 라고 기재하고 ‘아래 문자도 문제사업들 관련 후속 조치를 OO 주무관이 ‘문자’로 보내온 내용. ‘감독’은 ‘최OO 감독’. 6번의 박민희건은 사무실에서 감독이 프랑스측 감독과 통화해 빼달라고 하는 통화내용 직접 들음.’ 이라고 기재하며 관련 이미지를 첨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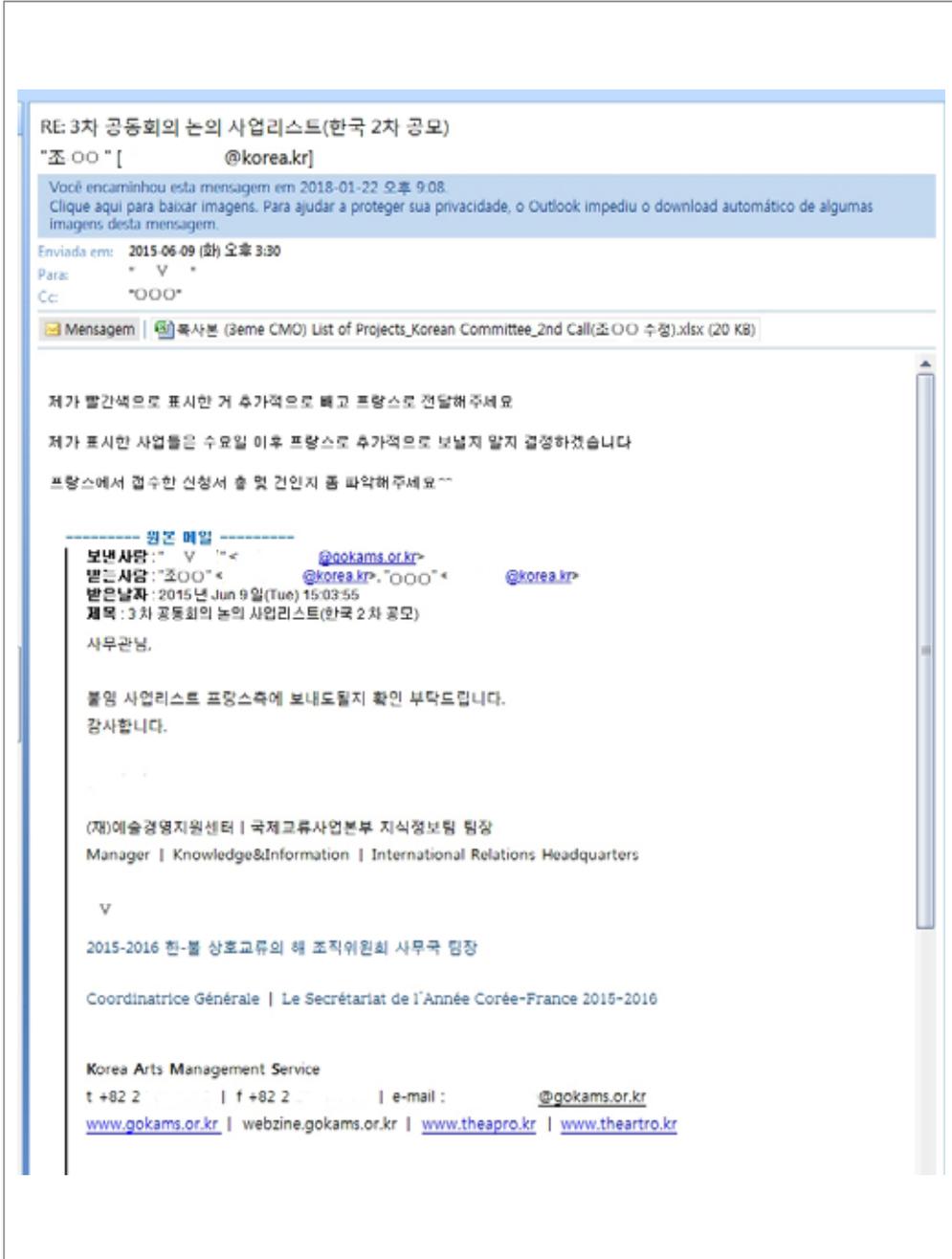
(나) OO(진술조서 2018. 1. 29.)는 위 문자를 보여 주자 “첫 번 문자는 2015년 6월 17일이고 멤버 4명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같이 출장 갔었던 사무국직원에게 내용을 공유하려고 보낸 듯합니다. 2번째 문자는 6월 10일경<sup>23)</sup> 일 듯 합니

다.”라고 하며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추진 현황 보고(이하 ‘현황보고’)’ 문서를 제출하였다. 두 번째 문자에 대해서는 “한불 행사 사무국이기 때문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그랬습니다.”라고 하며 ‘현황보고’ 문서에 대해 “예술정책과로부터 전달받은 리스트를 조OO 사무관과 같이 대조해서 만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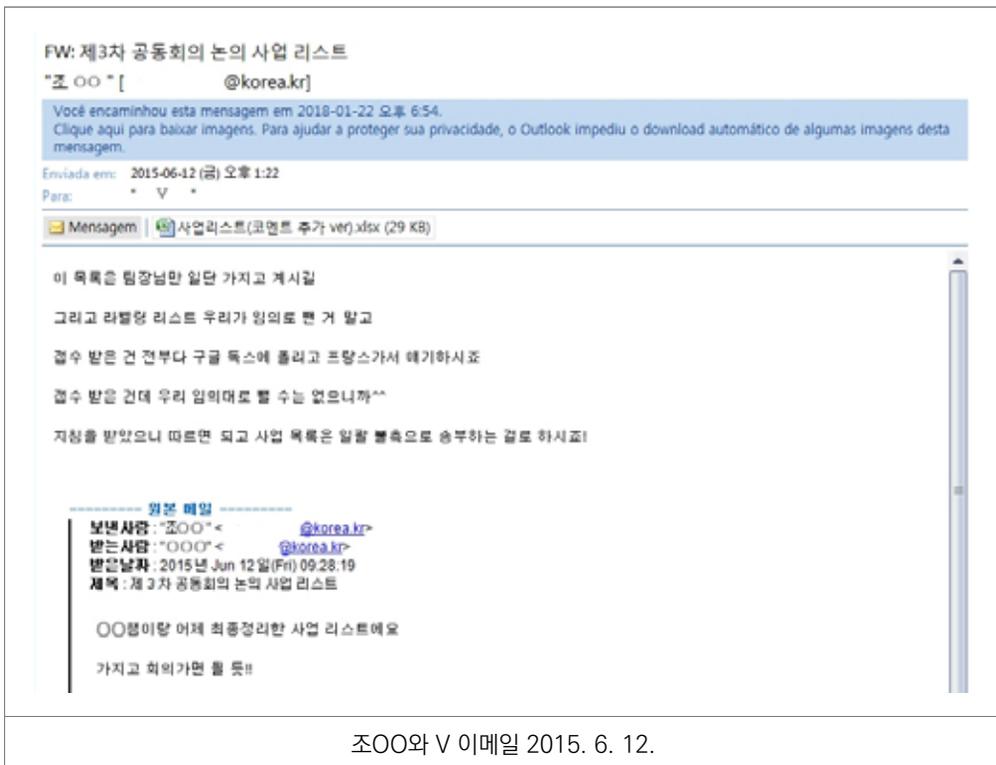
- (다) 한-불 상호 교류 행사 예술감독 최OO(진술조서 2018. 1. 25.)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인지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는 질문에 “상상은 늘 했었습니다. 2014년 경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라) 조OO(진술조서 2018. 2. 16.)는 박OO 원장의 지시로 자신이 ‘현황보고’ 문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며 “교문수석실 김소영 비서관이 박OO 원장을 질책한 것도 위 보고서를 작성했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고 9,473 문서를 통해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000 주무관과 함께 찾았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식인증 사업을 선정한 이후 여서 선정된 사람을 어떻게 빼느냐며 원장께 ‘못 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박OO 기획관은 이미 선정된 사업이라고 해도 리스트 대상자를 빼라고 지시 한 바도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마) 박OO(진술조서 2018. 4. 19.)은 “표 하나에 취합해 보라고 한바 있습니다. 제가 당시 6월 5일 청와대에 갔던 것 같은데, 위 문서는 아마도 이후 작성된 것 같고, 청와대에 문서는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조치 결과에 대해 “아르테 TV 부분은 제 의지이지만 이응노 관련은 청와대 지시였고 나머지 사업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바) 하OO은 “위 문서는 아마도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압니다. 당시, 청와대의 요구가 있어서 최OO 예술감독과 상의하여 문제를 최소화해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청와대 보고 때 박OO 원장과 함께 갔는지, 혼자 갔는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위 보고 때문에 당시 김소영 비서관을 만났 적이 있습니다. 김소영 비서관이 당시 뭐라고 지시 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진술조서 2018. 1. 29.).

(7)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로 보낸 블랙리스트실행 지시

(가) 이메일 '사업리스트 2015. 6. 9.' 와 '2015. 6. 12.'



조OO와 V 이메일 2015. 6. 9.



(나) 조OO(진술조서 2018. 2. 13.)는 위 이메일이 2차 공식인증 사업 관련 블랙리스트 실행인가에 대하여 “네 맞습니다. 메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용은 제가 받은 (9,473)리스트에서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 10. 자 문서에 있는 목록과 다른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6. 9. 일자 메일에 대하여 “일단, 위 리스트를 제외하고 보낸 다음 프랑스쪽에서 이미 접수한 사업이라면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수요일 이후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고 ‘라벨링 리스트 우리가 임의로 뺀 거’에 대하여 “6월 9일 자 첨부 엑셀 문서를 말합니다.” 라고 하고 메일에 ‘지침을 받았으니 따르면 되고’ 의 뜻에 대하여 “1차때 선정되어 철회할 수 없는 사업은 진행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제3차 공동회의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시키기 위한 자료 맞나요. 관련 첨부 문서에 사업별로 번호와 사업이 소개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시각분야 심사번호 9. 현대판화가 협회/한국현대판화트별전, 심사번호 21. 헬리오

아트/한국의 민화와 현대작가, 공연분야 심사번호 2. 하이서울페스티벌/한국음악 콘서트, 전통음악 심사번호 1. 박민희, 최소리, 강효선, 김한솔, 클래식음악 심사번호 8. 코리아매니지먼트/삭셀 심포니, 현대음악 심사번호 8.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MaMA 2015, 학술 심사번호 3. 팍콧/대안적 기술문화,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 중략 - 리스트에서 대조되어 문제가 된 듯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8)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실행 사업

#### (가) ‘이응노, 이우환외 프랑스의 한국화가들/이응노 미술관’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문화유산/전시> 부문 1차 공식인증사업

관장 1인에 대한 출장비 지원철회를 하고 동 사업 관련 모든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는 ‘이응노미술관’이 아닌 조직위의 이름으로 배포해야 함(6. 10. 현황보고).

세르누치; 일단 관장 빼고 큐레이터가 일하도록 청에 보고. 청에서 이응노 미술관을 아예 빼라 하면 그에 따름 (6. 4. 문자)

- 1) 고암문화재단 대표, 이응노미술관장 이지호는 ‘동백림에 사건 연루된 이응노 작가를 위한 재단운영’을 이유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2014. 5./청와대) 문서에서 등재 되어 있다. 한편,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 ‘리스트-’ 16.2. 1현재문서, 기존리스트-149명에 이지호가 포함되어 있고(연번 39) 청와대에서 전달된 것으로 공연전통예술과 김OO과 예술정책과 오OO이 관리 했던 것인데,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의 배제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
- 2) 최OO(진술조서 2018. 1. 25.)는 관장의 이름은 모른다고 하며 “위 사업은 프랑스 측에서 한국 파트너 없이(이름을 빼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추진하라고 했었습니다.”라고 하고 현황보고 조치계획에 대하여 “그렇게 진행된 것이 맞습니다. 이응노미술관에서 관장 출장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었고, 저희는 큐레이터 출장비를 지원 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결국, 1인은 지원하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라고 진술하였다. 최OO는 2018. 5. 16. 진술서를 제출하며 “파리 전시는 <서울, 파리, 서울>로 처음부터 기획, 이지호 관장 사전 출장 건은 별건으로, 사전 답사 지원에서 큐레이터 출장비 지원, 우회 지원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직접 지원.

- 본 전시는 수많은 프랑스를 거쳐간 한인 미술가 역사전시..”라고 기재하였다.
- 3) 000(진술조서 2018. 1. 29.)는 “위 문서대로 진행되었다고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하고 박00(2018. 4. 19.)은 “이응노 관련은 청와대 지시”라고 진술하였다.
- 4) 조00(진술조서 2. 13.)는 위 사안에 대하여 “박00 원장 지시가 있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데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원장이 저의 말을 듣지를 않아서 최00 감독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원장에게 말해 볼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5)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2016 한불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1차 공모 결과 (2015. 3. 16.’에는 세르누치 박물관 ‘이응노, 이우환 외 프랑스의 한국화가들’(사업기간: 2015. 10. 16.~2016. 2. 7.)로 기재 되어 있으나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2017. 4.)에는 ‘서울-파리-서울: 프랑스의 한국작가들’로 바뀌고, 수행단체로 (재)대전고암미술재단/세르누치박물관으로 변경되어있다.
- 6) ‘2015-2016 한불 상호 교류의 해 ’추진현황(2014. 2.)

세르누치박물관 (극동아시아 예술 전문 박물관) 도자기 전시	미정	2015, 하반기 세르누치박물관	1950년대 이후 프랑스 활동 미술가 10여명(이우환, 김창렬, 이응노 등) 전시 * 당초, 리움미술관 소장 분청도자기 전시를 희망하였으나, 리움측의 부정적 반응으로 전시 주제변경
---	----	----------------------	---

위 문서의 붙임 문서, ‘한-불 상호 교류의 해 세부행사(안)’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다. ‘미정’은 한국측 주관단체가 당시 없었다는 의미이다.

#### (나) 아르떼(ARTE) ‘한국, 다양한 기적의 나라’ 자막제작 지원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문학> 부문 1차 공식인증사업

‘아르떼 다큐 관련’ 방영이후 문제가 없을시 예산 교부’ (6. 10. 현황보고)  
아르떼; 예산지원 X. 방영 후 dvd 자막지원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감독이 아르떼에 말하겠음 (6. 4. 문자)

## 1) '아르테 다큐 관련 출장보고서 (2015. 3. 25.)

## □ ARTE 다큐멘터리 '한국, 다양한 기적의 나라' 제작감독 면담

## &lt;아르테 방송(ARTE)&gt;

-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 출자로 설립한 방송국으로 텔레비전과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인 아르테 라디오 운영
  - \* 공식명칭 : Association Relative la Television Européenne
- 역사 : 1990년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와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주도로 문화협력을 도모하고자 정부조약을 통해 설립 이후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폴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7개국 방송사와 협정
- 시청가능 국가 :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 제공언어 :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 일시: 2015. 3.25.(수) 16시-17시
- 참석자 : 000 주무관, 00 감독, 정 00 (한국문학번역원 국제사업팀장), 한불 사무국 3명
- 주요내용
  - 총 5편의 다큐멘터리로 한국의 작가 5명이 안내하는 한국의 도시와 다양한 문화 이야기
    - 서울 : 방대한 소설(안내자 황석영 : 궁과 전통정원, 고층빌딩과 재래시장, 노름마치 등)
    - 안동, 끈들과 양반의 공존(안내자 성석제 : 하회마을, 무석신앙)
    - 경제 기적(항구도시 부산, 울산 현대자동차 등)
    - 해탈을 향한 사찰 순례(안내자 신경숙 : 해인사, 성곡사, 통도사)
    - 고통과 아름다움의 섬 완도, 진도와 제주(안내자 임철우 : 섬문화, 제주 4.3학살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해녀문화)
  - 다큐멘터리 상영시기에 대하여 ARTE에 제안 예정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개막식, 2016년 파리국제도서전 중 선택 예정

- 2) 『2015 ‘2015-2016 한불상호교류의 해’ 1차 공식인증사업 지원사업』<sup>24)</sup>자료에는 공식인증 사업 분야 ‘문학 파트’에 한국문학번역원, <ARTE, ‘한국, 다양한 기적의 나라’ 다큐멘터리 제작> 자막제작비 지원으로 나타 나 있고, 1차 공식인증사업(209건) 예산 현황 표 ‘42번’ 항목에 2천6백만원으로 기재 되어있다.  
 ‘2015-2016 한불상호교류의 해’ 지원 2015년 사업비 내역 변경 승인 문서(해외문화홍보사업과-259호(2016.1.15.))관련 하여 1차 지원 공식인증사업비 변경 내역과 1차 지원사업 사업 내역을 기록하고 있으나 ‘한국문학번역원, <ARTE, ‘한국, 다양한 기적의 나라’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은 누락되어 있고, 1차, 2차, 3차 ‘정산 및 실적보고서’(2017. 11. 8.)에서 누락되어 기록에 없다.
- 3) ‘ARTE, ‘한국, 다양한 기적의 나라’ 다큐 자막 지원, 예산집행 철회에 관한 서류’ 자료 협조 요청(기획행정담당관-571/2018. 1. 26.)에 대하여 ‘예정’은 답변자료를 통하여 ‘한국문학번역원 공모신청작 ‘한국, 다양한 기적의 나라’는 공식인증사업 1차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예산 집행이 이뤄지기 전 해당 작품의 작가가 모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통보를 받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 철회 관련 서류 일체는 해당 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 4) 000(진술조서 2018. 1. 29.)는 “출장(2015. 3. 22~29.)후 보고할 때 박00 원장이었는데, 원장이 부르셔서 출장보고서를 보고 다큐에 관하여 물어 보신 후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박00 기획관, 박00 원장 두 분이 이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라 지시 한바 있습니다. 지시 이후 조00 사무관이 예술정책과로부터 블랙리스트 문서를 받아 왔었습니다.”이라고 진술하였다.  
 000는 ‘아르테 다큐 관련 출장보고서 (2015. 3. 25.)’, ‘아르테 다큐 5부작 추진현황(2015.7-8월)’, ‘프랑스 아르테 다큐 방영 결과(2015. 12. 28.)’를 제출하며“예산교부 하기 위해 보고를 했는데, 박00 원장지시로 결국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5) 000는 ‘아르테 다큐 5부작 추진현황(2015.7-8월)’에서 한국측에서 자막번역비(한국어 인터뷰 부분 불어자막) 2만 유로 지원 결정을 했으나 미교부 상태라고 기재하고 있고, 현재 자크 뎀스 감독이 다큐 5부(50분/부)를 편집 중이며 아르테 측은 2015. 9. 18. 개막식 주간 혹은 2016. 3 파리국제도서전 주간 중 선택 예상이라고 보고 하였

24)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7. 경.

다. 000는 ‘프랑스 아르테 다큐 방영 결과(2015.12.28.)’에서 아르테에서 2015. 11. 2(월). ~6(금). 19시에 방영하였고 현지보도 르피가로(2015. 11. 4.)가 ‘아르테 방영 다큐는 한국전쟁 직후 세계에서 3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기까지 그 기적의 역사를 조명’ 했다고 하고 ‘국내 상황: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하며 ‘다큐 방영 이후 문제가 없을 시 예산 교부’라고 보고하였다.

##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 ARTE 방송 한국 특집 다큐 5부작 추진현황

15. 9월 18일

### □ 배 경

- 프랑스 문화예술채널 아르테 TV 취재팀(감독 : 자크 뎁스)에서 ‘다양한 기적의 나라, 한국’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5부작 제작을 위하여 지난 2014년 2월, 5월~6월 중 한국을 방문, 촬영을 마치고 돌아감
  - \* 한국문학번역원 협조
- 아르테 측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 취지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 제1차 공식인증사업 공모 신청하여 선정됨
  - \* 한국측에서 자막번역비(한국어 인터뷰 부분 불어자막) 2만 유로 지원 결정,  
지원 예산은 아직 교부되지 않은 상태

### □ 불측 진행 현황

- 현재 자크 뎁스 감독이 다큐멘터리 5부(50분/부) 편집 중
- ARTE 측 상영시기는 아직 미정( ‘15. 9월 18일 개막식 주간 혹은 ‘16년 3월 파리국제도서전 주간 중 선택 예상)

### □ 다큐 내용

- 총 5편의 다큐멘터리로 작가가 안내하는 한국의 도시와 예술가들, 다양한 지역문화 이야기
  - 서울 : 방대한 소설(안내자 황석영과 은희경 : 궁과 전통정원, 고층빌딩과 재래시장, 노름마치 등)
  - 안동, 끈들과 양반의 공존(안내자 성석제 : 하회마을, 무석신앙)
  - 경제 기적(항구도시 부산, 울산 현대자동차 등)
  - 해탈을 향한 사찰 순례(안내자 신경숙 : 해인사, 성곡사, 통도사)
  - 고통과 아름다움의 섬 완도, 진도와 제주(안내자 임철우 : 섬문화, 제주 4.3사건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해녀문화)

### 프랑스 아르테 TV 한국 특집 다큐 방영 결과

2018.12.28(월) 제이문화홍보사업과

**□ 개요**

- 제목 : 한국, 다양한 기적의 나라 (La Corée du Sud, le pays aux multiples miracles)
- 방영 일시 : 2015년 11월 2일(월) - 5일(금) 15시
  - ※ 프랑스, 독일 동시 방영
- 방영 채널 : 아르테ARTE, 인터네셔널(분양 이후 알주일간 무료 다시보기)
- 연출 : 자크 데브 (Jacques Deb)
- 구성 : 5부작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각 43분)
  - ※ 컨셉 조서위 설정 : 대한민국 DVD 출시를 위한 한국이 차지해야 할 20억달러 지원

**□ 방영결과**

- 시청률 : 프랑스 2.25%(동시간대 평균 시청률 2.5%)  
독일 0.75%(동시간대 평균 시청률 1%)
- 해외 반응도(1건)
  - 르제카르 (Le Figaro '15.11. 4) : 기적의 나라를 찾아간 아르테 (Arte au pays des miracles)
  - 아르테 방영 뒤에는 한국전쟁 직후 세계에서 3번째로 기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기까지 그 기적의 역사를 조명
- 국내 상황 : 하이사람 없음

\* 기 보고된 조치계획 : 다큐 방영 이후 문제가 있을 시 예산 교부

**분류**    **다큐멘터리 주요 내용**

- 1화 : 서울, 한 편의 소설 (Seoul, c'est tout un roman)
  - 한국 예술계 다양한 인사들과 그들의 작품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수도 서울의 모습을 묘사
  - ※ 황석영 작가 등장 : 광복장에서 600년 역사의 수도 서울(한양)을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 소개 인터뷰
- 2화 : 제주도와 한도 (Les îles Jeju et Wando)
  - 제주도와 한도의 절경과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전통을 지키려는 해녀들이 등장
  - ※ 제주 4.3사건의 진상 규명 및 강경파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분봉을 펼치고 있는 강무를 주요소재의 인터뷰
- 3화 : 한국의 사찰 (Les temples bouddhistes)
  - 젊은 예술가들의 사상을 통하여 한국 사찰건축 살펴서, 가야 제인사 등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
- 4화 : 한국의 중세도시 (Une cité médiévale)
  - 유교 전통을 지키고 있는 전통 한옥마을, 600년 전 최후의승려의 기록을 다룬 유서 가문의 역사를 소개하고 서원을 방문
- 5화 : 한국 경제의 기적 (Le miracle économique)
  - 제2도시 부산에서 한국의 경제의 기적을 탐구, 인삼 건강식품 제조에 투입되는 첨단기술, 현대자동차와 현대조선의 힘

분류 : 다큐멘터리 주요 내용 : 같.

6) 박OO(진술조서 2018. 4. 19.)은 “당시 부임후 한불수교 행사 사업 보고를 받았습  
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  
인사를 갔는데, 김소영 비서관이 한불수교 사업에 대해 잘 좀 챙겨 달라고 했습니  
다. 다이빙벨 때도 ‘잘 챙겨달라고 한바’ 있었죠. 이후 예산 관리 체계를 보고 받아  
살펴보았는데, 제가 홍보쪽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르테TV 부분을 살펴 보았습니  
다. 담당자에게 물으니 아르테TV가 외주 프로덕션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이  
후 방영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자막’ 지원을 한다고해서 ‘자막 지원  
내용이 어느 정도 인지 알고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직원들이 그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파악이 된 것입니다. 이후 상황을 파악해보니 우  
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외 TV에 방영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지 모르지만 DVD 제작에 자막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다른 사업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출판산업과 김OO 과장에  
전화를 해서 한국번역문학원으로 하여금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바 있냐’라는  
물음에 “그러한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을 듯 합니  
다.” 라고 진술하였다.

- 7) V(진술서 2018. 1. 22.)는 ‘2015.3.25. 프랑스 출장 중 감독 업무협의 진행(참석자: 정OO 팀장, OOO 주무관, OOO). 제작 진행 상황 파악 및 상영 시기 논의하며 완성된 두 편(One cité médiévale, Les Temples bouddhistes) DVD 수령. (4.3) 정 OO 팀장, OOO 주무관 사무국 방문하여 업무협의 시 다큐내용에 ‘제주4.3 사건’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립’ 관련 내용이 들어가 문제 제기. (4.7) OOO 주무관이 사무국 담당자에 당 사업 관련 진행을 잠시 중단 요청. (4.8)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사업과 지시로 정OO 팀장이 경위서 작성하여 제출. (4.10) 김OO 사무국장 지시로 영화담당자 OOO 사원이 예경 내부에서 경위서 작성.’ 이라고 기재하였다.
- 8) 예경 직원 OOO(경위서 2015. 4. 10.)은 공식인증 선정 사유로 “문학 전문위원의 사업에 대한 신뢰, 파급효과에 대한 조연을 근거로 ARTE 유럽의 권위 있는 문화예술 채널의 자체제작 다큐멘터리로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번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문학을 유럽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5부작 중 세 개가 문학에 대한 것이라고 자크 뎀스와 회의록(2015. 3. 25.)을 별첨 자료로 첨부하였다.
- 9) 문학번역원 정OO(진술청취 2018. 1. 30.)은 “출판인쇄산업과(김OO)에서 전화 온 적은 있었지만 ‘철회서를 내라’라는 직접적인 요청은 없었으며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직접적인 철회요청은 없었다고 하고, 자막 지원이 선정이 되었지만 해외문화홍보원 원장 박OO의 지시로 지원이 결국 안 되었고, 지원이 없었기에 사업 결과보고서나 예·결산 보고 등도 없었다고 하고, 출판인쇄산업과에서 당시 잘못했다는 취지의 ‘경위서’ 제출을 요구 했지만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여 건조하게 사업 진행에 대해 써서 보냈다”라고 하였다. 한편 정OO(진술조서 2017. 11. 30.)은 김 OO의 전화에 대하여 “왜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인격모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OO 과장이 이 사안과 관련하여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메일로 OOO 주무관이나 김OO 과장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체부에서 번역원 직원에게 시달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최초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2014년 2월

-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에서는 주불 한국문화원을 통해, 프랑스 예술전문 TV채널 ARTE(이하 아르테)에서 한국문학/문화를 주제로 5부작 다큐멘터리 제작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최초로 접

함.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위해 프랑스의 다큐멘터리 감독 Jacques Debs(자크 뎡스)가 방한함.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황석영, 성석제, 이승우, 임철우, 은희경, 신경숙(이상 소설가), 문정희(시인), 최OO 교수(한불 상호교류의 해 예술감독)를 인터뷰

- 2014년 5월 19일 ~ 6월 25일
  - 아르테 다큐멘터리 감독 자크 뎡스가 촬영팀과 함께 내한하여, 울산, 부산, 안동 등지에서 촬영을 진행 (김영하, 임철우, 문정희, 황석영, 은희경 등 문인 외에도, 안숙선(판소리), 김중만, 안준(이상 사진작가), 김종홍(장승조각가) 등 다양한 한국의 예술가들에 대한 촬영을 병행함)
- 2014년 11월 18일
  - 아르테 측에서 동 다큐멘터리의 DVD 버전에 대한 자막번역 및 제작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함 (이메일)
- 2014년 11월 19일
  - 11월 18일 문의에 대한 답신으로, 번역원 측에서 자막번역 및 제작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문의함 (이메일)
- 2014년 12월 19일
  - OO 감독이 주불 한국문화원에서 있었던 회의결과를 전해음  
주불 한국문화원에서 이OO 문화원장, OOOO 고문, 아르테 관계자, OO 감독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OO 문화원장은 동 다큐멘터리 제작사업을 한불 상호교류의 해 인증사업으로 신청하라고 아르테 측에 조언함. 아르테에서는 이러한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번역원을 동 사업의 한국 측 파트너 기관으로 삼아 한불 상호교류의 해 인증사업으로 지원신청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함
- 2014년 12월 23일
  - 아르테 측으로부터 자막번역 및 제작에 필요한 비용명세서 수령 (약 21,000유로)
- 2014년 12월 29일
  - 아르테 측이 공식 인증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번역원으로 보내오면서, 한국측 한불 사무국 조직위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함
- 2015년 1월 12일
  - 지난 2014년 12월 29일 아르테 측이 보내온 공식 인증사업 신청서 내용 중 오류부분(기관장 성명 오기 등) 수정하여 한불 사무국 측에 제출
- 2015년 1월 27일
  - 한불 사무국 문학분과/ 학술분과 회의에 참석하여, 한불 상호교류의 해 최OO 예술감독 및 한불 사무국 실무담당자(예술경영지원센터)들에게 사업 설명
- 2015년 1월 말 - 2월 초
  - 한불 사무국 측에서 외부 전문가 심사를 진행하여, 문학분과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
- 2015년 2월 11일 - 2월 13일
  - 한불 상호교류의 해 프랑스 측 대표단(앵스티튀 프랑세)이 내한하여, 사흘 간 공동회의 진행

- 상기 외부 전문가 심사, 한불 공동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식 인증사업으로 등록

정OO 경위서(2015. 4. 8.) 요약

- 10) 당시 출판인쇄산업과장 김OO(진술조서 2017. 12. 21.)은 아르테 관련, 경위서 요구 이유에 대하여 “해외에서의 한국 국가이미지와 연관된 방송 소재와 주제를 이미 유사한 방향의 방송을 했던 전례가 많은 대표적인 방송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 본인 번역원 내부 보고 절차도 취하지 않고 해당 외국방송사 관계자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함은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경고 차원에서 이후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자각하게끔 하는 취지가 강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11) 당시 프랑스한국문화원 직원 OOO(진술조서 2018. 1. 10)은 “아르테 TV 배급당사자, OO 감독님, 이OO원장이랑 저와 함께 만났었습니다.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8~15분 분량을 삭제하지 않으면 자막지원을 하지 않고 양국행사에도 상영 못하고 공식행사에서 지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하며 “시나리오를 보고 이OO 원장도 도와주겠다고 이미 약속 했던 것이라 8~15분 분량이 삭제되어도 상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한국문화원의 분위기였습니다. 이OO 원장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12) 당시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이OO(진술서 2018. 2. 11.)는 “아르테의 경우 다큐멘터리 기획단계부터 많이 도와준 인연이 있었기에 한국조직위의 최OO 감독과 함께 다큐 감독을 만나 한국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때 지원이 힘들어진 이유로 들은 것은 다큐 가운데 강정해군기지 관계자 인터뷰가 있다는 것이었지 무슨 리스트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 13) 하OO(진술조서 2018. 2. 9.)은 자막 비용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OO 원장으로부터 교부 요청을 계속 받았는데, 당시 김종 차관이 막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14) 최OO(진술조서 2018. 1. 25.)는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박OO, 박OO이 관여된 것이라고 하며 “(OO에게) 직접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자막비는 OO이 레바논 출신이다 보니 레바논의 지원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2015년 10월 아르테 방송 후 정부 측에 지원 결정이 가능하게 해보자고 했는데, 정부는 결정을 다시 못했

고 2016년 3월 재방송때 다시, 지원을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 상영회를 조직해서 아트센터 프랫폼 엘에서 2회 상영을 했던 것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15) 익명으로 진술하기를 원하는 당시 프랑스한국문화원 직원은 서면 진술(2018. 1. 14.)에서 “프랑스와 독일 공영방송인 아르떼(ARTE) 채널에 방영되었던 자크 뎀스(Jacques Debbs) 감독의 다큐멘터리가 파리도서전의 아르떼 부스에서 상영이 되지 못하도록 문화부 본부에서 지시받았던 내용도 기억합니다. 이 지시를 파리도서전 주최측에 전달하는 데에도 곤혹을 치렀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이것을 이해할리가 없죠.”라고 기재하였다.
- 16) 현 프랑스한국문화원장 박OO(녹취록 2017. 12.)은 파리 도서전에서 아르떼 TV 다큐 상영과 관련하여 해외문화홍보원 박OO, OOO 등이 연락을 했으며 “그런게 있어서 골치 아프다. 박 원장님, 현장에 도서전 나가면 한번 상황이나 좀 체크해봐 달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느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디 있냐, 여기서. 아시다시피 개들이 모니터에 틀면 트는 거고 팔면 파는 거지. 여기서 무슨 조치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배경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거기 무슨 제주에 해군 뭐를 하는데 거기 시위 있다는 그걸 편집에 넣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라며 ‘막아 달라’의 취지의 부탁이었다고 하면서 ‘여기서 막을 방도는 없다. 그거 어떻게 하겠냐?’ 라고 답했다고 하며 “저도 그래서 현장 갔을 때 몇 번 부스 근처에 왔다 갔다 했어요, 뭐가 있나. 그랬더니 뭘 별 거 없던데요.” 라고 하였다.

(다) 포럼데이마주(Forum des Images)<sup>25)</sup> ‘서울 초상전’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영상예술> 부문 한-불 양국 조직위원회 공동 기획 사업

‘해당 내용을 제외하도록 프랑스 측과 협의해 볼 여지가 있음’ (6. 10. 현황보고)

포럼: 감독이 문제영화 빼겠음. 초청영화감독 항공료 지원X (6. 4. 문자)

25) 파리의 중심부에서 영화 및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5개 상영관이 있으며 매해, ‘도시의 초상들’이라는 주제로 영화제가 진행된다. [www.forumdesimages.fr](http://www.forumdesimages.fr)

1) 포럼데이마주 ‘유리엘 드레이퍼스’가 ‘모OO’에게 보낸 첨부 문서 (2015. 1. 29.)

A	B	C	D	E	F	G	H
Titre avec article/제목	Titre original/원제	Réalisateurs et interprètes/감독, 배우	Cédant/권리 소유자	date/년월	durée/시각	support/지원매체	Notes rapides/비고
1	Tears	눈물 de Im Sang-soo	Bom Film Productions (Seoul)	2000	105		KOFA 35mm v.o
2	White Night	백야 de Leessong Hee-il	Cinamadai	2012	75		Berlinale 2013, VOSTA
3	Barking Dogs Never Bite	짖는 개들의 귀가 de BONG Joon-ho	CJ Entertainment (Seoul)	2000	106		KOFA 35mm v.o
4	Castaway on the moon	달의 표류기 de Lee Hae-young	CJ Entertainment (Seoul)	2008	116		KOFA 35mm v.o
5	Night Flight	야간비행 de Leessong Hee-il	FINECUT (Corée du sud)	2013	134		
6	Sonum (Gooseflesh)	소름 de Yun Jong-chan	FINECUT (Corée du sud)	2001	109		KOFA 35mm v.o
7	The Attorney	변호인 de Yang Woo-seok	FINECUT (Corée du sud)	2013	127		Berlinale, VOSTA
8	The Journals of Musan	민초일기 de Park Jung-soon	FINECUT (Corée du sud)	2011	127		Deauville 2011
9	Mating carmes à Séoul	복합일기 de Hong Sang-soo	France - A2C&S	2011	79	35mm	
10	Le jour où le cocoon est tombé dans le puits	디지터 우물에 떨어진 날 de Hong Sang-soo	France - A2C	1996	115	35mm	
11	La vierge mise à nu par ses pré tendants	오리수막 de Hong Sang-soo	France - A2C	2000	126		
12	Hard day	하드데이 de Kim Seong-hun	France - BODEGA FILMS	2014	111		
13	Les corrompus	오복과 자식들 de Im Kwon-taek	France - Centre culturel coréen	1982	112		CCC copie 52 vostf
14	Les Gens d'un bidonville	그때 그 사람들 de Bae Chang-ho	France - Centre culturel coréen	1982	110		CCC copie 55 vostf
15	Libera me	아름다운 날 de Yang Yun-ho	France - Centre culturel coréen	2000	118		CCC copie 61 vostf
16	La petite balle lancée par un nain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de Lee Won-see	France - Centre culturel coréen	1981	100		CCC copie 20 vostf
17							
18	La Femme est l'avenir de l'homme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de Hong Sang-soo	France - DIAPHANA	2004	88	35mm	
19	The Mother ????	마더 de Bong Joon-ho	France - DIAPHANA	2009	128	35mm	
20	Le dernier repas	마지막 밥상 de Roh Gyeong-tae	France - ED DISTRIBUTION	2006	93	35mm	
21	The Chaser	추적자 de Na Hong-jin	France - HAUT ET COURT	2008	123	35mm	
22	Old Boy	올드 보이 de Park Chan-wook	France - LE PACTE	2003	120	35mm	
23	The Murderer	살인자 de Na Hong-jin	France - LE PACTE	2010	140	cinéma	
24	Sunhi	목회여선생님 de Hong Sang-soo	France - Les Films du Camélia	2013	88		
25	Nameless Gangster: Rules of the Time	명심사다 de Yoon Jong-bin	France - METROPOLITAN Filmexport	2012	133		
26	The Host	괴물 de Bong Joon-ho	France - OCEAN FILMS	2006	119		
27	The President's Last Bang	그때 그 사람들 de Im Sang-soo	France - Potamkina	2005	102		
28	Une femme coréenne	아름다운 그녀 de Im Sang-soo	France - Potamkina	2003	107		
29	La 6e victime	죽어있는 날 de Chang Yoon-Hyun	France - SND Groupe M6	1999	118		
30	The Foul King	판도라 de Kim Jee-woon	France - STUDIOCANAL	2000	112		
31	Breathless	숨쉬는 날 de YANG Il June	France - TADRART FILMS	2009			
32	Oasis	오아시스 de Lee Chang-dong	France - THEATRE DU TEMPLE	2002	132	35mm	
33	Green Flash	초록 플래시 de Lee Chang-dong	France - WARNER BROS.	1987	142		
34	The Last Day	마지막 날 de Yun Je-juin	France - WILD SIDE FILMS	2009	116		
35	Conte de cinéma	영화 이야기 de Hong Sang-soo	France - DIAPHANA	2005	90	35mm	
36	A Single Spark	이대다섯 번째 영화제 de Park Kwang-Su avec Hong Kwang-in, Moon Seong-Keun	KOFA	1996	96		KOFA 35mm v.o
37	A Girl Who Looks Like the Sun	태양 같은 소녀 de Lee Man-hee	KOFA	1974			35mm v.o + vhs
38	Beat	비트 de Kim Sung-soo	KOFA	1997	113		35mm v.o + DVD
39	Black Hair	검은 머리 de Lee Man-hee	KOFA	1964	115		CP 2010 vostf + DCP KOFA VOSTA
40	Carrefour de la jeunesse (Crossroads of Youth-Turning Point of the Youngsters)	Crossroads of youth de An Jong-hwa	KOFA	1934	73		Berlinale 2013, VOSTA
41	Barefooted young	발없는 아이들 de KIM Kee-Duk	KOFA	1964			KOFA 35mm v.o
42	Chilsu et Mansu	칠수와 만수 de Park Kwang-su	KOFA	1988	108		Festival de Vesoul 2011 - vostf
43							
44	City of the Rising Sun	태양을 쫓는 자 de Kim Sung-su	KOFA	1998	100		35mm v.o + DVD + VHS
45	Crocodile	악마 de Kim Ki-duk	KOFA	1996	102		35mm v.o + vhs
46	La déclaration des imbéciles	아름다운 날 de Lee Jang-ho	KOFA	1983	97		KOFA - 35mm v.o
47	Les enfants de l'obscurité	아름다운 날 de Lee Jang-ho	KOFA	1981	100	35mm	KOFA 35mm v.o
48	Les fleurs de l'enfer	지옥꽃 de Shin Sang-ok	KOFA	1958	100		KOFA 35mm v.o
49	I Will Be a King for the Day	오늘은 왕이 되겠다 de Kim Kee-duk	KOFA	1966	100	35mm	KOFA 35mm v.o
50	Les Jeux olympiques de Ssanggye-dong	쌍계동 올림픽 de Kim Dong-won	KOFA	1988	27		KOFA betanum v.o
51	Le jour où le vent est bien venu	바람 잘 오는 날 de Lee Jang-ho	KOFA	1980	113		KOFA DCP v.o

포럼데이마주 유리엘 드레이퍼스가 영상자료원 프로그래머 모OO에게 보낸 이메일 (2015. 1. 29.)에 첨부된 'Programme pour Mlle MO-Kofa, Portrait of Seoul at forum des images in Paris'라는 엑셀 문서의 작성 날짜는 2015. 1. 28. 이며 총 77편의 영화 목록이 있으며, 8번에 영화 '변호인', 17번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27번에 '그때 그 사람들', 36번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9번에 '상계동 올림픽' 이 기재되어 있다.

## 2) 모OO이 OOO(영상자료원 담당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관련(2015. 3. 17.)

첨부파일에 ‘Programme pour MIIe Mo - kofa.xls’; ‘Portrait Seoul Busan-KR.docx’; ‘Forum des images\_kofa(라벨신청서)\_수정\_0305.doc’ 3종의 문서가 있는데, 첫 번째, 엑셀 문서는 위 영화상영 목록과 같은 문서이며 ‘Seoul Busan-KR’ 문서는 ‘서울과 부산의 초상’ 초기 기획이 일부 담긴 내용이며 ‘라벨신청서(수정)’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가 신청자인 이송희일 감독은 프랑스에 당시, 방문하였으나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교부 신청서(한국영상자료원, 2015. 8. 19.)를 보면 ‘예정’에서 영화감독 항공비가 지출된 흔적은 없다.

## 계획안

## 계획안의 설명서

## 서울

## 한국의 도시, 한국의 얼굴 (가제)

2015년 9월 15일 - 11월1일

멕시코시티(1999), 부에노스아이레스(2002), 테헤란(2003), 리오, 브라질, 사오폴로 (2005), 뉴욕 (2008), 런던(2012) 등 영화를 소개하며 세계의 주요도시들의 초상을 그려온 파리의 영상매체 상영관 «포름 데 이마쥬(Forum des images)»가 다시 한 번 프랑스를 넘어 도시 탐방을 시작한다. **2015년-2016년 한불 수교 상호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과 파리의 지원을 받은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의 초상**을 그린다.

포름 데 이마쥬는 한국 영화를 통해 이 도시의 거대한 파노라마를 그려나갈 예정이다. 아직 프랑스에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작품 60여편을 상영함으로써, 한국이라는 세계의 화려함과 무한한 다채로움을 드러낼 것이며, **홍상수, 봉준호, 박찬욱** 주요 3인 감독으로 대표되는, 90년대에 이미 세계 유수의 영화 축제에서 폭발적인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한국영화의 생생한 활기와 대담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세대의 한국 영화인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 예정이다. 고전영화 거장이나 선구자들을 (신상옥, 임권택, 김기영, 유현목, 이만희 감독) 낳은 50-60년대부터 사회적 현실을 영화 속에 담았던 2세대 감독들 (박광수, 장선우 감독)들은 물론, 미래의 한국 영화계를 동시대 영화인들까지 연결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많은 영화인들, 배우들, 예술가들, 대안예술 창작자들, 축제 및 영화학교 담당자들, 영상매체 아카이브 종사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다.

**초대 감독 : 봉준호, 홍상수, 박찬욱**

감독 참석 하에 특별 영화상영, 회고전, 프랑스 감독들의 만남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

2015년1월말에 초청장을 보냈으며 현재 답장 기다리는 중

**(추가 예정) 감독 :** 임상수, 장선우, 이장호, 박광수, 이송희일, 양익준, 안성경

배우 : 안성기, 예지원, 문소리

**한국영상자료원(KOFA)과 협력을 통해 숨겨진 보물 같은 한국 고전영화와 명감독을 발견 :**

이만희 감독, 신상옥 감독, 유현목 감독 등

대표적인 아시아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소개된 작품들의 특별 상영.**

부산에서 소개된 작품 및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통한 부산에 관한 묘사 역시 진행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학생들의 단편작 선발**

한국의 대중문화, 한류에 주목 : K-Pop, 드라마, 만화, 비디오 게임 등

Frforum des images\_kofa(라벨신청서)\_수정\_0305.doc 일부 (모은영 첨부 문서)

3) 포럼데이마주 대표 'OOOOO'의 이메일 (2015. 8. 19.)

OOOOO(OOO)는 2015. 8. 19. 'Pb politique(정치적 문제)'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최OO와 Institutfrancais(프랑스측 한불 행사 사무국)의 아네스 베네이어의 담당자 2인 과 프랑스측 관련자 2인에게 보냈다. OOOOO는 당일 최OO에게 OOO에게 보고 할 수 있게 내게 말해 달라는 메일을 전송하고, OOO는 '오해라는 취지'의 메일을 OOO에 보내고 OOO는 다시 OOO에게 '합의 이행을 주문'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Forum des image는 전례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행사 개최가 약 한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예산 지원)도, 상영 프로그램의 기술적 스펙 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영권 동의, 상영본 필름 지원, 보내는 날짜 확인) 등이 모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략)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이해되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사 개최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략)

포럼데이마주 대표 'OOOOO'의 이메일 (2015. 8. 19.) 일부

4)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해 '포럼데지마주' 한국영화 특별전 계획'(내부결재 문서 2015. 9. 10.)

문서에서 행사의 명칭이 '매혹의 서울, SEOUL HYPNOTIQUE'로 확정되었다는 것과 함께, 2015. 9. 15.~11. 1. 기간에 포럼데지마주(프랑스 파리, 500석)에서 상영이 있고 상영작은 <오발탄> 등 76편 (세부내역'붙임'참조)이 소개 되어 있는데, 배제 지시가 있었던 영화 5편중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계속 목록에 남았고 4편은 상영 목록에서 사라졌다.

A	B	C	D	E	F	G	H	I	J
Transport Date	No.	French or international title	Titre original	Director	support	vers.	RIGHTS	SCREENING DATES	저작권 관련 memo
1차 August 26th 2015-08-26	1	A Single Spark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de PARK Kwang-Su	35mm	vo	OK	OCTOBER 8TH AND 25TH	대리출계(8/24 가동)
	2	Le Cocher JA	마부	de KANG Dae-jin	35mm	vo	OK	SEPTEMBER 23RD AND 25TH	저작권완료
	3	Les fleurs de Terfer	지옥화	de SHIN Sang-uk	35mm	vosta	OK	SEPTEMBER 16TH AND 18TH	저작권완료
	4	The Road to Race Track	결이갈 가는 길	de JANG Sun-woo	35mm	vosta	OK	SEPTEMBER 24TH AND 25TH	협의(8/24까지 서명발송)
	5	The Barefooted	편발의 철쭉	de KIM Kee-Duk	35mm	vo	OK	SEPTEMBER 15TH AND 23RD	대리출계(8/24 가동)
	6	Une balle perdue	오발탄	de YU Hyung-mok	35mm	vosta	OK	OCTOBER 4TH AND 9TH	저작권완료
	7	Une femme libre	자유부인	de HAN Hyung-mo	35mm	vosta	OK	SEPTEMBER 30TH AND OCTOBER 9TH	저작권완료
	8	Tears	눈물	de IM Sang-soo	35mm	vosta	P.I.C people in Tamasa (France)	SEPTEMBER 17TH AND 19TH	포럼에서 저작권동의서받을 것
	9	Friend	친구	de Kwak Kyung-taek	35mm	vosta	OK	OCTOBER 17TH	포럼서 발송(from Forum)
2차 early September	10	Declaration of Sict	아보르만	de LEE Jang-ho	35mm	vo	OK	OCTOBER 31 ST AND NOVEMBER 1st	
	11	Les enfants de l'obscure Holiday	어둠의 자식들 휴일	de Lee Jang-ho	35mm	vostf	OK	OCTOBER 30TH AND 31ST	
	12	Hyperbola of Youth	찰송정리전	de LEE Man-hes avec SHIN	35mm	vosta	Not yet	OCTOBER 11TH AND 24TH	
	13	Le jour où le vert est bien	파랑불어 좋은 날	de HAN Hyeon-mo	35mm	vosta	OK	OCTOBER 15TH AND 17TH	
	14	La marche des ombres	파랑불어 흥행	de LEE Jang-ho	35mm	vostf	OK	OCTOBER 25TH AND 30TH	
	15	Timeless	나쁜영화	de HA Kitchong	35mm	vo	OK	OCTOBER 21ST AND 22ND	
	16	Sorum (Goosefashi)	소름	de YOON Joo-chun	35mm	vostf	FINECUT OK	OCTOBER 23RD AND 25TH	

영상자료원 직원 000가 다른 직원으로부터 받은 첨부 자료. 2015. 8. 20.

5) 모OO(진술조서 2018. 2. 12.)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럼’과 부산(부산 국제영화제)의 공동기획이었지만 ‘다이빙벨’ 이슈로 부산이 빠지게 되면서 2014년 말 경 해흥에서 자료원에 해당 행사의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2015. 3.~4 경 담당 부서장과 함께 세종시 해흥을 방문하여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국장님과 사무관 그리고 000 주무관과 함께한 회의에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 특정영화 배제 지시와 함께 이송희일, 봉준호의 감독 초청배제 지시를 받았습니다. - 중략 - 당시 해흥에서 프랑스 측이 결정한 상영 리스트를 가지고 특정 영화 배제와

영화감독 초청배제 지시를 하였지만, 저는 자료원 입장에서 그 요구(프랑스 포럼측이 결정한 프로그램 리스트 변경)에 응하기 힘들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라고 하고 ‘초기 기획과 다르게 최종 게스트로 봉준호, 박찬욱, 임상수, 문소리, 이송희일 등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변경이 블랙리스트 실행과 연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봉준호 감독의 경우, 당시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정부 관련 비판적인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송희일 감독은 결국 초청이 되었는데, 이는 상영 영화에 대한 교부금은 한국측이 부담하고 초청감독 비용은 프랑스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와 담당 부장님이 함께 세종시 해흥회의 방문시, 해흥측에서 정부 비판적인 영화와 영화감독에게 정부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발언과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6) 한국영상자료원 담당 직원 000(진술조서 1. 31.)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당시 지원금 교부가 늦어지는 게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의 시작 시기는 5월 경인데, 사업신청은 8월에 되었던 것 같고요. 이 때문에 고용된 외부 연구원의 임금 지급 및 상영료 지급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7) 000은 “프랑스 포름데이마주 프로그래머 2인과 예술감독 1인이 직접 9월 초경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으로 찾아와 저와 이00 원장님과의 면담에서 상영 2주 전까지 한국측으로부터 지원금 지급과 상영 프린트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 프랑스 프로그래머가 한국에 가서 직접 선정한 상영 기획 프로그램 30편 중 한국측으로부터 정치 이슈가 있는 ‘변호인’ 및 서울을 배경으로 한 ‘남영동’ 등 약 10편 정도 상영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시 방문한 포름데이마주 관련자는 프로그래머 GOOO, 나머지 한 분의 프로그래머 이름은 GO이며 DOO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며 이00(한불 행사 전문위원)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임의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한 이00 원장의 이메일은 V와 000 등이 임의 제출하였다.

-중략-

갑자기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이00 전문위원과 대화하다가 이런 문제에 대한 조직위 차원의 대응을 세워줘야한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Forum des Images’의 경우 이 전문위원과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변X인’을 제외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위 차원에서는 아래에 대한 준비를 해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포럼 데 이마주를 비롯 La Coree en France에 참여하려는 프랑스의 영화제 조직위에서 위의 작품들을 상영하겠다고 할 경우?(영화제에 한국 사람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구분해서)

: 사태가 발생한 뒤 수습하려면 더 힘듭니다. 사전에 조직위의 입장을 정리해두면 파장도 적고 수습도 덜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메일을 보내는 제 맘을 헤랑하시길 바라며,

프랑스문화원장 이OO가 2015. 2. 23. 예술감독 최OO, OOO, 프랑스문화원직원, 해외문화홍보원 직원 등에 보낸 이메일 일부

다시 이OO입니다.

<변호인> 관하여 영화제 메일 주소로 일단 확인 요청했고, 위원장님은 이 영화를 추천하지 않으며, 배길 원한다고 제차 이야기했으며,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포럼 데지마주' 행사 말고도 앞으로 많은 한국 영화들이 프랑스 곳곳에서 상영될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실지의 문제예요. 이에 대해서 사무국 및 조직위원회, 해운원과 함께 입장을 정리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사무국과 해운원과 함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포럼 데지마주에서 답 오면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한달 전 이용관 위원장님이 추천하는 부산배경 영화 중 변호인이 들어 있어서 빼달라고 하고, 정준의 광고선을 대신 넣어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나 봐요.

다시 메일 보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영화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부산영화제는 이용관 위원장님 추천 리스트만 관리하고 있어서요.

그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OO

한불조직위 영화 부문 전문위원 이OO이 2015. 2. 18. 이OO 등 OOO에게 보낸 이메일

- 8) 최OO(진술조서 1. 125.)는 당시 문제 영화 목록에 대하여 “그때 그 사람들, 변호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상계동 올림픽 등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며 ‘초청 영화감독 항공료 지원 X’에 해당하는 한국 영화감독들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감독 뿐 아니라 이용관 집행위원장도 포함되었습니다. 항공료는 프랑스 부담으로 제가 요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라고 하며 프랑스 측에 “그때 그 사람들, 변호인 등이었는데, 부친에 대한 암살 트라우마가 박대통령이 있는 상황과 CJ는 영화산업 투자자인데 최근 한국에서 정치적인 작품을 내놓아 어려운 처지에 있고, 현재 프랑스에서도 변호인이 개봉중이니 스폰서 보호 차원에서 빼자 등이었습니다. 다른 몇 편은 필름 상태가 안 좋았다고 상영이 힘든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며 ‘2015년 9월경, 포럼데지마주 측의 프로그래머와 예술감독

이 프랑스 한국문화원을 방문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지원금 지급과 상영 프린트가 도착하지 않았으며 문제를 제기 했다는데, 이OO 원장으로부터 어떻게 전달 받았나'에 대하여 "그래서 제가 프랑스로 출국하여 프로그래머를 만나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최OO(2회 진술조서 2018. 5. 17.)는 "당시 주최측에서 100여편을 사전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고 들었고 박OO 국장이 12편 정도 빼는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저는 '변호인', '그때 그 사람들' 두 영화 정도 빼면 나머지 영화는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영화 관련하여 불측이 선택해 주라고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영화 다섯 편을 제가 빼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화 안 빼면 영화제 못하는 것이지' 라고 박OO 혹은 박OO이 말한 바도 있습니다. 박OO은 12편 영화를 빼라고 했던 것이고, 제가 이 사업을 '안해도 괜찮냐'라고 하니 '안해도 괜찮다'라고 답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이 망가지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9) OOO(진술조서 2018. 1. 29.)는 "그때 그 사람들, 변호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상계동 올림픽,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다섯 작품이 최종적으로 빠졌었습니다. 최OO 감독이 박OO 원장과 협상을 했었으리라 보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위 영화 리스트는 조OO 사무관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조 사무관은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에 문의해서 파악했던 것으로 압니다." 라고 하고 '초청 영화감독 항공료 지원 X'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서 직접 감독에게 지원하지 않고 대신 프랑스 측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된 것입니다. 대신 프랑스측이 부담해야 하는 다른 항목의 예산은 우리 쪽이 그에 상응하게 부담했을 것입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감독 분들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한국영상자료원은 작은 조직이라 인력난이 있었습니다. 영화 마다 저작권 받아내는 일이 더디게 진행되어 일의 진척이 늦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프랑스 측과 마찰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포럼데지마주 측이 상위 기관처럼 한국영상자료원에게 지시하는 듯 한 태도도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다섯편은 이미 프랑스측과 협의가 된 부분이었고 이후는 행정적 문제였고, 그것으로 예산집행을 막거나 한 바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0) 조OO(진술조서 2018. 2. 13.)는 문제 영화 출처에 대하여 "위 영화 리스트 출처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며 "당시에 최OO 감독은 예술가들의 영화선정에 대하여 정부가 그 영화를 빼라고 하는 것은 국가망신이라며 그대로

진행하게 하겠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상영된 줄 알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11) 이OO(진술서 2018. 2. 11.)는 위 메일을 보낸 이유와 포럼데지마주에서 상영하지 못한 영화는 무엇이나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들어서 안 내용 같은데 메일에 적힌 내용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시 제가 이 메일을 보낸 이유는 파리한국영화제 경우처럼 현지 기관이 영화프로그램을 확정했는데 한국에서 요청이 오면 풀기가 무지 힘들었다는 기억이 있어서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입장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라고 하고 2015년 9월경 포럼데지마주 측의 방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당시 저는 문화원장이 아니라 한-불 상호교류의 해 프랑스 사무국장(개막행사 준비)으로 2층 직원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포럼데지마주팀은 노OO 문화원장 직무대행이 사무실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 노 직무대행에게서 관련 내용을 전해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 12) 노OO(전 프랑스한국문화원장 직무대리/진술조서 2018. 2. 2.)은 “특정영화 및 초청 감독 배제 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며 “한불수교 130주년 행사 관련해서는 사업이 거의 홍보물 인쇄 직전의 준비 마감 단계였기 때문에 (이OO로부터) 시간적으로도 인수인계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13) 박OO(진술조서 2018. 4. 19.)은 위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초청 영화감독 항공료 지원 X’에 대하여 “예산항목을 바꾸도록 했을 텐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라) 릴 3000 ‘서울 빨리 빨리(Seoul vite, vite)’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현대미술> 1차 공식인증사업

해당 예술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협의 완료 이후 예산 지원 (6. 10. 현황보고)

릴; 감독이 노순택만 빼 보겠음(6. 4. 문자)

- 1) 아트선재센터, 사무소 와 프랑스 릴3000 조직위원회의 전시 행사 ‘서울 빨리 빨리’는 2015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1차 공식인증사업 지원 사업(2015. 예경)이라는 설명서 자료에는 조건부 공식인증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기재해 놓았다.

2) 노순택(진술청취 2018. 2. 27.)은 “당시 ‘최OO’ 감독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은 없고,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며, 다만 아트선재 김OO 큐레이터가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 조화를 위해 몇 가지 작품을 재선정 하겠다고 양해를 부탁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며 2018. 3. 7.에 프랑스측 Jean-Max Colard(2015. 6. 21.)의 관련 이메일과 애초 선정된 <비상국가> 시리즈와 교체 선정된 <블랙후크다운> 사진을 제출하였다.

노순택은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중의 한명으로 9,473인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다.



3)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제2차 공동회의(2015. 2. 11.-13. 서울) 공식회의록에는 ‘한국측은 프랑스 릴3000 행사 전반에 대한 공식인증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시각예술의 ‘서울, 빨리 빨리’, ‘최정화 개인전’과 음악 퍼레이드 등 행사전반에 대한 한국파트너의 공식인증사업 신청 서류 접수 후, 재정 전반에 대한 논의는 추가 진행한다. 프랑스 측은 2015년 6월 출발 예정 중인 전시작품의 운송을 위해 한국측으로부터 재정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측으로부터 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4)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제3차 공동회의 (2015. 6. 16.~19. 파리) 공식회의록에는 ‘프랑스 측은 2015년 9월 27일부터 2016년 1월 17일까지 릴에서 있을 르네상스 페스티벌 내 <서울 빨리빨리>전의 지원확정이 시급함을 한국 측에 표

명한다. 6월 22일 전 한국 측의 재정지원에 대한 확인 없이는 전시의 성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본 전시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으며, - 중략 - 한국 측의 요청으로 프랑스 측은 2015년 6월 20일 릴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한국 측은 전시내용과 장소 및 한국조직위 측 부담예산 내역을 릴 3000의 담당자들과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5) 최OO(진술조서 2018. 1. 25.)는 “하OO 과장이 ‘하면 안 된다’고 하여 박OO, OOO를 통해 지시 받는 과정입니다. 노순택 작가 사진 2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전시회 장소가 ‘릴’이어서 제가 ‘릴’의 책임 큐레이터와 (6월 경) 만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진 교체에 반대 했으나 노순택 작가 작품 중 사실적 작품보다 더 좋은 추상적 작품도 있다고 설득하여 바로 연락하여 노순택 작가에게 설명을 하고 작품을 바꾼 것입니다.” 라고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면담을 바로 잡고 김OO 큐레이터에게 사진 교체를 지시했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최OO(제2회 진술조서 2018. 5. 17.)는 “문자 중 ‘노순택 빼보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 의견은 아닙니다. 이미 전시 리플릿에 작가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작가를 빼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쪽에서 사진이라도 바꾸는 것은 어떤가 해서 사진 작품을 다르게 추천하여 진행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진술서(2018. 5. 16.)에 이 사안과 관련하여 “예산을 해홍쪽에서 영문을 알 수 없는 집행 불가를 반복하여, 작품 운송 기일이 촉박한 지경에 이름(일주일내 보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 따져 물으니, 노순택 작가가 문제니 빼지 않으면 이 사업은 불가라는 대답. 이미 리플릿이 나온 상황이니 불가하다고 대응하고, 회의 차 릴에 직접가서 시장에게 비직접적이거나 더 메시지가 강한 추상적인 작품으로 변경하자고 제안, 그 자리에서 김OO 큐레이터와 통화하며 작가도 시위장면 두편 보다는 더 작품성이 있는 시리즈를 원한다는 사실 확인, 2점이 아닌 20점으로 확대, 검열은 맞으나 확대 전시가 더 정확”이라고 기재하였다.

- 6) OOO(진술조서 2018. 1. 29.)는 “박OO, 하OO 과장은 이미 ‘릴’ 측 계획안에서 노순택 작가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OO 원장이 노순택 작가의 특정 사진을 빼라고 지시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7) 조OO(진술조서 2018. 2. 13.)는 사실인에 대하여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8) OOO(진술조서 1. 10.)은 “2015년 9월경, 한국포커스 행사 관련 ‘릴3천’ 야외 전시가 진행되었는데, 프랑스 외교부 산하 외교부 산하 Institut 시각예술 담당자

FOOOO가 노순택 작가 작품이 안 오고 있다고 이유가 무엇인지, 작품을 빨리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시 그 회의(제3차 공동회의)에 함께 있었던 프랑스 한국문화원, 외교부, 최OO 총감독, 해외문화홍보원 관계자들이 답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누구로 들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상황은 대략 알고 있어서 이후 제가 따로 프랑스 담당자에게 노순택 작가 관련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노순택 작가 작품이 빠지고 다른 작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이런 문제들이 9-10월경에 계속 되어서 제가 이OO 원장에게 ‘문제가 되는 아티스트가 한 2천명 정도 되는 것인가요?’라고 물었더니 이OO원장이 (걱정스럽고 답답한 표정으로) ‘한 2만명 정도 된다고’ 답변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9) 박OO(진술조서 2018. 4. 19.)은 위 사안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 사진을 보게 되었는지 경위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사진이 교체되었다는 것도 기억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원인이 된 듯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이유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마) ‘프랑스에서 본 한국영화’ 성균관대 프랑국어권 연구소/동아방송예술대학교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영화>분야 1차 공식인증사업

당초 결정에 따라 진행, 사업참가자 (6. 10. 현황보고)

성균관대; 감독이 하승재만 빼보겠음. 안되면 사업 미승인(6. 4. 문자)

- 1) 1차 공식 인증사업이었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프랑국어권연구소와 공동으로 양국 영화를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대회’가 2015. 10. 경 1차 <한국 영화에 대한 시선의 교차: 형식, 재현, 배급>라는 주제로 2016. 10. 12~13. 2차 <프랑스 영화에 대한 시선의 교차: 형식, 재현, 제작, 교육>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1차 행사에 동국대 영상대학원 차승재 교수가 발제자로 예정되어 있었다. 프랑스 쪽 담당 교수에게 영문 발제문까지 보낸 상태였다. 그런데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차 교수가 포함되면 행사를 지원할 수 없다는 압박이 들어왔고, 결국 차 교수는 자진 하차했다.’ 라는 고OO 기자의 컬럼이 있다.<sup>26)</sup>

- 2) 차승재는 9,473 블랙리스트 '2012년 12월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승재'는 차승재의 誤記(오기)이다.

224	영화	차승재	6.15선언실천 남측위 공동대표	B
문예계 주요 작성향 인물현황 249명, 국정원 보도자료 2017. 1.0. 30.				

2014년 3월 19일 국정원은 '문예계내 left 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제하 BH 보고서를 통해 대표자 경력·활동(정부비판·시국선언·野圈 인사지지 등) 등에 따라 소위 '문화예술계 주요 left 성향 문제 단체 15개, 인물 249명을 제시하였는데, 명단 224번에 차승재가 기재되어 있다.

- 3) 최OO(진술조서 2018. 1. 25.)는 위 사안에 대하여 “이것은 저와 관련된 것이 아닌 듯합니다.”라며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진술서 2018. 5. 16.)에는 “학술은 외교부 소관” 이라고 기재하였다.
- 4) OOO(진술조서 2018. 1. 29.)는 위 사안에 대하여 “이용노, 아르떼 이외는 조OO 사무관과 제가 리스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낸 것입니다. 아마 위 사업은 그냥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5) 조OO(진술조서 2018. 2. 13.)는 위 사안에 대하여 “지금 이름 자체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아마 리스트에 이름이 있어서 그랬던 듯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6) 박OO(진술조서 2018. 4. 19.)은 “사업이 예정된 대로 진행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7) 박OO(성균관대 프랑스어권연구소 겸임교수/진술청취 2018. 4. 27.)는 “당시, 프랑스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발제자로 차승재(동대 영상대학원)교수가 하기되어 있었는데, 문체부 쪽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니고 예술지원경영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직원들이 두 달 사이로 계속 바뀌었던 상황이어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여자분이 차 교수 관련하여 횡령 혐의 관련 부분이 보도되어서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했었던 것 같고, 당시 횡령 혐의 수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발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라고 하였다.

8) 언론 보도의 제목, ‘혐의’에 관한 부분의 변화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영화제작자 차승재 수사(연합뉴스 2015. 6. 4.), 법원, 영화 ‘타짜’ 제작자 차승재 구속영장 기각(조선일보 2016. 2. 25.), ‘국가보조금 횡령’ 영화제작자 차승재 ‘무죄’(세계일보 2017. 7. 25.), 종편이 비난한 ‘블랙리스트’ 영화제작자, 횡령 혐의 무죄(오마이뉴스 2018. 4. 15.)」 등으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다. 현재, 2심 재판까지 무죄로 판결이 났다. 차 교수는 14일 전화통화에서 “법원도 아니고 검찰에서 경찰의 영장을 기각할 정도면 당시 검찰이 보기에 수사에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나”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8개월의 시간이 흘러서야 기소가 됐는데, 2015년 12월 말에 총선을 앞두고 지검장이 바뀌니 수사가 재개됐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개의 무거운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무죄가 난 것은 그만큼 과도하게 수사를 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오마이뉴스 2018. 4. 15.).

#### (바) 무브먼트당당(김민정) 넥스트 축제외 프랑스 투어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공연예술>분야 1차 공식인증사업

넥스트 축제외 프랑스 투어 무브먼트 당당, 주목도가 낮은 사업인데 반해 철회시 주관기관의 반발이 우려됨  
(6. 10. 현황보고)

김민정: 청 결정 따름 (6. 4. 문자)

- 1)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제2차 공동회의(2015. 2. 11. -13. 서울) 공식 회의록’에 ‘한국측은 무브먼트당당(김민정)의 프랑스 투어에 대하여 한국 주관기관이 요청한 항공비와 운송비를 지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2) 김민정(무브먼트 당당 연출가/서면진술 2017. 11. 9.)은 “민간단체에서 2013년 서울아트마켓과 스파프가 연계하여 행사를 진행했고 스파프(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선정된 저희팀은 해외 관계자들에게 저희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해외관계자들은 임의대로 자신들이 공연을 선택해서 관람했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 릴 극장의 예술감독이 저희 공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략-) 2013년 저희 공연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온 프랑스 문화부 쪽 관계자들이 폴르즈 가론극장 예술감독을 비롯한 여러명의 프랑스 관계자들과 함께 당시 공연장으로 찾아와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릴과 폴르즈 두 도시의 극장에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

간단체로 프랑스 쪽에서 나서서 초청한 팀이 저희가 유일해서 이후 블랙리스트 관련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공연을 갈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안 나와서 항공 예약 등 여러가지 차질을 빚었고 나중에 가서 보니 이 사실을 프랑스 쪽에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보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저희단체를 빼라고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명의 이유가 위에서 말씀드린 프랑스 쪽에서의 초청이기 때문에 우리 쪽(한국사무국)에서 뺄 권한이 없다는 것과 작품내용이 전혀 그런 내용 -세월호 또는 정권비판-이 아니다 라는 이유를 들어 소명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다른 팀들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작업규모로 따지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는 21명이 투어를 했습니다. 민간단체로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라 프랑스 측에서도 매우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예산지원이 좀 더 됐더라면 더 많은 도시에서 저희 공연을 선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 3) ‘무브먼트 당당’ 블랙리스트 관련 문서

작품명	단체명	검토의견	비고
Installation Performance <빛>의 원리 중-연구	무브먼트 당당 /김민정	대사와 스토리가 없는 다크 퍼포먼스로, 무대 위 16개, 1인1실의 방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에서 책을 읽고, 머리를 팔리기도 하는 등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각 방의 인물들을 훑쳐보는 형태의 공연으로 인간의 보편적 부적응의 원인과 부적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 제안  -2014년 문화역 서울 RTO 초연, 2015 프랑스 2개 도시(릴, 툴루즈) 순회공연 초청작으로 선정	심사위원 권일추천

위 같은 문서 7쪽,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심사완료('15.4.30) 특이사항 3건 포함 항목의 일부

대외비 1-1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

'15.5.21(목)

**□ 주요 조치 실적**

- 예술인복지지원사업(14.6월 ~ 현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3,360건 신청 / 448건 선정 / 133건 배제
  - 예술인복지분야 : 228건 신청 / 34건 선정 / 사업과제 1건, 15건 배제
  - 공연예술분야 : 1,604건 신청 / 362건 선정 / 85건 배제
  - 미술분야 : 100건 신청 / 50건 선정 / 20건 배제
  - 기타: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등 167건 신청 / 77건 선정 / 75건 배제
- 문학, 연극 등 주요분야 단체 및 개인 자료 관리(15.4.10현재 9,473건)
  - 저널포 정부서행성 폐기 촉구선언(문화예술인 594인) \*15.5월초 추가
  - 세월호 시국선언(문학인 754인)
  -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6517인/문화예술인, 경남-전북-부산예술인, 서울연극협회)
  -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1,608인/문화예술인, 여성예술인)

**□ 주요 조치에 대한 평가**

- 문화예술분야 영향력 있는 언론·평리력·연방단체 배제
  - 서울프린저케스티벨(다원예술), 극단 해화동1번지, 극단그린피그(연극), 천년의 시작, 팔경(문학잡지) 등 편향적인 문학 및 연극단체 배제
- 연방단체의 관행적 공격과를 지원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예술인복지지원사업과 연방단체가 관행적으로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철저한 피착탈·문제·과단·조치
    - 서울연극협회 어브오에듀칼 대금 배제, 우수사업 중심 연방연수 내역 축소 문예지 지원(14년 55건 → 15년 14건), 문학잡지지원(14년 22건 → 15년 8건) 등

**○ 일부 사업 양해조치로 예술현장의 특정 편향 의심 불식 및 문제제기 명분 상실 효과**

- 문학(실천문학, 문학동네 등), 연극(하방세, 한국연극연출가협회 등) 분야 필수사업 7건 양해조치를 통해 특정단체에 대한 사전검열 및 불이익에 대한 의심 불식

4) 오OO(녹취서 2017. 4. 12.)<sup>27)</sup>은 위 보고서는 “‘아르코 창작기금’이나 ‘연극 창작 산실’ 그 사이임으로 작성 시점이 2015년 4월 경”이라 하고 위 문서 2쪽 일부 사업 양해 조치로 예술현장의 특정 편향 의심 불식 및 문제제기 명분 상실 효과에 대하여 “우리 내부적으로는 도저히 지원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 중략 -) 우수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일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양해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무브먼트당당/김민정은 위 문서 7쪽 2015년 문제사업현황(15.5.13 현재)에 ‘특 이사향 3건’ 중 하나로 기재하고 있다.

27) 증인 오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총 면수: 123면) 중 24면~26면 부분, 2017고합102, 2017. 4. 1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 3명 ( '15.5월)	연극: ①김민정(무브먼트 당당), ②박혜성(상상만발극장) 무용: ③조영준(Project 불 (move))	-한국 2인 당 혜성(김민정, 박혜성)
예술정책과 리스트-'16.2.1 현재		

김민정은 9,473 블랙리스트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 909명'에 포함되어 있다.

5) 000(진술조서 2018. 1. 29.)는 “박OO 원장이 청와대에 2015.6.10. 보고했었고 그 이후 무브먼트당당에 대해 문제제기가 계속 되지는 않았고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 최OO(진술조서 2018. 1. 25.)는 ‘주목도가 낮은 사업인데 반해 철회 시 주관의 반발이 우려됨’이라는 것에 대하여 “제가 이유를 달아서 밀고 간 것입니다. 청와대 설득용 메모 내용입니다.”라고 하며 “프랑스 측 초청행사임을 강조하는 메모를 실무진들에게 청와대에 보내라고 했고, 설득된 것으로 압니다. 규약에서도 공동위 결정된 사항은 항공료는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라고 하고 카테일 예산 요청을 프랑스 한국문화원이 거절한 부분이 블랙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인지에 대하여 “아마 그렇겠죠. 그러리라 짐작됩니다.”라고 하며 이OO 원장은 무브먼트당당 공연에 대하여 ‘정치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직원들에게 했다고 하는데 아는바 있나는 질문에 이OO에게 “개막행사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최OO는 진술서(2018. 5. 16.)에서 “확정 사업에 대한 취소지시를 사무국에 함. 이를 알고, 양국의 언론(불측의 2개 도시, 축제, 공연장)과 김민정 연출의 폭로, 고발을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협박성에 거부에 넘어가기로 함. 양해 된 것이 아니라 배제 불가”라고 기재하였다.

7) 박OO(진술조서 2018. 4. 19.)은 “김소영 비서관에게 별일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이후 청와대가 양해를 해서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8) 000(진술조서 2018. 1. 10)은 “(무브먼트 당당)넥스트페스티벌 개막식행사 관련하여 카테일 예산 요청 지원이 있었고 프랑스 한국문화원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원에서 한불 교류행사관련 직원이 저를 포함하여 두명이 있었고 다른 문화원 직원들은 대부분 본래 업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때 ‘무브먼트 당당’ 관련해서 특별한 말은 안 나왔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말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다만, 이OO 원장님이 ‘정치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걱정 섞인 말을 사석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당시 저는 개막식 준비가 바빠서 원장님에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9) 이OO(진술서 2018. 2. 11.)는 공연과 관련하여 넥스트페스티벌 개막식 행사 카테 일 예산 요청을 프랑스 한국문원이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위 행사는 제가 원장 임기 기간 중 조직위 회의 참가할 때는 논의된 적이 없었고 제가 요청받은 게 아니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사) GRAME 콘서트 한국 음악의 밤 한양대 전자음악연구소

프랑스 내 한국의 해 <다윈> 1차 공식인증사업

당초 결정에 따라 진행, 사업참가자 (현황보고)

그람, 삭셀, 한양대 박민희;감독이 박민희 빼보겠음. 안되면 사업 미승인

- 1) 박민희(가객)는 ‘GRAME 콘서트 한국 음악의 밤’과 ‘리옹 GRAME - PASSERELLES’ 에도 참여하였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1차 공모 예산심사 결정내역서(2015. 3. 3.)에는 위 행사에 항공비 4백7십만원이 지원을 결정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결산보고서(별책1)에도 위 사업 예산은 집행되었으며 2015. 11. 19. 리옹, 국립고등음악무용원에서 박민희는 공연을 진행하였다. 박민희는 9,473 블랙리스트 ‘2012년 12월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에 포함되어 있다.

**그람: 코리아 포커스 <통로>****GRAMÉ : FOCUS CORÉE <PASSERELLES>**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조주선 <하안모래길>¹

1982년 프랑스 리옹(Lyon)에 설립된 그람(GRAMÉ)은 국립음악창작센터(Gramé centre national de création musicale)의 약자다. 이곳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창작음악 연구소로, 새로운 음악 작품들을 생산하고 콘서트를 통해 보급하는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01년부터 페스티벌을 선보이고 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한 2015년에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공연을 마련했고, 한국에서 소리꾼 조주선과 기객 박민희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과 함께 하는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2015 그람 한국의 날>이라는 공연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에 현대음악 작곡가와 작품을 교류하는 장도 펼쳐졌다(190페이지 수록).

한불교류의해 사업백서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2. 189p.

- 2) 최OO(진술조서 2018. 1. 25.)는 “박민희도 리스트에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연락을 해서 단체 대표에서 박민희가 빠지고 다른 대표를 올려라 해서 박박 컴퍼니28)로 바꾸어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최OO는 2회차 진술조서(2018. 5. 17.)에서에서 “박민희 건 관련하여 두건은 우회 지원이 아니라 직접지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3) OOO(진술조서 2018. 1. 29.)는 “감독이 박민희씨와 친분이 있어서 예명을 쓰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한 바도 있었는데,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4) 박OO(진술조서 2018. 4. 19.)은 “사업이 예정된 대로 진행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5) 조OO(진술조서 2018. 2. 13.)는 “이 부분도 이름 자체는 기억이 안나구요. 아마 리스트에 이름이 있어서 그랬던 듯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8) 제3차 공식인증사업 박민희는 박박컴퍼니로 ‘가곡실격’이라는 작품으로 ‘랑콩트르코레그라픽인 테나시오날드센생드니축제’(2016.6.4.-6.6.)에 참여하였다.

## (아) 현대음악극 공동 창작 프랑스 국립창작음악연구소

당초 결정에 따라 진행, 사업참가자 (6. 10. 현황보고)

## 1) 한불교류의해 사업백서 'OOO' 관련 행사

2015년 11월 19일에는 리옹의 공플뤼앙스 박물관(Musée des Confluences)에서 가극 박민희의 <가극 & 크리에이션(Creations)> 공연이 열렸다. 박민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극 이수자이며, 본령인 국악을 넘어 현대무용-재즈-클래식 등과 협업하며 활동하는 전통 소리꾼이다. 2010년 오스트리아 슈바츠(Schwarz)에서 개최된 현대음악제에 참가하던 중 워크숍에서 작곡가 박선영을 만났다. 프랑스에 거주하던 박선영은 한국 전통음악을 비롯하여 박민희의 주전공인 가극과 그 창작에 많은 흥미를 보였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수시로 정보를 교환했고, 2015년 박민희가 베를린에서 아시안아트 앙상블과 함께 하는 공연을 위해 박선영에게 가극과 함께할 수 있는 곡을 위촉했다. 박민희는 이 공연에서 박선영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초연으로 선보였다.

같은 해 박민희는 프랑스 시테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3개월 동안 파리에 체류했다. 당시 박선영 작곡가와 현지에서 자주 만났고, 아시안아트 앙상블과의 공연 경험을 발판 삼아 다음 작업을 함께 구상했다. 당시 박선영도 프랑스 국립음악창작센터의 상주예술가로 활동 중이었다.

2015년 11월 19일, 공플뤼앙스 박물관에서 선보인 <가극 & 크리에이션> 공연은 이러한 과정의 결실이다. 박민희는 박선영이 작곡한 <동짓달>을 초연했고, 이 외에 전통 가극 7곡을 불렀다. 전통가극을 연주할 때는 음악의 원형을 보여주기 위해 대금, 거문고 연주자와 함께 했다. 이 공연을 함께 준비했던 프랑스의 제인스 감독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박민희가 지원 신청했고, 한국 측으로부터 항공료를, 프랑스 측으로부터 출연료, 체류비, 숙박비를 지원 받았다. 박민희는 "박선영 작곡가와 함께한 작업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 갈지" 고민이라며, "이번 공연의 발표곡들을 엮어 음악극을 만들어보자는 의견도 오고갔다"고 밝혔다.

한불교류의해 사업백서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2. 189p.

2) 당시 GRAME 콘서트 한국 음악의 밤에서 한양대 전자음악연구소측에서 공연을 진행하였는데, 이중 프랑스 국립창작음악연구소 위촉 작품이 공연되기도 했는데, 박선영(작곡가)는 프랑스 국립음악창작센터와 연관이 있었다. 박선영은 또한 박민희와 교류하고 있었다.

박선영은 9,473 블랙리스트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 (자) 콘크리트 오페라 한국 김킴갤러리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lt;현대미술&gt; 1차 공식인증사업

당초 결정에 따라 진행, 예산 교부가 완료됨('15. 5. 6.) (6. 10. 현황보고)

- 1) 전시는 '정글 슈즈'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프랑스 낭트 등지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참여 작가중에 김나영, 주재환 등이 있다. 2015. 5. 12. 42,365,000원의 예산 교부를 받았고, 정산보고서에서 사업집행 내역이 나타난다. 2015. 10.23~12. 6에 진행.

세 번째 장소인 라 스위스(La Suisse)는 프랑스 현지의 협력 기관인 트리포드가 운영하는 전시실이다. 장소의 이름에서 등장하는 '스위스'라는 명제는 순박한 시골스러움을 표명하면서 동시에 정결함 혹은 정확함 등 스위스가 드러내는 특징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유머러스하게 드러내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김킴갤러리와 트리포드는 장소가 지닌 이런 아이러니한 개념을 포착해 문화적인 오역, 키치(Kitsch), 시대착오, 유머 따위를 주제로 삼아 주재환, 강서경,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잉그리드 루체, 대니스티브(Danny Steve), 아제딘 살렉(Azzedine Saleck) 등의 작품을 전시했다.

한불교류의해 사업백서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2. 247p.

- 2) 김킴갤러리의 창립자는 김나영(작가)으로 9,473명 블랙리스트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참여 작가 주재환은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 2012년 12월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 909명' 등에 포함되어 있다.

## (차) 시네마 콘서트 제천국제영화음악제

## 한국 내 프랑스의 해 &lt;영화&gt;분야 2차 공식인증사업

예산지원에서 제외, 축제의 예술감독 혹은 집행위원장 (6. 10. 현황보고)

제천; 위원장이므로 무조건 사업 미승인 (6. 4. 문자)

1)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제2차 공모 심사결과 보고 및 결과 발표 계획안(예경 제출자료)에는 ‘한국내 프랑스의 해’ 항목, ‘시네마 콘서트 제천국제영화음악제’ 자체 예산 행사로 기재되어 있다.

2015. 6. 5. 2차 공모 사업 채점표에서 위 사업은 심사위원(최OO(73점), 변O(72점), 김OO(75점)) 모두 낮은 점수를 부여 했다. 최OO는 7개 공모 대상중 6위, 변O은 7개 공모 대상중 5위, 김OO은 7개 공모 대상중 6위로 채점하였다. 위 문서 심사 기준에 따르면 C(70~79) 이상(공식인증사업 고려), B(80~89)은 예산지원 고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C 점수를 받은 시네마 콘서트 제천국제영화음악제는 예산지원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한불교류의해 사업백서(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2.)에서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제천국제영화음악제 집행위원장은 허진호(감독)이며 9,473인 블랙리스트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2) 최OO(진술조서 2018. 1. 25.)는 배제 리스트에 관하여 “어디서부터 내려 왔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해문홍 공무원에게 연락받았습니다. 당시, 심사때 저도 참여 했고, 해문홍 사무관도 참여 했던 기억이 있으며 그 지원 사업은 탈락했던 것으로 압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최OO는 ‘5월 16일자 진술서’를 제출 하며 관련 부분에 “불측 파트너 없는 서류 미비, 배제가 아니라 공식사업 인증, 오히려 배려가 됨” 이라고 기재하였다.

3) 박OO(진술조서 2018. 4. 19.)은 “2차 사업 부분은 대부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OOO(진술조서 2018. 1. 29.)는 “결국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려 했는데, 그 쪽에서 사업 취소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카) 현대 음악 엑스포 참가 한국음악 레이블사업협회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lt;음악&gt; 분야 2차 공식인증사업

예산지원에서 제외, 축제의 예술감독 혹은 집행위원장 (6. 10. 현황보고)

45	8	현대음악 (사)한국음악레이블사업협회	MaMA(Marché des Musiques Actuelles) 2015 참가	2015.10.14-2015.10.16	46 rue Bouret, Paris	0	리벨링 이 예산 제외해야 함
해외문화홍보원 조OO 사무관이 예술경영지원센터 V에게 보낸 엑셀문서(2015. 6. 11. 작성)							

1) 심사 채점표에서 송OO(80점), 이OO(80점), 최OO(78점) 으로 심사 규정상 C에 해당되어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다.

한불교류의해 사업백서(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2.)에서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한국음악 레이블사업협회 회장 김병찬은 9,473인 블랙리스트 '2012년 12월 문제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에 포함되어 있다.

2) 최OO(진술조서 2018. 1. 25.)는 “누가 블랙리스트인지는 모르겠구요. 1차는 이미 확정되어 진행되었던 부분이 문제되어, 가능하다면 사업을 진행시켰던 것이고 2차 공모는 확정전에 스크린 했던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당시, 당시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은 안납니다.” 라고 진술 하였다.

최OO는 '5월 16일자 진술서'를 제출 하며 관련 부분에 “불측의 예산 지원 사업이 아니라 공동으로 예산지원 대상 아닌 것으로 정리, 지원배제 아님”이라고 기재 하였다.

3) 박OO, 하OO, 조OO, OOO 모두 이와 관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 (타) 한국음악과 함께하는 불꽃축제 하이서울 페스티벌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lt;공연, 연극 및 전통음악&gt; 부문 2차 공식인증사업

예산지원에서 제외, 축제의 예술감독 혹은 집행위원장 (6. 10. 현황보고)

2	공연	하이서울페스티벌	Le Concert de Feu with Korean Music	2016년 10월 2일-3일	서울	0	구글독스 삭제 상사령 : 서류를 내기위해 급하게 만든 느낌 얼마만큼 깊이 있는 교류를 하는지 의문. 그 러나 원일감독참여	라벨링 or 예 산 제외해야 함
---	----	----------	-------------------------------------	-----------------	----	---	--	-------------------------

해외문화홍보원 조OO 사무관이 예술경영지원센터 V에게 보낸 엑셀문서(2015. 6. 11. 작성)

1) 제2차 공모 사전심사회의록(2015. 4. 24. 27. 29.)에는 ‘함께하는 불꽃축제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대하여 ‘예산지원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하이서울페스티벌 <Le Concert de Feu with Korean Music>	2015. 항공비 2016. 항공.운송.숙박.일사비	2015.항공비 2016. 항공.운송.숙박.일사비.
---	---	---------------------------------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 사업 2차공모 예산심사결정내역서 4. 24.

예비심사채점 합산표<sup>29)</sup>(최OO: 82점, 최OO: 82점, 김OO: 91점)에 따르면 평균 85점으로 ‘공연, 연극 및 전통음악’ 부문 2위 점수였다.

제3차 공동회의 공식회의록(2015. 6. 16. ~19. 파리)에 위 사업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결산보고서에도 관련 기록이 없다.

2015년 하이서울 페스티벌 예술감독은 김종석이었다. 김종석은 9,473인 블랙리스트에 김종석(전통예술), 김종석(전통예술), 김종석(배우) 등 동명이인이 나타난다.

2) 최OO(진술조서 2018. 1. 25.)는 “동명이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화감독 김종석을 연출가 김종석으로 잘 못 기재 되었었다는 것을 추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머지 두 사업의 경우 프랑스 쪽 파트너가 없어서 결정되기는 힘들었습니다. 항공료 지원은 각 조직위에서 상호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 상 사업이 어렵기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최OO는 ‘5월 16일자 진술서’를 제출 하며 관련 부분에 “불프로그래밍 묶어서 서울거리예술축제 폐막작으로 ‘불꽃화랑’단체와 공동제작, 지원배제가 아니라, 레지던스(한국팀)를 묶어서 공동제작화(백서)”라고 기재하였다.

3) 조OO(진술조서 2018. 2. 13.)는 “박원순 시장 때문일 듯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29)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제2차 공모 심사결과 보고 및 결과발표 계획안

4) OOO(진술조서 2018. 1. 29.)는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KBS프로그램과 연결해서 방영도 돼고 홍보까지 했던 것인데, 문서에 왜 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파) 코리아 매니지먼트 세계 여성의날 한국전통음악회, 삭셀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회

1)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전통음악> 부문 2차 공식인증사업

해당 예술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협의완료 이후 예산 지원 (현황보고)

14	1	전통음악	코리아매니지먼트	삭셀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 전통음악회	2016-03-08	Sarcelles, Andre Malraux홀	O	박만희, 최소리, 강효진, 김한솔 1. 단발성 사업인 것이 아쉬움, 여성의날과 한-불 상호교류와 연계성 미흡.	리벨링 or 예산 제외해야 함
해외문화홍보원 조OO 사무관이 예술경영지원센터 V에게 보낸 엑셀문서(2015. 6. 11. 작성)									

2)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음악> 부문 2차 공식인증사업

33	8	클래식음악	코리아매니지먼트	삭셀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랑스 한국 기념음악회	2016.5.28(프랑스) 2016년 7월(한국)	Sarcelles, Andre Malraux홀 서울 금호아트홀, 통영아트홀	O	(구독독스 제외사업)	리벨링 or 예산 제외해야 함
해외문화홍보원 조OO 사무관이 예술경영지원센터 V에게 보낸 엑셀문서(2015. 6. 11. 작성)									

3) 제2차 공모 사전심사회의록(2015. 4. 24. 27. 29.)에는 ‘코리아 매니지먼트 삭셀 여성의 날 한국전통음악회’에 대하여 ‘예산지원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산보고서에 2016. 2. 18. 5,720,000원이 지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4) ‘삭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한국전통악기의 만남’은 7,670,000을 교부 받았다.

**2016년 3월 8일(화) / 19시 30분**

« 전통 음악 콘서트 »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삭셀(Sarcelles)시에서 네 명의 여성 한국 전통음악 연주자를 초청하였다.

남성 연주자들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던 한국전통음악계는 20세기에 들어 점점 실력 있는 여성연주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연주자들에게 사사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스스로 최고의 반열에 들어간 여

성 전통음악 연주자들의 활발한 활동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보유한 입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새로운 음악 세계에 대한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젊은 연주자들이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프랑스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의 세계를 선보일 것이다.

- 참여 연주자 : 장명서(소리), 엄세형(거문고), 심성현(대금), 최소리(북)

삭셀 시립문화원에서 입장권 무료 배포

삭셀앙드레말로홀

2 av. Paul Langevin

95200 Sarcelles

Tél. : 01 34 38 20 51

**2016년 5월 28일(토) / 20시30분**

« 삭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한국전통악기의 만남 »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삭셀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한국 전통음악 연주자들과 함께 현대음악 콘서트를 개최한다. 김세정과 도미니크 프로스트(Dominique Probst)가 작곡한 두 작품이 처음 소개되는 본 무대는 동양 전통음악 악기와 서양 클래식 악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음과 리듬의 향연이 될 예정이다. 동시에 윤이상, 클로드 드뷔시, 조르주 비제 등 놓쳐서는 안 될 클래식과 현대음악 거장들의 작품 또한 연주된다.

- 참여 연주자 : 장명서(소리), 가민(피리), 김한솔(거문고), 최소리(타악)

삭셀 음악원 오디토리움

Rue Taillepie

95200 Sarcelles

Tél. : 01 34 38 20 51

프랑스한국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coree-culture.org>

5) 최OO(진술조서 2018. 1. 25.)는 “코리아 매니지먼트의 유사 사업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2곳의 사업은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하

- 며 “앞서 언급되었던 박민희 관련 건 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최OO는 ‘5월 16일자 진술서’를 제출 하며 관련 부분에 “불측의 김세정 감독이 박민희가 레지던스에 적응을 못한다 하여, 가곡 소리꾼을 교체함” 이라고 기재하였다.
- 6) 조OO(진술조서 2018. 2. 13.)는 “기억은 안나는데, 리스트에서 이름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7) V(진술서 2018. 1. 22.)는 “박민희 건은 사무실에서 감독이 프랑스측 감독과 통화해 빼달라고 하는 통화내용 직접 들음.”이라고 기재하였다.
- 8) OOO(진술청취 2018. 5. 24.)는 “당시 위 두 사업에 가수로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어느날 김세정 작곡가가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면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제가 ‘출연하게 되면 행사에 초대된 다른 아티스트 출현도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여 ”그러면 제가 출연을 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고 당시 위 두 행사 출연을 포기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 하였습니다. 한편, 2016. 3. 8. 공연이 겹쳐서 가수가 바뀐 것으로 문서상<sup>30)</sup> 되어 있는데 사실이나 다시 문자, 아니라며 김세정 작곡가의 이야기가 이유라고 재차 확인하고 제3차 공모 사업에서 박방킴퍼니로 신청한 이유는 무엇이고 누구로부터 조언을 받은 바 있느냐는 물음에, “프랑스 쪽 사업 신청에서 ‘박민희’ 이름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방식으로 신청을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이름을 바꾸어 신청한 것에 관하여 코리아나매니지먼트에서 조언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최OO 예술감독과 연락을 하는 사이인지, 조언을 받은 바가 있는지에 대하여 “최OO, 그분은 오래전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하실 때, 본적이 있는 듯 한데,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며, 사적 친분이 없으며 잘 모르는 분”이라고 답변하였다.

#### (하) 국제 판화 비엔날레 한국현대 판화 특별전 한국현대 판화가 협회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시각> 부문 2차 공식인증사업

11	9	시각	한국현대판화가 협회	프랑스 sarcelles 국제 판화 비엔날레 한국현대판화 특별전 (프랑스) 프랑스 Sarcelles 현대판화 교류전 (한국)	2015. 11.21 ~ 12.6 (프랑스) 2016년 9월 (한국)예정	Ville de Sarcelles/서울 시립미술관 경희궁 미술관	○	(구글옥스 제외 사업)	특별전 07 신 차요제이 등
해외문화홍보원 조OO 사무관이 예술경영지원센터 V에게 보낸 엑셀문서(2015. 6. 11. 작성)									

30)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교부신청서 (주) 코리아나매니지먼트 2016. 2. 4.

1) 제2차 공모 사전심사회의록(2015. 4. 24. 27. 29.)에는 예산지원 약 2천5백만원 정도를 언급하고 있으나 공식인증사업 제2차 공모 심사결과보고 및 결과발표 계획안에는 공식인증사업으로 되었지만 ‘예산지원’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결산보고서에도 지출 기록이 없다.

번호	참가 신청자 명	지원신청 항목	지원결정 항목	비고
8	<p>██████████</p> <p>Ma Non Trapo : Contemporary Korean Photography Exhibition</p>	<p>&lt;2015&gt;</p> <p>· 제작비</p> <p>· 항공비</p> <p>&lt;2016&gt;</p> <p>· 항공비</p> <p>· 운송비</p>	<p>· 제작비 제외</p> <p>· 항공비 2015년 1인 2016년 3인</p> <p>· 운송비</p>	
9	<p>한국현대판화가협회/ 프랑스 sarcelles 국제 판화 비엔날레 한국현대판화 특별전 /프랑스 Sarcelles 현대판화 교류전</p>	<p>· 작가항공비 30인</p> <p>· 작품운송비</p> <p>· 홍보 인쇄비</p> <p>· 프랑스판화와 교류비</p>	<p>· 항공비 1500만원</p> <p>· 운송비 1000만원</p> <p>· 2016 홍보 인쇄비</p> <p>· 프랑스작가 국제비</p>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 사업 2차공모 예산심사결정내역서 4. 27.

예비심사 채점표에는 최OO: 86점, 김OO: 85점, 심OO: 87점, 평균 86.3점으로 시각 분야 29개 신청기관 중 2위 점수였다.

한불교류의해 사업백서(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2.)에서 관련 내용이 목록에 한줄 수록 되어 있고 사업 내용에 관한 설명, 소개는 나타나 있지 않다.

위 사업에 참여하는 작가 30인 중 이준규는 9,473인 리스트 ‘2012년 12월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에 포함되어 있고 참여 작가 8명의 동명이인이 리스트에 존재한다.

2) 최OO(진술서 2018. 5. 16.)는 위 사안에 대하여 “공식인증사업, 불측 초청(사르셀 시)”라고 기재하였다.

## (거) 이응노와 서체추상 이응노 미술관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lt;시각&gt; 부문 2차 공식인증사업

24	22	시각	이응노미술관	이응노와 서체추상	2016.3.5 - 2016.6.4	이응노 미술관	0	(구글독스 제외 사업)	라벨링 or 예산 제외해야 함
해외문화홍보원 조OO 사무관이 예술경영지원센터 V에게 보낸 엑셀문서(2015. 6. 11. 작성)									

- 1) 채점표에는 B이상(평균 82점)으로 예산지원 대상이었고 제2차 공모 사전심사회의록(2015. 4. 24. 27. 29.)에 공식인증 사업으로 되었으며 예산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제3차 공동회의 공식회의록(2015. 6. 16. ~19. 파리)에 위 사업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결산보고서에도 지출 기록이 없다.

22	이응노미술관/ 이응노와 서체추상	<2015> · 온종일 · 사진동작론 · 보행론 <2016> · 과시개념연야 · 도록제작 · 죽산대이나 · 모인산미술관장대행비.	· 2+1빌딩 부여. · 온종일(온종일) 한국현대미술 · 화공, 미술비 인공회 · 도록 12야만도.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 사업 2차공모 예산심사결정내역서 4. 27.			

- 2) 최OO(진술서 2018. 5. 16.)는 위 사안에 대하여 “불측지원 공식인증사업, (이응노, 이우환외 프랑스의 한국화가들)에 이지호 출장은 이 전시가 주목적임. 사업비나 전시설치비 등의 지원은 아예 없으므로 이응로미술관 사업” 이라고 기재하였다.

## (너) 대안적 기술문화 축제 팸플

## 프랑스 내 한국의 해 &lt;학술&gt; 부문 2차 공식인증사업

13	3	학술	팸플	Prospective Park-대안적 기술문화 축제	2015.11.15-2015.12.15	La Générale	0	(구글독스 제외 사업)	라벨링 or 예산 제외해야 함
해외문화홍보원 조OO 사무관이 예술경영지원센터 V에게 보낸 엑셀문서(2015. 6. 11. 작성)									

- 1) 채점표에는 B이상으로 예산지원 대상이었고 제2차 공모 사전심사회의록(2015. 4. 24. 27. 29.)에 공식인증 사업으로 되었으며 예산 지원을 언급하고 있으나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제2차 공모 심사결과 보고 및 결과 발표 계획안에는 자체 예산으로 표기 되어 있다. 결산보고서에도 지출 기록이 없다.

학 술 3	팝쿵 <Prospective Park-대안적 기술문화 축제>	2015. 항공비	2015. 항공비.	
-------------	---	-----------	------------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 사업 2차공모 예산심사결정내역서 4. 27.

팝쿵(Fab coop/청개구리제작소)의 송수연은 9,473인 리스트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 (더) '한국의 민화와 현대 작가 헬리오아트'

23	21	시각	헬리오아트	Les Beaux-Art Contem(Minwha) et les Arts Contemporains /한국 의 민화와 현대 작가	2015.11.3-11.25	Passage de Retz	X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	----	----	-------	--	-----------------	-----------------	---	---------------

해외문화홍보원 조OO 사무관이 예술경영지원센터 V에게 보낸 엑셀문서(2015. 6. 11. 작성)

'한국의 민화와 현대 작가 헬리오아트' 는 예산제외 해야함으로 되어 있으나 공식인증사업 및 예산 지원이 되었다.

- 1) 위 문서의 작성자 조OO(진술조서 2018. 2. 13.)는 리스트 대조 결과라고 추측할 뿐 구체적인 기억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 (러) 연극 '빛의 제국' 공연(국립극단) 배제 지시, 원작자 김영하 초청 방해

제2차 공동회의(2015. 2. 11~13. 서울)에서 '빛의 제국'은 한불 양국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기획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김영하 작가는 2014년 5월 6일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컬럼,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실패'를 썼다. 이 컬럼에는 세월호 침몰에 관한 박근혜 정부 비판 내용이 있다.

- 1) 최OO(진술조서 2018. 1. 25.)는 '빛의 제국' 공연에 대하여 "그 전에 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도 갔었습니다. 모철민 수석이 있을 때 였는데, 다이빙벨 상영 전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2014년 봄일 듯 합니다. 그 당시, 청와대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빛의 제국 공연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당시 모철민 수석도 있었는데 ‘두분이 말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2년간 준비 끝에 ‘프랑스 극장이 공동 작업하고 세곳의 극장이 투어를 받는다고 확정했는데 어떻게 바꾸냐 안된다’고 했고 결국, 버티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후, 문체부 차관 또는 예술국장이 다시 ‘빛의 제국 공연을 안하는 방안이 없냐’라고 해서 저는 ‘연극에서는 원작자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각색자가 더 중요하고 프랑스 초연에서 원작자 초청 없게 하겠다’라고 청와대에 답해주라고 한바 있으며 계속 진행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프랑스 초청으로 김영하 작가가 가게 되었죠. 오를레앙에서 초연되던 2016년 5월경 즈음에 김영하 작가가 프랑스측 초청으로 가게 되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최OO(진술서 2018. 5. 16.)는 “프랑스로 연극 공연초청 대상에 작가가 들어가는 경우는 전무, 그러나 그들이 모시고 싶어해서 자체예산으로 초청. 우선 우회지원이 아님. 이 연극을 무산시키려 했으나 실패. 따라서 배제 실패.”라고 기재하였다.

2) OO(진술조서 2018. 1. 29.)는 “발령 받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최OO 감독으로부터 당시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공연이 문제가 되어 청와대 모철민 수석을 만나서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해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박OO원장이 ‘빛의 제국’에 대해 물어 보길래 이전에 최OO 예술감독에게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했고 당시 박OO원장은 모철민이 지금은 수석도 아닌데, 그 허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냐 라고 한바는 있지만 이후 문제없이 사업은 진행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3) 당시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 정OO(진술조서 2018. 1. 7.)는 “그 전에 이미 문체부로부터 양해를 받았습니다. 2015. 1. 30. 경 (명동예술극장과 국립극단의 통합을 앞두고) 문체부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주일 가량 지난 후 문체부 박OO 사무관(공연전통예술과)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2015년 이후 기획된 공연 중 <빛의 제국>을 포함하여 총 5개 작품(<빛의 제국>, <문제적인간 연산>,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Saint Joan>, <아버지와 아들>)을 취소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원금을 끊고 극장문을 닫는 게 더 쉬울 거라고 했습니다. 박OO 사무관은 저를 달래면서 공연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면서 취소할 수 없는 이유를 좀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미 라인업 발표가 언론에 나갔고, 홈페이지에 공연 정보가 올라가

있고, 주요 캐스팅이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공연을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박OO 사무관이 저에게 “물론 연출가들과의 계약도 이미 했겠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OO 사무관이 저를 도와주려는 구나 생각하고,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계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사업 별로 자세한 진행 사항을 적고 취소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보이게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이러한 내용을 구OO 당시 극장장님에게만 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자세하게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OO 극장장님이 문체부 국장에게 호출을 받고 당시 ‘한불 상호 교류의 해’ 예술감독님인 최OO 선생과 함께 문체부에 미팅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해를 받았다고 구OO 극장장님과 최OO 선생님으로부터 각각 전달 받았습니다. 두 분께 당시 제가 꼭 양해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빛의 제국> 등 공연에 대하여 ‘양해’를 받고 나서 명동예술극장과 국립극단이 통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빛의 제국>이 계속 문제가 된 것은 국고지원을 받는 ‘한불 상호 교류의 해 지원 사업’으로 2015년 작품개발비, 2016년 공연제작비 등 2년 간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하며 “2016.10.12. 블랙리스트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제가 보니 문소리, 양동탁, 정승길 배우 등 모두 3명이나 <빛의 제국> 출연진에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문소리 배우가 문제가 된 것은 당시(2016.1월-2월경) 윤OO 사무국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하OO 문체부 사무관이 윤OO 사무국장에게 문소리 배우가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며 문제를 삼았는데 서로 상의 결과 “배우들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고 저에게 전해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4) 박OO(진술조서 2018. 4. 19.)은 ‘빛의제국’ 관련하여 “그에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머) ‘프랑스 MEET 문예축제’ 작가 파견 - 한국문학번역원

제2차 공동회의(2015. 2. 11~13. 서울)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의 ‘프랑스 MEET 문예축제’ 작가 파견은 한불 양국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기획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김OO, 주무관 OOO이 편혜영 작가 배제지시를 하였으나 한국문학번역원측이 수용하지 않았고 지원하였다. 『2017직문3 한국문학번역원 블랙리스트 실행사건 결과보고서』 38면

편혜영 작가는 9,473인 블랙리스트 ‘2014년 6월 2일,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1) 김OO(한국문학번역원 사업본부장) 진술조서(2017. 11. 14.)

김OO이 문체부로 부터의 편혜영 작가 배제 지시를 거부하자 김OO(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이 한국문학번역원 경영본부장 권OO, 김OO, 고OO(교육정보본부장)을 세종시로 소환하여 질책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며 “김OO 과장은 1년 예산 100억도 안 되는 기관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다, 당신 혼자 나가서 영웅 되는 건 좋지만 젊은 직원들은 어떻게 할거냐고 했습니다. 그때 온 몸에 힘이 빠질 정도로 무력감을 느꼈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2) 고OO(한국문학번역원 교육정보본부장) 진술조서(2017. 11. 10.)

(세종시로 소집되어서) “김OO 과장은 왜 미리 명단을 주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미리 명단을 송부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작가 배제의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라고 생각하여, 도대체 리스트가 있는지 있다면 보여 달라고도 했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3) 김OO 진술조서(2017. 12. 21.)

소집이 아니라 정기회의 옆을 것이라고 하며 위 김OO 진술에 대하여 “김OO 본부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권OO 본부장도 반발이 심했습니다.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치적인 빌미를 주면 통합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젊은 직원들의 고용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라고 진술 했다.

‘권OO은 김OO으로부터 배제 지시나 혐의를 한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김OO은 “김OO, 고OO 본부장은 연배도 있고, 문학적 감수성을 갖고 있어서 제가 업무 혐의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권OO 본부장은 가장 편하게 대해줬고 그래서 배제 지시와 같은 내용을 전달 할 경우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 주었습니다. 가장 협조적이었고 제 처지를 잘 이해해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권OO 본부장이 이 부분을 언급하며, 자기 이름을 빼달라는 의견을 받기는 했습니다만(김OO은 2017년 12월 진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OO, OOO, 권OO 등에 진술서를 회람시켰다) 권OO 본부장이 이 과정에서 빠질 경우, 저는 번역원에 대한 배제 지시를 한 사실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 4) 권OO 녹취록 (2017. 12. 19. 10~13, 25~26. /62쪽.)

권OO은 김OO이 문체부로 부터의 편혜영 작가 배제 지시를 거부하자 김OO이 한국문학번역원 권OO(경영본부장), 김OO, 고OO(교육정보본부장)을 세종시로 소환하여 질책한 사실을 부인하며 “아니요. 다른 건이에요. 김OO 과장 이상한 사람이네. 그 문제로 부른 게 아니라 뭐였냐면,..” “주말인가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 김OO 부장한테 전화했는데... 그 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연락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OO 부장도 아마 거기에 연루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세 명 다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내려갔는데, 세 부장 다 내려오라고 하니까 저도 내려갔죠. 내려갔더니 ‘권 본부장님을 올 필요가 없었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본인이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무 태만이다 이런 걸로”라고 진술 했다. 전문위원이 ‘그 회의 내용은 기억나세요?’라고 질문하자 권OO은 “그 건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저는 그게 ‘야, 이런 것까지 부르냐?’ 했는데, 하여튼 기억은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였어요.”라고 하며 당시 회의에 대한 기억에 대해 “심각한 거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 했다.

## (버) 2016 파리도서전 주빈국 - 한국문학번역원 등

제2차 공동회의(2015. 2. 11~13. 서울)에서 한국문학번역원 등은 ‘2016 파리도서전’ 주빈국 참여가 한불 양국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기획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실무를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진행하였다. 사업은 2016. 3. 17.~20.까지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1) 출판인쇄산업과 김OO, 김OO 등이 황석영, 김영하, 김애란, 한강 등에 대하여 배제 지시(2015. 8. 6.)를 번역원에 하였으나 번역원은 해당 작가들이 프랑스 측 초청 작가들이며 또한 이미 프랑스 측과 작가선정 협의가 완료된 상황을 들어 파견을 진행하였다. 『2017직문3 한국문학번역원 블랙리스트실행사건 결과보고서』 40면

2) 황석영, 김애란은 9,473인 블랙리스트 ‘2014년 6월 2일,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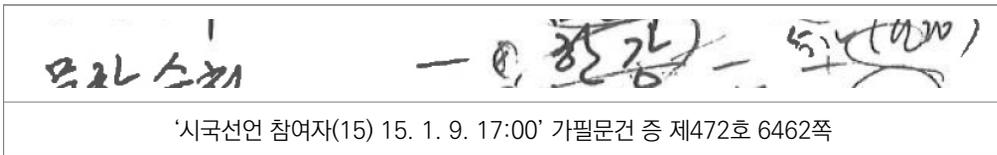
김애란, 한강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

㉔ 국제교류사업 14년(선정/선정) 청: 33/67 - 5명	64 ○ 총 2명 최창권(작가), 김장숙(소설가, 김이경)	○ 2차 3명 추가 파주 스토리텔링 아시아-한국과 아시아를 잇는 다문화교류소 리포터위원회 김연호, 제8회한국인도문학예술인국제학술회제 (인도블링카하는예술인모임 김춘식, 리치리가엔터테인스(한강))
--	--	--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 '16.2. 1현재 6쪽 000의 기록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사 업(8.9) 김현국(단) 최진경(이사) 김진	○ 188.12) 유고은(소설가), 김기택(시인), 권순영(시인), 이기희(소설가), 김혜련(소설가) 한강(소설가)-양재영 - 유고은, 김기택, 권순영, 이기희, 김혜련 양재영(188.29) ○ K(9.5) - 김인숙, 이기희, 고은태
---	--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 '16. 9. 27' 8쪽 2016. 8. 9. C의 기록



'시국선언 참여자(15) 15. 1. 9. 17:00' 가필문건 증 제472호 6462쪽

위 수기로 작성된 블랙리스트는 15. 1. 9. 17:00경 청와대가 유선으로 불러준 배제 리스트를 김OO 국장이 받아 적은 후 오OO에게 전달한 문건의 '한강' 부분이다. 오OO은 위 명단을 예술위 이OO, 장OO에게 전달하여 심사과정에서 지원되지 않도록 지시 하였다.<sup>31)</sup>

- 3) 박OO 프랑스한국문화원장(녹취록 2017. 12. 18.)은 파리 도서전에 관하여 “제가 국립외교원에서 부임 전에 당시 권 원장(독일한국문화원장)한테 들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에요. 아니, 뭐 파라도 곧 도서전 있을... 저는 모르죠, 이제. 뭐 있을 텐데 등등해서 ‘작가 초청 이런 거 관련해서 말이 많다.’라고 하며 “우리 측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은 우리 측이 초청을 못하고 불란서 측 초청명단으로 돌려서 어떻게 했다더라.’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라고 하였다.
- 4)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학사업 파리도서전 결과보고 (주프랑스대사관 2016. 4. 12.) 문서에는 참여 작가들에 대한 정보가 기재 되어 있지 않다.

31) 증인 오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총 면수:123면) 중 19면 2017 고합102 2017. 4. 12.

## (서) 이미아직 국립현대무용단

공식인증사업 제2차 공모에 선정되었고, (2015. 4. 24.) 2016. 6. 9.~11. 프랑스 샤이오 국립극장에서 공연이 진행되었다.

1) 『2017공13 국립현대무용단 부당개입 사건 결과보고서』(17면)에서 ‘주재환 미술감독’의 배제 경위와 사실이 확인되었다. 전 국립현대 무용단 예술감독 안OO(진술조서 2017. 11. 3.)은 문체부가 2016년 4,5월 경 C 사무관과 B 국장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주재환 작가가 참여하게 된 경위를 물어와 심적인 부담을 느껴 주재환 작가를 프랑스 공연에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혼자만 뺄 수도 없어서 ‘이미아직’의 제작진 중 일부 스태프들도 예산상의 문제로 함께 가지 못하게 된 것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최OO(진술서 2018. 5. 16.)은 “주재환 배제는 국내공연에서 실시 된 것이고, 그래픽디자이너가 공연 초청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전무하다며, 불측 초청 리스트에 없었음. 크레딧은 유지.” 라고 기재하였다.

## 2) 주재환 작가 블랙리스트에 대하여

## 가) 리스트-’16.9.27.현재

국립현대무용단	프랑스초청공연	OK에서 문제제기: 시각예술 주재환(도깨비난장주제)
'이미아직' (4월초)		
리스트-’16.9.27.현재. 5쪽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이 작성한 ‘리스트-’16.9.27.현재’ 문서에 따르면 국립현대무용단 ‘이미아직’ 프랑스 초청 공연(한불 행사) 관련, 국정원에서 2016. 4. 주재환 작가 참가에 대하여 예술정책과 오OO에게 문제제기를 하였다<sup>32)</sup>.

## 나)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249명)

국정원이 작성한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 249명 명단 중 연번 72번 중에서 미술 분야 주재환 작가가 2010년 노나메기재단 설립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B’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32) 국정원 김OO이 ‘이 사람이 어떤 경위로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느냐’라고 오OO에게 문제제기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오OO 서울중앙지검 2회 진술조서 2017. 10. 15.

72	미술	주재환	10.10 「노나메기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B
국정원 적폐청산 T/F,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붙임 16. 2017. 10. 30.				

다)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의 명단 중 연번 154번에서 주재환 작가가 기록되어 있다.

154	주재환	도깨비 난장	문체부 자료
국정원 적폐청산 T/F,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붙임 17. 2017. 10. 30.			

(어)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 해외문화홍보원 부분

(해외홍보원)권선자가 2명 외의 (L7)	간이파일: 특이없음(L7)
리스트 '16.9.27.현재 문서, 일부	

박OO(진술조서 2018. 2. 7.)은 위 문서 기록에 대하여 “2015년 12월에 3차 공모 사업이 끝날 무렵일 듯합니다. OOO 주무관과 업무 대화중 시각 분야는 예술정책과, 영화는 영상콘텐츠산업과에 연락을 해서 현재 추진 사업의 목록을 보내 주어야 한다고 하여, 예술정책과에 문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런 일은 처음이었고 담당자로 누구인지 알지 못해 해당과에 문의를 했더니 오OO 서기관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하여 통화 후 사업 목록을 보내 준 바 있습니다. 아마, 메일로 보낸 듯합니다. 이후 오OO 서기관이 전화로 '문제없어요, 그냥 진행하세요'라고 연락이 온 바 있습니다. 이후 2016년 2-3월경 신규 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정책과로 연락을 했는데, C 사무관이 '이제부터는 각 과에서 알아서 하게 되었다'고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이런 내용들은 하OO 과장과 공유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저) 블랙리스트 작가로 인한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폐막식 장소 변경

**IV. 폐막행사**

양측은 ‘프랑스 내 한국의 해’ 및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폐막행사 개최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한국측은 2016년 8월에 종료되는 ‘프랑스 내 한국의 해’의 폐막행사는 기존의 행사에 리셉션 형식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프랑스측은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폐막행사 8월 개최는 시기상 적합하지 않음을 상기하며, 행사 장소는 양혜규의 설치미술전시회(7. 6 - 9. 5.)가 열리는 퐁피두센터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내부 협의 후 프랑스측과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5차 공동회의 2016. 5. 11-13. 파리 공식회의록

- 1) 제5차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 회의에서 프랑스 측은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폐막식을 퐁피두센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장소는 제3차 공식인증 사업에 선정된 양혜규 작가의 설치 작품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 사용료가 추가로 드는 공간이 아니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프랑스 측의 제안에 따라 폐막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퐁피두센터 답사 등을 추진하여 준비상황 보고(2016.7.25.)를 한 바 있으나, 일주일 만에 사립 행사장(Le Cercle, 세르클 외교관 클럽)으로 장소를 변경하였다(2016.8.1.33).

프랑스 측 주요 참석자는 디디에 데상 샤시오극장장, 파리가을축제 마르코비츠 예술감독, 에마뉴엘 드 마르시 모타 파리시립극장장, 다비드 카메오 국립장식박물관장, 소피 마카리우 국립기메동양박물관장 등이었다.

- 2) 양혜규 작가는 제3차 공식인증사업에 선정되어 2016. 7. 6.~9. 5.까지 퐁피두센터에서 전시행사를 진행하였다.

33)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폐막식 추진 기획안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 2016.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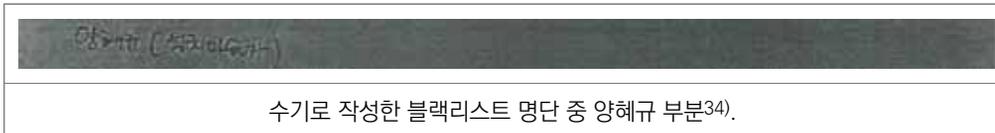


## 3) 양혜규 작가 블랙리스트 등재 현황

109	양혜규	글래스고 조각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5	-	트위터를 통하여 문재인 지지	지원배제
문제단체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2014. 5. 붙임1						

문제단체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붙임 문서 '부처별 관심예산조치현황'의 문체부 문화예술위원회 항목 109번에 양혜규 작가는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지지'가 이유가 되어 등재되었다. 이후 양혜규 작가는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 '16. 2.21'에 다음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

6. 기존관리리스트 149명, 공연과 관리 (중요) - 79명 중 25번 양혜규(설치 미술가) 12쪽.
7. 정무리스트 ('15.4.13현재)/중요) - 59명, 비교란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 지원 \*15년도 미신청 18쪽.
8. 2015년 연중사업 리스트 - 262명, 2015 국제교류 2차공모('15.5.27) - 36명 중 자체 확인자 23쪽.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 '16. 2.21' 중 양혜규 작가 등재 현황.



특검의 '수사보고, 문체부 예술정책과 실무자가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 첨부 (2017. 1. 3.)'에서 '수기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다. 이 명단은 전임자 오OO이 C에게 인수인계한 서류 중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고, 출처는 김OO 국장(2015. 1. 9.)으로 위 문서에서 '양혜규'가 기록되어 있다.

34) 증인 오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총 면수:123면) 중 19면 2017 고합102 2017. 4. 12.

## 4)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폐막식 예결산

**2015-2016 한불상호교류의 해**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폐막식 예결산 내역**

'18.5.1.(화) / 해외문화홍보사업과

## □ 예결산 내역

(1 유로= 1,266.18 원)

세부사업명	행사명	예산액	집행액
한-불 상호교류의 해	2015-2016 한불상호교류의 해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폐막식	68,182.80 유로 (86,331,690 원)	68,182.80 유로 (86,331,690 원)

## □ 집행 세부내역

(단위: 유로)

예산과목	집행내역	집행금액	기타	
3131-303 -210-01 (한-불 상호교류의 해 -일반수용비)	리셉션	프랑스식 칵테일	10,000.00	
		한식 칵테일	17,500.00	
	공연관련 (잠비나이)	아티스트 항공료	3,605.38	
		아티스트 차량 임차료	2,065.00	
		아티스트 숙박비/일비	3,276.00	
	임차료	아티스트 사례비	5,000.00	
		행사장 대관료	6,960.00	세르클 외교관 클럽 대관비용
	홍보비	악기 설치 및 공연 운영비	1,896.00	
		음향 및 영상 시설 설치 및 운영비	5,543.52	
		홍보물 디자인 사례비	1,550.00	
	물품 구입비 /운송비	홍보물 인쇄비	1,122.00	
		영상 제작 사례비	2,000.00	
		폐막 행사 사진/동영상 촬영 및 편집비	2,270.00	
		물품구입비용	1,043.24	
		감사패 포장, 우편비, 배송료 등	1,344.00	
		감사패 및 쇼핑백 외교행량 세관 통관료	269.14	

예산과목	집행내역	집행금액	기타
	통역 사례비	2,460.00	
사례비	행사 지원 사례비	418.00	
/기타	출장단 수행(차량 및 기사 사례비)	1,650.00	
	공향의전실 사용료, 기사 사례비	1,693.28	
	<b>집행내역 소계(A)</b>	<b>71,665.56</b>	
	<b>배정예산(B)</b>	<b>68,182.80</b>	
	<b>잔액(A-B)*</b>	<b>-3,482.76</b>	

\* 예산이 초과된 3,482.76 유로는 주프랑스문화원 한불상호교류의해 예산에서 집행

- 5) 최OO(진술조서 2018. 1. 25.)는 “폐막식을 당시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내 프랑스의 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김종덕 장관 퇴임과 관련되어 일을 진행했던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당시, 폐막식을 지금 하지 말고 퐁피두센터에서 프랑스내 스텝들과 주관자들을 초청해서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진행하자고 제안을 5월초에 세웠고 보고 한바 있는데 변경이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며 “폐막식 공간은 외교구락부라 격식을 따지는 딱딱한 공간인데요. 원래 제 의도 다르게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그 행사에 김종덕 장관이 왔는데, 행사가 장관을 위해 기획된 인상이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6) OOO(진술조서 1. 29.)는 “이것은 박OO 예술정책실장의 지시로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압니다. 당시, 양혜규 작가가 블랙리스트에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김OO 당시 해외문화홍보원 원장이 ‘박OO 실장은 문화예술인도 잘 모를텐데, 어떻게 양혜규가 블랙리스트인 것을 알아서 장소를 바꾸라고 했지’라고 혼잣말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7) 익명으로 진술하기를 원하는 프랑스 한국문화원 직원은 서면 진술(2018. 1. 14.)에서 “한불상호교류의해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폐막식(2016년 8월 30일 개최)을 본래는 양혜규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는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장조사도 가고 기관의 관계자들과도 교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스런 모철민 대사의 지시로 퐁피두센터 건을 취소하고 사립행사장(Le Cercle)으로 바뀌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유는 양혜규 작가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정부행사를 진행하는데 언론에서 양혜규 작가에 대하여 만에 하나 언급된다면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퐁피두센터에 이렇다 할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도 거절하고 한불행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17,000유로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각테일비를 지불하고 폐막행사를 개최해야 했습니다. 대사관, 문화원의 이와 같은 적절치 못한 태도로 결국 풍피두센터에서는 기관장도 미술관 대표도 폐막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 8) 박OO의 “당시 폐막식 행사계획이 문체부 전체 부서에 공유되었었는데, 실국회의에서 ‘양혜규’ 작가가 풍피두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장소 변경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하며 “무료 자체가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아니어서 보고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는 당시 진술 내용(박OO 진술조서(2018. 2. 7. 12쪽.)에 대하여 박OO(진술청취 2018. 4. 5.)은 “당시, 폐막식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풍피두에서 폐막식을 개최할 경우 장소비용이 무료였다는 것은 논점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풍피두 관련 보고서, 외교클럽으로의 장소 변경 안을 제출했을 때, 예산 등 전반적인 보고는 이루어졌겠지만 장소비용을 특정하여 무료 여부 등이 우선순위 논점은 아니었다는 취지”라고 하였다.
- 9) 김OO(사실확인서 2018. 4. 9.)는 “당초 풍피두 센터를 한국의 해 폐막식 장소로 검토하던 중,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대략 2016년 7월말 경 당시 문화예술정책실장(박OO)으로부터 폐막식을 풍피두에서 개최할 경우 여러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음(전화). 이유는 양혜규 작가는 정부 지원이 곤란한 작가인데 이번에 폐막식을 풍피두에서 개최하면 양혜규 지원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장관까지 참석하는 행사이므로 부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음. 실장 이외에 예술정책관실 직원도 이러한 사항을 해홍 직원에게 전달한 상태이었음.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이미 2015년 12월 경 양혜규 작가 전시를 한불 수교 사업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 등을 지원한 바 있는데, 폐막식을 계기로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해홍이 추진하는 다른 지원사업 및 담당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하여 굳이 풍피두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예술정책관실에서 폐막식 계획을 어떻게 알았는지 당시에 확인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정확히 경위를 알 수는 없으나, 회의 자료 등 부내 정보를 통하여 알았을 것으로 봄.” 라고 기재하고 추가 비용에 대하여 “풍피두센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박OO 실장에게 예산 문제에 대하여는 이야기를 한 바는 없음. 폐막식 장소를 변경할 경우 임차료 등 추가로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에 대하여 해흥 내부에서 검토했던 기억이 별로 없으며, 풍피두가 개최 장소로 검토만 되었지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개최할 경우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출해 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함. 당시 파리 외교 센터 등 후보지를 결정할 때 한불 수교사업의 성과를 살릴 수 있도록 기념행사, 공연, 케이터링 등에 적합한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다.

10) 박OO(진술조서 2018. 4. 19.)은 “실국장회의 자료에 장관일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양혜규 전사가 진행되는 풍피두에서 장관이 참석하는 폐막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OO 서기관이 보고차 방문했다가 ‘양혜규는 대상인데’ 라고 했고 놀래서 누구냐고 물으니 ‘유명한 설치작가’ 라고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문화홍보원 한불사업담당자 박OO 사무관에게 물어보니 한불 행사 사업 지원에 선정되었다고 하여, 김OO 원장에게 “지원은 된 것 같은데, 혹시나 주목하게 되면 지원의 적정성에 대해 청와대나 언론에서 시달리게 되고 김종덕 장관이나 부서에도 피해가 갈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판단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바 있습니다.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해흥을 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음으로 지시는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며 1만 7천유로 추가 비용 지출에 대하여 “장소의 비용 문제는 그때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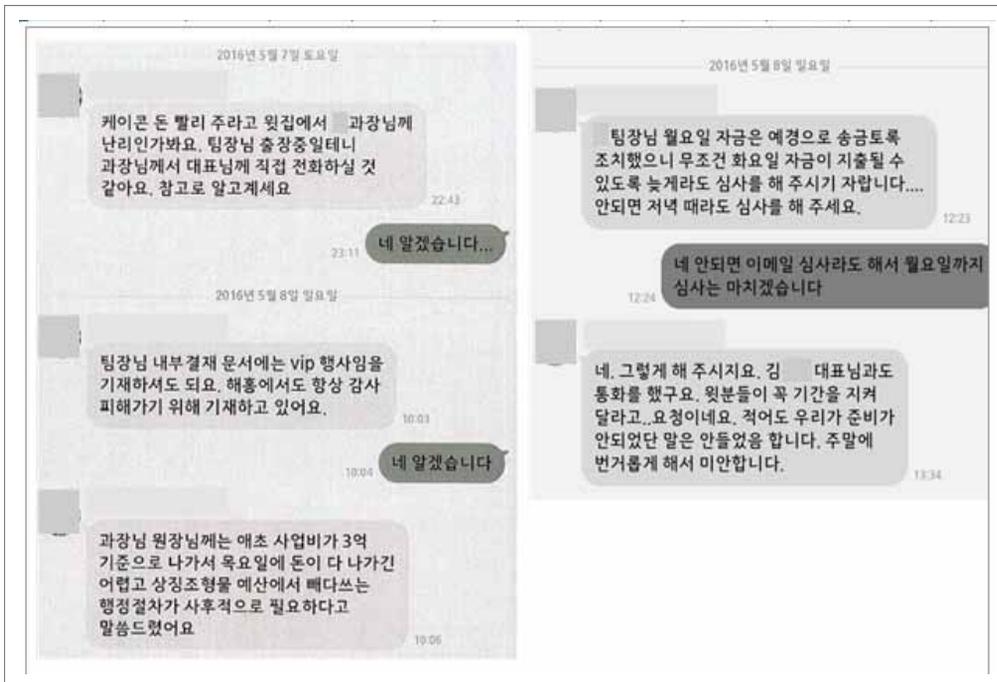
11) 하OO(2018. 2. 9.)은 “양혜규 작가 때문에 장소가 바뀐 것은 맞습니다.” 라고 하며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도 거절하고 한불행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약 17,000유로를 추가 지출하여 폐막행사를 개최했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에 대하여 “그것은 답하기 곤란합니다.” 라고 하고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무료제공은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김종덕 장관의 퇴임 관련성에 대하여 “아마 고려는 되었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김종덕 장관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닐 듯합니다. 장관이 교체되면 영상자료, 기념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개막식부터 참여한 장관이 마무리하는 것을 고려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9) ‘K-CON 2016 프랑스’ 사업에서 OOO 예산 특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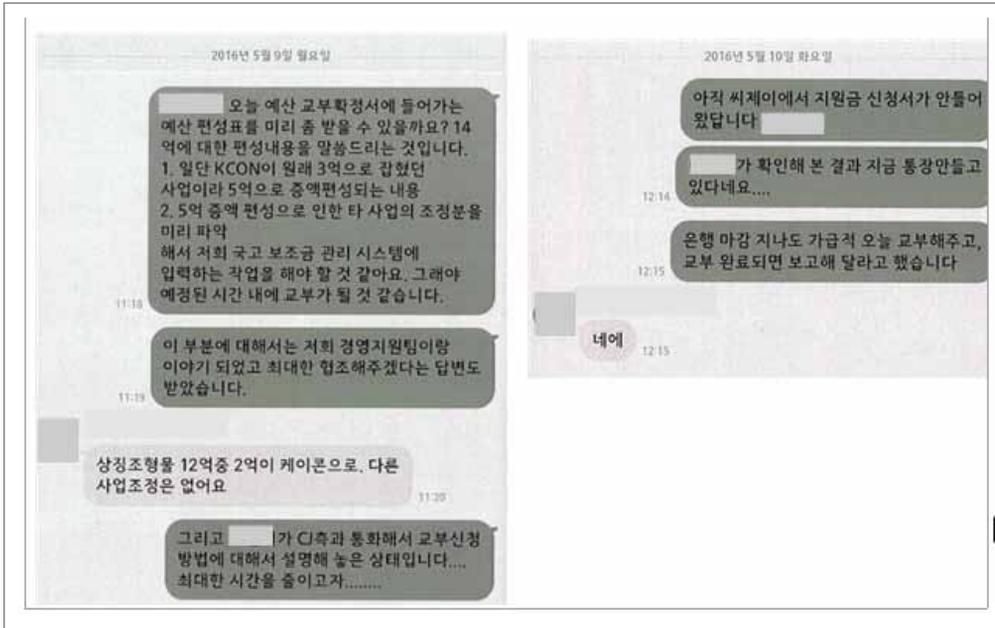
2016년 6월,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코르호텔 아레나에서 열린 ‘K-CON 2016 프랑스’ 행사에 참여함. 당시 행사 주최측인 CJ는 최순실이 실

소유주였던 플레이그라운드(대표 김OO)와 업무위탁을 체결하여 ‘한식체험전시’를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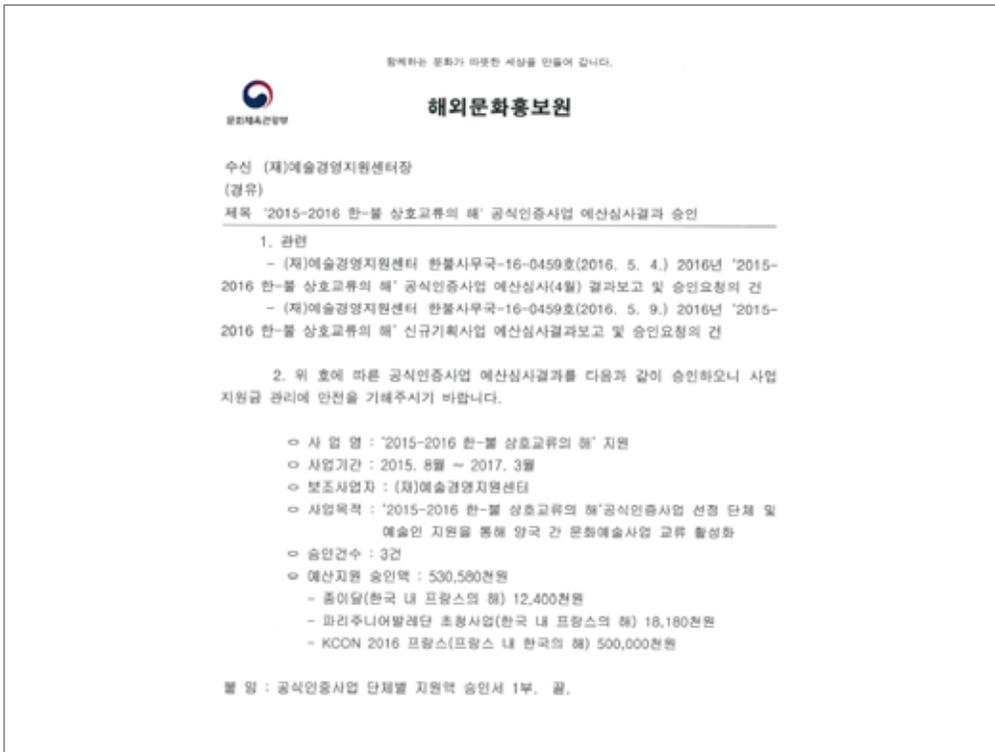
- 1) ‘2017년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000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9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OO(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000(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차 전 단장은 “대통령이 6월에 파리에 갔을 때 한식을 선보이고 싶어한다”며 “이번에는 예전처럼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한식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약간 라운지 개념과 파티 개념으로 하면서 프랑스 대통령을 모시고 오겠대”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음식을 보여주고 싶다는 미션을 회장님(000)한테 준 거야. 회장님이 다른 거보다 그게 급한 거지. 빨리 음식을 개발해서 보이자. 음식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식이 이렇다는걸 보여주자<sup>35)</sup>”고 했다.
- 2) 2016. 5. 7.(토)부터 5. 10.(화) 사이에 해외문화홍보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 담당자들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2016년 청와대 지시로 ‘한식체험전시’ 예산지원을 위해 5.7(토)~5.8(일)에 예산심사를 거쳐 5.9(월) 예산교부 처리, 5.10(화) CJ교부 완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5) “朴, 작년 프랑스 방문 때 최순실에 한식 행사 지시” 증언, 뉴시스, 2017.02.06.



3) 해외문화홍보원 예산심사결과 승인 문서 (기획운영과-2223) (2016. 5. 9.)



위 행사가 열리기 한 달 전인 2016년 5월 경,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교문수석실은 해외문화홍보원과 조직위 사무국(예술경영지원센터)에 K-CON ‘한식체험전시’ 운영 예산을 3억에서 5억으로 증액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예산 증액을 위해 상징조형물 12억 중 2억을 K-CON ‘한식체험전시’ 사업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이를 신속히 집행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6.5.7.(토), 5.8.(일) 주말 동안 급하게 예산 심사를 진행시켜 5.9.(월)에 예산교부를 처리하였다. 2016. 5. 10.(화) ‘CJ측이 입금 받을 통장을 만들고 있다’는 등의 문자 내용으로 보아 ‘한식체험전시’ 관련하여 예산을 교부받는 CJ 조차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 예산 교부가 완료되자, 조직위 사무국이 예산 교부 단체에 보내야 할 안내서를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장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였다.

4) 최OO(진술조서 2018. 1. 25.)는 “cje&m 5억원 지원이 지원됩니다. 2016년 4차 회의가 파리에서 열리는 직전인데요, 사무국 최OO 또는 김OO 부장이 2016년 5월 경 ‘미르 쪽에서 3억원을 지원해주어라 지시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까요’ 해서 ‘우리 사업은 양쪽 사업이고 공공조직위 프로세스를 밟으면 할 수 있다고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오늘 내로 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K콘에 대한 CJ쪽 예산은 잡아 놓은바 있지만 미르재단에게는 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출장이 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박OO사무관이 ‘미르’ 사업계획서를 썼다고 들었는데, 박OO 사무관의 요청은 예산을 ‘미르’나 ‘플레이그라운드’에 보내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직위 예산에 K콘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책정된 것이 있으니 CJ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플레이그라운드, 미르에게 주라는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박OO이 다행히도 제 말을 들어 그렇게 처리했던 것으로 압니다. K콘 사업은 2015년 9월 사업비 3억이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5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잘 모릅니다. 결재 과정에서 저는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재자는 예정 대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OOO(진술조서 1. 29.)는 한식 사업에 대해 “조직위에서 원래 계획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본부에서 챙겼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순방행사 기획이라 청와대 지시가 컸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2016년 1월에 파리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노OO 원장이 귀임을 하고 박OO 원장이 부임하기 전 2주 동안 박OO 원장 지시로 프랑스 한국문화원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사관 주재 회의에서 모철민 대사로 부터 수수께끼 같은 모호한 말을 들었습니다. ‘에끌페랑

디와 미르재단 회의가 있는데, 통역원은 이전에 했던 사람에게 다시 부탁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원에서 가서 문화원 직원들에게 말을 하니 모철민 대사가 '대외 비니까 문화원 직원에게 통역을 맡기라' 했다 것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런 MOU는 한불 교류 사업중 하나에 불과한데 그리고 미르 재단에 대해 알려진 바도 없는데, 대사가 통역원까지 챙기나,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직위에서는 콘서트 준비를 기획 했었는데, 이 사업 중 콘서트는 CJ가 알아서 준비하게 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은 부스 중 한식만 맡아서 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더욱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출장을 안가서 부스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부스에 5억원이 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떡거리 부스로 5억을 쓴다는 것은 정말 이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6) 박OO(진술조서2018. 2. 7.)은 위 최OO의 진술을 부인하며 주말에 예산 심사 결정을 하고 다음날 월요일에 예산결과승인을 하는 사례가 있나에 대하여 "이런 사례는 처음있는 일입니다."라고 하며 "청와대가 요청한 일정에 맞추려면 사전 절차를 위해서 주말에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7) 하OO(2018. 2. 9.)은 K콘 사업 비용이 3억에서 5억으로 늘리는 지시에 대하여 "청와대 김OO 아니면 신OO 일 듯합니다." 라고 하고 위 사업은 "본부의 최OO 국장이 K콘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다. 뉴욕,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선발 과정 의혹

2017년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박경미 의원은 '뉴욕과 파리 문화원장 임용과정에 OOO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노태강 제2차관은 '지적 사항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소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으로 답변<sup>36)</sup>하였고,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뉴욕·프랑스 문화원장 선발 경과'를 제출하며 의혹 규명을 문의하였다.

36) 2017년도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77~78쪽 2017. 10. 30.

## (1) 뉴욕·프랑스 문화원장 선발 경과(2017. 10. 30. / 해외문화홍보원)

- 박 대통령 뉴욕문화원장 추천도 최순실에 맡겼다('16.11.28 / 한겨레)
  - A 국장이 당초 뉴욕 문화원장으로 내정됐으나, 출국 5일전 경질 통보
  - 000은 '14년 말 000로부터 뉴욕 문화원장을 추천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측근인 000를 추천했으나, 신상 문제로 임명되지 못함(000는 후에 박 대통령 지원으로 KT 임원으로 영입)
  - 대통령 지시로 뉴욕 문화원장과 프랑스 문화원장이 '경력개방형' 직위로 변경
  - 현 뉴욕 문화원장 000는 000과 친분이 있는 송성각 전 콘진원장과 함께 제일기획에서 근무한 사이로, 000의 입김으로 뉴욕 문화원장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뉴욕·프랑스 문화원장 선발 경과 중 관련 언론보도

위 문서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위 언론보도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문서상 확인되는 사실들을 기재 되어 있다.

▶ 뉴욕 문화원장 직위 최초 선발 공고('14.4.23~5.6) ▶ A 국장 합격 통지('14.8.1 전후) ▶ A 국장 일신상 사유로 부임의사 철회, 문체부 전입('14.10.20) ▶ 뉴욕 문화원장 직위 1차 재공고('14.11.19) - 광고계 인사 000 응모, 신원조회 과정에서 탈락 ▶ 뉴욕 문화원장 직위 2차 재공고('15.2.2) - 역량평가 탈락 등으로 적격자 없음 ▶ 김종덕 前 장관 지시로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개방형 문화원장 직위에 민간인은 고위공무원 '가'급, 공무원은 '나'급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행자부, 외교부와 협의('15.4월 중) ▶ 행자부에 뉴욕 문화원장 직급을 고위공무원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하는 방안 건의, 직급 상향('15.4월 중) ▶ 뉴욕 문화원장 직위 3차 재공고('15.6.16) - 광고계 인사 000 선발, 해외문화홍보원은 외교부와 역량평가 면제 협의('15.7월 중) ▶ 프랑스 문화원장 직위 선발 공고('15.7.1) ▶ 인사처는 각 부처에 경력개방형 직위를 추가 지정하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에 뉴욕, 프랑스 문화원장 직위를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것을 제안('15.7.23) - 외교부는 해외문화홍보원에 의견 조회('15.7.30) - 해외문화홍보원은 업무의 공공성 및 다른 주재관 직위와의 형평성 등을 사유로 외교부에 '수용 곤란' 의견 제출('15.8.5) ▶ 외교부는 뉴욕, 프랑스 문화원장을 경력개방형 직위로 전환('15.8월 중) ▶ 000 뉴욕 문화원장 발령('15.8.26) - 임기: '15.8.26 ~ '18.8.25 ▶ 프랑스 문화원장 직위의 역량평가를 합격한 2명의 후보에 대해 외교부와 문체부가 협의, 홍보·마케팅 역량 부족을 사유로 부적격 판단('15.10월 중) ▶ 인사처, 프랑스 문화원장 직위에 대해 스

카웃 방식(개방형 직위를 대상으로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민간 최고 전문가에 대해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하는 제도) - 외교부가 임용후보자를 추천, 인사처가 최종 선발진  
 ▶ 해외문화홍보원은 외교부를 거쳐 인사처에 광고계 인사 박OO을 프랑스 문화원장으로 추천('15.11.16) ▶ 박OO 프랑스 문화원장 발령('16.1.18) - 임기 : '16.1.18 ~ '19.1.17

## (2) A 뉴욕 한국문화원장 부임 철회 의혹<sup>37)</sup>

블랙리스트 관련 그간 경과 및 현황분석 문서, '첨부 1'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로 피해, 수해 사례 부분 중 '수해사례 추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로 피해, 수해 사례 부분

수해사례 추정(업무수행과 수해 여부의 인과관계 불명확)			
성명	부서(직급)	관련업무 담당기간	내용
A	청와대 문체비서관실(행정관)	'13. 3.30-'14.10.19	관련업무 적극 추진 영국문화원장 파견 추정
김OO	청와대 문체비서관실(행정관)	'14. 10.20-'16. 1.28	관련업무 적극 추진 LA문화원장 파견 추정

※ <A 국장>은 2014년 연말, 뉴욕문화원장 선발에 확정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파견이 취소된 불이익 사례도 있음 → 이후 영국문화원장으로 선발

#### (가) 전 청와대 행정관 A (진술서 2017. 12. 14.)

A는 진술서에서 '2014년 4월에 공고가 있었던 개방형 직위 주뉴욕한국문화원장 직위에 5월에 응모하였고, 5~6월 중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을 거쳐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으

37) 이와 관련하여 A행정관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의제기하였다('18. 11. 12.).1 2017년 5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법정에서 김OO 피고인 측 증언을 통해 2014년 사건 당시 신OO 정무비서관(전 국민소통비서관)이 김OO 비서관에게 "문체비서관실 A행정관도 좌파 아니냐" 라고 언급하며 뉴욕한국문화원 발령을 막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이는 정무수석실의 비공식 인사검증 결과 A행정관이 좌파로 분류되어 이른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이에 따라 주뉴욕한국문화원장 발령이 취소된 사안으로 볼 수 있음. 차OO은 이후에 공석이 된 그 자리에 지인을 추천했던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동 사안은 단순한 인사권 남용 사건이 아니라 현직 공무원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여 인사상의 불이익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피해까지 입힌 사건으로 볼 수 있음.

며, 당시에 공고 내용상으로는 7월 중 합격 발표를 하고 8월에 임기가 시작되는데, 지연되어 8월 말에 외교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합격통보를 받고, 이후 절차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과 뉴욕 항공편 및 거주할 집을 가계약하고, 가재도구 등을 처분 하는 등 출국 수속을 밟았다'라는 취지로 기재 하면서 '출국예정일이었던 10월 20일을 불과 5일 앞둔 10월 15일에 김소영 문체비서관 및 김재춘 교육비서관으로부터 뉴욕에 못나가게 되었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아 대통령비서실 내의 인사 책임자였던 김기춘의 인사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또한, 문체부 운영지원 과장 김OO의 요청으로 '주재관 지원철회서' 작성시 '개인사정으로' 철회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라고 했으나 그 부분을 받아드릴 수 없어 '사정변경으로' 기재 했다며 '주재관 지원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주재관 지원철회서 작성 시점은 2014년 10월 29일 이다. A가 제출한 당시 외교관 여권은 발급 일자가 2014년 10월 8일 이다.

<b>주재관 지원 철회서</b>	
<input type="checkbox"/> 소	속: 문화체육관광부
<input type="checkbox"/> 직	급: 일반직고위공무원
<input type="checkbox"/> 성	명: A
<input type="checkbox"/> 지원직위(업무분야):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문화홍보)
<p>상기 본인은 귀 부에서 실시한 2014년 하반기 개방형 문화원장 직위 공개모집에서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직위에 응모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지원을 철회하고자 합니다.</p> <p>2014. 10. 29.</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A </p>	
외교부 장관 귀하	

이에 대하여 당시 운영지원 과장 김OO(진술조서 2017. 12. 6.)은 “A국장 부임 철회에 대한 최종 통보는 A국장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직접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종덕 장관도 이 소식을 알고 있어서 부임 절차를 홀딩하라고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A

국장은 ‘왜 빨리 부임 결정이 안나냐’라고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당시 장관 말씀 이외에 별로 아는바가 없어서 ‘홀딩지시’만 받았다고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A국장이 청와대로부터 부임 철회를 통보 받아서 그래서 본인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이미 선발과 부임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부임을 안하게 되었으니 그 근거를 남겨달라고 하며 ‘주재관 지원 철회서’를 받아 달라 했습니다.” 라고 하며 ‘사정변경으로’ 문구에 대하여 A의 요청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000<sup>38)</sup> 피의자 2회차 신문조서(2016. 11. 10.)

2014. 8. 경 광고대행사 ‘오길비앤더’에서 근무하던 이OO에게 뉴욕 주재 한국문화원장 자리의 공모에 지원해보라고 권유한 사실에 대하여 000은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하며 “그 무렵 000이 저에게 대통령께서 ‘해외에 있는 문화원장 자리는 이제 민간 전문가들이 가야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뉴욕 한국문화원장 자리에 적임자를 추천해달라고 하여 - 중략 - 제가 당시 이OO에게 뉴욕 주재 한국문화원장 자리 공모에 지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이OO는 고위공무원단 시험을 볼 때 문체부 사무관들이 찾아와 자료까지 챙겨주었고, 피의자도 권력층에 상당한 줄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뉴욕 주재 한국문화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스스로 확신을 갖고 발탁절차가 종료되기 전인 2014. 10. 경 ‘오길비앤더’를 사직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고 검찰측이 묻자 000은 “무엇인가 개인적인 사정 등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부인 하고, “이OO가 뉴욕 주재 한국문화원장 자리에 지원한 후 000이 저에게 ‘그 사람은 안 되겠다고 그러던데요’라고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000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기 뭐가 나왔다고 이유를 설명해주었습니다.” 라고 하며 2015. 1. 경 이OO를 KT 임원으로 추천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이후 이OO가 2015. 2. 26. 10:26 경 안중범 수석에게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하여 “제 부탁으로 000을 통해 안중범 수석이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안중범 수석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38) 000은 김종덕을 000에게 부탁하여 문체부 장관에 임명(2014. 8. 20.)되게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77호 제3회 공판 김종덕 증인신문조서 2017. 5. 16.

(다)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최OO 진술서<sup>39)</sup>(2016. 12.)

2014년 10월 강제로 사직<sup>40)</sup>된 최OO은 ‘뉴욕문화원장, 파리 문화원장을 민간인인 광고업계인사로 임명하기 위해 공무원직제를 변경하여 공무원과 민간인이 모두 공모할 수 있는 조항을 바꾸어 민간인만 응모가능 하도록 변경했고, 고위공직자 임용시 민간인에게 적용하던 공직역량평가 절차를 생략하도록 공직임용절차를 사적으로 변경했음.(외교부 협조)’이라고 기재하였다.

## (3) 뉴욕,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인사 의혹

명퇴·전보 등 인사조치 현황 (2016. 11. 4.(금) / 운영지원과(인사)) 문서는 조운선 전 (재임 기간 2016. 9. ~ 2017. 1.) 문체부장관 시기에 작성되었고 뉴욕,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 되어 있다.

## 명퇴·전보 등 인사조치 현황 중 뉴욕, 프랑스문화원장 부분

구분	연 령 위	성명	인사조치내역			비고
			일자	발령사항	사유	
기타	뉴욕문화원장	오OO	15. 8.26	(제일기획 상무)→ 뉴욕문화원장	OOO 라인	
	파리문화원장	박OO	16. 1.18	(잡스 대표) → 프랑스문화원장	OOO 라인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 현재 사무관 H(진술조서 2017. 11. 16.)는 위 사안을 우리 위원회에 조사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하여 국감에서의 제2차관의 답변에 대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며 또한 “올 초 기관 감사에서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행정적인 절차, 법규를 보는데, 문화원은 큰 문제를 발견 못한 듯합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감사원에서 문제 삼지 않으니 감사원을 통해 규명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고 생각을 하였고 저희 내부 차원의 조사로도 한계가 있어서 귀 위원회에서 규명해주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9) 김기춘 외 1심 형사소송기록 제2권 906~910면

40) 서울고법 제4형사부 판결에 따르면 ‘1급 공무원의 경우에도 직권면직을 할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김종덕은 김기춘과 공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판결문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206-207면, 2018. 1. 23.

(가) 재외 문화원장 등 선발제도 개선방안 (2015. 3. 16 해외문화홍보원)

**능력 있는 민간전문가 발굴, 공직참여 확대(대우도)를 위한 재외 문화원장 등 선발제도 개선방안**  
2015. 3. 16(월) / 해외문화홍보원

### 1. 선발제도 현황

□ **[문화홍보 분야 주제관]** 문화원장 20개, 문화홍보관 13개 직위

- 문화원장: 개방형(8개 직위) 및 공모 직위(20개 직위)
  -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뉴욕, LA, 러시아 문화원장(고공단)
- 문화홍보관: 전부 공모 직위로 운영

□ **[선발제도]** 외교부·인사혁신처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선발

- **[선발절차]** 공고 → 심사서류 제출 → 후보자 추천 → 역량평가(고공단) → 인사심사(고공단) → 입찰(통상 2개월 내외 소요)
- **[선발요건]** 스펙(통상적요건)일정 필수 이상 학력상, 일부 연계조건, 스펙적요건(필수조건) 관련 분야(언어, 근무), 스펙적요건(선택조건)이 수일, 논문 발표, 저술 등, 역량평가 통과 등
- **[선발심사위원회]** 민간위원(대당별), 민간+공무원(공무원)으로 구성

구분	대상	선발
개발형 직위	8개 직위 / 고공단 문화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심사(인사혁신처)</li> <li>- (민간) 인사혁신처장 위촉(7명)</li> <li>- 1년, 언어 실사위원(언어) 외교부에서 추천</li> <li>○ 고공단 책임평가(인사혁신처)</li> </ul>
공모 직위	20개 직위 / 고공단(1), 3~4급(4), 4급(2), 5급(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심사(외교부)</li> <li>- (장부) 외교부 차관(위원장), 외교부·기재부·행정부·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20명)</li> <li>- (민간) 인사혁신처장 추천(2명)</li> <li>- 1년, 언어 실사위원(3명)은 외교부 위촉</li> <li>○ 고공단 책임평가(인사혁신처)</li> </ul>

· 인사혁신처 소관: "개발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대통령령),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내규)

□ 관련 분야: 문화, 예술, 체육, 관광, 홍보, 교류, 언론, 연문, 공민, 교육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2. 선발제도와 처우상 문제점

- **[실질적 민간개방 미흡]** 8개 개방형 직위 중 2개 직위(프랑스, 러시아)만 민간인이 근무
  - 재외 문화원이 "한국문화 소개"가 아닌 경제적 동반 진출·확산 지원 및 문화와 국경의 통합 국가홍보를 위한 역할 강화 필요
  - 30개 주제관 중, 고공단 문화원장(8개)은 유일한 개방형 직위이나 과장급이라는 정보 격차로 민간이 참여성·전문성 활용에 한계
- **[선발요건 한계]** 외국어 요건과 역량평가로 민간 전문가 진입 제한
  - **[외국어 요건]** 외국어점수 5등급 이상(보통 700 이상)으로, 일부 민간인은 문화원장 승진을 위한 별도 어학시험 응시에 대해 거부감 존재
    - (연계조건) 스펙상외국어 사용 제외공관 주재관 근무, 스펙 1년 6개월 이상 경험지역에 어학연수 또는 학사학위 이상 취득, 스펙상외국어 사용 국제 거주 또는 직거기간에서 1년 총개월 이상 거주 등
  - **[역량평가]** 스펙1/2 역할수행, 스펙(실용) 기반(공공문제에 보고서 작성, 스펙(논문) 등은 공직경험이 전무한 민간인에게 어떻게 인정된다는 평가
    - (역량평가 준비기간) 공무원: 사전 교육공무원 후보자 교육(1주) vs. 민간인: 사전 교육(1달)
- **[연령적 근무기반 취약]** 민간인이 해당직과 해외에서 문화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 내지 지원기반 취약
  - **[낮은 경쟁기회]** 1인 문화원 재충당성(제한)으로 운영도시, 예산·회계·제도 등 보좌공무원 없이 민간인 총보 책임 운영하는 데 한계
  - **[비흡한 처우]** 현행 처우는 민간 근무 시보다 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민간 전문가의 해외근무 유인에 한계
    - 스펙(보수) 1인당 월 600만 + 초과분(50% 추가), 스펙(수당)에우차 직위 근무수당 50%의 1차, 2차 700만 월 600만, 스펙(보조비), 소주책임차 등

위 문서는 이OO가 뉴욕한국문화원장 후보에서 탈락한 이후 뉴욕 문화원장 직위 2차 재공고('15.2.2)에서도 다른 후보자가 역량평가 탈락 등으로 적격자를 임명하지 못한 이후에 작성되었다.

1) 사무관 I (진출소서 2018. 1. 18.)

위 문서에 대하여 당시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 사무관 I는 김종덕 장관 지시로 작성했다고 하며 "유능한 민간인이 문화원 원장에 진출 할수록 해라 라는 취지의 지시가 당시 있었고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홍보, 마케팅 분야 경험자들이 많이 나갈 필요 있다는 장관 지시를 보고 라인을 거쳐 전달 받았습니다." 라고 하며 붙임 문서 개방형 고위공무원 보수 책정 현황에 대하여 "보수가 걱정된 것인지, 민간에게 채용 문턱이 높은 것은 아닌지, 직급 형태 등을 검토했던 자료"라고 하며 뉴욕, 프랑스가 특별히 검토된 이유에 대하여 "9개 고공단 지위 개방형이 지원할 수 있는 9개 문화원중 상징적으로 뉴욕, 프랑스 문화원이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것이 당시 청와

대, 장관 지시였습니다.”라고 하고 당시, 뉴욕문화원장 A, 이OO 후보 관련 소문에 대하여 “당시, 귀동냥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뉴욕, 프랑스 문화원장 선발기준 검토에 대하여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민간인을 뽑아보다 했지, 다른 의도 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2) 김OO (진술조서 2017. 12. 6.)

당시 운영지원과장 김OO은 위 문서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의 업무 범위 중에 해외 문화원 관련 부분도 있는데, 공무원 응모 관련 부분의 경우 공무원 인사, 추천, 등의 업무가 있으므로 운영지원과도 논의에 참여했었습니다.” 라고 하며 “김종덕 장관이 ‘해외 문화원장은 공무원보다 현장 전문가로 충원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고, ‘특히, 뉴욕, 프랑스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가 필요하다,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렇게 하면 공무원이 지원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는 공무원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김종덕 장관은 당시 확고하게 청와대 지시라고 했었고, 해외문화홍보 분야이기 때문에 마케팅, 홍보 전문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나) 재외 문화원장 선발제도 개선 회의 결과 (2015. 3. 17./ 해외문화홍보원)

2015년 3월 17일 외교부 양자회의실에서에서 외교부, 인사혁신처, 행자부, 문체부 담당자들이 모여 ‘재외 문화원장 등 선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회의를 하였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기재 하였다.

외교부는 어학검증 면제요건 중 ‘외국기관’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 부분에 대하여 ‘어학 면제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며 현, 규정을 범위를 넓히면 가능 하고, 단,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등은 검정외국어 사용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고, 관련 분야에 ‘마케팅’을 포함 부분에 대하여 이미 ‘마케팅 경력’도 인정해왔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사혁신처는 고공단 역량평가 사전지원 강화 및 통과기준 완화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사전 준비지원기간을 1일에서 3~5일 늘리는 방안은 검토 가능 이라고 하였고, 가칭 ‘민간개방수당’ 가산금(월1천불 이상)신설에 대하여 현재, 기본 연봉과 재외근무수당 등을 더하면 1.5~2억 수준으로 처우가 취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당 보다는 연봉 협

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주무부처(문체부) 추천 민간심사위원회 2인 이상을 포함시키자는 안에 대하여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협의 등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개방형 문화원장에 보좌 공무원(5급) 직위 신설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문체부 주재관 정원 내에서 조정한다면 검토 가능 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1) I 사무관(진술조서 2018. 1. 18.)은 부처 간 회의는 한번이었다고 하고 이후는 유선으로 협의 했다고 하며 김OO(진술조서 2017. 12. 6.)도 처음이자 마지막 회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고공단 문화원장 제도개선 관련 현안 보고(2015. 4. 16./해외문화홍보원) 및 재외 문화원장 선발 관련 현안 보고(2015. 5. 15./해외문화홍보원) 문서는 뉴욕 문화원장 직위 3차 재공고('15.6.16) 전에 작성되었다. 주 내용은 뉴욕한국문화원장에 대한 직급을 고공단 가급으로 상향을 하고, 기본급 인상, 해외기업 1년 6개월 근무시 어학검증 면제, 관련 분야 경력에 '홍보·마케팅' 등 포함 되어 있다. 또한, '뉴욕, 프랑스문화원장 검토내용에는 '뉴욕과 파리는 세계 문화예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양대 도시로서, 창의성· 전문성· 홍보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민간 전문가를 파견하여 재외 문화원의 역량과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라고 기재되어있다.

#### (다) 뉴욕문화원장 후보자 역량평가 면제 협의 (2015. 7. 2./해외문화홍보원)

위 문서에는 뉴욕문화원장은 외교부에서 선발, 고공단 역량 평가는 인사혁신처에서 진행한다고 하며, 해당 후보자(오OO)는 수년간의 해외법인장 경험을 통해 홍보활동 및 문화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 따라 '역량평가 면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인사혁신처예규 1호, 2014.11.19.)에는 평가면제 항목 중 면제 협의 대상에 '문화예술·의료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기제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소속 장관이 그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는 2006년부터 2017년말까지 총 840회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대상자 5,029명 중 1,092명이 통과하지 못하여 미통과율은 21%이라고 밝히고 있다.

## 1) 역량평가 6가지 항목 (인사혁신처예규 1호, 2014.11.19.)

역량	내용
문제인식	정보의 파악 및 분석을 통해 문제를 적시에 감지·확인하고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분석하여 문제의 핵심을 규명
전략적 사고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대안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추진방안을 확정
성과지향	주어진 업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목표달성과정에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
변화관리	환경 변화의 방향과 흐름을 이해하고, 개인 및 조직이 변화상황에 적절하게 적응 및 대응하도록 조치
고객만족	업무와 관련된 상대방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노력
조정·통합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및 갈등상황을 파악하고 균형적 시각에서 판단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

역량별 평가등급은 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4.5 이상), 우수, 보통(3.5미만 2.5이상), 미흡, 매우미흡 등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평가대상자의 각 역량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보통'등급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역량평가를 통과 한다.

- 2) 김OO(진술조서 2017. 12. 6.)은 '역량평가'가 면제된 문화원장 사례에 대하여 공무원들은 다 본다고 하며 "면제된 사례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I 사무관(진술조서 2018. 1. 18.)은 "이미 3월 전부터 논의에 있었던 것이고 제도 활용이어서 특별하다는 생각은 안했다"라고 진술 하였다. 한편 사무관 H(진술조서 2017. 11. 16.)는 "고위공무원단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 과정이 있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역량평가 면제가 가능한 규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이 면제를 추진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오OO의 경우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3) 배OO(진술청취 2018. 5. 14.)는 오OO 뉴욕문화원장 '역량평가' 면제에 관련하여 "외교부가 평가 면제 요청을 하였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 했습니다."라고 하고 "당시 외교부가 문화원장 채용 업무를 진행하여 문체부에서 연락 온 기억은 없었고, 특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절차에 따라 처리했던 것이라 진술한 바 있다"라고 하였다.

4) 오OO(진술조서 2018. 1. 16.)는 뉴욕 문화원장 응모 경위에 대하여 추천인의 신분을 밝히기 어렵다며 “현역이고 제일기획 후배들이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차모, 송모씨 등과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제안을 먼저 했지만 미국 주재원 출신이고 현직에 있고 해서 응모를 하지 않고 저에게 이러한 자리가 있다고 후배들이 추천한 것 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응모 과정에서 심사절차를 안내 받았을 때, ‘역량평가’ 항목에 대하여 “당시 듣지 못했었습니다.”라고 진술 하였다. 오OO는 같은 제일기획 출신인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현재 구속중)이나 OOO에 대하여 “송성각 원장과는 제일기획 근무 당시 인사나 상견례 등을 한 적도 없는 분입니다.”라고 하고 “국내에서 광고관련 일을 했다면 스친 인연이라고 있겠지만 OOO은 그런 인연도 없었던 사람입니다.”라고 진술 하였다.

오OO(진술서 2017. 12. 14.)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현재 구속중)은 뉴욕으로 부임하기 며칠 전에 처음 만났고, 2015년 9월 대통령 순방행사 사전 답사 때, 2016년 2월 서울에서 재외 문화원장 회의때 만남바 있다고 가지재 하였다. 또한, 송성각은 북미 문화원장회의(2016. 7. 28.~8. 2. LA)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 2016년 9월 ‘콘진’이 추진한 뉴욕 Concept Korea 행사에서 만났었다고 기재하였다.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OOO(2심 재판 중)이 뉴욕한국문화원을 방문한 사실에 관하여 오OO(진술서 2018. 2. 27.)는 만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 요청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고 뉴욕한국문화원에서 플레이그라운드를 지원하거나 계약한 바 없다고 기재하였다.

한편 뉴욕한국문화원 전시담당 직원 OOO(진술서 2018. 2. 23.)은 “OOO이라는 사람은 2015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원 방문 전에 행사 총 감독으로 와서 문화원 행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 (라) 뉴욕 한국문화원 전시 행사 ‘한국 전통문화의 재발견’

2015. 9. 28. ~30. 기간에 뉴욕 한국문화원 건물 1층 복도 및 6층 한국문화원 전시실에서 한국 문화관광 콘텐츠, 한식홍보 영상, 한복, 한식 전시 및 최신 미디어 인터랙티브 체험, K-culture 서포터즈 발대식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총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행사였다.

가) 사무관 I는(진술조서2018. 1. 18.) 2015년 9월 업체 선정과정에 대하여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면서 “2015년 9월 초, 행사 임박 2-3주 전이었습니다. 순방행사 기획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문체비서관 주재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 갔었는데 거기에 000, 디자인O 업체 관계자가 이미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자체는 000이 한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행사가 임박했기 때문 이런 식의 방향을 기획 하니 해문에서 지원 해달라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예산은 총 12억이었습니다. 해문이 8억, 뉴욕문화원이 4억 지원되었습니다. 예산 과목이 달라서 그런 것인데, 뉴욕문화원 4억 부분도 해문이 지출한 것입니다.” 라고 하며 “이 행사는 청와대가 결정한 것이라 해문은 손발 역할만 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000는 위 사안에 대하여 2018. 1. 16. 진술조서에서 8백, 혹은 8천만원을 송금하였다고 했으나 2018. 2. 27. 진술서에서는 “(주)디자인 000000에 해외문화홍보원의 요청으로 385,696,921원을 직접 지급했으며, 뉴욕한국문화원은 기획, 집행, 업체 선정 등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기재하였다.

#### (마) 2016년 4월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취소

000는 2016년 4월 경 조00으로부터 ‘신청인의 문제작’ 등이 포함된 ‘또 다른 한국전쟁’ 최종 작품 리스트 보고를 받고, 신청인의 작품을 비롯한 작품이 문화원 전시에 적합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뉴욕 총영사(김00) 및 부총영사(권00)에 보고·협의하였다. 이후 동년 4월 25일(뉴욕 시간) ‘또 다른 한국전쟁’의 전시 취소를 000을 통하여 알재단 000에게 알렸다. 000는 문화원 운영에 관하여 전결권을 갖고 있음에도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외교라인을 개입시켰을 뿐 아니라 2017년 1월 5일 JTBC 보도에 대한 해명(2017. 1. 6.)에서 ‘외교부 라인의 개입은 없었다’라는 허위 보고를 하여 문체부의 공신력을 훼손하였다.<sup>41)</sup> 000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바가 없

41) 이와 관련하여 추00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의제기함(18. 11. 5.). 만약 문화원이나 총영사관이 블랙리스트를 조직적·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면, 당초에 공모작으로 선정하지도 않았을 것임. 문체부나 해외문화홍보원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관련 블랙리스트에 있는 노순택 작가가 응모 때부터 계속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당선시키고 전시 준비를 계속 진행해 왔다는 점은, 이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안(검열에 의한 노순택 작가 또는 작품 배제)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임. 보고서 내용대로, 전시 등 문화원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 및 책임은 문화원장에게 있으나, 문화원은 직제상 재외공관에 소속된 기관으로, 운영 및 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인데,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만 특별한 외교라인 개입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지나침. 특히, 문화원 사업의 목적인 양국 간 교류 증진 및 한국문화의 우수성 홍보인데, 오히려 한미 관계

다. 『2017시1 전시기획 또 다른 한국전쟁 취소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2018. 4. 13.

(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5. 7.13.)<sup>42)</sup>에 따라 인사 혁신처는 주재관(문화원장) 개방형직위 중 2개(뉴욕 및 프랑스) 직위에 대해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 검토하는 안에 대하여 외교부는 문체부에게 동년 7. 31까지 회신을 요청<sup>43)</sup> 하였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수용 곤란’이라는 검토의견을 송부하였다.<sup>44)</sup> 수용곤란의 사유는 ① 업무공백(우수 민간 전문가가 영입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도 응시를 못하게 되어 업무 공백 우려), ② 업무의 공공성(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부의 정책기조와 국정홍보를 일관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직위), ③ 형평성문제(이미 외교부 소속 306개 주재관 중 고공단 문화원장 8개만 개방형으로 운영) 등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발휘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사) 프랑스 문화원장 선발 관련 현황(2015. 10. 22. 해외문화홍보원)

동년 7월 1일 공고 이후 서류 전형 및 8월 10일 및 8월 11일 결과 발표 예정인 프랑스 문화원장 후보자 2인에 대하여 문체부는 ‘홍보·마케팅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외교부에 최종 합격자 선발 보류 요청을 하면서 외교부에 건의사항으로 ① 현 2명의 후보자에 대한 선발과정 중단, ② 공모절차 없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민간인 스카우트제’를 통한 홍보·마케팅 전문가 선발 등이 기재되어 있다.

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되면 이 부분에 대한 재외공관장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고 생각함. 결국, 알재단은 예상과는 달리 대폭 늘어난 예산에 부담이 있었고, 문화원은 예술·사상 검열 차원이 아니라 한미 관계에 부정적 이슈가 될만한 작품이 포함되었다는 외교·정무적 판단 하에 양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추후 보완 전시하기로 한 것임. 물론 문제 작품을 제외한 전시 검토 등을 통해 참여 작가들의 전시 취소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블랙리스트 관리 및 실행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조사보고서의 내용도 개연성에 대한 의혹제기일 뿐 직접적인 증거는 없음. 따라서 동 사안은 블랙리스트 백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42) 대통령령 제26401호, 일부개정 2015.7.13.

43) 인사기획관-9121(15. 7. 30.)

44) 기획운영과-3280(15. 8. 5.)

## (아) 프랑스 문화원장 선발 진행 현황(2015. 12. 8. 문체부 기획운영과)

프랑스 문화원장 민간인 후보자를 11. 16,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추천하여 사전 협의 요청으로 외교부, 인사혁신처와 후보자 추천 관련 절차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서류전형(11. 26.), 역량평가(12.15.), 및 인사심사 등이었다.

- 1) 박OO(진술서 2017. 12. 12.)은 2015년 10월 말경 대흥기획(롯데계열 광고기획사) 한OO 상무로부터 문체부가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후보를 찾는다며 관심이 있으면 이력서를 보내 달라고 하여 이력서를 보낸 후 동년 11월 중순경 박OO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아 서울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한 시간여 동안 광고 경력, 불어구사 능력, 마케팅 및 홍보 전문성에 대하여 질의응답이 있었고 고위공무원 역량 평가 시험 및 향후 선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고 기재 하였다. 또한 당시 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이 11월 하순 만남을 제의 해와 분당 소재 카페에서 주로 자신의 경력과 근황을 질의 했다고 하며 문화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면담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으나 광고인 출신의 인사에게 저의 역량을 재확인 시키려는 의도로 이해했다며 이때 송성각을 처음 보았다고 기재하였다.

이후 12월 상순 다시 박OO으로부터 서류 검증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과 '역량평가시험'을 잘 치루기를 바란다는 대화가 있었고 합격 통보 및 교육 후 2016년 1월 18일 부임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박OO(녹취록 2017. 12. 18.)은 김종덕 장관의 추천이었냐는 물음에 “한OO 상무가 보낸준 이메일이 송성각 이메일로 기억한다며 오히려 송성각 쪽에서 먼저 서치했던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OOO, 김종덕 전 장관, 송성각 씨 제가 진술서에도 썼고 오늘 질의에도 답한 대로 그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 지인 관계도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제가 재확인” 한다고 하였다.

- 2) 김OO(진술조서 2017. 12. 6.)은 해외 문화원장 후보 스크린을 콘진원장이 했었던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이 인터뷰를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라며 “절차적으로 이상하고 이해가 안됩니다. 공식이든지 비공식이든지 그런 인터뷰는 석연치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 (자) 2016년 K-CON ‘한식체험전시’ 운영 (2016. 6. 초.) 관련

박OO(녹취록 2017. 12. 18.)은 미르재단과의 연락 관계에 대하여 “우리 정상 6월 초 방문 때 그전에 서로 한두 달 전부터 서로 이메일하고, 행사 내용 체크하고, 동선 보고, 부스 레이아웃 보고, 우리 의견 있으면 개선하고, 동선 관련해서 통보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하고 그거 외에 뭐가 있었나? 그러니까 저는 미르재단 관련해서 별다른 특이 사안에 대한 그런 걸... 물론 당시 전임 대사(모철민)께서 뭘 좀 신경 쓰는 듯한 눈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라고 하며 “그 한식행사에 대해서. 그래서 ‘박 원장, 잘 좀 챙겨봐 주세요.’라는 말씀이 한두 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챙겼죠.” 라고 하고 케이콘 이후에는 어떠했냐는 질문에 “이후에는 별 게 없었고요.” 라고 하였다.

## (차) 재외 공관 한국문화원장 처우 현황(외교부 2018. 5. 17.)

## □ 재외공관 한국문화원장 급여총액 및 주택임차료

(기간: '17.1월-12월)

연번	공관	원장	직급	급여 총액*	주택 임차료**
1	프랑스	박OO	고위공무원 (나)등급	158,968,290원	월 4,477미불
2	뉴욕	오OO	고위공무원 (가)등급	179,066,520원	월 4,707미불
3	LA	김OO	고위공무원 (나)등급	167,299,220원	월 4,100미불
4	영국	A	고위공무원 (나)등급	163,923,750원	월 4,734미불
5	러시아	김OO	고위공무원 (나)등급	175,921,110원	월 5,500미불
6	독일	권OO	고위공무원 (나)등급	167,551,940원	월 3,956미불
7	워싱턴	박OO	고위공무원 (나)등급	161,746,430원	월 3,850미불
8	벨기에 유럽연합	최OO	서기관	192,538,020원	월 3,334미불

주1) 급여(연봉, 수당 등)는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8594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970호)에 따라 지급

주2) 급여총액은 '17.1~12.31까지 지급한 급여(원화 상당액) 총액(세전)

주3) 임차료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공관이 직접 지급

주4) 연번 8, 급여 총액에는 약 7천4백만원의 자녀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음.

## 라. 해외 한국영화제에서 특정 블랙리스트 영화 배제 사건

### (1) 이명박 청와대 문서에서 나타난 특정 블랙리스트 영화

연번	영화	영화 평가	문서 출처
1	괴물(2006)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 국민의식 좌경화	
2	공동경비구역JSA (2000)	북한을 동지로 묘사 국민의식 좌경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청와대 2008.8.
3	효자동이발사 (2004)	국가권력의 몰인정성을 비판 국민의식 좌경화	

이명박 정부 2008~2012년, 해외 한국영화제 블랙리스트 영화 상영 현황<sup>45)</sup> 중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청와대 2008. 8.)’에서 언급된 영화 괴물, 공동경비구역JSA, 효자동 이발사의 경우, 〈괴물〉은 2008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한국영화제, 파리 한국영화축제, 요르단 한국영화 주간, 2009년 런던 한국영화제 2012년 독일 튀빙엔 한국영화 주간 등에서 〈공동경비구역JSA〉는 2008년 투르크메니스탄 한국영화제, 2010년 호주 한국영화제, 2012년 독일 튀빙엔 한국영화 주간 등에서 상영되었고 〈효자동 이발사〉는 상영된 적이 없다.

### (2) 문체부, BH에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 예정 (국정원 2014. 3. 21.)

#### < 해외 문화원 >

- 1) 문제성 단체 참여 및 이념갈등 유발 소재 행사 주최·후원 사양, 문화원 주최 및 후원영화 선정시 문제성 영화 배제 조치
- 2) 영화 선정시 개별문화원에서 영진위에 직접 요청하지 않고 해외 문화홍보원에서 일괄 점검토록 모니터링 체제 정비. 끝.

45) 2007~2017년 재외 공관 한국영화제 상영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18. 4.

위 문서는 분야별 대응 전략으로 ▷문화예술 일반 ▷도서 및 문학 ▷영화 ▷해외 문화원 등 4개 부분을 다루고 있다. 해외 한국문화원 주최 및 후원영화 선정시 문제성 영화 배제 조치 관련하여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일괄 점검토록 한다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와대 문체비서관실 행정관 A(녹취록 2017. 12. 15.)<sup>46)</sup>은 위 문서에 대하여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외문화원 이렇게까지 해서 보고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문체부에서 이런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보고서는 두어 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체비서관실 쪽으로.”라고 하였다. 한편 당시 문체비서관실 행정관 신OO(진술조서 2018. 4. 5.)은 “관련 해외문화원 담당행정관(A)에게 전달될 수는 있으나 제 소관이 아니기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p><b>문체부, 당에 건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 예정</b></p> <p>2014. 3. 21</p> <p>1. 문체부는 유년층, 일반 지식에 따라 문화예술계의 이념성을 지양하고 불명시된 윤리, 개인/단체적 이익, 지필과 이념, 권력적 원형과 지위를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건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을 마련, 문화대(보수수석)에 보고할 예정</p> <p>2. 關係 內容</p> <p>가. 문체부(장관/차관)에서는</p> <p>1) 건진은 이념성이 2013.12.10 일 종교사관에게 “문화예술, 미디어 부문에 소관”했다. 심지어 공적 내부에도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 있으나 임시로 잘 살펴줘야 한다는 요청도 언급을 한바 있어</p> <p>2) 불온권, 권보의일 대표도 상행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카지노 발표 연기 행정 집행자 국회를 방문한 조형제 차관에게 “문화예술계에 소관”이 적절하 “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p> <p>• [차관] 구태를 사해물 제자하면 조지하원라고 하겠으나 통우의 새로운 “그만 여론이 일어난 것으로 언급</p> <p>3) 문체부가 이념문제에 대해 간헐한 관심을 갖고 소실할 인물 관리 기준, 지원, 도입할 사람, 지원 중단 등 비핵심성과 시스템 개선할 해 나가고 있을지도 불구.</p> <p>4) 최양에서는 아직도 “학연”과 문체부가 이념문제에 대처할 수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건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제외, 대응전략을 마련, 문화대(보수수석)에 보고하는 한편</p>	<p>3) 앞으로 일관적 요소를 있는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문체부가 어떠한 대책하고 있는지를, 건진, 집행함으로써 불명확한 의혹을 불이해한다는 목표하여 필요 문체가 조성 및 공급에 확산에 노력할 방침</p> <p>나. 이와 관련, 조형제 차관은</p> <p>1) 정부가 이념문제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안전 및 식민단체 등의 반발이 탄압이 될수 있고 대통령-정부 부단으로 의외로 소리가 많아</p> <p>2) 위의 대응전략 마련시에도 주무 과장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직계 친인척 보고서를 골고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의 대응 방안이 따라 지일하고 전략적으로 이념문제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언급</p> <p>※ 용임 : 건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p> <p>가. 기본 방향</p> <p>1) 문화예술계 이념성 지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경우, 극단적, 세계관치를 취하고 문화예술계, 정치권을, 극단적인, 경제, 문화융성의 기초 확산</li> </ul> <p>2) 불명시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민간보조금 지원 저지에 관한 문화특혜지원, 관련, 단체, 개인 및, 정부내 반정부, 식민단체 등의 불이한 단체, 개인, 배제</li> <li>- 또한, 주요 인사가 재출세, 구성한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 제한</li> </ul>
---	---

(나) 당시 국제문화과장 박OO<sup>47)</sup>(진술조서 2017. 12. 5.)은 위 문서에 대하여 “이렇게 있었나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실입니다.”라고 하고 후임 국제문화과장 임OO<sup>48)</sup>(진술조서 2018. 2. 1.)은 “잘 모르겠습니다. 2014년 3월이면 당시 국제문화

46) 2013. 3. 30.부터 2014. 10. 19. 까지 청와대 문체비서관실 행정관

47) 박OO 국제문화과장 재임 기간, 2013. 5. 20.부터 2014. 10.

48) 임OO 국제문화과장 재임 기간, 2014. 11.부터 2015. 11. 경까지 이며 이전 부임지는 2013. 10

과에서 관련 업무를 했을 듯 하고, 저는 당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일할 때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며 그것을 전파한 적도 없습니다. 당시 본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받았다면 과장인 저도 들었을 텐데, 제가 하급자들이나 문화원에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실행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2014. 10. 23. 국제문화과 업무 인계·인수서에는 ‘해외문화홍보원 지도 감독, 재외문화원 운영 및 특화 사업 기획, 조정, 재외 한국문화원 평가, 재외 한국문화원 신설, 문화홍보관 선발’ 등의 업무 분장이 기재되어 있다.

- (다) 김OO<sup>49)</sup>(녹취록 2018. 1. 18.) 현 LA 한국문화원장은 위 문서 내용에 대하여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홍원에서는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하기에 ‘김OO 원장의 경우(블랙리스트 실행에 밀접한 관련자임으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글쎄요. 16년도에는 박찬욱도 한 번 또 전화를 했는데.”라고 답하고 ‘A, 박OO, 오OO, 김OO, 권OO 원장의 경우는 굳이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연락을 할 필요가 없는 원장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라는 질문에 “그 양반들이 지난번에 했던 양반들이니까 지난 정부에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코드가 맞다고 하면 코드가 맞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사실인데, - 중략 - 그렇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그렇게까지 뭐를 알고서 나서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 (라) 노OO(진술조서 2018. 2. 2.)은 위 문서에 대하여 “2014년 11월 말부터 2015년 8월 말까지 뉴욕문화원장에 있었는데, 들은 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마) 박OO<sup>50)</sup>(진술조서 2018. 4. 19.) 전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위 문서에 대하여 “2014년 경 저작권정책관 무렵, 실국장회의 석상에서 문화원에서 영화 상영때문에 청와대로 부터 싫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라고 하며 “2015년 해외 영화제 할 때 청와대가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이전에 문화원장들에게 공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장

---

경부터 2014. 10까지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 과장이었다. 임OO은 국제문화 과장 재임 시절, 2017직공4(재)예술경영지원센터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결과보고서] 관련, 2015 우수 프로그램 문화원순회사업 배제 업무 관련하여 실무직원들을 오OO과 연결 시켰으며 극단 ‘마실’ 등 블랙리스트 실행 책임이 있다.

49) A 후임으로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2014. 10. 20.부터 2016. 1. 28. 까지 역임.

50) 박OO 주요 경력, 2012년 3월 미디어국장, 2014년 1월 저작권정책관, 2014년 10월 10일 경 콘텐츠정책관 2015년 3월 31일 해외문화홍보원장, 2016년 4월 경 문화예술정책실장, 2016년 11월 23일 국민소통실장

들 대부분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2016년 경 언론 보도를 보고 저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원장으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3) 파리 한국영화제 특정 영화 배제 사건

(가) 전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이OO 이메일<sup>51)</sup> (2015. 2. 23.)



이OO는 위 이메일을 프랑스 한국문화원 직원, 해외문화홍보원 직원, 예술경영지원센  
터 직원, 한불 상호교류의해 영화부문 전문위원, 최OO 예술감독 등 8명에게 보냈다.

1) 박OO(진술조서 2017. 12. 5.)은 문제 영화 상영 배제에 관하여 “변호인, 관상, 남  
영동으로 기억하는데, CJ가 찍혔고, ‘관상’은 아름다운재단 기부가 문제된다고 이  
야기 들었습니다. A 행정관이 2014년 4-6월, 경 재외 한국영화제 현황 파악을 요청  
했었습니다. 현지 프로그래머들이 이미 기자회견 등으로 계획이 진행중 인데, 이후  
파악을 요청 받은 것입니다. 그때, A 행정관이 변호인을 파리 한국영화제에서 조정

할 수 있겠냐는 문의가 있었고. 당시 이OO 원장에게 연락을 한바있습니다. 이OO 원장에게 조정논의는 어떠했냐고 이후 문의했고 이OO 원장이 ‘현지에서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검열이라는 반발 있어서 힘들다’고 말해서 ‘파리는 힘들다’라고 A 행정관에게 말했습니다. 이후 말들이 많이 나왔나 봅니다. 영화제 오픈 후 확인을 요청해서 이OO 원장에게 문의를 했는데, 이OO 원장은 상영이 안되었다 라고 9월 경 전해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CJ가 필름 안줘서 상영을 못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2) A(진술서 2017. 12. 14.)은 위 박OO 진술 관련하여 “관련 요청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울러 영화 분야는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 3) 이OO(진술서 2018. 2. 11.)는 자신의 이메일에 대하여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박OO 과장으로부터 “상부 지시인데 올해 파리한국영화제에 ‘남영동’을 상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내용으로 전화가 왔음(처음엔 이 한 편이었음), 2014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박OO 과장이 상부의 지시라며 연락이 왔는데 ‘변호인’ ‘관상’ ‘설국열차’ ‘지슬’ 등 작품 수가 늘어났음, 두 전화 모두 구체적 시기는 기억나지 않음. 추론하건대 파리한국영화제가 10월말 시작하니 9월 이전에 연락 왔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2013년 ‘남영동’의 경우 파리한국영화제측에 문의 결과 “아직까지는 올해 상영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응답이 와서 “한국에서 상영하지 말아달라는 지시가 왔다”고 의견을 전달. 나중에 들어보니 추후 논의과정에 프랑스 프로그램머가 “작품성이 별로”라는 평가해서 프로그램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함.”이라고 하고 “2014년의 경우 요청 작품이 늘어나서 무척 곤혹스러웠음. 파리영화제 측에 확인 결과 프로그램에 ‘변호인’이 포함돼 있었는데 상영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프랑스인 프로그램 팀장 등이 강력 반발함. 이에 국제문화과에 이 상황을 전달함.”라고 하며 “파리한국영화제 측이 ‘변호인’ 상영 중단 요청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박 과장에게 전달하자 박 과장이 “무리하게 설득하다가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영화제 측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자”고 해서 제가 “그러면 지원이 끊기지 않느냐?”고 되물었고 박 과장은 “그렇겠죠”라고 말함. 영화제가 처음부터 무척 어렵게 진행 되어온 걸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지원이 끊기면 타격이 클 것이기에 박 과장에게 일단 영화제팀들을 만나서 중재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한 뒤 영화제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 하였고, “이건 명백한 검열 아니냐?” “한국에서 1천만명이 본

영화를 왜 상영 못하게 하느냐?” 등의 항의를 한 것으로 기억남. 홍보담당 프랑스인 팀장이 “상영하면 내년부터 지원이 끊기느냐?”고 묻길래 “그 상황은 내 의지를 떠난 문제”라고 간접적으로 설명. 이에 파리영화제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서 투표로 입장을 정하겠다는 말을 듣고 논의를 종결. 다음날(이틀뒤?) 영화제 사무총장이 전화를 해서 “투표 결과 11대 9로 상영하기로 결정됐다”는 말을 전해 들음.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뒤 국제문화과 박 과장에게 전화 해서 상황을 전달. 그러나 이후 필름 사용권을 놓고 영화제측과 CJ측의 이견이 생겼는데 CJ측이 상영을 반대해서 영화제에서 상영 못했다고 나중에 전달 받음.” 이라고 기재하였다.

- 4) LA 샌디에고 한국영화제(집행위원장 정창화 감독, 2014. 8. 22.~24.<sup>52)</sup>)에서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유일하게 ‘변호인’이 상영되었다.
- 5) 당시 영상콘텐츠과 사무관 이OO(진술조서 2018. 4. 4.)은 위 사안에 대하여 “해외 문화원 한 곳에서 전화가 와서 ‘영화제 행사를 하는데, 상영하면 안 되는 영화가 있다는데 아는바 있냐’는 문의가 와서, 영상콘텐츠과에는 그런 리스트는 없고 정격정이 되면 상영 예정인 영화를 알려 달라고 답한 적은 있습니다. 영상과에서 변호인, 자가당착, 지슬, 다이빙벨 정도는 나갔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경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영상콘텐츠과 사무관 윤OO(진술조서 2017. 9. 22.)은 “문화원에서 영화 상영 시 문제가 되곤 하는데 이는 일부 정보기관이 개입하여서 특정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는데서 발생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영화 관람도 일부 문화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6) 영화진흥위원회 전 사무국장 김OO<sup>53)</sup>(진술조서 2017. 9. 20.) “해외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하는데 예를 들면 송강호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는 틀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사관이나 해외문화원 등 재외공관에서 여는 한국영화제가 많았는데 당시 변호인이 가장 문제가 많았고..”라고 진술 한바 있고 영진위 국제사업부 김OO(진술조서 2017. 9. 11.)은 해외 문화원 한국영화상영에 문제

52) 영화진흥위원회 ‘2014 재외공관 한국영화 상영행사 결과’ 중 샌디에고 한국영화제 기간이 5월로 기재 되어 있는데, 오키이다. 샌디에고 한국영화제 집행위원장 맡은 정창화 감독, 월드코리아 뉴스, 2014. 8. 26

53) 김OO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재임 기간, 2013. 3.부터 2015. 2.

에 대하여 “2013년 말, 2014년 부터였던 같습니다.” 라고 하며 “송강호 작품영화들, 관상, 변호인 등. 그리고 몇 개 더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납니다.” 라고 하며 그렇다면 ‘해외 문화원 영화 상영에서 문제 영화는 어떻게 걸러질까요’ 라는 질문에 “40개 정도 지원이 되는데, 문체부, 영진위가 심사,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그 내용으로 관리, 문체부 산하와 문화원, 홍보원에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박OO가 전화 받았던 것 같은데, 문체부에서 온 것 같았고 조율하여 문화원에 연락했던 것 같다. 관상이 안 된다해서 황당해 더 기억이 있습니다. 남영동, 설국열차 등도 몇 번 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진위 국제사업부장 박OO(진술조서 2018. 4. 13.)는 “2014년도에는 영국문화원에서 개막작 작품 선정이 어려웠다는 후문을 들은 바가 있었고, 송강호씨가 출현하는 영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소식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영화제 등에서 영화인들이나 영화 판매상 등으로 부터 들었는데, 정확하게 누구로 부터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라고 하며 소문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 (4) 박근혜 청와대, 국정원 문서, 국제문화과,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나타난 특정 블랙리스트 영화

1	영화 26년(2012)	공권력, 정부는 탄압의 주체로 대중은 사회적 약자로 왜곡 공권력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함은 물론 그릇된 대북관을 주입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국정원 2013. 3.
2	남영동 1985 (2012)	대북관을 주입	
3	살인의 추억(2003)	공무원·경찰을 부패·무능한	
4	공공의 적(2002)	비리집단으로 묘사, 국민에게 부정적	
5	도가니(2011)	인식을 주입	
6	공동경비구역 JSA (2000)	북한의 군인·첩보원 등을 동지·착한 친구로 묘사, 從北세력을 친근한	〈CJ의 좌편향 문화사업 확장 및 인물 영입 여론〉 제하 BH 보고서
7	베를린(2012)	이미지로 오도	국정원 2013.8.27.
8	설국열차(2013)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사회 저항 운동을 부추김	
9	광해(2012)	노무현 前대통령을 연상토록 하는 등 지난 대선시 문재인 후보를 간접 지원했다는 의혹	
10	변호인(2013)		
11	부러진 화살(2011)	정치편향적 작품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청와대 2014. 5.
12	화려한 휴가(2007)		

문체부 국제문화과에서 프랑스 한국문화원으로 전달한 블랙리스트 한국영화(2015)에는 기존의 영화 ‘변호인’, ‘남영동 1985’, ‘설국열차’ 외에 ‘관상(2013)’, ‘지슬(2012),’ ‘자가당착(2010), ‘다이빙벨(2014) 추가로 포함되어 있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서 해외문화홍보원이 프랑스측의 상영 요청을 거부한 블랙리스트 영화는에는 기존의 영화 ‘변호인’ 외에 ‘그때 그 사람들(2005)’, ‘상계동 올림픽(1988)’,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1981)’,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1995)’ 등 추가로 포함되었다.

#### (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영화가 이명박 정부 시절 상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그때 그 사람들(2005)’은 2008년 파리 한국 영화제 축제(10. 22.~11. 18.)프랑스 루앙, 아고라 한국영화제(11. 18.~11. 25.), 2011년 워싱턴 한국영화 페스티벌(4. 8.~6. 8.) 등에서 상영된 바 있고 ‘화려한 휴가(2007)’는 2008년 뉴욕 한국영화제(8. 22.~8. 31.), 런던 한국영화제(11. 6.~11.15.)에서 ‘도가니(2011)’는 2012년 호주와 프랑스 한국영화제에서 상영된 바 있다.

#### (나) 영화 ‘변호인(2013)’

‘변호인’은 2014~2016년까지 LA 샌디에고 한국영화제(2014)에서 한차례 상영을 제외 하고 이후 해외 한국영화제에서 상영되지 못했고 정부가 바뀌고 2017년 10월 ‘파리 한국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다) ‘지슬(2013)’, ‘부러진 화살(2011)’은 2013년 스위스 한국영화제에서 ‘효자동이발사(2004)’은 2013년 런던 한국영화의 밤(4인 4색전)에서 한차례 상영된 바 있으나, 본격적인 블랙리스트가 시행되던 2014~2016년에는 상영되지 않았다.

‘지슬’ 상영에 대하여 주 스위스 한국 대사관이 반대 했으나 현지 스위스 영화인<sup>54)</sup>들이 영화 상영을 강행하였고, 결국 대사관의 후원 없이 상영되었다고 알려져 있다.<sup>55)</sup>

54) 코린 시그리스트 오부시에르 취리히 필름포디움 대표는 ‘지슬’의 오멸 감독을 당시 스위스에 초청하여 취리히, 베른, 바젤에서 관객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스위스바젤한인회 홈페이지, 프로그래머 임안자의 소개글 2013. 9. 25.

55) 부산국제영화제를 다시 생각한다. 부산일보. 2016. 3. 22.

## (라) 2013년 런던 한국영화제

2013년 제8회 런던한국영화제 1월 기획(안)에는 Korea in hollywood 프로그램(11. 7 ~ 17.) 상영 후보작에 ‘설국열차’, ‘스토커’, ‘라스트 스탠드’ 등이 있었고 2013 New Tiles로 베를린(2013)등이 상영후보작이었다. 이후 9월 수정 기획(안)에는 VIP 초청 특별시사회(11. 6)가 예정되었으나 영화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 2013 New Tiles에 ‘베를린’이 상영후보작에서 빠졌다.

- 1) 당시 문체부 1차관 조현재는 특검(진술조서 2016. 12. 18.)에서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 모철민이 대통령 2013년 영국방문 행사 관련한 문화원의 한국영화 상영에 대하여 추천을 요청 해서 ‘설국열차’가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니 영국 취향에 맞지 않냐면서 추천을 하였는데, 모철민 ‘왜 그렇게 감이 없느냐? 그게 어디에서 만든 건줄 아느냐?’라며 ‘CJ에서 만든 것이다.’라는 진술을 한바가 있다. 이에 대해 모철민은 특검(제3회 진술조서 2017. 1. 25.)에서 당시 런던문화원이 문체부 소속 기관이라 교문수석실에서도 관여 했다고 하며 당시 (영화제)개막식 행사 TF에서 상영작 문제를 논의했는데, 청와대의 전반적인 분위기, 즉 CJ는 기피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sup>56)</sup>
- 2) 김OO 전 영국 한국문화원장(진술청취 2018. 5. 16.)은 “대통령 순방 행사가 진행되면서 본부 계획을 따르게 되었고, 영화 변경 관련하여 영상콘텐츠과와 상의 한바 있다”고 하였다.
- 3) 박OO 전 영상콘텐츠산업과장(진술청취 2018. 5. 16.)은 “대통령 순방행사임으로 청와대 비서관 지시로 영국 문화원과 연락을 하였으나 청와대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고 “영화 ‘관상’은 대통령이 당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도 만나고 사진을 찍은 바도 있는데, 왜 상영을 못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며, 숨바꼭질 등의 영화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주기는 하였으나 이 영화를 꼭 선택해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56) 이와 관련하여 A행정관은 동 내용은 주영한국문화원에서의 실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진술인이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에 따른 내용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18. 11. 12.). 당시 주영한국문화원에서는 영화제 초기 기획단계에서 <설국열차>를 개막작으로 검토하였지만(2013년 7월경) 해외배급사(와인스타인)의 비협조와 봉준호 감독의 해외배급사에 대한 불만 제기 및 국제영화제 불참 표명(8월말~9월초)으로 섭외 단계에서 개막작에서 제외됨. 이후 주영한국문화원에서 전년도 영화 흥행순위를 참고하여 여러 영화를 놓고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32세의 젊은 허정 감독의 데뷔작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500만 명 이상 관람한 흥행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숨바꼭질>이라는 작품을 개막작으로 최종 선택한 것임.

- 4) ‘관상’에 대한 배제 관련 진술은 앞서 박OO, 윤OO, 김OO, 김OO의 진술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 5) 당시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OO은 영화진흥위 직원들의 진술에 대하여 “당시에는 몰랐구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있습니다. 감독이 수익 절반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니겠냐는 소문을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라고 진술 하였다.
- 6) 2013년 8월 27일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문서 『CJ의 좌편향 문화사업 확장 및 인물 영입 여론’ 제하 BH 보고서』에는 ‘베를린’은 북한의 군인·첩보원 등을 동지·착한 친구로 묘사, 從北세력을 친근한 이미지로 오도 하고 ‘설국열차’는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사회 저항 운동을 부추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8년 이후 해외 한국영화제에서 전혀 상영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영화

‘남영동1985(2012)’, ‘26년(2012)’ 및 ‘다이빙벨(2014)’, ‘자가당착(2015)’, ‘상계동 올림픽(1988)’,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1981)’ 등은 해외 한국영화제 등에서 상영되지 않았다.

(바) 2013~2016년 동안 전혀 상영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영화

‘그때 그 사람들(2005)’, ‘화려한 휴가(2007)’, ‘도가니(2011)’는 2013년 이전에는 상영된 적이 있으나 이후는 상영되지 않았다.

(사) 최근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블랙리스트 한국 영화

‘자가당착’은 2011년 베를린 국제영화제(2. 2.~20.) 및 홍콩 국제영화제(3. 20. ~4. 5.)에서 ‘상계동 올림픽’은 2011년 과나후아토 국제 영화제(7. 22.~31.)에서 ‘남영동 1985’은 2013년 에든버러 국제영화제(6. 19. ~ 30.)에서 ‘지슬’은 2013년 선댄스 국제영화제(1. 17~27)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 하였으며 ‘변호인’은 2014년 트란실바니아 국제영화제(6. 27 ~ 7. 14.)에서 ‘그때 그사람들’은 2015년 뉴욕아시아영화제(6. 26.~ 7. 11.)에서 초청 상영된 바 있다.

(아) 블랙리스트 영화중 ‘남영동1985(2012)’, ‘26년(2012)’ 및 ‘다이빙벨(2014)’, ‘자가당착(2015)’, ‘상계동 올림픽(1988)’,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1981)’,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1995)’, ‘그때 그 사람들(2005)’, ‘화려한 휴가(2007)’, ‘도가니(2011)’ 등 박근혜 정부 동안 상영되지 않았던 영화를 제외한 ‘블랙리스트 영화’ 상영 통계.

#### 1) 2013년 한국영화 해외상영 행사 중 블랙리스트 영화 상영 결과

영화	상영 공관	계
공동경비구역JSA(2000)	<b>주미 워싱턴한국문화원</b>	1
효자동이발사(2004)	주영한국대사관 한국영화의밤 배우 4인4색전	1
괴물(2006)	주 터키, 캐나다 한국대사관	2
공공의적(2002)	<b>주영 한국문화원</b> , 런던한국영화제	1
살인의추억(2003)	주터키 한국대사관	1
광해(2012)	<b>주필리핀, 인도네시아, 벨기에유럽연합, 이탈리아, 호주 한국문화원</b> , 주 체코, 스위스, 캐나다, 이란, 이스라엘 대사관,	11
베를린(2012)	<b>주뉴욕, 호주한국문화원</b> , 몽골, 체코, 영국한국대사관	5
설국열차(2013)		
관상(2013)	<b>주베트남한국문화원</b> , 애틀란타총영사관	2
변호인(2013)		
부러진 화살(2011)	스위스 한국대사관	1
지슬(2013)	스위스 한국대사관	1
효자동 이발사(2004)		

#### 2) 2014년 한국영화 해외상영 행사개최 결과

영화	상영 공관	계
공동경비구역JSA(2000)	주 케냐대사관	1
효자동이발사(2004)		
괴물(2006)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이탈리아, 주캄보디아 대사관	3
공공의적(2002)		
살인의추억(2003)	<b>주스페인 한국문화원</b>	1
광해(2012)	주캄보디아, 케냐 대사관	2

영화	상영 공간	계
베를린(2012)	주헝가리문화원, 주아르헨티나, 케냐 대사관	3
설국열차(2013)	주스페인, 인도네시아, 프랑스 한국문화원, 주 체코, 이탈리아 대사관,	5
관상(2013)	LA, 헝가리 한국문화원, 주 멕시코, 체코 대사관	4
번호인(2013)	LA 한국 문화원	1
부러진 화살(2011)		
지슬(2013)		

## 3) 2015년 한국영화 해외상영 행사개최 결과

영화	상영 공간	계
공동경비구역JSA(2000)		
효자동이발사(2004)		
괴물(2006)		
공공의적(2002)		
살인의추억(2003)	주영국 한국문화원	1
광해(2012)	주영국 한국문화원	1
베를린(2012)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1
설국열차(2013)	주폴란드한국문화원, 주시안 총영사관	2
관상(2013)	주시드니,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주터키, 루마니아, 에콰도르 대사관	5
번호인(2013)		
부러진 화살(2011)		
지슬(2013)		

## 4) 2016년 한국영화 해외상영 행사개최 결과

영화	상영 공간	계
공동경비구역JSA(2000)	주에콰도르 대사관	1
효자동이발사(2004)		
괴물(2006)		
공공의적(2002)		
살인의추억(2003)		1
광해(2012)	주상파울로, 이탈리아 대사관	2
베를린(2012)	주이탈리아 대사관	1

영화	상영 공간	계
설국열차(2013)	주코티부아르,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2
관상(2013)	주볼리비아, 캄보디아 대사관	2
변호인(2013)		
부러진 화살(2011)		
지슬(2013)		

## 제4절 | 결론

### 1. 진상규명 사실

#### 가.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9,473인 블랙리스트 적용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2018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가 입수한 <9,473인 블랙리스트> 60쪽 문서는 ①2015년 5월 6~7일 경 제작된 문서로 ②해외 문화홍보원으로서의 입수 과정과 보고 및 ③실행과정과 ④문서 출처 등이 확인되었으며 ⑤문화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배제에 이용되었다는 것이 인정된다.

① 000가 보관 하고 있던 <9,473인 블랙리스트> 문서는 2015년 6월 경, V가 해외문 화홍보원 방문시 표지 사진을 사진으로 찍었고 그 사진을 2016년 10월 경 한국일 보에 제보하여 기사화된 바 있다. 2018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가 000로부터 입 수한 <9,473인 블랙리스트> 60쪽 문서 첫 표지가 V 표지 사진과 일치하고 표지이 외 모든 페이지에 출력 날짜 2015년 5월 6~7일 등이 표기되어 당시에 존재하고 있 었음이 확인된다.

② 박00은 블랙리스트 입수 과정에서 박00과 상의하였고 조00에게 오00로부터 ‘배제 리스트’를 받아 올 것을 지시 하였다라는 것이 박00의 진술과 조00, 000 의 진술로 확인된다. 조00는 일관되게 박00, 박00, 하00에게 리스트를 보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박00, 박00, 하00 등은 <9,473인 블랙리스트> 입수에 관하여 보고 받지 않았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본인들의 진술에서 ‘리스 트를 통해 대조 작업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블랙리스트 보고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 ③ 조OO와 OOO의 진술에 의하면 <9,473인 블랙리스트>로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신청자들을 대조하여 <배제 리스트 문서>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추진현황 보고(6. 10.)’를 작성하여 박OO에게 보고 하였고, 하OO은 김소영에게 보고 하였으며 조OO는 6월 9일 배제 리스트를 체크한 ‘복사본(3eme CMO List of ..)’,와 6월 12일 ‘사업리스트(코멘트 추가)’ 문서를 이메일로 V에게 보냈고 ‘OOO는 앞서 6월 4일 V에게 8건의 배제 리스트에 대하여 문자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 ④ OOO은 진술에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배제 명단 관련하여 문의 받은 바 있고 9,473인 블랙리스트는 해외문화홍보원 뿐 아니라 각과에서 필요할 때 마다 받아들인 바 있다고 진술하여 ②항 진술들이 교차로 확인된다.
- ⑤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실행 일람표 연번 4~19 사항.

#### 나. ‘9,473인 블랙리스트’ 활용에 대한 축소 진술에 대한 반론

- ① ‘한-불 상호교류의 해’ 관련하여 <9,473인 블랙리스트>를 대조하여 배제 리스트를 작성하였는데 공식인증 사업이 399건에 이르고 그 중 173여건의 사업에 예산지원이 된 점을 고려하면 배제 리스트 적용(참조: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실행 일람표)을 위한 광범위한 대조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
- ② 이번 조사를 통하여 과거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관련 그간 경과 및 현황 분석’ 문서 등을 통해 ‘9,473인 블랙리스트 적용을 축소 부인’하고, 김OO이 2017고합102, 2017. 5. 31.에서 김기춘 변호인의 질문 ‘이 사건 대다수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9,473인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는 너무 방대하여 실질적으로 적용된 적도 없고 일정의 해프닝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에 동의를 표한 김OO의 진술은 사실과 동떨어져 있음이 확인되고, OOO은 특검 2회 진술조서(2016. 12. 27.)에서 9,473명 명단은 실제 적용 여부에 “실제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진술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다.

#### 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실행에 주요 국가 기관 개입 여부

이 사건 조사를 통하여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실행에 ①청와대 ②국정원의 개입이 확인되며 문체부 소속 기관중 ③예술정책과 ④출판인쇄산업과 ⑤국제문화과

⑥ 해외문화홍보원 ⑦ 주프랑스한국문화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 ① 청와대는 2015년 3~6월 경 정무리스트에 포함된 이지호 관장에 대한 배제 지시를 비롯하여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실행 일람표에 등장하는 범죄 행위 발생의 핵심 책임주체라는 것이 박OO, 박OO, 최OO, OOO 등의 진술에서 충분히 확인된다.
- ② 국정원 직원 김OO이 2015년 4월 경 사찰을 통하여 주재환 작가가 참여하는 국립현대무용단의 이미아직 작품이 프랑스에서 공연된다는 사실에 예술정책과에 문제 제기를 하였다는 것이 오OO의 진술과 <리스트 -’16.9.27. 현재>문서로 확인된다.
- ③ 예술정책과는 국립현대무용단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 때문에 주재환 작가 배제를 하였다는 사실이 안OO의 진술로 확인되며 ‘9,473인 블랙리스트’ 생산·배포 하였다는 것은 이미 오OO의 진술로 확인된다.
- ④ 출판인쇄산업과는 한국문학번역원에 편혜영, 한강 등의 작가 배제 지시를 하였음이 김OO, 김OO의 진술에서 확인되며 아르테TV 다큐에 관하여 한국문학번역원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된다.
- ⑤ 국제문화과는 2014년 9월 경 청와대의 요청으로 ‘특정 영화 배제 지시’를 주 프랑스한국문화원에 하여 ‘변호인’ 등의 특정영화 상영 배제하도록 한 부분은 박OO과 이OO의 진술에서 확인되고 ⑦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2015년 ‘포럼데지마주’에서 ‘변호인’ 등의 영화 상영이 되지 않도록 준비한 사실이 이OO의 이메일 기록을 통하여 확인된다.
- ⑥ 해외문화홍보원이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영상자료원에 지시 및 협조 요청을 한 사례는 <1. 진상규명사실 가 항목>을 참조 한다.

## 라. 관련자 행위

### (1) 박OO 전 해외문화홍보원장(2015. 3. 31 ~ 2016. 3.) 전 문화예술정책실장 (2016. 4. 11. ~ 2016. 11. 23.)

해외문화홍보원장 재직시 청와대 문체비서관 김소영이 “한불수교 사업에 대해 잘 좀 챙겨달라” 말을 들었다는 것과 이후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것 이외에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에 대하여 본인의 진술이 부족하고 청와대에 양해를 요청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실행 일람표> 중 연번 1, 2, 3, 4,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작성 경위 및 블랙리스트 실행에 주요 책임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통계정책실장 재직시 연번 24에 공동 책임이 있다.

- ① 연번1: ‘세르누치 이응노, 이우환 외 프랑스의 한국화가들 이응노 미술관’은 정무리 스트에 등재된 이지호 관장 항공비 지원 불가라는 청와대 지시를 이행하여 항공비 지원을 이지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고 큐레이터에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 시켰다.
- ② 연번2: ‘아르테 TV 한국 다양한 기적의 나라 (불어)자막 지원 사업’은 공식적인 절차로 공식인증 사업 및 예산교부 액수까지 정해져 있었지만, 박OO은 출판인쇄과장 김OO을 통하여 한국문학번역원 정진석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만든 사실이 확인되고, OOO가 2015년 12월 8일 한불 조직위가 2천 4백만원 지원 결정 사실을 기재하며 조치 계획으로 예산교부를 보고하고 있으나 결국은 자막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연번3: ‘포럼데지마주 매혹의 서울’에서 변호인, 상계동 올림픽, 그때 그사람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상영 배제 관련하여 박OO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하나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프랑스 측을 설득한 최OO의 구체적인 진술, “아르테, 포럼데지마주, 릴 3천 행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라”는 박OO의 지시를 2016년 6월에 들었다는 조OO, OOO의 동일한 진술, 포럼데이마주 대표 ‘LOO HOOOO’가 이메일 (2015. 8. 19.)을 통해 예산, 필름 도착이 늦어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치적 문제라며 최OO 등에게 항의한 내용과 정OO의 관련 진술, 2015. 3.~4 경 해외문화홍보원 방문시 위 영화들의 배제 지시를 받았다는 한국영상자료원 OOO의 진술등을 종합하면 박OO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변호인, 상계동 올림픽, 그때 그사람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네편의 영화가 상영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송희일’ 감독의 항공료는 프랑스측이 부담하도록하여 2015년 3월 13일 해외문화홍보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공모 선정결과 공고문을 게시하며 첨부 문서로 심사위원 및 ‘공식인증사업 이행사항’ 및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 및 재정에 관한 공동규칙의 ‘항공료 지원’을 형해화 하는 등의 직권남용 행위로 볼 수 있다.
- ④ 연번 4: 릴 3000 ‘서울 빨리 빨리(Seoul vite, vite)’의 노순택 사진 ‘비상국가 시리즈’작품 9점에 대한 검열에 대하여 박OO은 “사진이 원인이 된 듯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이유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프랑스 측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제3차 공동회의 (2015. 6. 16.~19. 파리)’에서 재정과 전시 내용 확정을 요청하고 있었고 이 회의에서 프랑스 외교부 산하 Institut Francais 시각예술 담당자 FOO BOOO가 “노순택 작가 작품이 안 오고 있다고 이유가 무엇인지, 작품을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당시 프랑스한국문화원 직원 000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으며, 최00가 킬 시장에게 직접 설득하여 작품을 ‘블랙후크 다운 시리즈’로 바꾸게 했다는 진술이 있는 등 박00의 검열 지시가 확인된다.

- ⑤ 연번 5~19의 배제대상 프로그램은 <9,473인 블랙리스트> 적용된 결과로 박00의 포괄적인 지시가 없었다면 일어나기 어렵고 연번 10, 11, 12, 14, 15, 16 사업은 블랙리스트 실행 문서 계획(6. 10. 문서, 엑셀문서)대로 예산지원배제가 이루어졌다. 특히, 연번 12: 한국음악과 함께하는 불꽃축제 하이서울 페스티벌, 연번 14: 국제 판화 비엔날레 한국현대 판화 특별전 한국현대 판화가협회 연번, 15: 이응노와 서체추상 이응노 미술관, 연번 16: 대안적 기술문화 축제 팝업 e등은 예산심사에서 예산지원 결정을 했음에도 배제되었다. 당시, 한-불 상호교류의 해 예산 집행 결정자로 책임이 있다.
- ⑥ 연번 24: 박00은 2016년 7월 000으로부터 양혜규가 전시를 하고 있는 풍피두 센터에서 한-불 상호교류의 해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폐막식>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해외문화홍보원장 김00에게 연락하여 폐막식 장소를 변경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최대 3만 4천 유로, 최소 7천 유로의 예산을 낭비하게 하였다. 김00는 폐막식 장소 변경 관련하여 박00과 공동의 책임이 있다.

## (2) 박00 당시 해외문화홍보원 기획관(재임 기간 2015. 3.~ 6. 15. 경)

- ① 박00은 당시 6월 말경 워싱턴문화원장 부임을 앞두고 있었다. A 등의 낙마 사례를 알고 있었던 박00은 조00를 000에게 보내어 9,473인 리스트를 입수하게 하고 ‘한-불 상호 교류의 해’ 사업에 이미 선정되거나 앞으로 선정할 예정인 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들을 ‘리스트’와 대조하여 배제할 것을 지시 하였다.<sup>57)</sup>

57) 이에 대해 박00은 ‘조00로 하여금 예술쪽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000에게 의견을 구하여 보도록 한 적은 있으나, 본인이 당시에 존재여부를 알지도 못하였던 9,473명 리스트를 입수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이후 한불상호교류의 해 사업에 포함된 사업과 문화예술인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본인은 리스트와 대조하여 배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 원장 직 무대리로 있었던 2015년 3월 25일에 제1차 공식인증사업에 대하여 일체의 배제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문서(총45억원)에 최종결재를 하였음.’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18. 11. 5.).

- ② 박OO은 청와대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외부인사들이 선정한 사업을 최대한 그대로 추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며, 애초에 배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나 최OO, 조OO, OOO 등의 진술과 합치되지 않아 진술의 신뢰성이 없고 박OO의 행위 사실 중 연번 1~18 까지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예술감독 최OO<sup>58</sup>) (책임기간 2014. 3. ~ 2016. 12.), 한예종 교수.  
(안식년 2015. 9. ~2016. 2.)**

최OO는 “정부가 배제시키려는 예술가들을 지키고, 온전히 활동하게 투쟁한 본인에게 블랙리스트 집행의 실행자, 검열과 배제의 주역으로 낙인찍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① ‘15-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지침’에 따르면 예술감독 역할은 조직체계 상 사업 추진관련 프랑스 측 협의 지원 및 사무국 관리, 사업 주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등이며 최OO가 2015년 9월 경 예술감독으로 재계약한 문서에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 프랑스측 관련 기관 등 업무협의, 한-불 사무국 사업관리 등 총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최OO는 공모인증사업 심사위원회 참여와 공동회의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2015년 9월 경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새로 계약을 경신하여 그 이전 보다 높은 8천만원의 임금을 받았던 사실도 확인된다.
- ② 최OO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실행 일람표> 중 연번 1, 2, 3, 4, 10, 11, 12, 13, 14, 15, 16, 18 관련하여 당시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 및 본인의 진술 등으로 보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연번 3, 연번 4 영화와 사진 작품 검열에 관하여 박OO, 박OO, 하OO 등의 지시를 수행한 것이 본인의 진술로도 확인된다. 또한, 연번 12 한국음악과 함께하는 불꽃축제 하이서울 페스티벌, 연번 14 국제 판화 비엔날레 한국현대 판화 특별전 한국현대 판화가협회, 연번 15 이응노와 서체추상 이응노 미술관, 연번 16 대안적 기

58) 최OO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단 연우무대’ 선정 배제 사건』(사건번호: 2017공28)에서 2015. 12. 23., 2016. 6. 16.~17.에 창의예술인력센터장 이OO으로부터 정부의 지원 배제 방침을 전달 받고 <2016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2016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관련>, <2016 공연기획 및경영전문인력지원>에서 각각 하땅세, 나온컬처, 연우무대, 하땅세,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배제에 관련되어 있다. 도종환 의원은 2015년 9월 국감에서 ‘창작산실-우수공연작품제작지원(연극)’ 등 블랙리스트 문제를 최초로 제기 하였다. 국감에서의 폭로 이후 최OO는 각종 심사에 참여하여 각종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되었음이 확인된다(2회 진술조서 2018. 5. 17.).

술문화 축제 팸플 e등은 예산심사에서 예산지원 결정을 했음에도 배제되어 박OO과 공동 책임이 있는 부분이다.

연번 13번, 연번 18번의 경우 최OO는 박OO를 김OO의 요청으로 교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V는 최OO가(김OO)감독에게 박민희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전화 내용을 들은 바 있다 하고 또한 박OO는 김OO으로부터 직접 ‘정치적 이유’ 등의 이야기를 들어 출연을 하지 못하였다 함으로 최OO의 진술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 또한, 박OO가 3차인증 공모 관련하여 박박컴퍼니로 사업 신청을 한 것은 본인 판단이었고 최OO와는 사적인 친분이 없어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 하는데 최OO는 “제가 연락을 해서 단체 대표에서 박민희가 빠지고 다른 대표를 올려라 해서 박박컴퍼니로 바꾸어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배려가 개입되었다는 듯이 허위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최OO는 연번 6 관련하여 블랙리스트 저지 노력이 일부 있으며 연번 3 관련하여 이희송일 감독, 이용관 감독 항공료 우회 지원 및 연번 1, 연번 20 등에서의 우회지원에 관하여 블랙리스트 실행 저지 노력이 일부 있다고 보여지나,
- ④ 최OO는 2015년 9월 도중환의원이 국감에서 블랙리스트 문제를 최초로 폭로한 이후 2015년 12월 23일, 2016년 6월 16~17일 <2016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2016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관련>, <2016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심사에 참여하여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하였고, 이후 김기춘, 조운선, 김종덕 등의 블랙리스트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진행과정,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 공동 대응 과정에서 역할을 한 바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2회 진술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 책임이 있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부터는 사업자들과 재정파트의 일이지, 모든 것들이 제 책임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원배제가 아니라 비예산 공식인증 사업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실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블랙리스트 자체와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라고 주장하여 반성 또한 없었다.

## 마.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실행 일람표

### (1) 유형 1: 예산지원배제

한불사무국 팀장 V의 “대부분 지원 예정대 있던 예산을 안주는 형식으로 문제사업들

을 걸러냈다”라는 진술은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실행 일람표’ 연번 10~12, 14~16 등 6개 사례에서 확인된다.

## (2) 유형 2: 우회지원 및 인물배제

연번 3, 연번 20, 연번 22 등은 초청 인물에 대한 항공료를 프랑스 측에서 부담하게 하는 우회 지원 방식이나 연번 1 항공료를 다른 관계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례가 확인된다.

연번 5, 연번 13, 연번 18, 연번 23은 특정 인물이 배제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확인된다.

## (3) 유형 3: 양해

연번 6의 경우 청와대가 설득되어 인지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된 사례이다. ‘무브먼트 담당’은 이미 뛰어난 작품성을 이유로 양해된 사례가 한번 있었으며 한불 행사 관련하여 두 번째 ‘양해’된 것이 확인된다.

## (4) 유형 4: 회피

연번 24의 경우 특정 장소에서 블랙리스트 작가가 전시한다는 이유로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폐막식’ 행사를 다른 곳에서 개최한 사례가 확인된다.

## (5) 유형 5: 사업배제

연번 2의 경우 이미 약속된 예산지원, 공식인증 사업 모두 배제된 사례가 확인된다.

## (6) 유형 6: 지원

연번 7은 박민희를 빼면 사업이 폐지되는 이유로, 연번 8은 프랑스 현지 예술인이기 때문에 지원된 것으로 판단되며, 연번 17은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7) 유형 7: 검열**

연번 2, 연번 3, 연번 4 등은 특정 작품에 대한 검열로 배제되거나 작품이 교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유형 8: 사찰**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기록은 ‘사찰’에 관한 것으로 청와대, 국정원, 해외문화홍보원, 예술정책과, 출판인쇄산업과 등이 개입한 연번 1, 3~24 모두 ‘사찰’ 사례이다.

**(9) 유형 9: 배제실패**

연번 21, 22 등에서 출판인쇄산업과의 특정 작가 배제 지시를 한국문화번역원의 노력으로 거부 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9는 본격적인 블랙리스트 대조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예정’에서 2015. 5. 6. 예산교부가 되어 해외문화홍보원이 ‘배제’ 실행을 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실행 일람표**

연번	분야	배제 대상 프로그램	배제이유	결과
1	시각	‘이응노, 이우환외 프랑스의 한국화가들/이응노 미술관’ 이지호	정무 리스트	우회 지원 사찰
2	시각	아르떼(ARTE) ‘한국, 다양한 기적의 나라’ 자막제작 지원	4.3, 강정마을	사업 배제
3	영화	포럼데이마주(Forum des Images) <sup>59</sup> ‘서울의 초상(‘매혹의 서울’) 변호인, 상계동 올림픽. 그때 그 사람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공 등 4편 배제 봉준호 감독 등 배제, 이희송일 (우회 지원)	문제 영화, 감독 배제	검열 우회 지원 인물 배제 사찰
4	시각	릴 3000 ‘서울 빨리 빨리(Seoul vite, vite)’ 작품 교체	노순택 특정 사진 9,473리스트	검열 사찰
5	학술	‘프랑스에서 본 한국영화’ 성균관대 프랑스어권 연구소/동아방송예술대학교	차승재 9,473리스트	인물 배제 사찰

연번	분야	배제 대상 프로그램	배제이유	결과
6	공연	무브먼트당당(김민정) 넥스트 축제외 프랑스 투어	김민정 9,473리스트	양해 사찰
7	공연	GRAME 콘서트 한국 음악의 밤 한양대 전자음악연구소	박민희 9,473리스트	지원 사찰
8	공연	현대음악극 공동 창작 프랑스 국립창작음악연구소	박선영 9,473리스트	지원 사찰
9	시각	콘크리트 오페라(정글 슈즈) 한국 김김갤러리	김나영 9,473리스트	배제 실패 사찰
10	영화	시네마 콘서트 제천국제영화음악제	허진호 9,473리스트	예산 지원 배제 사찰
11	공연	현대 음악 엑스포 참가 한국음악 레이블사업협회	김병찬 9,473리스트	예산 지원 배제 사찰
12	공연	한국음악과 함께하는 불꽃축제 하이서울 페스티벌	동명이인 9,473리스트	예산 지원 배제 사찰
13	공연	한국전통음악회 코리아 매니지먼트	박민희 9,473리스트	인물 배제 사찰
14	시각	국제 판화 비엔날레 한국현대 판화 특별전 한국현대 판화가 협회	이준규 등 9,473리스트	예산 지원 배제 사찰
15	시각	이응노와 서체주상 이응노 미술관	이지호 9,473리스트	예산 지원 배제 사찰
16	시각	대안적 기술문화 축제 팝쿵	송수연 9,473리스트	예산 지원 배제 사찰
17	시각	한국의 민화와 현대 작가 헬리오아트	미확인	지원 사찰
18	공연	삭셀 심포니 오케스트라 기념음악회 코리아매니지먼트	박민희 9,473리스트	인물 배제 사찰

연번	분야	배제 대상 프로그램	배제이유	결과
19	시각	전시 작가 2명의뢰 (2016. 1. 7.)	미확인	지원 사찰
20	공연	연극 '빛의 제국' 공연(국립극단) 배제 지시, 원작자 김영하 초청 방해	세월호 컬럼	우회 지원 사찰
21	문학	프랑스 MEET 문예축제' 작가 파견	편혜영 9,473리스트	배제 실패 사찰
22	문학	2016 파리도서전 주빈국	황석영, 김영하, 김애란, 한강 등 9,473리스트 등	배제 실패 사찰
23	공연	이미아직 국립현대무용단	주재환 국정원 리스트	인물 배제 사찰
24	시각	양혜규 작가 풍피두 전시	트위터 문재인지지	회피 사찰

## 2. 뉴욕·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채용 의혹에 대하여

### 가. A의 뉴욕한국문화원장 부임 철회 의혹

A은 출국예정일이었던 10월 20일을 불과 5일 앞둔 10월 15일에 김소영 문체비서관 및 김재춘 교육비서관으로부터 뉴욕에 못나가게 되었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으며 대통령비서실 내의 인사 책임자였던 '김기춘의 인사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로 인정된다.

- ① A에게 철회 통지가 가기도 전에 이미 000은 2014. 8. 경 광고대행사 '오길비앤 더'에서 근무하던 000에게 뉴욕 주재 한국문화원장 자리의 공모에 지원해보라고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②당시 5~6월 중 서류전형, 면접전형이 있었고 7월 중 합격 발표를 하고 8월에 임기가 시작되는데, 지연되어 8월 말에 외교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합격통보를 받고, 이후 출국예정일이었던 10월 20일 5일전에 취소 통지를 받은 것은 인사권 남용의 정황 증거이다.

59) 파리의 중심부에서 영화 및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5개 상영관이 있으며 매해, '도시의 초상들'이라는 주제로 영화제가 진행된다. [www.forumdesimages.fr](http://www.forumdesimages.fr)

## 나. 뉴욕 한국 문화원장, 프랑스 한국 문화원장

김종덕 장관이 청와대 지시로 뉴욕·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선발 제도를 변경과정 특혜를 제공하여 오OO는 ‘역량 평가 면제’, 박OO은 ‘민간인 스카웃제’로 특정 광고업계 인맥의 인사들이 임용된 사실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된다.

- ① 역량평가는 미통과율이 21%이며, 역량평가를 면제 받는 사례가 매우 드물어서 그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 ② 뉴욕한국문화원장의 직위를 ‘가’급 고위공무원직위로 부여한 이유의 정당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 ③ ‘민간인 스카웃제’로 경쟁이 생략된 사례가 해외한국문화원장 선발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며, ‘민간인 스카웃제’로 원장을 뽑아야 할 만큼의 납득할 만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④ 뉴욕한국문화원에서는 대통령 순방 관련 행사로 12억원(해외문화홍보원 8억, 뉴욕 한국문화원 4억)이 OOO 및 송성각 관련회사에 지원된 부분이 확인된다.
- ⑤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CJ E&M을 통하여 OOO, OOO 관련 플레이그라운드 등에 5억원이 지원된 부분이 확인된다.
- ⑥ ④, ⑤ 항목의 사례를 보아 “공적 의도 보다 사적 의도가 개입된 선발 제도 변경”이라는 최OO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오OO와 박OO이 김종덕, 송성각, OOO 등과 사전에 교감하였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다.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재외 한국문화원장에 대하여

아래 원장들은 해외 문화원장에 부임되기 이전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된 문체부 공무원들이다. 이는 우리 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특검 진술에서 확인된다.

- (1) LA한국문화원장 김OO은 문체비서관실 행정관(‘14. 10.~’16. 1.)에 있으면서 9,473인 리스트 적용 및 각종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를 한바가 오OO, 김OO 등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 (2) 러시아 한국문화원장 김OO은 출판인쇄산업과장(‘14.10.~’16. 9.)을 하면서 각종 문학인, 작품 배제 지시 등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형사 고발된 상태이다.
- (3) 워싱턴 한국문화원장 박OO은 해외문화홍보원 기획관(‘15. 3.~’15. 5.)재임시

한불 상호교류의 해 선정 사업 관련하여 9,473인 리스트로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한 바 있다.<sup>60)</sup>

- (4) 독일 한국문화원장 권OO은 한국문화번역원 본부장(~'15. 12.)을 하면서 출판인 쇠산업과장 김OO로부터 배제 지시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 (5) 영국 한국문화원장 A은 청와대 문체비서관('13. 3.~'14. 10.) 시절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 한바 있고, 국립국악원 기획단장('14. 11.~'16. 2.) 때에는 소월산천 배제 등 블랙리스트 실행을 한바 있으며 '14 4~6 경 국제문화과를 통해 파리한국영화제에서 '변호인' 상영 배제 요청을 한 바가 있다.
- (6) 벨기에 유럽연합 한국문화원장 최OO은 공연전통예술과('15. 11.~'16. 6.)서기관 시절 산하 기관에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한 바 있다.
- 우리 위원회 사건번호 2017 공1(극단 진일보 관련), 2017공19(공연티켓\_1+1), 2017공10(한문연 관련), 2017직공6(국립중앙극장 관련) 등에 주요 관련자이다.

## 라. 해외 한국영화제에서의 특정 영화 배제

### (1) 2014년 말 파리 한국영화제 '변호인' 상영 배제

2014년 4-6월 경 청와대 A의 지시로 국제문화과과장 박OO은 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이OO에게 파리 한국영화제에서 '변호인' 상영 저지를 부탁하였고, 최종적으로 상영 되지 않았다. 영화 '변호인' 배제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4년 8월 제2회 LA 샌디에고 한국영화제(집행위원장 정창화)에서 변호인의 상영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CJ측이 파리 한국영화제에 자발적으로 필름을 안보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

### (2) 2013년 런던 한국영화제에서 '설국열차' 배제<sup>61)</sup>

60) 이와 관련하여 박OO은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 하였다('18. 11. 5.).

본인은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 문화원장 부임 전에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련한 공무원을 문화원장 직위와 함께 기술하는 것은 문화원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부임 전에 블랙리스트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는 극히 주관적인 유추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됨.

본인은 블랙리스트 실행을 한 댓가로 워싱턴문화원장으로 부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워싱턴문화원장 임용후보자라는 지위 때문에 해흥원 기획관 재직기간 동안 김종덕 장관으로부터 임용 재검토라는 부당한 인사 상 압력을 받았음.

61) 이와 관련하여 A행정관은 등 내용은 주영한국문화원에서의 실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진술인이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에 따른 내용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18. 11. 12.). 당시 주영한국문화원에서는 영화제 초기 기획단계에서

2013년 런던 한국영화제에서 ‘설국열차’ 배제사실이 확인된다.

① 특검에서 당시 교문수석 모철민으로부터 ‘설국열차’ 상영 문제로 편찬을 들었다는 조현제 전 문체부 1차관의 진술, 박OO, 김OO의 진술 및 당시 런던한국영화제 기획안의 변경 사실 등으로 영화 ‘설국열차’가 상영 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남영동1985(2012)’, ‘26년(2012)’ 및 ‘다이빙벨(2014)’, ‘자가당착(2015)’, ‘상계동 올림픽(1988)’,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1981)’ 등은 2008년 이후 해외 한국영화제 등에서 상영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영화임이 확인된다.

(4) ‘그때 그 사람들(2005)’, ‘화려한 휴가(2007)’, ‘도가니(2011)’는 2013년 이전에는 상영된 적이 있으나 박근혜 정부 이후는 상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3), (4)의 사실은 ① 블랙리스트 한국 영화 중 최근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영화로 ‘자가당착’은 2011년 베를린 국제영화제(2. 2.~20.) 및 홍콩 국제영화제(3. 20.~4. 5.)에서 ‘상계동 올림픽’은 2011년 과나후아토 국제 영화제(7. 22.~31.)에서 ‘남영동 1985’은 2013년 에든버러 국제영화제(6. 19. ~ 30.)에서 ‘지슬’은 2013년 선댄스 국제영화제(1. 17~27)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 하였으며 ‘변호인’은 2014년 트란실바니아 국제영화제(6. 27 ~ 7. 14.)에서 ‘그때 그사람들’은 2015년 뉴욕아시아영화제(6. 26.~ 7. 11.)에서 상영었다는 점, ② 블랙리스트 영화중 ‘남영동1985(2012)’, ‘26년(2012)’ 및 ‘다이빙벨(2014)’, ‘자가당착(2015)’, ‘상계동 올림픽(1988)’,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1981)’,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1995)’, ‘그때 그 사람들(2005)’, ‘화려한 휴가(2007)’, ‘도가니(2011)’ 등의 영화에 대한 2013~2016 ‘블랙리스트 영화’ 상영 통계를 통하여 확인된다.

### 3. 진상규명되지 않은 사실

가. 한-불 상호교류의 해 관련하여 당시 예술경영지원센터 사무국 다수의 계약직 직원들이 퇴직하여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OOO 등의 직원 진술을 받지 못하여 블랙리스트 실행 문서(6. 10. 및 엑셀문서) 이외의 사례 존재 유무 등을 추가로 확인

〈설국열차〉를 개막작으로 검토하였지만(2013년 7월경) 해외배급사(와인스타인)의 비협조와 봉준호 감독의 해외배급사에 대한 불만 제기 및 국제영화제 불참 표명(8월말~9월초)으로 섭외 단계에서 개막작에서 제외됨. 이후 주영한국문화원에서 전년도 영화 흥행순위를 참고하여 여러 영화를 놓고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32세의 젊은 허정 감독의 데뷔작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500만 명 이상 관람한 흥행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숨바꼭질〉이라는 작품을 개막작으로 최종 선택한 것임.

하지 못하였다.

- 나. 영상콘텐츠산업과를 통하여 포럼데지마주에서 배제 리스트 영화 5편이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관련자들에게서 구체적인 진술<sup>62)</sup>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영화 전문위원 이OO의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하여 연임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진술, 3차공식인증 사업 중 MCMC 김기덕 감독 항공료 우회 지원 의혹에 대한 진술 등이 있었으나 추가 조사가 부족하였다.
- 라. 뉴욕한국문화원장 오OO는 제일기획 출신으로 구속된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OOO 등도 제일기획 출신이다. 이 모두는 차은택, 김종덕 등과 관련이 있으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한편 박OO은 제일기획 출신이 아니어서 송성각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사전에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거나 이 사안에 대하여 불법성 유무를 판단하지는 못하였다.
- 마. 해외문화홍보원이 특정 영화 배제를 총괄 한다는 취지의 국정원 정보보고 문서 관련하여 신OO은 당시 청와대 업무분장상 A가 작성했을 것으로 보았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

62) 당시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자는 육아휴직중



■ 기획·편집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집     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백서 편집위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부록

---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인   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 2019 문화체육관광부

※ 백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http://www.mcst.go.kr))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누리집([www.blacklist-free.kr](http://www.blacklist-free.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비매품/무료

94300



9 791163 570370

ISBN 979-11-6357-037-0

ISBN 979-11-6357-035-6 (세트)